

2006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12

농 립 부

차례

제 1 편 2005년도 농업동향

- 제1장 ▶ 경제동향 3
 - 제1절 국내외 경제동향 3
 - 1. 국내 경제동향 3
 - 가. 경제성장 3
 - 나. 물가와 금리 7
 - 다. 고용과 임금 9
 - 라. 경상수지 10
 - 2. 해외 경제동향 12
 - 가. 경제성장 12
 - 나. 고용 및 물가 12
 - 다. 교역 및 경상수지 13
 - 라. 국제금리 및 환율 13
 - 제2절 농촌 경제동향 15
 - 1. 농업구조 15
 -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15
 - 나. 농경지 16
 - 2. 농가경제 19
 - 가. 소득 동향 19
 - 나. 가계지출 동향 23
 -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25

라. 농가자산 동향.....	26
마. 농가부채 동향.....	26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27
사. 주·부업별 지표.....	28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29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29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30
카. 지역별 주요지표.....	31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32
가. 개 황.....	32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32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35
라. 농촌임료금.....	35
4. 농림업 부가가치.....	37
5. 농업생산성.....	37
제2장 ▶ 국내 농산물 수급동향.....	39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39
1. 식량작물.....	39
2. 원예·특용작물.....	42
가. 채소류.....	42
나. 과실류.....	43
다. 화훼류.....	43
라. 특용작물.....	44
마. 인삼류.....	45
3. 축산물과 사료작물.....	46
가. 축산물.....	46
나. 사료작물.....	49

제2절 식품 수급동향	51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51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51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52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53
2. 식품수요 현황	56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56
나. 자급률 수준	59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60
3. 식품가공산업 현황	62
가. 산업구조	62
나. 생산동향	64
다. 수출입동향	65
제3절 농산물 교역동향	67
1. 농산물 수출입동향	67
가. 수출동향	67
나. 수입동향	69
2. 농산물 남북교역동향	72
가. 농산물 교역규모	72
나. 농산물 교역동향	72
제3장 ▶ 국제 농업동향	74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74
1. 국제곡물 수급동향	74
가. 개요	74
나. 쌀	74
다. 밀	74

라. 옥수수	74
마. 대두	75
2. 국제곡물 가격동향	76
가. 쌀 값 동향	76
나. 밀 값 동향	76
다. 옥수수 값 동향	76
라. 대두 값 동향	77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78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78
가. 미국	78
나. 중국	82
다. 일본	85
라. 유럽연합(EU)	88
2. 양자간 농업통상협력	93
가. 미국	93
나. 일본	94
다. 중국	95
라. 캐나다	96
마. 유럽연합	97
바. 중남미 국가	98
사. 기타 국가	100
제3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101
1. WTO 활동	101
2. OECD 활동	105
가. OECD 농업분야 활동 개요	105
나. 최근 활동	105
3. FAO 활동	107

4. APEC 및 ASEAN+3 관련활동	110
5.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116
6. 농업·환경·무역연계 논의동향	117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117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118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119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121
8.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122

제 2 편

2005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제1장 ▶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127
제1절 농업·농촌 종합대책	127
1.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	127
2. 농업·농촌종합대책 평가·조정	131
가. 총괄	131
나. 단기 보완대책 추진	131
제2절 2005년도 예산 중점투자 분야 및 재원확보	133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133
2. 농특세 연장 추진	135
제3절 농림사업 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37
1. 농업·농촌 투융자 현황	137
2. 농업투융자 사업의 평가 실시	140
가.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140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141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142
3. 농림사업의 투융자 방식 개선.....	143
가.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143
나.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보완.....	144
제4절 농림행정 쇄신·조직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148
1. 농림행정 규제완화	148
2. 농정조직의 개편	149
가. 주요 추진 내용.....	149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152
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52
나.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153
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54
제5절 농업관련기관 개혁	155
1. 농업협동조합.....	155
가. 농협의 자율개혁 추진.....	155
나. 농협법 개정 등 제도개선.....	157
다.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158
2. 한국농촌공사.....	160
가. 공사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로 새롭게 출범	061
나. 상시경영혁신체계 구축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161
다. 깨끗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상 구현.....	161
3. 농수산물유통공사.....	162
4. 한국마사회	165
가. 급격한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165
나. 주요 경영개선 실적	166

제6절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169
1. 농어업특위 현황	169
2. 2005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	171
가. 본위원회	171
나. 분과위원회	171
다. 소위원회	172
라. 지역농어업특위	173
마.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특별위원회	173
3. 2006년도 농어업특위 운영계획	174
제2장 ▶ 2005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177
제1절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177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177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대	179
3. 토양개량사업 추진	181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181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182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182
나. 축산업등록제 추진	183
제2절 고품질·안전농축산물 공급	185
1.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185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186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188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188
나. GMO·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189
4. 가축방역·검역 강화	190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192
1. 농업구조의 체질 개선	192

가. 영농규모화 사업 촉진	192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193
2. 농업생산기반 정비지속추진	194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94
나. 받기반정비사업	195
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97
라. 배수개선 사업	198
마.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198
바. 농업용수 개발사업	199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200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201
3. 농업전문인력 육성	202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02
나. 농업법인 육성	203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208
라. 농업인 교육훈련	209
마. 여성농업인 육성	211
바. 농업벤처 육성	220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21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223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	223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혁신	225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225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228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229
4. 축산물시장 차별화	230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231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231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231

나.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232
다. 한류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233
라.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선.....	234
2. 수입관리 대책.....	235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235
나. 관련법상 각종제도의 적극 활용.....	235
다.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	236
라.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236
제6절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237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 대책추진.....	237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237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	238
다. RPC 경영혁신.....	239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 촉진.....	240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240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243
4. 가축개량 활성화.....	244
5. 우유수급 안정대책.....	250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252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252
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252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254
다. 쌀생산조정제 시행.....	256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256
마.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258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259
가. 농업인부채경감대책 추진.....	259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264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266
마.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 실적.....	266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267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267
2. 농공단지 조성사업.....	270
3.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271
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71
5.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273
제9절 농촌활력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274
1.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개년계획」 수립추진 ..	274
가. 수립배경	274
나. 추진경과	275
다. 주요내용	276
2.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278
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278
나.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79
다.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280
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81
마.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82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283
4. 농촌의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284
가. 복지지원 개선	284
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285
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285
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287
마. 농촌 노인 복지 지원 강화.....	287
5. 농업·농촌정보화의 확대추진.....	288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구축.....	288

- 나. 농업·농촌정보컨텐츠 확충 289
-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290
- 라. 디지털사랑방 구축사업 추진..... 292
- 제10절 농정제도 개혁 293
 - 1. 농지제도 개선 293
 - 2. 농지은행제도 도입 294
 - 3.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295
 - 가. 추진배경 295
 - 나. 기본 정책방향 295
 - 다. 시범사업 추진현황..... 296
- 제11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 대응 298
 - 1. WTO/DDA 농업협상 추진..... 298
 -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298
 - 나. DDA 농업협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농업협상 추진체계 강화 301
 - 2.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 301
 - 3. 한·캐나다 FTA 협상대응 303
 - 4. 남북농업협력 추진..... 305
 - 가. 정부 305
 - 나. 민간지원단체 306
 - 다. 남북 농업협력 위원회 발족..... 306

제 3 편

제3편 2006년도 농정시책

- 제1장 ▶ 2006년도 농정방향 311
- 제1절 2006년도 농정목표 311

제2절 2006년도 농정시책방향	312
1. DDA,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대비	312
가. 농가 유형별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차별화.....	312
나.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312
다.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사회 활력 회복의 기회로.....	313
라. DDA, FTA 협상 적극 대응	313
마. 3년주기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평가 추진	314
2. 쌀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 따른 후속 대응.....	315
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활용, 쌀산업 체질강화 추진.....	315
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한우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316
3. 부채대책 등 경영안전망 구축.....	317
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실시.....	317
나.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간 연장.....	317
4. 농정혁신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318
가. 2006년도 역점 추진 혁신과제	318
나. 농업인도 On-line으로 사업신청	318
제3절 2006년도 농림부문 예산 확보	319
1. 2006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319
2. 2006년 농림예산 규모	320
제4절 농정추진 체계 개선	321
1.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321
2. 농림사업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323
가. 2005년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323
나. 2006년 농림사업 성과평가 계획.....	324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개선.....	325
3. 농림행정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326
가. 농림행정 제도개선	326
나. 농림행정 규제완화	327

4. 농림조직의 개편	329
가. 농림부	329
제2장 ▶ 2006년도 주요농정 시책	332
제1절 쌀산업 구조개편	332
1. 새로운 양정제도 정착	332
가. 공공비축제	333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334
2. 쌀 전업농 육성	334
3. RPC 경영혁신	336
가. RPC 경쟁체제 도입	337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337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337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338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338
제2절 농업전문인력 양성	341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341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342
가. 기본방향	342
나. 세부추진방안	343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46
4. 농업벤처 육성	346
5.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추진	347
6. 여성농업인 육성	349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349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351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353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354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355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355
가. 우수농산물(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본격 시행.....	355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356
다.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356
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357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357
3.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359
4.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추진.....	361
5. 가축개량 추진	363
가. 한우개량	364
나. 젃소개량	364
다. 돼지개량	365
라. 닭 개량 등	365
6.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366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370
8. 친환경 농업육성	371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372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	372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 주체 육성.....	372
나.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우수브랜드 육성.....	374
2.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376
3. 농식품 수출확대	377
4.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379
제5절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강화	381
1. 직접지불제 확충	381
가. 직접지불제 확충 계획	381

나. 2006년도 추진현황	381
다. 향후 추진계획	382
2. 농외소득 기반 확대	384
가. 농공단지 조성사업	384
3.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385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385
나. 재해농가 지원확충	387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388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389
4. 경영회생지원시스템 구축	390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390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391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실시	393
5.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394
가. 추진배경	394
나. 추진현황	394
다. 추진계획	395
제6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396
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5개년 기본계획 지속 추진	396
2.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수립추진	397
가. 수립배경	397
나. 추진경과	397
다. 주요내용	398
3. 농촌형 복지대책 확충	399
가. 사회안전망 확충	399
나. 보건·의료기반 확충	400
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	400
라. 교육비 부담경감	401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401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403
5.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405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405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	406
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체계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407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07
6. 향토산업 육성.....	408
7. 농업·농촌 정보화의 확대 추진.....	409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10
나. 농업·농촌 정보 콘텐츠 확충.....	411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412
8. 농업생산기반 확충.....	414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14
나. 받기반정비사업.....	414
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15
라.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415
마. 농업용수 개발사업.....	416
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417
제7절 농정제도 개혁.....	418
1. 농지제도 개선.....	418
2. 농지은행제도 도입 및 추진.....	420
가. 농지유동화정보 제공.....	421
나. 농지임대수탁사업.....	421
3. 협동조합 개혁.....	422
가. 추진방향.....	422
나.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423
다.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424
4.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속추진.....	425

제8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 대응 429

- 1.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 추진 429
- 2. 개방확대 대비 중장기 대책 보완 430
 - 가. 농업·농촌종합대책 평가·조정 430
 - 나.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 기본계획 수립 432
- 3. FTA협상 추진 434
 - 가. 한·미 FTA 협상대응 434
 - 나.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 435
 - 다. 기타 FTA 협상대응 438
- 4. WTO/DDA 농업협상 추진 441
 -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적극 대응 441
 - 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확보 추진 442
- 5. 국제농업협력사업 443
- 6.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445
 - 가. 북한의 식량농업 상황 445
 -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446
 -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450

부 록

- 1. 2005년도 국무조정실 농림부 주요업무평가결과 453
- 2.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477
- 3. 2006년도 예산 개요 831

표 차례

제 1 편

2006년도 농업동향

<표 1-1-1> 경제활동 부문별 경제성장률.....	3
<표 1-1-2> 산업별 성장률.....	4
<표 1-1-3> 소비동향.....	5
<표 1-1-4> 총저축 및 총투자 추이.....	6
<표 1-1-5> 투자지출 동향.....	6
<표 1-1-6> 물가동향.....	7
<표 1-1-7> 수출입 물가.....	8
<표 1-1-8> 시중실세금리.....	8
<표 1-1-9> 고용동향.....	9
<표 1-1-10>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10
<표 1-1-11> 경상수지.....	10
<표 1-1-12>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12
<표 1-1-13> 세계교역과 주요국 경상수지.....	13
<표 1-1-14>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	14
<표 1-1-15> 주요국 통화의 환율추이.....	14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16
<표 1-1-17> 경지면적 변동추이.....	17
<표 1-1-18>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17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18
<표 1-1-20> 휴경면적.....	18

<표 1-1-21> 농가소득	19
<표 1-1-22> 농가소득 구성비	20
<표 1-1-23> 농업소득	20
<표 1-1-24> 농업총수입	21
<표 1-1-25> 농업총수입 구성비	21
<표 1-1-26> 농업경영비	22
<표 1-1-27> 농외소득	23
<표 1-1-28>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23
<표 1-1-29> 가계비 지출	24
<표 1-1-30> 소비 지출	24
<표 1-1-31> 비소비 지출	25
<표 1-1-32> 가처분소득/ 잉여금	25
<표 1-1-33> 농가자산	26
<표 1-1-34> 농가부채	27
<표 1-1-35> 전업농가/ 겸업농가 주요지표	27
<표 1-1-36> 주·부업별 지표	28
<표 1-1-37>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29
<표 1-1-38>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30
<표 1-1-39>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31
<표 1-1-40> 지역별 주요지표	31
<표 1-1-41>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32
<표 1-1-4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34
<표 1-1-4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36
<표 1-1-44>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율	37
<표 1-1-45>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38
<표 1-1-46> 농업생산성 지표	38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40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40
<표 1-2-3> 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41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42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43
<표 1-2-6> 화훼산업 현황.....	44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45
<표 1-2-8> 인삼 생산동향.....	46
<표 1-2-9> 쇠고기 수급동향.....	46
<표 1-2-10> 사료 수급 추이.....	49
<표 1-2-11>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50
<표 1-2-12> 초지조성 실적.....	51
<표 1-2-13>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도시가구평균).....	52
<표 1-2-14>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2005년도 도시가구 평균).....	53
<표 1-2-15>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54
<표 1-2-16> 영양소별 권장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55
<표 1-2-17>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57
<표 1-2-18> 연도별 자급률 추이.....	59
<표 1-2-19>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61
<표 1-2-20>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62
<표 1-2-21> 식품가공산업 분류별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연도별 비교.....	63
<표 1-2-22>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65
<표 1-2-23> 품목군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66
<표 1-2-24> '05 농산물 수출실적.....	68
<표 1-2-25> '05 국가별 농산물 수출실적.....	69
<표 1-2-26> '05 품목별 농산물 수입실적.....	70
<표 1-2-27> '05 국가별 농산물 수입실적.....	71
<표 1-2-28> 남북교역 동향.....	72

<표 1-2-29>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73
 <표 1-2-30>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73
 <표 1-3-1> USDA 주요곡물 수급총괄 75
 <표 1-3-2> 국제 쌀 가격 동향 및 전망 76
 <표 1-3-3> 세계 곡물가격 동향표 77
 <표 1-3-4> 미국 주요 농업지표 78
 <표 1-3-5> 중국의 주요 농업지표 82
 <표 1-3-6>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85
 <표 1-3-7> EU 농업의 주요 지표(2004) 89
 <표 1-3-8> 연도별 FAO 분담금 내역 109

제 2 편

2005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표 2-1-1> 총투융자 규모 129
 <표 2-1-2> 분야별 투융자 규모 129
 <표 2-1-3> 2005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135
 <표 2-1-4> 2005~2014년 농특세 사업별 투융자 계획 136
 <표 2-1-5> 2005년도 투융자 계획 및 집행실적 137
 <표 2-1-6> 2005년도 국고투융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138
 <표 2-1-7> 2005년도 계획대비 실적미달 주요사업 내역 139
 <표 2-1-8> 2004년도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 요약 141
 <표 2-1-9>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176
 <표 2-2-1>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변화 179
 <표 2-2-2>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현황 180
 <표 2-2-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현황 187
 <표 2-2-4>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191

<표 2-2-5> 2005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193
<표 2-2-6> 2005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대 실적	194
<표 2-2-7>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195
<표 2-2-8> 받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97
<표 2-2-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98
<표 2-2-10>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98
<표 2-2-1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99
<표 2-2-12>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200
<표 2-2-1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실적	201
<표 2-2-14>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201
<표 2-2-15> 2005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	203
<표 2-2-16> 농업법인제도	204
<표 2-2-17> 농가인구 추이	211
<표 2-2-18> 연도별 여성농업인 교육 현황	213
<표 2-2-19>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수	214
<표 2-2-20>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실적	215
<표 2-2-21> 여성농업인단체 교육비 지원실적	216
<표 2-2-22> 여성농업인단체 현황	216
<표 2-2-2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적	217
<표 2-2-24>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218
<표 2-2-25> 연도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218
<표 2-2-26> 제4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221
<표 2-2-27>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222
<표 2-2-28>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컨설팅사업 비교	222
<표 2-2-29> 주요농축산물 품목별 발표시기	225
<표 2-2-30> 조직유형별 공동마케팅선정조직	226
<표 2-2-31>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235

<표 2-2-32>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241
<표 2-2-33> 축산물 가격동향.....	243
<표 2-2-34> 주요 가축개량 추세.....	245
<표 2-2-35> 가축개량사업소 수지개선 내역.....	247
<표 2-2-36> 2005년도 가축개량 목표 및 실적.....	249
<표 2-2-37> 2005년도 가축개량사업 지원실적.....	249
<표 2-2-38>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실적.....	255
<표 2-2-39> 쌀생산조정제 추진실적.....	256
<표 2-2-40>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연도별 지원액.....	258
<표 2-2-41> 부채대책 자금별 농업인 신청 및 지원 현황.....	263
<표 2-2-42>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265
<표 2-2-43> 가축공제 가입률.....	266
<표 2-2-44> 전국 산업단지 분양 및 가동 현황.....	270
<표 2-2-45> 농산물가공산업 추진계획(2005년).....	271
<표 2-2-46>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5개년 기본계획 투융자계획('05~'09) ..	278
<표 2-2-47> 상수도 보급현황.....	280
<표 2-2-48>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실적.....	285
<표 2-2-49>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286
<표 2-2-50>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287
<표 2-2-51>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실적.....	287
<표 2-2-52>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	291
<표 2-2-53> 지역별 디지털사랑방 설치현황.....	292
<표 2-2-54>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유형별 현황.....	297
<표 2-2-55> 2005년 협상 개요 및 진행 상황.....	302

제 3 편

2006년도 농정시책

<표 3-1-1> 2006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321

<표 3-1-2> 2006년 농·소·정협력 지원사업 322

<표 3-1-3> 2005년도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 요약..... 324

<표 3-2-1> 쌀 전업농 육성 주요 추진실적('95~'05년) 336

<표 3-2-2> '06 여성농업인단체 교육훈련비 지원계획..... 351

<표 3-2-3>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366

<표 3-2-4> BSE 검사현황 368

<표 3-2-5> 연도별 발생동향..... 368

<표 3-2-6> 공동마케팅조직 시범사업 조직 373

<표 3-2-7> 직불제 주요 추진현황 383

<표 3-2-8>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385

<표 3-2-9> '06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적 386

<표 3-2-10> 가축공제 가입률..... 388

<표 3-2-11>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390

<표 3-2-12>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408

<표 3-2-13>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 413

<표 3-2-14>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414

<표 3-2-15> 받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415

<표 3-2-1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415

<표 3-2-17>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417

<표 3-2-18>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계획..... 418

<표 3-2-19> '06년도 사업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426

<표 3-2-20> 설문조사 결과 427

<표 3-2-21> 사업단별 연차별 지원 계획..... 428

<표 3-2-22> 한-아세안 관세철폐방식(Modality) 436

<표 3-2-23> 초민감품목 주요 농산물.....	436
<표 3-2-24> 2006년 협상 주요 내용.....	437
<표 3-2-25>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446
<표 3-2-26> 연도별 대북 정부지원 현황.....	447
<표 3-2-27> 연도별 대북 민간지원 현황.....	449

그림 차례

<그림 2-2-1> 농업법인 수 및 연간 매출액.....	205
<그림 2-2-2> 주요 가축개량 추세도.....	245
<그림 2-2-3> 2005년도 사업성과.....	273

제 1 편



2005년도 농업동향

제1장 경제동향	3
제2장 국내 농산물 수급동향	39
제3장 국제 농업동향	74

제 1 장 경제동향

제1절 국내외 경제동향

1. 국내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

2005년 중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설비투자와 수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4.0% 성장하였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는 부진하였으나 민간소비가 증가로 전환되고 설비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재화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표 1-1-1> 경제활동 부문별 경제성장률 (단위 : 전년대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 D P		9.3	3.8	7	3.1	4.7	4.0
경 제 활 동 부 별	전 산 업	8.1	4.0	6.7	3.1	5.1	4.0
	농림어업	1.2	1.1	△3.5	△5.3	9.2	△0.1
	제 조 업	17.0	2.2	7.6	5.5	11.1	7.0
	서비스업	9.5	4.8	7.8	1.6	1.9	3.0
재 고 증 가 율		16.1	0.0	△0.2	△0.6	9.3	2.4
제조업평균가동율		78.6	75.3	78.4	78.3	80.4	79.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 산업별 생산활동

2005년 중 농림어업은 0.1% 감소하였다. 이 중 농업은 생산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이는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전년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어업은 해면어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4%로 소폭 증가하였다. 광업은 유가상승에 따른 연탄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금속광물의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1.5% 감소하였다.

<표 1-1-2>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P				
				연간	1/4	2/4	3/4	4/4
농 립 어 업	△3.5	△5.3	9.2	-0.1	-2.1	2.6	-0.2	-0.9
광 업	△7.7	0.9	2.7	-1.5	-1.6	-1.2	-9.8	4.7
제 조 업	7.6	5.5	11.1	7.0	5.1	5.0	7.4	10.2
전기 가스 수도사업	7.7	4.7	6.6	8.0	8.8	7.3	5.7	9.9
건 설 업	2.8	8.6	1.8	0.1	-2.6	1.0	0.7	0.4
서 비 스 업 ¹⁾	7.8	1.6	1.9	3.0	2.2	2.5	3.4	3.9
도소매 음식숙박업	5.4	△2.8	△0.2	2.2	0.1	1.9	2.7	3.7
운수창고 및 통신업	9.2	4.8	7.0	4.1	3.6	3.6	4.1	5.0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8.3	2.1	1.4	3.0	2.4	2.5	3.4	3.8
국 내 총 생 산	7.0	3.1	4.7	4.0	2.7	3.2	4.5	5.3
국 민 총 소 득	7.0	1.9	3.9	0.5	0.4	0.1	0.3	1.2

주 : 1) 수입세 포함,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제조업은 작년에 이어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 전기전자의 생산이 수출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자동차 등 운수장비도 내수 증가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산업용 및 공공부문의 전력수요 증가와 도시가

스용 LNG 판매가 크게 늘어 전년대비 8.0% 증가하였다.

건설업은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주거용 건물건설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상업용 건물 건설이 감소한데다 토목건설도 도로건설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내수회복에 따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업이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3.0% 성장하였다.

(2) 소비지출

주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모두 증가로 전환되고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확대됨에 따라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함에 따라 최종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표 1-1-3>

소 비 동 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p				
				연간	1/4	2/4	3/4	4/4
소 비 지 출	7.6	△0.3	0.4	3.4	1.9	3.2	4.2	4.3
민간소비지출	7.9	△1.2	△0.3	3.2	1.6	3.0	4.0	4.2
정부소비지출	6.0	3.8	3.7	4.3	3.2	4.2	5.1	4.8

자료 : 한국은행

(3) 저축 및 투자

2005년 총저축률은 전년대비 1.9% 포인트 하락한 33.0%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데 비해 최종소비지출은 전년대비 6.2%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민간총저축률은 전년대비 1.8%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정부총저축률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1-1-4> 총저축 및 총투자 추이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p
총 저 축	31.3	32.8	34.9	33.0
민 간	19.6	21.1	24.6	22.8
일 반 정 부	11.7	11.6	10.2	10.2
총 투 자	29.1	30.1	30.4	30.2
민 간	23.8	24.1	24.4	24.6
일 반 정 부	5.3	6.0	6.0	5.7
투자재원자립도	107.3	109.0	114.7	109.2

자료 : 한국은행

총투자율은 30.2%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하락하였다. 설비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부진하여 국내 총고정투자의 증가율이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총고정자본 형성은 설비투자의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2.3% 성장하는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2.4% 성장한 반면 건물건설은 1.0%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전기전자기기 및 정밀기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 5.1% 성장하였다.

<표 1-1-5> 투자지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p				
				연간	1/4	2/4	3/4	4/4
총고정자본형성	6.6	4.0	2.1	2.3	0.4	2.0	1.9	4.2
설 비 투 자	7.5	△1.2	3.8	5.1	2.9	2.7	4.3	10.2
건 설 투 자	5.3	7.9	1.1	0.4	△2.2	1.6	0.3	0.9

자료 : 한국은행

나. 물가와 금리

(1) 물가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공업제품과 납입금, 시내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의 출하증가로 예년에 비해 조금 오르고, 집세가 안정되어 연평균 2.7% 상승에 그쳤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4분기 중 농산물의 출하증가와 서비스물가 안정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서비스물가 안정으로 3/4분기 물가상승률도 2.3%로 안정되었으며 4/4분기 중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물가의 안정으로 2.5% 증가에 그쳤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4.1% 상승하였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제의 지수는 2.3% 상승해 전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에 비해 1.8% 상승하였다.

<표 1-1-6>

물 가 동 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연간	1/4	2/4	3/4	4/4
소 비 자 물 가	2.7	2.8	3.6	2.7	3.2	3.0	2.3	2.5
농 축 수 산 물	6.2	6.2	8.9	1.8	3.7	3.6	△0.2	0.7
공 업 제 품	1.7	1.6	2.6	3.7	3.3	3.7	3.9	3.9
서 비 스	2.8	2.8	3.1	2.4	2.9	2.4	2.1	2.1
생 산 자 물 가	△0.3	2.2	6.1	2.1	3.4	2.2	1.7	1.5
농 립 수 산 품	2.5	5.7	12.1	△3.7	△2.5	△2.5	△6.7	△2.8
공 산 품	△1.5	1.8	7.5	3.1	5.0	3.1	2.7	1.9
전 력 수 도 가 스	△3.2	3.0	0.9	1.2	1.7	1.1	1.6	0.5
서 비 스	2.1	3.0	2.8	1.3	1.3	1.1	1.2	1.7

주 : 연간은 연평균 기준 전년대비
 자료 : 한국은행

수출물가는 전년대비 6.7% 하락하였다. 이는 원유 및 금속소재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금속1차제품이 올랐으나, 대미 달러 원화환율 하락 및 경쟁격화 등으로 농수산물, 섬유·의복·가죽제품, 일반 기계장비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이 큰 폭으로 내린 데 기인한다.

<표 1-1-7> 수출입 물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연간	1/4	2/4	3/4	4/4
수 출 물 가	△7.0	△2.2	6.2	△6.7	△4.9	△7.6	△7.7	△6.2
수 입 물 가	△6.2	1.8	10.2	2.8	0.1	0.9	4.2	6.3

단위 : 한국은행

수입물가는 전년대비 2.8% 상승하였다. 이는 대미달러 원화환율 하락으로 자본재, 소비재가 내렸으나, 국제유가 및 금속소재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자재가 오른 데 기인한다.

(2) 금리

2005년 중 국고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상반기 중 고 유가와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였으나 6월 이후 미국의 금리 상승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반등하여 전년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표 1-1-8> 시중실세금리 (단위 : 연%)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회사채유통수익률(3년)	7.05	6.56	5.43	4.73	4.68
CD유통수익률(3개월)	5.32	4.81	4.31	3.79	3.65
콜금리(1일)	4.65	4.18	3.97	3.63	3.33

자료 : 재정부

다. 고용과 임금

(1) 고용

2005년 경제활동인구는 2,374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각각 5.6%, 2.7%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각각 1.3%, 1.0% 감소하였다. 실업자는 88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표 1-1-9>

고 용 동 향

(단위 : 천명,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증감율
경제활동인구	22,921	22,957	23,417	23,743	1.4
경제활동참가율	61.9	61.4	62.1	62.0	△0.1p
취 업 자	22,169	22,140	22,557	22,856	1.3
농 립 업	1,999	1,877	1,749	1,747	△0.1
제 조 업	4,241	4,205	4,290	4,234	△1.3
사회간접자본 및 기 타 서 비 스	15,841	15,967	16,427	16,789	2.2
건 설 업	1,746	1,816	1,820	1,814	△0.3
실 업 자	752	818	860	887	3.1
실 업 률	3.3	3.6	3.7	3.7	0.0p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 임금

2005년도 근로자 명목임금(상용근로자 기준)은 연중 6.4% 올라 전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업이 전년대비 0.9% 증가해 상승세가 둔화되고 교육서비스업과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은 각각 전년대비 0.1%, 1.2% 감소하였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전년대비 8.1% 증가하여 4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노동투입량의 감소와 산출량의 상승세 유지에 따른 것으로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표 1-1-10>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연간	1/4	2/4	3/4	4/4
명 목 임 금	11.2	9.4	6.5	6.4	8.0	7.3	5.3	5.9
실 질 임 금	8.2	5.7	2.8	3.6	4.7	4.2	2.8	3.3
제 조 업 노동생산성 ¹⁾	10.9	4.8	10.8	8.1	5.7	4.2	9.4	13.3

주 : 1) 노동생산성 지수(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 기준
 자료 : 노동부, 산업자원부

라. 경상수지

<표 1-1-11> 경 상 수 지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경 상 수 지	80	54	120	282	166
상 품 수 지	135	148	220	376	335
수 출	1,515	1,634	1,973	2,577	2,890
수 입	1,380	1,486	1,753	2,201	2,555
서 비 스 수 지	△39	△82	△74	△81	△131
소 득 수 지	△12	4	3	11	△13
경 상 이 전 수 지	△4	△16	△29	△24	△25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경상수지는 2004년에 비해 흑자규모가 116억달러 줄어든 1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수입이 큰 폭

으로 증가하여 흑자폭이 2004년보다 41억달러 축소된 33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적자규모가 2004년보다 크게 확대된 13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1) 수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재화수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여 전년의 높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이중 재화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9.7% 증가하였다. 서비스수출은 여객 및 화물운임이 늘었으나 외국인의 국내여행경비 지출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0.2% 감소하였다.

(2) 수입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전년대비 6.9% 증가하였다. 재화수입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산업용기계, 운송장비 등의 수입이 늘어나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입은 화물 및 여객운임 등의 지급과 내국인의 해외여행경비 지출이 늘어나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다.

(3) 자본수지

2005년 중 자본수지는 4.9억달러 순유입을 기록하여 2004년 76억달러 보다 순유입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4) 환율

2005년도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1,000~1,050원의 밴드권을 형성하며 변동하였다. 1/4분기 중 1,000원 초반으로 하락한 환율은 2/4분기 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3/4분기 중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였으나 3/4분기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 유입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2. 해외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

<표 1-1-12>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대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세 계	2.3	3.0	2.7	4.1	3.6
선 진 국	0.9	1.6	1.9	3.3	2.5
미 국	0.5	1.9	2.7	4.2	3.5
일 본	0.4	△0.3	1.8	2.3	2.7
E U	1.6	0.9	0.8	1.8	1.4
개 도 국	4.1	4.8	6.7	7.6	7.2
한 국	3.8	7	3.1	4.7	4.0
중 국	7.3	8.3	10.0	10.1	9.9
중 남 미	0.7	△0.9	1.9	5.9	4.3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하반기에 회복기에 들어선 일본과 유로지역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고유가와 허리케인피해로 소비부진이 우려되었으나 3%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정부의 과열경기 진정정책으로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긴 하였지만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반기들어 달러화에 대한 주요 통화의 약세는 일본과 유로지역의 수출을 증가시켜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

나. 고용 및 물가

2005년중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상반기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하반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3/4분기 이후 고유가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일본지역은 4%대의 실업률을

유지하였으며 유로지역은 3/4분기 중 실업률이 9% 가까이 증가하는 등 연 중 8%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4분기와 3/4분기 중 유가상승에 따라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2/4분기와 4/4분기 중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이후 2%대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다. 교역 및 경상수지

<표 1-1-13> 세계교역과 주요국 경상수지 (단위 : 십억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미 국	△393	△480	△541	△665	△782
일 본	87	112	136	172	164
유 로 지 역	△19	50	37	62	29

자료 : 재정경제부

2005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7천8백억 달러로 만성적인 적자문제가 지속되었다. 일본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7.3%, 15.7% 증가해 흑자폭이 감소했으며 유로지역은 수입이 12.3%로 수출 증가율 7.3%를 앞질러 흑자폭이 축소되었다.

라. 국제금리 및 환율

2005년 미국 금리는 단기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일본은 2005년 9월 이후 0.1%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유로지역 금리는 전년기말보다 0.25%p 상승하였다.

<표1-1-14>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¹⁾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미 국 ²⁾	1.75	1.25	1.00	2.25	4.25
일 본 ³⁾	0.10	0.10	0.10	0.10	0.10
유 로 지 역 ⁴⁾	3.29	2.75	2.00	2.00	2.25

주 : 1) 기말기준 2) 연방기금금리 3) 공정 할인율 4) 단기 공개시장조작 금리.
 자료 : 재정경제부

2005년 중 미 달러화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통화국들과의 금리차에 따라 강세를 보였다. 9월 이후 정책금리를 0.1%로 동결한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은 하반기에 가속화되었으며 유로화 역시 금리차와 경제성장률의 차이로 약세를 보였다.

<표 1-1-15> 주요국 통화의 환율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미 달 러 / 유 로	0.890	1.050	1.258	1.355	1.184
일 본 엔 / 미 달 러	131.5	118.8	107.0	103.8	117.5

자료 :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선, 연구원 심송보)

제2절 농촌 경제동향

1. 농업구조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05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273천가구로 전년의 1,240천가구보다 32천가구(2.6%) 증가하였으며, 농가인구는 3,434천명으로 전년의 3,415천명보다 19천명(0.5%)이 증가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62.6%인 796천가구로 전년의 785천가구(63.3%)보다 11천가구가 증가하였으며,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전체농가의 37.4%인 477천가구로 전년의 455천가구(36.7%)보다 21천가구가 증가하였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령층이 60대인 경영주가 33.8%(430천명), 70세 이상 경영주는 24.5%(311천명)에 이르며, 전체농가에서 60세이상 고령층의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세미만 경영주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인구(48,294천명)중에서 농가인구(3,434천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년(7.1%)과 같은 수준이며, 연령계층별 농가인구 비중을 보면 0~14세 9.8%, 15~64세 61.1%, 65세이상 29.1%로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14세 이하인구×100)는 298.2로 2004년의 284.2보다 크게 높아져 노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인구의 성별 비중은 남자가 1,677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48.8%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1995	2000	2003	2004	2005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농 가 호 수	천호	1,501	1,383	1,264	1,240	1,273	32	2.6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851 (10.9)	4,031 (8.6)	3,530 (7.4)	3,415 (7.1)	3,434 (7.1)	19	0.5	
호당농가인구	명	3.23	2.91	2.79	2.75	2.70	0.05	△0.18	
연령별 농가 인구	50세이상 (구성비)	천명 (%)	2,122 (43.7)	2,009 (49.9)	1,957 (55.4)	1,940 (56.9)	1,952 (56.8)	12	0.6
	50세미만 (구성비)	천명 (%)	2,729 (56.3)	2,022 (50.1)	1,573 (44.6)	1,475 (43.1)	1,482 (43.2)	7	0.5
성별 농가 인구	남 자 (구성비)	천명 (%)	2,373 (48.9)	1,971 (48.9)	1,715 (48.6)	1,654 (48.4)	1,677 (48.8)	23	1.4
	여 자 (구성비)	천명 (%)	2,478 (51.1)	2,060 (51.1)	1,815 (51.4)	1,761 (51.6)	1,757 (51.2)	△4	△0.2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나.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2천ha 줄어든 1,824천ha로, 이 가운데 논면적은 1,105천ha로 전년에 비하여 10천ha 감소하였으며, 밭면적은 719천ha로 2천ha가 감소하였다.

경지면적의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건물·건축(5.2천ha), 공공시설(3.5천ha), 기타사유(3.1천ha)로 인하여 총 13.3천ha의 경지가 감소한 반면, 개간·간척(1.4천ha), 복구 등(0.3천ha)으로 총 1.7천ha 경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지이용면적은 1,921천ha로 전년보다 20천ha가 감소하였고,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05.2%에서 104.7%로 낮아졌다.

경지 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1,232천ha로 전년보다 1천ha 증가, 채소(시설 채소 포함)는 321천ha로 20천ha 감소, 과수(시설과수 포함)는 155천ha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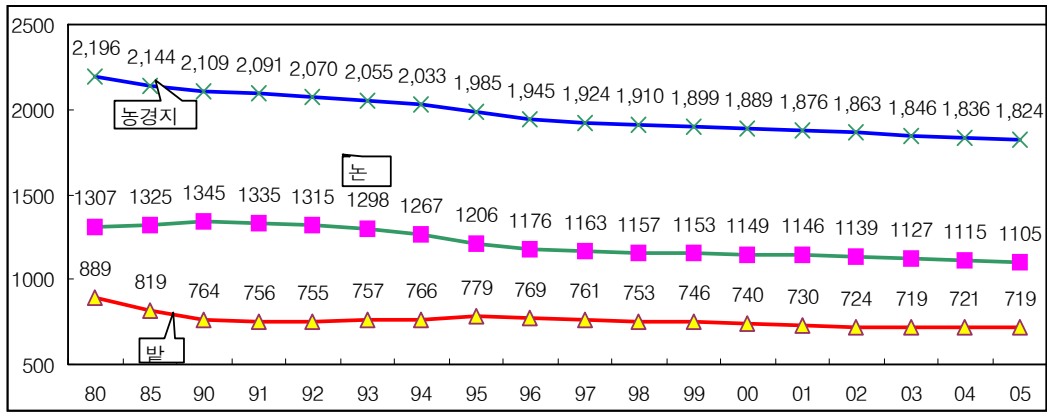
2천ha 감소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44.2천ha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3.6천ha 감소하였고, 휴경율은 전년보다 0.2%p 줄어든 2.4%로 나타났다.

<표 1-1-17>

경지면적 변동추이

(단위 : 천ha)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1-18>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 간	간 척	복 구	계	건 건	물 축	공 시	
1995	15.6	5.1	9.0	1.5	63.0	24.7	11.2	27.1	△47.4
1996	12.1	8.9	0.5	2.7	51.9	16.8	6.6	28.5	△39.8
1997	10.9	5.5	3.1	2.3	32.9	10.4	7.1	15.4	△22.0
1998	12.3	5.9	3.1	3.3	25.3	6.3	5.9	13.2	△13.0
1999	12.0	8.1	0.8	3.1	23.0	5.0	7.5	10.5	△11.0
2000	9.0	5.6	1.0	2.4	19.1	5.3	5.2	8.6	△10.1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2002	4.5	3.3	0.3	0.9	18.0	6.4	4.4	7.2	△13.5
2003	3.2	2.3	0.0	0.9	19.9	7.9	4.8	7.1	△16.6
2004	8.2	7.2	0.3	0.6	18.6	6.7	5.7	6.2	△10.4
2005	1.7	1.0	0.4	0.3	13.3	5.2	3.5	3.1	△11.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지이용면적	2,197	2,098	2,089	2,020	1,936	1,941	1,921
식 량 작 물	1,346	1,318	1,334	1,300	1,236	1,231	1,232
(미 곡)	(1,056)	(1,072)	(1,083)	(1,053)	(1,016)	(1,001)	(980)
(맥 류)	(90)	(68)	(92)	(81)	(65)	(63)	(61)
(두류 등)	(200)	(177)	(159)	(166)	(155)	(167)	(191)
경 제 작 물	851	780	755	720	700	710	689
(채 소)	(403)	(386)	(366)	(334)	(328)	(341)	(321)
(과 수)	(174)	(173)	(167)	(166)	(163)	(157)	(155)
(기 타) ¹⁾	(274)	(221)	(222)	(220)	(209)	(212)	(213)
경 지 면 적	1,985	1,889	1,876	1,863	1,846	1,836	1,824
경지이용율(%)	108.1	110.5	110.6	107.6	103.9	105.2	104.7
(논)	(104.1)	(106.3)	(107.9)	(105.9)	(101.8)	(102.7)	(102.9)
(밭)	(114.7)	(116.9)	(114.9)	(110.4)	(107.3)	(109.0)	(107.3)

주 : 1) 특·약용작물, 뽕밭,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1-20> 휴 경 면 적

(단위 : 천ha)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휴경면적	64.6	34.3	29.5	22.3	17.0	16.8	16.6	20.0	46.4	47.8	44.2
논	33.5	14.5	10.3	6.2	4.6	4.3	3.8	5.6	25.8	26.7	24.1
밭	31.1	19.8	19.2	16.1	12.4	12.5	12.8	14.4	20.6	21.2	20.1
휴경율(%)	3.2	1.7	1.5	1.2	0.9	0.9	0.9	1.1	2.5	2.6	2.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통계기획팀 서기관 임신태)

2. 농가경제

가. 소득 동향

(1) 농가소득

2005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0,503천원으로서 전년(29,001천원)에 비해 5.2%(1,502천원) 증가하였다. 농업소득은 소폭(1.9%) 감소하였으나 농외소득 3.6%, 이전소득 35.7%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표 1-1-21>

농 가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증 감	
							금 액	%
농 가 소 득 ¹⁾	21,803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1,502	5.2
□□경상소득	21,803	23,907	24,475	22,000	24,600	25,778	1,178	4.8
○ 농업소득	10,469	11,267	11,274	10,572	12,050	11,815	-235	-1.9
○ 농외소득	6,931	7,829	8,140	9,397	9,544	9,884	340	3.6
○ 이전소득	4,403	4,811	5,060	2,031	3,006	4,078	1,072	35.7
□□비경상소득	-	-	-	4,878	4,401	4,725	324	7.4

주 :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38.7%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비중이 각각 2.9%p, 0.5%p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 비중은 3.0%p 증가하였다.

<표 1-1-22>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농 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상소득	100.0	100.0	100.0	81.9	84.8	84.5
○농업소득	48.0	47.1	46.1	39.3	41.6	38.7
○농외소득	31.8	32.8	33.2	35.0	32.9	32.4
○이전소득	20.2	20.1	20.7	7.6	10.4	13.4
□□비경상소득	-	-	-	18.1	15.2	15.5
< 일 본 >						
○농업소득	16.2	12.7	13.0	구)14.3 신)25.4	24.8	-

주 1) :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2) : 일본은 '03년 조사체계개편(경영주 부부 및 농업관련 세대원 중심으로 파악)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2)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11,815천원으로 전년(12,050천원)에 비해 1.9%(235천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총수입이 소폭 감소(0.5%)하였고 농업경영비가 증가(0.7%)하였기 때문이다.

<표 1-1-23> 농 업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증 감	
							금 액	%
농 업 소 득 (농업소득률)	10,469 (65.4)	11,267 (55.8)	11,274 (56.5)	10,572 (44.8)	12,050 (45.3)	11,815 (44.6)	-235	-1.9
○농업총수입	16,012	20,193	19,951	23,611	26,623	26,496	-127	-0.5
○농업경영비	5,543	8,927	8,677	13,039	14,572	14,681	109	0.7

주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표 1-1-27>

농 외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증 감	
							금 액	%
농 외 소 득	6,931	7,829	8,140	9,397	9,544	9,884	340	3.6
○겸 업 소 득	1,527 (22.0)	1,491 (19.0)	1,454 (17.9)	2,266 (24.1)	2,342 (24.5)	2,531 (25.6)	189 -	8.1 -
○사 업 외 소 득	5,404 (78.0)	6,338 (81.0)	6,686 (82.1)	7,131 (75.9)	7,201 (75.5)	7,353 (74.4)	152 -	2.1 -

주 : 농외소득 = 겸업소득 + 사업외소득,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4)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35.7%, 비경상소득은 7.4% 증가하여 합계는 전년에 비해 1,396천원(18.8%) 증가한 8,803천원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등의 항목을 비경상소득으로 분리되었다.

<표 1-1-28>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증 감	
							금 액	%
합 계	4,403	4,811	5,060	6,909	7,407	8,803	1,396	18.8
○이 전 소 득	-	-	-	2,031	3,006	4,078	1,072	35.7
○비 경 상 소 득	-	-	-	4,878	4,401	4,725	324	7.4

주 : '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됨.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나. 가계지출 동향

2005년 가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26,649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19,378천원으로 전년(18,386천원)에 비해 5.4%(992천원) 증가하였다.

<표 1-1-29>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증 감	
							금 액	%
가 계 비	14,782	18,458	17,858	24,063	24,691	26,649	1,958	7.9
○ 소 비 지 출	14,782	18,458	17,858	18,162	18,386	19,378	992	5.4
○ 비 소비 지 출	-	-	-	5,901	6,305	7,271	966	15.3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61.0	63.1	43.9	48.8	44.3	-	-
평 균 소 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68.3	78.0	73.7	86.6	81.0	83.4	-	-

*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조사항목으로 추가됨.

주 : '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농가소득-비소비지출, '02년 처분가능소득=농가소득-조세·부담금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농가의 소비지출은 19,378천원으로 전년(18,386천원)에 비해 5.4%(992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주거비(17.9%), 광열수도비(7.3%), 보건의료비(9.3%) 등 전반적으로 지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30>

소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증 감	
							금 액	%
소 비 지 출 ¹⁾	14,782	18,458	17,858	18,162	18,386	19,378	992	5.4
○ 식 료 품 비	3,118	3,752	3,738	4,575	4,823	4,998	175	3.6
○ 주 거 비	509	625	605	452	403	475	72	17.9
○ 광 열 수 도 비	484	848	824	974	994	1,067	73	7.3
○ 가 구 가 사 용 품 비	678	616	629	511	510	505	-5	-1.0
○ 피 복 신 발 비	627	509	469	581	553	585	32	5.8
○ 보 건 의 료 비	1,001	1,492	1,414	1,356	1,476	1,613	137	9.3
○ 교 육 비	1,553	1,794	1,629	874	749	756	7	0.9
○ 교 양 오락 비	150	157	158	461	574	602	28	4.9
○ 교 통 통 신 비	793	1,486	1,566	2,035	2,056	2,176	120	5.8
○ 기 타 지 출 ²⁾	5,869	7,178	6,826	6,342	6,249	6,601	352	5.6

주 : 1) 2002년도 이전 소비지출은 2003년도 비소비지출항목 신설에 따라 가계 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 금액이고 2003년도는 순수한 소비지출 금액임.

2) 기타지출은 감가상각비, 기타소비지출 등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농가의 비소비지출은 7,271천원으로 나타났다. '03년부터 분리·신설된 이 항목은 조세 및 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1-31> 비소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증 감	
							금 액	%
비 소비 지 출	174	237	239	5,901	6,305	7,271	966	15.3
○ 조세 및 부담금	174	237	239	294	299	396	97	32.4
○ 공적연금납부금	-	-	-	319	339	345	6	1.8
○ 사회보험납부금	-	-	-	375	358	326	△32	△8.9
○ 기 타	-	-	-	4,913	5,309	6,204	895	16.9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2005년도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3,232천원이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3,854천원으로 전년(4,309천원)에 비해 10.6%(455천원) 감소하였다.

이는 처분가능소득이 소폭(2.4%) 증가하였으나, 소비지출의 증가폭이 5.4%로 더 컸기 때문이다.

<표 1-1-32> 가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증 감	
							금 액	%
○ 처분가능소득 ¹⁾	21,629	23,669	24,236	20,976	22,696	23,232	536	2.4
○ 소비 지 출 (분 가지 출)	14,782 (548)	18,458 (393)	17,858 (584)	18,162 -	18,386 -	19,378	992	5.4
○ 잉 여 금 ²⁾	6,299	4,819	5,794	2,815	4,309	3,854	-455	-10.6

주 : 1) 2003년, 2004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2년 및 이전의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2) 2003년, 2004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2년 및 이전의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라. 농가자산 동향

2005년말 현재 가구당 평균자산은 298,178천원으로 전년(243,665천원)에 비해 22.4%(54,513천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정자산은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2.6% 증가하였고, 유동자산도 21.3% 증가하였다.

<표 1-1-33>

농 가 자 산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감(B/A)	
							금 액	%
농 가 자 산	158,171	166,765	170,465	204,527	243,665	298,178	54,513	22.4
고 정 자 산 ¹⁾	134,334 (84.9)	129,665 (77.8)	128,153 (75.2)	165,855 (81.1)	194,401 (79.8)	238,399 (80.0)	43,998 -	22.6 -
유 동 자 산 ²⁾	23,837 (15.1)	37,100 (22.2)	42,312 (24.8)	38,672 (18.9)	49,264 (20.2)	59,779 (20.0)	10,515 -	21.3 -

주 : 1)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의 채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마. 농가부채 동향

농가부채는 2005년말 현재 가구당 27,210천원으로 전년(26,892천원)에 비해 1.2%(318천원) 증가하였다. 이 중 농업용부채는 소폭 감소(△3.8%)하였으나 농업용 이외부채는 증가(9.7%)하여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평가지표인 부채/당좌자산 비율은 50.1%으로서 전년(61.1%)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11.0%p 하락).

<표 1-1-34>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감(B/A)	
							금액	%
농가부채 (A)	9,163	20,376	19,898	26,619	26,892	27,210	318	1.2
○농업용부채 (구성비)	6,351 (69.3)	12,019 (59.0)	11,642 (58.5)	17,455 (65.6)	16,961 (63.1)	16,315 (60.0)	△646 -	△3.8 -
○농업용이외부채 ¹ (구성비)	2,812 (30.7)	8,357 (41.0)	8,256 (41.5)	9,164 (34.4)	9,931 (36.9)	10,895 (40.0)	964 -	9.7 -
당좌자산 (B)	19,739	32,324	37,103	33,942	43,995	54,354	10,359	23.5
단기상환능력 [(A/B)×100]	46.4	63.0	53.6	78.4	61.1	50.1	-	-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전·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37,742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의 67.5% 수준이었다.

평균 농가자산은 298,178천원이며 「제1종 겸업농가」의 자산이 346,030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채비율(부채/소득, 부채/자산)은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고, 「제2종 겸업농가」가 가장 낮았다.

<표 1-1-35>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가구성비 ¹⁾	100.0	62.6	13.0	24.5	-	-	-
농가소득	30,503	25,466	38,005	37,742	83.5	124.6	123.7
가계비	26,649	23,144	29,825	32,647	86.7	111.9	122.5
자산	298,178	282,997	346,030	308,126	94.9	116.0	103.3
부채	27,210	24,690	44,894	24,281	90.7	165.0	89.2
- 부채 / 소득	89.2	97.0	118.1	64.3	-	-	-
- 부채 / 자산	9.1	8.7	13.0	7.9	-	-	-

주 : 1) 2005년 농업총조사결과 전·겸업별 농가의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사. 주·부업별 지표

주·부업 및 자급별 농가소득은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소득이 38,497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가자산은 전문농가가 384,034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급농가는 203,943천원으로 전문농가의 53.1%에 지나지 않으며, 소득 및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대규모 경지규모(3ha 이상)를 보유한 전문농가가 가장 높았다.

※ 주·부업농가 기준

- 주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가 :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2000만원 이상
- 부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이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의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표 1-1-36>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주 업 농 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 가 구 성 비 ¹⁾	100.0	18.4	47.8	17.1	16.7
농 가 소 득	30,503	38,497	19,283	37,482	22,600
가 계 지 출	26,649	30,280	19,472	32,809	21,780
자 산	298,178	384,034	207,424	335,950	203,943
부 채	27,210	49,125	11,266	24,781	15,948
- 부채 / 소득	89.2	127.6	58.4	66.1	70.6
- 부채 / 자산	9.1	12.8	5.4	7.4	7.8

주 : 1) 2005년 농업총조사결과 주·부업별 농가의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44,061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22,648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0,503천원)의 74.2% 수준이다.

농가자산은 축산농가의 자산이 441,965천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채소농가의 자산은 240,00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부채/자산비율은 화훼농가, 특작농가, 채소농가가 높은 반면, 논벼농가는 부채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1-1-37>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진작	축산
농가구성비 ¹⁾	100.0	50.9	11.4	18.1	2.2	0.8	9.9	6.5
농가소득	30,503	22,648	32,810	26,314	41,168	38,951	19,432	44,061
가계지출	26,649	21,247	26,653	25,843	30,570	27,504	23,640	29,439
자 산	298,178	275,304	348,818	240,007	261,771	338,863	271,015	441,965
부 채	27,210	17,888	35,490	31,903	37,366	146,130	28,094	44,383
- 부채 / 소득	89.2	79.0	108.2	121.2	90.8	375.2	144.6	100.7
- 부채 / 자산	9.1	6.5	10.2	13.3	14.3	43.1	10.4	10.0

주 : 1) 2005년 농업총조사결과 영농형태별 농가의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교적 높으며 특히 「7.0~10.0ha」 농가의 소득은 「0.5ha미만」농가에 비하여 2배 수준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가의 탈농으로 점차 대규모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산규모도 크며, 부채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8>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7.0	7.0~10.0	10.0ha 이상
농가구성비 ¹⁾	100.0	36.0	26.0	13.7	8.4	7.3	4.8	1.4	0.7	0.5
농가소득	30,503	25,045	25,628	28,614	30,253	33,181	37,427	40,007	51,158	44,235
가계지출	26,649	22,538	23,857	26,768	26,545	27,645	32,047	32,677	29,340	38,553
자산	298,178	218,135	239,614	270,034	293,973	342,989	390,244	400,764	485,423	648,784
부채	27,210	19,826	18,223	18,282	23,007	38,640	35,031	50,653	73,072	76,111
- 부채/소득	89.2	79.2	71.1	63.9	76.0	116.5	93.6	126.6	142.8	172.1
- 부채/자산	9.1	9.1	7.6	6.8	7.8	11.3	9.0	12.6	15.1	11.7

주 : 1) 2005년 농업총조사결과 경지규모별 농가의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40대~50대 연령층의 소득이 4천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70대 연령층의 소득은 19,492천원이다.

농가자산은 역시 50대이하 연령층이 3억 5천만원이상 보유한 반면, 60~70대 연령층은 2억원대에 그쳤다.

경영주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40대 연령층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1-39>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농가구성비 ¹⁾	100.0	3.3	14.6	23.8	33.8	24.5
농가소득	30,503	31,602	40,513	40,721	29,538	19,492
가계지출	26,649	31,598	33,866	34,929	24,592	19,427
자 산	298,178	355,780	363,706	358,357	284,281	238,388
부 채	27,210	49,980	58,380	46,998	18,867	7,764
- 부채 / 소득	89.2	158.2	144.1	115.4	63.9	39.8
- 부채 / 자산	9.1	14.0	16.1	13.1	6.6	3.3

주 : 1) 2005년 농업총조사결과 경영주연령별 농가의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카. 지역별 주요지표

제주도 농가소득(44,819천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38,827천원), 충남(33,215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자산은 경남이 14.9%로 가장 높고 경기(6.2%), 충남(6.3%)이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40>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전 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구성비 ¹⁾	100.0	11.1	6.0	6.7	12.8	9.6	15.6	17.0	12.3	2.8
농가소득	30,503	38,827	26,523	29,409	33,215	28,238	27,054	27,817	27,079	44,819
가계지출	26,649	36,458	24,429	25,942	27,550	20,910	23,550	23,003	26,140	36,084
자 산	298,178	583,092	273,514	273,530	319,187	213,652	193,258	239,770	240,804	414,903
부 채	27,210	36,138	31,637	23,873	20,172	21,841	26,902	21,025	35,875	47,771
- 부채/소득	89.2	93.1	119.3	81.2	60.7	77.3	99.4	75.6	132.5	106.6
- 부채/자산	9.1	6.2	11.6	8.7	6.3	10.2	13.9	8.8	14.9	11.5

주 : 1) 2005년 농업총조사결과 지역별 구성비임(단독농가 포함).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통계기획팀 서기관 임신태)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가. 개황

2005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1.7로 전년에 비해 4.0% 하락한 반면에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5.0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보다 7.4%p 악화된 89.4%로 나타났다.

<표 1-1-41>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농가판매가격지수(①)	105.1	110.7	119.8	116.4	111.7
농가구입가격지수(②)	105.7	109.6	114.7	120.3	125.0
농가교역조건지수(①/②×100)	99.4	101.0	104.4	96.8	89.4

자료 : 농협중앙회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5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1.7로 축산물(7.0%)은 전년에 비해 올랐으나 곡물(△10.9%), 청과물(△7.0%)은 내려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4.0% 하락하였다.

(1) 곡 물

2005년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1.1로 미곡(△9.8%), 두류(△15.0%), 서류(△32.9%) 등이 내려 전년에 비해 10.9%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일반미(△8.6%), 찰쌀(△26.5%), 콩(△16.1%), 고구마(△1.4%), 감자(△42.6%) 등이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2) 청과물

2005년도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6.3으로 채소류($\Delta 7.3\%$)와 과실류($\Delta 6.4\%$)가 전년보다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7.0% 하락하였다.

채소류의 경우 배추(5.6%), 상추($\Delta 41.3\%$), 미나리($\Delta 30.5\%$) 등 엽채류는 전년보다 9.1% 하락한 반면에 무(11.7%), 당근($\Delta 32.5\%$) 등 근채류는 5.8% 상승하였다. 고추($\Delta 13.4\%$), 마늘($\Delta 19.5\%$), 양파($\Delta 23.0\%$) 등 조미채류는 전년보다 17.9% 내렸으며 오이(5.3%), 참외(7.5%), 수박($\Delta 1.2\%$), 딸기(35.6%) 등 과채류는 0.6% 내렸다.

과실류의 경우 사과($\Delta 3.9\%$), 배($\Delta 11.1\%$), 포도($\Delta 39.1\%$), 단감($\Delta 16.0\%$) 등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6.4% 하락하였다.

(3) 축산물

2005년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54.1으로 한우암소(1.9), 한우수소(9.8%), 유우(24.8%), 돼지(7.9%), 우유(7.3%)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7.0% 상승하였다.

(4) 기타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05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7로서 전년대비 0.3%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참깨($\Delta 3.8\%$), 인삼(21.1%), 느타리버섯($\Delta 18.3\%$) 등 특용작물은 전년에 비해 2.6% 오른 반면에 국화($\Delta 21.7\%$), 장미($\Delta 23.0\%$) 등 화훼류는 9.8% 하락하였다.

<표 1-1-4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총 지 수	1000.0	119.8	116.4	111.7	8.2	△2.8	△4.0
곡 물	388.0	100.7	102.3	91.1	5.8	1.6	△10.9
미 곡	349.6	98.9	99.3	89.6	4.1	0.4	△9.8
맥 류	10.4	104.0	104.0	102.8	0.0	0.0	△1.2
잡 곡	4.2	108.3	108.6	107.5	1.1	0.3	△1.0
두 류	8.4	111.2	124.3	105.7	18.2	11.8	△15.0
서 류	15.4	130.9	154.5	103.7	41.7	18.0	△32.9
청 과 물	328.2	127.7	114.3	106.3	12.2	△10.5	△7.0
채 소	207.2	146.9	118.8	110.1	21.1	△19.1	△7.3
(엽채류)	36.8	199.0	114.8	104.4	25.7	△42.3	△9.1
(근채류)	12.6	251.5	185.5	196.3	73.7	△26.2	5.8
(조미채)	69.2	128.8	120.3	98.8	36.2	△6.6	△17.9
(과채류)	88.6	124.5	109.7	109.0	0.8	△11.9	△0.6
과 실	121.0	94.9	106.7	99.9	△5.9	12.4	△6.4
축 산 물	225.2	141.1	144.0	154.1	7.1	2.1	7.0
가 축	196.5	146.8	148.9	159.5	7.9	1.4	7.1
유 란	28.7	102.2	110.5	117.1	0.5	8.1	6.0
기타농산물	58.6	120.1	115.4	115.7	4.6	△3.9	0.3
특용작물	45.3	120.3	117.7	120.8	4.4	△2.2	2.6
화 훼	12.7	119.7	106.4	96.0	5.5	△11.1	△9.8
부 산 물	0.6	115.7	134.2	147.1	4.4	16.0	9.6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5년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5.0으로 가계용품(4.2%), 농업용품(3.7%), 농촌임료금(2.4%)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3.9% 상승하였다.

(1) 가계용품

2005년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2.9로 광열수도(14.0%), 보건의료(4.3%), 교육(5.6%)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4.2% 상승하였다.

(2) 농업용품

2005년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9.2로 전년보다 3.7%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약(Δ 5.5%), 배합사료(Δ 6.5%)는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비료(14.2%), 농기구(4.8%), 영농광열(16.5%), 영농자재(7.7%) 등은 상승하였다.

라. 농촌임료금

2005년도 농촌임료금 구입가격지수는 121.0으로 전년보다 2.4%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노동임금은 남자노임(2.6%)과 여자노임(4.6%) 모두 상승하여 전년보다 3.4% 올랐으며 쌀도정료는 2.8% 상승하였다. 농기계임차료는 트랙터(3.2%), 이앙기(1.1%) 등이 올라 전년보다 1.1% 상승하였다.

<표 1-1-4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총 지 수	1000.0	114.7	120.3	125.0	4.7	4.9	3.9
가 계 용 품	559.3	113.1	117.9	122.9	4.4	4.2	4.2
농 업 용 품	359.4	116.9	124.6	129.2	4.7	6.6	3.7
중 자	19.6	97.8	97.1	97.4	△0.9	△0.7	0.3
비 료	34.2	100.2	111.2	127.0	0.1	11.0	14.2
농 약	39.8	100.3	100.6	95.1	△2.3	0.3	△5.5
농 기 구	93.3	100.6	101.0	105.8	0.5	0.4	4.8
영 농 광 열	28.0	108.9	125.6	146.3	10.6	15.3	16.5
가 축	45.8	208.9	202.1	213.5	21.0	△3.3	5.6
사 료	63.4	110.9	134.5	125.7	△0.5	21.3	△6.5
영 농 자 재	35.3	103.0	122.9	132.4	1.6	19.3	7.7
농 촌 임 료 금	81.3	115.4	118.2	121.0	5.3	2.4	2.4
농 업 노 동 임 금	36.8	118.3	119.2	123.3	8.1	0.8	3.4
기 타 임 금	2.2	123.1	122.9	125.8	5.7	△0.2	2.4
도 정 료	7.4	112.6	117.2	120.5	0.9	4.1	2.8
농 기 계 입 차 료	34.9	112.4	117.1	118.4	3.1	4.2	1.1

(농협조사연구소 조사역 이세용)

4. 농림업 부가가치

2005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00년 가격 기준으로 25조 2,230억원 수준이며, 실질로는 전년대비 0.1% 감소하였다. 이중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0.4% 감소한 반면 어업부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농업은 재배업과 축산업의 생산이 모두 부진하여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재배업은 재배면적 감소 및 전년도 보다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벼, 채소 등 주요 작물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축산업도 낙농, 양계 등의 생산이 감소하였다. 어업은 양식업과 해면어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표 1-1-44>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율
(단위 : 10억원, %, 2000년 기준가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p
농 립 어 업		25,309	24,422	23,138	25,259	25,223
농 업		21,483	20,763	19,543	21,634	21,168
실 질 증감율	농 립 어 업	1.1	△3.5	△5.3	9.2	△0.1
	농 업	1.1	△3.4	△5.9	10.7	△0.4
	재 배 업	1.8	△5.8	△6.2	10.8	△0.4
	축 산 업	△4.0	15.6	△4.1	10.3	△0.5
	임 업	△0.8	△1.8	△6.5	2.6	0.7
	어 업	0.4	△7.6	0.3	△2.6	0.4

자료 :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선, 연구원 심송보)

5. 농업생산성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05년 호당 노동시간은 1,487시간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며, 농업자본액은 49,721천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하였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은 1.43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1-1-45>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영 농 시 간	1,376	1,253	1,259	1,187	1,516	1,530	1,487
농업자본액	21,323	31,425	32,661	32,145	45,019	48,118	49,721
호당경지면적	1.32	1.37	1.39	1.45	1.46	1.48	1.43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2005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2,297원으로 전년 12,210원보다 0.7% 증가하였고, 자본생산성은 0.36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93시간으로 전년과 같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3,138천원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하였다.

<표 1-1-46>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동생산성 ¹⁾	원/시간	9,387	11,778	12,141	12,997	11,114	12,210	12,297
토지생산성	천원/10a	954	1,051	1,074	1,068	1,026	1,138	1,141
자본생산성 ²⁾	원/원	0.61	0.47	0.47	0.48	0.37	0.38	0.36
노동집약도	시간/10a	102	89	88	82	92	93	93
자본집약도	천원/10a	1,575	2,237	2,294	2,225	2,763	2,963	3,138

주 : 1) 노동, 토지, 자본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 기준,
 2)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통계기획팀 서기관 임신태)

제 2 장 국내 농산물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1. 식량작물

2005년도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2004년도의 1,233천ha보다 1천ha가 늘어난 1,234천ha 수준이었으나, 식량작물중 벼재배면적은 전년의 1,001천ha보다 21천ha가 줄어든 980천ha이었다. 이는 쌀생산조정제 시행등 정부의 벼 적정생산 유도 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경지이용면적중 식량작물 재배비율은 전년도 67.1%에서 67.5%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두류, 서류의 재배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맥류의 경우는 재고량의 증가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적정 재배면적 유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2천ha 감소하였다.

전체곡물 생산량은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 양곡년도에는 총 5,718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5,041천톤에 비해 677천톤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기상여건 등의 양호로 국내곡물생산량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생산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소비량은 2004년도 18,880천톤 보다 914천톤이 늘어난 19,794천톤으로 이는 주정용 공급확대 및 국내산 쌀의 대북지원 증가(100천톤→400천톤)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쌀의 경우 국민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식용소비는 2004년보다 55천톤 감소한 반면, 2004년산 쌀 생산(4,768천톤)은 전년에 비해 549천톤이 많이 생산되었다. 매년 풍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속적인 소비량 감소에 따라 앞으로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 재고가 발생하는 공급과잉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단위 : 천ha, %)

연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량 작 물					채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곡	맥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2	5.5	331	13.7
1995	2,197	1,346	61.3	1,056	90	200	322	14.7	172	7.8	357	16.2
1996	2,142	1,340	62.6	1,050	95	195	311	14.5	171	8.0	320	14.9
1997	2,097	1,314	62.7	1,052	70	192	285	13.6	174	8.3	324	15.4
1998	2,118	1,331	62.8	1,059	83	189	278	13.1	173	8.2	336	15.9
1999	2,116	1,325	62.6	1,066	77	182	289	13.7	171	8.1	331	15.6
2000	2,098	1,316	62.7	1,072	68	176	296	14.1	169	8.1	317	15.1
2002	2,020	1,297	64.2	1,053	81	163	251	12.4	162	8.0	310	15.4
2003	1,936	1,234	63.7	1,016	65	153	245	12.3	159	8.2	298	15.4
2004	1,941	1,231	63.4	1,001	63	167	255	13.1	153	7.9	302	15.6
2005	1,942	1,232	63.4	980	61	192	240	12.4	150	7.7	300	15.4

주 : 기타는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931	6,162	5,520	5,041	5,718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624	14,576	14,418	13,385	13,850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961	20,641	20,278	18,880	19,794
-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14	9,755	10,762	10,148	11,011
-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285	9,670	9,516	8,732	8,783
연말재고	2,179	2,280	3,657	3,119	2,625	3,177	2,837	2,706	2,481
자급률(%) (사료용 제외시)	56.0 (69.6)	48.4 (71.6)	43.1 (70.3)	29.1 (55.7)	29.7 (55.6)	30.4 (58.3)	27.8 (53.3)	26.8 (50.2)	29.3 (53.4)
1인당 연간 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53.3	144.0	138.0	138.5	135.5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 곡물자급도는 생산/수요, 식량자급도는 생산/(소비-사료) 비율임.

전체 곡물자급도는 29.3%로 2004년보다 2.5% 증가되었고 사료용을 제외하면 전년도 50.2%보다 3.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도 국민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04년의 138.5kg에서 135.5kg으로 3kg이 줄어들었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82.0kg에서 1.3kg가 줄어든 80.7kg으로 나타났다며, 보리쌀은 전년 수준, 콩, 서류를 제외한 밀, 옥수수 등 기타 품목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1996	160.2	104.9	1.6	33.8	3.6	9.3	3.5	3.5
1997	157.9	102.4	1.7	33.7	3.7	9.3	3.6	3.5
1998	156.4	99.2	1.5	34.6	4.8	9.7	3.2	3.4
1999	156.9	96.9	1.5	35.8	5.8	9.9	3.8	3.2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1	145.5	88.9	1.7	34.4	6.3	8.2	2.5	3.5
2002	144.0	87.0	1.5	34.6	5.7	8.4	3.4	3.4
2003	138.0	83.2	1.0	32.7	6.2	8.0	3.2	3.7
2004	138.5	82.0	1.1	34.1	5.6	8.5	3.1	4.0
2005	135.5	80.7	1.1	31.8	4.9	9.0	4.2	3.8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서기관 최명철)

2. 원예·특용작물

가. 채소류

2005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298.0천ha이었고, 작황도 좋지않아 생산량은 2004년보다 8.5% 감소한 9,584천톤이었다. 인구증가 및 수출입 감안시 1인당 소비량은 2005년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4년도 소비량(160.8kg) 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봄무·배추 재배면적은 35.9천ha로 전년에 비해 20.7%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20.2% 감소한 1,591천톤이었다. 고랭지무·배추는 재배면적이 8.6천ha로 전년대비 15.7% 감소하여 생산량도 318천톤으로 2004년보다 17.4%가 감소하였다. 가을무·배추의 재배면적은 2004년 대비 22.1% 감소한 19.9천ha였고, 생산량도 22.9%나 감소한 1,694천톤 이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61.2천ha로 전년보다 1% 감소하였으나, 작황이 우수하여 생산량은 2004년 155천톤 보다 4.1%가 증가한 161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31.8천ha로 전년보다 5.0% 증가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375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2004년 대비 재배면적이 7.5% 증가한 16.7천ha가 재배되어, 생산량은 8.0% 증가된 1,023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요	계	8,697	10,670	11,502	11,548	10,054	10,520	10,971	10,061
	내수	8,677	10,611	11,461	11,478	10,004	10,484	10,915	10,004
	수출	20	59	41	70	50	36	56	57
공급	계	8,697	10,670	11,502	11,548	10,054	10,520	10,971	10,061
	생산	8,677	10,586	11,282	11,310	9,796	10,068	10,468	9,584
	수입	20	84	220	238	258	452	503	477
1인당 소비량(kg)	132.6	160.6	165.9	164.4	144.6	152.6	160.8	-	

주 : 1인당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순식 기준)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나. 과실류

2005년 과수재배면적은 총 154.7천ha로 전년에 비해 2.7천ha가 감소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사과가 0.2천ha, 기타 자두 등이 0.6천ha가 증가하였으나, 그 외 과종은 배 1.2천ha, 포도 0.9천ha, 감귤 0.6천ha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실 생산량은 일부 지역에서 개화기 저온피해 등이 있었으나 양호한 기상과 더불어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없어 지난해보다 182천톤 증가한 2,593천톤이었다. 과실가격은 과실 공급량의 증가, 무리한 조기출하에 따른 품질 저하, 동절기 한파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과실이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요	내수	1,790.4	2,472.7	2,746.7	2,802.4	2,805.6	2,676.4	2,829.6	3,028.5
	수출	13.0	10.9	20.2	25.0	38.5	31.4	28.2	36.1
공급	생산	1,766.2	2,300.1	2,428.7	2,487.7	2,500.1	2,275.3	2,411.3	2,593.0
	수입	37.2	183.5	338.2	339.7	344.0	432.5	446.5	471.6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8.4	59.2	58.8	55.8	58.8	62.7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기술서기관 이상혁)

다. 화훼류

화훼류의 2005년도 재배면적은 7,952ha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배 농가수는 12,859호로 '04년대비 2.3% 감소되었다.

생산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10,105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하고 소비도 국민소득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1인당 21천원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화훼류의 무역수지면에서도 지난 1999년이후 흑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2005년도 수출액은 52,142천\$로 전년도보다 7.5%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은 28,845천\$로 23,297천\$의 흑자를 지속하였다.

주 수출품목은 절화류인 장미, 국화, 백합과 난류, 선인장으로,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난류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유가상승, 환율하락, 인건비상승 등으로 절화류, 선인장 수출은 하락하였다.

<표 1-2-6> 화훼산업 현황

구 분	'90	'95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재배농가(호)	8,945	12,509	12,994	13,080	13,466	13,575	13,596	13,159	12,859
재배면적(ha)	3,503	5,156	5,824	5,891	6,305	6,321	6,860	7,522	7,952
생산액(억원)	2,393	5,090	5,965	6,649	6,966	7,893	8,092	9,218	10,105
수출액(천\$)	1,443	6,363	19,751	28,888	31,849	32,121	45,276	48,527	52,142
수입액(천\$)	5,907	26,738	17,255	19,472	20,689	22,862	22,358	23,366	28,845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기술서기관 김대경)

라. 특용작물

참깨 생산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산 생산량은 2000년산 대비 26% 감소한 23.5천톤, 2005년산 자급률은 23%수준이다.

* 생산량 : ('97) 33천톤 → ('00) 32 → ('02) 24 → ('05) 23.5

참깨 수입은 연간 약 70~80천톤 내외 수준이며 수입물량의 대부분 시장 접근물량 도입사업(추천대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생산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산 생산량은 2000년산 대비 26% 감소한 6.6천톤이며, 2005년산 자급률은 21%수준이다.

* 생산량 : ('98) 14천톤 → ('00) 9 → ('02) 11 → ('05) 6.6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참 개							땅 콩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수	계	57.8	88.9	101.6	112.0	112.2	99.0	100.6	44.2	29.7	42.9	42.6	44.3	39.7	40.8
	당년소비	56.8	86.3	94.6	104.8	104.6	85.9	90.7	40.1	25.1	41.0	42.6	43.8	38.6	39.9
	수 출	0.4	-	-	-	-	-	-	-	2.3	0.4	-	-	-	-
요	차년이월	0.6	2.6	7.0	7.2	7.6	13.1	9.9	4.1	2.3	1.5	-	0.5	1.1	0.9
	공	계	57.8	88.9	101.6	112.0	112.2	99.0	100.6	44.2	29.7	42.9	42.6	44.3	39.7
급	전년이월	4.7	19.0	7.5	17.9	7.2	7.6	13.1	8.1	3.3	2.7	2.0	-	0.5	1.1
	생 산	38.1	27.9	24.1	31.0	23.8	12.0	20.9	28.7	16.8	12.4	9.6	11.2	7.2	8.3
	수 입	15.0	42.0	70.0	63.1	81.2	79.4	66.6	7.4	9.6	27.8	31.0	33.1	32.0	31.4
자급률(%)		67	32	26	30	23	14	23	72	67	30	23	26	19	21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생산은 전년도 생산량임)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서호석)

마. 인삼류

고려인삼은 우리민족 고유의 특산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이며, 우리나라의 인삼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로서 해외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1996년 홍삼전매제 폐지 이후 재배면적이 지속, 증가추세이다. 2005년 인삼 전체 재배면적은 2004년에 비해 8.2% 증가한 14,153ha 이다.

인삼재배 농가수는 2005년 15,793호로 전체농가의 1.1%에 불과하나, 2005년도 인삼수출액은 8,300만불로서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3.7%를 차지하여, 인삼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전략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1-2-8> 인삼 생산동향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면 적	12,184ha	9,375	12,445	13,018	12,873	12,016	13,081	14,153
생 산 량	13,889톤	11,971	13,664	13,215	16,662	15,172	14,668	14,561
농 가 수	36,404호	23,172	23,011	19,310	23,430	18,106	13,797	15,793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박주환)

3. 축산물과 사료작물

가. 축산물

(1) 쇠고기

쇠고기 소비량은 2003년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여파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5년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3.4% 감소한 317천톤이었다.

소비량 중 수입산은 164천톤으로 전년보다 10.1% 감소한 반면, 국내산은 152천톤으로 5.2% 증가하였다. 한편,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6.6kg으로 전년보다 3% 감소하였다.

<표 1-2-9> 쇠고기 수급동향

구 분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총 소 비 량	346	402	384	403	390	328	317
- 국 내 산	260	212	164	147	142	145	152
- 수 입 산	85	190	220	255	248	183	164
○ 1인당 소비량(kg)	7.4	8.5	8.1	8.5	8.1	6.8	6.6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산지 소값은 2003.12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004년 5월 350만원(큰수소 기준) 까지 하락하였으나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산지 소값 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2004년 6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10월에는 538만원 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개시 발표에 따른 여파로 다시 하락하여 2005.12월에는 462만원까지 하락하였다.

소 사육두수는 산지 소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03년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3년에는 1,480천두, 2004년에는 1,666천두, 2005년에는 1,819천두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5년 사육두수는 전년에 비해 9.2%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04년 12월 189천호에서 2005년 12월 192천가구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4년 12월 8.8두에서 2005년 12월 9.5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육두수 증가는 암소 도축률 감소와 가임암소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할 때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05년 총 소비량은 2004년보다 2.1% 감소한 84만톤으로 1인당 소비량은 2004년 17.9kg에서 2005년에는 17.8kg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돼지사육두수는 PMWS·PED 등 소모성질환의 영향으로 2004년 12월 8,908천두에서 2005년 12월에는 8,962천두로 0.6% 증가하였고, 2005년 12월 모돈수는 966천두로 2004년 12월 935천두보다 3.3% 증가하였다.

사육가구수는 2004년 12월 13.3천가구에서 2005년 12월에는 12.3천 가구로 7.5% 감소 현상을 보여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4년 12월 671두에서 2005년 12월 729두로 증가하여 점차 규모화·전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산지 돼지가격은 2004년에는 연간 평균가격이 235천원/100kg이었으나 2005년은 소모성질환으로 인한 국산 공급감소로 253천원/100kg으로 상승하였다.

(3) 닭고기

2005년 닭고기 총 소비량은 35.7만톤으로 2004년에 비해 11.9%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7.6kg으로 전년도 6.9kg보다 증가하였다. 닭고기 산지 가격은 전년도보다 1.8% 상승하여 연평균 1,440원/kg이었으며, 연말기준 전체 사육수수는 전년도보다 2.7% 증가한 110백만수였다.

전체 사육농가의 수는 2004년 말에 비하여 3.4% 증가한 136천호였으며, 호당 사육수수는 0.7% 감소한 807수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2004년보다 0.4% 감소한 1,443호였다.

(4) 계란

계란의 2005년 총 소비량은 518천톤으로 2004년보다 2.0%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3.9% 증가한 11.0kg이었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도보다 1.3% 하락한 1,054원/10개(특란기준)이었다.

(5) 우유

2005년 원유 총 생산량은 2,229천톤으로 2004년 2,225천톤 대비 1.2%(26천톤) 감소하였다.

국내 유제품 소비량은 3,079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04년 3,124천톤 보다 1.4%(45천톤) 감소하였으며, 시유 소비량은 2004년 1,781천톤 보다 5.1%(90천톤) 감소한 1,691천톤 이었다.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62.7kg으로 2004년 63.7kg보다 1.6%(1kg) 감소하였고, 음용유 소비량은 35.0kg으로 2004년 37.0kg보다 5.7%(2kg) 감소되었는데, 이는 '04년 9월 이후 원유 기본가격 인상으로 인해 우유 소비가 위축된 반면 녹차·두유 등 대체음료의 소비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2005년도 국산원유(2,229천톤)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량은 1,906천톤(백색시유 1,327, 가공시유 217, 기타 유제품 362)으로서 전년도 투입량(1,920천톤)에 비해 1% 감소하였으며, 잉여량(분유 가공량)은 전년(335천톤)에 비해 3.6% 감소한 323천톤 수준이었다.

분유 재고량은 2004년도에 비해 68% 증가한 9.5천톤으로서 가격인상('03.

9월) 이후 소비 둔화와 국산 분유 판매가격이 수입 분유에 비해 약 15%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유 자급률은 국내 생산이 감소한 반면 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0.1%p 감소한 72.4%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 인하 등으로 전년(481원/kg)보다 2.5% 낮아진 468원/kg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5년말 479천두로 2004년말 497천두 보다 3.6%(18천두) 감소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가수는 2004년말 9.6천호에서 2005년말 8.9천호로 7.3%(0.7천호) 감소되었다.

낙농업의 전업화로 인해 가구당 사육두수는 2005년말 53.7두로 2004년말 51.7두 보다 3.9% 증가하였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신대식, 행정사무관 송광현, 축산사무관 권동태, 행정사무관 강형수)

나. 사료작물

2005년에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0,139천톤으로 전년(19,871천톤)보다 1.3%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16,008천톤, 조사료가 4,131천톤으로 추정된다. 농후사료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5,134천톤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였다.

<표 1-2-10>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1998	2000	2003	2004 (A)	2005 (B)	증감율 (B/A)
합 계	17,214	23,463	18,680	19,489	20,397	19,871	20,139	1.3
농 후 사 료	11,211	15,700	15,039	16,097	16,349	15,787	16,008	1.4
- 배 합 사 료	10,567	14,856	14,259	15,105	15,436	14,941	15,134	1.3
- 농가자급사료	644	844	780	992	913	846	874	3.3
조 사 료	6,003	7,763	3,641	3,392	4,048	4,084	4,131	1.2
- 사료작물 및 목초류	2,832	2,498	1,266	992	1,249	1,153	1,298	12.6
- 산야초, 볏짚등	3,171	5,265	2,375	2,400	2,799	2,931	2,833	△3.3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대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종별로는 한육우용 8.1, 양계용은 9.6% 증가한 반면, 젓소용은 2.8%, 양돈용은 4.6씩 각각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한육우와 닭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돼지·젓소 사육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주요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또한, 기타가축 중 개 사육마리수의 감소추세로 기타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2004년도 7월 이후 옥수수 가격 및 환율 하락 등으로 11월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인하여 2003.12월 수준으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원료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4년 하반기에는 국제곡물 가격 및 환율의 하락으로 다소 안정적인 사료수급 및 가격 유지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1-2-11>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1998	2000	2003	2004 (A)	2005 (B)	증감율 (B/A)
합 계	10,529	14,856	14,259	15,106	15,436	14,941	15,134	1.3
양 계 용	3,274	3,766	3,423	3,867	3,907	3,836	4,203	9.6
양 돈 용	3,551	4,725	4,918	5,215	5,663	5,419	5,170	△4.6
젓 소 용	1,790	2,905	1,833	1,892	1,774	1,632	1,587	△2.8
한육우용	1,667	3,681	3,605	3,340	2,926	3,045	3,293	8.1
기 타	247	589	480	792	1,179	1,009	881	△12.7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료자급도를 높여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지 초지개발과 청예 및 담피작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5년에 신규로 23ha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표 1-2-12>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구 분	1995	1999	2000	2001	2003	2004 (A)	2005 (B)	증감율 (B/A)
신규조성면적	413	430	253	228	58	67	23	△65.7
관 리 면 적	66,301	53,783	51,870	50,367	46,546	45,084	43,581	△3.3
목초생산량	462	371	364	352	343	315	305	△3.2

자료 : 농림부 축산국

2005년말 현재 초지 총 관리면적은 44천ha로서 305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으나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전용 등에 따라 관리제외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유기혁, 축산물위생과 기술서기관 이상수)

제2절 식품 수급동향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1982~2005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7.6%로 같은 기간 소비지출액 증가율 9.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 1-2-13>. 식품류별로는 외식비(17.7%), 빵 및 과자류(7.6%), 어패류(6.3%), 과일류(7.4%), 낙농품(7.3%), 육류(5.8%)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곡류 및 식빵(1.2%), 조미식품(3.3%)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

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가 1982년 5.9%에서 2005년 46.4%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곡류·식빵의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8.3%로 감소하였다. 그밖에 2005년 식품류별 비중은 육류 7.7%, 어패류 5.9%, 채소·해조류 7.3%, 과실류 6.2%이다.

<표 1-2-13>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도시가구평균)
(단위 : 천원,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실	조미 식품	빵, 과자류	차,음료, 주류	기타 식품	외식
1982	248.9	101.6 (100)	35.1 (34.5)	11.5 (11.3)	4.5 (4.4)	8.0 (7.9)	12.2 (12.0)	6.5 (6.4)	8.3 (8.2)	4.2 (4.1)	4.5 (4.4)	0.3 (0.3)	6.0 (5.9)
1985	317.0	118.8 (100)	34.6 (29.1)	14.8 (12.5)	6.0 (5.1)	10.2 (8.6)	15.2 (12.8)	7.4 (6.2)	10.5 (8.8)	5.2 (4.4)	5.2 (4.4)	0.2 (0.2)	8.8 (7.4)
1990	685.6	220.8 (100)	44.8 (20.3)	26.1 (11.8)	12.0 (5.4)	21.0 (9.5)	24.8 (11.2)	15.6 (7.1)	11.7 (5.3)	8.2 (3.7)	8.2 (3.7)	2.6 (1.2)	44.8 (20.3)
1995	1,265.9	367.1 (100)	46.7 (12.7)	42.2 (11.5)	17.1 (4.7)	33.3 (9.1)	35.6 (9.7)	28.5 (7.8)	15.7 (4.3)	13.5 (3.7)	13.7 (3.7)	5.0 (1.4)	115.7 (31.5)
2000	1,632.3	447.0 (100)	56.7 (12.7)	45.0 (10.1)	19.3 (4.3)	32.1 (7.2)	35.6 (8.0)	27.3 (6.1)	15.1 (3.4)	17.3 (3.9)	16.4 (3.7)	6.2 (1.4)	176.0 (39.4)
2002	1,834.8	481.0 (100)	53.3 (11.1)	46.8 (9.7)	18.9 (3.9)	34.8 (7.2)	36.7 (7.6)	28.5 (5.9)	13.9 (2.9)	18.6 (3.9)	18.5 (3.9)	9.5 (2.0)	201.5 (41.9)
2003	1,922.9	509.6 (100)	44.5 (8.7)	40.9 (8.0)	19.9 (3.9)	31.8 (6.2)	40.1 (7.9)	28.2 (5.5)	14.2 (2.8)	22.3 (4.4)	21.3 (4.2)	13.4 (2.6)	233.2 (45.8)
2004	2,018.2	544.8 (100)	48.3 (8.9)	39.7 (7.3)	21.1 (3.9)	32.7 (6.0)	40.7 (7.5)	32.9 (6.0)	18.2 (3.3)	23.2 (4.3)	23.0 (4.2)	11.2 (2.0)	253.9 (46.6)
2005	2,091.9	551.6 (100)	45.8 (8.3)	42.4 (7.7)	22.7 (4.1)	32.5 (5.9)	40.5 (7.3)	34.1 (6.2)	17.7 (3.2)	23.1 (4.2)	22.5 (4.1)	14.3 (2.6)	255.9 (46.4)
82-05	9.7	7.6	1.2	5.8	7.3	6.3	5.3	7.4	3.3	7.6	7.2	18.2	17.7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2005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2-14>. 중간소득계층(4~7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육류, 과일류, 어패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품목은 곡물, 낙농품, 채소·해조류, 조미식품 등이다.

<표 1-2-14>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2005년도 도시가구 평균)
(단위 : 천원)

구 분	1~3분위		4~7분위		8~10분위	
소 비 지 출	1,227	(62.1)	1,977	(100)	3,110	(157.4)
식 료 품	365	(66.6)	549	(100)	741	(135.0)
곡류및식빵	41	(92.0)	45	(100)	52	(115.3)
육 류	31	(74.0)	41	(100)	56	(134.3)
낙 농 품	17	(71.9)	23	(100)	28	(121.6)
어 개 류	26	(85.0)	31	(100)	41	(130.4)
채소·해조류	35	(87.6)	40	(100)	47	(117.0)
과 실 류	24	(74.1)	32	(100)	46	(142.5)
조 미 식 품	15	(88.3)	17	(100)	21	(120.3)
빵및과자류	16	(67.2)	24	(100)	30	(125.6)
차음료및주류	16	(71.4)	23	(100)	28	(124.4)
외 식	135	(51.9)	259	(100)	373	(143.8)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와 당질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 지방, 비타민C 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2,016kcal, 단백질 75.8g, 지방 46.0g, 철분 13.6mg, 비타민C 98.2mg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5>.

<표 1-2-15>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분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0	2,052	67.2	21.8	598	13.5	1,688	1.13	1.08	19.1	87.9
1985	1,936	74.5	29.5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1	1,930	73.0	35.6	518	23.0	550	1.27	1.24	17.5	92.2
1992	1,875	74.2	34.5	538	22.9	535	1.22	1.22	17.4	102.5
1993	1,848	72.6	36.9	523	22.4	440	1.37	1.11	16.5	92.6
1994	1,770	71.9	35.9	556	22.0	411	1.12	1.19	16.6	93.5
1995	1,839	73.3	38.5	531	21.9	443	1.16	1.20	16.7	98.3
1998	1,985	74.2	41.5	511	12.5	625	1.35	1.09	15.7	123.1
2001	1,976	71.6	41.6	497	12.2	624	1.27	1.13	16.9	132.6
2005	2,016	75.8	46.0	553	13.6	782	1.30	1.20	17.1	98.2

- 주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4) 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함.
 5) 2005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한국영양학회, 2005)을 이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6.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와 당질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 지방, 비타민C 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2,016kcal, 단백질 75.8g, 지방 46.0g, 철분 13.6mg, 비타민C 98.2mg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5>.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2005년 11월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76.3%로 매우 낮았다. 철분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 상에 쌀의 철분 함량이 하향 조정된 데 기인한다. 단백질(169.0%), 티아민(122.3%), 나이아신(121.5%)은 섭취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에너지는 98.4%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2-16>.

<표 1-2-16> 영양소별 권장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영양소	'81	'83	'85	'87	'89	'91	'93	'95	'98	'01	'05
에너지	92.4	90.4	91.1	87.7	87.5	93.1	90.0	88.6	94.5	94.8	98.4
단백질	100.9	96.9	110.4	107.7	118.2	118.1	117.9	116.7	117.8	127.0	169.0
칼슘	76.6	69.4	93.0	78.1	76.2	82.3	84.0	75.4	72.8	71.0	76.3
철	114.5	109.4	112.0	167.7	156.7	177.3	176.0	159.5	91.9**	95.2	126.3
비타민 A	95.9	108.7	81.2	53.6	77.2	84.3	67.7	67.2	95.6	95.4	121.9
티아민	202.3	128.1	122.9	95.2	99.3	120.7	140.1	108.8	126.3	119.8	122.3
리보플라빈	102.5	82.0	93.8	87.3	85.0	98.4	97.3	96.0	86.2	91.0	95.8
나이아신	137.7	161.1	182.1	127.8	133.5	126.7	120.6	119.8	110.8	119.4	121.5
비타민 C	137.4	141.0	125.0	98.8	119.7	175.8	175.6	185.4	234.0	197.1	106.6

주 1) 1995년까지는 가구별 칭량법, '98년도부터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임.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3) 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하였음.

4) 2005년도는 새로 설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6.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비율을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당질 64.3%, 단백질 15.4%, 지방 20.3%이다. 당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5년도에는 1969년 최초로 국민영양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지방에너지의 비율이 20%를 초과하였다.

2. 식품 수요 현황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04년에는 2003년과 달리 태풍 피해도 적었고, 일조량·기온·강우량 등 기후조건이 작물생육에 적합하여 거의 모든 작물의 작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축산부문에서는 2003년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영향으로 쇠고기 공급이 감소하였다. 2003년 대비 2002년 품목별 공급량 변화는 <표 1-2-17>과 같다.

쌀은 식용소비 감소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식량용은 전년대비 35톤 감소하였으나, 가공용이 94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87.8kg에서 88.6kg으로 0.9% 증가하였다. 밀은 생산이 전년대비 2천톤 증가하였으며, 식용 밀 수입이 27천톤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3.5% 증가하였다. 반면 사료용은 2004년 수입가격이 전년대비 57.8%까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590천톤 감소하였다. 서류의 생산량은 국내 가격에 따라 2~3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나 1인당 공급량은 1990년대 이후 대체로 13kg 전후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2004년도에 감자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와 수입 확대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8.1kg에서 8.9kg으로 10.2% 증가하였다. 반면 고구마는 생산이 전년대비 48천톤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전년대비 17.0% 감소하였다. 설탕류는 생산 증가로 1인당 공급량이 20.3kg에서 20.8kg으로 1.3% 증가하였다.

<표 1-2-17>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품 목	2003(확정)	2004(잠정)	증가율(%)
곡 류	150.33	153.11	1.9
쌀	87.75	88.56	0.9
보 리	1.13	1.50	32.7
밀	32.39	33.52	3.5
옥 수 수	26.57	26.79	0.8
기 타	3.21	3.46	7.8
서 류	12.53	12.59	0.5
감 자	8.06	8.88	10.2
고 구 마	4.46	3.70	-17.0
설 탕 류	20.89	21.16	1.3
두 류	10.32	10.76	4.3
콩	8.05	8.49	5.5
팥	0.67	0.69	3.0
기 타	1.61	1.59	-1.2
견 과 류	1.15	1.21	5.2
종 실 류	1.02	0.97	-4.9
참 깨	0.59	0.63	6.8
기 타	0.43	0.34	-20.9
채 소 류	152.64	160.89	5.4
과 실 류	39.46	41.64	5.5
육 류	39.02	36.89	-5.5
쇠 고 기	7.89	6.60	-16.4
돼 지 고 기	16.91	17.28	2.2
닭 고 기	6.10	5.17	-15.3
부 산 물	8.12	7.85	-3.3
계 란 류	8.86	8.90	0.5
우 유 류	50.75	59.98	18.2
우 유	49.39	58.77	19.0
어 패 류	38.54	40.76	5.8
어 류	25.81	27.73	7.4
패 류	12.73	13.02	2.3
해 조 류	6.41	7.85	22.5
유 지 류	16.71	17.63	5.5
식 물 성	16.26	17.35	6.7
동 물 성	0.45	0.28	-37.8
주 류	71.73	70.69	-1.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5.

채소류는 양파(203천톤), 배추(187천톤), 파(165천톤), 무(149천톤)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 생산량이 413천톤 증가하고, 관세하락으로 고추(8천톤)와 마늘(20천톤) 등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1인당 공급량이 152.6kg에서 160.9kg으로 5.4% 증가하였다. 과실은 기후여건이 좋아 태풍 피해가 있었던 2003년보다 5.6% 정도 증가하였으며, 참다래(10.2천톤), 파인애플(7.2천톤), 오렌지(9.6천톤)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5.5% 증가하였다.

육류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39.0kg에서 36.9kg으로 5.5%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는 2003년 말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161천톤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7.9kg에서 6.6kg으로 16.4% 감소하였다. 돼지고기는 배합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도축두수의 감소로 생산량이 34천톤 감소한 반면, 광우병 발생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와 돼지고기 소비 촉진 등으로 소비량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수입량이 48천톤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은 2.2% 증가하였다. 닭고기는 흰색 육류를 선호하는 선진국형 소비패턴으로의 전환과 외식판매점의 증대 등으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수입량이 57천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6.1kg에서 5.2kg으로 15.3% 감소하였다.

어패류는 생산량의 증가는 미미하나 소비 증가로 이월량(187천톤) 및 수출량(278천톤)이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25.8kg에서 27.7kg으로 5.8% 증가하였다. 해조류는 미역의 생산(63천톤)과 수입(6.5천톤)이 증가하고 김 생산량이 35천톤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22.5% 증가하였다.

식물성 유지류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참기름 생산과 옥배유·야자유·팜유·콩기름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6.7% 증가하였다. 반면 어유는 생산이 2천톤 감소하고, 우지의 수입이 6.5천톤 감소함에 따라 동물성 유지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30.8% 감소하였다.

나. 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두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1-2-18>. 곡류자급률은 1980~2004년간 53.3%에서 27.6%로, 두류는 40.1%에서 8.1%로, 유지류는 19.0%에서 2.5%로 크게 하락하였다. 우유류도 같은 기간 109.7%에서 74.2%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여 왔다. 어패류는 1999년까지 대체로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여 2004년에는 55.4%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1-2-18> 연도별 자급률 추이

구 분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p)
공급영양 자급률	칼로리	70.0	62.6	50.6	50.6	49.2	49.6	45.6	46.7
	단백질	75.2	67.8	57.2	52.8	51.9	50.4	47.4	46.9
	지 방	64.2	30.3	26.8	21.4	20.3	20.4	19.2	18.8
물량기준 자급률	곡 류	53.3	43.8	30.0	30.8	32.2	31.0	28.1	27.6
	쌀	95.1	108.3	91.1	102.9	102.7	99.2	90.3	94.3
	두 류	40.1	24.5	11.7	8.2	9.2	8.8	8.2	8.1
	채 소 류	100.2	98.9	99.2	97.7	98.3	97.7	94.7	94.3
	과 실 류	98.6	102.5	93.2	88.7	88.9	89.1	85.0	85.2
	육 류	97.4	92.9	89.2	83.9	81.0	82.0	81.2	83.5
	쇠고기	93.0	53.6	50.8	53.2	42.3	36.6	36.3	44.2
	돼지고기	97.5	100.3	96.6	91.6	90.8	96.9	93.8	87.4
	닭고기	100.0	100.0	98.1	79.9	76.1	76.0	76.7	90.2
	계 란 류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우 유 류	109.7	92.8	93.3	81.2	78.9	81.0	81.0	74.2
	어 패 류	132.7	121.7	100.4	87.7	77.9	63.8	61.7	55.4
	유 지 류	19.0	8.0	4.8	3.2	2.4	3.5	2.4	2.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5.

새로운 칼로리 산정방식¹⁾에 근거할 경우 1970년 79.5%, 1990년 62.6%, 2004년 46.7% 수준으로 1970년 이후 대체로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04년 46.9%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04년 18.8% 수준에 불과하다. 2003년도 이후 칼로리 자급률 수준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쌀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에 의해 쌀의 물량기준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2004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식품공급량(조식품기준)은 곡류(163.1kg), 두류(14.0kg), 채소류(182.2kg), 어패류(77.2kg)의 경우 비교적 많은 수준이다. 곡류 공급량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112.7kg)과 대만(순식품기준)(90.9kg) 그리고 파키스탄(154.1kg)에 비교하여도 많은 편이며, 미국과 유럽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반면, 과일류(52.9kg), 육류(39.1kg), 계란류(10.4kg), 우유류(53.8kg) 및 유지류(17.7kg) 등은 적은 편이다<표 1-2-19>. 특히, 육류와 과일류의 공급수준은 유럽 국가들의 1/3~1/4수준이며, 우유류는 약 1/5에 불과하다. 유지류의 공급량은 파키스탄, 일본보다는 많지만 대만, 미국, 독일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표 1-2-19>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4	2003	2003	2002	2002	2002
곡 류	163.1	112.7	90.9	112.5	106.9	154.1
서 류	13.2	39.5	20.9	63.7	72.4	12.5
설탕류	14.6	20.0	23.4	71.9	44.2	28.3
두 류	14.0	9.7	27.7	12.2	9.7	7.5
채 소 류	182.2	110.3	112.3	127.7	90.6	31.5
과 실 류	52.9	54.4	143.3	110.3	115.5	34.0
육 류	39.1	43.1	76.2	125.2	85.2	13.9
계 란 류	10.4	19.7	18.3	14.6	12.7	2.1
우 유 류	53.8	93.1	22.8	261.8	264.3	153.3
어 패 류	77.2	67.0	40.0	21.3	14.9	2.2
유 지 류	17.7	19.4	25.1	34.0	40.5	14.8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5.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점차 증가하여 왔다. 2004년도에는 2,989kcal로서 1980~2004년간 연평균 약 0.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유럽국가의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는데,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표 1-2-20>.

1인 1일당 단백질 공급량은 99.2g으로 일본의 85.0g, 대만의 96.3g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영양 3요소 중 가장 차가 적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는 적지만 간장, 된장 및 두부 등 식물성 고단백질 식품의 소비가 많은데 기인된다.

1인 1일당 지방질 공급량은 국민소득의 증대와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86.0g으로 1985년의 51.8g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질 공급량은 유럽 국가의 50~60% 수준인데, 이는 축산물과 유지류의 공급에 큰 차가 있기 때문이다.

<표 1-2-20>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연 도	한국 ¹	일본 ¹	대만 ¹	미국	독일	파키스탄
	2004	2003	2003	2002	2002	2002
에너지(kcal)	2,989	2,588	2,882	3,744	3,496	2,419
전 분 질(%)	55.9	43.0	-	27.9	30.0	56.5
설 탕(%)	7.5	8.1	-	17.7	12.3	11.4
동 물 성(%)	15.3	20.8	-	24.6	21.4	13.9
유 지 류(%)	13.6	14.6	-	20.0	22.0	14.0
기 타(%)	6.7	13.5	-	9.9	14.4	4.2
단 백 질(g)	99.2	85.0	96.3	114.0	100.1	61.9
동 물 성(g)	46.5	44.7	48.4	73.7	59.0	22.6
지 방 질(g)	86.0	83.5	124.6	156.5	146.4	65.1
유 지 류(g)	48.6	40.9	68.2	84.9	86.0	38.2
1인당GNP(\$)	14,162	34,192	11,710	36,351	24,081	409

주 : 1) 한국, 일본,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5.

그러나 지방질 공급량은 우리나라와 식생활이 비슷한 일본(83.5g)과 비슷한 수준이며, 대만을 제외한 동남아시아국가의 44~66g에 비하면 다소 많은 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임)

3. 식품가공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식품가공산업은 2004년 생산액이 43조 520억원, 부가가치는 17조 9,43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에서 생산액은 5.4%, 부가가치는 5.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 식료품과 음료품의 구성비는 각각 82%, 18%로 식료품 제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중 곡물가공(14.3%), 빵·과자·국수(13.8%), 육가공(11.8%), 비알콜성음료(10.0%), 기타음료품(9.6%) 순으로 규모가 크다.

제조업의 총생산액은 794조 8,530억원으로 전년보다 17.3%로 높게 증가하였으며, 식품가공산업의 총생산액은 2003년 39조 5,810억원에서 2004년 43조 520억원으로 8.8%의 성장을 보였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식생활의 간편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취업 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가공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은 1990년에 비해 3.3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식품가공산업은 외형적 성장과 병행하여 기업의 대형화,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체당 생산액이 1990년 21억 6천만원에서 55억 4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2.5배나 성장하였다. 특히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부문은 유가공, 비알콜성음료, 식용유지, 알콜성음료, 곡물가공, 육가공 등으로 나타났다.

<표 1-2-21> 식품가공산업 분류별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연도별 비교

분류별	연도별		생산액(10억원)		부가가치(10억원)		사업체수(개)	
	1990	2004	1990	2004	1990	2004	1990	2004
제조업(전체)	177,309	794,853	70,925	301,863	97,144	113,310		
음 식 료 업	13,104	43,052	5,194	17,943	6,055	7767		
○ 식 료 품	10,352	35,224	3,857	13,222	5,557	7323		
- 육 가 공	872	5,445	255	1,619	407	704		
- 유 가 공	1,519	5,071	447	2,209	113	106		
- 수 산 가 공	1,420	3,062	567	1,115	1,804	1850		
- 과 채 가 공	342	1,388	134	595	487	728		
- 곡 물 가 공	810	6,140	242	1,551	824	790		
- 식 용 유 지	646	1,453	275	404	76	99		
- 빵·과자·국수	2,411	5,966	1,074	2,971	760	1362		
- 식품첨가물	687	2,579	297	1,018	317	453		
- 기타 식료품	1,645	4,120	566	1,740	769	1231		
○ 음 료 품	2,752	7,828	1,337	4,721	498	444		
- 알콜성음료	1,450	3,537	714	2,865	244	189		
- 비알콜성음료	1,302	4,291	623	1,856	254	255		

주 : 사료가공분야 및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 제외
 자료 : 통계청, □□199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2.
 □□2004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5.

생산액당 부가가치로 나타낸 부가가치율은 식품가공산업 평균으로 볼 때 1990년의 39.6%보다 2.2% 증가한 41.8%로 나타났다. 빵·과자·국수, 유가공, 과채가공, 기타식료품산업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이들 부문에서 제품의 고급화, 차별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생산동향

2004년도 음식료품 생산은 8.7% 증가하여 2003년도의 6.8%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육가공품은 지난해와 같은 11.6%를 유지하였는바, 이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육류 소비가 줄어들어 업체에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2004년도 유가공업계는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4.7% 감소되었고, 우유 총소비는 2.4% 증가하여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이 63.9kg으로 상승하였다. 우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소비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해 구조적인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에서는 우유생산조정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과채가공산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김치가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특히, SARS이후 해외의 김치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일본의 김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 및 서구화의 진행에 따른 수요감소의 원인을 상품김치나 단체급식 공급 등으로 충당한데 기인하고 있다.

2004년도 김치시장은 2003년보다 5% 증가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7,300억원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김치는 2001.7.5 제24차 Codex총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전통김치에 근거한 국제식품규격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자연적인 젯산발효식품으로서 세계 각국의 절임류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김치의 국제적인 상품가치가 크게 향상되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류시장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으며, 간장의 시장규모는 1,470억원, 고추장 2,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간장이나 된장을 직접 담가 먹지 않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용 소비증가가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김치는 2001년에 국제공인 식품으로서 인증을 받았으며, 된장·고추장, 인삼 규격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음료시장은 소비자의 세분화에 따라 전문성을 띤 음료의 등장과 소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음료시장은 전년에 비해 비알콜성음료의 경우 29.9%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알콜성음료는 6.3%로 감소하였다.

두유와 스포츠음료, 미과즙음료, 전통음료, 먹는샘물, 차류, 기능성음료 등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비알콜성 음료는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함에 따라 계속 그 규모가 증가·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수출입동향

2005년도 가공식품 수입은 육가공품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5.5% 증가한 69억7천5백만불이었고 수출액은 곡물가공류의 수출증가로 전년에 비해 1.4% 증가한 24억 1천 3백만불이었다. 무역역조 현상은 2004년도 35억 1천 1백만불에서 2005년도에는 45억 6천 2백만불로 전년보다 23% 증가하였다.

<표 1-2-22>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1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년대비
수 입	2,266	3,603	4,342	4,546	5,193	5,734	5,890	6,975	15.5
수 출	1,813	2,307	2,099	1,982	2,020	2,064	2,379	2,413	1.4
무역수지	-453	-1,296	-2,243	-2,564	-3,173	-3,670	-3,511	-4,562	23.0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2005년도 품목군별 수입구조를 보면 수산가공품(26.3%), 육가공(21.6%), 기타식료품(13.0%), 과채가공(9.5%)순으로 수산가공품과 육가공품이 전체 수입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은 수산가공품이 40.0%로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식료품(16.7%), 빵·과자·국수(11.4%) 및 알콜성음료(7.6%) 등의 순이고 가공식품 중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큰 품목은 비알콜성음료로서 전년보다 약간 많은 2천 9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품목군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적자 품목군은 육가공(32.0%), 수산가공(19.1%), 식용유지(12.2%), 과채가공(11.0%)순이다.

<표 1-2-23> 품목군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수 입		수 출		무역수지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유 가 공	281	310	29	37	△252	△273
육 가 공	1,041	1,508	32	46	△1,009	△1,462
수 산 가 공	1,712	1,837	1,050	965	△662	△872
과 채 가 공	593	665	149	161	△444	△504
식 용 유 지	485	570	12	13	△473	△557
곡 물 가 공	13	132	35	111	△22	△21
빵·과자·국수	312	345	401	276	88	△69
식품첨가물	108	182	77	148	△31	△34
기 타 식 료 품	915	904	368	403	△548	△501
알 콜 성 음 료	379	481	168	183	△212	△298
비알콜성음료	50	41	58	70	9	29
계	5,890	6,975	2,379	2,413	△3,511	△4,562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식품산업과 농업사무관 전한영)

제3절 농산물 교역동향

1. 농식품 수출입동향

가. 수출동향

'05년도 농식품 수출액은 환율하락, 유가인상, 김치파동, 폭설피해 등 수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6% 증가한 2,222백만불을 달성하였으나, 목표액 2,300백만불보다는 78백만불이 부족하였다. 채소, 과일, 화훼 등 신선농산물이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고, 가공농산물은 5.2% 증가하였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채소류는 생산시설 현대화와 재배기술 발달로 전년보다 9.1% 증가한 138백만불을 달성하였고 그중에서 하기작 재배면적이 확대된 파프리카(57.1백만불)와 홍콩수출이 증가한 딸기(558천불)의 수출신장세가 두드러졌으며, 토마토와 배추 등은 국내 수요증가로 감소하였다.

김치는 전년대비 9.4% 감소한 93.0백만불로 그동안 한류영향으로 수출이 증가되었으나 기생충알 파동('05. 10월) 이후 수출이 둔화되었고, 인삼은 국내수요 증가와 환율하락으로 홍삼수출이 감소한 반면, 기타 인삼제품류는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전개에 힘입어 미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한 82.5백만불에 그쳤다.

화훼류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52.1백만불로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심비디움 등 난초류 수출확대로 처음으로 5천만불 수출을 달성했으며, 과일류는 고품질 과일생산과 대미배 중·소과 수출, 적극적인 해외판촉 등으로 지난해보다 41.1% 증가한 120.9백만불로 처음으로 1억불을 돌파하였다.

돼지고기는 '99년 최대수출(340백만불) 이후 '00.3월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 수출이 중단된 이후 수출이 본격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나, 필리핀, 러시아 등 신규시장 개척 등 수출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보다는 25.6% 늘어난 34.3백만불을 달성하였다.

가금육은 한류영향에 따른 삼계탕과 대 일본 오리고기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73.8% 증가한 9.5백만불 수출하였으며, 산림부산물은 간밤 가공산업의 중국이전, 송이버섯 생산량 감소로 수출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지난해보다 15.5% 증가한 77.4백만불 수출하였고, 담배, 라면, 소주, 커피조제품, 설탕, 장류 등 가공제품은 전년보다 7.2% 증가한 1,540.7백만불을 수출하였다.

<표 1-2-24> '05 농산물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2	2003	2004(A)		2005(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 식 품 합 계	1,639.9	1,859.8	1,491.0	2,085.0	1,481.5	2,221.5	△0.6	6.5
○ 신선농림축산물	462.7	509.3	205.6	550.8	220.7	608.2	7.3	10.4
- 채 소	89.5	100.6	55.8	126.9	56.6	138.5	1.4	9.1
- 김 치	79.3	93.2	34.8	102.7	32.3	93.0	△7.2	△9.4
- 인 삼	55.0	66.6	2.2	89.2	2.1	82.5	△4.5	△7.5
- 화 훼	32.1	45.3	8.3	48.5	10.0	52.1	20.5	7.4
- 과 실	82.8	70.5	67.7	85.7	80.6	120.9	19.1	41.1
- 돼 지 고 기	22.2	31.3	15.8	27.3	14.7	34.3	△7.0	25.6
- 가 금 육 (닭, 오 리)	6.6	5.7	2.2	3.5	3.1	9.5	40.9	171.4
- 산 립 부 산 물	95.2	96.1	18.8	67.0	21.3	77.4	13.3	15.5
○ 가공농림축산물	1,177.2	1,350.5	1,285.4	1,534.2	1,260.8	1,613.3	△1.9	5.2
- 가 공 식 품	1,105.4	1,269.6	1,157.8	1,437.3	1,190.0	1,540.7	2.8	7.2
- 목 재 류	71.8	80.9	127.6	96.9	70.8	72.6	△44.5	△25.1

자료 : 농림부, 2005년도 농식품 수출입동향, 2006.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일본은 채소·과일은 증가했으나 인삼, 화훼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며, 미국은 인삼·과실

류는 증가했으나, 라면 등 가공식품 감소로 1.5% 감소한 반면, 중국(홍콩포함)은 인삼류가 감소했으나 난초류와 가공식품 수출호조로 8.2% 증가하였고, 러시아와 대만도 과일과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1-2-25> '05 국가별 농산물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2	2003	2004 (A)	2005 (B)	증감률 (B/A)	주 요 수 출 품 목
합 계	1,639.9	1,859.8	2,085.0	2,221.5	6.5	
일 본	590.0	657.5	728.6	713.3	△2.1	○소주, 김치, 채소류(파프리카)
미 국	213.9	223.2	284.7	280.3	△1.5	○인삼류, 밥, 난초, 면류
중 국	129.9	166.1	213.7	231.2	8.2	○당류, 면류, 과자류, 밥, 난초
러시아	134.5	157.4	175.4	203.8	16.2	○돼지고기, 면류, 소스류
홍 콩	106.7	99.2	119.3	123.7	3.7	○당류, 인삼류, 맥주, 연초류
대 만	65.3	62.0	71.0	110.1	55.1	○과실류, 인삼류, 커피류, 김치
ASEAN	85.3	81.4	79.7	97.7	22.6	○면류, 커피류, 당류, 과실류
E U	35.2	52.5	64.5	67.5	4.7	○연초류, 면류, 커피류, 선인장
기 타	279.1	360.5	348.1	393.9	13.2	

자료 : 농림부, 2005년도 농식품 수출입동향

나. 수입동향

'05년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11,888.5백만불로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농식품 수입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부류별 수입동향을 보면 채소류는 양파 등 양념류가 감소하고 당근, 채소종자, 브로콜리 등이 증가하였으며, 외식업계의 수요증가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김치는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기생충알 검출('05.10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3.9% 증가한 51.3백만불 수입되었다.

과실류는 전년보다 9.1% 증가한 615.6백만불로 오렌지 수입은 감소되었

으나, 바나나, 키위, 포도 등이 증가하였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수입은 국내산 수급차질로 크게 늘어났으며, 곡류와 박류(대두박 등)를 포함한 기타 품목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다.

<표 1-2-26> '05 품목별 농산물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품 목 별	2003	2004(A)		2005(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식품 합계	10,221.2	34,250.9	11,219.8	34,536.0	11,888.5	0.8	6.0
○ 농 산 물	6,212.7	24,317.4	7,444.6	24,765.5	7,397.4	1.8	△0.6
- 곡 류	1,785.0	12,249.8	2,264.0	12,611.6	2,022.9	3.0	△10.6
- 두 류	435.9	1,369.4	519.7	1,418.7	430.5	3.6	△17.2
- 서 류	63.8	527.4	98.3	326.5	81.9	△38.1	△16.7
- 박 류	471.9	3,208.7	666.9	3,515.0	615.0	9.5	△7.8
- 채유종실	128.3	260.8	145.2	243.8	118.8	△6.5	△18.2
- 과 실 류	506.5	661.7	564.3	692.5	615.6	4.7	9.1
- 식물성유지	300.8	592.6	432.6	664.6	498.3	12.1	15.2
- 채 소 류	268.6	502.6	331.6	476.1	329.9	△5.3	△0.5
- 화 훼 류	22.4	4.5	23.4	5.4	28.8	20.0	23.1
- 커 피 류	105.3	89.5	116.1	92.6	167.0	3.5	43.8
- 연 초 류	249.1	48.0	205.8	37.5	155.2	△21.9	△24.6
- 김 치	10.3	72.6	29.5	111.5	51.3	53.6	73.9
- 주 류	416.8	259.1	383.5	268.4	435.7	3.6	13.6
- 당 류	364.9	2,482.2	399.6	2,330.4	507.1	△6.1	26.9
○ 축 산 물	2,115.6	711.9	1,755.3	888.0	2,360.6	24.7	34.5
- 쇠 고 기	1,177.0	175.9	600.4	196.4	735.1	11.7	22.4
- 돼 지 고 기	195.9	186.7	352.5	278.8	619.9	49.3	75.9
- 닭 고 기	95.0	31.8	55.5	58.5	113.0	84.0	103.6
○ 임 산 물	1,892.9	9,221.6	2,019.9	8,882.4	2,130.6	△3.7	5.5
- 원 목	610.4	5,592.2	704.2	5,318.9	707.9	△4.9	0.5
- 합 판	411.9	774.2	393.1	793.8	420.4	2.5	6.9
- 섬 유 판	114.3	247.4	77.5	304.6	108.5	23.1	40.0

자료 : 농림부, 2005년도 농식품 수출입동향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미국은 돼지고기, 대두유 등이 증가했으나, 대두, 오렌지, 옥수수 등의 수입감소로 전년대비 19.9% 감소했으며, 중국은 옥수수 등 곡류와 김치, 소스류, 주류 등이 급증하여 47.6% 증가하였고 최초로 FTA협정을 체결한 칠레는 돼지고기, 포도, 키위 등을 중심으로 29.0% 증가하였다.

그리고 호주는 소고기와 당류 등이, 뉴질랜드는 소고기와 키위 등이, 브라질은 대두박과 커피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장동욱)

<표 1-2-27> '05 국가별 농산물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국 별	2002	2003	2004 (A)	2005 (B)	증감율 (B/A)	주 요 수 입 품 목
농식품 계	9,584.3 (100.0)	10,221.2 (100.0)	11,219.8 (100.0)	11,888.5 (100.0)	6.0	
미 국	2,470.8 (25.8)	2,739.6 (26.8)	2,744.8 (24.5)	2,198.5 (18.5)	△19.9	옥수수, 밀, 대두, 돼지고기, 오렌지, 아몬드, 닭고기, 감자
중 국	1,601.4 (16.7)	2,061.6 (20.2)	1,511.1 (13.5)	2,216.5 (18.6)	46.7	옥수수, 합판, 김치, 고추, 섬유판, 기타소스, 쌀, 참깨
호 주	801.7 (8.4)	804.1 (7.9)	1,199.4 (10.7)	1,359.5 (11.4)	13.3	쇠고기, 사탕수수당, 밀, 침엽수원목, 보리, 루핀종자, 치즈
브 라 질	442.8 (4.6)	471.1 (4.6)	673.2 (6.0)	582.1 (4.9)	△13.5	대두박, 대두, 옥수수, 에틸알콜, 오렌지, 커피, 잎담배
뉴질랜드	450.0 (4.7)	489.3 (4.8)	623.4 (5.6)	679.6 (5.7)	9.0	침엽수원목, 쇠고기, 키위, 치즈, 카세인, 조제분유, 녹용
인 도	195.6 (2.0)	147.9 (1.4)	390.0 (3.5)	138.1 (1.2)	△64.6	채종·콜자씨박, 대두박, 기타식물성유박, 참깨, 피마자유
칠 레	47.9 (0.5)	69.3 (0.7)	110.7 (1.0)	143.8 (1.2)	29.9	돼지고기, 포도, 침엽수제재목, 포도주, 키위, 파티클보드, 토마토
ASEAN	1,203.1 (12.6)	1,286.0 (12.6)	1,352.6 (12.1)	1,443.8 (12.1)	6.7	합판, 바나나, 팜유, 열대산제재목, 당밀, 파인애플, 커피, 사탕수수당, 타피오카
E U	1,187.5 (12.4)	1,064.7 (10.4)	1,248.6 (11.1)	1,458.8 (12.3)	16.8	돼지고기, 위스키, 올리브유, 닭고기, 우유조제품, 포도주, 변성전분, 합판, 잎담배, 초콜릿
기 타	1,108.2 (11.6)	1,008.6 (9.9)	1,289.3 (11.5)	1,594.1 (13.4)	23.6	

자료 : 농림부, 2005년도 농식품 수출입동향
주) ()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농산물 남북교역동향

가. 농산물 교역규모

2005년도 남북한 교역실적은 1,005.8백만달러로 전년도 697.0백만달러에 비해 44.3% 증가하였다. 이중 농림축산물 교역실적은 319.0백만달러로 전년대비 87.8%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규모 1,005.8백만달러의 31.7%를 차지하였다.

<표 1-2-28>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연도별 교역실적		
	2004	2005	증감률(%)
전 체	697.0	1,005.8	44.3
농 립 축 산 물	169.9	319.1	87.8

자료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통일부)

나. 농산물 교역동향

(1)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05년도 농림축산물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288.7백만달러로서 전년도 136.3백만달러보다 111.8% 증가하였고, 반입은 30.4백만달러로서 전년도 33.7백만달러 보다 9.6% 감소하였다.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실적

(가) 반출실적

농림축산물 반출 총품목수는 120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쌀, 옥수수, 비료, 쇠고기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제재목, 산채류, 버섯류 등을 포함한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쌀 440천톤(111백만달러), 비료368천톤(145백만 달러)가 농림축산물 전체 반출금액의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2-29>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4년(B)		2005년(A)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421,241	136,288	789,829	288,706	87.5	111.8
쌀	105,737	36,281	400,404	110,740	278.7	205.2
밀 가 루	8,833	4,073	1,997	1,071	△77.4	△73.7
채 소 류	213	294	7,043	3,341	3,206.6	1,036.4
과 실 류	10,075	6,218	2,955	1,619	△70.7	△74.0
면 류	1,203	2,342	362	1,555	△69.9	△33.6
합 판	659	435	1,536	1,067	133.1	145.3
기 타 목 재	2,523	1,142	1,498	1,303	△40.6	14.1
기 타	5,631	14,018	6,247	22,710	△10.9	62.0
비 료	286,367	71,485	367,787	145,300	28.4	103.3

자료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통일부)

(나) 반입실적

농림축산물 반입 총품목수는 58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한약재, 들깨, 로얄제리 등이고, 임산물은 표고버섯, 고사리, 호도 등이다. 반입실적은 농림축산물이 30.4백만달러로 전년대비 9.6% 감소하였고, 그중 담배류의 감소율이 높았다.

<표 1-2-30>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4년(B)		2005년(A)		증감율(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16,045	33,652	12,595	30,438	△21.5	△9.6
한 약 재	1,459	2,195	1,102	2,360	△24.5	7.5
채 소 류	3,826	3,467	3,249	3,148	△15.1	△9.2
담 배 류	450	2,249	356	661	△20.9	△70.6
견 과 류	1,259	2,949	606	1,673	△51.9	△43.3
고 사 리 류	1,308	5,790	1,235	5,586	△5.6	△3.5
버 섯 류	1,631	10,256	1,930	12,558	18.3	22.4
로얄제리	35	394	30	408	△14.3	3.6
들 깨	1,154	703	690	400	△40.2	△43.1
기 타	4,923	5,649	3,397	3,644	△44.1	△42.6

자료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통일부)

(농업협상과 행정사무관 김재철)

제 3 장 국제 농업동향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 곡물 수급동향

가. 개요

'06/'07년도 세계 곡물(쌀·밀·잡곡)생산량은 전년 대비 2,223만톤(1.1%) 감소한 19억 8,570만톤, 총소비량은 '05/'06년보다 2,172만톤(1.1%) 증가한 20억 2,229만톤, '06/'07 재고율은 생산량 감소 및 소비량 증가로 인해 '05/'06년도 19.4%에서 3.1% 하락한 16.4%로 전망된다.

나. 쌀

'06/'07년 세계 쌀 생산량은 '05/'06년 보다 250만톤(0.5%) 증가한 4억 1,781만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1.2%(480만톤) 증가한 4억1,869만톤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7,897만톤으로 전망된다.

다. 밀

'06/'07년도 세계 밀생산량은 전년보다 2,046만톤(3.3%) 감소한 5억9,800만톤, 소비량은 894만톤 감소한 6억1,527만톤,재고량은 1억2,842만톤으로 전년보다 11.9% 감소,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4% 낮은 20.9%로 FAO 권장 재고율(23~26%)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옥수수

'06/'07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300만톤(0.4%) 감소한 6억

8,931만톤, 소비량은 전년보다 2,765만톤 증가한 7억 2,348만톤, 재고량은 전년보다 3,416만톤 감소한 9,288만톤으로 예상되어 재고율이 12.8%로 FAO 권장재고율(사료곡물 15%)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대 두

'06/'07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년보다 175만톤(0.8%) 증가한 2억1,774만톤, 소비량은 전년보다 731만톤(4.0%) 증가한 2억 1,997만톤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과 아르헨의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표 1-3-1> USDA 주요곡물 수급총괄 (단위 : 백만톤)

구 분		'03/'04(A)	'04/'05(B)	'05/'06(C)	'06/'07
				'06.8월 전망	
전체곡물	생 산	1,859.19	2,043.80	2,007.93	1,985.70
	소 비	1,947.47	1,998.69	2,022.29	2,044.01
	교 역	240.48	239.79	244	241.22
	재 고	357.15	402.25	393.16	334.85
	(재고율, %)	(18.3)	(20.1)	(19.4)	16.4
쌀	생 산	391.38	402.68	415.78	417.81
	소 비	415.58	414.16	413.90	418.69
	교 역	27.41	27.78	28.09	28.04
	재 고	86.09	74.60	79.86	78.97
	(재고율, %)	(20.7)	(18.0)	(19.3)	18.9
밀	생 산	554.58	628.82	618.46	598.00
	소 비	588.76	610.54	624.21	615.27
	교 역	109.36	110.84	114.81	110.11
	재 고	131.90	150.19	145.69	128.42
	(재고율, %)	(22.4)	(24.6)	(23.3)	20.9
옥수수	생 산	623.43	710.39	692.34	698.31
	소 비	645.50	683.31	695.83	723.48
	교 역	77.55	77.74	74.14	78.29
	재 고	103.16	130.24	127.04	92.88
	(재고율, %)	(16.0)	(19.1)	(18.3)	12.8
대 두	생 산	186.75	215.58	219.49	217.74
	소 비	190.07	205.46	214.26	220.15
	교 역	55.62	64.88	65.30	69.23
	재 고	35.66	45.57	52.51	
	(재고율, %)	(18.8)	(22.2)	(24.5)	

2. 국제곡물 가격동향

가. 쌀 값 동향

세계 쌀값은 지속적인 상승세이며, 앞으로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06.2월 미국 농업부(USDA)는 쌀 생산량 정체와 소비량 증가로 국제 쌀값은 매년 약 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국제 쌀값은 4.8~6.6% 상승하는 상황이다.

'06.8.11일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321달러/톤,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가격은 507달러/톤에 거래되고 있다.

<표 1-3-2> 국제 쌀 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8	전년대비(%)
태 국	192	199	220	278	301	321	6.6% ↑
캘리포니아	285	327	533	404	484	507	4.8% ↑

주 : 태국산은 100% grade B, 캘리포니아산은 California Medium Grain 1등급, USDA, Rice Outlook.

나. 밀 값 동향

2005년 3월까지 상승하던 가격은 4월에서 6월까지 톤당 120달러를 유지, 그러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소맥 가격은 '05년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거래되었으며 2006년 9월 현재 인도분 소맥 가격은 8월 현재(8월 16일 기준) 톤당 166달러로 전년대비 31.7% 상승한 수준이다.

2006/07년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 재고량의 감소로 향후 가격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다. 옥수수 값 동향

옥수수 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

으나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전망을 보이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2005/06년도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11월에는 톤당 76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가격은 2006년 9월물 인도분이 8월 16일 현재 톤당 87달러로 전년대비 4.8%,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8.4% 하락한 수준이며 2006/07년도에는 옥수수의 생산량 및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가격은 보험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라. 대두 값 동향

'05/'06년에는 소비량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약보험(톤당 \$204 수준)세를 유지하였으며 '07년도 기준 기말 재고량이 전년보다 0.8% 감소될 전망이어서 대두가격은 약보험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표 1-3-3>

세계 곡물가격 동향표

(단위 : 달러/톤, FOB)

품 목		2003/04	2004/05	2005.8	2006.7	2006.8 (잠정)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쌀	태 국 ¹	220	278	288	321	301	8.3	4.5	△6.2
	캘리포니아 ¹	533	404	379	507	507	25.5	33.8	0.0
소 맥 ²		136	126	126	181	166	31.7	31.7	△8.3
옥 수 수 ³		104	83	85	95	87	4.8	2.4	△8.4
대 두 ³		295	219	254	215	208	△5.0	△18.1	△3.3

주 : (1) 태국 100% grade B, California Medium Grain 1등급, USDA, Rice Outlook.

(2)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006년 8월 가격은 16일 현재 가격임. USDA AMS and ERS.

(3)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6년 8월 가격은 16일 현재 가격임. USDA AMS and ERS.

(식량정책과 사무관 박희수)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가. 미 국

(1) 농업경제동향

미국의 농경지는 3억 81백만헥타로 2005년 곡물생산은 3억 89백만톤에 이르고, 농산물 수출도 624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 농업국가이다. 반면 농업인구는 612만명(2004)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며, 대규모 기업농 및 중소규모 농장으로 이루어진 농가는 212만호로 총가구중 점유비중은 2%로 매우 낮다.

2005년 농산물 수출은 624억달러로 2004년 623억달러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였고, 농산물 수입은 577억달러로 2004년 527억달러에 비해 9.5% 증가하였다.

2005년의 미국 무역적자는 7,766억달러에 달하나, 농산물에서는 47억달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곡물생산은 재배면적의 감소와 기상여건 악화 및 가격하락 등의 이유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감소되어, 쌀이 5.2%, 옥수수가 6.6% 증가, 밀은 2.8% 감소하였다.

<표 1-3-4> 미국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4	구 분	단 위	2005
○ 농 업 인 구 - 총인구대비	천명 %	6,162 2.1	○ 밀 생 산 량 ○ 쌀 생 산 량 ○ 옥수수 생산량	백만톤 " "	57 7.4 280
○ 농 가 호 수 - 총가구대비	천호 %	2,127 2.0	○ 과일류생산량	"	30
○ 호당 농가소득 - 농외소득비중	달러 %	81,480 82.6	○ 농 산 물 수 출 - 총수출대비	억달러 %	624 8
○ 경 지 면 적 - 호당경지면적	천ha ha	380,521 178.1	○ 농 산 물 수 입 - 총수입대비	억달러 %	577 4.1

자료 : USDA(www.ers.usda.gov), FAOSTAT

(2) 농업정책동향

미국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농업법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한다. 2005년 정책사업은 2002년 농업법(Farm Bill)을 근거로 한다.

2002년 농업법(Farm Bill)은 2002년 5월 2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8일 상원에서 가결된 후 5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작물년도) 5년간 유효하며, 2008년 이후 적용을 위해 2007년에 농업법이 개정된다. 다만, 예산 배분은 10년(2002~2011) 계획을 반영하여, 10년간 총 1,900억불(추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02년 농업법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우 다양한 농가소득 안전망과 소득지원정책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미국은 1933년부터 농업법에 근거한 정책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초기 농업정책은 농산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다가 점차 농산물 담보 용자제도,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도 및 재해 보험성 사업 등의 농가소득안정책을 확충해 나가면서, 정부 지원규모는 증가해 왔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무역가격 왜곡성 비판이 WTO차원에서 증폭되면서, 2002년 농업법은 기존의 지원 사업들을 WTO 허용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들로 재구성하여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용자제도와 직불제도로 운영되던 것이 마케팅론(용자부족 불직불제도), 소득보전직불 및 가격보전직불 등 3가지 제도로 구별하여, 농가 자격별(청소년, 신규, 기존농), 지역별, 기준면적, 지원단수 및 자금성격 등의 지급방법을 다양화하였다. 동시에 WTO 차원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환경보전 사업이 대폭 증액되고 농촌지역단위의 개발정책을 강화한 것도 동 법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현재 약 300개에 달하는 다양한 정책과 정책별 추가 선택 사항을 마련하여 농가 여건에 맞는 정책을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계획적인 영농을 하고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꾀하고 있다.

2007년 농업법 개정을 앞두고, 미 농무부는 2005년부터 전국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소득안정지원정책이 대규모 농장을 확보한 기업농 중심의 곡물, 사료작물 등에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과일·채소·특용작물 재배 농가 지원혜택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토로되었다. 향후, 2007년 농업법 개정은 WTO에서의 보조금 감축압력과 보조금 확대를 기대하는 농가와 의회의 요구 사이에서 상당한 진통을 거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 단계를 감시하여 식품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03년 12월의 BSE 발생 이후 소와 쇠고기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NAIS(동물인식) 시스템, 검역강화, 연구개발사업이 확충되어 실시되었다.

9.11테러를 계기로 창설된 국토안보부는 농업과 식품부분을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인식하여 동식물검역 및 식품수입 절차도 바이오테러에 대비한 감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기식품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안전성기준 및 표시제, 계란위생기준, 식육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농무성은 유기농업인증제, 시범적인 유기농업지원제 등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해가고 있다.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상실 등의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보전유보 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장려계획(Wetland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UIP)도 확충하였다. 이러한 환경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생산 감소 효과를 가져와 곡물의 과잉생산을 방지 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여가와 복지욕구의 충족과 종합적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타 분야의 농무부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TO허용보조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근 미국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농산물 시장확대 및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지향성이 강한 공화당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정책은 농산물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의 획득, 범미 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지역 FTA 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무역협상권한은 2002년 8월 1일 상원을 통과하여 발효된 것으로 2007년 7월1일까지 유효하다. 동 법안은 대통령에 대한 무역협상권한(TPA) 부여, 무역으로 인한 실직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TAA),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넷째,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1년간 연평균 1.8%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 농업인프라에 대한 공공지출, 비료나 농기계 등에 대한 기술향상 등의 네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 지원은 농산물의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위한 Bio기술, GM기술, 곡물연료 생산 및 사용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송지숙)

나. 중 국

(1) 농업경제동향

중국의 2004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58.2%인 757,050천명이고, 경지면적은 국토의 13.6%인 130,039천ha이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0.7ha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다. 농산물 수출입은 수출이 224.7억 달러이고 수입이 217.8억 달러로 6.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년의 51억불 비해 무역흑자 폭은 많이 감소하였다.

<표 1-3-5> 중국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4	구 분	단 위	2005
○ 농촌 인구 - 총 인구대비	천명 %	757,050 58.2	○벼 생산량 ○옥수수 생산량	백만톤 "	179 130
○ 농가 호수 - 총 가구대비	천호	193,088 56.7	○ 식량작물 재배면적 ○ 채소·과수 재배면적	천ha 천ha	101,606 27,328
○ 농업 총생산액 - GDP 대비	억 위엔 %	20,768 15.2	○ 농산물 수출 - 총수출 대비	억달러 %	225 3.8
○ 경지면적 - 농가호당경지면적	천ha ha	130,039 0.67	○ 농산물 수입 - 총수입 대비	억달러 %	218 3.9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2006)

(2) 중국의 농업과 농촌정책

중국의 2005년 GDP는 약2조2천6백억불로써 전년 대비 9.9%증가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규모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실업 및 삼농 문제(三農; 농업·농촌·농민 문제, 협소한 농지, 낮은 농업생산성, 호주제를 통한 도시·농촌 분리정책 등으로 인한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 등 사회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를 총칭하는 삼농문제는 1980년대 식품의 공급문제에서 최근 농민소득, 농촌소비, 농촌의 노동력 이전문제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식량생산을 늘리고,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삼증(三增)”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경제사회발전의 물질적 토대인 삼농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국무원을 위시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이에 따라 2005년도 국무원 1호 문건(1號 文件; 최우선 역점 과제 명시)도 전년에 이어 농업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년도에 이어서 도시·농촌을 연계한 통일적인 발전 전략 및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세금을 적게 받으며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각종 농업 지원 정책 강화,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 건설 강화, 농업 및 농촌 경제 구조조정의 지속, 심도 있는 농촌개혁 추진, 식량의 안정적인 증산, 농민수입의 지속적인 제고 실현, 농촌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발전 추진을 2005년도 농업 및 농촌 업무의 골간으로 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 주요 농업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농업지원 정책 강화이다. “두 가지를 감면하고(兩減免) 세 가지를 보조하는(三補貼)”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즉, 농업세 감면 추진을 가속화하고 연초(煙草)를 제외한 기타 농업특산세를 감면하였다. 592개 국가 빈곤원조개발업무 중점 현(縣)은 농업세 감면 시범 현이 되었다. 2005년 중국 전역의 농업세 면세 범위는 28개 성(省)으로 확대되었고, 기타 하북(河北), 산둥(山東), 운남(雲南) 3개 성의 농업세율은 2%로 일률적으로 하락하였다. 원래 5년 안에 농업세를 폐지하겠다는 목표는 2년 앞당겨 실현하게 되었고, 만 1년 동안 농민 부담도 220억 위안이나 줄었다.

중국 정부는 2005년도에도 식량생산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였다. 중앙 재정 부문은 식량위험기금에 대한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 체제를 더욱 완비하였고, 보조 규모도 134억 위안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식량 주산지역 현(縣)과 재정상 곤란을 겪는 현에 대하여 장려성 보조를 실시하였다. 중앙 재정 부문은 2005년 한 해동안 이전 지불금 150억 위안을 전문적으로 배정하고, 이 중 55억 위안을 전국 근 800개에 달하는 식량생산 현에 장려금으로 지불한 바 있다.

둘째, 경지보호제도의 엄격한 시행이다. 경지보호제도는 크게 경작지 보호, 농촌토지 도급정책 실시 등 농촌토지제도 개혁 및 비옥한 토지 만들기로 요약된다. 경작지 보호는 비농업 건설의 경작지 점용을 통제하고 기본 경지면적 확보, 경지의 품질 유지 및 용도 유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지 점용세 잠정 조례를 수정하고 경지 점용세율을 인상하며 경지점용세 감면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양도관리방법』의 엄격한 실시를 관철함으로써 토지 양도 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토지 양도에 대한 규범적인 관리를 추진하며, 농촌토지 도급 관계법령의 제정 업무를 가속화하였다. 중앙 및 성급(省級) 정부는 농업 종합개발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였고, 신규 증액된 자금은 주로 식량생산 주산지의 중급 및 하급 농지 개조에 집중 사용하여 고품질의 기본 농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셋째, 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농업발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다. 농촌의 소형 기초시설 강화를 위해 특히, 식수 안전 문제, 농촌 도로 건설, 농촌 에너지 건설 문제, 빈곤 농촌지역에 대한 기초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산물 유통과 검증, 검사 시설 건설을 추진을 위해 도매시장 건설 및 현존하는 도매시장 개혁, 우정(郵政) 시스템의 대농민 영농 및 생활을 위해 봉사하는 체인배송 업무 장려, 농업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업발전에 필요한 종합 보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량종 재배 시스템, 농업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시스템, 동식물 보호시스템, 농산물 품질안전 시스템, 농산물 시장 정보 시스템, 농업자원 및 생태보호 시스템, 농업사회화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 등 “7대 시스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넷째, 농업 및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식량생산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중국 국내에서 식량의 기본적인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정책을 견지하면서 시장수요에 따라 품종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생산 구도를 최적화하며 단위면적당 생산력 증대를 통하여 식량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간 비교우위를

고려한 농산물 산업지대의 건설을 통한 특색 있는 농업 발전, 목축업, 식량 주생산지에서의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농경지 수리(水利) 및 생태건설을 강화를 통한 농업의 자연재해 대비 능력 강화, 농업의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를 통한 농업의 과학기술 함량 제고, 농촌 투융자 체제를 개선하여 농업 지원 체제의 건전화, 농촌 노동자의 자질 제고를 통한 농민과 농촌사회의 전면적 발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양지연)

다. 일본

(1)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05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6.5%인 8,325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의 12.4%인 4,692천ha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1.7ha로 한국의 1.4ha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2005년 농산물 수입액은 543.4억달러로 수출액 20.5억 달러보다 26.5배 가량 많다.

<표 1-3-6>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5	구 분	단 위	2005
○ 농가 인구 - 총 인구 대비	천명 %	8,325 6.5	○ 곡물류 생산량 - 쌀 생산량	백만톤 "	12.0 10.9
○ 농가 호수 - 총 가구 대비	천호 %	2,838 5.7	○ 과일류 생산량	"	3.7
○ GDP	억달러	45,630	○ 농산물 수출	억달러	20.5
○ 경지 면적 - 호당 경지면적	천ha ha	4,692 1.7	○ 농산물 수입	억달러	543.4

자료 : 1. 농림업 주요통계(2006) 2. 통계로 보는 한국속의 세계농업(2006)
3. 농산물수출입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 환율은 1\$당 110.21 적용

(2) 농업정책동향

일본 정부는 식료자급을 저하, 농업인의 고령화, 농지면적의 감소, 농촌의 활력 저하 등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국제화의 빠른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하였던 구 「농업기본법」을 대체하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1999년 7월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 추구하는 농정의 기본이념은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다면적 기능의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농촌의 진흥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농정의 기본이념에 따른 모든 시책 실시의 평가 및 보증하기 위하여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동 기본계획은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식량자급을 목표, 식료,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종합적·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을 담고 있다. 기본 계획에서 포함하고 있는 기본시책으로는 크게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시책,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 및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 등이 있고, 품목횡단적 경영안정 대책과 쌀 정책 개혁이 대표적인 시책이 되겠다.

이하 2005년 책정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의거 일본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개혁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국제전략,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 식품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식생활의 육성, 새로운 분야의 개척, 농촌진흥전략으로 구분된다.

첫째, 국제 전략으로는 WTO 및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산 농산물 및 식품 수출을 촉진하며, 동아시아 식품산업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품종보호제도 등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있다. 특히, 일본산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을 5년간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수출실적은 2004년 2,954억엔에서 2005년 3,311억엔으로 12.1% 증가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에 일본의 식품산업 현지법인 활동 규모를 5년간 30~50% 제고하기로 하였고, 2005년 매출액은 84억불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위해 식품 신제품 출원건수는 2005년 1,385건에서 2010년 2,000건으로 5년간 50%를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 핵심경영체의 육성·확보와 신규 취농의 촉진 및 식량공급비용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경영체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해서 예산, 금융, 세제 등 각종 시책을 핵심경영체에 집중하는 한편, 생산기반 정비, 각종 공공시책 추진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핵심경영체 육성내용으로는 인정농업자 수가 2005년 약19만5천명에서 2010년까지 33~37만명까지 늘릴 계획이고, 마을영농은 2005년 약 1만 규모에서 2010년까지 2~4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경영에 대한 여성참여를 촉진하고 의욕적인 기업과 젊은 인력을 적극 유치하였고, 일반기업 등 농업참여법인 수는 2005년 156개에서 2010년 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제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2010년에는 농정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 식량공급비용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생산과 유통 양면에서 성역없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5년간 20%의 생산·유통비용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식품의 안전과 건전한 식생활의 육성을 위해 국내 가축전염병 등 발생 및 만연을 방지하고 해외전염병 등의 침입방지시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고, 식품 표시의 적정화 및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일본농업표준(JAS) 규격의 보완을 추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식생활의 육성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급식, 관광과 연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학교 급식 중 지역생산 농산물 비중을 2004년 21%에서 2010년 30%이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넷째, 기술과 지적재산에 의한 새로운 산업분야의 개척,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료 등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분야 개척이다. 잠재적 시장수요에 부응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지역브랜드 확립 등을 통한 새로운 산지모델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200억엔인 기능성 농식품의 시장규모를 2010년까지 신식품·신소재의 시장 규모를 7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촌지역 진흥을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농촌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를 토대로 지역에서 스스로 창출한 성공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을 수정하여 정부는 지역의 자발적인 추진에 대한 참가의 촉진, 지역의 노력과 창의력 유도, 제도전에 대한 기회 제공 등 간접적 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진흥사례를 2004~2005년간 60개 발굴하였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양지연)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1) 농업경제 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연합체로써 2005년도 현재 GDP는 107,938억유로, 인구는 462,017천명, 면적은 397,552천ha로 거대 경제권이다.

EU 25개 회원국 전체의 경지면적은 162백만ha, 농가구수는 9,871천호, 농업분야 취업자수는 9,653천명이며, 농업총생산액은 3,305억유로 정도이다. 2003년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생산이 1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곡물류 12.6%, 쇠고기 9.6%, 돼지고기 8.5%, 신선채소 8.5%, 신선과일 6.6% 가금류 4.1% 순이었다.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이 비중을 보면 프랑스(19.6%), 이탈리아(13.8), 독일(13.3%), 스페인(13.3%), 영국(7.5%), 네덜란드(6.2%), 폴란드(4.3%), 그리스(3.7%), 덴마크(2.6%), 포르투갈(2.2%), 벨기에(2.1%), 헝가리(2.0%), 아일랜드(1.9%), 오스트리아(1.8%), 스웨덴(1.4%), 핀란드(1.3%), 체코(1.1%), 슬로바키아(0.6%), 리투아니아(0.4%), 슬로베니아(0.3%), 라트비아(0.2%), 사이프러스(0.2%), 에스토니아(0.1%), 룩셈부르크(0.1%), 몰타(-)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EU-15국(3.8%) 체제보다 높아져 5.0%이다. 국가별로는 영국(1.3%), 룩셈부르크(2.1%), 벨기에(2.2%), 독일(2.4%)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리투아니아(16.3%), 폴란드(17.6%), 라트비아(13.3%), 그리스(12.6%) 등은

높은 편이다.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인구 중 농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농업이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룩셈부르크(0.5%), 스웨덴(0.6%), 영국(0.7%), 독일(0.9%), 벨기에(0.9%)가 낮은 편이며, 그리스(5.2%), 스페인(3.4%), 헝가리(3.1%), 폴란드(3.1%) 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1-3-7> EU 농업의 주요 지표(2004)

국 가 (25개국)	경지면적 (천ha)	농가구 ¹⁾ (천호)	가구당 경 지 면적 ¹⁾ (ha)	농업분야고용		농 업 생산액 (백만 유로)	농 업 부가가치 (백만 유로)	GDP 대 비 (%)	농산물 무역			가계비중 식료품비 (%)
				취업자 (천명)	전체 대비 (%)				수입 비중 (%)	수출 비중 (%)	무 역 지 수 지 (백만 유로)	
EU-25	162,393	9,871	15.8	9,653	5.0	330,455	167,672	1.6	6.0	6.0	-2,490	:
EU-15	128,989	6,284	20.2	6,208	3.8	299,688	155,396	1.6	6.1	6.0	-3,396	
벨기에	1,394	55	25.4	92	2.2	6,858	2,674	0.9	7.1	4.9	-1,746	16.6
체코	3,631	46	79.4	208	4.4	3,623	1,255	1.4	3.1	3.2	-12	17.7
덴마크	2,664	49	54.7	90	3.3	8,573	3,311	1.7	7.8	18.7	2,181	25.8
독일	17,020	412	41.2	835	2.4	44,010	19,226	0.9	4.7	2.5	-2,973	16.2
에스토니아	770	37	21.6	32	5.5	473	199	2.2	3.9	4.9	-3	15.3
그리스	3,960	825	4.8	546	12.6	12,106	8,627	5.2	6.2	19.9	-4	29.7
스페인	25,249	1,141	22.1	979	5.5	43,800	28,615	3.4	8.0	9.5	-1,699	20.0
프랑스	29,632	614	45.3	964	4.0	64,839	31,077	1.9	4.8	8.3	4,828	19.2
아일랜드	4,307	135	32.3	117	6.4	6,169	2,719	1.8	3.5	11.6	3,041	17.7
이탈리아	13,159	1,964	6.7	943	4.2	45,715	30,141	2.2	6.1	5.3	-810	15.7
사이프러스	158	45	3.5	17	5.1	595	314	2.5	7.1	18.4	-23	17.1
라트비아	1,642	127	11.8	136	13.3	703	285	2.6	6.0	9.5	-2	22.0
리투아니아	2,604	272	9.2	234	16.3	1,381	516	2.9	4.3	8.5	29	:
룩셈부르크	128	3	52.3	4	2.1	278	129	0.5	1.3	1.1	-36	35.4
헝가리	5,862	773	5.6	205	5.3	6,567	2,531	3.1	2.1	10.0	471	21.0
몰타	10	11	1.0	3	2.3	123	58	1.3	4.8	6.0	15	26.5
네덜란드	1,927	86	23.5	256	3.2	20,494	8,230	1.7	8.9	14.7	-2,081	:
오스트리아	3,254	174	18.7	181	5.0	5,804	2,799	1.2	4.5	4.6	442	14.2
폴란드	16,301	2,172	6.6	2,409	17.6	14,283	5,974	3.1	5.5	10.8	404	13.6
포르투갈	3,819	359	10.4	619	12.1	7,310	3,358	2.4	11.9	9.1	-678	26.0
슬로베니아	491	77	6.3	91	9.7	1,104	499	1.9	7.8	4.9	14	21.1
슬로바키아	1,935	72	29.8	109	5.1	1,914	646	2.0	1.5	2.7	13	21.3
핀란드	2,253	75	29.9	119	5.0	4,233	1,459	1.0	2.4	2.8	255	27.0
스웨덴	3,153	68	46.1	107	2.5	4,778	1,575	0.6	4.1	3.0	285	18.6
영국	17,069	281	57.4	356	1.3	24,721	11,456	0.7	6.0	4.8	-4,402	16.5

주 : 1)은 2003년 자료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al Statistics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6.0%이며 수입은 6.0%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21%), 러시아(7%), 스위스(7%), 일본(7%) 등이며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조제식료품(52%), 동물성 식품(17%), 곡물류(12%), 과일 및 채소(5%) 등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14%), 미국(10%), 아르헨티나(7%) 등이며 주로 조제식료품(37%), 과일 및 채소(21%), 곡물류(21%), 동물성 식품(9%)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며 역내 무역증가율이 역외 무역증가율보다 높다. 2004년도의 역외 농산물 무역적자는 17억유로이다.

(2)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 3월 로마조약에 의거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용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절한 소비자 가격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및 2003년 7월(MTR),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 7)은 단일농가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Agenda 2000의 주요내용은 곡물분야에 대한 지지가격을 2000/2001년부터 2개년에 걸쳐 15% 감축하고, 소득 손실보상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인상 지급하며, 직접지불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 휴경비율을 기존 17.5%에서 2006/2007 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

기로 하고, 쇠고기 분야는 광우병과동 등에 따른 공급통제로 재고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5년까지 재고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지가격을 2000년 7월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20% 감축하고 장려금을 인상 지급하며 조방화를 위한 가축사양밀도는 ha당 2.0 가축단위로 계속 제한기로 하였다.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2005/2006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하고 그에 따른 낙농보상금을 2005년부터 지급하되 젖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우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현행 쿼타제도는 2007/2008까지 연장하는 등 생산쿼터제도를 급격히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차원에서 CAP보조금 지급시 일정한 환경기준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농가가 이를 위반할 시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조기이농, 농업환경, 임업, 조건불리지역 등과 관련한 농촌개발정책, CAP수행을 위한 재정문제 등도 「Agenda 2000」의 공동농업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개혁안(MTR: Mid-term review)은 2003년 6월 26일 합의되었다. MTR은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는 Agenda 2000에서 설정된 수준과 같지만 CAP의 추가 개혁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다. MTR에서는 새로운 농정수단과 운용체제가 도입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부분의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을 WTO 규정이 허용하는 그린박스의 형태로 전환했다. MTR은 보상 직접지불과 가축두수에 대한 프리미엄 등 블루박스의 대부분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WTO상의 허용보조(그린박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다양한 직접지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통합해 농가당 단일 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 SFP)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보조를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췄다. 독일에서 많이 생산되는 호밀에 대한 개입가격이 폐지되고, 쌀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의 1/2 수준인 톤당 150유로로 감축되면서 그 개입물량도 연간 7만 5,000톤으로 제한된다. 곡물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과 같은 톤당 101.31유로로 유지하기로 했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는 2006/07~2008/09년에 0.5%씩 늘어나고, 쿼터제도는 2014년까지 유지된다. 대신에 버터에 대한 개입가격은 200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25% 줄고 개입물량도 7만 톤에서 3만 톤으로 감소된다. 탈지분유의 개입가격은 3년 동안 총 15%를 감축하지만 개입물량은 10만 9,000톤으로 유지된다. 우유에 대한 목표가격은 없어졌다.

셋째, 환경과 농촌개발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농가는 환경보전 등 기본적인 순응요건(cross-compliance)을 이행해야 한다. 순응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혜 농가에 벌칙(보조 규모의 감축)이 부과된다.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업환경 조치(AEM)에서 회원국과 공동 부담하는 EU의 비율이 높아졌다.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목표 1지역의 경우에 EU의 분담 비율이 최대 85%로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60%로 정해졌다.

2005년은 2003년 중간개혁에서 제외되었던 설탕 분야의 개혁 방안이 타결되었다. 2004년 6월에 집행위에서 설탕분야 개혁안을 발표한 이래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 협상의 과정을 거쳐 2005년 11월에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지가격을 4년간 36% 인하하고 보조금 지급은 생산과 단절하되 소득손실의 64.2%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개년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수매 등 시장개입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유럽연합은 7년간 중기 예산을 미리 정하는데, 2007-2013년간 중기예산을 확정하였다. 총예산 8,624억 유로 중 농업예산은 3,629억 유로이며 이중 가격지지 및 직접지불에 2,931억 유로, 농촌개발에 698억 유로가 배정되었다. 농촌개발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은 분야별로 예산 배정 하한을 규정하였는데, 농업경쟁력 제고에 10%, 농촌경제 다각화에 10%, 환경 및 국토관리 지원에 25%, LEADER 방식에 5%를 최소로 배정해야 한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등 여러 회계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를 유럽농촌개발기금을 창설하여 재원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2. 양자간 농업통상협력

2005년도 양자간 농업통상 및 협력활동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결과의 이행 및 2001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DDA 농산물협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아울러 '04년 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도 양자 통상 및 협력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농축산물 관세인하 및 동식물검역 완화 등 각국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설명하여 상대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WTO협정 및 우리나라 농산물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에 따라 성실히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수입관리를 철폐하는 등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이루었으며, UR협상을 비롯한 다자 및 양자무대에서 약속한 사항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협상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여 현안해결을 원만하게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다수국이 제기하는 합리적 요구사항은 WTO협정 및 국제관례 등에 따라 국내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업정책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가. 미 국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일본·중국·대만에 이어 제6위 수출국이다. 2005년에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 등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 오렌지·건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주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산물에 걸쳐 약 22억달러 어치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은 인삼, 연초, 면류, 일부 과실류 등이 약 2.1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하나, 미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다자 및 양자간의 관세 인하 약속의 이행과 동식물검역 및 저세율 시장접근물량(In-quota)의 수입관 리문제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의무수 입물량에 시판용 쌀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안이 추가되었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를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 조류인 플루엔자에 대한 지역화개념적용, 유전자변형 농산물 함유 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상표표시 의무화, WTO이행계획에 따른 농산물 관세인하 약속이행 및 미탈각호두의 수입허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산 감귤의 수출재개와 삼계탕 및 파프리카에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간의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미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 회의 및 한·미식물검역전문가회의 등의 정례회의와 이런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송지숙)

나. 일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며,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 통상분야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키로 합의 함에 따라 양국 농업관련 고위급 협의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하고 양국간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농업관련 각종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원만한 공조유지와 정보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정상간 합의의 후속조치로 한·일 농림당국은 농업각료회의를 교환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2003년 3월 9일 서울에서 제3차 한·일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WTO차기 농산물협상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였고 새로운 농업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2년 6월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 정상회의”에서 양국 농림부장관은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의 농업분야의 상호협력 및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 심화시키기로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고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38차 회의를 200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양지연)

다. 중 국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2005년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농산물을 3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다. 2005년 양국간 농산물 교역량은 한국이 중국에 231백만불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2,216백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전체산업 분야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증대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폐지 및 세율인하, 수입입찰제도개선, 중국산 과일수입문제 등 경제·통상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2003년 7월 7일~10일까지 4일간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을 국민방문하고 양국간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농림분야 협력사업으로서 경제·통상협력비전팀 구성 운영, 농업연수생 파견, 품질검사·검역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5년 11월 우리 정부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다.

한편, 양국간 농업의 상호보완적인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간 한·중 농수산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5년 4월 북경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등 각종 국제 기구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제7차 회의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종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정책 및 통상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양지연)

라. 캐나다

캐나다산 농축산물은 2005년 약 4억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제분용밀·유채유·보리·사료용 근채류·돼지고기·치이즈·감자제품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라면·감귤·배·비스켓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05년 약 26백만달러에 그쳐 양국간 농산물교역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시장 편중의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유사제품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5월에는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감염우가 한 마리 발생

하여,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 및 그 부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된 전문가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캐나다내에 만성소모성질병(CWD)의 발생으로 우리 측이 취한 잠정 수입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여 캐나다산 사슴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팽이버섯의 수입허용요건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캐나다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캐 특별동반자관계회의(SPWG)를 통해 협의해 왔으나, 2005년 7월에 개시된 한·캐 FTA로 인해, 정부간 양자 협의체는 운영하지 않고 각 부처별 소관 사항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기술적 사안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양국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캐나다의 방역상황에 대한 논의하고 있으며, 양국간 협력 사안은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송지숙)

마. 유럽연합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은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EU는 농산물 수출액이 68백만불로 8번째로 큰 시장이며, EU로부터 수입은 1,459백만불로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EU로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이에 따라 양측의 농업관련 통상현안은 주로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다.

농업통상에 관련된 협의는 2001년 4월 1일 한·EU 기본협력협정의 발효로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업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으며, 특히 공동위원회 산하에는 농업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신속한 후속조치로 통상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05년 개최된 제4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 EU측은 개정된 OIE 위생규약 (BSE 위험 분류기준 간소화, BSE와 상관없이 고역 가능한 품목추가)

이행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우리측은 국제적인 기준을 존중하나 구체적인 국내적용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시스템에 의한 수출작업장 승인 방식(개별 작업장별 승인 → 작업장 목록 승인 방식) 요청에 대해 EU의 개별 회원국이 신청할 경우 시스템에 의한 승인제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지리적 표시(GI) 보호 관련 DDA 다자협상에서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이견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나 서로 노력키로 하고 EU 측이 계획 중인 한국 식품박람회(11월 예정) 계기 식품안전제도, 지리적표시 관련 세미나 개최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세미나에 우리부 담당자들이 발표하는 등 가시적인 도움을 주었다.

우리측이 열처리가금육(삼계탕) 수출 허용을 요청한데 대해 EU는 위험평가 자료를 제출하면 수출적합성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기 하였으며 EU의 목재포장재 관련 수피제거 기준을 문의한데 대해 관련 자료를 송부해 주기로 하였다. 한국산 인삼제품의 분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인삼의 식품, 의약품 분류 여부는 개별 회원국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우리측의 한국산 분재 수입허용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바. 중남미 국가

중남미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농작물 및 가축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중해과실파리나 구제역 발생등 검역상의 이유로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은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농산물교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농업국가로서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옥수수,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 검역문제가 해소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6번째의 수입상대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유, 옥수수, 대두박의 대한민국 수출이 많은 편이다. 칠레와는 2004년의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국가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오렌지·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망고·감귤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만다린·망고·가금육 및 쇠고기, 멕시코의 포도·오렌지·자몽·탄저린 및 가금육, 에쿠아도르의 망고, 콜롬비아의 열대과일류, 페루의 포도, 우루과이의 감귤류 및 쇠고기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도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열대과일 및 육류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의 농산물의 경우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식량 및 유전자원의 확보 등 자원외교적 측면과 농업분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 유도를 위한 여러 국가들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05. 5월에는 중남미국가 중 브라질과 최초로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하여 정보교환,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기타 농업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수의주사 김 규)

사. 기타 국가

(1)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꾸준히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업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교역에서 무역적자국의 입장에서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동·식물검역기간관련 MRA(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동식물검역협정체결 요청 등 다양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양국정상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간 공동위, 농업장관면담, 통상장관회담 등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동 회의를 통해서 품목별관세율은 UR협상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계획임을 상대국에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상대국에 WTO/SPS규정 및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등 관련 국제기준에 의해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한·태국, 한·베트남, 한·알제리, 한·모로코, 한·이란, 한·이스라엘, 한·우즈베키스탄, 한·카자흐스탄, 한·인도네시아 등과 정례적으로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국가와의 농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10월 한·몽골 농업부간 농업협력약정을 체결하여 2년에 1번씩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몽골 축산물위생관

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및 컨설팅, 초청교육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 알제리와도 협력약정을 체결(2006.5)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도 농업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약정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주사 이미자·최근정)

제3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1. WTO 활동

WTO는 UR 협상결과에 따라서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WTO는 출범 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외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여러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을 출범시켰다. 엄밀하게 말하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부터 자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97년부터 WTO 회원국간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부터 농업협상이 개시되었고 DDA 협상이 출범함에 따라 DDA 협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특히, “분석 및 정보교환” 단계를 거치면서 농업협상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인 농업협정 제20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행기간이 종료하기 1년 전에 농업협상을 개시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제4차 각료회의의 결과에 따라 DDA 협상은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무역자유화와 함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규범 수립, 4개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토록 하고, 2003년 9월에 제5차 각료회의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하여 협상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치적 지침과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당초 정해진 협상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2003년 3월 및 5월말로 예정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Modality 합의 실패, 서비스 국내규제 및 보조금, 정부조달 등의 규범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등 대부분 분야의 중간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DD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9년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 이은 두 번째 결렬로 WTO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어 WTO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와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당초 칸쿤 각료회의는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모델리티 수립에 관한 공동 제안서가 제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제2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한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개시 여부에 대해 ACP국가들의 강경한 반대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부분 협상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에서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이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선진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농업분야에서의 합의실패에서 그 실질적인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

제5차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DDA 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2003년 10월 중순부터 주요 4개 분야(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이슈, 면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수출·입국간 뚜렷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004년을 맞이하였고, 2004년에 들어서면서 DDA 협상 진전 필요

성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4년 초에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후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간 논의를 거쳐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였다. 기본골격에서 당초 협상 시한을 넘겨 2004말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본골격 합의 이후에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기술적인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농업협상은 2004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각 협상기구 의장단이 선임되어 협상준비 체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시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 협상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2004년 7월말까지 기본골격 수립을 목표로 향후 협상일정을 확정하고, 3월부터 7월까지 총 5차례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하여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을 합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2004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 국내적 사정으로 상반기내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상당 기간동안 DDA 농업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기본골격만이라도 합의를 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4.6.30일 농업위원회 의장은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 그동안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보고서를 기초로 2004.7.16일 기본골격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후에는 각국의 대표들이 제네바에 모여 배포된 초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으며, 각 그룹 및 그룹간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04.7.30일 1차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이틀에 걸쳐 진행된 마지막 회의를 통하여 드디어 2004.8.1일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였다. 이사회는 또한 2004년말로 예정된 협상시한을 연기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기본골격이 합의되기까지 협상과정에 적극 참가하고 특히, 농산물 수입국그룹인 G10의 일원으로서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상한 및 의

무적 TRQ 증량 저지에 집중하는 한편, G33(개도국 그룹)으로서는 개도국의 특별품목과 개도국 우대 긴급수입 관세제도 확보 등에 치중하였다. 특히 기본골격 초안 제시에 앞서서는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G10 각료들이 공동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G10그룹 입장반영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였고, 7월말 집중적으로 벌어진 협상에는 농림부 차관이 협상대표로 제네바 현지에서 파견되어 직접 협상에 참가, G10(수입국 그룹) 공동기자회견 및 주요국 면담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우리나라는 관세상한 문제,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별도처리, TRQ 증량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G-10 수입국그룹, 개도국 그룹 등과 공조하여 대응하였고, 그 결과 G20(수출개도국 그룹)와 미국의 관세상한 설정요구를 저지하고 추후 평가과제로 명시하게 되었고, 민감품목의 자기선정 원칙, 특별품목에 신축성 부여를 확보하는 등 G20나 미국 등의 강한 주장을 완화시킨 성과가 있었으며, 수입국 및 개도국의 입장도 일부 반영되도록 하였다.

2004년 하반기와 2005년중에는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속 개최되어, 세부원칙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DDA 농업협상의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구간별 관세감축을 위하여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전환문제,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 등이 논의되었고,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분야에서는 농업보조금의 구체적 기준, 수출신용, 식량원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농업협상과 사무관 김정미)

2. OECD 활동

가. OECD 농업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 농업위/무역위 합동작업반회의, 농업위/환경위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다원적 기능, 식품경제, 농업환경평가, WTO농업협상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의 일환으로 첫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둘째,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정도를 점검·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OECD는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 OECD는 WTO농업무역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OECD의 연구가 UR협상시 주요쟁점이 되었던 농업보조금 감축문제 및 시장 지향적 농업정책의 추진 등에 영향을 주었듯이, 이러한 작업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DDA농업협상을 비롯하여 세계 농업무역질서 재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최근 활동

2006년 6월 제145차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농업위원회가 담당하는 농업정책개혁, 농업무역, 농업환경 등 3개 작업분야에 관한 2007-08년 간 사업예산계획 초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고 10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작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계획에 합의하였다. 2007-08년 OECD 농업위원회의 사업예산계획은 농업정책개혁 분야에서 ①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

가, ② 비회원국 검토와 정책평가, ③농식품 경제에 관한 종합보고서, ④농업정책이 농촌지역 복지에 미치는 영향, ⑤효율적 식품·농업정책 방안, 농업무역 분야에서, ⑥시장 및 정책에 대한 중기 전망, ⑦WTO 농업협상 평가, ⑧농업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 분석, 농업환경 분야에서 ⑨데이터베이스와 모델 개발, ⑩효율적 농업환경 정책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입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농촌개발, 식품경제, 농가위험관리, 바이오경제에 관한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이에 앞서 5월 개최된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회의에서는 정책관련 거래비용과 정책선택 보고서의 공개승인이 쟁점이 되어, 다원적 기능을 공급하는 정책의 경우 시장가격지지가 비용효율적인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수입국들의 의견을 추가반영하고 공개승인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OECD는 2002년 5월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보고서는 수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03년 3월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를 통해 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다원적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목표지향적 정책(targeted policy)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결론이나, 우리나라를 포함 수입국들의 주장으로 일정생산수준까지는 농산물생산량과 식량안보가 직접 연계되며, 거래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정책이 최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OECD는 2005년 한 해 동안의 회원국 농정개혁을 평가한 “회원국 농정 점검 및 평가보고서” 및 2006~15년간 세계 농산물 시장을 전망한 “OECD 농업전망 보고서”를 2006년 상반기에 발간하였다. 아울러 그간 작업반 논의를 통해 공개승인된 “무역 및 국내농업정책 개혁이 세계·국가·농가단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보고서” 등 주요 분석보고서도 발간되었다.

OECD는 2006년 상반기에 발간된 “회원국 농정 점검 및 평가보고서”를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 회원국의 농정변화를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OECD는 동 보고서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OECD 지역의 농업은 계속 높은 지

지수준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국가간 지지수준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며 지지수준 감축의 진전은 국가들간에 고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OECD는 정책운영상 보다 투명하고, 특정 성과달성에 적절하며, 변화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함에 있어 유연한 정책을 확보하는 더 많은 노력들을 권고하는 한편 농업정책개혁 과정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자단위 정책개혁(DDA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OECD는 2015년까지의 세계농산물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하는 “OECD 중기농업전망(OECD Agricultural Outlook 2006~2015)을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농업 및 무역정책과 핵심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일정 가정을 전제로 주요 농산물의 생산, 소비, 무역, 가격에 대한 중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기구(FAO)와의 합동작업을 통해 29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전망을 추가하고 있다. 농업전망 보고서는 특히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이 향후 세계 농산물 교역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세계 농산물 가격은 품목별로 다양한 패턴을 보일 것이나 실질가치는 대체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령 육류의 경우 2003년~2005년 사이 동물질병 발생에 따른 가격충격 이후 전망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안정화되며, 이에 따라 육류의 실질가격은 2015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김종필)

3. FAO 활동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45년 10월 16일 정식 발족하여 4,500여명의 직원과 187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UN 최초·최대의 상설전문기구로서 각국의 농업, 수산업, 임업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각 회원국과 UN기구에 분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림수산분야의 UN본부라 할 수 있다.

FAO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를 비롯하여 지역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정부간 그룹회의 등을 개최하며, FAO에서 논의된 사항이 기초가 되어 각종 농림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주요사업은 식량안보특별프로그램(SPFS), TeleFood, 기술협력사업(TCP), 월경동식물 병해충에 대한 긴급예방시스템(EMPRES) 등이 있다.

○ 식량안보특별프로그램(SPFS)

1994년부터 LIFDCs(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의 만성적인 기아극복과 식량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 및 가계차원의 식량안보 상황개선을 위해 수질관리, 작물생산의 집약화·다양화, 제약요소 분석 및 해결 등의 사업 수행

○ TeleFood

1996년 세계기아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의 하나로 1997년부터 “세계식량의 날(매년 10월 16일)”을 전후하여 세계각국에서 개최되는 모금운동으로 음악회, TV 및 라디오방송, 스포츠경기, 전시회등을 개최

○ 기술협력사업(TCP)

1979년부터 회원국의 긴급한 기술지원 필요성에 대응하여 농림어업 및 농촌개발에 관한 당면문제(식량증산, 영세농가 및 농촌 노동자의 소득향상 및 영양상태개선 등) 해결을 위해 FAO의 특화된 기술능력 활용사업으로 FAO 정규예산으로 지원하는 핵심사업

○ 월경(越境) 동식물 병해충에 대한 긴급예방시스템(EMPRES: The Emergency Prevention System for Transboundary Animal and Plant Pests and Diseases)

1994년부터 FAO가 동식물 질병의 국경을 초월한 전파를 차단, 근절,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경보, 조기대응방안, 질병연구 및 조정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활동을 강화한 사업으로 메뚜기와 우역(牛疫)에 대한 대응을 2대 과제로 하여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EMPRES가 관여하며 TCP를 통해 질병퇴치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FAO에 납부하는 기여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FAO 분담금 중 1.86%를 차지하고 전체회원국 중 10위에 위치하는등 최근 주요 기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1-3-8> 연도별 FAO 분담금 내역

연도별	분담금(US\$)	분담비율	순 위
2000	3,250,871	1.01	16
2001	5,590,222	1.74	11
2002	6,053,917	1.88	10
2003	6,003,472	1.86	10
2004	3,244,907€ 3,150,883\$	1.86	10
2005	3,244,907€ 3,150,883\$	1.86	10

주 : * 최근 유로화 강세로 인해 2004년도부터 회원국의 분담금을 달러화와 유로화로 분리(Split Assessments)하여 납부키로 제32차 총회(2003년)에서 결의함.

우리나라는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66년에는 서울에서 아·태 지역 총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에는 제19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통계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년 임기의 이사국에 7회 진출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여 왔다. 특히 2000년에는 최초로 FAO 재정위원회에 진출(2000~2001)하여 FAO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고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등 주요정책과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지난 1996년 로마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과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WFS)에서 2015년까지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공통의 책임과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을 위한 「로마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2002년에는 WFS 이후 기아극복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아극복 목표달성에 필요한 조치 및

촉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로마에서 38개국의 국가원수를 포함한 184개 국가와 81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세계식량정상회의 : 5년후(World Food Summit : five years later, WFS : fyl)」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기아 극복을 위한 세계적 연대노력을 강조하는 “국제빈곤퇴치연대(International Alliance against Hunger)”의 제목하에 「세계식량정상회의 : 5년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언급한 “적정식량에 대한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정부간 작업반 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는 바,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의 자발적 성격을 강조하고, 국가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우리나라와 FAO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결 및 FAO 회원국과의 기술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해 1957년에 『FAO한국협회』를 설립하였다. FAO한국협회는 □□국제식량농업(월간지)□□, □□세계식량농업백서□□ 등 관련자료 번역·발간,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여·개최지원, FAO/TeleFood 캠페인 전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은정)

4. APEC 및 ASEAN+3 관련활동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의 경제유대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1989년 호주 캔버라 회의에서 태동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하였고, 각종 APEC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분야별 조기자유화, 식량작업반, 생명공학, AFS (APEC Food System)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초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6개국의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담당한 1991년에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3개국이, 1993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아, 1994년에는 칠레가 1998년에는 러시아, 페루, 베트남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21개 회

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은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각료회의, 각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SOM)와 그 산하에 무역·투자위원회(CTI), 농업기술협력 실무작업반(ATCWG) 등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는 “1993년 12월 15일까지 UR협상타결 최대 노력”을 결의하였고, 선진·개도국의 중장기 무역자유화 목표(2010/2020)를 정한 1994년 보고르 선언에 이어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제기한 농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신축성 원칙(Flexibility)이 반영된 1995년 오사카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 행동지침(OAA)을 통해 APEC의 양대 축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14개 분야)와 경제·기술협력(Eco-tech: 13개 분야)의 세부분야별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였고 “인구증가와 소득성장이 식량, 에너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과제로 채택되어 우리나라는 식량작업반에서 2년여 기간 동안 직접 작업에 참여하여 식량수입국의 입장을 확보하였다.

1996년 필리핀 수빅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 행동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인 마닐라 행동계획(MAPA)이 국가별 개별행동계획(IAP), 공동행동계획(CAP), 경제기술협력 공동계획으로 집대성·채택되고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발굴을 검토토록 제시되었다.

1997년 밴쿠버 정상회의에서는 15개 분야별 조기자유화 대상을 정하고 임산물, 수산물 등 9개 우선분야(주로 관세분야)를 98년중에 논의하여 1999년부터 이행할 구상이었으나 1998년 11월 각료회의시까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장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후속 추진분야에 속한 농산물 등 6개분야는 1999년중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1999년 6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시 후속 추진분야에 포함된 농산물의 경우는 “농산물은 BIA에 의거 차기 WTO 협상에서 논의한다”는 기존입장을 한·일의 긴밀한 공조로 관철시켜 농산물은 APEC에서 어떠한 사전 조건 없이 차기 WTO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000년 11월 브루나이 각료/정상회의에서는 APEC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되어 “충분히 광범위하고 균형된 의제의 뉴라운드가 2001년 중에 출범되어야 한다”는 APEC 회원국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2001년, APEC 논의는 주로 WTO 뉴라운드 기여방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의 실행관세 모라토리움 및 미국의 상하이차터 제안 등 시장 접근분야에서 무역자유화 진전 노력이 있었으나, 회원국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미국이 신경제하의 APEC활성화를 위하여 상하이 차터를 수정 제안한 “상하이합의”(Shanghai-Accord)가 2001년 10월 각료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의 테러전쟁과 관련하여 “반테러선언”도 채택되었다. 2002년 10월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는 WTO/DDA 협상의 기한내 종결을 위한 APEC의 기여를 촉구하였으며, APEC 투명성 기준 실현을 위한 성명, 무역과 디지털경제에 관한 APEC 정책실현을 위한 성명, 반테러성명이 채택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조기자유화 논의가 WTO협상으로 넘어감에 따라 생명공학에 대한 고위급정책대화 설치, APEC Food System이행촉진, 투명성 원칙 등의 확보 등이 주 이슈로 논의되었다.

2003년 10월 태국 정상회의에서는 WTO/DDA 협상 진전을 위하여 다자 무역체제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데르베즈 칸쿤 각료회의 의장 초안을 토대로 협상을 재활성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FTA/RTA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어, FTA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강조하고, 무역블록화에 반대하였다.

2004년 APEC 정상회의 및 합동각료회의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고, 합동 각료회의의 주요 논의의제는 다자무역체제의 강화(Strengthen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RTAs & FTAs),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인간안보강화(Enhancing Human Security)였다. 합동각료회의의 주요 논의 및 합의 내용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 재확인 및 WTO DDA 기본골격 승인을 전적으로 환영하였고, 제네바 APEC 코커스 활동의 지속 및 2005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WTO DDA 협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 공동으로 인식하였다. 정상회의에서는 인간안보, 무역자유화 등이 주요 논의 의제였으며, 다자무역체제의 중

요성 및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2005년은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 및 각종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고르목표 달성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RTAs/FTAs 확대, 무역원활화, 인간안보강화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APEC 정상들은 WTO/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채택하였고, 선진국은 2010년까지 수출보조금 완전 철폐라는 구체적 내용에도 합의를 이루었다. 또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보고르 목표의 이행상황을 중간점검 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문제에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2006년은 베트남이 의장국으로서 APEC 일련의 회의 즉, 고위관리회의, 통상장관회의,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11월)가 개최되었다. 2006년 APEC의 주제는 ‘지속발전 및 번영을 위한 역동적인 공동체를 향하여’이고, 이를 위한 부제는 ‘부산로드맵과 DDA를 통한 무역·투자 증진’, ‘격차해소 및 지속발전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강화’, ‘안전하며 호혜적인 환경조성’ 그리고 ‘공동체 유대 증진’이다.

APEC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 2가지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이다.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채택한 보고르 목표는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DDA와 FTA를 통한 무역 확대, 거래 비용 감소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장관회의와 정상회의에서는 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APEC 차원의 별도 성명서를 채택하였지만, DDA 협상의 잠정적인 중단으로 인하여 금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성공적 타결이 아닌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별도 성명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무역협정(RTA)/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하여 APEC에서는 비록 구속성이 없는 권고의 형태이긴 하지만 FTA 체결에서 참고할 수 있는 14개 분야의 표준모델을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2005년 정상회의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여 미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APEC 각료회의와 조류인플루엔자 보상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APEC의 농업관련 협의체인 농업기술협력실무그룹(ATCWG)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제8차 총회를 개최하고 동식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 농업 생명공학의 연구개발 및 지도 등 7대 소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과 향후 활동계획 및 APEC 기금활용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06년간 ATCWG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제9차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ATCWG에서의 의장국 및 프로젝트 제안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PEC의 농업관련 유일한 회의체인 ATCWG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06년에는 베트남에서 제10차 ATCWG 총회가 개최되어 지난 1년간의 활동내용과 내년도 활동계획을 점검하였다. ATCWG는 본래 역내 회원국 간의 농업기술의 교류를 통해서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식품무역 및 생명공학 등의 농산물 무역에 관한 주제로 논의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총회에서는 APEC 기금활용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올해로 우리나라의 의장직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캐나다에서 임기 3년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키로 합의되었다.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중·일 3개국간의 농업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ASEAN+3 농림장관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역내 농업·농촌 발전과 아국의 위상강화에 기여해 왔다. 2004년 10월 미얀마 양곤 개최된 제4차 회의에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제2차 회의에서 ASEAN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제안된 「미곡증산」과 「가축 인공수정」 연수생 초청사업의 2003년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 제안된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샵□□의 개최계획을 설명하였고, 2004년 제4차 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벼농사 물

관리 자동화 기법 및 농업용수관리 기술에 관한 연수과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협력사업들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은 향후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기대하였다.

2005년 필리핀 따가이파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에는 이명수 농림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초연설을 통해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농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이 역내 빈곤경감, 기아감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지난 4년 동안 아세안국가와 한·중·일 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정체, 자연재해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등 많은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있는 만큼 이러한 여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및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총 3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2006년에는 제5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제안하였던 3개 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먼저 6월에는 한국 농촌공사는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에 관한 훈련과정’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7개국 13명이 참가하였다. 8월에는 농림부 통계기획담당관실에서 아세안 프로젝트인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의 우리나라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을 KOICA와 함께 주관하여 2주 동안 약 20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를 식물검역소와 함께 주관하여 10개국 19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2주 동안의 훈련과정을 마쳤다.

또한, 2006년말에는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SIEMSTA 2006) 및 국제농기계학술대회 초청’과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트 지원 및 진단기술 훈련과정’ 등의 협력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6년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농업분야 협력이 크게 확대된 해로서 본격적인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 활동이 시작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는 2006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농업분야의 협력활동을 확대·강화해 가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대상국이 많기 때문에 금번 농림장관회의에서는 과거보다 많은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협력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5.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또는 Less Income and Food Deficit Country) 기아해방을 위한 잉여농산물 원조를 목적으로 1961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기구는 UN 회원국과 FAO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자발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식량 원조를 통한 개도국의 비상사태 해결과 자력개발계획을 자극하며 학교 등 기관 급식사업을 지원하여 급식 대상자들이 적절한 영양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각국 농촌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금지급 수단으로 식량 원조를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동기구로부터 1964년부터 1984년까지 홍수대책, 간척사업, 도로개설 등 총 23개 사업에 10,200만불의 지원을 받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원조 공여국으로 위치가 바뀌어 '05년 현재 10만불의 기여금을 지불하고 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개도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UN 산하에 1977년에 창설되어 현재 163개 회원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창설회원국으로 1981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이사국으로 진출하였으며, 2005년 현재 875천달러를 기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중·일 3개국 간의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ASEAN+3 농림장관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역내 농업·농촌 발전과 아국의 위상강화에 기여해 왔다.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sia-Africa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의 농촌개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62년 3월에 창설된 정부간 기구로 개도국이 개도국을 원조하는 남남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2006년 현재 회원국이 28개국, 준회원국 2개로 우리나라는 1963년 2월에 가입하여 1970년부터 집행이사국(12개국)으로 활동 중이다. 2006년 현재 61천불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농촌발전의 경험을 담은 “새마을 연수과정”을 KOICA사업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등 외교적 입지가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은정)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우루과이 라운드이후 농업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속가능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농업의 무역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친환경농업의 장려라는 당위성과 함께, 농업보조의 환경효과 및 무역효과를 분석하여 좀더 친환경적이고 무역친화적인 농업정책을 모색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이 노정되고 있는데, 농업활동은 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통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연경관보전이나 홍수조절을 통하여 환경에 유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업·환경·무역논의는 크게 OECD, WTO, 다자 환경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OECD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농업과 환경간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1993년 9월부터 2006년 현재까지 농업위·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 회의(JWP, Joint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이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은 농업정책 개혁과 환경성과의 관계, 33개 분야별 농업환경지표개발, 각국의 농업정책 목록작성,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이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농산물 수입국 그룹들과 공조하여, 농업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다양하며 이를 반영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2004년 6월 제19차 농업환경합동작업반회의에서 33개의 농업환경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에 합의하였다. 33개의 지표는 토양침식, 토양유기탄소량, 수질(질소, 인,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 양분균형, 농약사용, 토양관리, 물 사용, 생태계 다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 농업위원회(COAG)는 회원국의 농업정책을 평가하는 연차보고서에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환경지표는 농업환경정책 목록(inventory), PSE, PEM 등과 함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제4권에는 농업의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positive)을 나타내는 토지생태계기능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수자원보유능력 지표(WRC) 등 토지생태계기능 지표가 포함된 것은 향후 다원적 기능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토지생태계기능 지표 등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핵심지표로 선정되고 지속적으로 개발되도록 관련 연구 및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1995년 출범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농업

부문과 관련된 주요 의제는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으로써, 무역 왜곡조치(농업보조금, 고관세 등) 제거가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도하선언에 따라 무역 환경위원회에서 환경협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1년에 2차례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감축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2002년 6월 회의에서 개도국과 케언즈 그룹(농산물수출국들)들은 유기농산물도 환경상품에 포함시켜 저관세 및 무관세품목으로 전환시키자고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 전까지 환경상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비농산물협상(NAMA)과 연계하여 상세 협상원칙(modality)을 수립하고자 하나 환경상품의 범위에 대한 회원국들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의제인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의 표제하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보조의 문제에 대하여 케언즈 그룹은 농업보조금이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환경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EU, 일본,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농업보조금은 경관보존, 홍수조절등의 다양한 환경효과를 지니므로 보조금의 감소는 환경에 부정적일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환경과 연계된 농업보조금 논의가 차기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OECD, WTO 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고자 하는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스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을 감축하도록 약속한 기후변화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유해화학

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사전통보승인(PIC)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스톡홀름협약, 멸종위기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생명 공학제품의 국가간 이동 및 자연방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에의 위해 방지를 주요목적으로 하여, 이른바 “바이오안전성의 정서”가 2000년 채택되고 2003년 9월 발효되었다.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로 명명된 동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사용 용도에 따라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s,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 사용 LMO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국가간 이동시 차별화된 교역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의 채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임을 감안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수입국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올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국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통보승인제도(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반영토록 하여 수입국의 주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동 의정서 가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에 관한 시행법률」이 제정하였고 이후 동 법률 시행령('05년)과 시행규칙('06년)이 제정되었다. 다만 급격한 수입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되고 있어 세부사항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김종필)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WTO/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WTO/SPS협정)”은 SPS조치(식품 위생조치, 동·식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동·식물 검역 조치)가 국제 교역을 왜곡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1995년 WTO출범과 함께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의거 설치된 WTO/SPS위원회는 매년 3~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2005년에도 3차례의 회의(2005. 3-32차 회의, 2005. 6-33차 회의, 2005. 10-3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5년도 SPS 위원회에서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을 가능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WTO/SPS협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화(Regionalization) 인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브라질·알젠틴·칠레·콜롬비아를 주축으로 한 중남미 국가들은 지역화 인정관련 일반지침 개발을 주장하면서, 지역화 적용에 관한 사례를 다수 발표하였다. 이들 국가와 EU는 지역화 인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별도 작업반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역화 인정지침 초안을 제출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역화 인정관련 지침초안 작성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회원국간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작업반 구성 여부 및 업무분장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은 작업반 구성, 지역화 인정절차 개발 및 각 단계에 검토일정을 명시하는 것 등을 반대한다는 데에 공동입장을 취하였다.

우리 정부는 위생 및 검역관련 규정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이행문제 등 논의시 SPS협정 대상 물품(농산물, 식품 등)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SPS위원회는 WTO/SPS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국가의

위생 및 검역관련 무역현안에 대한 이의제기 및 답변 등 현안해결의 장을 제공하였다.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SPS조치와 관련된 통상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으며,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동식물검역현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SPS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EU(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일본(사과·배·토마토), 뉴질랜드(감자), 중국(옥수수) 등의 요청으로 수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관심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조치를 이의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관련 조치의 정당성 및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2005년에도 국제교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의 위생 및 검역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WTO/SPS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 각 회원국에 회람토록 조치('05년 24건)하였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강대진)

8.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은 1995년 수해에 따른 긴급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사회주의 경제의 비생산성과 북한당국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북한은 매년 100~200만톤 정도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매년 식량절대부족국가 등에 대한 국제기구(WFP, FAO 등) 및 NGO의 지원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유엔인도지원국(OCHA)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 UN기구의 대북지원 목표액은 2억 880만불, 실적은 1억 761만불로 목표 대비 61.1% 수준이었다.(한국포함, OCHA 통계 '05.1.2). 주요 기여국은 일본(4,660만불), 미국(1,906만불), 유럽연합(1,316만불), 스웨덴(914만불), 오스트레일리아(797만불) 순이었다. 2003년에는 목표 2억 2,937만불, 실적 1억 3,305만불로 목표 대비 58.0% 수준이었다.

한국을 제외한 '04년 UN기구와 국제사회 대북지원 규모는 1억 6,323만불로 지난해 1억 3,932만불 대비 17% 증가한 규모이다. 이중 UN 기구가 1억 2,591만불, 개별국가 2,153만불, 국제 NGO 1,579만불을 지원했다.(UN OCHA 통계 2005.1.2)

WFP는 총 36.6만톤의 식량을 지원(목표량 48.1만톤의 76%)하였는데, 한국 옥수수 10만톤, 일본 곡물 12만9천톤, 미국 곡물 5만톤, 스웨덴 곡물 1만8천톤, 유럽연합 곡물 1만2천톤 등이다.

한편, 유엔의 인도지원국(OCHA)에 따르면 2005년도 유엔주도의 합동지원절차(CAP) 프로그램에 수혜대상국에서 북한이 제외됐다. 이는 북한이 안보상황을 이유로 유엔측에 CAP 불참 입장을 전달한데 따른 것이며, 이를 보면 북한이 통합지원절차보다는 한국, 중국 등의 개별국가나 비정부기구를 통한 지원형태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WFP는 2005년에도 어린이 부녀자 등 4.6백만명에게 293천톤의 식량을 지원했으나(기아인구 6.5백만, 필요식량 504천톤) 북한은 단발적인 식량원조와 그에 따른 국제기구의 사찰 등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중장기 기아대책 지원이 아니면 2005년말까지 WFP의 긴급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WFP는 관련 사찰과 영양강화식품(enriched food)을 생산하던 19개 공장을 폐쇄하고 5개의 지방사무소를 철수하였다. 아울러 북한당국의 중장기 프로젝트 요구와 긴급식량지원 필요성을 절충하여 2006년 2월에 1.9백만명에게 150천톤의 식량이 공급되는 2년 기간의 PRRO(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첨가된 음식을 아이들과 가임기 여성에게 제공하고, 소규모 농가와 기반시설 재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WFP, 2005 연감)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은정)

제 2 편



2005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
추진기반 강화 127

제2장 2005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177

제 1 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제1절 농업·농촌 종합대책

1.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

우리 농업·농촌은 1993년도에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영세한 농업구조, 낮은 농업생산성,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 유통시설 등 농업SOC가 미약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1992~2002년 기간 중 82조원(지방비 10, 자부담 10 포함)을 투융자하여 농업 SOC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간의 투융자로 생산기반정비 등 농업 SOC는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입각, 농업·농촌이 FTA, DDA 협상, 쌀 협상 등에 따른 개방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04년 부터 2013년까지의 새로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종합대책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농업·농촌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1년 이후 준비해 온 새로운 비전 작업과 2002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바탕으로 2003.5 농정기획단, 2003.8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하고, 9개분야 180여개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의견조정(12차례)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발표(2003. 11. 11, 농업인의 날)하였다.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시장·군수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조합장 설명회, 지역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 농업인, 공무원, 지역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고, 농업·농촌기본법 상의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새로운 종합대책에 포함된 농정 9대 혁신과제로는

첫째, 우리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쌀산업은 2010년까지 6ha규모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원예 산업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갖는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축산업은 우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셋째,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의 소득원을 확충하고, 재해나 가격하락 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농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하며,

다섯째,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영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지원방식 등을 정비하고,

여섯째, 과학영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일곱째, 품질 고급화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세척·선별·포장·가공 등 고품질 상품화 시설을 확충하며, IT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고, 농식품 수출을 50억불 달성(2013년 기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여덟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아홉째, 농촌은 어메니티를 갖춘 살기 좋은 농촌 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마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거점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규제 완화 등으로 농

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은 그간의 농업·농촌 투융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하고, 농업구조조정 및 소득·경영안정 지원분야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부채 유발을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총 투융자 규모는 향후 10년간(2004~2013) 119조원 수준이며, 전반기 5년간의 투융자 소요 51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하였다.

<표 2-1-1> 총투융자 규모 (단위 : 십억원, %)

구 분	합 계	2004~2008	%	2009~2013	%
○ 보 조	89,237	37,112	73.5	52,126	75.8
○ 융 자	30,053	13,402	26.5	16,651	24.2
합 계	119,290	50,514	100.0	68,777	100.0
지 방 비	16,632	6,599		10,033	
자 부 담	6,218	3,254		2,964	

* 자료 : 농림부 구조정책과

<표 2-1-2> 분야별 투융자 규모 (단위 : 십억원, %)

분 야 별	2003	%	2008	%	2013	%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1,923	24.8	3,114	28.5	4,792	32.2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594	20.7	2,852	26.2	4,467	30.0
※ 직접지불 사업	722	9.4	2,472	22.6	3,411	22.9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4	8.6	1,573	14.4	2,556	17.2
○ 농산물 유통혁신	518	6.7	1,018	9.3	952	6.4
○ 산림자원 육성	503	6.5	658	6.0	809	5.4
○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4	32.6	1,705	15.7	1,316	8.8
합 계	7,705	100.0	10,920	100.0	14,891	100.0

* 자료 : 농림부 구조정책과

이러한 종합대책의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세부추진계획을 2004년 6월부터 11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 마련하였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기본계획 수립시 중장기 농정방향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기본계획을 현장에서 구체화해 나감에 있어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다.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농업인이 직접 농업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참여농정, 현장농정의 원칙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농업인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세부추진계획중 품목별 대책은 쌀전업농중앙회, 한우협회 등 28개 주요 품목단체가 주관이 되어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시책 및 사업은 농지제도 자문단, 지역농업 활성화 대책반 등 17개 전문가 위원회 및 관련 대책반의 활동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한우협회는 축산농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공청회를 3회 개최하였고, 원예분야는 농협중앙회 주관의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등 농업관련기관의 의견은 전문가 워크샵(10월15일~16일)을 통한 종합토론을 거쳐서 정책방향 및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의견수렴결과 세부추진계획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의 대상을 도서지역까지 확대 추진
- 둘째,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2009년으로 2년 연기하여 시행여건 조성
- 셋째, 유리온실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에너지절감시설 구축을 지원
- 넷째, 지역클러스터 방식에 의한 시설원예 수출거점 육성 지원
- 다섯째, 이력추적시스템을 당초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 양계산물 등으로 확대 추진
- 여섯째, 국가재보험 재원마련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계획을 수정, 보완
- 일곱째,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 직불제로 개편하여 단가를 인상
- 여덟째, 산지유통센터 평가를 2005년부터 컨설팅 업체가 평가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보완 및 구조조정 추진

이러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이 2013년까지 원활히 추진될 경우 농업은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되고, 농업인은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도·농상생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종합대책 조정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의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

2. 농업·농촌종합대책 평가·조정

가. 총괄

2005년 실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와 농업인단체는 정부가 농업·농촌 대책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농림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점검·조정하여 단기 보완대책은 2006년 2월까지, 농업·농촌종합대책 3년주기 정기점검 일정에 따른 중장기 보완대책은 2006년말까지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조정방향, 추진체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2월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농림부내 실무 T/F를 구성하였다.

나. 단기 보완대책 추진

먼저, 단기보완대책은 실희협상결과 비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희대책 등 단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실희협상결과 비준 과정에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의 세부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지난해 개편한 시장지향적 양정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제도변경에 따른 시장반응을 반영하여 양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리고 가속화되는 시장개방 여건하에서 과수산업,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실희협상결과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농업계에 약속한 공

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지원, 농업기반시설 지원확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쌀 자조금 근거 법률 제정, 찌쌀 등 불법 수입·유통쌀 단속 강화,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01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밭농업직불제 도입, 농지은행제 조기 도입,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확대, 농업통상시스템 개선, 과수산업 종합대책 마련, 식품산업 발전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의 18개 과제 추가지원 대책은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되거나 이행되고 있었다.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방안, 민간 유통활성화 및 쌀수급관리 대책 추진, 품질고급화·브랜드 및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양정제도 보완 및 개선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고품질·안전 과실생산기반 구축, 품목조직육성 및 산지유통체계 개선, 안전성 관리 강화,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과실 소비촉진,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보완 등을 추진하는 과수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우수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 축산물 품질고급화 추진, 생산에서 유통까지 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가축질병 예방,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축산업 보완대책 등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기보완대책은 농림부 장관과 17개 주요 농업인단체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2005년 12월9일 개최하여 종합대책 점검작업의 취지와 일정에 대해 농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작하였고, 농림부와 주요 농업인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6개반 분야별(농정, 통상, 식량, 유통, 축산, 농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업계, 지자체 등에서 제안한 155개 과제를 제안 받아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을 총 27회 운영하면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예산소요, 제도개선 과제 중심으로 관계부처협의회를 통해 과제 수용여부,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시 약속한 18개 과제 이행상황과 쌀·과수·축산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3년주기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평가계획과 함께 2006년 2월 28일 국회에 문서로 보고하였다.

제2절 2005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2005년도 농림예산은 대외적으로는 FTA, DDA, 쌀재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추세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농산물 가격불안정, 잦은 재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지역 복지여건 낙후 등 어려운 상황의 인식하에 농업·농촌종합대책 실천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0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개발 관련 보조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고 새로운 농정수요에 부응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16개)하는 등 농림부문 총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4.7% 증가한 9조 8,414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복지 및 지역개발, 개방에 대비한 농업 체질강화 부문의 예산을 2004년에 대비하여 확대(30,609억원→38,851, 증 26.9%)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 양곡수급안정, 채무상환예산은 축소(32,702억원→31,582, △3.4%) 편성하였다.

농림부문 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 및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도 예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FTA·DDA 농업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의 핵심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불제 관련 예산의 확대이다. 쌀협상에 따른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등 직불 관련 예산을 2004년 7,720억원에서 2005년 8,938억원으로 15.8% 확대하였다.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 쌀 전업농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량을 확대하고, 2004년에 도입한 친환경축산직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사업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2005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경관자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농가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보험 가입증가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출연금을 반영하였으며(448억원→535),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량을 확대(697천건→768)하고 지원단을 현실화(26,400원→28,100)하였다.

농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기존 정책자금 금리인하(4%→1.5)와 상환연기(5년거치 15년상환), 2001년 부채대책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3), 2000~2003년 신규대출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8%→5) 등에 필요한 이차보전 예산 8,217억원을 계상하였다.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농정방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인의 교육·의료 등 복지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예산을 2004년 2,445억원에서 2005년 4,613억원으로 88.7%를 확대 편성하였다.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2004년 30%에서 40%로 하고, 영유아(0~5세)에 대한 양육비 지원대상을 1.5ha에서 2ha미만 농가까지 확대하였으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마을종합개발은 개발계획 수립비를 증액(480억원→645)하고 사업량을 16권역에서 35권역으로 확대하는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적극 반영하였다.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원칙 하에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2,701억원→3,153, 증 16.7%) 편성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증가추세를 감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면적을 확대하고 10ha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에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모형개발비 소요 4억원을 신규로 지원하였다. 또한 원예작물의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방제사업도 신규 도입하여 12억원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본격

추진(4억원→26)하였으며 축산분뇨 자원화 및 가축질병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시행중인 지구 마무리를 위한 필수소요 위주로 반영하고 신규착수를 최소화하되, 안전관리 · 재해예방 관련 소요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표 2-1-3> 2005년 농림예산 기능별 · 재원별 규모(2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4예산 (A)	2005예산 (B)	증△감 (B-A)	%
일 반 지 출	I. 주요 사업비	73,441	80,982	7,541	10.3
	1. 생산기반조성	15,714	15,073	△641	△4.1
	2. 생산및유통개선	5,313	4,422	△891	△16.8
	3.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5,783	6,415	632	10.9
	4.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22,509	30,850	8,341	37.1
	5. 양곡수급안정	14,705	14,412	△293	△2.0
	6. 산림	7,134	7,713	579	8.1
	7. 채무상환	2,283	2,097	△186	△8.1
	II. 기본경비	3,948	4,177	229	5.8
	일 반 지 출 계	77,389	85,159	7,770	10.0
기 금 전 출 금	16,568	13,255	△3,313	△20.0	
순 계	93,957	98,414	4,457	4.7	

(재정팀 사무관 이정형)

2. 농특세 연장 추진

UR협상으로 인한 농 · 어업부문의 피해경감을 위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농어촌특별세는 지난 10년간 15조원을 농어촌에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생활여건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DDA협상, FTA 확산으로 농업 · 농촌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다소 미흡했던 복지 · 교육 및 지역개발분야에 집중투자하여 농업인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공감대가 전국민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 2004년도 만료되는 농특세를 2014년까지 연장 조치하여 향후 10년간 농업인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분야에 20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업·농촌 발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표 2-1-4> 2005~2014년 농특세 사업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 소 요	%	비 고
합 계		200,100	100	
농어업인복지증진사업	소 계	93,151	46.6	
	○농어업인 연금	11,02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1,470		
	○농어촌의료서비스	4,94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	13,000		
	○농업인 재해공제 및 보험	11,762		
	○영유아자녀 양육비	2,595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어가도우미	1,428		
	○농어촌복지여건개선 등	26,920		· 위원회 인정사업 : 5,000
농어촌교육사업	소 계	30,929	15.4	
	○농어촌학생급식비 및 학자금	4,522		
	○농어촌교육여건개선	24,000		· 위원회 인정사업 : 24,000
	○농어업인 직업훈련	140		
	○농림수산계학교지원	1,367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900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소 계	76,020	38.0	
	○농촌마을종합개발	50,340		
	○녹색농촌체험활동	840		
	○농공단지조성	4,100		
	○조건불리 직접지원	8,640		
	○어촌종합개발 및 국고여객선건조	3,670		
	○산촌종합개발	2,733		
	○지역개발관련 인프라구축 등	5,697		· 위원회 인정사업 : 5,000

제3절 농림사업 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 농업·농촌 투융자 현황

2005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 시행 2년차로서 '05년 투융자규모를 9조 7,354억원(국고예산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9조 37억원으로 예산 대비 일부 미달(92.5%) 집행되었다.

<표 2-1-5> 2005년도 투융자 계획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계획(예산)(A)	실 적(B)	B-A	대비(B/A)
국 고	97,354	90,037	△7,317	92.5
(보 조)	(69,359)	(65,021)	(△4,338)	(93.7)
(융 자)	(27,995)	(25,016)	(△2,979)	(89.4)

분야별로는 국고투융자 9조 37억원 중 영농규모화 촉진, 전문농업인 육성 등 농업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분야에 2조 9,240억원(32.5%),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농외소득 증대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분야에 1조 8,668억원(20.7%), 농촌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지역 개발 등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분야에 9,137억원(10.1%), 농산물 유통혁신 분야에 7,994억원(8.9%), 산림자원 육성 분야에 6,567억원(7.3%), 농업기계화를 포함한 농업 생산기반 정비 분야에 1조 8,431억원(20.5%)이 집행되었다.

분야별 투융자실적 및 계획대비 실적미달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1-6> 2005년도 국고투융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단위 : 억원, %)

분야(기능)별	계획(예산)(A)	실적(B)	대비(B/A)	비 중
합 계	97,354	90,037	92.5	100.0
□ 농업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	29,098	29,240	100.5	32.5
○ 영농규모화 촉진	5,056	4,990	100.0	
○ 친환경농업 지원	1,209	1,185	98.7	
○ 농산물상품가치 및 안전성 제고	1,151	1,040	90.4	
○ 전문농업인 육성	1,098	1,087	99.0	
○ 농립업 기술개발 보급	3,814	3,836	97.7	
○ 원예 및 축산업 선진화	4,647	4,256	100.6	
○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11,511	12,234	106.3	
○ 지역농업 육성지원	612	612	100.0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24,178	18,668	77.2	20.7
○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23,610	18,160	76.9	
○ 농외소득 증대	568	508	89.4	
□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9,745	9,137	93.8	10.1
○ 농촌사회 안정망 확충	1,663	1,661	99.9	
○ 교육 및 기초복지인프라 구축	1,347	1,140	84.6	
○ 농촌지역 개발	6,735	6,336	94.0	
□ 농산물 유통혁신	7,928	7,994	100.8	8.9
□ 산림자원 육성	6,627	6,567	99.1	7.3
□ 농업생산기반 정비	19,778	18,431	93.2	20.5
○ 농업생산기반 정비	18,241	17,747	97.3	
○ 농업기계화 지원	1,537	684	44.5	

<표 2-1-7> 2005년도 계획대비 실적미달 주요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119조계획 (A)	'05예산 (B)	'05실적 (C)	C-A	C-B
친환경축산직불제	239	58	44	△195	△14
친환경농업직불제	228	69	82	△146	13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175	75	6	△169	△69
우수농산물관리제도운영	218	26	26	△192	-
마늘경쟁력제고	196	77	52	△144	△25
과수구조조정(폐원작업비지원)	400	50	47	△353	△3
사료제조시설지원	210	219	12	△198	△207
축산업등록지원	130	143	25	△105	△118
쌀소득보전직불	973	1,376	29	△944	△1,3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460	107	42	△418	△65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1,200	666	666	△534	-
농어촌교육여건개선	1,000	100	100	△900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450	127	127	△323	-
농촌마을종합개발	2,178	645	668	△1,510	23
미곡종합처리장증설	220	93	93	△127	-
축산물가공시설지원	658	273	276	△382	3
농기계구입지원(농협자금)	2,000	1,000	150	△1,850	△850
계	10,935	5,104	2,445	△8,490	△2,659

실적이 계획에 미달한 주요이유는 i)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감소 ii)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소득변동직불의 '06년으로의 이월지급 iii) 송아지안정사업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19조 투융자 사업은 3년 단위로 종합평가(중간점검)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06년도에 현재 농업·농촌종합팀을 구성하여 연도별 사업별 투융자 계획 조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평가팀 사무관 김상경)

2. 농업투융자 사업의 평가 실시

가.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자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마련한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04.4월) 및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편”(’04.12월) 내용에 따라 2004년도에 추진한 주요 135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2005년도에 실시하였다.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별로 사업수행 당해년도에 평가지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익년도에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조직목표,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상충성, 목표달성도, 프로세스(의견수렴, 현장점검, 정책홍보 등)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예산편성방향은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통합, 감액, 폐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 사업지침의 수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i)농작물 재해보험, 영농 규모화, 가축 방역사업 등 88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ii)축산물 도축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iii)송아지생산기지조성 등 14개 사업은 신규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며, iv)농축산경영자금 등 9개 사업은 예산을 감액 편성하기로 하였다.

<표 2-1-8> 2004년도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 요약

분류	대상사업
증액 또는 현수준유지 (88)	영농규모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농기계 구입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가축방역, 농작물재해보험, 농림기술개발 등
통합 (24 → 8)	① 정보통신환경, 출하지원시스템 ② 산지전문조직지원, 산지일반조직육성, 채소수급안정(2), 과실출하약정 ③ 민간수매(2), 시장출하촉진, 우수농산물(2), 직거래매취 ④ 물류표준화, 물류기기공동이용 ⑤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지원, 축산물 도축·가공시설운영자금 지원 ⑥ 가축계열화(2), 산지축산물 생산유통, 판매시설현대화 ⑦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 도농교류센터 * 농기계보관창고는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중단·폐지 (14)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마늘작목전환, 마늘농가경영안정, 화훼수출단지조성김치종합센터, 통합쇼핑몰 운영,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유기축산시범사업, 사료검사장비지원, 축산물자율수급조절, 송아지생산기지조성, 유희지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 대규모용수개발
감액 (9)	농축산경영자금, 지역특화사업, 마늘기계화, 소규모 물류시설, 표준규격 공동출하, 시설현대화, 축산업등록지원, 식육전문처리인력 육성

(재정평가팀 사무관 김상경)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농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도 자체평가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쌀 산업의 체질강화” 등 6개 과제를 선정,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다.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의 외부전문가 38명을 위원으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특히 소비자단체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6월에는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농촌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2005년도에는 시행계획과 자체평가결과 심의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해당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였다.

(재정평가팀 토목사무관 강경만)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농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시상금)을 지급하고 유공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 평가는 정부의 정책을 직접 집행·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정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토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농정업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농정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2005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15개), 농업분야에 대한 임의 지방비 투입실적, 재해대책시설물 등 투자시설 사후관리,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수출촉진·농업정보화·가축방역·고품질쌀 생산·농촌관광 및 지역개발·농촌교육 및 복지 개선·사이버농정홍보교육·농정홍보 추진 등 중점농정시책 추진노력, 차별화 시책 및 농정 현안 대처 노력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면평가와 함께 지자체간에 관련 공무원들이 상호교차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농정업무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70백만원의 시상금과 정부포상 등을 실시하였다.

2005년도 농정업무 평가는 평가항목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배점비율을 재조정하고 지자체가 직접집행하는 재정사업으로 평가대상 사업을 축소(20개

→15)하는 한편, 영농현장에서의 홍보능력 배양을 위해 ‘사이버 농정홍보 교육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농식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유도를 위해 ‘농식품소비촉진 홍보실적’을 기존 평가항목의 지표로 추가하였다. 또한 차별성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 선정되는 우수 지자체 수를 조정(5개도→3)하고 지자체의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지 확인조사 대상 시군을 축소(21개시군→17)하는 등 농정여건 변화에 맞게 평가지침을 개선·보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119조 투융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농정평가항목과 지표, 기준 등은 변화하는 농정 여건에 맞도록 평가체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평가팀 행정사무관 이장의)

3. 농림사업의 투융자 방식 개선

가.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 및 그간 추진되어온 평가체계 개선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반영하여 평가근거규정인 “농림업무평가규정”(농림부훈령)을 전면개정('05.2.7) 하였다.

이는 그동안 심사평가, 정기평가, 경영체평가, 집중평가 등으로 세분화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를 성과평가와 집중평가로 단순화하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등에 평가결과의 환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과평가

사업부서 자체평가와 평가부서 총괄평가로 이루어지며 i)사업부서 자체평가는 실·국에서 스스로 사업의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되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평가부서와 협의하여 설정한다. ii) 평가부서(재정평가팀)는 실국의 자체평가를 기초로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총괄평가를 통해 부문별 투융자 우선순위, 단위사업의 통폐합 필요성 및 사업별 예산 편성방향을 제시하고, 평가결과는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2) 집중평가

주요정책,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정책, 문제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부서에서 내부 집중평가를 실시하여 목표달성도 등 정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외부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한다.

(3) 평가결과의 환류

예산측면에서는 “증액 또는 현수준유지”, “삭감”, “통합” “폐지(즉시폐지, 단계적폐지)” 등으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개인성과 측면에서는 근무평정 및 성과급지급에 반영토록하고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도 활용토록 한다 (단계적 제도 개선 반영사항).

(4)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개편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를 내부·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결과 최종심의기구로 개편하고, 여기에서 투융자관리계획서, 성과평가 및 외부집중평가, 국무조정실 기관평가를 최종심의 한다.

(재정평가팀 사무관 김상경)

나.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보완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소관 농림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보완

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과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림 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등에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2006년도 농림사업 실시규정 주요 골자

(가)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를 정형화·공개화하여 투명성 확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과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후관리 절차와 원칙을 제시하고, 대상자 선정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2006. 5월부터는 농림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고자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사업검색과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자조역량 향상
선택할 수 있는 농림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은 연중사업을 구상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농정위원회가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하였다.

(다)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농업인등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기록하여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장부 기록자와 경영교육 이수자는 심사시 우선순위를 주어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라) 사업부실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 공개, 종합자금 지원 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원시설 관리책임자 지정, 농림부·농진청의 사업부서 내 관리카드 비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2)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보완 내용

(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쌀 시장 개방 확대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쌀농가의 영농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자금의 융자금리를 연 3%에서 2%로 1%p 인하하였고, 기타 농림사업의 융자금리도 2006.1.1부터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은 3%, 농산물 가공사업자 등 비농업인은 4%로 일괄인하 하였다.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개발 된 주아 씨마늘 수확기를 지원대상농기계에 포함하고, 신규 과원 조성시 전국조직 선도회원의 과원규모화는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영농규모화 촉진 및 정예농 육성을 지원하였다.

(나) 전문마케팅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방안 모색

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방법을 구체화하여 공동마케팅 조직 명의 출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보다 10%를 가산하여 우대하였다.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포장재 제작협의 생략 범위 확대, 지원비율을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였다. '04농림사업총괄평가를 반영하여 산지유통조직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규모화·광역화·기업화된 산지 마케팅혁신 주체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무이자 자금지원 인정, 예외조항 강화 등 유통환경변화에 맞춰 제도개선을 하였다.

(다) 농업인의 농림사업 경영의 자율성·책임성 증대

농축산물 자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1%이내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주체가 중심이 되어 일괄자재구입 및 입찰이 가능토록하고,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공정이 간단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없는 경우 개별시공이 가능토록 하였다.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등으로 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한우고기의 품질이 우수해짐에 따라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07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은 농가실정을 감안하여 지원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적기 자금조달 및 농업인의 대출 편의를 제고하였다. 특히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 인력의 신규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평점 가산점 확대, 농신보 신용대출 활성화, 토지구입자금 지원단가 인상 등 지원조건을 우대하였다.

(라) 환경친화적 농업의 지속적 확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서 기술지도 및 교육 훈련장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지원대상 작목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 4개에서 오이, 메론, 포도를 추가하여 7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초지조성 및 보완비용 중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을 제외하고,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사료공장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 BSE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업체, 사료원료의 자체확보계획 수립 및 공동구매계약 체결업체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였다. 가축분뇨처리 시 액비 살포비 지원대상에 축분비료유통센터, 액비살포 민간전문업체 포함시키는 등 액비살포비 지원을 강화하여 액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마) 축산물 안정성 및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 제고

축산업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에 한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서는 등록대상 중 미등록한 농가는 '06년부터 신규가입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도축장 시설자금 지원대상을 종전의 HACCP지정 도축장에서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 이상으로 위생수준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도축장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하여 부루세라 방역 우수지자체 등 30개소(시·군 27개소, 한우협회지부 3)를 선정하여 방역 특별포상을 실시하고, 신규로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등 가축방역을 강화하였다.

(재정평가팀 기술서기관 손영규)

제4절 농림행정 쇄신·조직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1. 농림행정 규제완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8.3.1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4.18.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 대통령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시 규제신설 강화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규제사항 남발을 사전에 강력히 억제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참여정부에 들어서 2004.8.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기획단설립하고 기존 규제를 전면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규제수를 대폭 감축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농림분야 행정규제는 2005년 말 현재 515개이며, 분야별로는 국내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상 위생관리 등 공중위생과 보건에 관한 규제와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 기타 농약생산·안전관리, 유해식물의 국내유입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분야 및 식량농자재 분야,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분야 등의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국민경제 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시장진입 등을 제한하는 규제와는 직접 관련성은 적은편이다.

2005년도에 농림부는 농림행정의 효율성 증대 도모 및 일반국민의 농업투자 확대 여건조성 등을 위한 규제정비에 주력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축산분야에서와 같이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의 수요증대로 규제강화가 불가피한 추세에 부응하면서도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지도를 통한 규제품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규제정비를 추진하였다.

2005년도 규제정비 주요추진 내용을 보면 규제기획단에서 과제를 선정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 8건, 기업행정조사 절차 개선 10건, 신기술·신제품 관련규제 14건 등 모두 42건의 전략과제에 대한 규제정비를 하였고, 농림부 자체적으로 발굴한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허용기준 완화 등 농지

법 관련 규제 16건, 초지부실관리 시정지시 등 초지법 관련 규제 2건 등 모두 31건에 대한 개별규제를 정비하였으며,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행정법무팀 서기관 황인용)

2. 농정조직의 개편

가. 주요 추진내용

(1) 실무공무원 직급상향 조정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등

중앙부처의 주요 기능이 집행업무에서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이동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정책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실무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는 6급 이하 정원의 10%인 11인을 5급으로, 소속기관은 7급 정원의 5%인 21인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하였다.

해외 악성가축질병과 수입식물의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 검역인력 2인을 증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에 각 5급 1] 하였다.

한편, 부처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전문교육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의 농업연수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받아 농업연수원으로 개칭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강화를 위해 3인(4급 1, 5급 1, 6급 1)을 증원하였다, 아울러 혁신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담당인력 1인(5급 1)을 증원하였고,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 1인(기록물연구사)을 증원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641호, 2005. 1. 1, 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85호, 2005. 1. 1, 농림부령 제1488호, 2005. 3. 2)>

(2)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단행

쌀 재협상 이후 쌀 농가 소득보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농가소득 안정추진단」을 설치하고, 거대경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 협상을 전담할 「자유무역협정(FTA)과」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분야에 과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 기관직제증개정령(대통령령 제18789호, 2005. 4. 15, 대통령령 제18858호, 2005. 6. 8),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91호, 2005. 4. 15, 농림부령 제1502호, 2005. 7. 1)>

첫째, 쌀소득보전기금법 제정·시행과 쌀 재협상 이후 쌀농가소득보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식량정책국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소득정책과 및 소득관리과를 신설하였다.

둘째, FTA가 WTO와 함께 세계교역 질서를 형성하는 축으로 부상하고 20여 개국과의 FTA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FTA 농업협상을 전담할 「자유무역협정(FTA)과」를 신설하였다.

셋째, 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정책홍보관리실과 홍보관리관으로 각각 변경하고 □□정책홍보팀, □□정보상황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2·3급)하고 1인을 증원하였으며, 부내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기획팀」을 신설 하였다.

넷째, 직렬구분없이 능력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등용될수 있도록 과장급 직위를 복수직렬화하였다. 본부의 과장급 행정단수 직위(감사담당관 등 8개 직위)를 행정·농업 복수직위로 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서무과장 등 3개 직위), 국립종자관리소(관리과장 등 6개 직위), 농업연수원(5급 행정 1인, 농업 1인) 관련 직위도 복수직렬화 하였다.

(3) 고객 서비스 강화 및 해외 동식물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인력 보강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의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동·축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경 검역기능의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동 분야에서 농업인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출장소를 증설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선기관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해 10개 출장소를 증설
- 남북육로 개설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2인을 증원

(4)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

2001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온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가 그 동안 운영성과를 감안,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화를 요청한 국립종자관리소를 새로 지정하였음<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9230호, 2005. 12. 30),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10호, 2006. 1. 1)>

(5)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06년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지난해 추진된 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 농가소득안전추진단 신설·자유무역협정과 신설 등 '05년도 수시직제 반영분야, 농지은행제도 등 법령의 체계정으로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 품질 및 안전성·농축산물검역 검사·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06년도 농림부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농가소득안전추진단·자유무역협정과 실무인력, 농지은행제도 운영 인력, GAP·Traceability 관리 실무인력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안전성 조사과 신설·운영인력,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리인력, 출장소 분리 증설 등
- 농업연수원 : 연수부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청사방호인력 등
- 종자관리소 :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재배시험 및 특수검정 인력, 보급종 및 품종보호 관리인력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축산물위생감시과·인수공통전염병과 신설·운영인력, 검역탐지전센터 운영인력, 인천공항 검역인력, 조류인플루엔자·브루세라·수퍼박테리아 연구 인력 등
- 국립식물검역소 :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목재포장재 검역인력, 인천공항 CIQ인력 등

(6) 농림부 2006년 직제개편 추진 계획

지난해 실시된 진단변화관리 프로젝트와 최근 각 부처에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팀제·총액인건비제도 등 각종 조직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농림가 설정한 비전, 미션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규억)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정부는 쌀협상 이후 변화되는 시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장확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등 농업인 및 소비자 등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2005년중 모두 10개의 농림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로 쌀수입이 증가하고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일정한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의 양과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등 양곡과 관련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등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미곡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양곡유통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양곡의 표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는 정부가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였고, 현재는 정부가 매입양곡의 매입량 및 매입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하도록 하고, 공공비축미곡의 매입·판매가격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매입·판매지역에서의 시장가격으로 하였으며, 종전에는 농림부장관의 명령으로 양곡매매업자에게만 양곡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양곡가공업자에게도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제와 포상금제를 도입하였다(공포 2005.3.31, 시행 2005.7.1).

나.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 쌀수입증가로 인하여 쌀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쌀가격의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제도와 쌀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으며, 쌀소득보전금제

도와 논농업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쌀가격의 하락과 관계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매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의 쌀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고정하고, 3년 단위로 변경하며, 농림부장관이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종전에는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던 것을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농업인들에게 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이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가격 차이의 100분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과 농업인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공포 2005.3.31, 시행 2005.7.1).

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맞게 농산물을 관리하도록 하며, 일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농림부장

관에게 등록한 후 당해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이력추적관리를 하는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위표시 등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위반농산물 등의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포 2005.8.4, 시행 2006.1.1).

(행정법무팀 사무관 박은엽)

제5절 농업관련기관 개혁

1. 농업협동조합

가. 농협의 자율개혁 추진

농협중앙회는 DDA 및 FTA 협상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조합의 완전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농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외개혁과제』 마련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각 사업부문별 소이사회제도 및 전무이사제를 도입하였고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여 대표이사 인사권을 강화하였으며, 일선조합의 상임조합장·상임이사, 전무 연봉제 등 임직원의 인사·급여제도도 대폭 개선하여 전무임기제(2년)를 도입한 조합은 '05년말 기준으로 전체 조합의 76%에 이르고 조합장·상임이사·전무 등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연봉제를 도입한 조합은 전체

조합의 91.2%인 1,161개 조합이다.

조합 자금지원체계를 농산물 유통과 농업인 실익사업 등 사업활성화 위주의 지원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농업인 실익사업 확대 지원을 위해 영농자재 무상지원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인하한 조합에 대해서는 05년 1조 8,000억 원을 지원해 전체 조합의 81%인 1,073개 조합이 혜택을 보았으며, 07년까지 3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합 임원의 경영능력 향상은 물론 조합원의 주인의식 함양 등 농협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05년 4월 농협중앙회에 비상설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니즈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전략을 수립중에 있으며, 정부는 매 분기별 중앙회 자체 개혁과제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농협개혁이 지속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내자본금 확충 등 일부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여 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은 제2의 창업차원에서 '04년 9월 자체 경영혁신을 주장하며 추진한 □□새농촌·새농협운동□□을 전사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도시농협의 판매사업 확대를 위해 300평이상 대형매장을 '04년 100개에서 '05년 125개로 늘렸고 '07년까지 모두 200개로 늘리는 등 소비자 판매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일부 계열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고정투자 등으로 자체 경영개선을 추진하였고, 남해화학에 대한 인력구조조정(146명 감축)을 실시하여 연간 115억원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식당, 조정 등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자율개혁에 이어 '05년 12월 도매유통기능 확충 등 경제사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대대적인 '06년도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주요개편안은 농산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확보 하고 자금과 인력 등 중앙회 전 역량을 농산물 도매마케팅에 집중 투입방안 마련 등 농산물 도매

사업 기능을 확충하였고, 주요농산물을 전국단위로 통합 구매함으로써 산지 유통 개혁을 주도하고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과 군납사업, 학교급식 등 식재료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계육과 육가공분사를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명을 띤 “목우촌분사”로 통합하고 2006년중에 자회사를 추진하여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직급중심의 다계층 인력구조를 전격 파괴하여 결재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통해 감축한 본부부서의 인력은 일선 영업점 및 경제사업 부문에 재배치하는 등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용 기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산물 유통시장을 선도하고 성과와 효율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농협개혁을 위한 자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중에 있다.

나. 농협법 개정 등 제도개선

협동조합의 선거가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첫째, 선거인 개념을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 포함)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물품·향응·제공 금지대상을 확대하여 조합원, 조합원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법인·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처벌기준도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공선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부행위를 제한하되, 조합의 사적자치 단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부행위 금지예외 수준을 결정하였고,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임기만료일 180일전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기부행위 위반자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였고, 기부를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5천만원 상한)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농림부장관 또는 시·군·구 선관위가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개혁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개정된 농협법('04.12.31, 공포,

'05.7.1)의 시행에 차질 없게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첫째, 현재의 1조합 1표 방식의 중앙회 총회의결권은 조합별로 조합원수에 큰 편차가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조합별로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을 두도록 하여 회장선거를 제외한 총회와 대의원을 선출할 때 조합별 의결권은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조합원 수 기준에 따라 2,000명미만은 1표, 2,000명 이상 3,000명미만 2표, 3,000명 이상 3표까지로 각각 차등 부여하였다.

둘째, 조합의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상임이사 도입조합 범위를 자산 2,000억원이상으로 규정('07.7.1부터는 1,500억원이상)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수감 조합(4년에 1회)의 범위를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일선조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기준 중 출자금 납입확약 총액을 5천만원이상으로 하여 조합의 연합자회사로서 자유스럽게 설립하여 경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 품목조합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여, 출자금 확대를 통해 조합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의 실익을 제고하였다.

다.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전년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21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신규 결정하고 경영개선조치 권고·요구를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4년도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이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부과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도 26개 조합에 총 818억원(출연 126억원, 대출 69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재무구조개선을 추진중인 4개의 조합에 124억원을 3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였고, 16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114억원과 대출 56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6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12억원을 출연하였다. 이들 조합에 대출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도 중에 5차례에 걸쳐 692억원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5년도에도 9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으며 13개 조합은 정리 중에 있다. 또한 11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다.

2005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조합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 구조개선의 노력으로, 적자규모가 25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4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조합의 당]기순이익 또한 8,47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76억원이 증가하였다. 다만, 적자조합은 전년에 비해 5개 조합이 늘어난 32개 조합이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실적은 27조 2,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0.04%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108조 3,306억원으로 전년 대비 0.62% 성장하였고, 상호금융 대출도 84조 1,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9% 성장하였다.

(협동조합과 사무관 배종혁, 박순연)

2. 한국농촌공사

가. 공사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로 새롭게 출범

한국농촌공사는 개방화에 따른 농업·농촌·농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해 농촌지역개발 등 농업·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일류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5년 12월29일 공사법을 개정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공사 명칭변경으로 생산기반정비 전담기관으로서의 기존 역할을 착실히 수행함은 물론 농지은행 및 농촌지역개발, 도농교류활성화 등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체로서 대내외적으로 공사의 역할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정립된 공사의 기능 및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달성방법을 구체화하고자, 신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추진조직을 정비하여 농지수탁관리팀과 경영회생지원팀을 신설하고, 정부의 농산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추진에 따른 총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도농복합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사업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농지법”, “공사법”, “농지은행사업지침”에 농지은행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은행사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촌지역개발분야의 블루오션형 신규사업 모델 발굴(테마클러스트형 농촌지역개발, 농촌지역개발인력 육성사업, 시니어 콤플렉스 사업)과 신규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듯 한국농촌공사의 사업도메인은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중심의 사업기능에서 농산어촌 전체를 디자인하고 개발·사후컨설팅까지 수행하는 기능으로 확대되었고, 전국 농산어촌지역 약830만ha(전국토의 83%)를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한국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류 공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나. 상시경영혁신체계 구축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한국농촌공사는 □□고객·환경·기술□□의 무한한 가치창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상시경영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였다. 팀제 전면 도입시행('051.1)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위공모, 여성보직자 발탁, 전환·배치기준 제정시행 등 조직역량 배가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인사권, 계약·구매, 예산 운용권, 조직개폐권 등 하부위임을 통해 권한위임에 의한 성과와 업적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 조직 개개인의 역량 결집과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위해 1부서 1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분기별로 혁신우수부서(스타팀) 선정하였으며, 사내 B.P(Best Practice)대회를 개최하여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전파하였으며, CEO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최고경영자의 혁신의지를 지방 현장까지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개인, 계층별 혁신수준을 진단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위기의식 및 혁신마인드를 조성하고 혁신수준상황을 상시 점검 평가하였다. 자율경영혁신 참여를 위한 “6시그마 포럼”, “공기업연구회” 등 7개의 자율학습조직을 신설하고 사이버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137개 지식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05년도 정부혁신 평가에서 혁신 5단계 인정을 받았으며,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도 7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등 품질혁신에도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대농업인 서비스 접점인 현장근무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대상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다. 깨끗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상 구현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객만족 경영풍토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

장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부투자기관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3위를 달성하였다.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독창적인 □□청렴-HACCP제도□□를 시행하여 국가 청렴위원회로부터 '05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 종합대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계약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제”를 도입·시행하여 조달청 선정 하반기 전자계약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 제도를 재정경제부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의 청렴도 측정결과 공공기관 평균대비 청렴지수의 획기적인 상승으로 9개 정부투자기관 중 3위를 달성하는 좋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또한 지난해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노사간 무교섭에 의한 임금동결을 선언하였으며, 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독거노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농촌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원희)

3.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 유통개선 및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5년 초 기능혁신방안 마련부터 조직변경까지 경영 전부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통해 비전을 재정립하고, 전면 팀제로 전환하여 역동적인 조직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통공사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과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시판용 MMA쌀 도입·판매 관리와

남북농업협력사업 및 수입정보 조사·분석 등 신규정책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생산에서부터 해외시장 진입까지 토털 패키지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통공사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2005년도에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서 55회의 판촉활동을 추진하였고, 박람회는 23회 참가하여 254백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수출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밀착형 수출컨설팅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공동대표브랜드(Whimori) 상품의 고품질화, 규격화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로 2006년 3월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김치과동으로 저하된 한국산 수출농식품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일간지, TV 등 현지 매스미디어 홍보 강화 등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수출시장 회복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도 등 9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전략적 사업제휴를 강화함으로써 통합마케팅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유통공사의 수출지원 활동은 환율하락, 유가상승, 김치과동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5년도에 농식품 수출 22억 2천 2백만불을 달성하여 3년연속 농식품 수출실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유통공사는 정부비축사업 실시기관으로서 품목별 수급조사 강화와 적기 방출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 유지에 기여하였고, 시판용 MMA 쌀 도입·판매 전담관리기관으로서 국내 쌀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수입 쌀 관리방안 사전 준비와 금년도 판매과정에서의 탄력적인 판매보완대책 추진을 통해 수입쌀의 안정적인 판매관리체제를 마련하였으며, 대북식량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5년도 50만톤의 쌀지원을 차질없이 완수하였다.

또한, 수입여건 사전조사를 통한 국영무역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과 저가수입 등 부정수입 억제를 통한 국내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유통효율성 제고 및 우리 농식품 수요창출 등 공익적·비수익적 유통조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통공사는 TV 기획물 및 어린이 대상 우리 식문화 체험행사 등 매체별·대상별 차별화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식품업체 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사이버 식품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산지유통조직 종합평가시스템을 통해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개혁을 선도할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산물 마케팅관리사 및 도매시장경영관리사 등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005년도 139명의 현장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한 GAP운영관리 등의 부문별 단기전문교육도 3,384명을 실시하는 등 농산물 유통전문인력 육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

유통공사는 이러한 외적 성과와 더불어 전사적 경영혁신 운동인 □□WAVE 2005□□를 전개하고 중장기 경영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부서 자율혁신 과제의 발굴 및 성과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상시 혁신활동의 체질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채용연령제한 완전폐지, 직위공모제 대상 확대 및 글로벌 외국어교육 강화와 어학 인재풀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직단위 및 개인별 업적의 실시간 측정, 내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폭 확대 등 성과주의 경영관리체제를 마련하고, 내부경쟁체제를 가속화 하였다.

한편, 유통공사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서 Top-down 방식의 윗물 맑기운동을 전개하고, 부패개연성의 사전 진단 및 점검을 위한 ‘청렴 이행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aT사랑나눔단’도 구성·운영하였다. 이러한 전사적인 윤리경영 노력으로 2005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정부투자기관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고객제안제도 활성화 및 고객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신속·정확한 대 고객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정책자금 용자실행제도 개선, 수출자금 지원신청서류 간소화, 비축물자 방출제도 개선 등 각종 제도개선과 고객접점서비스의 온라인화로 고객 편익 제고를 도모한 결과 국가 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년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유통공사는 이러한 내부운영시스템 개선 및 지속적인 혁신추진과 함께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마케팅 및 소비촉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화 대응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국영무역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정영환사무관)

4. 한국마사회

가. 급격한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에게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마사 진흥과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는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증대된 관심과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정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요컨대 “국민과 함께 달리는 생명과 사랑의 공익기업”이라는 미션과 “고객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사회에 최고의 가치를 주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경영전략을 추진하였다. 경영전략은 ① 한국마사회 및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시킴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상 구현, ② 경마고객 중심의 경마제도, 시설 등의 운영으로 고객 중심의 마인드로 변화함으로써 고객을 우선시하는 고객 제일주의 실현, ③ 우수 경주마 도입을 통한 경주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마의 비교우위 강화를 통한 경마의 상품성 제고, ④ 조직, 인적역량 강화 및 진취적 조직문화 창출로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영혁신과 윤리경영 실천으로 우수 공기업 위상 정립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등이며, 이러한 경영전략을 추진한 성과들은 아래와 같다.

나. 주요 경영개선 실적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국민 레저경향의 급격한 변화, 국가경제 침체, 경륜·경정·카지노 등 경쟁산업의 도전이라는 여건 하에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 등 보다 경쟁적이고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한국마사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경영 부문, 주요사업 부문 및 경영관리 부문으로 세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합경영 부문

경마산업의 규모 확대에 비례하여 사회적 순기능 강화 및 역기능 축소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고, 특히 경마 독점시대의 종료 및 경쟁산업의 신규 진입, 국민의 부정적 인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대내외 환경의 변화, 경영철학 및 국정이념 등을 반영한 중장기 비전을 새롭게 설정·제시하여 이를 공유하고,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있는 인사 임명을 위해 회장을 공개 모집하고 장관과의 경영계약 체결을 통해 책임경영을 구현하였으며, 주요 직위를 대상으로 사내 직위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고취하였고, 정기적으로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여 인사 및 복지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조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유관단체 임원과의 대화기구를 정례화하고, 경마공동체 의식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시행하여 이해 관계자간의 원활한 조정을 통한 안정적 경마시행의 기틀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UN, OECD 등 국제기구들의 윤리라운드를 통한 윤리경영의 세계표준화 도입 움직임과 부패방지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 그리고 경마시행체로서 한국마사회의 윤리경영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증대에 따라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 확산 등에

따라 윤리경영의 도입 및 그 실천·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윤리현장·윤리강령·행동강령 등 내부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준수실태 점검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전자입찰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경쟁절차 강화 및 청렴계약제 지속 시행을 통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경영진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비상임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회사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영공시의 내실화와 자발적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매출증대·비용절감·업무효율성·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경마혁신 추진단」의 설치·운영, 내부혁신대회, 혁신제안의 발굴과 시행 등 내부 혁신마인드 확산에도 노력하였다.

경기 침체와 경쟁업종의 급성장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이용 편의성 제공과 인터넷을 통한 고객 제안 시스템 운영 등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정례적(연1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으며, ‘열린 고객 참여 위원회’ 운영과 고객서비스 현장 이행 노력 등을 통해 고객 만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 주요사업 부문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속에서도 신뢰받는 기업상 구현, 고객 제일주의 실현, 경마의 상품성 제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중장기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한국마사회법 개정, 경마산업 세제개선 연구용역 추진, 지방교육세 환원 추진 등), Ucan센터 치료네트워크 확대, 인터넷을 통한 베테시스템, 新발매전산시스템의 국산화 구축완료 및 성공적 운영 등을 통해 경마의 건

전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수 마필생산·육성을 위한 씨수말 수급 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목장건설의 지속 추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여 경마산업의 토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기업의 공익기여 활동은 단순한 자선활동 혹은 비용지출에서 사회적 투자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존재가치의 부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더욱이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특별적립금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5년 한해 1,020억(축산발전기금 : 816억원, 농어촌 복지증진 등 : 268억원)에 이르는 특별적립금의 사전 심의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의 적시성과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특별적립금 출연을 통한 KRA 농촌희망재단을 설립하여 농촌과 함께하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기부금 집행에 경마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집행의 효율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KRA Angels 봉사단과 KRA Angels Fund(봉사활동기금) 운영을 통해 전사적인 봉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경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각종 교류경주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외국 경마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선진 외국 경마계와의 긴밀한 협조·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경마 각 분야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반 노력의 결과, 2005년 아시아경마회의(AR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경마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위를 선양하는데 기여하였다.

(3) 경영관리 부문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완수 요구증대, 경마매출액의 지속적 감소, 부산경남경마장 개장으로 3개 경마장 운영, 주3일 경마시행체제 돌입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정원을 산정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권한 위

임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분장 조정, 규제의 일체 정비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면평가 확대 시행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인사관리상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였고, 장애인·이공계 출신의 채용·인사상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내부업무 혁신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의 지속적 확대 노력에 따라 KRA 지식포탈 시스템(K-hub ; 전자결재, EDMS, 지식시스템),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ERP ; 인사정보, 재무회계, 관리회계, 구매조달, 설비관리 등)를 구축·운영하였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으로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내부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회장과 본부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운영하고, 내부평가에 의한 부서 간 성과급의 차등 폭을 확대하고 임원평가에 등급간 성과급 격차를 확대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는 한편, 수익성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지방교육세 환원 추진, 부산경남 경마공원 레저세 감면 추진, 경마중계망 운영 개선, 발매인력 무인화 등)을 기울였다.

(축산정책과 서기관 김정욱)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1. 농어업특위 현황

2001. 11.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출범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인, 소비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범국민적·범정부적 성격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어업특위”라한다)를 구성 운영(제정 2002. 1. 26 법률 제6336호)하고 있다.

농어업특위(제1대 위원장 : 전 농림부장관 한갑수, 제2대 위원장 : 단국대 교수 장원석, 제3대 위원장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황민영)는 국민적 합의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민·관 합동기구로서 본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사무국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제1기 농어업특위는 당초 2002. 1. 26 ~ 2004. 12.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되어, 농업·농촌 10개년 종합대책 수립과 119조원 재원 확보 등의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DDA·쌀협상 등 갈등국면과 FTA협상 등 산적한 국내외 농어업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을 보다 효율적 운영과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5. 1. 1 ~ 2007. 12. 31일까지 3년간 존속기한을 연장(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74호)하게 되었다.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 구현”이라는 비전을 두고 출발한 제2기 농어업특위 첫해인 2005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농어업특위 정책방향(road map)을 수립하고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 설정, 농어정 추진상황 점검·평가, 쌀 유통혁신 및 소비촉진방안, 농어업·농어촌 여성정책 혁신, 학교급식 개선 및 폐교활용 방안, 수산업·어촌 다원적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특별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을 중심으로 농·도 상생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농어업특위는 다양하게 제기되는 농림수산정책의 정책적·사회적 갈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할 것이다.

2. 2005년도 농어업특위 운영 현황

가. 본위원회

농어업특위는 2005년 7월 14일 청와대 세종홀에서 제1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농어업특위 평가 및 향후 운영방향」과 「농·도상생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농촌사랑운동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한 특별보고를 마친 후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농어업특위를 잘 활용하여 농어업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기를 바라며, 농어촌 정주생활공간에 대한 대책은 새로운 영역의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은퇴자뿐만 아니라 은퇴이후를 고민하는 도시민 전체의 절박한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정책이므로 농어업특위에 위원회 수준의 T/F팀과 분과위원회를 범정부적으로 구성하여 정책통합의 틀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에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제1분과위원회는 농업 및 임업경쟁력 제고,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및 수출촉진, 직접지불제 등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과 친환경농업 등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시책분야를, 제2분과위원회는 농어촌지역개발, 농외소득원 확충, 교육·문화·의료 등 농어촌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분야를, 제3분과위원회는 어업분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전망 확충분야를 다루고 있다.

제1분과는 분야별(쌀, 원예, 축산, 임업 등) 전문가로 구성된 33명의 위원이 2005. 5. 20일 제1차 회의이래 10. 18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업특위 운영평가 및 향후방향, 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방향 설정,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추진상황을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제2분과는 분야별(지역개발, 복지, 여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위원이 2005. 5. 19일 제1차 회의이래 11. 4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의 체재·정주지원 방안, 농어업특위 및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우리농산물 공급 유형 개발을 위한 2006년 학교급식 시범사업 운영방안,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추진상황을 의결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제3분과는 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학계, 관련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14명의 위원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고 어촌의 발전을 통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점검 평가」와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 국민인식 제고」 등 6개 과제를 2005년도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4회의 분과위를 개최하였다.

다.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전문가회의, 소위원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과제별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1분과는 1개 소위원회와 4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공개토론회, 실무T/F,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5회·간담회 1회·실무T/F 1회·워크숍 1회·토론회 1회를 개최하였고, 쌀 유통혁신과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쌀유통혁신협의회 5회, 친환경 농업 발전 육성정책을 위해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2회, 농업기술의 혁신을 위해 농업기술혁신협의회 1회, 농외소득 증대방안 구상을 위해 농외소득증대협의회 1회, 지식·정보화·벤처협의회 2회 등 총 11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2분과에서는 여성분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워크숍 및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어촌여성정책협의회는 「농어촌여성정책혁신방안」의 과제를 최종 심의하여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여성농업인 관점을 반영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주요 방안논의,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시안) 검토,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실태조사 등을 주제로 3차례 토의를 실시하였다.

제3분과는 심도있는 논의와 과제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점검 평가」와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 국민인식 제고」는 전문가 회의 각 1회, 기타과제로 「내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등의 과제는 전문가회의를 5회 개최하였다.

라. 지역농어업특위

지역 농어업특위는 관할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지역의 농어업·농어촌발전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기타 농어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농어정정책 수립시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5년도 지역 농어업특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주요 활동실적을 보면 지역농어업 특위 운영 활성화 도모와 지역 농어업특위간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중앙농어업특위와 합동으로 지역 농어업특위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어업 특위 평가, 향후 운영방안 및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지역 순회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구체화를 위한 지역의견 수렴 및 지역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이주·정주 촉진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 지역자체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성화 및 차별화로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중앙 농어업특위와 지역 농어업특위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농어업특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어정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특별위원회

2005년 7월 본위원회에서 보고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8월 주요 추진과제를 확정

하면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업특위 제2분과 위원장인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맡았으며, 위원은 박진도 위원장(충남대 교수), 김주숙 한신대 교수,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귀 해양수산개발원 팀장, 이희찬 세종대 교수, 임경수 (주)이장대표,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구자인 진안군청 팀장, 성여경 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 박영숙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유정규 지역재단 사무국장,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오현석 (주)지역아카데미 대표, 김성진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운천 신지식농업인회 회장, 박경 목원대 교수, 이종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윤원근 협성대 교수등 18명으로 구성되어 4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중점과제별 핵심 전문가 위주로 구성·운영되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기구로서 농어업특위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였고, 관련 위원회, 범정부 T/F팀 및 농업인·소비자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다.

한편 농어업특위 사무국장을 단장, 정책1팀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농어업특위 사무국에 두고 특별위원회 지원 및 중점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정책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부에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3. 2006년 농어업특위 운영계획

2006년도 농어업특위는 현장밀착형 대안 제시 등 정책수요자 중심의 협치 농정 구현을 위해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 구현”을 비전으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여건 조성」, 「중장기 정책방향 조정·보완」, 「농어업·농어촌 정책 점검·평가」, 「농어업 분야 사회적 통합 구현」, 「개방화 대응 수산업·어촌 대책 수립」등 5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여건 조성은 균형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세미나, 순회토론회, 홍보, 점검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도시 은퇴자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은퇴자 마을 조성방안을 마련하며,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및 농·도 상생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농어촌을 가보고 싶고 가서 살고 싶은 매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중장기 정책방향 조정·보완은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중장기 농어업정책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셋째, 농어업·농어촌 정책 점검·평가는 관계부처 자체평가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5대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여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이 정책수요자 중심의 점검·평가가 되도록하고, 농어업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농정신뢰 회복을 위한 농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협동조합 개혁 지원을 통한 자율농정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농어정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투융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넷째, 농어업분야 사회적 통합 구현을 위해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이견조정 역할 강화, WTO/DDA, FTA 등 농업통상협력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 조정, 국민과 함께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농어업·농어촌 뉴비전 선언」 제정 선포, 농어촌 노인·여성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통한 양극화 문제 해소 등 농어업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통합 구현에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개방화 대응 수산업·어촌 대책 수립으로 피해 우심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다양한 직불제 도입, 간접적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어종 및 업종별 경쟁력 실태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어업피해 지원대책 강구, 어업피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및 지원체제 개편, WTO/DDA의 협상결과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및 투융자 방향 보완,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어업

지원체제 강구로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WTO/DDA 어업협상에 대응한 어업인 지원 대책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표 2-1-9>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05년말 현재)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원장(1)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민영
당연직 위원 (6)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덕수 박홍수 오거돈 변양균 조영택 김현중
농어업인 단체 (11)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전국한우협회장 생활개선중앙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한국수산회장	정대근 - 장일환 문경식 윤금순 엄성호 남호경 조희숙 서정의 허기옥 김수길 박규석
소비자 및 시민단체 (4)	한살림 회장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이사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사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박재일 박영숙 송보경 이덕승
전문가 및 언론인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충남대교수 한국신지식농업인회장 부경대명예교수 충북대교수 한신대교수 KBS 보도본부해설팀 해설위원	최정섭 박진도 정운천 최정운 서도원 김주숙 이광호

제 2 장 2005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제1절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육성하고 농업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집단화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지원,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농자재 지원체제 개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중소농, 소규모, 대규모 지구로 나누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켜 왔다. 1995~2004까지 679개소를 조성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068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종합방제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34개소를 조성하였다. 2004년부터는 대·소규모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지구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사업비 168억원을 투입하여 63개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지원하였다.

1991년부터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화학비료 판매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고 비료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농협에 사후 보전해 주는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차손보전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화학비료 차손보전제도는 그동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었지만 최근 농업경영비 중 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1985년 10.9%, 2000년 6.7%, 2004년 5.5%), 농가의 과다소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추세와도 배치되는 점을 감안, 2000년 8월 논농업직불제 마련시 화학비료 차손보전제도의 단계적 폐지방침을 정하였다. 이에따라 2003년 6월에 화학비료 가격보조 개선 방안을 마련,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조를 축소해 오다가 2005년 7월부터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폐지하는 대신 보다 친환경적인 유기질비료 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유기질 비료 보조는 2004년 210억원(60만톤)에서 2005년 245억원(70만톤)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농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05.2)하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자재 구입비용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전국 14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을 통해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토양에 부족한 성분만을 시비토록 하고 완효성비료, 주문 배합비료, 저농도 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료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약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병해충 관찰포 708개소, 예찰포 151개소를 통한 과학적 정밀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경제적 방제가 실시되도록 하였다. 농업인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하여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성이 낮고 잔류량이 적은 친환경농약 개발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생물농약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05.4, 농진청)하였다. 원예작물에 대한 천적해충방제로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하여 2005년에 천적해충방제사업을 최초로 도입하여 시설원예작물 331ha에 대하여 천적해충방제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단가는 ha당 저농약인증 524천원, 무농약인증 674천원(논 : 150천원), 유기인증 794천원(논 : 270천원)이며, 지원기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량은 '98년 이후 증가하다가 수도용 농약사용 감소에 힘입어 '0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2003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24,506톤이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 기준으로 1990년 1,104천톤을 고비로 연차적으로 그 사용량이 감소하여 2001년도에 717천톤에서 2003년도에는 678천톤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 추진한 화학비료 차손보전 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전구매 등 영향으로 2004년에는 747천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722천톤으로 감소하였다.

(친환경농업정책과 기술서기관 이영구)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대

최근 계속되는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와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량이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매년 5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에는 2004년과 대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가 85%, 인증면적이 77%,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73%가 증가하였다.

<표 2-2-1>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변화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 가 수(천호)	1	2	5	12	23	29	53
재배면적(천ha)	1	2	5	11	22	28	50
생 산 량(천톤)	27	35	87	200	365	461	798

전체 농산물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05년말 기준으로 이미 4%를 넘어 섰으며 매년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생산비중은 채소류 41%, 과실류 36%, 곡류 12%, 특작 등 기타가 11%로 채소류와 과실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친환경인증종류별로는 2005년 기준으로 저농약인증 61%, 무농약인증 30%, 유기(전환유기)인증 9%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친환경농업의 초기단계인 저농약인증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유기축산은 '05.5월 최초 인증 후 2005년말까지 18건이 인증되었고 유기축산물 생산량은 461톤이었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3건, 돼지 2건, 육계 3건, 계란 7건, 우유 3건 이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유통구조가 다양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05년말 기준으로 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친환경농산물은 농가별로 다품목 소량 생산되고, 소비자층이 제한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와 전문 유통조직에 의한 유통이 발달되어 있다.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수는 2005년말 이미 1,200개소를 상회했고 전국 백화점, 대형 할인점 대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2-2>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현황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352	477	604	701	1,091	1,266
농 협	108	110	112	127	170	200
할 인 점	131	175	221	238	259	268
쇼핑센터	7	43	46	46	46	124
백 화 점	75	97	98	98	98	68
전문매장	31	36	50	128	425	465
기 타	0	16	77	78	93	141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홍보 TV-CF를 제작 방영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사례집도 발간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비자 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분기별 1회 유통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2005년에 229억원을 지원하였다.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의 친환경농업 인식전환을 위한 농소정 사업을 9개단체에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교육에 있어서도 바우처 교육을 시범 도입하였다.

(친환경농업정책과 기술서기관 이영구)

3. 토양개량사업 추진

토양개량사업은 산성토양 개량 및 논토양의 규산성분 공급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4년에 이어 2005년도에도 4년 1주기로 물량을 확보하여 100%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637천톤(규산 340, 석회 387)을 지원하였다.

또한 입상토양개량제 확대공급을 통한 토양개량효과를 증대하고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입상규산질 비료를 대폭 확대하여 2004년도 110천톤에 이어 2005년도에는 200천톤으로 확대·공급하였고, 석회질은 2004년 6천톤에 이어 2005년 40천톤을 입상으로 공급하였다.

아울러 오염농경지와 사질토양 및 토양유실이 많은 경사지, 고랭지의 밭토양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이 필요한 농경지 개량을 위해 2004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객토사업을 지속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업정책과 축산사무관 안규정)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 등의 사료작물과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축산사료 중 조사료 비율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이 증진시키기 위하여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밀,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사료·녹비작물을 파종면적 기준으로 2004년도 96천ha의 재배에 이어 2005년도에는 138천ha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리수매에서 제외된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경종농가에서 재배한 보리를 축산농가와 계약하여 사료로써 공급할 수 있도록 총체보리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04~2005년도에는 6,281ha 재배에 이어 2005~2006년도에는 9,686ha로 증가하는 등 휴경지를 이용한 사료작물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가 부산물 및 곡물을 활용한 자가배합사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벚짚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벚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등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정책과 축산사무관 안규정,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유기혁)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자원화(퇴·액비)되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유익한 비료로 이용이 가능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량 등에 기여하며 작물의 증수와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품질이 검증된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악취 및 파리 등의 제거를 위하여 농장관리, 환경개선제 사용, 분뇨분리 등으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이용과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가축분뇨발효비료(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축분비료유통센터(43개소, '04년말)를 지정하여 액비 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경종농가들의 액비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05, 679개소 → '06계획, 596개소) 하였다.

또한, 2004.4월부터 9월까지 환경부와 공동으로 축산분뇨관리·이용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가축분뇨 발생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체계적

인 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분류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의 일환으로 농림부내 식량정책국과 축산국,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순환농업팀’을 차관보 직속으로 구성·운영('05.9)하고 있으며 이 팀에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양질의 비료로 만들어 다시 농경지로 환원시킴으로써 지력을 북돋우는 자연순환형 농업 형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구축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동안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동 시범사업을 기초로 국내실정에 맞는 유기축산 세부사양기준을 마련중이며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이를 유기축산 희망 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서재호)

나. 축산업등록제 추진

축산업등록제는 환경보전, 축산물 안전성 확보,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농가와 생산자단체간 정보교류 확대를 촉진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 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 12월 26일 의원입법으로 축산법이 개정·공포되어 200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EU 각국도 축산농가별 농경지면적 확보, 사육두수 상한설정,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 가축의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있고, 대만은 1997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1998년부터 ‘축목업 등기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과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축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축산업등록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축업·부화업·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

되,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법 시행후 2년이내(2005.12.26일)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의 규모는 한육우·젖소 및 닭·오리는 가축사육시설이 300㎡이상인 농가, 돼지는 50㎡이상 이고,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20.2천호(45.3%), 젖소 8.4천호(18.9%), 돼지 9.3천호(20.8%), 닭 6.1천호(13.7%), 오리 0.6천호(1.3%)로 모두 45천호가 된다. 축종별 축산업등록 대상농가규모는 주요가축질병, 발생빈도, 관리역량 등을 생산자단체 등과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등록시에는 종축과 일반가축 사육시설(종축업), 부화실과 병아리방(부화업) 및 계란중량 선별기(계란 집하업), 통풍이 잘되거나 환기장치구비(가축사육업) 등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 후에는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두당 적정사육면적 확보의무 강화, 조사료포 확보를 통한 축산분뇨처리 및 경종농업과의 유기적 순환농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2004년부터 시범도입하여 추진하고, 축산정책 방향을 축산업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이력추적시스템, 친환경 축산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고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 축사 등 청결유지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체계 정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정책과 축산사무관 조정래)

제2절 고품질·안전농축산물 공급

1. 우수농산물(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기반 조성

농산물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90년대 후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농산물 안전생산에 대한 국제공통 기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WHO(FHH : 한약규격화포럼)에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도 사용되는 약용작물에 대하여 GAP기준을 설정하기로 협의하였다.

국제동향에 발맞춰 도입을 추진하는 GAP제도는 Codex기준과 WHO의 협의사항을 토대로 하여 ① 파종 전 단계의 토양·수질의 안전관리, ② 농산물 생산시 화학비료, 농약 및 미생물의 오염관리, ③ 수확 후 처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그 과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이력)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농업인들은 식품안전성이 떨어지는 농산물보다 차별화된 GAP농산물의 생산·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GAP기준은 WTO에서 허용되는 사항이므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산 농산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기준의 선진농법인 GAP제도를 도입하고자 2003년에는 9농가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965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2005년 8월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조동근)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사육단계(Farm)부터 최종 소비단계(Table)에 이르는 축산물 공급체인(Supply Chain)의 전 과정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위생·안전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육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04.7.29)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육단계에서는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잔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교육하는 한편,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을 개정하여 도축 후 식육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위반 농가에 대해 규제검사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출하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사육단계에서 HACC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인프라와 선형요건프로그램, HACCP 검증 등이 담긴 지침 및 모델 개발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사료 안전성을 위해 '05. 5월부터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약품 수를 종전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하고, 사료 제조시 규제대상인 중금속 등 위해물질의 종류를 종전 납, 수은 등 8종에서 곰팡이 독소인 오틀라톡신A 등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리대상 잔류농약의 종류도 17종에서 27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사료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시스템인 사료공장 HACCP제도를 '05. 1월부터 시행하여 총 35개소의 공장이 지정을 받는 등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였다.

도축단계에서는 '03.7.1일부터 HACCP제도가 전면 의무 적용됨에 따라, 도축장에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성실히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시·도간 교차점검과 일제점검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HACCP 운용이 미흡하거나 미적용 도축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고,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두 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의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축장의 HACCP 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축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검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축검사보조원을 100명 신규채용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전국 도축장에 배치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가공장도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HACCP을 지속적으로 지정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군납·학교급식·단체급식소 그리고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HACCP에 대한 각종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HACCP 적용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HACCP 적용 확대를 기하였다.

<표 2-2-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현황 (2005.12.31 기준)

도 축 장				축산물가공장				기 타	
계	소·돼지	닭	오리	계	식육	유(乳)	알	판매업	사료
137	93	41	3	276	242	33	1	2	35

자료 : 농림부 축산국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실제 그 내용이 정확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축산물작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끝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선택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추진과정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이기중)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품질향상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품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하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5년도에는 155품목 64천건의 농산물을 조사하였고 이중 730건이 잔류농약기준 초과 등 부적합품으로 판명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안전성 조사의 범위를 재배환경 및 병원성미생물로 확대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농업용수, 중금속 55건에 대한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생식채소류, 퇴비 145건에 대해 살모넬라 등 미생물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대장균은 검출되었으나,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는 검출되지 않았다.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 농산물 생산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60천명의 생산자와 22천명의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업무에 소비자 참여확대를 위해 농소정협의회를 13회 개최하여 농산물 안전성 실태조사를 300건 실시하고,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조사를 4,500건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 안전성 실태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농림부, 농진청, 산하기관, 농협,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식품안전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종합대책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등 4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대책은 중장기 농산물 안전성 대책의 근간이 될 것이며, 향후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나. GMO·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원산지표시관리를 강화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GMO표시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02년 3월 1일부터 감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GMO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2005년 456명의 상주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GMO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관련협회,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2005년 교육: 1,059천명, 홍보: 1,787회)하는 등 GMO 표시제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과학적기반에 의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정성·정량 분석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등 GMO농산물 표시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1991년부터 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1996년 국내가공품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국산과 수입산의 경우 각각 266개 품목과 국내가공품 211개 등 531개품목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결과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2005년 96.9%에 이르게 되었으나, 조직적 허위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 실시, 단속기법 및 과학적 식별방법 개발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부정유통 신고망을 구축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회원 등 21,5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표시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소비안전과 서기관 신영정)

4. 가축방역·검역 강화

구제역 방역대책 기본방향은 발생 위험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에는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수입건초는 2회(수출국·국내도착) 소독 및 검사(159건)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소독은 공·항만(36개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232개소 394개)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은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35두)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86명) 등을 통해 65천건(67천톤)을 검색하였고 이중 탐지견 검색건수는 4.5천건(13톤)으로 총 검색실적의 28.6%를 차지하였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공관(22개국 37개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125천부)를 배포하였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설치(20대) 선기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예찰요원(5,440명)을 동원하여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110천두)를 실시로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였고, 가축질병신고전화(1588-4060) 및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연 52회)을 운영하면서 공동방제단(3,890개반)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310천호)에 대해 소독(연 21회)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외국인 연수생(473개소 902명)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지자체 및 검역원에서는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초동능력 향상을 위해 가상방역훈련(58개 시·군)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즉, 휴대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상황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초동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2년 주기의 발생우려를 깨고 '02년 6월이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농가·축산시설 경영자의 능동적인 방역활동과 지자체의 방역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한 해외여행객 입국자의 편의를 감안하였기에 휴대축산물 검색에 한계가 있었다.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은 '05.3월부터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우 1세 이상의 암소에 대해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으며, 한육우의 유·사산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6~7월, 11~12월)에 전화 문진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집상·중개상에 대한 정기검사(분기별1회)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가축 및 사람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홍보리후렛을 제작·배포(2회 400천부), 전문지 광고 등 예방수칙을 홍보·교육토록 하였다.

한육우 부루세라병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는 검사대상을 확대('03년 : 발생농장·30두 이상 사육농장 → '04.6월 : 가축시장 거래 암소 → '05.3월 : 가축시장·도축장 거래암소) 또한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 추진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염소를 색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소 부루세라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서 보완 및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검사대상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돼지콜레라는 2003년 72건 발생이후 2004년 9건, '05년 5건이 발생하여 발생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표 2-2-4>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단위 : 두수(건))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돼지콜레라	1,683 (5)	-	-	406 (13)	5,866 (72)	779 (9)	811 (5)

앞으로 돼지콜레라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방접종 명령 위반농가(면역형성을 80%미만)는 과태료 처분과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체가가 높은 모돈(감염 의심축)은 조기도태 유도로 감염원을 차단하고,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으로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청정화에 대한 단계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밀집지역 농가분산,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방역과 수의사무관 조옥현)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가. 영농규모화 사업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쌀 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 연리 3%, 임대 :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재특회계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규모 확대를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그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청장년층의 쌀 전업농 참여를 촉진하여 영농규모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매매사업자금 상환 기간을 당초에 20년 균분상환에서 15년에서 30년까지 연령별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청장년층에 대한 자금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2005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1,907ha 4,769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3,951ha 2,903억원, 농지임대차가 7,892ha 1,839억원, 농지교환·분합이 64ha 27억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쌀 전업농수, 2005년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농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 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 확대가 촉진되었다. 전체 벼 재배농가 914천호 중 8.8%(80.6천호)의 비중을 차지하는 쌀 전업농이 전국 벼 재배면적(980천ha)의 30.3%를 담당하여 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쌀 전업농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3ha이상 생산 농가가 44천호로 이중 쌀 전업농이 38천호(84%)를 차지하였다.

<표 2-2-5> 2005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5 계획(A)		2005 실적(B)		집행율(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11,505	476,941	11,907	476,938	100
농지매매	4,010	290,325	3,951	290,322	100
임대차	7,445	183,891	7,892	183,891	100
교환분합	50	2,725	64	2,725	100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계속하여 벼를 재배하고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연령이 63세이상 69세이하인 고령농가가 소유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며, 임대하는 경우는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한·칠레 FTA 비준시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70세이상 72세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도·임대 공히 ha당 2,977천원을 1회에 걸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지급상한은 재정범위를 감안하여 2ha까지로 되어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성이 낮은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 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7,267ha 22,103백만원으로 이 중 매매이양이 1,133ha 2,887백만원, 임대이양이 6,134ha 18,266백만원을 집행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68천명의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1,268억 원의 경영이양직접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 1인당 188만원의 소득을 지원 하였으며, 쌀 전업농 45.1천명에게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45.4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1인당 1.01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표 2-2-6> 2005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5 계획(A)		2005 실적(B)		집행율 (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7,267	22,103	7,267	22,103	100
사업비	7,267	21,153	7,267	21,153	100
운영비	-	950	-	950	100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김기훈)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용수로와 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대구획경지정리는 과거 경지정리된 지역중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 지역을 재정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이미 경지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주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지 규모를 3천평 규모로 대형화하고, 용수로와 배수를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는 기존의 폭1.5~4m를 3~7m으로 확장·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표 2-2-7>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5까지	2006계획	2006이후
사 업 량	164	96	5	63

주 : 봄마무리 기준임. '03년에 목표면적 조정 : 200천ha → 164천ha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최근 쌀 산업여건변화, 농촌·농업에 대한 재정수요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규모화 영농에 꼭 필요한 집단화된 농지 위주로 시행하기 위해 당초 개발목표 200천ha를 164천ha로 재정비하고, 수리시설 개량만으로 영농여건 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05년 봄마무리까지 국고 1조,9022억원, 지방비 5,149억원 등 2조4,171억원을 투자하여 96천ha를 완료하였다.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조래청)

나. 밭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확충을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 공개밭, 농로개설, 밭경지정리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밭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기반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초년도인 1994년에는 국고지원율이 60%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는 지방비(40%)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에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1995년에 70%, 1996년에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연도 완료방식에서 2개년차 사업완료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밭기반이 정비된 지구에 문화마을 조성, 생산유통지원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밭에서 마을, 양파, 양배추 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고, 시설 유지관리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경우 밭관정 시설이 100% 활용되고 있는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주민 유지관리조직 미구성 또는 미흡한 운영, 농업인의 밭관정 이용시설 사용 미숙 및 고장시설물 방치 등으로 용수이용 시설(관정)의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밭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적정한 사업계획 검토, 시설물 활용방안, 영농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군,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에는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밭 관개용수는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의 여유수량을 활용하고, 신규 농업용수 개발시에는 밭용수를 확보하는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하여 지하수 개발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맛 등 품질이 우수한 밭작물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8>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발면적	목 표	2005까지	2006계획	2007년이후
사 업 량	721	110	69	4	37
사 업 비		25,794	15,857	1,046	8,891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박종훈)

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19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1985년부터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으로 농림부 주관하에 추진되었다.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으로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이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생활권 위주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대형농기계의 보급확대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1995년도에 별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농림부 주관하에 시작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로는 개설되었으나 농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인데 따른 기계화영농, 농산물 운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생활도로로도 이용되고 농촌에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목 표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사 업 량	35	16.4	1.2	17.4
사 업 비	37,071	16,718	1,214	19,139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조래청)

라. 배수개선사업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2005년에는 2,179 억원을 투입하여 약 5천ha를 준공함으로써 '05년까지 총 대상면적 188천ha의 69%인 129천ha를 완료하였다. 최근 기상변화로 강수량이 증가되어 침수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은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10>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대상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사 업 량	188	129	5	54
지하배수	47	3	-	44
사 업 비	43,252	24,757	2,179	16,316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박종훈)

마.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방조제 등 이미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영농급수에 지장이 있으며, 재해에 위험이 있는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2005년도에는 저수지, 양수장, 방조제 등의 재해취약시설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중 흠으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수로의 개보수에 4,113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별로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개보수에 3,300억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에 306억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에 507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토사가 퇴적되어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준설하는데 100억원을 투입하여 물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표 2-2-1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	2005까지	%	2006계획	%	2007이후	%
공사관리수리시설	8,769	100	5,521	63.0	99	1.1	3,149	35.9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109	52.9	7	3.4	90	43.7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1,033	31.5	78	2.3	2,173	66.2
저수지준설(백만m ³)	102	100	42	41.6	1	0.6	59	57.8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김동권)

바.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은 모든 농사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업인의 열망도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규모 확대 등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대규모 농업용수개발로 경북 성주, 전북 동화 2개 지구에 190억원을 투입하여 2개 지구 7,380ha를 준공,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는 110개 지구에 2,722억원을 투입하여 14개 지구 3,069ha를 준공하는 등(지표수보강 862ha, 소규모용수개발 125ha 준공)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하였다.

<표 2-2-12>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ha)

구 분	총 계 획	2004까지	2005실적	2006이후
대·중규모	118.8	46.1	10.4	62.3
소규모	11.0	0.2	0.1	10.7
지표수보강	31.8	20.1	0.9	10.8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기술서기관 이성홍)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 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자원 확보와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은 물론,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우량 농지를 창출하는 한편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1970년에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22지구 28만 3천ha를 추진하여 그중 금강, 평택, 계화도 등 15지구 16만 2천ha를 완공하고 7지구 12만 2천ha에 대한 사업을 시행중이며, 2005년에는 시행중인 7지구에 국고 910억원, 농지관리기금 2,350억원 등 총 3,260억원을 투입하였다.

한편, 2005년에는 2001년 8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 면허의 무효확인 및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1심판결(서울행정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2005년 2월24일 1심에서는 공유수면매립 면허 무효확인 청구부분과 2001년 5월 발표된 정부조치계획 취소 청구부분은 기각 또는 각하됨으로써 농림부가 승소하였으나, 2001년 5월 민원서 형식의 매립면허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민원회신) 취소청구부분이 인용됨으로써 이 부분은 원고측이 승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위 3종류의 청구부분 모두 농림부가 승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표 2-2-1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구 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2004까지	2005실적	2006이후	
계	22지구	283,227	82,092	45,224	3,260	33,608	
준 공	15지구	161,667	13,767	13,767	-	-	
시행중	7지구	121,560	68,325	31,457	3,260	33,608	
시행중	금 강Ⅱ	43,000	7,069	3,459	400	3,210	'89~'08
	미호천Ⅱ	4,430	2,909	2,200	70	638	'89~'08
	홍 보	8,100	3,755	2,355	220	1,180	'91~'10
	영산강Ⅲ-1	13,160	7,099	3,617	333	3,149	'85~'08
	영산강Ⅲ-2	7,840	4,219	1,863	354	2,002	'89~'10
	영산강Ⅳ	16,730	7,439	480	180	6,779	'01~'07
	새 만 금	28,300	35,835	17,483	1,703	16,648	'91~'11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은 기존의 인력에 의하여 현장위주로 물관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조정에 의하여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배수 제어시설을 자동화하고 원격조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용수절약 및 물관리비 절감 등 물관리 효율을 높이고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 농업인에 대한 물관리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2005년도에는 10개 지구에 국고 66억원을 투입하여 2개 지구를 준공하였다.

<표 2-2-14>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	()	%	()	%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371	100	9 (17)	2.4	3 (10)	0.8	359 96.8

※ 사업량은 완료기준이며, ()는 시행물량임.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김동권)

3. 농업전문인력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 개 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이농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장차 우리 농업을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일정기준에 적합한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3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은 창업농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여 후계농업인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45세 미만의 농업인력에 대해서는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2005년도 추진상황

2005년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485명을 선정하고 농업종합자금으로 총 1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은 1,050명을 선정하고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개인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기술교육, 각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병행하였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는 특·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1인당 2천만원~1억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고, 농지구입 지원단가는 11.1일부터 평당 논 3만원에서 4만원, 밭은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농지구입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동 자금은 100% 국고융자로서, 창업농 자금은 연리 4.0%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표 2-2-15> 2005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경 종	축 산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1,050	570	480

자료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신규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농업종합자금 사업 계획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2~5천만원 범위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금리는 3%이며, 상환기간은 1~5년거치 2~10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3) 평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05년까지 2조3,67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24,379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 및 지속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경영인력과 농업사무관 양주필)

나. 농업법인 육성

(1) 농업법인제도

1989년 영농규모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계획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으로 발표하고, 이듬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법인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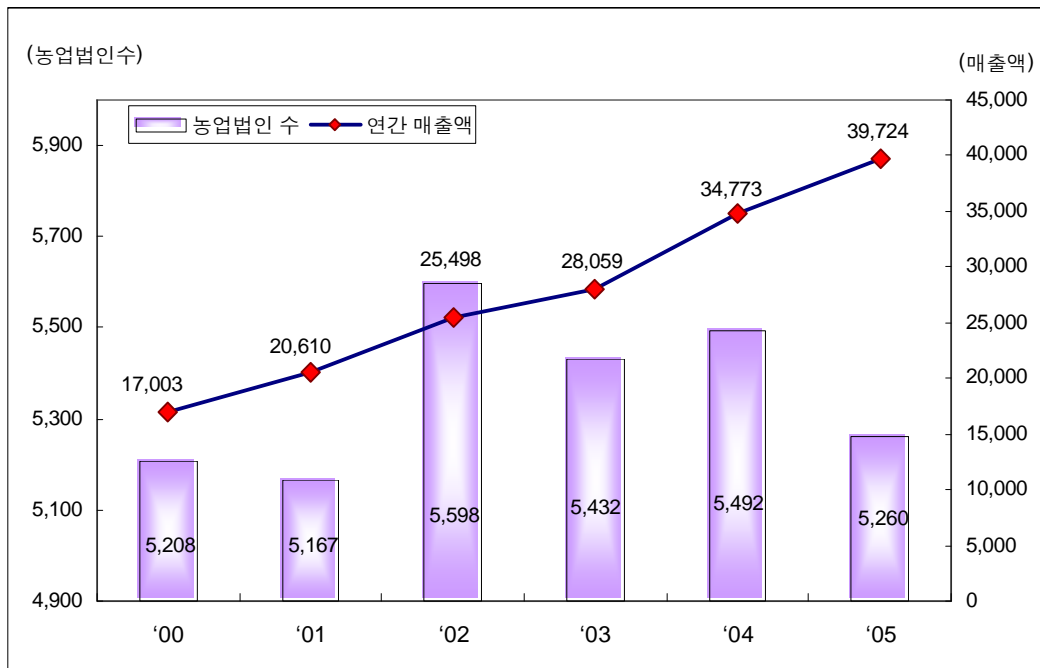
1994년 농업법인에 농업생산, 가공·유통 기능까지 포함한 생산자조직으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을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하면서 농업법인제도의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으로 농업법인 육성 근거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동 법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인별 당기 순이익은 2000년 5백만원에서 2005년 4천8백만으로 9.6배가 증가하였다.

2005년 농업법인의 평균 종사자 수는 8.4명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2-1> 농업법인 수 및 연간 매출액



(3) 농업법인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농업법인제도는 개별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품질·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업경영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법인화를 통해 농업분야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역할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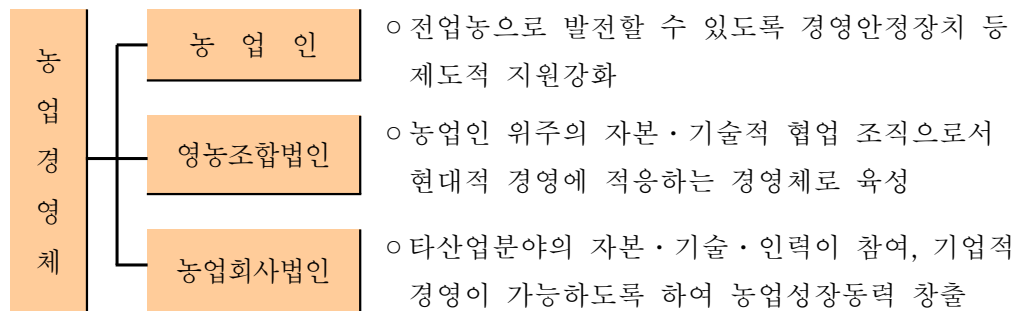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농업법인의 지원우대로 정부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후 개별 경영체로 전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 추진

이러한 농업법인이 DDA·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위주의 농업관련 세금제도를 농업법인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 전문 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창업에서 성숙과 구조조정의 전 과정에 걸쳐 농업법인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2005년말 까지 총17개 추진과제 중 14개 과제는 완료하였으며, 3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 주요 추진실적>

◇ 법인 성장유도방향으로 세제보완

- 농업법인 창업 후 2년내 취득 농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 농지구입 정책자금 이자를 농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
- 농업법인의 농지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구입의무 면제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업용 창고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 5년간(2005~2009)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 친환경 농업용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 외부자본과 전문인력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제한 완화

-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격기준에 지자체 농업공기업 포함(추진중)
- 농업법인에 관광사업 허용 등 부대사업 제한 완화(추진중)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지분과 농지소유제한 완화(1/2→1/4)

◇ 기타

- 농업법인협의체 구성 → 한국농업CEO연합회 설립(2006.3)
- 창업보육센터 권역별 확충 및 농업벤처펀드 신규조성 등 농업벤처 육성
-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및 컨설팅 지원제도 개선
-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침 개정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 영농조합법인 종사자에 대한 건강공제 혜택 등
- 농업회계처리지침 마련,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중장기 검토(추진중)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1) 개 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기로, 농업도 소규모 토지·자본으로 신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농업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지식농업 시대의 주역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주도 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발굴·육성하는 등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신지식농업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1999년에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5년에는 21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여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하는 등 1999년부터 2005년도까지 총 194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였다.

지금까지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 대해서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를 통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신기술과 노하우를 농업인에게 확산·보급시키고 기술교육 등을 전수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문농업인인 농과계 학생에 대한 지식농업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지식농업인의 성공모델을 네트워크화 하여 농업인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포털사이트(www.farmig.com)를 구축하여 신지식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상거래 등을 관리, 운영해 오는 등 일반 농업인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신지식농업인에게는 자신들의 영농에도 도움이 되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간이신용보증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해외 농업국을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선진농업을 구축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신지식농업인의 개념 >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개선·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신지식농업인 육성 방안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농업을 주도할 신지식농업인을 확대 발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문농업인력 육성차원에서 99년부터 추진해 온 신지식농업인 선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의 점진적 확대, 경영컨설팅 우대 등 간접지원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신지식농업인들의 자긍심과 독자적인 사업추진능력을 도모해 주도록 하며,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양성을 위하여 미래의 농업세대에 대한 신지식농업인 농장 견학 투어 및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지식농업인의 활동을 대외에 홍보하도록 각종 농업박람회를 통한 지식농업 분위기 확산과 방송매체 등을 통한 신지식농업인 영농현장 및 활동 소개, 우수사례 책자발간 등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지식농업인을 지식농업의 확산 주체로 육성해 나아가고 있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이호재)

라. 농업인교육훈련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등 인적·질적 저하가 심각하며, 시장 개방확대 등 농업환경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농업의 핵심역량이 노동, 토지, 자본 중심에서 지식, 정보,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적 자원 중심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1982년도부터 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2005년도 추진상황

교육수요자가 필요시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시스템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수의 기관에서 유사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기관간 경쟁이 될 수 있는

분야, 농업인의 교육희망이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및 정보화교육과정을 대상으로 Voucher제도(지불보증쿠폰)을 시범·운영하였다.

또한, 농업인단체의 교육내실화와 품목별 전문교육 강화를 위하여 자체 교육 역량을 확보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는 성공사례 발표회, 공동계산·공동출하운동, 경영장부쓰기운동 등 농업인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자체 역량이 확보되지 못한 품목단체에 대해서는 품목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단체별로 교육 역량에 따른 교육 추진 방식을 차별화하였다. 품목단체 중 자체 역량이 일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사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고 단체중심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자체 교육역량이 미흡한 단체는 회원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농과대학 등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다.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농업을 전문직업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쇄신하고 프로그램도 강화하였다. 성공한 농업경영체가 보유한 성공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농업·농촌 희망찾기 교육으로 우선 금년도에 전국 20개 농고, 20개 농과대학에서 성공사례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농과대의 원활한 현장인력 양성 기능회복을 통한 젊은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촉진을 위하여 전공 Track제 도입,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강원대 농과대학에 교재개발비 등 교육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의 사업 평가 분석을 통하여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농고교사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무능력개발을 통하여 농업인으로 성장할 농고학생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농업·농촌의 가치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농고교사 직무연수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교육운영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교육 위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정책 및 농업·농촌의 비전 등 마인드 제고 교육도 병행하였다.

농과대학과 지역농업인간의 Network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 하도록 4개 농과대학에 EM농법, 시설원예, 도시근교농업 등 중단기 전문농업인 교육과정을 신설, 전문화·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농업 현

장인력 양성을 유도하였다.

농업인 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농협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였다. 생산기술과 이념 교육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농업경영의 전분야(생산에서 유통까지)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주력하였다. 농협의 지방과 중앙단위 교육 차별화 및 농협의 예산과 조직 등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현장밀착형 교육 등이 되도록 추진하였다

마. 여성농업인 육성

(1) 개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정책으로 농가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의 14,422천명이 2005년에는 총인구의 약 7.3%인 3,433천명으로 줄어 들었다. 농가여성인구도 1970년의 7,258천명이 2005년에는 1,757천명(농가인구의 51.2%)으로 감소하였다.

<표 2-2-17>

농가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2	2003	2004	2005
전체	14,422	10,827	6,661	4,032	3,591	3,530	3,415	3,433
남성 (%)	7,164 (49.7)	5,415 (50.0)	3,279 (49.2)	1,972 (48.9)	1,748 (48.7)	1,715 (48.6)	1,654 (48.4)	1,676 (48.8)
여성 (%)	7,258 (50.3)	5,412 (50.0)	3,383 (50.8)	2,060 (51.1)	1,843 (51.3)	1,815 (51.4)	1,761 (51.6)	1,757 (51.2)

자료 : 통계청 2005년 농업총조사

이와 같은 농가인구변화에 따라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력의 전문화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력육성)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0년에는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수립하였고, 2001~2002년에는 여성농업인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을 완비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2) 주요 추진시책

(가)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는 농업·농촌발전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인구의 51%에 달하고 농업주종사자의 53%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이 계획되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정도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농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2005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의 목표는 변화된 농업정세에 걸맞은 지도자를 발굴하여 지도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 등 농업관련기관 주관으로 영농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활용하고 스스로 체계화 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32,200여명, 농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신기술을 전파하는 영농기술 교육 69,500여명, 축산 및 환경분야 전문농업경영교육 315명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훈련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현장여성농업인 또는 관련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기법 등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창조적 실천력을 갖춘 여성농업인 전문강사요원을 양성하고자 농림부 소속 농업연수원에 「여성농업인교관반」을 설치운

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지도력개발과 직업능력강화과정으로 나뉘어 동일인을 대상으로 연중 2박3일씩 총 6회에 걸쳐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데 이어 2003년 22명, 2004년 19명, 2005년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현장의 여성농업인 강사요원으로서 폭넓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강화하고자 □□여성농정위원반□□과 □□여성농업인 농촌체험 가이드반□□을 신설, 운영하여 각각 30명과 42명의 여성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2-2-18> 연도별 여성농업인 교육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정보화교육 (농림부, 농협)	21,450	24,325	26,491	31,893	32,213
영농기술교육 (농진청, 농협)	30,594	30,801	55,603	63,531	69,545
전문농업경영교육 (농업연수원, 농과계대학, 농협)	789	787	490	431	350
맞춤식 전문교육	교재개발 (4종)	여성농업인 교관반 (24명/6회)	여성농업인 교관반 (22명/6회)	여성농업인 교관반 (19명/6회)	· 교관반(23명/6회) · 농정위원반(30명) · 체험가이드반(42명)

(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해외연수 실시

젊고 유능한 여성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1992년부터 후계여성농업인을 선발하였으며, 2004년까지 총 7,109명의 여성농업인 후계자를 선발하였다.

2004년부터는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대상자 선정시 여성의 경우 가산점(20점)을 부여하는 등 여성신청자 우대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58명의 여성 창업농 후계농업인이 선정되었다.

한편,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선진농업국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체험하게 하여 국제적 안목을 증진시키고 국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5년에는 3개 여성농업인단체 소속 18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유럽 선진농업국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체험보고서 형태의 연수결과를 TV 시리즈물로 제작, 방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표 2-2-19>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수 (단위 : 명)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7,267	213	267	442	595	707	823	1,011	980	859	462	339	264	147	158

* 2004년 이후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다) 밭농사용 농기계개발

환금성이 높은 원예작물재배가 증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농작업 환경의 과학화와 자동화는 영농의 효율화뿐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의존도가 높은 밭농사용 농기계의 개발·보급은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지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농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에는 배추정식기 등 4종의 농기계에 대하여 현장접목시험을 실시하고, 콩 예취기 등 2종의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2001년부터 총 30종의 밭농사용 농기계를 개발하고 25종에 대하여 현장접목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2-2-20>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실적

(단위 : 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현장점목 시 협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 협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 협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 협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 협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 협	농기계 개발
25	30	5	8	7	12	4	5	5	3	4	2

(라) 각종 위원회 및 협동조합 등에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보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여성의 관점이 농업정책에 반영되도록 농업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정분야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1997년 5.1%에서 2001년 30.2%, 2002년 35.8%, 2003년 35.9%, 2004년 32.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5년 말 현재에는 신설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 저조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된 30.5%의 여성 위촉율을 보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운영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추진한 결과, 여성조합원 비율은 ('01) 19.6% → ('02) 21.2% → ('03) 22.6% → ('04) 23.6% → ('05) 25.3%, 여성대의원수는 ('01) 1,924명 → ('02) 2,225명 → ('03) 4,167명 → ('04) 4,886명 → ('05) 8,341명, 여성임원수는 ('01) 94명 → ('02) 181명 → ('03) 207명 → ('04) 237명 → ('05) 304명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여성임원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마)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농촌지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여성농업인 단체주관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농촌간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2005년 주요 지원내역을 보면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교육비로 농림부 81백만원, 농협 50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전국대회 등도 지원하였다.

<표 2-2-21> 여성농업인단체 교육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합계	농 립 부						농 협					
	소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소계	2001	2002	2003	2004	2005
695	412	80	90	85	76	81	283	25	95	47	66	50

<표 2-2-22> 여성농업인단체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회원 (명)	설립목적	지도기관 (조직형태)	설립일자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최성희	58,000	농촌여성의 소득사업개발 및 지위향상	농 립 부 (사단법인)	1999.11.
생활개선중앙회	조희숙	97,000	농가생활의 질 및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	농촌진흥청 (사단법인)	1994.1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금순	10,000	여성농민의 권익실현	농 립 부 (비영리민간단체)	1989.12.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허기옥	53,000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도모	농 립 부 (사단법인)	1996. 8.

(바)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농촌은 생활공간과 경제활동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자녀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해주는 곳이 드물고 교양·문화활동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성관련 시설이 전국에 약 350여 개소나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운영 목적이 다르고, 이들 시설 대부분이 도시 및 도시인근에 설치되어 여성농업인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농이나 자녀교육, 문화욕구 해소 등 쾌적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

취시키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생활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각종 상담사업과 영유아 보육, 방과후 아동 지도,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여성농업인 사회교육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4개 지역 (충북영동, 충남서천, 경북안동, 경남진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데 이어 2002~2003년중에는 각도별 2개소씩 총 18개소의 센터를 운영하였고 2004년도에는 운영 개소수를 전국 27개소로 확대하였다.

2005년은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 34개소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표 2-2-2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개소수	지원액
4	300	18	850	18	855	27	1,378	34	1,379

* 지원액은 국비 지원액임

(사)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고자 개발된 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농피해를 줄이고 출산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사이의 기간 중 30일 동안 출산 농가의 농사일을 대신 해주는 생산적 복지제도이다.

시범 첫해인 2000년에는 68개 시·군에서 실시하여 731농가, 2001년 87개 시·군의 1,700농가에서 도우미를 이용하였고, 2002년에는 163개 시·군 농촌지역으로 확대하여 2,500여 농가에서 이용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농촌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2003년 2,833농가, 2004년 3,370농가에서 도우미를 이용하는 등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2005년에는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3,500여 농가에 대하여 11억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제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표 2-2-24>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합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13,856	4,531	1,692	550	2,452	778	2,833	892	3,370	1,202	3,509	1,109

* 지원액은 국비 지원액임

(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04년부터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인 농어가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영유아(0~5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이며, 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월 지원단가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만 5세아는 100%) 수준이며,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2004년은 사업 첫 해로 월평균 21천명에 대하여 지방비를 포함하여 20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한 결과 30천명에 대하여 353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자녀양육 부담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표 2-2-25> 연도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합 계		2004		2005	
인 원	지원액	인 원	지원액	인 원	지원액
51	55,590	21	20,287	30	35,303

(자) 여성농업인육성 법령 개정

농업정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중심에 두는 성 인지적(性 認知的)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수행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2001년 12월 제정(법률 제6574호)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2002년 7월 완비하여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육성업무 강화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삶의 질 향상시책에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을 추가 하였으며, 시·도지사도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이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차) 여성농업인 정책연구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기적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성 인지적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제1차 여성농업인정책(2001-2005)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농업인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시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한 관점에서의 농림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종합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도 추진하였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여성농업인 노동가치 평가의 질적기준 설정,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유형별 지원정책 개발 및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참여 활성화 모델 개발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카)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

제1차 여성농업인정책(2001-2005)에 이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여성

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기관(단체)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추진과제 등을 바탕으로 2차계획 시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동 시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현장 여성농업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순회토론회를 9개도별로 개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성 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의식제고 및 여성농업인육성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농업관련단체 교육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여성농업인정책반」을 농림부 농업연수원에 개설하여 2001년 38명(3일), 2002년 44명(3일), 2003년 34명(5일), 2004년 33명(5일), 2005년 29명(5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바. 농업벤처 육성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생산 분야,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1) 2005년도 추진상황

정부(83억원)와 민간(97억원)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100억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원, 2호 조합)에 결성한 농업전문투자조합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농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아이템을 가진 13개 농업벤처에 투자하였으며, 2호 조합이 투자한 농업벤처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

펀드 최초로 75억원의 이익을 회수(원금 5억원의 15배)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실현 제4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6점을 선발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보육센터 확충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로 영남지역 농업인의 농업벤처창업지원을 위하여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를 경상대학교에 설치하였다.

<표 2-2-26> 제4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구 분	출품자	시상금	아 이 템
최우수	권국원	10백만원	강화순무를 이용, 순무즙과 순무환 제조(농가소득향상)
우 수 (2)	전영진	5	고구마 등을 활용, 얼려먹는 요구르트 개발(농가소득향상)
	이성철	5	이용이 편리한 경운기용 굴삭기 개발(농가편익제공)
장 려 (3)	이수열	3	3색 김치 케첩 개발(농가소득향상)
	서미자	3	전통발효기법 이용, 한방음료 제조(농가소득향상)
	곽춘식	3	마시는 청국장(14량) 개발(농가소득향상)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로 인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9년부터 농업분야 컨설팅 제도(농림부 주관의 민간컨설팅, 농촌진흥청 주관의 공적컨설팅, 농협 등 주관의 농업인단체 컨설팅)를 도입하였다. 민간컨설팅은 대규모 기업농 대상, 농촌진흥기관의 공적컨설팅은 민간컨설팅농가를 제외한 일반농가 대상, 농업인단체 컨설팅은 농협 등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에게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2-27>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사업량(개소)	220	441	553	759	847	870	1,000
사업비(백만원)	1,710	3,388	4,427	5,586	5,696	6,550	8,000
국 고	671	1,227	1,499	1,676	1,709	1,965	4,000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컨설팅사업 비교>

농림부 : 특정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전문컨설팅

농촌진흥청 :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 공적 컨설팅

<표 2-2-28>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컨설팅사업 비교

구 분	농 립 부	농촌진흥청
목 적	○ 민간컨설팅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 농업인 지도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개선 뒷받침
대 상	○ 민간컨설팅 희망법인 및 농가 -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대상 - 원예·특작·축산분야 대규모 경영체 ○ 대상경영체 수 : 연간 약1,000농가	○ 컨설팅 희망하는 농업인 ○ 대상경영체 수 : 연간 약65,000농가
컨 설 팅 내 용	○ 경영기장·회계·재무관리, 생산관리, 농자재·가공·마케팅 등에 관한 컨설팅	○ 생산기반·시설, 생산기술, 농산물 판매활동, 경영기법 등의 진단 → 처방→지도·자문
컨 설 팅 수행주체	○ 민간컨설팅 기관·업체 - 대학교수,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등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 역할 분담 - 품목별 전문지도사, 연구원, 대학교수, 독농가 등
사 업 비 용 도	○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료 보조	○ 분야별 컨설팅팀 운영 ○ 컨설팅체계 강화를 위한 컨설턴트 양성
컨 설 팅 비 용	○ 평균 8,000천원 (농가 30% 부담)	○ 농업인 부담 없음
지원조건	○ 국고보조50%, 지자체20, 자부담30	○ 국비50%, 지자체50
사업추진기관	○ 시·도지사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협의 지도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고유목적사업

(1) 2005년도 제도개선 내용

농업인이 보다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사업비 지원한도를 농업인 1천만원, 법인 2천만원에서 농업인 15백만원, 법인 30백만원으로 높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도 원예·특작, 축산분야 경영체,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에서 RPC(미곡종합처리장)·APC(산지유통센터)·쌀 전업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아울러, 농업인 자부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컨설팅업체의 전문화·규모화를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였다.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정보센터를 설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업관측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등락 폭이 크고 생산액이 많은 주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면적, 작황, 생산동향, 재고동향, 해외시장정보, 수출입동향, 기상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미래의 생산동향과 가격을 전망하는 예측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여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영농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통·가공업체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농산물거래와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관측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에 14개이던 농업관측 대상품목을 2000년에는 18개 품목, 2001년에는 24개 품목, 2002년 이후

에는 26개 품목²⁾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생산·유통정보와 함께 소비 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부류별 연 4회 소비자패널(1,000명)조사를 실시하였고, 해외정보수집에 있어서도 중국('04년 20명)중심에서 다변화를 추진하여 중국, 미국, 칠레, 일본, 뉴질랜드, 벨기에 총 6개국 38명으로 확대·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북경 및 산둥성의 농업경제연구소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제공하였으며, 주요 농축산물 생산국가의 생산·유통 수출체계와 정책에 대한 변화 및 전망 등의 정보교류를 위해 연구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의 최신 관측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관세청의 수출입정보를 실시간 활용토록 하고,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수집된 농업관측정보의 가공·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 정보가공시스템(DW) 개선사업 추진하여, 주요 청과물의 계절별 생산·공급 모형개발을 완료하고, 중장기 수급관측모형(KREI-COMO 2005)을 보완·개선하였다. 또한, GIS를 이용한 관측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³⁾, 주산지정보를 그래픽 위주의 지리정보와 연동하여 제공하여 현행 텍스트 방식보다 쉽고 직관적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측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관측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농업관측정보는 매월 수집, 분석·가공한 부류별 관측정보를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정책부서의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관측보(월보, 분기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주산지 작목반, 표본농가, 모니터, 생산자단체 등에 배포함과 아울러 농업전문지, 농업관측 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0명에 이르는 E-mail 회원에 대하여 매월 E-mail로 관측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2) 2006년부터는 콩고추, 쌀을 추가하여 28개 품목임(특히, 쌀은 '06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7년부터 본격 실시 예정)

3)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도매가 및 산지가 정보('06), 수출입 정보('07), 저장정보('08) 등을 연차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농업인의 약 68%가 관측정보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중 약 80%가 농업관측정보의 유용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앞으로 쌀, 풋고추 품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여 다변화된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산지·소비자·해외정보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가공시스템과 GIS를 활용한 정보서비스를 확대실시하며, 품목별 전문가 양성에 힘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농업관측정보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표 2-2-29> 주요농축산물 품목별 발표시기

부류별	해당 품목현황	발표시기	
채소류(9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감자, 당근, 양배추	3 ~ 12월	1일
과일류(6개)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3 ~ 11월	10일
과채류(7개)	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풋고추('06부터)	"	"
축산류(5개)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2, 5, 8, 11월	25일
	육계	2 ~ 12월	"
곡물류(1개)	쌀('06 시범, '07 본격시행)	1, 4, 7, 10월	15일

(통계기획팀 사무관 이경천)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혁신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마케팅의 규모화, 푸드체인의 전문화가 절실하다. 그 동안 정부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육성 지원하고 산지유통시설을

4) 농업관측사업 만족도 조사('05.11)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05년까지 산지유통 전문조직 267개를 선정하였고 APC 232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상당수가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기업화된 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공동마케팅조직 9개를 최초로 선정하고 2013년까지 80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05년의 경우 공모를 통해 신청한 조직(15개)에 대해 농가조직화정도, 사업규모, 브랜드화, 전문경영, 향후추진계획 등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별로 1~2개씩 농업회사법인인 농산무역 등 9개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하였다.

<표 2-2-30> 조직유형별 공동마케팅선정조직

계	합병조합(1)	전문조합(1)	연합판매조직(4)	영농조합법인(1)	농업회사법인(2)
9개 조직	순천농협	대관령원에 농협	안성(지역조합주도), 나주·함천(군지부주도), 햇사래(도간 연합)	신지식한국농업 영농조합법인	(주)논산수출물류센터, 농산무역

2005년도 첫해의 경우에는 기존 산지마케팅조직을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혁신요소를 구비한 전문화·규모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을 시범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기존 산지유통조직은 산지유통종합평가제도를 도입,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별(6개그룹) 차등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지원, 운영자금 차등지원, 부진조직 자금반납 및 사업 퇴출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화·전문화·규모화된 산지유통주체를 육성하였다.

아울러,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경제사업출자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함으로써 조합간 연합사업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마케팅자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05년 선정된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중기·저리(1%, 3년이내)의 원료구입자금(9개조직 86,473백만원), 무이자인센티브(1년, 9개조직 2,000백만원), 홍보 및 브랜드 개발 지원(7개조직 100백만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상향조정(기존 30~40%→40~50), APC시설보완 우선 지원,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201명 19,800백만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끝으로 공동마케팅조직이 활성화되면 유통문제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조직중심으로 품종통일 및 재배관리, 생산이력관리, 농산물수출, 수급조절 등을 일관 관리할 수 있어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김정주)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은 1984년부터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포장화율이 ('94) 66.3% → ('98) 75.1 → ('05) 87.8로 향상되고 있으며,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은 ('98) 17.1% → ('05) 54.5로 제고 되는 등 농산물의 표준규격 선별 포장을 통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포장화 및 표준규격출하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02년부터 농산물의 규모화 및 균일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선별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을 규모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동선별비지원은 ('02) 24억 → ('03) 34 → ('04) 50 → ('05) 70으로 확대되었으며 '06년에는 약100억이 지원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농산물표준규격을 개정하여 시장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였다. 2005년에 개정된 농산물표준규격의 주요내용은 품종별 표준규격을 품목별로 통합하되 공통기준의 선택, 당도등은 품종별 특성을 감안·설정하는 한편, 생산유통량이 극소량인 일부 과실류와 신선도에 의해 품질이 좌우되는 엽채류의 등급규격을 폐지하여 표준규격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농산물표준규격으로 인정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규격출하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생산자가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포장재를 개발 할 수 있도록 농산물표준규격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과 KS 포장규격 및 표준파렛트(1,100×1,100mm)의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경우에는 표준규격 포장재로 인정하여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2005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규모는 522억원으로 총 120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말 현재 54.5% 수준인 표준규격출하율을 2008년까지 60%, 2013년 65%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채록)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농산물 유통비용은 '04년말 현재 21조 3,450여억원으로 소비자 구입액 52조 2,160여억원의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비용 중 포장·가공·운송·하역·가모청소비 등 농산물 물류비는 전체 유통비용의 36%인 7조 6,4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농산물 물류혁신을 통한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특성상 공산품에 비해 물류비가 높은 것은 불가피 측면이 있지만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산물 물류비의 체계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5년 3월 농산물 물류 혁신위원회를(위원장 차관보,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련단체 등 22명) 구성하여 3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하고, 12월초 재정경제부장관(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농산물물류혁신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산물 물류혁신종합대책은 표준규격출하와 규모화를 위한 산지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콜드체인시스템 확충, 비수기의 소량 농산물의 복합운송 및 농산물운송비 절감을 위한 농산물 공동 수·배송체계구축,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현대화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포장화율이 가장 낮은 배추·무에 대한 포장유통을 추진하고, 신유통흐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선취매매,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규제개선·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대책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도매시장 운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유통비용절감과 소비자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5.4.1 전국의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주대마늘 반입을 전면 금지하여 마늘 포장유통을 정착시켰으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과제로 선정하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05.4~8) 하였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채록)

4. 축산물시장 차별화

개방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수입산 및 국내 축산물 상호간의 시장차별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04년에 이어 '05년에도 “축산물브랜드 육성 계획”을 지속 추진하였다. 품질과 위생·안전성 등이 확보된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여 소비자 신뢰와 시장차별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31개 경영체를 선정, 8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현지실사 평가를 통하여 3개 우수 브랜드경영체에 85억원의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10월 28일~30일, 코엑스)하여 우수 브랜드경영체에는 정부차원의 시상과 홍보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25개 우수 브랜드(한우 13, 돼지 12)를 선정, 소비자단체와 유통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먼저 브랜드업체를 대상으로 소 유전자(DNA)감별법을 활용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판매단계에서까지만 실시해 오던 원산지 표시제를 쇠고기를 대량 소비하는 음식점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04.8.4)하여 식육판매업영업자는 음식점의 영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토록 의무화하여 음식점에서 식육을 구입하는 경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도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05. 12. 1)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축산물 위생감시를 소비자중심의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개정('04.1.29)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

원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부정·불량축산물의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여 유통기한경과나 무허가, 무신고영업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2천여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과 서기관 황인식, 수의사무관 김대균)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우리 농업은 안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감소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199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180여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고,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진행 등으로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저가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시장개방은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는 의미가 있어 수출농업 육성을 통해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기본적 영양섭취의 차원을 넘어 건강 등 삶의 질과 연결되고 있으며 일본·중국·동남아 등지에서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한류영향으로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식문화 등도 관심이 증대되어 우리 농식품 수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아울러, 그동안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사업, 119조원 농업·농촌 종합대책사업 시행

에 의한 시설재배면적 증가 및 기술발달,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에 힘입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등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성, 수출업체 영세성, 수출품목의 다양성 미흡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국가간 식습관 차이라는 전통적 요인 외에 수입국의 식품안전기준 강화 등이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어려움도 있었다.

정부는 2005년 한류영향 등을 수출에 연결시키기 위해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한류열풍을 활용한 해외 수요기반 확충, 수출증대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05년 농식품 수출은 환율하락 유가인상, 김치 기생충 알 검출 파동, 폭설피해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6% 증가한 2,222백만불을 달성하였는데 신선농산물은 608백만불, 가공 농식품은 1,614백만불이었다.

나.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고품질·안전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출전문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04년에는 기존 원예전문생산단지(일명 수출단지)가 수출단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일부 지적 등이 있어 단지를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훈령)」을 제정하였다. 원예전문단지 선정 기준 및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단지에는 수출물류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로 원예전문생산단지가 '04년 104개 단지에서 '05년은 129개 단지로 확대되었다.

우리 농산물 주 수입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프로그램을 중점 보급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출에 대비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컨설팅 173회에 걸

처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특히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농가·영농조합·수출업체를 대상으로 ISO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였다. 또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등 121개 수출업체, 1,568 수출농가에 대한 채소류 수출업체 사전등록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채소류 안전성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개방화 시대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수출이 유망한 24개품목(신선농산물 7, 가공식품 17)을 발굴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개발수출을 지원하였다.

다. 한류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동아시아에서 한류 드라마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대장금’의 양미경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해외 박람회, 판촉전 등에 참여시켜 한국 농식품 및 식문화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본 아이치 엑스포 기간동안 한국의 날 행사, 우수 바이어 초청간담회, 한국음식요리 시연 등을 통해 우리 식문화를 세계에 전파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식문화가 다른 미국과 유럽시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와 공동으로 김치요리를 개발하여 시연·시식 행사 5회, 요리책자 10,000부 배포, 출판기념회 3회 개최 등을 통해 김치를 세계에 알렸다.

또한 해외 유명 한식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식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두보를 구축하고 대학축제 연계 식품점, 뉴욕 메츠 구장 ‘Korea Night’행사도 개최하였다.

특히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공동브랜드 ‘휘모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Whimori Week’를 지정하여 캠페인 요리교실, 판촉전 등 종합마케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휘모리’ 수출이 파프리카는 '04년 330톤에서 '05년 3,531톤, 국화는

'04년 270만본에서 1,270만본, 배는 95톤에서 226톤으로 대폭 늘었다.

선별적 해외박람회 참가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업체 수출 실적,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박람회와 업체를 선정하였다. 바이어 박람회에 대해서는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시음·시식, 개별 수출업체 홍보 등을 통해 업체간 상담·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 박람회는 요리 시연, 문화공연과 연계하여 한국산 농식품 알리기에 주력하였다. '05년에는 총 23회 박람회에 참가하여 254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아울러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한국 농식품 판촉전을 2004년도 26회 1,052백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53회 1,500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라.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선

개방화 시대 수출업체 및 수출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선하였다. 수출업체 및 수출단지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업체를 연간 10만불이상 수출업체에서 연간 15만불이상 수출업체로 상향조정하였고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운영자금의 금리인하 인센티브(최우수 1%, 우수 0.5%)를 부여하였다. 또한 DDA 협상에 대비하여 수출물류비를 허용보조에 해당하는 공동대표 브랜드 운영, 농약잔류검사비 지원, 식품 등록비 지원 등 수출조성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허용보조사업 비율을 '04년 9%에서 '05년 10%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에 대한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농수산무역정보망(www.kati.net)을 활용 수출가격, 해외 바이어 정보 등에 관한 8,074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FTA에 대비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경쟁력 조사, FTA 체결대상국에 대한 시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장동욱)

2. 수입관리 대책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WTO협정 내용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쌀, 고추, 마늘 등 16개 주요 품목은 국영무역형태로 수입관리하고 연유, 분유 등 5개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관리하여, 수입으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은 국내 생산시기,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시장접근물량을 적절하게 수급관리 함으로써 국내 농업보호와 WTO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키 나가고 있다.

<표 2-2-31>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년도별	개방품목수	주요 품목	수입자유화율
1994년까지	1,201	바나나, 배, 키위, 유채 등	82.7%
1995. 1. 1	172	보리, 옥수수, 대두, 고추, 마늘, 참깨 등	94.6%
1996. 1. 1	3	포도, 사과주스(2)	94.8%
1996. 7. 1	13	버터, 연유, 유당, 인조꿀, 누에고치 등	95.7%
1997. 7. 1	39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감귤 등	98.4%
2001. 1. 1	8	소, 쇠고기 등	98.9%
2006. 1. 1	-		98.9%
잔여품목	16	쌀 관련품목	
계	1,452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나. 관련법상 각종제도의 적극 활용

수입자유화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고추장, 표고버섯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찐쌀 : 기본세율 8% → 조정관세 50%). 또한 관세화 품목, 즉 관세상당치로 개방한 품목 중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는 땅콩,

녹두, 메밀 등 4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땅콩, 메밀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도 특별 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2006년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명 발동기준 및 세율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

품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산(160개), 국내산(160개) 및 가공품(211)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단속 공무원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농업협상과 행정사무관 김재철)

라.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WTO 출범에 따른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2~2000년까지 972억원을 투자 1~3단계 동식물검역기능 강화대책을 마무리하고, 2001~2004년까지 4개년 간 442억원을 투자하는 4단계 동식물검역 선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여 검역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농업협상과 수의사무관 강대진)

제6절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 대책추진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최근 우리나라의 쌀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 국내외 가격차 확대에 따른 경쟁력 저하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품종개발과 생산기반 정비의 결과 1980년대 이후에는 쌀을 자급하게 되었고, 특히 1996년 이후에는 6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다. 이러한 생산의 증가 외에도 UR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난 1995년 457만석이던 재고는 2001년 927만석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선 1,005만석이였다.

그러나 대북지원과 주정용 공급 등 재고특별처리를 추진한 결과 2005년 말 재고는 567만석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감소 등에 따라 평년수준만 생산되어도 매년 150만석 이상의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공급과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03~'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생산조정정책의 추가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촉진대책 추진과 함께 주정용 공급을 확대하고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수급균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쌀협상과 WTO/DDA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우리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04. 2월 쌀산업종합대책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5.7.1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편하여 해방이후부터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폭 확대에 사전 대비하였다. 양정제도의 주요개편 내용은

로는 그동안 추곡수매제가 담당하던 비축기능은 WTO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가 가격지지에 따른 소득보전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수확기 출하물량은 RPC등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로 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 받은 10년 동안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쌀이 외국쌀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함께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개선을 통해 민간유통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최명철)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

과거 추곡수매제의 경우 WTO의 감축대상 보조에 해당되어 매년 수매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가격지지를 통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이나 쌀 수급조절 등 수매제 본래의 기능이 한계에 달하였다.

- 수매량 : ('95) 955만석(생산량의 29%)→('04) 494(14%)
- 감축대상 보조금 : ('95) 20,344억원→('04) 13,598(매년 750억 감축)

이에 농가 소득안정과 안정적인 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해 '05년에 양정제도를 개편, 쌀소득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였다.

- 공공비축제도는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로 WTO 허용보조로 분류
 - WTO 허용보조조건 충족을 위해 시가매입·시가방출 의무 부담
- 공공비축 적정 규모는 600만석 수준으로 하고, 향후 쌀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3년 뒤('08년) 재검토
 - 연간 300만석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양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05년 400만석, '06년 350만석, '07년부터 300만석을 매입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상연)

다. RPC 경영혁신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RPC 경영악화가 지속될 경우, 쌀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03.10)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 평가 후 지원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정부지원을 원하는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등을 차등지원하고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2005년도 RPC 경영평가는 RPC 경영자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 310개 RPC(농협 193, 민간 117)에 대해 운영자금 5,094억원을 등급별로 차등지원(A등급 30~E등급 10억원, F등급 지원 제외, 금리 0~2%)하였다.

아울러 통합 RPC에 대한 운영자금 우대지원 등을 통해 조기에 경영이 안정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 '05년말까지 7개 시·군(충남 연기·부여, 전북 정읍·고창, 전남 보성·함평, 충북 진천) 25개 농협 RPC가 통합)

(소득관리과 기술서기관 김완수)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 촉진

WTO/DD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고품질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쌀의 품질 고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정부는 그동안의 증산위주의 정책을 품질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 확대, 질소질 비료 사용감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생산·유통 전반에 걸쳐 고품질쌀 생산·유통체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고품질 보급종 종자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재배과정에서의 비료·농약의 사용감축은 물론 재배관리도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PC 중심의 고품질화를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산물벼 처리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부족한 건조·저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중 유통되는 포장양곡에 산지·품종·도정일자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시중유통 쌀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 및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최명철)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정부에서는 시장개방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가능한 한 생산자단체 주도의 자율적 수급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추진하고 있다.

사전적 수급조절의 한 방법으로 생산액이 많고 가격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농업관측사업('99년부터 본격실시)을 실시하여 기상정보, 재배의향면적, 작황, 예상 생산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미래정보를 신속하게 예측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품목선택, 영농규모 결정 등 영농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기간 중 수급조절의 방법으로 민간수매지원('68년), 정부비축사업('78년), 채소수급안정사업('95년)을 통해 채소류 가격이 높아질 경우에는 출하를 유도하고,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경우에는 수매저장, 저급품 출하자제, 소비확대 홍보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및 수급안정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채소수급안정사업의 활성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해오던 무·배추·고추·마늘·양파중 주요채소류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제도('98년)가 수입을 유발하고 생산과잉이 반복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저보장가격 제도를 계약재배안정화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전환을 위하여 '06~'07년(2년간) 계약재배안정화사업 시범기간을 설정하여 문제점 파악과 현장 적응력을 배양한 후 '08년부터 완전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32>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 계	74.0	28,472	218.9	60,994	586.6	390,786	740.0	563,402	848.0	665,718	775.5	776,807	911.3	828,349	1,041.7	833,717
정부수매 비축	8.9	17,914	57.5	24,909	14.6	18,534	26.4	24,609	1.7	2,512	0.7	1,093	-	-	296	635
고 추	3.5	15,204	-	-	-	-	-	-	-	-	-	-	-	-	-	-
마 늘	1.1	1,602	14.5	16,759	14.6	18,534	16.0	21,993	1.6	2,489	0.7	1,093	-	-	296	635
양 파	4.3	1,108	43.0	8,150	-	-	10.4	2,616	(96톤)	23	-	-	-	-	-	-
민간수매	42.3	8,805	76.6	18,566	45.6	20,848	56.8	25,028	44.0	25,333	37.8	23,564	33.3	21,538	44.7	23,786
마 늘	20.2	8,093	14.1	11,566	14.9	14,079	17.8	17,123	18.7	19,556	17.7	18,010	12.8	16,386	14.5	15,982
양 파	22.1	712	62.5	7,000	30.7	6,769	39.0	7,905	25.3	5,777	20.1	5,554	20.5	5,191	30.2	7,804
고 추	-	-	-	-	-	-	-	-	-	-	-	-	-	-	-	-
정부출하 조정	22.8	1,753	3.8	217	28.4	1,404	56.8	3,765	60.7	7,873	-	-	89	4,572	44	7,096
계약재배	-	-	81	17,302	498	350,000	639	510,000	740	630,000	737	752,100	789	802,200	657	802,200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또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과 산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협약·명령제('00년)와 자조금제도('00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조금사업은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자조금 조성액 만큼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년도('00년) 2개 품목에 64백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05년에는 17개 품목에 3,634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주요 과수에 대하여 계약출하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05년 사업비는 3,010억원으로 '04년 사업보다 353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업량은 전년대비 과실계약 단가의 인상으로 전년 161천톤에서 '05년에는 139천톤으로 감소하였다. 장기적으로 산지 생산자단체 또는 APC를 고품질과실브랜드의 산지유통 및 과실수급조절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지원대상자에 FTA지원사업의 APC 참여조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규모화에 의한 자율수급조절체계 강화를 위해 최소 사업 신청기준 물량을 사과, 배, 감귤의 경우 200톤에서 300톤으로 상향조정하고, 최소 사업참여 농가수도 20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위약금 면제관련하여 면제기준, 위약면제 산출물량, 산출방법 및 위약면제 해당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사업기간도 현실에 맞도록 4월에서 익년 3월이었으나 5월에서 익년 4월로 조정하는 등 과실수급안정사업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은 (사)제주감귤협의회를 중심으로 '03년부터 '05년까지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여 생산자(단체)의 고품질 과실의 출하의식 제고와 더불어 '03년에 이어 '04년, '05년도에도 감귤의 가격이 안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과수화훼과 기술서기관 이상혁)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돼지고기는 '97년부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고, 생산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산지가격이 낮을 때는 수매비축 하였다가 높을 때 방출하는 등의 직접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단체가 '04.4.1부터 도축장에서 등급관정을 받는 돼지로부터 의무적으로 거출하고 있는 양돈자조금(두당 400원)의 100%이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구성된 자조금은 등·안심, 후지 등 비선호부위 소비확대를 통한 부위별 수급안정을 위해 TV·라디오 광고, 이벤트 실시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서 러시아, 대만, 몽골 등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였다.

<표 2-2-33>

축산물 가격동향

(단위 : 원/kg)

구 분	1998	2000	2001	2003	2004	2005
쇠 고 기	5,438	7,414	8,284	9,418	8,645	10,806
돼지고기	2,539	2,474	2,572	2,378	3,406	3,635
닭 고 기	2,602	2,356	2,528	1,854	2,481	2,469
계 란	926	774	981	865	1,179	1,204
우 유	538	609	610	625	646	696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은 도매가격이며, 우유는 원유실제수취가격임.

양계는 사육수수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계 D/B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조금 및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을 통하여 가금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소비증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기존의 TV광고 위주의 소비홍보를 지양하고, TV자막광고, 다큐멘터리(60g의 진실 계란, SBS) 방영을 광고효율을 제고시켰으며, 기존의 축산물가공업체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사업, 가축계열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가금산업의 전업화·규모화를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향후, 양계는 닭고기·계란의 공정한 가격형성 체계를 확립하고, 구조적 가격 안정기능 강화를 위해 부분육 유통을 확대하고, 계란의 품질은 포함한 등급제를 확대하여 국산 가금산물의 가격·품질 차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강형수, 축산사무관 권동태)

4. 가축개량 활성화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05년에 가축개량 시책은 주요 가축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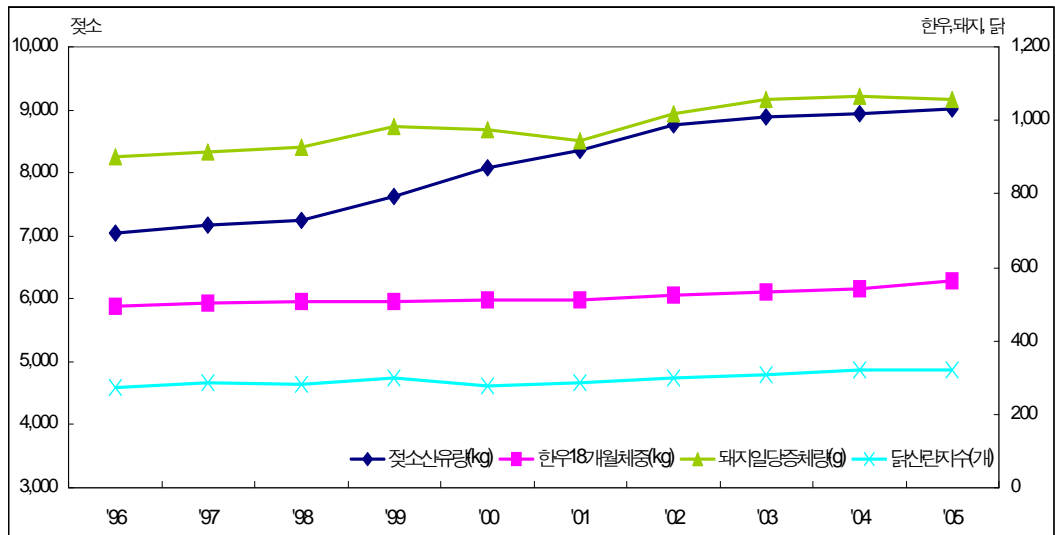
중장기(5년, 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96년부터 '05년까지 10년간 가축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표 2-2-34>에서 보듯이 개량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우개량은 개량농가의 등록우를 대상으로 우량 암소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계획교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량을 추진한 결과, 작년도 실시한 한우개량 간이 추세조사에서 한우 수소 18개월령의 체중이 564.5kg으로 나타나 '96년 495.9 kg 대비 13.8% 증가하였다. 또한 한우 1등급이상 고급육 출현율도 '96년 19.4%에서 '05년 47.9%로 28.5%나 늘어났다.

<표 2-2-34> 주요 가축개량 추세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 한 우											
- 18개월체중(kg♂)		495.9	500.5	505.0	507.3	509.6	512.0	522.1	532.2	542.2	564.5
- 1등급출현율(%)		19.4	18.4	15.3	18.8	24.8	29.8	35.2	33.3	35.9	47.9
○ 젖 소											
산유량 (kg/ 305일)	일반농가	5,836	5,882	5,972	6,135	6,539	6,749	7,017	7,117	7,286	7,417
	검정농가 (초산우)	6,953 (6,629)	7,171 (6,752)	7,252 (6,694)	7,629 (7,032)	8,086 (7,445)	8,364 (7,688)	8,761 (7,962)	8,899 (8,032)	8,935 (8,019)	9,014 (8,142)
○ 돼 지(요크셔,♂)											
- 일당증체량(g)		902	913	929	982	973	945	1,018	1,058	1,065	1,056
○ 닭											
- 산란계 산란지수 (개/년)		272	284	281	299	279	285	297	307	320	320
- 육용계 체중 (6주,g)		2,551	2,416	1,948	2,195	2,300	2,127	2,285	2,431	2,544	2,615

<그림 2-2-2> 주요 가축개량 추세도



'05년에 추진한 한우개량 시책을 보면, 한우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에 착수, 개량농가와 참여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농협중앙회는 자체 특별감사하고 시·군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였다. 한편, '04년 5월 20일부터 '05년 3월말까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T/F팀) 운영을 통해 검토·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우개량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여 「한우개량사업 종합개선대책」을 확정('05.5.9), 시행('05.5.16)하였다.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의 도입이다. 한우 육종농가는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이 된 암소 50두 내외(목표 100두 이상)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05년부터 '08년까지 매년 10호씩 40호를 선발하고,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4,000두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를 생산하여 검정한다. 이 검정 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두씩 선발하여 인공수정용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육종농가는 사업 첫해인 '05년에 계획 10개소를 초과한 12개소(농가 10개소, 도센터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이 새롭게 시작하였다.

둘째, 현재 한우 개량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우는 장기적으로 적정두수인 60천두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한다. '05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실제 참여한 농가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15,261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관리대상 등록우 160,174두 중 기록관리가 되는 62,658두에 대하여 관리조합에 관리비 2,15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60,205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45,650두에 대한 조사사례비 2,282백만원을 개량농가에 지원하였다.

셋째, 축산발전기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조직혁신과 경영개선으로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면서 우량 정액 공급을 확대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가축개량사업소는 소장 이하, 직원들의 높은 인건비, 농가부담을 고려한 소 정액 저가 공급으로 인하여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사업소의 운영을 효율화를 위해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상경비 절약하고, 홍보와 관측을 통해 정액 판매량을 늘려 수입증대에 노력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33%, △2팀 15명)하는 대신 결원 충원시 육종전문가 2명을 새로이 채용하고, 소장직의 내부 직위공모제 도입을 통해 2년 단위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05년도 사업소의 기금 당기 순손실액이 당초 50억원이 예상되었으나 손실폭이 1억원 수준에 그쳐 '05년 계획 대비 49억원, 지난 '02년 대비 약 58억원 수지개선 효과를 거두어 수지균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표 2-2-35>.

<표 2-2-35> 가축개량사업소 수지개선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계 획	실 적
○사업수익	9,408	10,356	13,165	13,085	15,066
○운영경비	15,383	15,367	15,824	17,943	15,649
○사업손익	△5,975	△5,011	△2,659	△4,858	△583
○특별손익	3	439	722	△223	413
○당기순손익 (축발기금)	△5,972	△4,572	△1,937	△5,081	△124

※ 자료 : 농림부 축산정책과

그밖에 '05년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31두와 보증씨수소 21두를 새로이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45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1,655천두분을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을 받는 낙농가 3,910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193,995두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들중 검정성적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110,910두에 대한 검정비 총 2,110백만원을 검정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젖소 보증씨수소는 질병 때문

에 북미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중단되어 새로운 보증씨수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05년 국내산 젓소 보증씨수소를 4두 선발한 것을 포함하여 보증씨수소 총 18두를 확보하여 국내산 젓소 정액 413천두분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젓소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 참여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2005년도에 유우군 검정농가의 두당 평균 산유량이 일반 낙농가 보다 1,597kg 증가하여 두당 2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도 국내 젓소 두당 평균산유능력 추이(305일 기준)

- 검정농가 : (2003) 8,899kg → (2004) 8,935 → (2005) 9,014

- 일반농가 : (2003) 7,117kg → (2004) 7,286 → (2005) 7,417

+ 1,782 + 1,649 + 1,597(21.5%)

돼지개량의 성과를 보면 요크셔 수퇘지의 경우 검정소 검정에 의한 일당 증체량은 '96년 902g에서 '05년 1,056g으로 17.1%나 증가하였다. 돼지의 사료요구율은 '96년 2.34에서 '05년 2.28로 2.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닭 개량은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96년 대비 '05년에는 17.7% 향상되었으며, 육용계의 경우 평균체중(6주 기준)이 '96년 대비 '05년에는 2.5% 늘어났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종축을 수입하여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종돈 40천두에 대한 능력검정사업을 하여 돼지 개량을 촉진하였다.

닭 개량을 위해 종계 40천수에 대한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소요 검정비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검정성적은 양계농가들에게 제공하여 양계농가들이 유전능력이 우수한 계종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도 축종별 가축개량 목표 대비 실적은 <표 2-2-36>와 같으며, 가축개량사업 지원실적은 <표 2-2-37>과 같다.

<표 2-2-36> 2005년도 가축개량 목표 및 실적

축종	형질	2000	2005			
			목표(a)	실적(b)	b/a(%)	
한우	18개월령 비거세수소 체중(kg)	510	560	564.5	101	
	거세우 등심면적(cm ²)	80	88	82.3	94	
젖소	초산우 산유량(kg)	7,200	7,850	9,014	115	
	초산우 유지율(%)	3.6	3.6	3.8	106	
돼지 (요크셔)	일당증체량(g)	9.50	960	1,056	110	
	등지방두께(mm)	11.6	11.8	11.9	101	
	사료요구율	2.30	2.20	2.28	104	
닭	산란계	산란지수(개)	285	294	320	109
		사료요구율	2.33	2.28	1.96	86
	육용계	6주 육성율(%)	98	98	97	99
		6주 체중(g)	2,195	2,240	2,615	117

※ 자료 : 2005 가축개량관련자료(축산연)

<표 2-2-37> 2005년도 가축개량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 실적		2006계획		'05/'04 대비(%)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① 한우개량		15,119		17,693	17.0
○ 개량·육종농가육성	천두	4,473	천두	6,035	34.9
- 농가지원비(사례비)	46	2,282	61	3,100	35.8
- 조합관리비	63(160)	2,153	80(130)	2,880	33.8
- 검정우(♂)	5.5	38	5.0	55	44.7
○ 한우정액공급	1개소	10,646	1개소	11,658	9.5
② 젖소개량	천두	6,704	천두	6,982	4.1
○ 유우군검정	111(194)	2,110	150(180)	2,541	19.9
○ 젖소정액공급	1개소	4,594	1개소	4,441	△3.4
③ 돼지개량		369		2,169	5.8배
○ 돼지검정등	54천두	174	60천두	169	△2.9
○ 검정시설장비	1개소	195	1개소	2,000(용자600)	10.3배
④ 닭개량		230		210	△8.7
○ 닭검정	43천수	210	43천수	210	
○ 검정시설장비	1개소	20			
⑤ 종축등록		335		109	△67.5
○ 종축등록등	1개소	51	1개소		
○ 품평회·박람회	4건	284	2건	109	△61.6
⑥ 신기술보급등		25		140	5.6배
합계		22,782		27,303	19.8

※ ()내의 한우는 전체 관리대상두수 이며, 유우군검정은 자체 사업분이 포함됨

'05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 기간중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제4회 한국축산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축산기자재의 비교 전시로 상호 기술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개최되었으나 농업인들이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한 결과, 10개국 235개업체에서 총 606개 부수를 설치하여 다양한 축산기자재·사료·동물약품 등을 출품과 함께 부대행사가 열렸으며, 외국인 15개국 500여명을 포함하여 총 13만 2천 3백명이 참관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 그밖에 한우와 젓소 위주의 가축품평회는 전국대회 2회, 도단위 3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들 행사경비를 일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축산정책과 기술서기관 최염순)

5. 우유수급 안정대책

원유 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우유'의 소비감소로 인해 공급 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유 생산 쿼터제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원유 수급은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2005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2,229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906천톤은 원유로 직접사용(백색시유 1,327, 가공시유 217, 유제품 362)하고 나머지 323천톤을 분유로 가공하여 전년도 보다 잉여량이 3.6% 감소하였다.

낙농진흥회의 경우 601천톤을 집유하여 489천톤은 정상가격으로 유업체에 계약 공급하였으며, 잉여량은 전년도(121천톤)에 비해 7.4% 감소한 112천톤 수준이며 치즈·분유·아이스크림 등 용도별로 공급한 후 이에 따른 손실액인 331억원의 원유수급조절자금이 투입되었다.

이와 같이 잉여량이 줄어든 것은 폐업보상 및 원유생산감축대책 시행('03. 7월)에 따라 원유생산이 감축되었고 낙농진흥회의 정상가격 판매물량 비중이 '04년 대비 1.1%p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우유 수급상황 >

	'01	'02	'03	'04	'05
- 생 산 :	234만톤	254	237	226	223
- 수 요 :	305	309	304	311	308
· 시 유 :	157	150	163	161	154
(백색시유)	(140)	(131)	(139)	(135)	(132)
· 유제품 :	148	159	141	150	154

* 유제품 수요량은 수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하여 포함된 수치임.

* 전국 분유 가공량 : ('01) 30만톤 → ('02) 50 → ('03) 36 → ('04) 34 → ('05) 32
 진흥회 잉여량 : ('01) 20만톤 → ('02) 31 → ('03) 20 → ('04) 12 → ('05) 11

한편, 2005. 1월부터 낙농진흥회 농가가 납유한 원유의 체세포 검사성적이 2회 연속 75만개/ml를 초과할 경우 당해 유대 정산기간인 원유단가를 잉여원유차등가격제시행규정에 의한 잉여원유 판매가격 중 탈지분유용 판매가격을 적용토록 하는 체세포 페널티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납유량 중 1등급은 43.2%로 2004년도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평균 체세포수는 2004년도의 307천개에서 2005년도에 261천개로 감소(15%)하는 등 위생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의 우유 수급구조는 만성적인 원유 공급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인 방법에 의한 생산조절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르고 있고, 원유거래 및 유통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덤핑판매 등 유통 질서가 문란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낙농가·유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유 수급관리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생산자 자율에 의한 계획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낙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거래원칙 확립을 통해 원유 유통을 합리화 시키며, '시장의 확대'에 낙농과 유업이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낙농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대책인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시안)을 마련('05.7월)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15인)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세미나·심포지움·간담회·워크샵 등을 통한 쟁점사항 논의와 함께 농가교육·문답자료 배포 등으로 낙농대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다.

한편, 낙농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방영, 낙농체험목장, 3대 가족소풍 등의 이벤트 및 인터넷을 통한 우유 테마송 공모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우유의 우수성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 교사용 학습지도를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산 유제품 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해 면역활성 발효유 개발 등 6개 과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 기술교육을 3개교(중부권 2, 남부권 1)에서 실시하였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송광현, 행정사무관 유기혁)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직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05.7.1부터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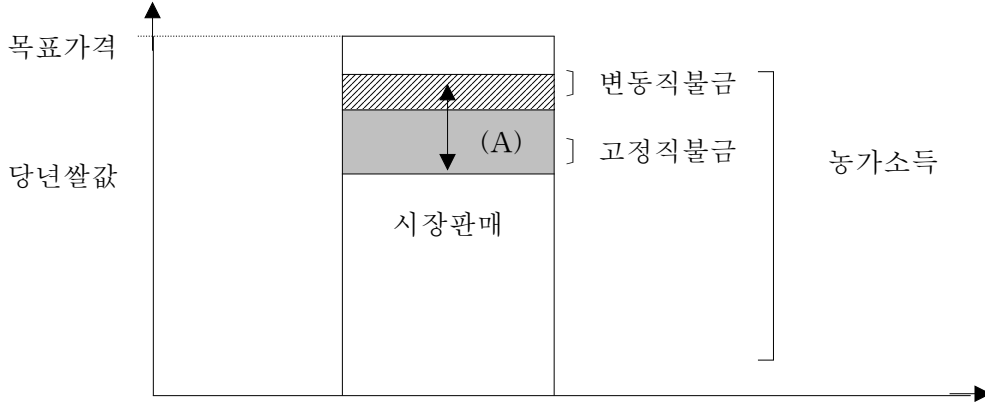
종전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WTO규정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허용보조로 분류되는 하지만, 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만큼 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종전 쌀소득보전금은 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또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신속하게 보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적직불제(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개편하여 시행('05.7.1) 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10월~익년1월) 산지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떨어진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목표가격은 3년마다 변경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은 '01~'03년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03년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쌀 80kg 한 가마당 170,083원으로 설정하였다.

직불금은 그 지급방법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고정직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을 벼 재배여부 및 타작목 재배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 지급한다. 예컨대 2005년산 80kg 한 가마당 수확기 평균 쌀값은 140,028원으로 전년 쌀값 대비 13.4% 하락하였지만, 쌀값과 직불금을 합할 경우 목표가격대비 97.4% 수준을 수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으로 계획영농이 용이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상당수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langle \text{직접지불 금액} = (\text{목표가격} - \text{당년쌀값}) \times \text{보전수준}(85\%) \rangle$$



※ 목표가격 : 170천원/80kg, 3년단위 변경

※ 대상농지 :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소득정책과 사무관 이주영)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도시행규정에 따라 1999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까지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개선정도가 크고 지원과급효과가 높은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농업인은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일정수준이상의 친환경농업실천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그 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인으로 하였다. 대상농산물은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식용할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2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 영농이행단계에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더욱 수준높은 친환경농업이 농업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먼저 대상지역을 종전의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 친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중 일정수준이상 친환경영농을 이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직불보조금을 ha당 524천원 지원하도록 하되, 농가당 최소 1천m²이상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연간 친환경농산물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환경규제지역내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저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직불금은 초기단계 벼의 관행재배와 저투입농법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하여 ha당 524천원을 지원하였다. 친환경적인 영농실천으로 사업시행전인 1999년에 비해 최근 3년간 화학비료 사용량은 단위면적당 약 14% 줄어들었으며, 농약 사용량은 논벼는 줄어들었으나, 원예용 등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논·밭 각각 인증수준별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였는데, 인센티브는 유기인증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이다.

이로인해 밭단가는 저농약인증은 524천원/ha, 무농약 674천원, 유기 794천원이고, 논은 논농업직불금외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유기인증은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했다.

2004년도에는 지원 단가가 논·밭 모두 2003년과 동일하나, 예산은 '03년 30억원에서 '04년 5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는 지원단가가 2004년과 동일하나, 예산은 '04년 55억원에서 '05년 69억원이었으나 집행액은 8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2006년부터 논·밭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논 단가도 인상하여 예산을 114억원으로 확대 되었다.

<표 2-2-38>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ha, 호)

구분	1999~2001	2002	2003	2004	2005
지원액	17,121	2,757	2,988	4,507	8,180
사업면적	31,208	5,274	10,459	12,827	20,780
농가수	54,939	6,589	12,195	14,520	22,11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안형덕)

다. 쌀생산조정제 시행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2004년 쌀 협상에 대비한 유예조건 충족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사업내용은 2002년도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2003년부터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논 임차료 수준에 해당하는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WTO농업협정문상 허용보조 형태로 운영하였다.

<표 2-2-39>

쌀생산조정제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사 업 량(ha)		26,357	24,647	23,429
사 업 비 (국고보조)	계	80,492	76,657	72,415
	보 조 금	79,683	75,850	71,624
	관 리 비	809	807	791

* 사업량은 정산 실적

* 사업비는 결산 실적

2003년 약정체결량은 27.5천ha이었으며, 매년 약정불이행 등 제외면적을 제외하고 신규신청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은 26,357ha, 2004년은 24,647ha, 2005년은 23,429ha의 면적이 각각 약정이행 되었다.

이를 통해 매년 평균 25천여ha의 농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음으로써 연 70여만석의 쌀 생산감축효과를 거두어 쌀 수급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백영현)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WTO출범이후 수입개방 확대로 산간·오지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사회는 낮은 농업생산성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교육·문

화·의료 등 복지지원도 부족하여 지역공동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마을의 자발적인 발전계기 마련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여 2004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조건불리직불제는 2004년~2005년 2년동안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전국적인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내의 농지 및 초지가 소재하는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은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399개 오지면 중 경지율(전국 평균 경지율 22%이하) 및 경지경사율(경지 경사도가 14%이상인 50%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법정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06년도 부터는 사업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선정지표도 경지율 및 경사도 외에 도서(도서개발촉진법상 지정·고시된 410개 지역)와 제주(농업적토지이용 적성등급 4등급 및 5등급이 50% 이상 포함된 법정리)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대상 경작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또는 초지)로서 쌀소득보전등직불제 대상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마을의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신청서(마을발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읍·면을 통해 시·군에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주민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대상마을과 마을협약을 체결한다.

보조금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으로 정하고, 보조금 비율은 70% 국고, 30% 지방비로 되어 있으며, 보조금의 최소 30%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은 WTO 농업협정문상의 허용정책(Green-Box)인 “지역원조계축하의 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적용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마을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40>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연도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ha)

구 분		2004년	2005년	
사업량(천ha)		31	31	
사업비	계	12,644	13,856	
	보조금	소 계	11,572	12,015
		국 고	8,101	8,411
		지방비	3,471	3,604
	행정비(국고)		1,072	1,841

(농지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마.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최근 오지지역이나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경작포기 등 유휴 농경지의 증가로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어 적극적인 농촌 경관 형성 시책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5~2007(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방안을 보완하여 2008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경관작물은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이

어야 하며 다년생작물인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마을의 계획을 심사·평가한 후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170만원으로 국고 70%, 지방비 30%이다.

2005년도에는 총 8억(국고 6억, 지방비 2억)을 투입하여 9개 시·도에서 총 648ha를 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5.18~21, 7.11~20)를 실시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 사업시행효과 등을 검토하여 2005시범사업대상지역 470ha 선정(6.7, 8.2)하여 추진하였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녹색농촌체험,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도·농교류 등에 활용가능한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선정지역의 경관작물은 메밀, 코스모스 등 하절기 작물 142ha, 유채 328ha 였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도출과 효과 등을 예측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교류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효석문화제 기간중 57만명 방문, 총 230억원의 경제적효과를 거양하였으며, 고창군 공음면은 메밀축제 기간중 20만명 방문, 부안면은 국화꽃축제 기간중 15만명이 방문, 총 35억원의 지역소득효과 올렸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한준희)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가. 농업인부채경감대책 추진

(1) 추진배경

2001년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함)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도 1995년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기존의 부채대책의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여서 농업인이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기 어렵고 부채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DDA 협상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3년 4월 농민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및 「부채대책실무기획단」을 구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장기화, 농업경영회생 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업인에 대한 부채대책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농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총 15차례 회의(실무기획단 포함)를 통해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2003년 6월 28일 농가부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제출(2003.7.2)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의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부채대책을 마련, 2003.10.31 국회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부채경감법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동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2001 지원 상호금융대채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3.5% 인하하는 내용 및 농업용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7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하여 2004년 2월 16일 의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4.3.5일 공포된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을 2005.10.31까지 연장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부채경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부채대책 내용

<2004 농부채경감대책 주요내용>

- ①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4%수준 → 1.5%) 및 상환기간연장(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② 2001대책으로 지원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금리인하(6.5% → 3%)
- ③ 2001대책으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6.5% → 3%)
- ④ 2001대책으로 지원한 연대보증피해해소자금 상환기간연장(3년거치 7년 →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⑤ 농업용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5%, 7조원)
- ⑥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연이율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04지원 2,000억원)
- ⑦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정상상환 인센티브 : 정책자금을 부채대책에 의해 상환연기 하지 아니하고 정상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이자액의 40% 환급(중전 20%)
 - 조기상환 인센티브 : 부채대책으로 상환연기한 자금과 지원받은 자금을 약 정당시 상환기일보다 1년이상 조기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중전 30%)

(3) 부채대책 추진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부채경감대책 중 농업인의 신청이 필요없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2001지원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2004.3.5일자로 일괄 조치하였으며, 시행초기에는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농업전문지에 광고게재, 조합별 프랑카드 게시, 리후렛 제작 배포(100만부), 포스타(6,000부) 부착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부채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 신청기한을 당초 2004년5월31일까지에서 2004년12월20일까지(연대보증피해해소자금 신청은 2004.12.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중 일선 현지점검, 정책고객대상(PCRM)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5월29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행지침 주요 보완내용은 첫째,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를 총부채 1억원초과에서 지원금액 1억원초과로 변경하였고 둘째, 금융자산 확인대상을 배우자와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였으며, 지원금액이 5백만원이하 소액인 경우는 금융자산의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3개 읍·면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는 지소에서도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대책 지원금액 5천만원까지는 시·군지부까지 가지 않고도 일선조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2004년 9월 30일에는 상호금융대체자금(7조원) 추가 지원과 관련 그동안 신청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신청액의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부채경감대책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대상금액(2003말 대출잔액~1999말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한도를 70%이내에서 100%까지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금액 1,000만원~1,750만원인 농업인은 형평성 차원에서 1,00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과거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2000~2003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 2003년말 잔액의 70% 까지를 추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03년 도입,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계획 2,000억원, 연리 3% 3년 거치 7년상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농업인 자격완화 및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확대하는 시행지침 개정을 하였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격(영농규모, 부채규모)를 전업농 규모의 2/3이상인 농업인에서 1/2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업용 총부채 5,000만원이상인 농업인에서 2,500만원이상 농업인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지원대상 자금범위를 농업인 신청일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에서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으로,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2.1.1일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에서 2001.1.8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으로 확대하였다.

<표 2-2-41 부채대책 자금별 농업인 신청 및 지원 현황 (2005.12.31일 현재)

(단위 : 천건, 억원)

대 상 자 금	지원규모	신청 현황		지 원 결정액	지원액 (C)	비율(%)	
	(A)	건수	금액(B)			(B/A)	(C/B)
정책자금 상환연기	80,409	422	79,801	47,802	40,187	99.2	50.4
2004상호금융대체자금	66,500	513	73,731	45,335	37,925	110.9	51.4
연대보증해소자금상환연장	4,526	14	3,303	2,938	2,059	73.0	62.3
농업경영회생자금	2,000	5	1,987	1,910	1,639	99.4	82.5
계	153,435	954	158,822	97,985	81,810	103.5	51.5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일선조합에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심사·지원이 이뤄지도록 시행지침을 보완하였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우리나라는 사계절 기후변화의 차가 큰 북서계절풍지대에 속해 있어 여름철에는 태풍·집중호우, 겨울철에는 폭설·혹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서해안, 중부지역 등을 위주로 자주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재해의 발생횟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기해 나가고자 2001년부터 도입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배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등 6개 과수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며, 보험료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계속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가입을 쉽게 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 증대를 위해 자연재해 범위에 호우를 추가하고, 보험료 할증·할인제도 도입, 보험료환급제도 도입, 과수보상특약 신설, 태풍기준을 기상청 발령 태풍주의보로 완화하는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태풍 “루사(’02)” 및 “매미(’03)” 등으로 약 2만 7천여 농가에 1,200여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재해보험사업의 한축인 민영보험사가 태풍 “루사” 피해로 큰 손실을 입자 2003년부터 사업에서 철수하고, 2003년 이후 단독으로 보험인수한 농협 또한 태풍 “매미” 피해로 큰 손실을 입게 되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운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도에 농림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보험개발원·민영보험사 등 관계 전문가들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였다. 제도개선T/F를 통해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및 국가재보험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을 신설키로 하였으며, 민영보험사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 그간 농업인 부담경감차원에서 억제해 왔던 보험요율을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2005.1.27), 동법시행령(2005.5.13), 손해평가요령(2005.5.24) 및 농작물재해보험기금운용규정(2005.6.4) 제·개정하고, 재보험기금 운용조직을 설치(2005.4.1) 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재보험사업에서 철수하였던 삼성·현대·동부 등 민영보험사의 재참여를 유도하여 2005년 6월 재보험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안정기반을 크게 강화하였다.

* '05년 국가재보험제도 주요 약정내용

- 거대재해(손해율180%초과손해) : 국가가 전액부담
- 통상재해(손해율180%이하손해) : 농협(25%), 민영보험사(75%)

아울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운영비 국고지원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 국고지원율 50%외에 별도로 보험요율 현실화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 중 농가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추가지원(4년간, '05년 추가지원율: 11.2%)하여 순보험료의 61.2%를 지원하였다. 이에 2004년도 23,926농가보다 10.1% 증가한 26,335농가가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17,546ha)도 15.7% 증가한 20,301ha가 보험에 가입(가입률 23.4%) 하였다.

<표 2-2-42>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상품목(*주1)	사과·배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좌동	좌동	좌동	
가입실적	가입농가(호)	8,055	18,549	16,481	23,926	26,335
	가입면적(ha)	4,096	10,994	11,001	17,546	20,301
	가입률(%)	17.5	18.3	15.2	18.2	23.4
지원율 및 지원액	순보험료(%)	30	50	50	50	61.2
	운영비(%)	50	70	80	90	100
	국고지원액	2,183	8,590	16,224	37,803	49,371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407	6,913	10,134	3,177	5,877
	보험금	1,379	34,709	50,018	13,599	23,871
	손해율(%)	45.7	433.4	290.8	42.3	43.5

* 주1) 본사업 시작년도 : 사과·배(2003), 복숭아·포도·단감·감귤(2004)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허훈)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점차적으로 최근 태풍, 화재, 호우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를 중심으로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편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홍보·농가안내 등을 강화하고 지원예산도 2005년 예산 대비 17.5% 증가한 2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43>

가축공제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P)
소	7.0	7.2	7.3	8.3
돼 지	43.4	49.9	57.6	58.4
말	2.1	1.9	4.9	4.3
닭	17.4	22.3	32.8	30.3

자료 : 농림부 축산국

그간 공제가입 대상축종이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6개 축종에서 2006년도에 사슴, 칠면조를 추가하여 총 8개 축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가축공제 확대를 위하여 “가축공제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06.02)” 결과를 토대로 '06년 6월에 가축공제 개선대책을 마련 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06년 10월부터 민영 보험사도 가축공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06년 8월부터는 공제가입농가가 보장비율을 선택 가능하며, '07.01부터는 가금류에 대하여 설해 피해를 보장할 계획과 축사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있다.

(축산정책과 축산사무관 박홍식)

마.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 실적

농업재해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지원과 농가

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구지원단가 인상 등 재해지원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실질적인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을 요망하고 있으나, 타 분야간의 형평성 유지 및 국가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재해발생이 빈번하여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도모와 복구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작물 대파대, 가축입식비, 농경지 및 농업시설물 등의 복구지원단가 현실화와 농경지, 농업시설물의 보조율 상향조정 및 규모에 따른 보조율 차등지원 철폐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04년도에 과수 및 화훼류 2개 품목의 대파대 단가를 7.9~18.7% 인상하고, 농림시설물 등 9개 품목의 복구지원단가도 최대 156.8% 인상하였으며,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등 과수재배시설의 복구지원단가를 신설하였다. 또한 '05년도에는 사슴, 지렁이 등 11개 품목의 복구지원단가를 신설하는 등 재해지원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장영국)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국민소득증가와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국민의 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이며,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

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05년까지 246억원(국고 123, 지방비 123)을 지원하여 전국에 123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05년에 20개마을 가입)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5년도에는 리더쉽육성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동기화과정(입문과정) 등 4개과정을 운영하였으며, 1,70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자문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05년 40개마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위

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관광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박람회(68천명 관람),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농촌체험행사,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 다양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2003년 11월 개최된 한·칠레 FTA 체결과 관련 ‘경제 4단체와 농민단체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고, 2003년 12월 11일에는 대통령, 경제5단체, 농협 등이 참여하여 ‘농촌사랑공동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는 ‘1사1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2004년 5월에는 1사1촌 자매결연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6월에는 경제5단체와 농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사랑 협력 조인식 및 1사1촌 자매결연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2005년 말까지 총 8,677건의 자매결연 체결과 농촌사랑국민운동 135만명 회원이 가입하였으며, 농촌마을방문, 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고, 도농상생한마당 행사에 7만명이 참석하는 등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도농교류 수요확대와 활성화, 홍보·교육, 농촌투자유치 등 도농교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촌공사에 도농교류센터를 설치(2004년 4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회복의 전기가 되고, 아울러,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관 이영길, 사무관 전영미)

2.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84년부터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2014년까지 4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여온 사업이며, 사업시행 초기에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98이후 IMF영향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입주업체 경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로망 확충과 수도권내 입지부족 등으로 지자체나 기업체로부터 농공단지를 찾는 수요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매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신규추이 : ('99) 1개소 → ('02) 4 → ('03) 11 → ('04) 12 → ('05) 10
→ ('06) 7

2005년에는 농공단지 신규 10개소를 포함하여 32개소에 302억원을 지원하여 '05년까지 314개소를 완공하였으며, '05년말 현재 농공단지의 분양율은 98.0%, 가동율은 90.6%로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44> 전국 산업단지 분양 및 가동 현황

구 분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분 양 율 (%)	98.0	98.2	93.8
가 동 율 (%)	90.6	85.2	85.3

자료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5.12)

또한 2004년도부터는 농공단지의 종류를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하되, 지역특화업종 비중(업체수, 면적기준)을 3/4이상에서 1/2이상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특화단지 조성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한도를 10억원 이내에서 25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의 향토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농촌사회과 행정주사 최윤태)

3.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005년도에는 신규업체 지원보다는 기존업체의 현대화·자동화에 중점을 둔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육성하였고,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업체는 조기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 등 가능성 있는 우수업체는 운영활성화 자금지원 등으로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여 평균 매출신장을 높여 나갔다.

또한 자체 홍보능력이 부족한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의 홍보물 제작 지원, 포장(용기)디자인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경영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매확대를 유도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판매·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표 2-2-45> 농산물가공산업 추진계획(2005년)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가공공장 건설			가공원료 구입자금	판매· 홍보	합 계
	신규	시 설 개 보수	소계			
용자	개소수	3	2	5	202	207
	지원액	7	4	11	825	836
보조	개소수				-	-
	지원액				40	40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우양호)

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도시민의 관광·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웰빙문화의 확산,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체험·여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속에서 도

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가족단위 체험·여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유익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05년까지 전국에 123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을 주도하는 마을리더·주민들의 사업추진·운영능력 배양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40개마을)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20개마을 가입)하고, 농산어촌체험박람회, 농촌체험행사, 농산어촌체험여행 지도 제작·배포, 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후, 전국에서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면서 도시민 및 농업인, 지자체의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5년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에 994천명이 방문하고, 11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도시민 초청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며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 행정과 주민간 일체의 노력 및 기업과의 자매결연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한 사례, 마을주민·출향인·귀농예술인이 협력하여 농촌 전통문화와 농사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로 성장한 사례 등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과 사무관 전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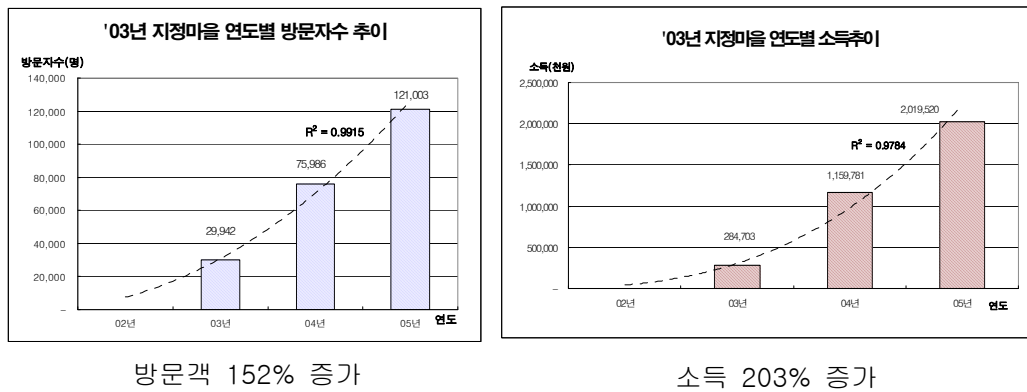
5.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주5일 근무제, 전원생활 등 웰빙 문화 확산으로 농촌체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약화로 농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까지 총 66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2006년도에 추가로 31개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관련 공무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가주택 리모델링, 테마상품 브랜드화, 빈집활용 도시민농촌생활지원 등 사업 단계별로 추가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지역 어메니티 자원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증가로 농촌지역 경제 활력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05.4월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육성사업의 가장 성공한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림 2-2-3> 2005년도 사업성과



앞으로 2008년까지 총 160개 마을을 집중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장단계별 매뉴

업 개발 지원, 마을 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품질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농촌전통테마마을이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활력 증진의 핵심사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제9절 농촌활력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1.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5개년계획□□ 수립 추진

가. 수립배경

대외적으로 DDA협상 진행, FTA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와 대내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와 농림어업 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로 농산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도시에 집중되는 등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과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및 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의 취약으로 도농간 생활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UR이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 등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영농규모화 등 농업내부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등 농어촌의 생활 인프라는 정책적 관심부족과 추진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범정부차원의 통합조정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아니라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평균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급격히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농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농촌사회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04.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04.6.6)된 이후 15개부처에서 부처별로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복지·교육·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2005.1.21)하였다.

상기 기본계획(안)의 심의·확정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2005.1.25)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2005.2.1)가 개최되어 기본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교육부문의 통학버스 증차, 농어촌 교원 해외연수 등 일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005.2.22)를 개최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보완하였으며, 두 차례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2005.2.25, 2005.4.1)에서 논의하여 검토·보완한 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제2차 심의(2005.4.16)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2005.4.21)하였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2004년 2월 발표한 농업·농촌 발전계획중 농외소득 분야와 농촌정책 분야를 보다 구체화한 계획으로서,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 해오던 농산어촌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을 처음으로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체계화한 중장기계획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동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5년도 시행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2005.6.20)하고,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및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2005.6.22) 하였다.

또한,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에 따라 각 시·도, 시·군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류 체계(Feedback system)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동 평가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점검·평가단」도 농업인 단체 대표, 전문 연구기관, 대학교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하였다.

다. 주요내용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은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등 도시근로자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보건소 시설·장비보강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며,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등 여성과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의 대입특별전형비율을 확대(3% → 4%)하며, 중심학교 위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초·중·고를 통합 운영하는 등 교육단계별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농림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우수교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주택 신·개축 자금 사용자조건 개선, 초고속 통신망 구축,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농산어촌에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주요 소도읍 및 면소재지를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은 생활권역 단위로 종합개발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향토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및 농공단지를 향토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단지로 육성하는 등 향토산업 진흥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며, 체험관광마을 확충, 1사1촌 운동 확대 등 도·농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상기 4대중점 추진과제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통해 향후 5년간 20.3조원을 집중 투융자 함으로써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상의 투융자계획 재원을 살펴보면 총 투자 규모는 20조 2,731억 원으로 국비가 11조 5,527억원(57%), 지방비가 8조 1,659억원(40.3%)이고, 민자등 기타는 5,545억원(2.7%)이다. 이중 국비 11조 5,527억원은 119조 투융자계획상의 재원 7조 6,862억원(67%)과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 재원 3조 8,665억원(33%)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로는 복지 부문에 3조 4,226억원(16.9%), 교육 부문에 3조 1,473억원(15.5%), 지역개발 부문에 11조 2,480억원(55.5%), 복합산업 부문에 2조 4,552억원(12.1%)을 투융자 할 계획이다. 부문별 연차별 투융자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2-46>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투융자계획 ('05~'09)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05-'09 합계	'05-'09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총투자소요	24,860 (14,895)	28,140 (15,101)	35,854 (18,981)	41,960 (23,938)	46,101 (27,117)	50,676 (30,390)	202,731 (115,527)	15.8 (19.1)
복지증진	3,098	4,151	6,535	7,123	7,664	8,753	34,226	20.5
교육여건개선	2,149	3,380	6,362	7,071	7,298	7,362	31,473	21.5
지역개발	16,697	16,884	18,895	22,579	25,452	28,670	112,480	14.2
복합산업	2,916	3,725	4,062	5,187	5,687	5,891	24,552	12.1

* () 내는 국비지원 규모

(농촌정책과 서기관 한중현)

2.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전국 면지역중 오지·도서·무인면을 제외한 정주권개발 대상면과 광역시 자치구중 준농어촌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내의 기초생활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수요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쾌적한 주거·체류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이며,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 등은 입주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755개면과 15개 자치구에 대하여 정주기반확충사업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 197개소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향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785개 면과 15개자치구에 대하여 마을안길정비,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정비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2단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원마을조성사업을 30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균특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별 지원조건은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면당 3~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30억원('06년까지 국고 100%, '07년 이후부터는 국고 80%, 지방비 20%)을 지원하며,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지구당 2~3년에 걸쳐 10~2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해 총 2,283억원(국고 1,916, 지방비 211, 용자 156)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338개면에 대하여 마을내도로정비 247km, 상수도 21개소, 하수도 43km, 마을간연결도로 163km,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73개소 등을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하였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04년 이전에 착공하여 사업추진인 21지구에 대한 마을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14지구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지구는 '06년까지 지원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 시범착공한 2지구에 대하여 계속지원하고, 28지구를 신규로 착수하는 등 총 30지구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한준희, 농촌정책과 토목사무관 박종민)

나.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면단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4년말 현재 35.2% 수준으로 도시지역 98.2%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며,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은 우물·계곡수 등 자연수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해결 의존하고 있으나, 우물·계곡수 등은 가뭄시 쉽게 건천화되고, 생활오수·

축산폐수·기타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양질의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47>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대상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전 국		49,053	44,187	90.1	
도시	특광역시	22,068	22,793	98.8	98.2
	시 지역	16,618	16,166	97.3	
농촌	읍 지역	4,076	3,364	82.5	55.8
	면 지역	5,291	1,864	35.2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2005)

이에 따라, 면단위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시 농업용수와 농산물세척용수까지 병행하여 공급하는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589억원을 지원하여 346개소를 개발함으로써, 2005년까지 5,097개소를 완공, 1,079천명에게 생활,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태형)

다.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주택의 노후화와 빈집의 증가, 오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농촌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웰빙과 녹색공간으로서 농촌이 재조명되고 농촌의 고유한 생태적, 문화적 자원 등 어메니티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면서 농촌이 건강과 장수의 대안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순환 방법을 이용한 친환경화장실을 2001년부터 2004

년까지 1,218개소를 보급하였다. 이 화장실의 특성은 병원성 균의 완전사멸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가 없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 없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비화와 액비로 활용함으로써 수질오염방지, 수자원절약, 분뇨처리장 건설 및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비닐하우스 단지 내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농작업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활가능성, 에너지 절약, 전통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1~2004)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농촌다운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5마을 82농가에 시범 보급하였다.

이 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민박농가 중심으로 전통적 농촌주거문화의 유지보전, 현대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성 확보를 통해 농촌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텃밭, 화단, 장독대, 정원, 생울타리, 건물외벽 녹화 등 옥외 공간 조성, 도배, 장판 등 주요사항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주택 내부 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구성 요소 적용과 문화생활, 휴식공간, 손님맞이공간 설치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웰빙공간(생활+민박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지친 도시민에게는 휴식을, 농가에게는 소득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사업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5년도 70개 지역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전국 600지역 1,230읍면에 대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생태환경, 경관, 유적지, 전통기술, 특산물 등 지역 고유의 농촌자원을 도식화,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어메니티자원도를 구축하고 있다.

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작업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06년도에는 사업비 79억원으로 158개소에 설치하였다

마을단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교육, 우수지역 현지견학,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회관설치사업,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여타사업과도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심야전기, 태양열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근 보건소, 일반병원 및 체육협회등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농업인 건강을 책임지는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연찬회(6월), 사업현황 실태조사(9월), 운영발전워크숍(10월) 등을 개최하였다

마.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들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05년 신규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계획을 수립,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신규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05년도 100개소에 총 사업비 42억원(개소당 42백만원, 3년간 육성, 국비, 지방비 각 50%)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06년은 300마을 육성('05년도 선정 100마을, '06년도 신규선정 200마을)을 목표로 개소당 50백만원씩 지원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과 55세~64세의 예비노인에게 소득경제활동,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 4영역을 접목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노인은 복지수혜의 대상이기도 하나, 우리 사회의 귀중한 문화적·생산적 자원인 만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기관, 정부부처,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사업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마을민 스스로 주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주민 협의를 통하여 3년간 마을 육성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최근 들어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 여건 변화로 농촌을 단순 식량 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농촌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종합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2004년부터 상향식의 주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소권역(3~5개 법정리)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권역발전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시부터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권역당 3~5년간 총 70억원(국고80%, 지방비20%) 범위내에서 권역의 크기, 가구수, 기본계획상의 사업내용, 유사정책사업 지원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 시 단계별로 전문가의 평가·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총 535억원(국고 428, 지방비 107)을 투입하여 '04년도에 선정된 36개 권역에 대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61억원(국고)을 투입하여 지역개발전문가와 농촌공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자체에서 신청한 50개 권역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40개 권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권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

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 방식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권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현장에서 자문회를 개최 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마을개발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사업 활성화방안 도출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워크숍과 지역개발 주체역량 제고를 위해 권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한준희)

4. 농촌의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가. 복지지원 개선

정부는 '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농촌의 사회보장 수준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04년도에는 농어민 건강보험료의 경감 확대 및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수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준비를 다 하였다.

농어민 건강보험료는 '03년까지 농어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납입보험료의 22%를 경감 지원하여 왔으나, '04년부터는 우리부에서 8% 추가지원을 하여 총 30%를 경감지원하고 있다. 또한 '04년 7월부터는 시지역 중 동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민에게도 지원을 추진하였고, 2005년도에는 우리부 18% 추가지원을 하여 총 40%를 경감 지원해 오고 있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은 '05년에는 표준소득월액 12등급(440,000원) 소득 이하는 보험료의 50%를, 12등급 소득 초과는 12등급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1인당 연간 최고 224,400원을 지원하였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협 안전공제의 사망공제금 보상수준을 '04년 1,000만원에서 '05년에는 1,5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엄기훈)

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199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담당하여 오다 2004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되어 지원하고 있다.

1인당 한 학기 지원금액을 2000년까지는 100만원, 2002년 150만원, 2003년 200만원, 2004년부터는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 범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까지 지원실적은 226천명, 3,279억원이다.

<표 2-2-48>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명, 억원)

1994~1999		2000~2004		2005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0	993	101	1,649	25	637	226	3,279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199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사업시행 초기에는 농촌의 면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4년도에 읍·면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실업계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2001년에 편모농업인에 이어 2002년도에는 편부농업인의 인문계 고교생 자녀까지,

2003년도에는 인문계를 포함하여 전 고교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원대상은 '90년 사업시행부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양축인·임업인·어업인의 자녀 중 실업계·인문계 고교생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경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가까지 확대 지원하였고, 2005년도부터는 전농어가로 확대하여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까지 총 1,700천명, 7,688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49>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연도	대 상	비 고
1990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고교 1, 2학년생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가)	전액 국고 지원
1991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3학년 추가
1992	면지역 중 2, 3학년,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중 도서벽지 실업고생 추가 지원 1993부터 지방비 2/3부담
1994	면지역 실업계 고교생	중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1997	읍·면지역, 시의 개발제한구역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 전체, 시의 개발제한구역 확대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1999	상 동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자녀 포함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2001	편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까지	상 동
2002	편부·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까지	상 동
2003	인문계 포함 전 고교생까지	상 동
2004	상 동 (경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가)	상 동
2005	전 농어가로 확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교부세로 지원)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표 2-2-50>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1990~1992		1993~1996		1997~2004		2005		계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626	148,179 (148,179)	400	173,806 (57,466)	576	364,060 (109,319)	98	82,800	1,700	768,845

주 : ()내서는 국고지원액(1990~1992 100%, 1993~1996 ⅓, 1997~'04 30% 부담), 2005년 이후 지방이양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전국 11개 학교 자영농과 재학생에게 기숙사 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 고취하고 농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젊고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98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지원실적은 총 35천명, 203억원이다.

<표 2-2-51>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1986~1992		1993~1997		1998~2004		'05		계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9,446	4,135 (827)	6,235	3,050 (610)	17,042	11,825 (2,281)	2,466	1,303	35,189	20,313

주 : ()내서는 국고지원액(20% 부담), '05년 이후 지방이양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농촌사회과 농업사무관 한철수)

마. 농촌 노인 복지 지원 강화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어촌 노인에 적합한 일거리나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장수마을을 '05년 100개 마을 육성하였으며, '06

년도에는 30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도 '05년도에 56개소 설치하고 '06년부터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로 구성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5. 농업·농촌정보화의 확대 추진

농업·농촌정보화 기반의 확충과 디지털 유통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2005년 농림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등 농촌지역 정보활용기반을 개선하고 출하지원시스템의 기능 확충,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 강화 및 농업·농촌 정보콘텐츠 확충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

농업인·소비자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농림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30개 농림유관기관의 정보를 수집·분류하여 농림수산정보망과 농림지식검색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AgriX시스템을 구축하여 농림사업 추진방식을 기존 off-line에서 on-line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동안 농림사업관리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신청·대상자선정·자금 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어, 사업대상자가 중복선정 및 지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사후관리 또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2013년까지 투자되는 119조원의 농림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업무처리방식을 On-line화하여 시군·시도·농림부에서 사업진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는 동시에 업무경감과 사업집행의 투명화를 통해 농림행정을 혁신코자 고안된 시스템이다.

'04년도에 농업·농촌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AgriX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전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04.11~'05.4)하였다. 시범사업결과 일선 시도·시군담당자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05년도에는 직접지불제 사업군과 산지유통관련사업 등 11개 업무를 대상으로 신청서식 표준화 및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등 업무재설계(BPR)를 추진하였다. 이중 5개 업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서식 표준화를 통해 공통서식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기본DB를 구축하고 정책기초자료 제공, 사업대상자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림사업 추진방식을 기존 off-line에서 on-line(사업신청-대상자선정-사업이행-자금집행)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별도보고 없이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도에 따르도록 개정하였다.

AgriX의 구축이 완료되면 반복·중복처리에 따른 비효율제거 등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약 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기본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이력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져 농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조규표)

나. 농업·농촌 정보컨텐츠 확충

농림수산정보망(www.affis.net)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영농활동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에게는 우리 농업·농촌의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 농업 관련뉴스, 성공사례, 문화·교육 등 100여개의 콘텐츠와 함께 품목별, 지역별 동호회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편의제공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67개 품목)과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유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유관기관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농림지식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농림부와 소속/유관기관(30개)이 각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농림관련 지식정보를 수집·분류하여 이용자가 농림 관련기관 중 어느 한 기관에 접속하여 찾고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른 관련기관과 민간포털인  (다음)이 보유한 농림정보까지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9년 106농가 지원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총1,706농가에 대해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온라인 상담 및 현장 집합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능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우수농가를 발굴·홍보하고 소비자의 참여유도를 위해 주 소비 계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이용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이대형)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교육이수자, 희망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 요구 및 과정별 전문화와 차별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교육생 수준 및 교육목적에 맞게 컴퓨터·인터넷 활용과정, 농업정보 활용과정, 농업용S/W 활용과정 등으로 개편하였으며, 교육희망자의 유형에 따라 과정내에서 기초·심화 등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농업인이 가장 가까운 기관에서 기초·중급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가 공히 컴퓨터·인터넷 활용과정, 농업정보 활용과정을 운영토록 하여 상하위 교육을 연계시켰다. 또한 농업용 S/W활용 전문교육은 전국 22개 농과대학에서 실시하였고, 지역별 특성화된 수요자 맞춤형교육인 전문교육 공모과정을 확대 실시하였다.

<표 2-2-52>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98~'02	2003	2004	2005
총 계	469,752	253,286	71,734	77,352	67,380
기초교육 (컴퓨터·인터넷활용)	145,311	97,596	20,126	20,445	7,144
중급교육 (농업정보활용)	61,144	28,512	12,843	13,182	6,607
경영·회계 S/W(중기)	1,766	-	-	-	1,766
품목·분야별 전문교육	17,167	11,693	2,379	2,039	1,056
농업정보 119서비스	81,462	43,100	13,098	13,190	12,074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9,278	5,388	2,090	1,230	570
정보화선도자	51,506	1,374	9,897	16,292	23,943
자체교육(농협,기술센터)	46,666	20,938	10,838	6,821	8,069
온라인교육	7,712	739	463	2,722	3,788
원격지원서비스	3,794	-	-	1,431	2,363
생산자단체(농협)교육	11,186	11,186	-	-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농가방문교육)	32,760	32,760	-	-	-

자료 :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이대형)

농촌현장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버스교육은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충분한 맞춤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전국 9개도 81개 시군에 정보화선도자를 선정하여, 농업정보119서비스와 정보화선도자가 상호 연계하여 농가현장 방문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신청과 교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을 농업인과 교육시행기관의 담당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의 재택 반복교육을 위해 온라인 원격교육의 콘텐츠를 확충하였다.

라. 디지털사랑방 구축사업 추진

전국 45개마을('03년 5개, '04년 20개, '05년 20개)에 디지털사랑방을 설치 지원하여 정보화선도자 등을 통한 농업인등 마을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등이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화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다.

<표 2-2-53> 지역별 디지털사랑방 설치현황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03(시범사업)		1			1	1	2			5
'04	2	2	2	3	2	3	3	2	1	20
'05	2	2	2	3	2	3	3	2	1	20
계	4	5	4	6	5	7	8	4	2	45

마을별 지원규모는 3천만원(국고 50%, 지방비 50%)으로, 마을별 컴퓨터 5대,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대형 TV 또는 빔프로젝터 등 공동정보이용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마을에서 생산되는 지역 및 농산물 홍보, 마을주민과 출향민 또는 도시민과의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지역적 여건 때문에 정보화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업·농촌에 정보접근기회가 제공되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고, 주민들에게 정보화가 소득창출 기회의 수단일 수 있다는 인식도 심어주었다. 또 하나의 성과는 마을단위 공동관심사에 대한 주민참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디지털사랑방이 IT세계에의 상시 접근과 마을현안에 대한 의견수렴·토론의 장으로 운영되고, 이를 계기로 마을주민의 공동체인식이 확산되고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관심도 증대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사랑방 구축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어,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06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제10절 농정제도 개혁

1. 농지제도 개선

급격한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의 진전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구조개선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 농정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지제도를 재검토하여 농업인의 실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우선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농업계 내외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개정 농지법이 2005.7.21자로 공포되어 2006.1.22부터 시행(농지 임대허용범위 확대 관련사항은 2005.10.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비농업인의 참여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농지 소유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적 경영을 위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타부문의 자본·기술·인력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의 출자지분을 현행 2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임차료 안정 및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5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의 임대를 허용하였으며, 규모화된 농지의 세분화 방지를 위해 상속농지·이농후 계속 소유농지의 소유상한 예외를 허용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경우 상속은 2ha까지, 이농은 면적상한 없이 임대기간동안 소유를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지은행에

매도 위탁한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하여 농지처분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식량생산 및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 한계농지 등 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전용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소득 및 편의 증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부과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선하여 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농지과 행정사무관 송태복)

2. 농지은행제도 도입

쌀 소비감소,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시장 불안을 사전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농지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법□□은 2005.7.21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2005.12.29일 개정하였다.

농지은행의 주요기능으로는 농지유동화정보제공, 농지임대·매도수탁관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사업이 있다.

2005.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 등 농지유동화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06년 1월부터는 농어촌종합정보포털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2005.10.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5년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 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였다.

* '05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적 : 111.7ha, 234건 수탁계약 체결

연체, 재해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다음 임대기간중 환매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회생을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과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매도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하여 전업농·창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도수탁사업”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06년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한 후,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06년에는 농지은행제도 정착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농지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3.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기존의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농림부의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따라 새로운 농업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부터 12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기본 정책방향

(1) 생산위주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농정시스템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증대 효과를 창출하며, 대내외적인 농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19조 투융자의 효율성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2) 클러스터 사업은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내 산·학·관·연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3) 클러스터 사업은 2013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도는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개소당 평균 6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거쳐 클러스터 정책과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2008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다. 시범사업 추진현황

(1) 사업추진방안 수립

가) '04.2.23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시 농정추진 및 지원체계 개편과 지역농업발전전략을 포함하고, '04.3.8 □□대통령 업무보고□□시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보고하였다.

나) '04.5.25~10.31 □□지역농업클러스터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초청 토론회, 현장사례조사, 지역농업 활성화 워크숍, 지방농정과장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다) '05.1.4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05.1.18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로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시범사업 추진

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한 후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에 총 63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광역지자체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공개발표평가를 거쳐 농림부에 총 28개의 사업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농림부는 사업부서의 사업성 심사, 실무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및 현지심사,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의 심사 등 전문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특색있고 다양한 유형의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발표한 후 각 사업단별 사업규모 및 내용을 고려하여 2005년도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며, 각 사업단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3년간의 농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년차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2-54>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유형별 현황

구 분	주도적 혁신주체 구분				특성화 정도 구분			
	대학·연구소	생산자단체	관련기업	지자체	생산·유통	가공	테마	
기초	단수 (13)	영동포도, 풍기인삼 (2)	안성마춤 (1)	포천 한과(1)	괴산고추,아산친환경, 서천모시,장수사과, 정읍순환농업,임실치즈, 보성녹차,함평과학농업, 하동녹차(9)	안성마춤, 괴산고추, 장수사과, 임실치즈, 보성녹차, 풍기인삼(6)	포천한과, 영동포도, 서천모시, 함평과학농업, 하동녹차(5)	아산친환경, 정읍순환 농업(2)
	복수 (5)	경남양돈 (1)	강원한우, 백두대간, 전남쌀, 경남쌀 (4)			강원한우, 백두대간, 전남쌀, 경남쌀, 경남양돈 (5)		
	소계 (18)	3	5	1	9	11	5	2
광역(2)	경북한우 (1)			제주감귤(1)	경북한우, 제주감귤(2)			
합계(20)	4	5	1	10	13	5	2	

라) 또한, 농림부는 시범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이외에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통시설 지원 등 기존의 다른 농림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20개 시범사업단간 지식과 기술 등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위한 □□사업단 총괄책임자협의회□□와 사업단의 현안 및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다.

(구조정책과 행정사무관 안창근)

제11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 대응

1. WTO/DDA 농업협상 추진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2005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전세계 주요외신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홍콩 각료회의가 DDA 협상 진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제네바, 시애틀, 도하, 칸쿤에서 5번에 걸쳐 각료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된 이후 법인격을 가진 WTO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고,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려는 노력은 제4차 WTO 각료회의인 도하 각료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된다. 농업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인 농업협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에 포함되게 된다. DDA 협상 의제는 농업, 비농산물(NAMA), 서비스, 개발, 규범 등으로 구성되며, 당초에는 제5차 각료회의인 칸쿤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시장개방의 방법과 폭에 대한 선개도국, 수출입

국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협상 타결에 실패하였다.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경험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선도하는 WTO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무언가 DDA 협상 진전에 있어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회원국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

홍콩 각료회의 직전까지 회원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있었으나,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DDA 협상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 특히 농업에 대한 입장차가 아직도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modalities) 타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데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비록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을 타결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가 있었으나, 회원국들은 홍콩 각료회의 각료선언문에 자국에게 유리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홍콩 각료회의 개최식 이전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12월 13일 오전에 G10 각료회의와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연이어 G33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G10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박홍수 농림부 장관, 일본의 나카가와 농림수산대신, 스위스의 다이스 경제부장관 등 각료들이 대거 참석하여 DDA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G10 공조를 평가하고 향후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G10 각료회의 직후 G10 각료공동기자회견에서 박홍수 장관은 DDA 협상에서 각국의 다양한 농업현실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홍콩을 방문한 우리 농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기 위해 홍콩에 방문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다. G33 각료회의에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각료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의 중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기로 의견을 조율하였다. 특히,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핵심이 “개발(Development)” 문제이므로 개발 문제의 핵심요소로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포함시키

자고 합의하였다. G33은 또한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한 G33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타 개도국과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6일 G33과 G20 공동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공동각료회의에서 다시 한번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홍콩 각료선언문은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해 상세하고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G10은 홍콩 각료회의 기간중 매일 수시로 접촉하면서 협상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홍콩 각료회의 기간중에는 민감품목에 협상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조율하고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국들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많이 노력하였다. 그간 G10은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에 비해 시장개방폭이 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등 수출국들은 관세감축과 TRQ 증량간에 선택을 허용한 것도 큰 양보라고 주장하면서 수입국들을 압박해 왔다.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입국간 치열한 대결 끝에 홍콩 각료선언문에는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검토해 나간다고 기술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국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각료회의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향후 DDA 협상일정을 정한 것이다. 홍콩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향후 일정에 대하여 시한 준수 여부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거나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협상의 향후 일정을 정함으로써 향후 협상을 가속화할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농업분야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크게 EU와 미국, 수출국들간 입장 대립이 극심하였던 수출보조 철폐 시한을 정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수출국들은 2010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EU가 수출보조적 성격을 띤 수출보조 조치들도 함께 2013년까지 철폐한다는 데 동의함에 따라 수출보조 철폐시한이 정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개도국들에 한하여 수출물류비 등은 수출보조 철폐 이

후 5년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철폐대상인 수출보조는 양허된 것이 없으나,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감축면제 대상이던 수출물류비 등의 보조는 앞으로 2018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나. DDA 농업협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농업협상 추진체계 강화

정부는 홍콩 각료회의에 이르는 장기간의 협상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이해관계국 들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농업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유도하고 각계의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협상동향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협상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매협상시마다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E-mailing 서비스 등을 통해 알려왔고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다. 농업통상정책협의회 및 현장출장 등을 이용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DDA 농업협상이 당초 협상일정을 넘겨 계속 진행됨에 따라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협상과 관련한 농림부내의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DDA 농업협상을 전담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였던 1급 상당의 고위직(농업통상정책관)을 2007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한편, 통상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본부와 해외 협상담당자로 배치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상정책협의회·통상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국내외 통상전문변호사를 자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농업협상과 사무관 김경미)

2.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

한국은 2002년 체결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한-EFTA(스위스·아이슬란드·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와의 FTA 체결 이

후, 한-아세안 FTA는 2005년 2월에 제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미얀마·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태국·브루나이·싱가포르·필리핀 등 10개국이다.

ASEAN과 2004년 11월에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2005년 상반기 중 FTA 협상을 개시하여 2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09년까지 최소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의 80%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에는 대아세안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여 개별 품목에 대한 연구 및 분석모형을 검토가 선행되었다.

한·ASEAN FTA는 2005년 2월에 개시되어 2005년 11월까지 8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기본협정문과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또한 상품양허 기준인 관세철폐방식(Modality)에서도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이에 따라 양측 정상들은 2005년 12월 13일 한·ASEAN 정상회담에서 기본협정문에 서명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기존에 역내 자유무역협정(AFTA : Asean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회원국 상호간 관세 인하 협정을 맺은 바 있다. 2005년 한-아세안 FTA 협상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55> 2005년 협상 개요 및 진행 상황

협상 시기	협상 주요 내용
1차(2.23-25)	○ 협상 시작, 자유화 범위 논의
2차(4.19-21)	○ 자유화 범위·방식 논의
3차(6.8-11)	○ 협정 당사자 및 성격(양자·다자협정) 논의
4·5차(7·8월)	○ 일반 품목의 자유화 문제 논의
6차(9.23-26)	○ 상품 자유화 방식(modality), 민감품목군 크기 결정 기준 ○ 초민감품목 처리 방식
7차(10.9-13)	○ 원산지 협정문 합의(불인정공정, 직접운송, 개성공단 제외)
8차(11.16-18)	○ 상품협정 쟁점(SPS, 수출세, 세이프가드, BOP 등) 논의 ○ 상품 협정문 협상 종결

(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피계림)

3. 한·캐나다 FTA 협상 대응

지난 7월 15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통상장관이 한-캐나다 FTA 협상 출범을 공식선언함으로써 캐나다가 칠레, 싱가포르, EFTA에 이어 한국의 6번째 FTA 협상 파트너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에 한발 내딛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로 적은 조정 비용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국은 2005년 두차례의 예비협의를(1월, 3월)를 통해 수준 높은 FTA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관심사를 확인하였다. 이후 공청회, FTA 실무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국내외건 수렴절차를 거쳐 캐나다를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하였다.

캐나다는 2005년 현재 세계 제3위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NAFTA,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와 FTA를 맺고 있다. '04년 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감귤, 배, 파스타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돼지고기, 밀, 우지, 유장, 감자, 유채유 등이다. 향후 협상에서 이들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철폐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캐나다 FTA협상은 '05년 12월 현재 제3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제1차 협상(7.28, 서울)은 분과구성, 협상일정 등 향후 협상의 틀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는 캐나다가 자국의 정치 상황으로 FTA 협상개시를 미루자 우리측의 요구로 1차 협상을 개최하되 우선 부담이 덜 되는 행정사항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2차 협상(9.27~30, 서울)은 캐나다가 9월초 마련한 협정문 초안에 대한 우리측 검토의견을 토대로 협정문 완성을 목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양국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미합의 사항은 추후 협상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상기 협상에서 캐나다는 관세철폐 수준(Scope of Tariff Offers)과 관련하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02~'04년 수입액의 99%이상을 양허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농업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분야 관세철폐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하여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로 풀이된다.

제3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의 잔여쟁점과 관세철폐안과 관련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다. 캐측은 자국의 조선·자동차 시장 개방을 알리면서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위해 우리의 농산물 시장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캐측은 조선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를 비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철강·자동차 관련 반덤핑관세 조항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전면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구실로 농산물 시장 개방의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관세철폐안 협상의 진전을 위해 캐나다는 2차 협상시 제기한 최근 3년간 수입액 99%이상 품목 관세철폐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 제4차 협상에서 양허제외품목과 7년이상 장기관세철폐 품목의 리스트를 교환키로 합의하였다.

향후 캐나다와 농업협상은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PT) 수혜국이고 대(對) 캐나다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관세는 무관세이거나 10%이하의 저율관세가 부과되어 있을 뿐이다. 반대로 캐나다의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액 규모는 한국보다 약 10배 이상 많고 대부분 고관세 품목이라 캐나다로서는 우리나라의 관세 양허를 통한 실질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더욱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또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캐나다는 조선·자동차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전면 개방 가능성을 알리고 농산물에 대한 높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측은 협상목표로서 양허이득의 분야별 상호 균형을 강조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민감성을 계속 주지시키는 한편 양허안 작성시 예외품목의 확보, 양허수준의 다양화, 농산물에 관한 특별세이프가드의 도입 등 다각적 접근과 전략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이용직)

4. 남북농업협력 추진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화해 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지원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 정부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중 정부차원의 지원액은 '05년 현재 총 8억 5,982만 달러로 전체 대북지원액의 62.6%를 차지하며 정부는 '95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하여 식량 및 농자재 지원을 하였다. '95년 쌀 15만톤 무상 지원을 시작으로 '00년부터 '05년까지 200만톤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였고, '99년부터 비료 11.5만톤을 당국차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20~30만톤씩 '05년까지 총 186.5만톤(5,823억원)을 무상지원하였다. 남북 당국간 인도적 지원은 적십자사와 남북경추위를 창구로 진행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WFP, UNICE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간접지원방식으로 옥수수 등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2005년도 곡물생산량은 전년 431만톤에 비해 5.3%증가한 454만톤으로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WFP, WHO, UNICEF 등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대북지원 채널을 통해 북한의 당면한 식량난 완화 및 남북관계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한 반면, 개혁개방 및 남북경협확대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농업협력사업 추진은 미흡하였다.

나. 민간지원단체

'95년부터 시작된 민간 대북지원은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1999년 2월 10일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도 독자창구로서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규모는 6,008억원 상당으로서 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이 27.9%이며 나머지 72.1%는 독자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대북지원사업자수는 '99년 10개 단체로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05년도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05년말 54개로 크게 증가되었다.

대북지원 사업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 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다. 남북 농업협력 위원회 발족

남과 북은 2005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고 쌍방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남한의 농림부 차관과 북한의 농업성 부상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여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농업분야협력을 기존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개발지원·협력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당국간의 농업협력 추진방향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시범적 협동농장 조성·운영, 산림복구협력, 농업 과학기술분야협력 등 시범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협력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남측은 협력하는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한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위에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가진다.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농림부 차관 이명수

북남농업협력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부상 문응조

(구조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연숙)

제 3 편



2006년도 농정시책

제1장 2006년도 농정방향 311

제2장 2006년도 주요농정 시책 332

제 1 장 2006년도 농정방향

제1절 2006년도 농정목표

현재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대외적으로는 DDA협상·FTA 확산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안전·건강(Well-Being)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농산물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간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 여가증가에 따라 전원·휴식공간으로서의 농촌 지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 첫째, 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
 - 둘째, 전문 경영체 육성 및 소득 경영안정
 - 셋째, 쌀 산업의 체질강화
 - 넷째,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및 소비촉진
 - 다섯째, 소비자지향적 농식품 안전관리
 - 여섯째,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
- 을 6대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2절 2006년도 농정시책방향

6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특히 2006년도에는
첫째, DDA,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둘째, 쌀 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 따른 후속 대응
셋째, 부채대책 등 경영안전망 구축을 핵심정책으로 삼아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1. DDA,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대비

가. 농가 유형별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차별화

정부는 농업인구 고령화 등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력 차이에 따라 농가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를 오는 2013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농정추진의 전제가 되는 농가유형 분류를 위해 개별농가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가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게 되면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수준에 맞추어 전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행 정책 프로그램은 필요성이 다소 낮은 부문에도 재정이 투입됨으로써 비효율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유형별 정책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되게 되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나.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정부는 썬키스트, 돌과 같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외국 농산물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만 보아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를 길러내는 것이 개방화 시대 농업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광역단위의 브랜드들이 엄격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키워나가고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축산분야는 소비자 단체와 함께 우수브랜드 경영체인증제를 도입하고 금년까지 80개 브랜드 경영체를 선발·지원하고 이들 경영체의 사육비중을 한우의 경우 32%, 돼지의 경우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우·돼지 각각 50%~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축산분야에서의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쌀, 과수, 채소분야 등 전체 농산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사회 활력 회복의 기회로

정부는 농촌인구 감소추세('90 : 11,102천명 → '00 : 9,381)와 고령화(35개군, 771개 읍·면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로 농촌지역의 활력과 자생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민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07년 도시민 입주를 목표로 농촌 복합생활공간 시범마을 4개지구(담양 궁산마을, 의령 양천마을, 제천 도학마을, 상주 녹동마을)에서 상반기 중 공사를 착수하고, 도시민 유치 홍보를 위해 지자체가 전원주거단지 조성계획 및 입주민의 지역봉사활동 지원방안 등을 홍보하는 은퇴자 마을 콘테스트도 금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정주에 필요한 농지·주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귀농·귀촌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농어촌 정보센터를 통한 현장안내 등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라. DDA, FTA 협상 적극 대응

홍콩각료회의('05.12) 합의 시한을 지나서도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였으

나, 핵심쟁점간 입장차이로 협상 일시 중단되었으나 WTO 체제 위기감을 회원국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감안, 주요국들 일부 양보할 경우 협상 재개 후 타결 가능성이 전망된다.

협상이 재개되면 밀도있게 진행될 DDA 농업협상에서 정부는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통해 관세상한 설정반대,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최대한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이행계획서 검증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요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FTA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EFTA 등 농업분야 쟁점이 적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캐나다, 미국 등 농업강국과의 FTA가 추진되는 금년에는 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면서, 관세인하 계획·민감품목 등 주요사항 결정시 농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에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 나가고 있다.

마. 3년주기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평가 추진

2004년에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DDA 농업협상, 한·미 FTA 협상 진전 등 여건변화와 선진국로 발전해가는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 3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계화된 3년주기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작업을 2006년 3월부터 추진하였다.

2005년 12월부터 구성하고 운영해온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농림부내 T/F, 실무협의회, 관계부처협의회를 개편하였으며, 지난 3년 투융자를 평가하기 위한 투융자평가협의회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투융자 평가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평가협의회 운영과 연계하였으며, 연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연구자도 연구에 공동 참여토록 하였다.

금번의 점검·조정작업은 지난 3년간('04~'06)의 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계획) 시행의 결과를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부문별 정책을 조정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계의 제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점검·조정의 기본방향은 개방확대 대비,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득·농촌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농정체계를 농가유형별 맞춤형 체제로 전환하며 농식품 정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것으로 일련의 대책 수립과정에서 농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관계부처,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 점검·조정작업은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2. 쌀 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 따른 후속대응

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활용, 쌀산업 체질강화 추진

정부는 지난해 쌀 협상 국회비준으로 '14년까지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연장되어 이 기간동안 우리쌀이 수입쌀과의 시장경쟁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파워 제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작년 추곡수매제 폐지이후 제도 변경에 따른 불안으로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수확기 혼란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한 후 산물벼 매입방안 재검토, 직불제 지급시기 개선 등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시장물량 흡수와 가격형성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RPC의 퇴출,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경쟁체제 도입 등 RPC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쌀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조정제 시행을 검토하고 쌀 관측제도를 구축하여 농가 자율 생산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타작물 전작 유도를 위해 논콩재배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사료용 총채벌레·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 재배 농가 실증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판용 쌀은 시장수요점검 차원에서 1·3등급 각각 50%씩 수입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시·도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반(228개반, 456명), 명예감시원(25천명) 및 신고포상금 제도(5~100만원) 등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종래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한우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수입재개조건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 위생 조건 확정, 미국내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승인(문제 제기된 작업장에 대한 보완조치 완료) 등의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송아지 입식자제 교육·홍보, 자조금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실시하고,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금년까지 발전가능성 있는 브랜드 경영체 21개를 새로이 선정하여 규모화·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 관리제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09년에서 '08년으로 앞당기고 '07년부터 시행예정인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래 수소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우개량 사업을 '08년까지 암소 100두 내외를 사육하는 육종농가 40호를 선정하여 어미암소의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3. 부채대책 등 경영안전망 구축

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실시

금년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업재해(피해율 50%이상) 및 연체(50백만원 이상)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경영전문성, 영농규모 등을 종합평가하고 대상자 선정 및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 등 농지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농가에 대한 임대기간은 5년(기간 연장가능)으로 하되 임대료는 매입가격×10/1000 이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농지 등 농가 자산에 대한 법원 경매시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매각되어 회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지은행을 통해 정상가로 매각하고 농지은행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아 영농을 계속하면서 부채상환 기회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나.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간 연장

정부는 '01년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부채상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다만 10%이상 원금 상환시 연 3%로 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그 외에는 연 5%로 3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며, 본인·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계획이다. 분할 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4. 농정혁신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가. 2006년도 역점 추진 혁신과제

정부는 정책과제 추진과 함께 ‘농림사업 통합성과 시스템(AgriX)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5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006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

- 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② 재정혁신을 통한 119조원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 ③ 입체적인 정책홍보로 DDA 농업협상의 국민공감대 형성
- ④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 ⑤ 인사혁신·학습을 통한 농림공직자 경쟁력 제고

나. 농업인도 On-line으로 사업신청

정부는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청단계에서 집행·사후관리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농림사업 통합정보 시스템(AgriX)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물류표준화사업, 논농업직불제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부터 직불제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등에 적용·실시되며 '07년에는 과수 관련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신청서식을 표준화하고 업무절차 개선 등 농림사업 BPR(업무재설계)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농업인의 사업신청시 첨부서류가 대폭 생략되어 편의성이 확대되고, 일선공무원의 업무도 대폭 경감되며, 중앙부처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사업진행상황을 파악·분석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기획관실 정책기획팀 행정사무관 윤원습)

제3절 2006년도 농림부문 예산 확보

1. 2006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2006년도 농림예산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편성하였다.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작불예산을 확충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및 부담경감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및 지역개발 중점을 두는 한편, 농업체질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반면 농업생산기반조성, 양곡 매입·관리 부분은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다. 2006년도에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협상비준대책 소요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평가결과를 기초로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중점분야에 증액재원으로 활용하였고, 보조사업은 사업평가와 연계하여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사업추진을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융자사업은 내실화를 위해 이차보전 형식으로 금융기관 자금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첫째,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확보를 위해 직접지불 예산을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부채대책 등 부담경감을 적극 추진하였다. 쌀협상에 따른 쌀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경지경사도 14%이상 영농여건이 열악한 밭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직불은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농가의 경영위험관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출연금 200억을 반영하였다.

둘째, 농촌사회의 안정과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복지 및 교육분야 지원을 확대하였다.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을 2ha미만에서 5ha미만 농가까지 확대하였으며,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영농인력지원, 가사인력지원, 육아비용지원 등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셋째,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등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였고, 논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인상하고 저농약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농약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천적방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04년에 시범 도입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본격 시행하였고, 부적합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강화하였다.

넷째, 산지유통 거점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유통센터건립을 확대하고 경영평가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확대하여 포장 및 하역 기계화를 촉진하였다.

다섯째, 창업농, 쌀 전업농 등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지방단위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였다.

여섯째, 생산기반조성부문은 시행중인 지구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사업은 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2. 2006년 농림예산 규모

2006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총 10조 5,364억원으로 2005년 보다 7.1% 증가되었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1> 2006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감 (B-A)	%
일 반 지 출	I. 주 요 사 업 비	80,982	83,495	2,513	3.1
	1. 생 산 기 반 조 성	15,073	14,470	△603	△4.0
	2. 생 산 및 유 통 개 선	4,422	5,071	649	14.7
	3. 기 술 개 발 및 인 력 육 성	6,415	6,690	275	4.3
	4. 부 담 경 감 및 소 득 보 전	30,850	33,634	2,784	9.0
	5. 양 곡 수 급 안 정	14,412	12,930	△1,482	△10.3
	6. 산 림	7,713	8,799	1,086	14.1
	7. 채 무 상 환	2,097	1,901	△196	△9.3
	II. 기 본 경 비	4,177	4,418	241	5.8
	1. 인 건 비	3,368	3,528	160	4.8
	2. 기 본 사 업 비	809	890	81	10.0
	일 반 지 출 계	85,159	87,913	2,754	3.2
	기 금 전 출 금	13,255	17,451	4,196	31.7
	순 계	98,414	105,364	6,950	7.1

(재정팀 사무관 이정형)

제4절 농정추진 체계 개선

1.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전체 산업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와 우리 농업·농촌·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999년부터 「농·소·정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여성·소비자단체, 농업인단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한 농소정협력사업은 '05년까지 8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매년 10만명 이상의 도

시소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농업·농촌 이해증진, 직거래와 일손돕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우리 농산물 및 환경의 중요성 인식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2006년 농소정협력사업은 공모를 통한 도농교류 사업 외에 농촌지역의 문화사업과 소비자를 위한 교육분야에 작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는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총 51개 단체가 참여하여 도·농교류사업, 농업·농촌알리기사업, 농업·농촌지키기사업 등을 추진하며, 그외 농촌청소년을 위한 농촌지역 순회공연 사업, 미래의 소비 주역인 젊은 엄마와 함께하는 유치원어린이 농촌체험교육사업 등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다.

농·소·정협력사업은 주5일제 근무 등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 활동 기회를 농업인·소비자간 만남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발전과정에 형성된 농업인과 도시민, 농업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정서적 장벽을 허물어 ‘동등 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공생관계’를 구축하여 상호보완적인 상생(相生)관계 형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표 3-1-2> 2006년 농·소·정협력 지원사업

유 형	공 모 사 업			문화 사업	소비자교육 사업
	도·농교류협력사업	농업·농촌알리기사업	농업·농촌지키기사업		
사 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생산현장체험·농촌문화 체험, 일손돕기 ○ 도시소비자 생산·유통현장체험 및 자매결연 ○ 숯가꾸기 및 녹색산촌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나무 벼사랑 체험, 초등학생을 위한 농업 이야기 ○ 선농체험 ○ 인증농산물 홍보 및 소비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전통떡 지키기 ○ 농업환경보호, 안전농산물 소비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순회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농촌체험교육
사업량	33개 단체(968백만원)	11개 단체(297백만원)	7개 단체(235백만원)	15개지역(280백만원)	8개단체(220백만원)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묵)

2. 농림사업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가. 2005년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2004년 주요 135개 재정사업 평가에 이어 2005년에도 113개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년과 달라진 점은 2005년부터는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투융자관리계획서의 작성,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사업담당부서의 자체평가를 기획예산처가 채택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통일성 및 사업담당부서의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 시켰다는 것이다.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별로 사업수행 당해년도에 평가지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익년도에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조직목표,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상충성, 목표달성도, 프로세스(의견수렴, 현장점검, 정책홍보 등)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예산편성방향은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통합, 감액, 폐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 사업지침의 수정 등을 통해 개선하였고, 일부는 검토 중에 있다.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i)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친환경직접지불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59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ii)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영농규모화, 농산물 물류표준화 등 32개 사업은 현수준 유지 또는 감액하고, iii)종축등록사업, 마늘산업 작목전환, 정부수매사업 등 5개 사업은 중단·폐지하기로 하였다.

<표 3-1-3> 2005년도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 요약

분류	대상사업
증액 또는 현수준유지 (59)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농축산물 판매촉진, 축산환경지도지원, 농업인 재해공제지원 등
현수준 또는 감액 (32)	영농규모화, 노지채소 계약재배, 마늘산업 마늘기계화, 시장출하촉진, 가공원료 민간 구매지원, 가축질병 근절대책, 받기반 정비사업 등
중단·폐지 (5)	마늘산업 작목전환, 정부구매, 축산물품질고급화장려금, 종축등록사업,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평가의견 미제시(17)	농업종합자금, 농업·농촌가치홍보 및 소비촉진홍보, 디지털 사랑방 설치 사업 등

농림부는 앞으로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분석,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정평가팀 사무관 김상경)

나. 2006년 농림사업 성과평가 계획

2004년, 2005년에 이어 2006년 농림사업 성과평가도 계획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과정을 이행 중에 있다.

2005년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새로운 평가체계에 따라 113개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및 평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일부사업의 경우 투입 또는 산출지표를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목표치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평가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계속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1) 2006년도 성과평가 대상사업

평가 대상사업으로는 i) 정상적인 행정경비, 행사성사업비, 정부내지출, ii) '06년종료사업, '07부터 통합되는 사업, iii) 정착에 다년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 등을 제외한 평가의 실익이 있는 주요 재정사업 136개(관서사업 포함)를 선정하였다.

(2) 평가방법 및 절차

각 사업부서는 소관사업의 평가지표·목표치·사업추진 프로세스 관리계획을 담은 투융자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부서 검토 후 농림사업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융자관리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며('06.10월), 사업종료후 사업담당부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평가전담부서에 제출('07. 2~3월)하고, 평가부서에서는 사업부서 자체평가와 집중평가 자료 등을 기초로 i) 예산편성방향 ii) 제도개선사항 iii) 개인 성과등급을 제시하는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농림업무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07.4월)할 계획이다.

(3) 평가방법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지원조건 등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예산편성방향은 i)증액 ii)현수준유지 iii)감액 iv)통합 v)중단의 다섯가지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혼합유형을 제시하여 전년에 비해 예산편성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05사업평가부터 도입된 개인 성과등급도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재정평가팀 사무관 김상경)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개선

2006년도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는 그동안 평가과정이나 결과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평가결과 활용 및 지자체추진 우수시책을

확산·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농정 여건 변화에 맞게 평가체계를 대폭 개선·보완하였다.

개선·보완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지자체의 농업분야 투자재원 관심도(임의지방비 증가율, 균특예산 확보율) 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평가결과 종합순위 결정방식을 분야별(4개)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둘째로 매년 주요 '농림사업추진상황'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 예산배분(사업물량 배정시) 등에 활용토록하고 차별화시책 등 지자체 추진 우수시책을 다른 지자체에 확산·전파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하도록 개선하였다, 셋째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간 배점을 조정하고 지표 등의 보완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정평가 항목과 지표, 기준 등을 지방농정 여건 변화에 맞게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평가팀 행정사무관 이장의)

3. 농림행정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가. 농림행정 제도개선

농업인, 소비자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농림분야 각종 규제와 민원 또는 부조리 유발 소지가 있는 농림행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고질 반복 집단민원 및 잠재적 민원이 내재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다양한 제도개선 발굴 시스템의 운영과 현장농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던 점과 양 위주의 제도개선 등 다소 미비하였던 점을 반영하여 금년에도 ① 현장체험 학습, 과의 날, 현장농정상담역 제도 운영 등 현장밀착 농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② 법령·훈령·예규 등 관련규정, 행정지침 등에 내재된 제도개선 과제의 자체발굴을 확대하며 ③ 민원만족도 및 청렴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④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제도개선

협의회를 계속 운영하는 등 정책고객의 요구(Needs)를 반영한 농림정책 품질 제고를 농림제도개선 목표의 목표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원해소대책회의 운영과 민관합동 농림제도개선 협의회 개최, 제도개선 발굴 모니터단과 현장농정상담역(1,060명)을 참여 패널단으로 운영하는 등 농림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농림부 홈페이지와 참여마당 신문고 등 온라인을 통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며, 현장밀착 농정을 통해 사각지대/소외계층의 잠재적 민원을 발굴하고자 2~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3명의 농정상담역 농업인을 지정 운영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과장급 이하 전직원 대상) 및 과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 등 정책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아울러 민원내용 중 제도개선사항(총무과), 자체 감사결과(감사관실)를 대상으로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농림제도 발굴체제의 강화와 현장밀착형 농림제도 발굴로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과제 69건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24건에 대해서는 개선완료 및 추진중에 있고, 7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정하였다.

금년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효기간 연장(1년 → 2년), 애완동물 수출검역 예약제 도입, 농업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용이하도록 농림정보검색을 위한 농림지식검색시스템 등 국민생활 불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위주로 집중 발굴·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민원서비스 만족도(전년도 64.3점) 조사 및 자체 주요정책 고객만족도(전년 57.1점) 조사 등을 실시하여 농림제도개선의 추진성과가 농업인 등의 고객만족으로 연계되는지를 자체평가하는 등 농림행정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농림정책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혁신인사기획관실 사무관 김철순)

나. 농림행정 규제완화

2006년도에는 농림부 소관 기존규제 515건을 분야별로 철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

자율규제 등 비규제 대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간접규제 방안을 강구하며, 규제정비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규제에 대해서는 피규제자에 대한 순응도를 조사하는 등 규제정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규제 정비계획은 자체적으로 73건의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70건은 2006년말 까지 정비완료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규제정비 추진을 위하여 대상과제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하고,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며, 농지·축산위생·유통분야 등의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규제집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통한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의 현장인식 제고 및 품질관리를 향상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규제정비 개선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년도 규제정비계획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면 기업도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도매시장 경매사 지정제도 폐지 등 시장구조의 경쟁체제에 장애가 되는 규제 9건, 법령 위반자에 부과해 오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고, 축산물 영업자 자체위생 관리기준 완화 등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 8건, 종자유통 조사를 하면서 무상으로 수거해 오던 시료를 유상으로 전환하는 등 전근대적인 행정수행방식과 관련한 정비과제 7건, 이밖에도 법령 조문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는 규제 6건, 행정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민원인 신청서류 감축 27건 등 모두 73건의 규제 적극 정비해할 계획이며, 이중 70건은 년내에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상위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 3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개정과 동시에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부무팀 서기관 황인용)

4. 농림조직의 개편

가. 농림부

(1)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등

쌀 재협상 이후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FTA협상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협상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수행할 인력, 농산물품질관리 및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농축산물 국경검역인력 및 수입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 153명을 증원하였다.

- 본부 : 자유무역협정2과 신설·운영인력,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자유무역협정과 실무인력 등 15명(4급1, 5급8, 6급4, 7급2, 직급상향 5급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품질관리·대민서비스 일선기관 실무인력,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24명(5급 10, 6급14, 직급상향 6급2), 10출장소 분리증설
- 농업연수원 : 청사시설관리 및 방호인력 1명(7급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위생감시과·동물보호과·위험평가과 신설·운영인력, 검역탐지건센터 운영인력,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인천공항 검역인력,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인력, 조류인플루엔자·브루셀라·수퍼박테리아 연구 인력 86명(4급3, 5급11, 6급22, 7급26, 별정3, 연구관1, 연구사20)
- 국립식물검역소 : 고성출장소 실무인력, 목재포장재 검역인력, 인천공항 CIQ인력 21명(5급1, 6급5, 7급7, 8급8, 직급상향 5급5)
- 종자관리소 :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재배시험 및 특수검정 인력, 보급종 및 품종보호 관리인력 6명(6급3, 연구사3) 등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9368호, 2006. 3. 3, 대통령령 제19418호, 2006. 3. 29),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17호, 2006. 3. 8, 농림부령 제1520호, 2006. 3. 29)>

(2)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

예산·기금 배분 및 집행점검기능 강화, 효율적인 홍보기획 및 지원체계를 구축, 맞춤형 농정 총괄·조정 및 직접지불제 총괄업무를 수행할 과단위 기구 증설, 조직의 탄력성이 큰 참모조직은 “과”에서 “팀”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 할 예정이다.

첫째, Top-down제 도입에 따라 예산·기금 배분 및 집행점검기능 강화 둘째, 효율적인 홍보기획 및 지원체계를 구축

셋째, 맞춤형 농정 총괄·조정, 농가등록제,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 농가 소득정책, 직접지불제 총괄업무

넷째, 조직의 탄력성이 큰 참모조직은 “과”에서 “팀”으로 변경

다섯째, 한미 FTA 협상을 전담 조직 신설

여섯째, 혁신리더쉽 강화를 위하여 혁신인사기획관실 개편

일곱째, 식량국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등

여덟째, 종자·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

(3)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07년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농촌정주지원단·정주지원과·도농교류과 신설 등 '06년도 수시직제 반영분야, 농지은행제도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 품질 및 안전성·농축산물검역검사·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대민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07년도 농림부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농촌관광·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농촌정주지원단·정주지원과·도농교류과 신설 및 실무인력 등), 법령 제개정 및 장비도입 분야(농지은행제도·동물보호법·공익수의사제도 실무인력·통합정보화팀 신설 및 실무인력), 친환경농업·품질 및 안정성 분야(자연순환농업팀 신설 및 실무인력·육류 이력추적시스템·검역제도 관리·축산물위생관리 등), 행정수요증가 및 실무인력(종자생명산업과 및 북한농업협력팀 신설 및 실무인력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 및 안정성분야(원산지 단속·LMO관리·GAP관리 인력 등), 친환경농업분야(친환경인증 인력), 시험·연구 분야(정밀분석·사료분석 인력), 출장소 분리 증설 등
- 농업연수원 : 행정 및 청사방호 인력, 교육과정개발 전문인력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품질 및 안정성 분야(동물약품관리과·축산물 위해관리과 신설 및 실무인력 등), 검역·검사 분야(동물검역부 신설·탐지견관리과 신설 및 실무인력·CIQ 2교대 근무인력), 시험·연구 분야(조류인플루엔자과·부루세라과 신설 및 실무인력, 연구인력 보강 등)
- 국립식물검역소 : 검역·검사 분야(우편식물검역담당과 신설 및 실무인력·주한미군 반입식물 및 CIQ 검역인력 등), 시험·연구 분야(중부 격리재배관리소 확대 등)
- 국립종자관리소 : 품질 및 안정성 분야(보급종 생산·공급인력, 품종 보호 심사인력, 등록관리인력, 민간육종 활성화인력, LMO관리 인력 등)
(혁신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규억)

제 2 장 2006년도 주요농정 시책

제1절 쌀산업 구조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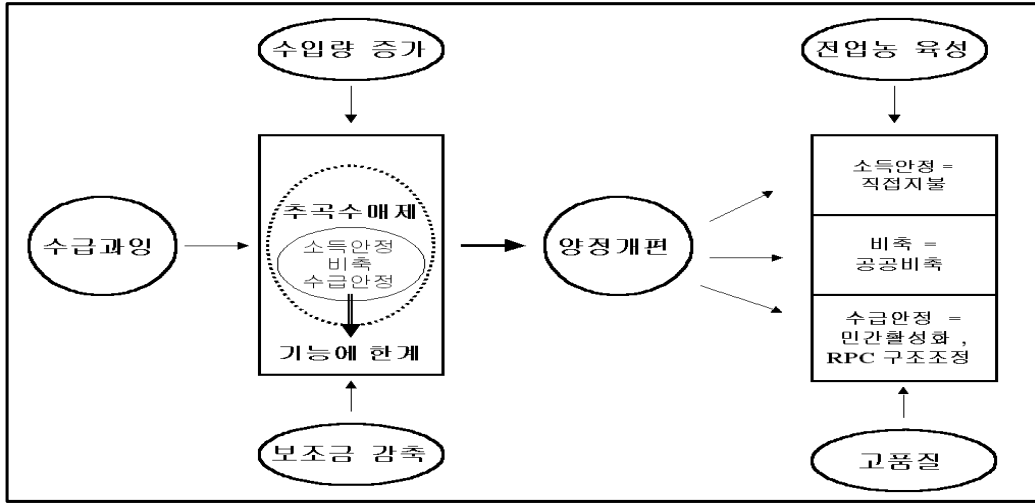
1. 새로운 양정제도 정착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95년 WTO체제출범이후 지속적인 수매보조금 감축(매년 750억원)으로 생산량의 15%수준까지 줄어들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기능과 물량흡수기능이 축소되었다.

향후 DDA협상이후 추가적인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수매제도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양정제도를 개편하였다.

<양정제도 개편>

- ◇ 쌀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으나,
- ◇ 앞으로는
 - ① 소득보전방안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 ② 식량안보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 ③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
- ◇ 전업농 규모화와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



가. 공공비축제

'05.7.1시행된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로서 종전의 추곡수매제도와 같이 정부가 가격을 정하여 수확기에 일정한 물량은 흡수함으로써 가격을 지지하는 수급조절용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양곡연도말 재고를 600만석 수준으로 연중 300만석을 매입·방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되, '05년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확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400만석을 매입하였다. 또한 공공비축미곡과는 별도로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100만석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05년산 미곡은 총 500만석을 매입하였다.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는 국내 식용소비량의 17~18%수준을 적정재고량으로 권장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수확기 홍수출하물량 흡수를 위해 산물벼 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지 RPC를 중심으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쌀에 대한 소비자욕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상연)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정부는 쌀값 하락시에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0kg 가마당 목표가격을 170,083원으로 설정하고 3년마다 변경하되,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고정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80kg 가마당 11,475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2006년 10월에 고정직불금(진흥지역안 746천원, 진흥지역밖 597천원)을, 2007년 3월에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정책과 사무관 이주영)

2. 쌀 전업농 육성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한국농업의 근본문제중의 하나인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쌀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UR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1995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기본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화·전문화된 효율적 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결과 1995년에는 14천호의 쌀 전업농이 선정된 바 있

으나 2005년말 현재 80.6천호로 늘어났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교환분합사업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 집단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농지매매·임대차 사업은 농업 기반공사가 비농업인, 고령농가,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논·밭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려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은 농가는 연리 2.0%('06년부터 적용)로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균등 분할 등의 조건으로 농지매입대금을 상환하고, 임대차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농가는 계약기간(5년이상)동안 무이자로 매년 임차료를 상환토록 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이 본격 추진된 1995년 이후 2005년까지 3조 5천원의 투·융자를 통해 49천호의 쌀 전업농에게 98천ha(매매 34천ha, 임대 63천ha, 교환분합 1천ha) 논을 유동화 하였다. 그 결과, 지원받은 쌀 전업농의 논 경영규모가 지원 전 호당 2.0ha에서 2005년에는 4.5ha로 2.5ha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쌀 전업농이 담당하는 경영면적도 1995년에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3%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30%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이 49세의 청·장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쌀 전업농들은 보유한 농기계를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가의 농작업을 대부분 대행하고 있는 등 지역농업을 실질적으로 유지·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경영체가 다수 출현하여 시장 지향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우리나라 쌀생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쌀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여 우리 쌀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본 대책의 목표 및 비전은 2013년까지 지대별 여건 등을 감안, 호당 경영규모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이들이 2013년 예상 벼 재배면적인 83만ha의 절반수준을 경영토록 하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대등한 소득수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내용은 ① 쌀 전업농의 규모화, 정예화로 쌀산업 핵심 주체로 육성, ② 쌀 전업농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③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마련으로 경영내실화, ④ 지역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에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을 농지구모 확대를 위한 물량중심의 시책에 치중해 왔고, 양정여건의 변화, 소비자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으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전문경영인 육성, 경쟁 가능한 규모화, 소득안정, 품질 및 경영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 쌀 전업농 육성 주요 추진실적('95~'05년)

쌀전업농수(2005년)	호당 경영규모	지원논 면적 및 투융자액		
		면적(ha)		금액(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558호 - 3.0ha 이상 : 38천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은 쌀전업농 : 4.5ha - 전체 쌀전업농 : 4.2ha 	계	97,550	3조 4,989
		매 매	33,402	2조 1,854
		임대차	62,927	1조 2,554
		교환분합	1,221	581

(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김기훈)

3. RPC 경영혁신

지난해 양정제도 개편 및 금년도 수입쌀 소비자 시판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쌀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위하여 RPC의 경영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RPC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RPC 경영평가를 강화하여 경영 부진RPC의 통합 및 퇴출(지원중단) 유도, RPC 수탁판매제 시범도입, RPC 시설개선 등 RPC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RPC 경영개선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RPC 경쟁체제 도입

금년부터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지역기준에 충족하고 벼 매입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RPC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수확기 벼매입에 적극적인 RPC에 자금지원을 집중해나가는 한편, 지원자금의 1.5배 이상 농가벼를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하고 미이행업체는 지원을 중단(퇴출)하고 있다.

RPC 경쟁체제 도입으로 RPC의 벼 매입이 촉진되고, 또한 벼 매입에 소극적인 RPC는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10년까지 건조·저장시설 1,130개(저온창고 297개 포함)를 추가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10년까지 RPC저장능력을 쌀 유통량의 50%수준까지 확대하여 수확기 물량흡수와 고품질브랜드 쌀 생산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며, 우선 금년도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회계환원(균특회계 → 농특회계) 및 사업량 확대(50개→ 110), 단가인상(4.5억원 → 5.5), 국고보조율 10%인상(30→ 40%, 민간사업자)하여 추진하고 있다.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야적문제가 해소되고 품질별 구분저장이 가능하여 고품질쌀 유통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RPC가 수확기 이전에 예상판매 가격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 농가에 지불하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 정산해 주는 쌀 수탁판매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 쌀 수탁판매제를 희망하는 RPC를 대상으로 시범추진하되, 농가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수탁판매 참여RPC에게 정부 재정에 서수탁선도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탁판매제가 활성화되면, 농가는 수확기에 기존의 공공비축, RPC 산물

판매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한편, RPC에서 판매가격으로 정산하게 되면 농가는 더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고품질쌀을 생산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RPC는 수확기 자금집중 부담과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브랜드경영체의 농가조직화·품질균일성·규모화 및 마케팅전략 미흡 등으로 체계적인 브랜드관리가 어렵고, 소비자 인지도가 낮으므로, 개방폭 확대시에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우수브랜드 육성 등 품질고급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금년 6월까지 고품질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브랜드경영체의 농가조직화, 브랜드 개발 및 관리, 브랜드 마케팅 등을 통해 '1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군단위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서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및 교육·홍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관리과 기술서기관 김완수)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쌀은 고품질 품종보급 미흡, 재배법의 미정착, 수확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 미흡 등으로 대외 품질, 가격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은 기존 다수확 위주의 품종선택 및 재배관행을 개선하고 수확후 가공·유통단계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외관, 식미 및 안전성 측면에서 외국의 고급쌀 수준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력증진, 품종갱신 및 재배방법과 수확후 관리체제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년에는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 확대 및 품종 집중도를 증가시켜 고품질 추천품종 재배비율을 96%로 신장(2004년 95%)시켰으며, 자운영 등 녹비작물을 151천ha(2004년 130천ha) 재배하였고,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논에 규산질 비료를 194천ha에 388천톤(2004년 184천ha, 368천톤) 공급을 통해 지력증진에 주력하였다. 재배단계에는 질소질 비료 사용량을 표준시비량(11kg/10a) 보다 적은 9.9kg/10a로 감축하고, 이양시기를 3~5일 조기이양 토록 추진하여 품질 향상을 기하였고, 유통단계에서는 RPC 계열화 면적을 321천ha로 확대(2004년 289천ha 대비 11%증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필요성에 대해 농업인의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동안 우리쌀 품질 향상을 위해 재배관행을 개선하고, 가공·유통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아직 우리쌀이 외국의 고품질 쌀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대책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는 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0년까지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 road map을 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와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본부□□(본부장: 차관보)를 설치하고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팀 등 6개반의 전담반(고품질쌀생산팀, 생산조정팀, 고품질종자개발·보급팀, 친환경재배팀, RPC계열화, 유통대책팀, 재해예방 및 대책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쌀 품질고급화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지력 증진으로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를 170천ha(2005년 151천ha), 입상 규산질비료 공급 비율을 70%(2005년 59%) 높이고, 유기질 비료 공급량을 120만톤(2005년 70만톤)으로 늘리며, 벧짚 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체보리·호맥

등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2010년까지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품종 9~10개를 육성하고, 생명공학, 유전자원, 병리 및 해충전문가 등 최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대책팀을 운영하여 고품질 품종 개발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으로 있다.

셋째, 정부 보급종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RPC 보증종자 공급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재배용 정부 보급종 공급(종자갱신을 : 2005년 32%→2008년 50%)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과 고품질 신규개발 품종을 조기 보급(운광, 삼광, 고품)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조기정착을 위해 적기이앙, 적정포기수 확보, 적정 물관리, 질소비료 시용량 감축, 최소 병해충 방제, 적기수확 등 6대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비료 포장지의 성분량 표시를 성분량과 실중량을 동시 표시토록 개선하고, 또한 토양검정 실증 시범포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RPC 수확후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RPC 벼 계약재배 면적을 2005년 32%에서 2010년 50%까지 확대하여 RPC 중심으로 계약 재배물량 우선매입 및 가격 차등화로 농가 참여 확대를 유도하며, RPC 산물 벼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2010년까지 66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을 50%수준으로 확대하며, 통합 RPC의 경영 정상화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을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여섯째, 수입쌀의 과학적 식별방법 개발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포장양곡 표시제를 정착하여 쌀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되어 시중유통쌀 브랜드를 종합평가하고, 품종별 혼입방지를 위해 RPC별로 대규모 단지화를 구축하며, 밥맛이 가장좋은 유통기간 표기, 쌀 품질 검증기반 구축 및 소비를 촉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통체계가 확립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성신상)

제2절 농업전문인력 양성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인력의 급감과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3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45세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종전의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금리를 종전의 4%에서 3%로 인하하는 한편, 지원단가 상한도 종전 1억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잠재농업인력확보를 통해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05년부터 실시한 3개 시범사업(농업인턴제·창업농후견인제·대학생창업연수)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유지하되, 사업량은 종전의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여 우수인력이 조기에 영농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다.

기존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이 1회성 지원후 농업종합자금 등 경쟁력있는 농업인에게 유리한 자금외에는 마땅한 지원책이 없었으나, '06년부터는 후계농업인 선정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1,500명이며, 금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조기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뿐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도 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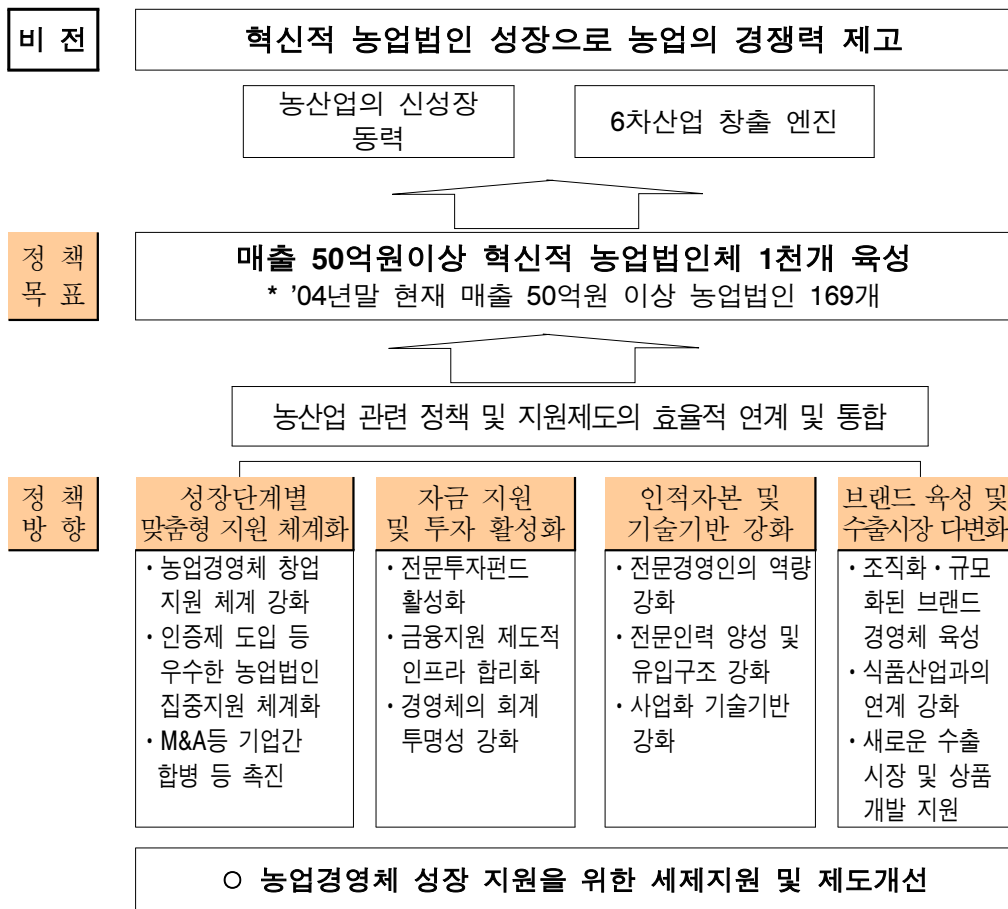
(경영인력과 농업사무관 양주필)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2006년 5월 19일 2차로 한·미 FTA 에 대응하여 관련 업계,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존대책을 종합·점검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문제, 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부족,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정보화 기반 부족 등이며, 과도한 표시·광고 등 규제와 세금 부담도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가. 기본방향



나. 세부추진방안

(1)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농업법인이 세제혜택, 농지소유 허용 등 많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리가 어려우므로 선량한 농업법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업법인 설립완료시 시장·군수에 설립사실 등을 통보토록 농업법인 설립통보제를 제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농업법인이 창업보육 혜택을 받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7개소)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제도에 농업분야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선도 농업법인이 인증 받고 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농업법인의 담보 및 회계투명성 부족, 소극적 대출 경향으로 정책자금을 배정받아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농협위주에서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업회계기준 정착과 농업법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법인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nno-biz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5억원→30)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에 농업전문투자펀드 등 투자방식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나 BT등 고수익분야로 편중되거나 민간부문의 투자 참여가 미흡하므로 2010년까지 1천억원 규모('06현재 : 180억원)로 농업전문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농업전문투자펀드의 투자대상이 농식품·유통업분야에 더 많이 집중(60%)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농산물시장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법인 경영주의 경영역량은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기업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농가조직화·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우수 농업법인이 회계·경영·전산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농업분야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업법인의 경영·기술·정보화 기반 강화

농업법인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컨설팅과 경영정보화 기반이 부족하고, 농업법인 성장에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이 중요한 요소이나 상품 개발 등 사업화 기술 지원을 받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기법, 특허 등 컨설팅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의 연구개발 참여비중을 확대('06: 총사업비의 6% → '10 : 20%)하며, 과제선정 평가위원단에 농업법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협력하여 농업법인의 특허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5)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농업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체조직 기능 증진 효과, 영양학적 유용성 등 표시·광고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통해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시한을 '06년 12월말에서 3년 연장하고, 2009년 12월까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비과세하되 농업외 소득은 14% 분리 과세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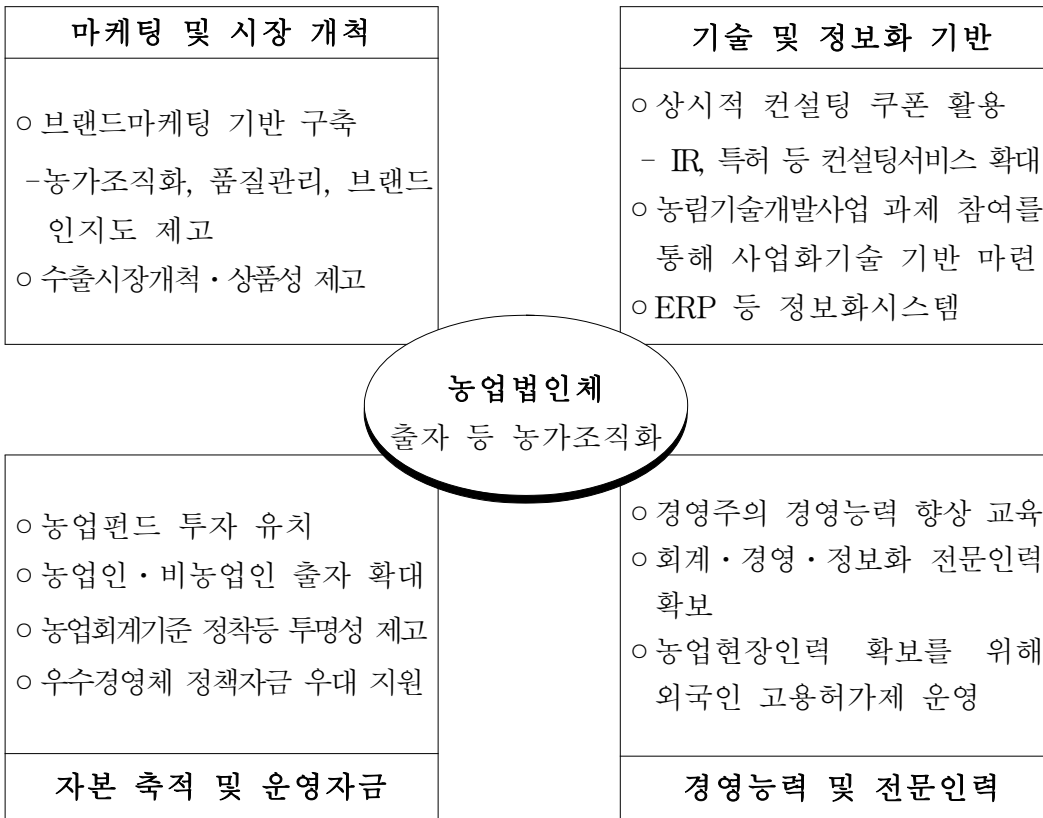
아울러, 2006년12월말 도래되는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용 비닐을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화훼 종자류(종구·종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차 대책 수립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 온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문제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농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 농업법인의 발전 모습 >

◇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농업시스템 구축
 - 가공·유통 부가가치가 농업인에게 선순환되는 구조 구축

◇ '15년까지 매출 50억원이상 혁신적 농업법인 1천개 육성
 - ('02) 115 → ('04) 169 → ('10) 500 → ('15) 1,000



◇ 농업경영체 **창업부터 성장·성숙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추진
 - 창업보육 → 인력 및 자금 등 성장 지원 → 이노비즈 및 브랜드경영체 집중 지원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생산기술 중심의 컨설팅에서 농업경영전반으로 대상과 내용을 확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 마케팅, 브랜드 등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농가기준을 제한하여 일정 규모 이상 농가위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는 종합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 공동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원예·특작 : 3,000㎡이상,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한우·젓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

또한, 전문가등으로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2년마다 평가하여 재인증할 계획이다.

즉, 농업계 전반에 검증되지 않은 컨설팅회사의 난립 문제가 제기되어 능력 있는 업체를 공모·평가·선정하여 컨설팅 업체 pool을 구성하고, 농업인은 이 컨설팅업체 pool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컨설팅 업체의 질 향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경영컨설팅이 특정 품목에 편중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위해 한 품목에 50% 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농축산물 브랜드 주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를 통해 농가조직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시장 교섭력 배양 등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농촌관광, 브랜드, 클러스터 및 경영회생지원 등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영역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업벤처 육성

고부가가치 농업의 육성, 농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특수농법, IT·BT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벤처농업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05년까지 선정된 4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를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06년에도 '05년 경상대학교 선정에 이어 충청,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권역별 확충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06년 농안기금 예산으로 확보한 50억원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1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3호 조합)을 결성, 농업분야벤처기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분야 우수아이템에 대한 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도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추진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농업 인력의 양적·질적 저하가 심각하고, DDA협상·FTA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도 시장 중시 및 IT·BT 등 첨단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농업교육 추진체계나 프로그램 등은 환경변화나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보편적이고 평균수준의 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지식·기술·경영능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및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교육의 목표는 민간주도의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업인이 고소득을 올리는 「배워서 돈되는 전문교육 기회 제공」으로 농업시장의 개방 확대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고자 함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담당했던 각종 농업인 교육을 생산자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내용도 일반적이며 평균적인 교육에서 중

농이상 규모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2006년부터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18개)과 자조금이 조성되지 않았으나 기 지원품목(6개)에 대해 품종선택에서 유통·마케팅, 이론/실습/해외연수까지 전 과정을 일괄 Package 형태로 수요자 중심의 품목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품목 단체가 아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8개 일반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관리 위주에서 마케팅이나 자금 활용 등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경영기법, 농업인 성공사례 등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농협·대학·농업인단체·지역농업클러스터 등이 연계하여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기술연구에서부터 교육·지도까지 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되고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배 확대, 품종통일, 재배방법 통일 등으로 우수한 공동 브랜드나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도록 브랜드 육성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농업의 활력을 높이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후 계농업경영인 선정방식을 선 선발 후교육에서 선교육 후선발 체계로 변경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잠재적인 신규 영농인력 양성을 위해 농과대에 영농정착교육과정을, 농고에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정착교육과정은 농학계대학의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농대 2학년 부터 3년간 창업희망학생에게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에서 시범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2007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농고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농업응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가와 학교간 협력을 통해 현장 견학·체험·실습, 농업인 성공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10개 농고

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귀농자 등 비농업계 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과정도 새로이 도입할 계획이다.

만 44세 미만의 신규 영농정착 희망자를 대상으로 품목 특성에 따라 3~6개월의 단기 과정을 신설하여 농업이론과 실습, 영농설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이러한 교육체계 개편과 함께 교육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20개 품목과 4개 공통과정에 대해 개발하여 교육기관에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대학교수, 현장전문가 등 전문강사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시설과 교육기관 풀을 구성하여 농업인 전문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교육과 컨설팅, 지도사업 등을 총괄·조정토록 해나가고, 각 교육기관의 정보를 상호 연계해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돈이 되는 농업교육을 실현하고 농업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35억원 수준이었던 농업인 교육 예산을 올해 1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업교육체계 개편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6. 여성농업인 육성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여성은 농가인구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지소유 비율이 낮음에 따라,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등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

고 있어 실질적 농업 경영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기여도에 적합한 직업적 지위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공동 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사실 확인을 통해 농업인 증명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결혼 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부부 공동소유제' 등 여성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게 될 여성농업인 권리향상 운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경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간에 농업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농업 경영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고취시키는 '농가경영협약' 제도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06년 중 관심 있는 농가의 부부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2)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확대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정관련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도 여성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및 작목반 등의 농업생산자 조직에도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협동조합의 경우 여성 조합원 비율 27%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여성 조합원의 대의원 및 임원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목반의 경우는 여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지도해 나가므로써 여성의 참여를 유인해 나가고자 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중앙과 지방의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기술 교육 및 리더쉽 향상 교육 등 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농업인단체

와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연구활동 및 도농교류사업에 대하여도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의 날’ 및 여성농업인단체 행사를 계기로 우수 여성농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2> '06 여성농업인단체 교육훈련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단 체 명	교육과정	교육인원	국고지원액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1	765	50
생활 개선 중앙회	1	200	5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6	1,315	62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5	1,450	226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쉽 향상

품목단체별로 시행하는 품목별 전문교육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역 농과계 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도 전체 위탁교육인원의 20% 수준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는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체험단을 구성하고, 품목 또는 분야별로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연수과정을 농업인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의 리더쉽 향상을 목표로 농업연수원에 전문강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리더쉽 아카데미’ 과정과 여성 농정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농정위원반’ 과정도 '06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2) 후계 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예농업 인력육성 종합대책

(’05.1)을 마련하고, 20만호의 정예인력 육성방안을 구체화 한 바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하여도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계획이다.

우선 후계농 지원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제 등의 후계인력 육성사업 시행시 20% 범위내에서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토록 함으로써 저연령·고학력 집단의 여성농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쌀 전업농 선정시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부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신청시 주사업 품목이 다를 경우 각각 지원 가능토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고, 부부창업농·부부후계농 우선 선발 및 우대지원제도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3)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최근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원예·화훼 등 발작물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는 대부분 남성의 체형에 맞춰 개발되어 여성이 운전 조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에 대한 기계장치 개발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취급하기 쉬운 작고 가벼운 농기계를 개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4) 농촌개발 리더로서의 여성농업인 전문화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관광 분야는 여성의 참여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인력 참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농업연수원에 □□여성농촌관광지도자□□과정을 운영하여 여성농촌체험교사를 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1) 출산농가 도우미제도 확대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모의 모성보호를 위해 2000년 처음으로 도입한 생산적인 복지제도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기간 연장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및 내실화 유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지역에서 연착륙될 수 자치단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도중 여성농업인센터는 2004년보다 16개소가 늘어난 5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여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3)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경감 추진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006년도 중 지원대상을 농지소유규모 5.0ha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2006년도에는 지방비를 포함하여 315억원의 예산으로 아동별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5세아는 100%)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한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둔 농업인에게도 육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의 보육시설 등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 2006년에는 법정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정부보육료 지원액의 25%(5세아는 50%)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하여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 밖에 농어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1)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1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1-2005)이 완료됨에 따라 여성농어업 인육성법 관련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추진할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할 계획이며, '06년부터 수립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기본계획 수립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2차계획은 1차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 여성농업인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05년도에 개최된 도별 순회토론회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2)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제도 확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제도는

2004년 농업인력육성정책, 2005년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데 이어 2006년에는 농림사업 중 주요 관심영역, 정책의 사회적 파급 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해당 사업 부서에 통보하여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농림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연구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성인지적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연구기반을 확충코자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연구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결혼으로 우리나라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여성에 대한 지원방안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가. 우수농산물(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본격 시행

선진적인 안전성 관리제도로 도입 추진 중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해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고, 금년 초에는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미생물·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 등 GAP 재배·관리지침을 96개 품목에 대해 제정한다.

GAP인증업무를 민간주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인증기관으로 20

개 기관을 지정한다. 수확 후 농산물 처리를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미비시설에 대한 지원(8개소, 14억원)을 하게 된다.

인삼 및 수출농산물 GAP인증관리와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된다.

GAP확대를 위하여 GAP 민간인증기관 전담요원 교육(300명)을 추진하고, GAP참여 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은 5,000명을 실시한다. GAP 인증품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인증품 관측행사,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조동근)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부적합품의 시장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추진한다. 안전성 조사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6천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정밀분석실을 거점 지역 출장소까지 확대해 나가, 늘어나는 분석수요에 대비한다.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6개 출장소에 설치하였고 2006년에도 4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안전성 조사 범위를 농산물 중 농약, 중금속 중심에서 병원성 미생물, 생산환경(토양·수질·자재)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2006년까지 계속 실시한다. 2005년도에는 병원성미생물 150건, 생산환경 250건을 조사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기준설정 및 관리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다.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친환경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은 시장에서 가격적으로 우대받도록 홍보를 대폭 확대하고 도매시장에서도 우대 분위기가 조성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

으로 전국 228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실시간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분석하여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으로 강화하고 공표명령제를 도입하며 민간감시 기능 확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2005년 17,500명에서 2006년도에는 25,000명으로 증원하고 부정유통신고자 포상금도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소비안전과 서기관 신영정)

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소비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로 장관자문기구인 농식품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 안전성 실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법률, 모니터링실적, 리콜실적 등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도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육단계에서는 농가들이 동물약품의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축을 출하하거나, 가축을 출하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항생제 등이 없는 후기사료를 급여하지 않음으로써 식육에 유해물질이 잔류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국 4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의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 안전사용규칙 등을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잔류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규제검사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

하고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모니터링 검사법의 개선 등을 통해 모니터링 검사 시간을 줄이고 규제검사 물량을 증가시켜 보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사육농장에 대해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우선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HACCP 적용지침 및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HACCP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는 사육단계 HACCP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사료생산 단계에서도 HACCP 지정 사료 공장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브랜드경영체 평가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HACCP 적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축단계에서는 HACCP 운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HACCP 사후관리에 관한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고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제”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도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05년 100명을 신규채용 배치한데 이어 추가로 30명을 배치하고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의 지속적인 실시 등 도축단계에서의 위생·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단계에서도 HACCP 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군납·학교급식·단체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 판매단계와 집유(集乳)·보관·운반단계에서 적용할 HACCP 지침을 제정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통과정중 병원성 미생물의 재오염 및 국산으로의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새롭게 제정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요령’에 따라 집하장 또는 사육농장에서 식용란을 수거·검사하여 식용란에 대한 위생관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물작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강화하고,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과 과거에 위반사실이 있는 업소, 시중유통 점유율이 높거나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과 어린이 기호 축산물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이다.

끝으로,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기관 변경,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등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이기중)

3.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최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어 정부는 이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DB화하여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가능한 제도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며,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위생·안전성 면에서 차별화를 이루어 소비확대는 물론 한우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하여 정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2004.1월)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하였다. 2004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은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23개 브랜드를 시·도로부터 추천받아 그 중 9개 브랜드를 참여 브랜드로 선정하고 30개 연계 사업장(도축장·가공장·판매장 각각 10개씩)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www.mtrace.net)를 개설하고 10월부터 생산단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부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차를 두고 도축·가공단계는 12월부터, 판매단계는 2005년 2월부터, DNA동일성검사는 3월부터 각각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전 단계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관기관 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 귀표·라벨프린터·귀표리더기 구입비, DNA동일성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예산 : '04년 14억원 → '05년 4억원 → '06년 10억원)하고, 참여업체 운영비 및 판매장 홍보용 터치스크린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토록 하였다.

동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 및 중앙일간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물브랜드전('04.10월), 우리농엑스포('04.11월), 시범사업시연회('05.3월), 국제혁신박람회('05.5월), 국제축산박람회('05.8월), 축산물브랜드전('05.10월), 창업박람회('06.3월) 등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면은 첫째,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둘째, 인터넷·휴대폰 등을 통한 이력정보 제공,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DNA 동일성검사 실시 등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셋째, 소비자, 생산자 및 유통업체의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는 안전한 이력관리 식품을 찾게 되고,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별화된 식품을 생산하며,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이력관리 식품을 취급함으로써 지정판매장(당초 10개 → '06.7월말 현재 61개) 및 판매량의 증가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규모확대 측면에서, 전면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과 이력추적대상 쇠고기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지역단위 참여대상인 3개 지자체와 5개 우수브랜드경영체를 추가하여('05.12), '06.7월말 기준 17개 브랜드경영체·지역에서 약 141천두의 소가 이력관리 되고 있으며, 일정기

준 이상의 브랜드경영체 중 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6곳을 추가 선정('06.7월)하였다. 이들 6개 추가 참여업체가 '06.9월에 생산단계부터 사업추진이 시작되면 시범사업 참여규모는 23개 브랜드경영업체·지역에서 191천두의 소가 이력관리 되고, 시범사업 참여업체들과 연계된 사업장 중 도축장은 10개(당초) → 20, 가공장은 10 → 22, 판매장은 10 → 80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07년도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약 50여 지역·경영체에서 약 400천두의 소에 대해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소 개체관리를 위한 귀표 관련 문제점 개선·시행('05.12), 소 관련 정책사업간 정보연계(Agrix를 통해 정보연계('06.11-12월중)), 한우 DNA DB구축 및 검사방법표준화, '08년 전면실시 대비 법제화 및 각종 제도 마련 등은 '07년까지 차질 없이 완비하여 전국단위 본격 실시에 대비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과 서기관 황인식)

4.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추진

DDA협상과 FTA 등의 개방확대에 대응하고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축산물브랜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확실히 추진하고 있다.

우선,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06년까지만 브랜드사업 대상 경영체를 선정키로 하여 총 80개(한우, 돼지에 한함) 내외의 우수브랜드를 선정·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에 의거 '06년도에는 24개 브랜드경영체를 신규로 선정(5.30)하여 지난해까지 선정된 49개 경영체 포함한 전체 73개 경영체에 대하여 1,043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지원된 운전자금은 품질 고급화 및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 경영체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04~'05년 기 지원 경영체(49개)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게는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추가로 지원('06 : 300억원)키로 결정됨에 따라 7~8월중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9월초 개최하는 브랜드 경진대

회시 함께 시상키로 하였다. 두 번째로 사양·경영·브랜드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민간 브랜드컨설팅 전문업체 10개소를 4월초 지정하고, 11개의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을 위한 경쟁입찰(5~6월)을 실시하여 생산·경영·재무와 마케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도록 경영체별로 1억원(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지원하였다. 세 번째로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04년 7월 소비자시민의 모임(소시모) 주관으로 실시하는 우수 브랜드 인증사업은 '06년부터는 한우·돼지에서 육우·육계까지 4개 축종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인증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06년 인증 브랜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유통 관계관들이 찾아 판매하는 위치를 가지게 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된다. 네 번째로는 차별화된 “우수 축산물브랜드전시회”를 통해 우수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소비자 인식제고 등의 다각적인 홍보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06년도 전시회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국정홍보처와 협의하여 전국 98개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9월 한달간 브랜드 전시회와 '05년도 인증브랜드 로고를 홍보 하였으며, 이와함께 행사홍보 전문 컨설팅업체를 추천받아 전시회개최에 대해 홍보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어 그 어느때보다 홍보효과를 높이게 되었다. 또한 매달 180만부를 발행하여 농협 BC카드 고객에게 송부되는 9월분 카드이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전시회 및 인증브랜드에 대해 무료로 홍보를 한점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시회의 주요 이벤트는 식육판매점의 시대별 변천모형을 비교 전시함은 물론 비교시식 행사를 곁들여 추진함에 따라 전국 46천여개 식육판매점의 리모델링을 통한 위생시설 고급화방향을 제시한 것은 향후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식육기술경연대회, 축산물요리솜씨대회 등 부대행사를 병행하여 할인판매, 추석선물예매와 후계 소비자인 대학생 관심유도를 위한 행사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통하여 올해의 전시회가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 판매촉진, 생산자들의 축제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9.7~9일(3일간)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111개 업체에 317부스 규모로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10~11월에는 정부지원 대상 브랜드경영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기 발전을 위한 마케팅행사, 우수업체 사업 벤치마킹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재설정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브랜드 육성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13년에는 한우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의 50%('05:29%), 돼지는 70%('05:47%)가 브랜드화 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브랜드 사업을 통하여 브랜드 주체가 위생·안전성·품질·방역·환경 등 축산현안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위생과 서기관 황인식)

5. 가축개량 추진

우리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나라들과의 FTA 체결과 DDA 타결 후 시장개방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식품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업을 국민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 사육 환경에 적합하고 생산성을 높여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축의 생산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육 마리수와 분뇨 발생량을 줄여 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개량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금년도 축종별 가축개량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가. 한우개량

한우개량은 그동안 체중 증가에 역점을 두어 보증씨수소를 선발해 왔으나 고급육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육질 중심의 개량체제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과정에서 수소 위주로만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암소 유전능력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으나 앞으로는 암소의 유전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한우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관리조합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는 한편, 2004년 5월 20일부터 2005년 3월 말까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T/F팀) 운영을 통해 검토·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우개량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여 5월중에 마련한 「한우개량사업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대책의 내용을 보면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를 도입한다. 올 하반기부터 고능력 암소를 사육하면서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육종농가 10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둘째, 현재 한우 개량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우는 적정 두수(80천두 수준)를 유지하면서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규모 한우 개량농가의 소득 보전효과 등을 고려, 농가당 최소 보유두수를 등록우 기준으로 3두를 유지하되 혈통·이동 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자체 조직혁신과 경영개선으로 전문성·효율성을 높이면서 우량 정액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우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칠포, 흑소 등의 육종 연구·보존과 기술교육도 강화할 것이다.

나. 젓소개량

젓소개량은 산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율을 2010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하여 6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보조율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젓소 보증씨수

소의 검정 및 유전평가 시스템을 보완하여 보증씨수소 선발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 돼지개량

돼지개량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종돈업혈통서 발급제도를 보완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종돈의 능력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종돈검정소(경기 이천)의 검정시설은 재래식 구조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종돈검정과 방역강화를 위해 첨단 검정장비를 갖춘 현대시설로 신축을 추진하며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한편, 종돈의 육질검정·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종돈 수출을 위해 국제 박람회 참가, 현지 세미나 개최 및 바이어 초청을 통해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동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FAO/AnGR이 추진중인 「세계동물유전자원현황 1차보고서」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닭 개량 등

닭 개량에 있어 종계는 대부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인데 반하여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종계개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계농가에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오리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오리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종오리를 개량대상 가축에 추가하고, 종오리업을 등록대상 종축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국내·외 축산 관련 기자제와 우수 종축의 비교 전시 등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제4회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축산정책과 기술서기관 최염순)

6.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업 등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미국·일본 등에 광우병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과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4.8.25일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2-3>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구분	국내	외국	비고
구제역	'00.3월발생('01.9.19 청정국) '02.5월발생('02.11.29청정국)	'04~'05년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등(20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상재
BSE	비발생	'03년 캐나다, 미국 발생으로 총24개국(수입금지 34개국)	후진국 발생의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03.12~'04.3(19건발생)	'03.12~'06.8(태국, 베트남, 중국, 북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터키,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등(44개국)	동남아 상재
돼지콜레라	'03년 72건 '04년 9건 '05년 5건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등(14개국)	동남아 상재

그 주요내용으로 광우병·소부루세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사전차단 및 발생시 신속대응,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활발한 국제 교류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 일선 방역인력 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다.

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04.1월부터 태국·베트남 및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현재까지 아시아·북미·아프리카, 유럽 등 44개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03.12.10~'04.3.20간 10개시·군(7개시·도) 총 19건이 발생하여 392농가 5,285천수를 살처분·매몰하였고,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철새를 통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매년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중국·태국산 열처리 가금육 정밀검사, 공항·항만 휴대품 검색 및 여행객 소독, 해외 여행국 등에 대한 홍보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과거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중관리대상 지역”에 대한 임상관찰 강화, 오리 혈청검사(20,000건) 및 철새 분변검사(2400점)를 실시하는 등 특별방역을 추진하여 동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입 가금육 검사 및 공항·항만에 대한 검색·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집중관리지역의 닭·오리 임상관찰 및 철새·털새·오리에 대한 예찰을 확대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 등 농가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BSE 발생국(25)과 위험국(9) 등 34개국산 BSE 관련제품 수입금지와 함께 BSE 관련제품(HS code 680개)을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하고 발생국가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96년부터 국내산 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4개월령 이상 폐사 소 및 기립불능 소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축군을 추가로 검사할 뿐 아니라, 연차적으로 BSE 검사물량을 증가('05년 4,154건, '06년 5,000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원을 BSE 표준연구소로 육성하고 BSE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BSE 연구실(7명)을 신설하고 BSE 연구 실험실(100평)을 확보('05)하는 등 BSE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OIE(국제수역사무국)에 우리나라의 BSE지위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표 3-2-4> BSE 검사현황

년도별	'96~'00	'01	'02	'03	'04
검사두수	3,043두	1,094	1,179	1,038	2,323

사료에도 '01년부터 반추가축에 육골분 사용을 금지하였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반추 동물사료와 비반추 동물사료의 생산라인을 분리하였으며 사료내 육골분 혼입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성사료 원료의 반추가축 사료사용금지 규정 이행실태 지속점검, 동물성사료 혼입여부검사 강화 및 제조라인이 1개인 사료공장의 라인구분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30개소, 개소당 30억원),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 도입('05)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BSE발생에 대비하여 도축장에서 신경증상 소를 진단하고 BSE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검사보조원 100명을 배치하였고('05), 특정위험물질(SRM)처리를 목적으로 '07년까지 LPC 등 10개 도축장에 SRM 제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③ 소 부루세라병의 경우 젃소는 '00년이후 감소추세인 반면, 한육우는 '04년부터 증가추세로 한우의 발생증가는 지난해부터 다발지역 일제검사, 거래암소 검사 의무화('04. 5월 : 가축시장 거래소, '05. 3월 : 도축용 암소, '05. 6월 : 자연종부용 수소, 수집상·중개상의 사육 소 정기검사) 등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염소를 색출하고 있기때문이다.

<표 3-2-5> 연도별 발생동향

년 도		'00	'01	'02	'03	'04	'05
전체	건수	271	131	110	172	711	2,590
	두수	1,249	754	845	1,088	5,383	17,690
젃소(건/두)		266/1,198	127/684	105/662	110/498	116/1,282	141/2,166
한우(건/두)		5/51	4/70	5/183	62/590	595/4,101	2,449/1,5524

④ 또한 정부는 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이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05년말까지 가축사육업의 등록 완료,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부여 등 특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⑤ 동북아 등 가축방역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위험국가(중국·몽골 등) 중심으로 병원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하여 건초소독, 실험실 검사(64건)후 반입,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주기적 점검(138개소, 월1회)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육류 신고·반입자제 등 교육·홍보를 실시,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탐지견(19두)을 집중투입하고 신발소독(232개소 394개) 실시, 외국인 연수생(26천명) 및 해외 축산행사 참석자(322명)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각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로 검색, 신속하게 발생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입위험분석 실시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악성가축질병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위험분석모델 개발 및 세계적인 위험분석기관에 관계관을 연수시켜 체계적인 위험분석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⑥ 최근 가축방역업무의 폭주 등으로 현장 방역인력이 현저히 부족해짐에 따라 시·도, 시·군 등 일선 방역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국 시·도에 방역인력 234명을 증원하였다.

또한 수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방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며, 이와 관련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심사중에 있고 공익수의사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06. 7억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익수의사 인건비 등 추가소요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에는 공익수의사를 선발, 군사교육 및 직무교육 후 현장에 배치하여 방역업무 등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가축방역과 수의사무관 김태용)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최근의 우유 소비 침체와 DDA/FTA 진전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는 낙농산업의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유 수급관리 효율화, 낙농 경영체질 강화, 위생·안전성 확보 등 낙농산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원유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 생산자 자율에 의한 계획생산체제 확립, 원유 유통 합리화를 위한 원유 거래방식 개편, 원유의 계절별 수급완충을 위한 가공유 한도수량제 등을 중점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주체가 서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에 마련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시안)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생산자·수요자(유업체)간에 이해득실의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낙농현안으로 대두되었던 낙농진흥회 집유선 직결전환도 낙농종합대책의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장기대책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낙농산업의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우유 소비기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그동안 임의자조금으로 추진하였던 낙농자조금을 의무자조금화하여 낙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분석 및 대 농가 홍보를 강화하여 낙농자조금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함은 물론 우유 소비촉진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우유 급식사업 대상과 급식인원 확대,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활용 등을 통해 우유소비 저변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 생산자 자율에 의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고, 집유장·유가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원유의 품질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산원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겨울철 휴경농지에 사료용 총채보리·호맥 재배를 확대하는 등 조사료 생산기반이 확충되도록 하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 등 젖소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송광현, 행정사무관 유기혁)

8. 친환경 농업 육성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성 위주의 고투입농법에서 벗어나 국토환경보존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까지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량을 1999~2003년 평균사용량 대비 40% 절감하기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05년 7월1일 폐지된 화학비료차손보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120만톤(4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을 통해 적정시비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키토산·목초액·천적 등 친환경농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비중을 2005년 4.4% 수준에서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읍·면 마을단위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2013년까지 1,500개소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2006년까지 7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 관광 및 유통을 연계하여 시·군 단위에 1,000ha 이상의 대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6년에 3개소(완주, 순천, 울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3년까지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농가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인증제도 개편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관행농업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재 5종류로 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3종류로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축산물에 무항생제를 신설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업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년으로 되어있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유효기간신설 등을 통해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나가고자 한다.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안형덕)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 주체 육성

안정된 판로, 규모화된 출하조직, 전문경영인 책임경영 등 혁신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공동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05년도에 9개조직, '06년에 6개조직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07년 공동마케팅조직 시범사업 조직(5개내외)을 금년 11월에 사업자 접수공고 후 12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광역화·전문화를 유도하여 브랜드마케팅 경영체로 육성하고 농가조직화, D/B구축, 생산지도(생산이력관리)부터 마케팅까지 일관관리하는 명실상부한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표 3-2-6> 공동마케팅조직 시범사업 조직

선정연도	합계	거점산지조직형(3)	사업연합형(7)	전문마케팅법인형(5)
'05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농협(합병조합) ▪ 대관령원예농협(전문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지역조합주도) ▪ 나주·합천(시군연합) ▪ 햇사레(도간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식한국영농법인 ▪ (주)논산수출물류센터 ▪ (주)농산무역
'06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원예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연합) ▪ 부여·여주(시군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통통 ▪ 풀빛 영농조합법인

'06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6개 조직의 연락처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정책자금(650억원), 무이자인센티브자금(380억원), 마케팅·홍보비용(4억원) 등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며, 공동마케팅 및 전문조직 품질관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200억원)를 지원하여 인력육성 및 사기진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05년부터 산지유통전문조직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각각 실시해오던 평가를 조직과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체제로 전환하였으며 '05년 평가결과에 따라 '06년 1월부터 조직별 1~3%의 차등금리를 적용중이다. '06년에도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및 종합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지유통조직과 시설이 공동적으로 추구할 목표인 규모화·부가가치·조직화 등 3개 핵심분야를 평가·측정하여 평가대상 조직특성에 맞게 평가그룹(농협, 법인)을 분리하고 배점을 차등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자금을 차등하고 무이자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과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00년부터 산지유통전문조직 운영자금, '92년부터 산지유통센터지원, '95년 및 '01년부터 각각 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지원을 통해 규모화·조직화 등 마케팅 발전 토대마련 및 수급안정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산지유통지원사업이 수급안정, 산지유통주체육성,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분화되어 각각의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산지에서는 각종 유통지원자금이 조합단위로 유사한 목표를 갖고 통합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여러사업으로 분산지원됨에 따라 관리업무 중복 및 정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농가 선급금, 매취자금 등 원료확보용으로 산지에 지원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05년부터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통합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3월 산지유통관련 자금통합 안(1단계 '07~'08년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시설채소·과실수급사업, 2단계 '09년이후 : 산지유통종합자금 +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을 마련할계획이다.

'06년 하반기중 통합사업안의 주요내용인 사업신청 및 통합자금지원방식, 자금용도 및 지원조건, 조직별 평가 및 결과와의 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개별 품목단위 지원에서 조직·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자금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시스템 도입과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및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김정주)

나.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우수브랜드 육성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증가되고, 기반시설 현대화로 국내 농산물 공급능력이 확대되면서 판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90년대 중반부터 농산물에도 브랜드화가 시작되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농축산물 브랜드수가 5,400여개가 될 정도로 양적으로 많이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미흡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는 많지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DDA등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 농산물 유통활성화 육성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부 식량·유통·축산국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관보를 단장으로하는 T/F를 운영, 세부실천계획을 금년 6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농산물 브랜드가 초보 수준인 것은 농산물의 생산구조가 영세하고, 계절적 영향이 커 브랜드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산지 농산물 생산·유통주체의 상품 차별화 및 공급 능력부족도 중요한 원인이다.

최근 농산물 소비는 양보다는 맛, 기능성, 안전성 등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옮겨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인터넷 등 정보흐름의 자유화, 시장과 소비의 세계화 등으로 농산물도 브랜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산업으로 가려면 소비자가 신뢰하는 제대로 된 브랜드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대책□□의 핵심은 우수한 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 생산에서부터 상품화·유통까지 단계별로 정부, 지자체, 생산자가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산지유통주체들이 균일하고 규모화된 농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한 주체에 대해 시설,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감시자로서 규격에 맞는 상품이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맞게 자체 브랜드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브랜드 관리조례 제정, 지역내 생산자단체의 협의체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경영주체의 브랜드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그리고 생산자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품종, 재배방법 등을 통일해서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주체를 만들어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 한다.

또한, 정부는 채소·과일 등 원예농산물에 대해 품목별 주산지의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열화·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부터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쌀은 브랜드 경영체인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2010년까지 1,130개소로 늘리고, 내년부터 노후시설의 현대화, 개별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연말까지 보완예정인 농업·농촌 119조원 투융자 계획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7조원수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김정주)

2.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정부에서는 도매시장 물류효율화를 통한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와 농산물 거래규모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한지 2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와 되고 거래량이 포화상태에 달해 물류효율화에 장애요인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005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시설현대화 예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5,04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비지유통의 투명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포장화, 하역기계화를 통한 선진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추 포장유통시범 사업을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006년 9~10월 기간동안 실시하여 포장화가 정착되었으며, 시범사업결과를 분석·평가 보완하여 2007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배추·무

포장유통사업이 정착되면 생산농가의 상품성향상, 정가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창출, 도매시장의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2005년부터 시행한 마늘포장유통사업은 도매시장의 물류비용절감과 소비지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대증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도매시장활성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국무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간,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안전성기준 위반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 출하신고제를 2009년부터 의무화 하였으며, 시장내의 농수산물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하자와 유통주체간의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도매시장거래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출하자를 보호하는 한편 도매시장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임채록, 최봉순)

3. 농식품 수출확대

2005년은 환율하락, 유가인상, 김치 기생충알 파동, 폭설피해 등으로 수출환경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출업체, 수출농가 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05년 수출은 전년대비 6.6%증가한 2,222백만불을 달성하였다. 2006년은 중동정세가 불안하고,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원유 수요증대로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할 전망이고, 환율 역시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05년에 비해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일본이 농식품 잔류농약 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 수출효자 품목인 파프리카가 일본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전수검사를 받는 등 농식품 수출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환경이 비록 어렵더라도 최근 DDA협상이 진행되고 FTA가 확

산되는 등 농식품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수출농업육성을 통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맥락에서 '06년도 수출목표를 24억불로 책정하고 농식품 생산-유통-해외마케팅 등 수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수출국 현지인의 요구(needs)에 맞는 고품질 맞춤형 농식품 생산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가 수출전문 생산단지로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해 해외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시장변화에 대응한 컨설팅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으로 가공식품 수출 컨설팅을 보완해 나가고 일본 잔류농약 관리제도 강화 등 식품안전성과 관련해서 ISO, HACCP, GAP 등 국제인증 관련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예전문생산단지(일명 수출단지)에 대한 수출마인드 및 수출확대 동기부여를 위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를 통해 수출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수출물류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우리 농업의 영세한 규모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하에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훈령)'을 개정하여 소규모 원예전문생산단지를 통·폐합하여 광역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우리 농산물 브랜드 파워강화를 위해 공동 대표브랜드 '휘모리'에 대한 홍보 판촉행사와 이벤트, 매체광고 등을 연계하는 통합마케팅 전개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휘모리' 대상품목도 파프리카, 국화, 배에서 장미를 추가하고 단감, 중소과배에 대한 현지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 확대여부를 검토한다. 셋째, DDA/FTA 등 농식품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확대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 시장이 개방되는 주요국의 해외 신상품 및 인기상품 등 정보조사를 토대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06년도에는 25개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개발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수출유망품목 선정에 있어 해외시장확대 가능성, 국내재배가능성, 농가소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넷째, 한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강화이다. 대장금에 출연한 양미경씨를

농식품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해외박람회 참가 시 팬사인회 개최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마케팅효과를 극대화 한다. 아울러 최근 K-1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홍만과 함께 스포츠 마케팅도 추진한다. 특히 한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와 협력사업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전통음식조리법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식문화 홍보를 통해 수출확대로 연계할 방침이다.

다섯째 수출 농식품의 현지화, 고급화 전략이다. 교포중심의 시장에서 현지 주류시장 진입을 통한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해외 유명요리학교·레스토랑과 공동으로 한식요리를 개발·보급하고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와 공동으로 김치 퓨전요리를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식품 판촉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개방화시대 맞도록 수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김치, 파프리카, 사과, 배 등 수출 자율지도가격을 폐지하고 수출물류비에 대한 수출업체별 지원상한제를 도입한다. 수출물류비 신시장 개척 인센티브를 5%에서 10%로 인상하고 절화, 딸기 등을 일본의 지역으로 신시장을 개척할 경우에는 수출물류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해외 박람회를 수출시장 다변화, 신규시장 개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남아, 인도, 중동국가 박람회 참가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환율하락, 고유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관련 용자금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장동욱)

4.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 및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다품목 소량 생산, 생산과 소비의 제약, 일반농산물

과의 가격차별화를 위해 일반 농산물의 경매방식과는 다른 직거래 및 전문 유통업체에 의한 유통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안전식품에 대한 욕구(Needs)가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초기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직거래 중심에서 전문 유통업체 및 대형할인점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농업인이 정성들여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를 확대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2006년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 소비자가 친환경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소정 사업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량 수요처 발굴을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 코너”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침마루” 전문매장은 2005년 77개소에서 2006년에는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확기 친환경농산물의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친환경농업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직거래 매취자금 200억원과 유통활성화 자금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수의·정가 매매품목으로 지정,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상집)

제5절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강화

1. 직접지불제 확충

가. 직접지불제 확충 계획

직접지불제는 WTO체제 출범이후 과거 시장가격지지정책보다 소득효과가 크고 생산왜곡효과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세계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연차적으로 직불제를 확대하여 현재 6종의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생산조정제는 '06년에 중단, 표참조). 농업구조조정이 끝난 선진국과 달리 농업의 구조조정과 개방피해에 대한 농업인 소득보전을 병행 추진해야하는 우리 실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EU('04) 70%, 미국('04) 26%, 일본('01) 13%)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연차적으로 직불제 재정규모를 확대하여 2013년까지 농업투융자재정의 23%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나. 2006년도 추진현황

2006년 직불제 예산은 1조9,441원으로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6%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 94.1%나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에 도입한 쌀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해 목표가격(170,083원)과 수확기 산지쌀값의 차액의 85%를 보전함에 따라 소요재원이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아울러, 농가의 경영안정과 편의도모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중 고정직불 지급단가를 ha당 평균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1달씩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였다.(고정직불금: 11월→10월, 변동직불금 : 익년 4월 →3월)

영농조건이 열악한 밭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여 전국밭면적의 26%인 187천ha에 대하여 523억원을 지원

하였다.

환경농업기반의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대상지역을 27천ha로 확대하고, 논농업은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저농약농업까지 직불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 관광 및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관보전직불제는 2006년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총 8억(국고 6억, 지방비 2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 향후 추진 계획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에 의거 앞으로 20013년까지 직불제 예산을 24조원 수준(농업재정의 23%)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불제를 농가소득보전, 구조조정, 공익적 기능 제고 등 목적에 따라 체계화하고 농가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재설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중장기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0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는 개방피해보상과 도농간소득격차 보전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고령농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특별소득보조의 도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로 확충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목적을 위해서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은퇴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고 쌀생산조정제는 수급상황이나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가칭) 지속가능농업환경직불제'를 도입하여 현행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을 하위 선택메뉴로 편입하고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하여 종합적인 환경직불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제 추진기반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자율적인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구축, 직불제 전담운영기관의 설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경관보전직불제는 2007년도에는 총 13억원(국고 10억, 지방비 3억)을 투입하여 전국에 걸쳐 807ha를 대상으로 시행한 계획이며, 2005~2007(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 3-2-7> 직불제 주요 추진현황

구 분	경영이양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고정직불	변동직불
도 입	'97년	'99년	'05년	'05년
목 적	· 영농규모화 촉진 · 은퇴농업인 소득안정	· 환경보전	·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대 상	· 63세이상 72세이하 경영이양하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실경작자	· 실경작자
사업규모	4.8ha	27천ha (논15천, 밭12천)	998천ha	998천ha
대상농가	6.8천농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27천농가)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
요 건	· 경영농지 매도시 · 5년이상 장기임대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목표가격보다 수확기쌀값이 떨어질 경우
단 가	-매도289.6만원/ha (만 70세까지 최장 8년간 분할지급) · 임대 : 297.7만원/ha	· 79.4~52.4만원/ha (논39.2~21.7만원/ha) · 지급 0.1~5ha	· 70만원/ha(진흥·비진흥 평균)	· 목표가격과 수확기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단가를 차감한 금액
'06예산	175억원	114억원	6,986억원	9,096억원

구 분	친환경축산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도 입	'04년	'04년	'05년
목 적	·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농촌경관의 아름다움 유지 · 도시민의 여가 수요 부응 및 농촌지역 사회 활성화
대 상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농가	· 경사도14%, 경지율22% 미만 등 구분지표를 적용 선정된 법정리 거주 실경작자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사 업 규 모	· 한우 200호, 젖소 200, 돼지 400, 닭 100	187천ha	470ha
대 상 농 가	9백농가	전국 2,779개 법정리내 실경작농가(1,443개면)	1천농가
요 건	·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기록 장부 기장, 발생분뇨 환원	· 마을협약 체결 및 마을 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	· 마을별로 경관보전 계획을 수립,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준수
단 가	· 기본 : 1,300만원/호 한도 · 인센티브 : 200만원/호 한도	· 밭 40만원/ha · 초지 20만원/ha	· 170만원/ha
'06예산	58억원	523억원	6억원

(맞춤형농정팀 행정사무관 조백희, 농촌정책과)

2. 농외소득 기반 확대

가. 농공단지 조성사업

2006년에는 28개소에 260억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농공단지에 특산물 가공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단가 상향조정, 기술경영지도, 판로확보 지원 등을 강화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8>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구 분	추진목표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사업량(개소)	400	314	28(8)	58
사업비(국고, 억원)	7,572	6,360	260	952

주 : ()는 완공지구

(농촌사회과 행정주사 최윤태)

3.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1)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지속개선 추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해오고 있다. 2006년도에도 2005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및 농업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장수준을 크게 확대하였다.

* '06년 개선사항

- 폭풍우 인정기준 완화 : 최대풍속 14m/sec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0m/sec이상을 최대 순간풍속 14m/sec이상으로 대폭 완화
- 가을동상해특약의 보험기간 연장 : ('05) 11.5일 → ('06) 11.10 (5일 연장)
- 단감 낙엽피해 보장기간 연장 : ('05)9월 말 → ('06) 10월 말(1개월 연장) 등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05년과 같이 운영비의 100%, 보험료 50%(특별지원 8.8%별도)를 지속지원하고, 보험요율을 '05년 대비 1.06%P 감소한 8.19%로 인하하였다. 이에 2005년 26,335농가보다 3.8% 증가한 27,327농가가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20,301ha)도 5.8% 증가한 21,469ha을 보험에 가입(가입률 24.5%) 하였다.

<표 3-2-9> '06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적

(06.5.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	2006(계획)	증감(%)
가입실적	가입농가(호)	26,335	27,327	992(3.8%)
	가입면적(ha)	20,301	21,469	1,168(5.8%)
	가 입 률(%)	23.4	24.5	1.1%P
지원율 및 지원액	순보험료(%)	61.2	58.8	△2.4%
	운 영 비(%)	100	100	-
	국고지원액	49,371	56,690	7,319(14.8%)

* 주 1) 기금출연금 200억원 별도

(2) 대상 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 추진

근래 이상기후 현상으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농업인 등의 보험품목확대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2006년 5월부터 “뽕은감”에 대해 주산지인 전남 영암·광양, 경남 하동, 경북 청도·상주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뽕은감은 다른 품목에 비해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농업인의 보험가입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단감 품목의 보험운영 경험으로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타 품목에 비해 수월한 부분이 있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05년 국가재보험제도 실시 등 사업안정 기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보험확대를 위해 2006년 4월부터 농림부, 농업인, 품목별전문가, 보험전문가, 보험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품목개발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다.

“품목개발추진단”에서는 올해부터 “논벼(수도)”의 보험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수집과 보험화 가능성 타진을 위해 철원, 평택 등 전국 논벼 주산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6년 7월부터 도상연습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 농작물을 대상으로 보험가능 여부 및 품목별 보험도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보험화 가능성이 높은 4~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연구조사 및 상품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3) 농업관련 재해보험제도 일원화 추진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으로는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등이 있고, 농작업상의 재해를 담보하는 농업인재해공제가 있다. 위 정책보험들은 각 소관부처별·소관과 별로 구분하여 운용 중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2006년부터 정책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농업인재해공제 등 유사사업의 관리 일원화를 검토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중인 풍수해보험의 농업시설부문에 대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업무 이관을 협의·검토할 계획에 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농업시설, 가축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위험관리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검토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허훈)

나. 재해농가 지원확충

자연재해를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06.1.1)함에 따라 우리부도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 요령을 개정·시행('06.7.7)하여 원활한 농업재해지원에 도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가별 총 피해사항을 통합·등급화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일괄 지원하고, 허위·과다신고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원수준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으며, 농경지와 농업시설물의 지원대상 기준을 대·소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규정하여 재해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 가구당 재난지원금 상한선 : ('06)3억원, ('07~'09)2억원, ('10~)5천만원

한편, 사유시설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복구와 조기 영농재개를 위하여 복구이전에 재해복구비를 100% 선지급 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농경지의 경우 복구가 지연되면 집중호우 등으로 연접 농경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06년도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 54개 품목을 3.2~400% 인상하고, 인삼 농약대등 2개 품목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해농가 지원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산경영과 사무관 장영국)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점차적으로 최근 태풍, 화재, 호우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를 중심으로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편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홍보·농가안내 등을 강화하고 지원예산도 2005년 예산 대비 17.5% 증가한 2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3-2-10>

가축공제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P)
소	7.0	7.2	7.3	8.3
돼 지	43.4	49.9	57.6	58.4
말	2.1	1.9	4.9	4.3
닭	17.4	22.3	32.8	30.3

자료 : 농림부 축산국

그간 공제가입 대상축종이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6개 축종에서 2006년도에 사슴, 칠면조를 추가하여 총 8개 축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가축공제 확대를 위하여 “가축공제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06.02)” 결과를 토대로 '06년 6월에 가축공제 개선대책을 마련 하였는

데 주요 내용을 보면 '06년 10월부터 민영 보험사도 가축공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06년 8월부터는 공제가입농가가 보장비율을 선택 가능하며, '07.01부터는 가금류에 대하여 설해 피해를 보장할 계획과 축사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있다.

(축산정책과 축산사무관 박홍식)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1) 도입배경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상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인의 사고와 질병은 농가의 생활불안정 및 빈곤층 전략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업인 부담 공제료 50%를 국고보조하고 있다.

(2) 추진경과

- 1996년부터 농협 공제상품인 농작업상해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납입공제료의 50% 국고보조 시작
- 2000년 및 2004년에 보장내용 확대 개편에 따른 상품명 변경 : 농작업상해공제 → 농업인안전공제I → 농업인안전공제II
- 2005년 농업인안전공제의 농작업 중 사망공제금을 10백만원('04)에서 15백만원으로 강화
- 2006년 농업인안전공제의 농작업 중 사망공제금을 25백만원으로 강화, 입원비 공제금을 ('05)15천원에서 ('06)18천원으로 상향, 치료비 공제금을 ('05)100만원 한도에서 ('06)125만원 한도로 상향

(3) 추진실적

'05년 현재 농림업 경제활동인구 175만명의 40% 수준인 70만명이 가입했으며, '96년 이후 '05년까지 615만명이 1,334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표 3-2-11>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01까지	'02	'03	'04	'05
사업량(계약건수)	6,152	3,458	636	703	653	702
지급공제금	1,334	763	106	133	165	167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엄기훈)

4. 경영회생지원시스템 구축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2004년 개정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연대보증피해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TA 확산 및 DDA 농업협상 진전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쌀협상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우남, 김낙성, 유선호의원이 각각 농어업인부채경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2005년 11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위”라 한다)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11월 25일 농해위 법률심사소위에서 3개법안을 폐지하고 농해위 위원회 대안으로 '01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상환연기를 채택하여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농해위 대안으로 상정된 부채경감법은 신속하게 법사위 의결('05.12.7) 및 국회 본회의('05.12.8)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05.12.15)되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된 부채경감법을 2005년 12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2005년 12월 29일 공포하였다.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6조원에 대하여 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06부채경감대책 주요 특징은 '01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원금 10%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할 경우 5년 분할상환(3%), 그 외는 3년 분할상환(5%) 조건으로 연장되며, 부채 상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상·조기상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예금 등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부채경감법 및 시행지침에 명문화하여 그 동안 부채경감대책은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 대상농가에 개별안내장 발송 및 전화안내, 조합별 프랑카드(4,050개) 게시, 리후렛 및 소책자 제작 배포(100만부), 포스타(20,000부) 부착, SMS(문자메세지)송신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초 일선지역 현지점검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한편, '06년 부채대책 추진유공자를 엄격히 선발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 부채대책추진에 진력한 결과 '06.8.31 현재 순지원대상 37,808억원중 37,031억원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98%가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안정을 위해 '06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 예산을 2,000억원 반영하여 3년거치 7년분할상환(금리 3%)조건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지원대상자는 영농규모가 준전업농이상 또는 농업용부채가 2,500만원 이상인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부채 1,200만원이상 농업인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지원토록 하였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출기관의 상임 임·직원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여 도덕적 해이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대출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기관 내부직원으로 실무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다. 실무심의회는 기본자격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구비 적정여부 등을 사전심사한 후 경영평가위원회에 부의토록 하였으며, 경영회생자금지원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 지원대상자금 지원범위를 명확화하고 부부 공동경영시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농업인 90%, 농업법인 85%) 강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보충토록 하는 등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평가하여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에게는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회생불능 경영체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Work-out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농협 담당자들의 경영회생지원업무 회피 및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실적('06.6월말 기준 : 80억원)이 부진하여 일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안내 리후렛(30만부)을 제작하여 농업인 등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PCR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농업인들의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농지의 가압류, 경매처리 등의 처리절차에 대한 제반 지식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에 농업인금융사고센터를 설치하여 연체농가 등에 대한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농지은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농업생산과 관련된 농업인 연체채권에 대하여는 연체이자감면 및 농산물 수확대금으로 연

체채권을 자진변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확대금 수령시까지 경매진행을 유예토록 하는 등 농업인이 경영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실시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어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고, 담보농지 경매시 유찰, 저가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농가에게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체,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중 환매권을 보장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50백만원)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 지사에서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영농규모 등을 종합평가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 등 농지로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정하며, 매입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3년 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에서 매입단가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또한,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경영회생능력 제고를 위해 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현행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연체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에 한계가 있어 농지은행제도의 일환으로서 2006년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어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고, 담보농지 경매시 유찰, 저가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농가에게 경영회생의 기회를 줄 걸로 기대된다.

(농지과 농업사무과 이영식)

5.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가. 추진배경

농촌금융시장은 상업금융기관이 진출을 꺼리고 농업부문의 낮은 수익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정책금융도 이제는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99년부터 '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대출심사와 회수책임을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04.8월부터 축발기금의 일부 사업자금에 대하여 시중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방식을 개선하였으며, '04.5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하여 농특회계용자금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해 왔다.

나. 추진현황

'06년부터 시중은행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및 축발기금의 모든 용자사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대상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시중은행도 농업정책자금에 한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05.8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출연을 확대('05년 4,000억원→'06년 5,780)하는 한편, 금융기관 출연요율 인상(0.2%→0.3) 및 위탁보증수수료 인하(15%→10), 부분보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다. 추진계획

앞으로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독점적 공급방식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3년까지 농축산경영자금 등 운영자금 성격의 50%를 농업종합자금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대출하는 농업종합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별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적정소요의 정부출연과 함께 동 기금의 보증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출연을 하지 않고 있는 일선조합 등 비출연금융기관의 신규 출연을 포함한 기금 건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특회계 용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설립 및 검사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낙휘)

제6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지속 추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평가단」를 통해 2005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였다. 먼저 15개 부처로부터 2005년도 추진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점검·평가단」를 통해 4개 분야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20%는 우수, 20~80%는 보통, 하위 20%는 부진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평가보고서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2006.5.19)와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2006.5.25) 및 국회에 보고(2006.6.22) 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송부하여 2007년도 예산이나 사업지침에 자율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2006.5.19)하고,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2006.5.25) 및 국회에 보고(2006.6.22) 하였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 무주에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 담당자 200여명을 모아놓고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대책 내실화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3.22~3.23)하였고, '06년도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대책의 주요사업, 농촌의 비전, 투융자 계획 등을 소개한 홍보책자 7,000부를 만들어 관련중앙기관, 시·도, 시·군, 농업인 단체, 농협, 일반국민 등에 배포하였다.

(농촌정책과 서기관 한중현)

2.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수립 추진

가. 수립배경

도시화·산업화·개방화의 진전과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농어촌의 정주여건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프라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어촌학교 통폐합, 교원의 농어촌근무 기피 등으로 교육여건 악화는 지속되고 있고 농어촌의 주택보급률은 외형적으로 100%를 훨씬 상회하나 노후주택(30년 이상) 비율이 도시지역의 4배 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의 인구는 '80년 43%에서 '00년 20%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35개 군지역, 771개 읍·면지역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지역사회 유지 및 국토공간의 체계적 관리·정비가 곤란한 실정이다.

반면 도시의 정주여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과 과밀문제 심화로 교통혼잡비용, 대기오염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민소득 향상 및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의 전원생활, 농어촌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상황 속에서 국민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촌 구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환경시설과 교육·복지·문화 서비스가 충실하며 전통과 숲이 있는 마을로서 이주도시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가 형성된 공간으로서의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의 개념 및 정착방향정립은 지난해(200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 주관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2차례 보고회(7.14, 12.21)를 통해서 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였다.

농특위내에 위원회 수준의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통합의 틀을 마련하고 13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실

무 T/F팀(팀장 : 농림부 차관)을 구성하여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은 정부의 정책지평을 넓혀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임을 감안하여 우선 정책대상을 도시 은퇴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중에 있다.

다. 주요내용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은 농·도 상생의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농어촌 거주인구를 전 국민의 20%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주공간조성, 이주지원, 추진체계정비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 주거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추진방식도 도시민의 기호에 맞게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민의 65%가 숲 등 자연경관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마을의 핵심경관으로서 숲가꾸기, 산림의 휴양·휴식공간기능 확충 및 □□국민의 숲□□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05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를 '07년까지 시범 실시 후 결과를 평가하여 직불 대상작물의 범위 및 기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농촌경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촌경관지표 및 농촌경관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농어촌 정주체계에 맞게 소도읍·중심면을 중심으로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존 읍·면에서 제공이 어려운 고품질 서비스는 거점도시의 농어촌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이주지원을 위해 농어촌 이주를 희망·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불편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단계에서는 농어촌종합정보센터를 확대하여 이주의향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상담, 현장안내 등 오프라인서비스 및 전원생활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간기구, 지자체 등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

도시민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할 것이며, 기 운용중인 농어촌종합정보포털 (<http://www.nongchon.or.kr>)을 이용자 요구에 맞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행단계에서는 이주도시민을 위한 주택개량융자금, 영농 정착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활성화하고 특히 농어촌종합정보센터에 인력알선기능을 추가하여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이주의향 도시민간 연결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부족한 인적자원을 보완하고 도시민의 경험·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 정착단계에서는 이주도시민을 농어촌 혁신동반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개발리더교육 등에 참여시키고 이주도시민과 농어촌 주민간의 융화를 위해 사전, 사후접촉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재원 확보, 정책 조정 등을 책임지고 지자체와 주민대표는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책임지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확산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모델마을 4곳 조성이 추진 중이며, 2006년 10월에는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군에서 준비한 다양한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홍보하고 이주 의향이 있는 도시민 은퇴자의 입주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농촌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3. 농촌형 복지대책 확충

가.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연금·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로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의 40%를 경감하는 것을 올해부터 50%까지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06년 7월부터 준농어촌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경감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외의 농어업인의 거주지인 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둘러 싸여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은 표준소득월액 13등급(480,000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1인당 연간 259,200원을 지원하였고, '07년도에는 14등급(520,000원) 소득 이하는 보험료의 50%를, 14등급 소득 초과는 14등급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1인당 연간 280,8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협 안전공제의 경우에도 사망공제금의 보상수준을 2,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 보건·의료기반 확충

농촌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28개군 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전담인력 배치 및 시설 장비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노후 의료장비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체계, 이용상황 및 노후정도를 감안하여 보건소 등의 신·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화·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어촌 노인에 적합한 일거리나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장수마을을 '05년 100개 마을 육성하였으며, '06년도에는 30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도 '05년도에 56개소 설치하고 '06년부터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로 구성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라. 교육비 부담경감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경지소유규모 1.5ha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과 함께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06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은 26천명에게 700억원을 1·2학기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사무관 엄기훈, 사무관 김낙신, 한철수)

마.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급격하게 진행되어 2004년도 말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6%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해 있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⁵⁾로 조손가정이 늘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는 등 의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가족해체 및 농촌공동체의 공동화로 사회적 안전망이 허물어짐에 따라 농촌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

5) 농촌지역 이혼건수 : ('90)8,480건→('00)21,154→('03)28,889

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농사는 물론 생계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사고나 장애시에 겪을 농사와 가사에의 어려움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사고 발생시 영농인력을 지원(영농도우미)하고, 고령·취약농가에 가사인력을 지원(가사도우미)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82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06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지역농협 또는 농협지역농협복지센터)을 시행주체로 하며, 농협도지역본부에서는 농촌인력지원단 9개소를 개설하여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영농일 자리를 제공하고, 농촌가사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농촌봉사활동을 연계하는 창구역할을 맡게 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시범실시 첫해의 사업규모는 사고농가 4,000명과 고령농업인 12,000명에게 총 2,933백만원(국고지원 2,053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도우미는 총 1,920백만원 중 국고지원 70%와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업인이 30%를 부담하며, 가사도우미는 총 1,013백만원 중 7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30%를 부담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농가에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지소유규모 3ha미만, 65세 미만의 농업인이 전치 2주 이상 농작업·교통·재해 사고 등을 당한 경우에 최장 10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 취약농가에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지원은 65세 이상으로 고령단독·편조손 농가 및 65세미만 사고농업인 중 1월 이상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가 대상이며,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7년에는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질병이나 교육도우미 등 지원내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목)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농촌체험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5년 47개 마을에서 2006년에는 67개 마을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06년 2,000명 계획) 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제를 새로이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농산어촌체험여행책자 및 지도 제작·배포,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초등교사 농촌체험학습행

사,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부터 농협과 기업·단체 등 민간주도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1사1촌운동의 교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1교1촌, 1부대1촌, 1종교1촌 등 자매결연 및 교류형태를 다양화하고, 기업체는 다사1촌, 1사다촌, 1사1지역 등 자매결연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여 실질적인 전담조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도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농산어촌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6~8월 세 달 동안 농림어업 관련기관과 함께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농산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하였다. 중·고·대학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농촌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제3회 나의 농촌문화체험기'를 공모하는 한편, 농촌체험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행사를 실시하였다.

도농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농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제3회 도농교류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도농교류 촉진법' 제정을 검토중에 있다.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관 이영길, 사무관 전영미)

5.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04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추진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모형을 창출하기 위하여 초창기 계획수립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지역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을 병행 실시 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평가단이 기본계획안에 대해 3단계(구상·중간·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05년부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권역범위 설정의 적정성, 지역자원 및 활용가능여부, 지역주민·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예비계획의 검정성 및 파급효과 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여 시·도지사가 신청한 권역을 대상으로 농업기반공사 조사팀과 외부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있는 권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에는 총 467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에 착공한 36개 권역의 계속시행과 2005년도에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40개 권역중 20개 권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립한 후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에 착공을 목표로 20개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수립시 다양한 형태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권역별 '마을개발협의회'와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방향 점검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와 지역전문가 등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마을지도자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의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농촌이 되도록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자원을 격조있고 특성있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파트너쉽(partnership)을 견지하면서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한준희)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농촌인구는 1990년 25.6%에서 2000년에는 20%, 2005년에는 18.5%로 감소하였고, 2004년도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의 6.7%를 크게 상회하는 15.6%를 나타내고 있는 등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촌지역주민의 기초생활환경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도시민의 농촌유입촉진으로 농촌인구를 유지하여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780개면·구에 대한 1단계 지원을 완료한데 이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로 800개면·구에 대하여 마을안길정비,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정비 등의 농촌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도시민 또는 도시이탈자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에는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해 총 2,321억원(국고 2,160, 지방비 161)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300개 면을 대상으로 지원하

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5지구를 신규착수하여 2005년 이전에 착수한 30지구를 포함하여 총 55지구를 추진하는 한편, 2004년 이전에 착수한 문화마을 7지구는 2006년에 지원을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체계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그간에 추진되어온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주로 관 주도로 추진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정주기반확충 및 마을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개발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합의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며,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주택용지 조성 후 분양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으로 입주민의 의견반영이 미흡하고, 지역주민에 우선 분양함으로 인하여 주택건축 등 기존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보완하여 사업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입주예정자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이 농촌에 들어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조성 등 메뉴를 다양화 하여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도 농촌에 함께 정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한준희, 농촌정책과 토목사무관 박종민)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004년까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94~'04)사업으로 4,751개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20호 이상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14년까지 3,000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는 제2단계('05~'14) 사업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자연마을 총 7,751개소의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06년도에는 353억원을 투자하여 267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표 3-2-12>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4까지	2005실적	2006계획	2007이후
사업량(개소)	7,751	4,751	346	267	2,387
사업비(억원)	12,951	7,851	589	441	4,070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태형)

6. 향토산업 육성

향토산업이란 일정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특성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은 그 자체가 향토산업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이루며, 지역사회 2, 3차 산업의 존립기반이 되는 원재료와 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토산업의 발전은 농림어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토자원이란 특정지역에 주로 존재하고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며, 지역의 생활과정을 통해 토착·계승되어온 생활양식과 이를 구성하는 자연자원·재화·기술·문화를 말한다.

최근 WTO DDA 협상, FTA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추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농외소득 제고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향토자원을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향토산업 진흥시책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05년도에 우리부의 주요 업무추진 과제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07년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시·군)를 통하여 향토자원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100개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였으며, 조사된 향토자원은 사업성을 평가 및 □□향토자원평가 및 전문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9개 사업대상을 선정('06.1월)하였다. 선정된 향토자원 19개는 광주 전통 민속 떡, 양평 유기농 장류, 고양 선인장 기능성 제품, 봉평 메밀, 음성 신선편이 인삼, 진천 쌀과 작두콩, 청양 구기자, 당진 초락도리 약썩, 완주(봉동) 생강, 보성 대마, 장흥 호박, 진도 구기자, 영천 포도, 성주 참외씨, 함양 죽염, 합천 딸기, 통영 동백씨, 북제주 녹차, 남제주 천연염색이며, 주로 지역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과 기능성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향토자원을 '0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특화사업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향토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마련('06.4)하였으며, 추진방향은 농림부는 발굴된 향토자원의 사업성평가, 컨설팅 등 측면지원에 역점을 두고, 지자체는 향토자원 발굴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조건은 사업당 10억원 수준(국고 50%, 지방비 50)이며,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컨설팅, 브랜드화, 원재료 생산 등을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최호중)

7. 농업·농촌 정보화의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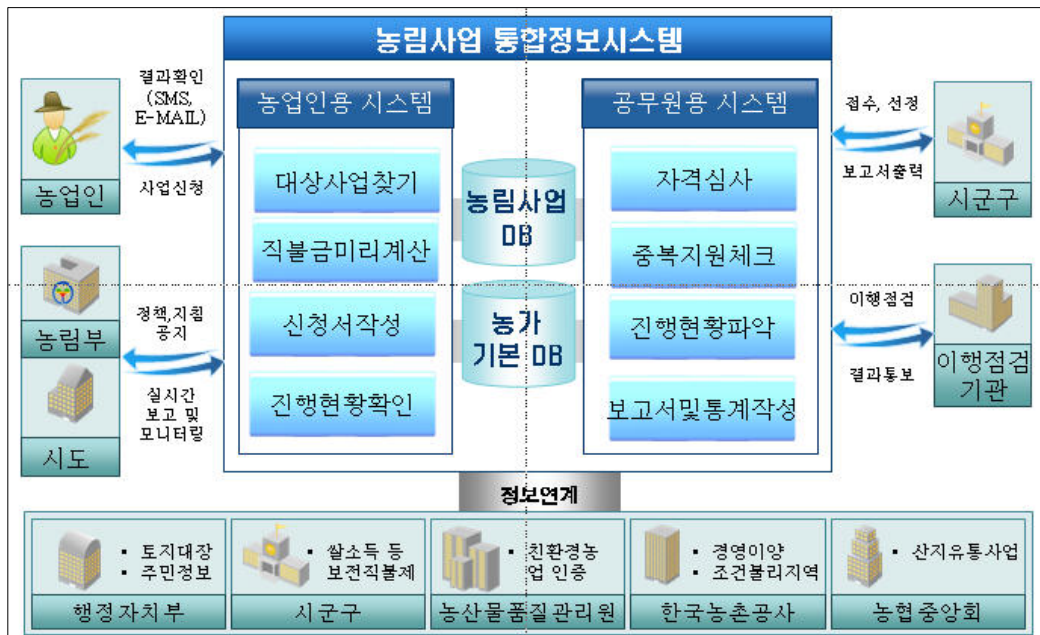
제1차 농업·농촌 정보화 5개년 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보화 기반이 상당수준 개선되었고, 농업인들의 인터넷 이용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농업인들이 상당수 있고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또한 미흡하여 다양한 농업정보 콘텐츠의 개발 및 정보화 교육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2차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2006~2010)을 수립, 농업·농촌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일선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도입키로 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2006년 5월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AgriX가 적용됨으로써 농업인들은 전국의 234개 시군구를 통하여 서류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게 되었고 일선공무원은 신청검토·선정·자금집행·보고하는 업무를 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농업인이 토지대장 등 각종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면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였고 일선공무원이 서류를 일일이 대조·확인하여 일을 처리하는 오프라인방식으로써 불편하고 중복신청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2006년도에는 대상자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직불제사업(친환경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에 대해 AgriX를 우선 도입키로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산분야로, 2007년도에는 과수분야로 확대하여 2009년까지는 130여개 농림사업 대부분을 온라인화 할 예정이다.

AgriX가 적용되면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함께, 시군구의 일선공무원과 농림부 사업담당자의 업무가 대폭 경감됨은 물론이고,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게 된다.

농업인의 경우 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영농상황을 입력하면 시스템의 자동검색기능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시 관공서를 찾아가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증빙첨부서류도 G4C 조회로 대체되어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다.

또한, 대상자선정·자금집행상황 등을 휴대폰이나 e-메일로 통보받게 되며, AgriX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수시파악할 수 있고, 본인이 받게 될 직불금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한편, 시도·시군 공무원은 AgriX의 자동탐색기능을 통하여 농업인의 중복신청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자료작성·관리와 대내외보고 자동화로 행정비용·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으며, 농림부 담당자는 사업 진행상황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중복지원 사전예방 등 행정의 투명화·효율화로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여력이 생기게 되며, AgriX에 축적된 정보는 DB로 관리되어 향후 맞춤형 농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조규표)

나. 농업·농촌 정보컨텐츠 확충

농림수산정보망(www.affis.net)을 통해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산지, 도매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유통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문화·교육 등 농촌거주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의 제공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먼저 농림수산정보망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출하지원시스템을 “Affis.net”으로 통합하고, 활용률이 저조하거나 시의성이 없는 콘텐츠는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마케팅, 소비·생산동향 등 회원 관심분야의 전문가를

동호회원으로 적극 섭외하여 전문지식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림 소속(유관) 기관이 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농림분야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색·분류·제공하여 농업인 등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04년까지 총 1,706농가에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기 구축된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 홈페이지 모음 사이트를 개선하고 홈페이지 운영의지가 높은 농업인 대상의 교육을 확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운영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 전자상거래 우수농가를 발굴·홍보하여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농산물 전시회를 겸한 시상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및 신규 홈페이지 구축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자체사업으로 유료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이대형)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교육내용 및 교재를 기초·중급·전문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집중화·차별화하고, 교육내용을 수준에 따라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공모과정) 개발을 확대하여 수요자 맞춤형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정보화선도자를 포함하여 교육 강사 등에 대한 인증제 시행 및 교육기관 평가로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교육이수 후 사후관리기능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재택·반복학습 지원을 위해 온라인교육 콘텐츠의 추가 개발 및 사용자 확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교육(Blended Learning)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22개 농업계 대학에서 실시해 온 농업정보119 서비스는 만족도조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방문교육 및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보화선도자 및 원격지원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방문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표 3-2-13>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98~'03	2004	2005	2006(P)
총 계	524,767	325,020	77,352	67,380	55,015
기초교육 (컴퓨터·인터넷활용)	149,811	117,722	20,445	7,144	4500
중급교육 (농업정보활용)	67,894	41,355	13,182	6,607	6750
경영·회계 S/W(중기)	3,416	-	-	1,766	1650
품목·분야별 전문교육	18,382	14,072	2,039	1,056	1215
농업정보 119서비스	91,462	56,198	13,190	12,074	10000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9,778	7,478	1,230	570	500
정보화선도자	81,906	11,271	16,292	23,943	30400
자체교육(농협, 기술센터)	46,666	31,776	6,821	8,069	-
온라인교육	7,712	1,202	2,722	3,788	-
원격지원서비스	3,794	-	1,431	2,363	-
생산자단체(농협)교육	11,186	11,186	-	-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농가방문교육)	32,760	32,760	-	-	-

자료 :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이대형)

8. 농업생산기반 확충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개발목표 164천ha중, 2005년까지 96천ha를 마무리하였고, 2006년에는 과거에 소규모로 농기계 작업이 어렵게 경지정리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913억원과 지방비 224억원 등 1,137억원을 투자하여 지난가을에 착수한 4.7천ha를 영농기 이전 완료하고 새로이 4.5천ha를 가을에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4>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사 업 량	164	96	5	63

주 : 봄마무리 기준임. '03년에 목표면적 조정 : 200천ha → 164천ha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조래청)

나. 밭기반정비사업

밭작물 상승가뭄지역을 해소하고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하며,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체 밭면적 721천ha중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110천ha(15%)를 1단계 정비목표(총목표 180천ha)로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밭기반정비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1994~2005년까지 15,857억원(국고 12,475억원, 지방비 3,382억원)을 투입하여 68천ha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전체 밭면적 721천ha의 9%, 1단계 목표면적의 62%수준이다. 2006년에는 1,046억원(국고 840억원, 지방비 206억원)을 투자하여 4천ha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15> 받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사업량	110	68	4	38
사업비	25,794	15,857	1,046	8,891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박종훈)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영농작업은 농기계 확대 보급으로 첨단화·대형화되어 가는 반면, 영농작업의 근간인 경작로는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쌀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까지 경지정리 시행지구안에 있는 주요 농로 35,000km를 확·포장할 계획이다.

이미 1995~2004년에 15,078km의 확·포장을 추진한 결과, 영농시간 단축, 농산물 운반용이, 생활환경개선,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006년도에는 1,215억원을 투자하여 1,159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지속 지원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3-2-1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총 계획	2006까지	2006계획	2006이후
사업량	35	16.4	1.2	17.4
사업비	37,071	16,718	1,214	19,139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조래청)

라.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절감, 단위 생산량 증가로 소득증대 등에서 효과가 크다. 앞으로 2011년까지 188천ha에 대한 방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국고 2,179억원을 지원하여 119지구(33천ha)에 대한 배수개선을 추진하고 이중 16지구(5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재해예방과 안전영농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흙수로 현대화 등 총 8,769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국고 3,300억원을 지원하여 수리시설개보수 420지구, 저수지준설 5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은 농경지의 용수공급 및 배수를 위하여 유지관리인 또는 수로감시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수리시설물을 조작하던 것을 용수절약, 유지관리비 절감,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광대한 지역에 산재된 다수의 수리시설물상태 및 용수수급상황 등을 실시간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도록 시설자동화 및 원격조정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국고 66억원을 투입하여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3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206개소, 지방관리방조제 3,284개소 등 전국 3,490개소의 방조제·배수갑문 등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투자로 많은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오래된 시설은 외측보호 사석의 유실,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재 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 발생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6년에는 904억원을 투입하여 260개소를 시행, 그중 85개소의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김동권, 토목사무관 박종훈)

마. 농업용수 개발사업

2006년도에는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101개 지구에 2,436억원을 투입하여

15개 지구 3,966ha를 준공,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73개 지구에 622억원을 투입하여 15개 지구 1,508ha 준공,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은 37개 지구에 174억원을 투입하여 5개지구 178ha를 준공하는 등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3-2-17>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ha)

구 분	총 계 획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대·중 규모	118.8	56.5	4.0	58.3
소 규 모	11.0	0.3	0.2	10.5
지표수 보강	31.8	20.1	1.5	9.3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기술서기관 이성홍)

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하천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2006년에 금강Ⅱ지구 등 7지구에 12만2천ha에 대해 국고 910억원, 농지관리기금 2,510억원 등 총 3,4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은 2001년 8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무효확인 및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2006.2.16일 대법원은 최종판결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측 승소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01년부터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1건, 행정소송 3건, 효력정지 1건 등 총 5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여 무수한 논란을 종식시키게 되었다.

세계 간척사상 어려운 심해 해상공사로 국내외 주목을 받아온 새만금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는 지난 1995년부터 수리실험과 국내외 공동연구 등을 통해 최신장비와 신공법 적용하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6.3.17부터 방조제 현장과 연결하는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현장점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계획공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 2006.4.21 새

만금 방조제 33km를 성공적으로 최종 연결하였다.

새만금사업은 흙쌓기 및 돌붙임 등 방조제 보강공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현재 연구용역중인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새만금 내부개발도 이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표 3-2-18>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계	22지구	283,227	83,809	48,484	3,420	31,905	
준공	15지구	161,667	13,767	13,767	-	-	
시행중	7지구	121,560	70,042	34,717	3,420	31,905	
시행중	금 강Ⅱ	43,000	7,069	3,859	400	2,810	'89~'08
	미호천Ⅱ	4,430	2,909	2,270	100	539	'89~'08
	홍 보	8,100	3,755	2,575	210	970	'91~'10
	영산강Ⅲ-1	13,160	7,099	3,950	150	2,999	'85~'09
	영산강Ⅲ-2	7,840	4,219	2,217	200	1,802	'89~'10
	영산강Ⅳ	16,730	7,439	660	160	6,619	'01~'07
	새 만 금	28,300	37,552	19,186	2,200	16,166	'91~'11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제7절 농정제도 개혁

1. 농지제도 개선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산물 소비감소,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농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임차 등을 통한 영농규모화 등 농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개발 등 농촌활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지이용도를 제고하며, 쌀값하락 등 향후 예상되는 농지시장의 불안요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04.7)을 토대로 개정된 농지법을 2006.1.22 부터 시행(농지 임대허용범위 확대 관련사항은 2005.10.1부터 시행)하였다. 2006년도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내에 농가소득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진흥지역 해제기준을 지자체 위주로 조정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산지유통시설(APC)의 설치규모를 종전의 1ha에서 3ha로 확대하고 농산물 판매시설·체험시설 등의 설치를 신규로 허용하였다. 또한,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관리지역 및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주말·관광농원시설 및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중 설치가능한 시설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전용제한 면적기준을 7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10ha까지 허용하던 농업진흥지역 밖 시·도지사의 전용허가권한을 20ha까지 허용하였으며,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단지 등 10개 지구·단지에 대한 농지전용권한을 전부위임하는 등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하여는 1천㎡까지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휴양관광업의 진흥을 도모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국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2005년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농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006년부터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및 농지매도수탁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지법 운영상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과 행정사무관 송태복)

2. 농지은행제도 도입 및 추진

(1) 도입

쌀 소비감소, 수입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시장 불안을 사전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통해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농지은행의 주요기능으로는 농지유통화정보제공, 농지임대·매도수탁관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이 있으며, 시행은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지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05.7.21) 하였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정기국회에서 개정('05.12.29) 하였다.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인 “농지유통화정보 제공”은 '05. 7월부터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정보 등을 제공하였고, '06. 1월부터는 기능을 확대·보강하여 농촌주택 매물·귀농안내·농촌정주 및 농촌관광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자기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05.10.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 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 기간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였다.

재해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농업인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다음, 임대 기간중 환매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회생을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06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한 후,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

하여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 매입·비축사업”은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06년에는 농지은행 제도 정착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2) 추진

2005년도에는 농지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법□□(2005.7.21일)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12.29일)을 개정하여 농지유통화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는 □□농지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및 농지매도수탁사업을 '06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사업은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사업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농지유통화정보 제공

2005.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정보 등 농지유통화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06년 1월부터는 농어촌 종합정보포털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2005.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 기간내 해지시 계약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농지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3. 협동조합 개혁

가. 추진방향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과 농업환경이 급변하면서 농협의 사업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 간 무역장벽이 붕괴되고 시장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경쟁시장은 소규모 지역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WTO 체제 이후 각국 정부는 농업보호정책 감축과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각종 사업은 양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선호의 다양화·고급화 추세는 단순 물량 위주의 사업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최근 선진국 협동조합들은 사업전략과 조직구조를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혁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과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존 차원에서 시장지향적 사업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직구조를 이러한 사업전략과 합치되는 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농업협동조합은 어떠한가? 농협은 과거 정부의 보호아래 농업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가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데다, 생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던 시기였으므로 사업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운영방식의 개선 없이 영세한 영농규모 등 열악한 농업여건 하에서의 협동조합이 최근 농업환경변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조합경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경우처럼 영세한 읍면단위의 시스템 하에서 농협에 거는 기대와 실제 역할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금융시장 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농협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탈바꿈 되고,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주체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농촌의 복지향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나.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는 2004년 개정된 농협법(부칙 제12조)에서 농협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협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법 시행('05.7.1)후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를 논의하기 위하여 '05.12월 농림부내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하고 '06. 1월부터 농림부, 농특위, 학계, 농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 15명으로 운영하였으며, 7월부터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 언론, 농협 등 23명으로 위원회를 확대·운영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수협중앙회 독립사업부제 사례분석, 농협의 교육·지원 및 경제사업 현황분석, 농협에서 제출한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실무기획팀을 농림부, 농협, 전문가 등으로 확대·개편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확충, 법인 설립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 및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가 농협중앙회 세부추진계획서의 보완 및 추가적인 세부추진계획 마련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 자본금 규모 및 자본금 확충방안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별로 신·경분리위원회에서 집중 검토중에 있으며, 주요 쟁점,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과장급, 농민단체, 연구용역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전문가, 농민단체, 일선농협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농협이 경제사업이 활성화 되어 농민 조합원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신·경분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5년도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진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 미만에서 0%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비율 4%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이 편법으로 우선출자금을 조성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파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영약체조합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 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속히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실조사 대상조합에 대하여 대부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된 부실조사 대상 144개 조합 중 143개 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가 완료된 조합 중 71개 조합의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 430명에 대하여 32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또한 소송이 완료된 105억원 중 70억원을 승소하였으며, 224억원에 대하여는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협동조합과 사무관 배종혁, 박순연)

4.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속추진

'06년도에는 시범사업 2년차 계속사업으로 그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단에 인센티브를 배정하고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성과평가 시 드러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사업단에 통보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할 계획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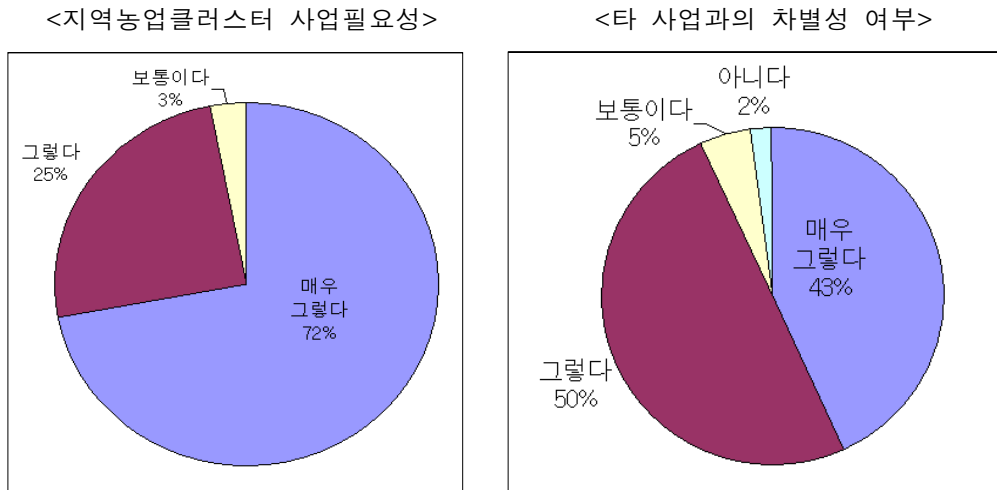
<표 3-2-19> '06년도 사업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일 시	내 용	비 고
'06.2.13~2.14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혁신활동 평가 - '05년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위주로 평가 실시	
'06.3.28	○ 지역농업클러스터 중장기 발전방안 협의 - 도 농정과장 및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위원 등	
'06.5.1~5.2	○ 지역농업클러스터 워크숍 - 도 농정과장 및 20개 사업단장 등 140여명 참석 - 사업단별 추진실적 및 '06 사업계획 발표 등 본격적 사업 추진 점검 및 독려	
'06.6.21~6.22	○ 지역농업클러스터 실무 워크숍 - 농림부, 농관원, 20개 사업단 실무자 등 50명 참석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비 집행 독려, 평가방향 및 사업 발전방안 등 논의	
'06.9월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중간평가 - 사업 추진 준비 및 집행과정의 충실도 평가	
'06.6월, 10월	○ 클러스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지도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농림사업 중 클러스터 사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고 금년 3월 20개 시범사업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단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0>

설문조사 결과



이 사업의 진행상황은 지난해의 경우는 초년도 시범사업인 관계로 실제 예산집행이 미흡하였으나, 사업 2년차인 '06년도의 경우 '06. 9월말 현재 예산 300억원(이월 100, '06예산 200) 대비 62%(집행 186억원)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사업단이 농가 조직화를 통해 원활한 네트워킹이 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시범사업단 모두가 성공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사업 추진 속도나 추진상황을 감안하면 사업성과가 3년차('07)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매년 11.11)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의 지역혁신박람회(11.7~11, 광주)에 클러스터 사업단별 부스를 설치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 줄 계획이다.

<표 3-2-21> 사업단별 연차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도	사업명	연차별 지원계획				비고
		'05	'06	'07	합계	
경기	안성마춤클러스터	550	1,000	1,506	3,056	
	포천전통한과마을클러스터	550	570	119	1,239	
강원	강원한우하이록클러스터	600	780	969	2,349	
	백두대간농업클러스터	600	600	883	2,083	
충북	영동포도농산업클러스터	550	660	760	1,970	
	괴산친환경청정고추클러스터	550	860	824	2,234	
충남	아산자원순환형친환경농업클러스터	550	760	801	2,111	
	한산모시산업화클러스터	550	630	606	1,786	
전북	장수 Mt.Apple Power 클러스터	550	690	668	1,908	
	정읍돌고도는원순환농업클러스터	550	750	1,070	2,370	
	임실낙농(치즈)클러스터	550	1,000	1,457	3,007	
전남	보성녹차클러스터	550	1,100	1,623	3,273	
	함평과학농업클러스터	550	670	683	1,903	
	전남친환경쌀클러스터	600	1,060	1,318	2,978	
경북	경북한우클러스터	700	1,650	2,000	4,350	
	풍기인삼클러스터	550	870	860	2,280	
경남	경남친환경쌀클러스터	600	890	1,004	2,494	
	하동녹차클러스터	550	1,170	1,105	2,825	
	경남양돈산업클러스터	600	1,140	1,296	3,036	
제주	감귤클러스터	700	550	748	1,998	
용역비, 중앙·도청경상비		450	600	500	1,550	
인센티브		-	2,000	2,100	4,100	
합계	20개사업단	12,000	20,000	22,900	54,900	

주) 도 경상비는 각 도에 30백만원 배정, 단 제주는 10백만원 배정

(구조정책과 행정사무관 안창근)

제8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 대응

1.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 추진

쌀협상과 WTO/DDA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경우 우리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04. 2월 쌀산업종합대책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5.7.1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편하여 해방이후부터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폭 확대에 사전 대비하였다. 양정제도의 주요개편 내용으로는 그동안 추곡수매제가 담당하던 비축기능은 WTO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로, 가격지지에 따른 소득보전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수확기 출하물량은 RPC등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로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쌀 시판에 따른 농업인의 우려를 감안, 시판물량의 수확기 이전 판매완료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으며, 저가의 수입쌀 도입으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감시원, 특별사법경찰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MMA 물량의 고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모니터링 요원 등을 활용하여 국제가격동향을 수시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 받은 10년 동안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쌀이 외국쌀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함께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개선을 통해 민간유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최명철)

2. 개방확대 대비 중장기 대책 보완

가. 농업·농촌종합대책 평가·조정

(1) 총괄

2005년 실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와 농업인단체는 정부가 농업·농촌 대책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농림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점검·조정하여 단기 보완대책은 2006년 2월까지, 농업·농촌종합대책 3년주기 정기점검 일정에 따른 중장기 보완대책은 2006년말까지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조정방향, 추진체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2월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농림부내 실무 T/F를 구성하였다.

(2) 단기 보완대책 추진

먼저, 단기보완대책은 실희협상결과 비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희대책 등 단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실희협상결과 비준 과정에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의 세부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지난해 개편한 시장지향적 양정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제도변경에 따른 시장반응을 반영하여 양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리고 가속화되는 시장개방 여건하에서 과수산업,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되었다.

실희협상결과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농업계에 약속한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지원, 농업기반시설 지원확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쌀 자조금 근거 법률 제정, 찌쌀 등 불법 수입·유통쌀 단속 강화,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01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밭농업직불제 도입, 농지은행제 조기 도입,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확대, 농업통상시스템 개선, 과수산업 종합대책 마련, 식품산업 발전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의 18개 과제 추가지원 대책은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되거나 이행되고 있었다.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방안, 민간 유통활성화 및 쌀수급관리 대책 추진, 품질고급화·브랜드 및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양정제도 보완 및 개선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고품질·안전 과실생산기반 구축, 품목 조직육성 및 산지유통체계 개선, 안전성 관리 강화,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과실 소비촉진,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보완 등을 추진하는 과수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우수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 축산물 품질고급화 추진, 생산에서 유통까지 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가축질병 예방,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축산업 보완대책 등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기보완대책은 농림부 장관과 17개 주요 농업인단체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2005년 12월9일 개최하여 종합대책 점검작업의 취지와 일정에 대해 농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작하였고, 농림부와 주요 농업인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6개반 분야별(농정, 통상, 식량, 유통, 축산, 농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업계, 지자체 등에서 제안한 155개 과제를 제안 받아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을 총 27회 운영하면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예산소요, 제도개선 과제 중심으로 관계부처협의회를 통해 과제 수용여부,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시 약속한 18개 과제 이행상황과 쌀·과수·축산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3년주기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평가계획과 함께 2006년 2월 28일 국회에 문서로 보고하였다.

(3) 3년주기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평가 추진

2004년에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제정적으로 뒷받침하는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DDA 농업협상, 한·미 FTA 협상 진전 등 여건변화와 선진국로 발전해가는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 3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계화된 3년주기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작업을 2006년 3월부터 추진하였다.

2005년 12월부터 구성하고 운영해온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농림부내 T/F, 실무협의회, 관계부처협의회를 개편하였으며, 지난 3년 투융자를 평가하기 위한 투융자평가협의회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투융자 평가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평가협의회 운영과 연계하였으며, 연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연구자도 연구에 공동 참여토록 하였다.

금번의 점검·조정작업은 지난 3년간('04~'06)의 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계획) 시행의 결과를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부문별 정책을 조정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계의 제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심층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점검·조정의 기본방향은 개방확대 대비,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득·농촌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농정체계를 농가유형별 맞춤형 체제로 전환하는 것 등으로 일련의 대책 수립과정에서 농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관계부처,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종합대책 점검·조정작업은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6년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나.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 기본계획 수립

DDA·FTA 등 개방확대, 소비자 기호 변화, 농업내부의 양극화 확대, 성장단계별 다양한 경영체 등장 등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의 만족도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가유형별 목표와 수단을 달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평균농가를 대상으로 정형화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우리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농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맞춤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체계를 2013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농정 추진계획을 수립('06.3.29)하여 맞춤형농정 정책협의회 구성, 농가유형 구분 등 중점추진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속적인 정책협의회(14회)를 통해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중장기 직불제 개편안 포함), 고령농 특별

소득보조, 경영이양직불제를 개편한 은퇴직불제,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의 도입방안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맞춤형 농정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농정의 패러다임>

	<u>현행 패러다임</u>		<u>맞춤형 패러다임</u>
주요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균적 지원 - 평생농업정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발전단계와 역량에 따른 차별적 대우 -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적정 소득 보장 - 농업정책 대상과 제외 대상 구별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 구조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구조개선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품질 중심 - 농업인 중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품질 중심 - 소비자 중심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시장
정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인, 소비자, 농촌주민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농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상 한정 차별지원
투자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반 등 SOC - 소득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시스템) - 소득·복지·지역개발
소득안정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지지·품목별보전 - 논농업 위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단위 소득보전 - 논·밭·과수·축산 포괄

(맞춤형농정팀 행정사무관 조백희)

3. FTA 협상 추진

가. 한·미 FTA 협상대응

한·미 FTA 협상은 양국간 사전실무점검회의(3회), 통상장관회의(6회) 등을 거쳐 2006년 2월 3일 협상 출범이 선언되었다. 이 같은 범정부적 FTA추진에 대응하여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협상은 물론 국내 대책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6년에는 총 5차례의 협상을 가질 계획이며 농림부는 농업분과와 SPS(위생 및 검역) 분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원산지·서비스·지재권 등 농업과 관련된 분과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6. 5.~9>

1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기본입장 설명, 협정문 초안 검토 및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농업분과 협상에서 우리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미측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SPS분과 협상에서는 양국간 SPS 현안에 관한 협의채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SPS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원칙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2차 협상: 서울, 7. 10.~14>

농업분과 협상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도입,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연장·수입쿼터(TRQ) 등의 운영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양국간 의견 차이가 커 농업부분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했다. SPS 분과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 이어 양국의 검역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꾀하였다. SPS 분과는 2차 협상에서 의견이 있는 부분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9. 6.~9>

3차 협상을 앞둔 8월 15일 한·미 양측이 교환한 양허안을 3차 협상에서 처음 논의했다. 양측은 농산물 양허에 대한 서로의 기대수준에 상당한 차

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측은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및 관세철폐 이행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미측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였다. 농산물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서도 양국간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측은 민감품목 논의를 위해선 세이프가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반면, 미국측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SPS분과 협상에서는 양국의 검역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4차 협상부터는 협정문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시키기로 합의하였다.

<4차 협상: 제주, 10. 23.~27.>

제4차 협상에서는 농업분야 협정문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를 하여 일부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고 입장이 상치된 부분은 양측 입장을 병기하는 수준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다. 한·미 양국은 협정문에 농산물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키로 합의 하였는데 발동기준 등 세부세항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허안과 관련하여 3차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상 마지막 날 우리측 수정 양허안을 미측에 전달하였다. 미측도 일부 품목의 양허를 개선한 수정 양허안을 제공했다. SPS분야는 투명성 규정 및 협의채널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쳤으며, 차기 협상에서는 상호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제5차 협상은 12월 4~8일 일정으로 미국 몬타나 주(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관세양허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측은 쌀은 양허 제외라는 기본 입장을 확고히 하고,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양허 제외, 부분 감축, 수입쿼타 설정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활용하여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2과 행정사무관 박수진)

나. 한·아세안 FTA 협상 대응

아세안과의 FTA는 2005년 11월 8차 협상에 이어 2006년 2월 9차 협상시 원산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었다. 4월 11차 협상에서는 FTA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부문 협정을 타결하였고, 상품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이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12차 협상시 상품협정 후속조치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7월에 개최된 13차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상호주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었고 투자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측은 8월 24일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한-아세안 상품협상의 관세철폐방식(Modality)은 다음과 같다. 상품은 본 방식에 따라 양허안이 작성되며, 당해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인하된다.

<표 3-2-22> 한-아세안 관세철폐방식(Modality)

카테고리 구분	관세철폐방식의 내용
초민감품목 (HS6단위 : 200개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관세유지(양허제외) ○ 2016년부터 20% 감축 ○ 2016년부터 50% 감축 ○ 저율관세할당물량제공(TRQ)
민감품목	○ 2016년까지 5%p로 감축
일반품목	○ 즉시철폐, 2008년까지 철폐, 2010년까지 철폐

<표 3-2-23> 초민감품목 주요 농산물

구분	내용	품목수(6단위)	주요 농산물
A	2016년까지 50%p이하로 감축	5	치즈, 사과, 배, 오렌지(실질 현행관세유지)
B	2015년까지 양허제외 2016년 1/5 감축	117	쇠고기(기타), 돼지고기(기타), 닭고기, 오리고기, 낙농품, 달걀, 녹용, 감자, 단옥수수, 녹두, 팥, 고구마, 호도, 밤, 잣, 대추야자, 구아버, 망고, 포도, 복숭아, 두리안, 단감, 대추, 생강, 메밀, 진분, 땅콩, 참깨, 인삼, 참기름, 들기름, 소시지, 분유, 설탕, 혼합조미료, 기타 가공식품
C	2015년까지 양허제외 2016년 1/2 감축	23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맥아, 가공곡물, 오렌지 주스
D	TRQ제공 현행관세유지	3	강낭콩, 메니옥, 메니옥전분
E	현행관세유지	35	쌀, 고추, 마늘, 양파, 녹차, 쇠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파인애플, 바나나, 감귤, 유장기타 조제식료품 등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는 검역및위생에관한조치(SPS)로 아세안 측은 작업반(Working Group)을 만들어 정보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바, 현재 농림부는 품종보호 워크샵, 조류인플루엔자, 농산물유통관리 관련 협력사업을 제출하였다.

또한 서비스·투자분야 협상이 진행 중이며, 서비스분야는 양측이 개방분야의 목록화(positive system) 방식을 채택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개방할 부분에 대해서만 양허안에 표시함으로써, 양허안에 미표시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개방되지 않는 방식이다.

한편 투자분야에 관하여는 개방의 형태에 대해 아직 아세안 내부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농림투자분야의 경우에는 많은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할 분야와 그렇지 않을 분야를 구분하여 목록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투자분과까지의 최종합의를 위해서는 내년말('07년 11월) 정도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3-2-24> 2006년 협상 주요 내용

협상 시기	협상 주요 내용
9차(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농산물 원산지 일반기준 적용문제 논의 ○ 품목별원산지협상(PSR) modality 협상 마무리 ○ 아세안 개별 국가 양자협약(상품 양허안 관련)
10차(3.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HSL) 협상 ○ 각 카테고리별 품목 배치 관련 협상
11차(4.2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협정(양허안, 원산지) 합의 도출 ○ 상품협정문에 가서명
12차(5.2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협정 후속조치(SPS, 상호주의) 논의 ○ 서비스 자유화 방식
13차(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및 범위 논의
14차, 1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S 및 서비스·투자 영역 논의

(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피계림)

다. 기타 FTA협상 대응

(1) 한-캐나다 FTA 협상 동향

지난 3차례 본협상을 통해 양측은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차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으나, 관세철폐 가속화 조항, 농업소위원회설치, SPS 위원회설치, 양자 세이프가드 및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의 존속기간에 대한 의견조율이 아직도 남아있다. 따라서 협정문 타결을 위한 논의 시간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협상의 핵심인 양허안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제4차협상에서 양측은 민감성을 반영한 장기관세철폐품목 및 양허제외품목 리스트를 교환하고 관세철폐방식을 확정하였다. 우리측은 캐나다가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인 자동차, 조선 등을 10년이상 장기관세철폐품목으로 분류하여 우리측 수출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이의제기하였다. 또한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은 몇차례의 협의를 거쳐 캐나다측의 수출 이익을 반영하여 마련한 최선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캐나다측도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우리측 농산물의 양허 제외가 많다는 점을 들어 자국의 수출이익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양측은 상대측 양허율⁶⁾이 기대수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리스트의 교환을 통해서 양허안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공감하고 제5차협상에서 1차 양허안을 교환기로 했다.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5차 협상은 관세 철폐안을 최초로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 협상 전개의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협상인 셈이다.

동 협상에서 우리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한 대부분 민감 농산물을 양허제외로 분류한 관세철폐안을 제시한 반면 캐나다측은 조선·자동차·섬유·철강의 대부분을 중기(5~7년) 관세철폐로 분류한 관세철폐안을 제시하였다. 캐나다측은 아울러 자국의 자동차·조선 등 민감 산업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수출이익을 반영

6) 농산물 양허율(수입액 기준)은 캐나다가 99.9%, 우리측은 77.4%임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캐나다측안에 대하여 우리측 최대 관심품목인 승용차가 여전히 장기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측 수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캐나다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겉보리 등 자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이 우리측 관세철폐안에서 제외항목으로 분류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한편 양측은 양허안 교환을 통해 상호간 입장차를 확인하였고 제6차 협상(6.26~29, 서울)에서 금번 교환한 양허안을 기초로 작성한 관심품목 리스트를 교환하였다. 예상대로 캐나다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양허개선을 요구하였고, 주로 실행관세 10%이하인 품목들은 즉시관세철폐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우리측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관심품목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양측은 9월말 개최예정인 제7차 협상에서 상대방 관심품목 리스트를 반영한 제2차 양허안을 작성하여 교환하기로 하였다.

FTA협상 진전의 주요 열쇠는 바로 상품 양허안에 있다. 그러나 협상이 거듭 되면서 양측의 관심품목이 상대국의 민감품목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는 없었고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는 수준에서 관세철폐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협상의 진전 여부는 양측이 융통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여 상호 민감분야를 고려한 절충안을 받아들일 지에 달려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이용직)

(2) 한-인도 CEPA*협상 대응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무역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한·인도 CEPA 협상은 2004년 10월 양국 정상간에 CEPA 추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양국 산·관·학으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검토가 개시되었으며, 2005.1월부터 2006.1월까지 4차례에 걸친 공동연구그룹회의 개최 결과, CEPA 협상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2007년 타결을 목표로 2006년 3월부터 추진되었다.

'06.11월 현재까지 4차례 개최된 협상을 통해 양국은 7개 분과별 협상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양측 모두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협상 전부분에 걸쳐 통합협정문 작성에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상품분야 협정문안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문안을 마련하였다.

상품 자유화 방식에 있어 양측은 모두 극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07.1월로 예정된 제5차 협상부터 상품 자유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이며, 자금자족적 농업 형태에 하부구조도 열악하고, 양국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나 인도의 농산물 수출 및 수입 실적을 고려할 때 교역 잠재력은 크다고 예상되므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과 수의사무관 전종민)

(3) 한-멕시코 SECA*협상 대응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는 모든 상품부문을 협상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유화 대상인 상품의 범위만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협정으로 FTA보다는 무역자유화 정도가 다소 낮다.

한·멕시코 SECA 협상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하여 상호관심사 및 경제협력방안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2005년 8월 SECA 협상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2006년 연내타결을 목표로 2006년 2월부터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06.6월 현재까지 3차례 개최된 협상을 통해 양국은 7개 분과별 협상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품의 관세인하품목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우리측은 이번 협상이 FTA는 아니지만 포괄적인 범위에 대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멕시코측은 자국 산업계의 반발과 정치일정('06.7 대선) 등을 이유로 제한된 범위에 대한 관세인하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양국 입장이 대립되었다.

'06. 6. 3차 협상에서 양국이 관세인하계획을 교환하였는데, 우리측은 공산품 및 멕시코측의 관심품목인 농수산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관세인하계획안을 제시한데 반하여, 멕시코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관심품목 중 매우 소수의 품목만이 포함된 제한된 범위의 관세인하계획안을 제시함에 따라 결국 3차 협상에서 양국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되었다.

(자유무역협정과 사무관 최혜선)

4. WTO/DDA 농업협상 추진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적극 대응

2006년 4월까지 세부원칙(Modalties)을 타결한다는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합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국간, 선개도국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어 2006년 말 현재 협상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미국·수출개도국 그룹(G20)은 EU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에 국내보조 부분에서는 EU와 G20은 미국의 대폭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등 주요국 및 그룹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업협상 의장은 6월 21일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WTO 각료회의(6.29~7.1)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관세감축의 경우 G20제안을 중심으로 주요국간 일부 의견접근이 있긴 하였으나 국내보조 감축 및 민간품목·특별품목 신축성 범위 등에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G8정상회의(7.15~17)에서 현 협상 교착상태에 대한 협상 마련의 돌파구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라미 사무총장은 7월 24일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농업협상의 교착상태를 지적하며 “협상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협상 전반에 대한 협상 일시중단”을 선언하였다.

협상 중단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그룹 차원의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고, 라미 사무총장은 11월 16일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소집 각 협상그룹 의장을 중심으로 “DDA협상 전반 재개를 선언”하였다.

당분간은 향후 정치적 타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논의 위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며 관세와 보조금 감축수치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위한 본격협상의 시기는 2007년 1월 다보스 포럼이후에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 그룹, 개도국 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쟁점별 공조를 강화하면서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확보 추진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관세와 보조금을 적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는 동 지위 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비록 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의 공격적인 수출 등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형편이지만, 개도국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자기선정(Self-declaration)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UR협상때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였으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객관적 기준에 의한 개도국 분류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적용에 대해 비판하고 적용제외를 주장하는 등 국제여건상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개도국 분류 시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제기가 예상되는 바, 개도국 그룹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는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이나 세부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세부원칙이 마련된 후 각국이 C/S(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증받는 최종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세부원칙 협상에서 최대한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향후 세부원칙이 타결된 후 C/S 검증을 위한 양자협약과정에서 개도국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한 개도국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일부 선진국들의 개도국 분류기준 객관화 시도를 저지하고 한국농업의 영세성, 개방이후 악화된 여건 등 개도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 보강 및 핵심 이해관계국을 대상으로 실무급·고위급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농업협상과 사무관 김경미)

5. 국제농업협력사업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성이 강한 조류독감의 발생, 인도양연안을 강타한 쓰나미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은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국제이슈를 깊이 들여다보면, 발생국의 경제적 빈곤상

황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기술협력, 자금 및 물자지원 등을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의 주된 산업이 농업임을 감안할 때 국제농업협력의 역할이 특히 크다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DDA/FTA 협상 경험은 개도국 지위확보 등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수립이 필요한데, 국제협력사업은 이러한 우호관계 수립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제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국에 대한 농업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업을 진출시키며, 필요한 농식품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등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에 국제협력예산 8억4천 만원을 확보하는 등 국제농업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제협력사업의 목표를 첫째,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발도상국내 기아 및 식량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증대, 둘째, 한국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DDA, FTA 등 농업관련 국제협상 측면지원, 셋째, 농업관련 해외투자 및 무역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등 기반마련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기존 협력약정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면서 범국가적으로 중점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협력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에서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국제적인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연수사업을 정례화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아국의 농업협력 분야를 국제적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006년에 추진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식물검역 국제기준 제정 아태지역 워크숍
- 한-FAO/WHO 과채류 안전성 향상 워크숍
- 한·몽골 농업협력협정(MOU) 후속사업
 - 축산물전문가 초청교육
 -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공동연구 및 컨설팅사업

- 아세안 AFSIS 훈련지원사업
- 몽골 바이러스진단키트 제공사업
-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연수사업
- 아세안 10개국 AI 전문가 연수사업 및 진단키트제공사업
- 아세안 농업 전문가 국제농기계박람회 초청 및 농기계 워샵
- 베트남 농촌개발지원사업
- 한일농림수산협력위원회 기술분야 공동연구사업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은정)

6.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가. 북한의 식량농업 상황

북한농업은 생산체계의 비효율성, 에너지 및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필수농자재의 부족과 자연재해 등이 맞물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식량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비료 지원과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으로 2000년 이후 식량 생산이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도 지속되고 있어 국가 수준의 식량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식량 소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이 증가한 것은 기상호조, 병해충 발생의 감소, 비료 등 농자재의 안정 공급, 수리시설 개선에 의한 농업용수의 안정 공급, 이모작 확대에 의한 곡물 재배면적의 증가에 기인하며 부분적으로는 생산 주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는 호전되었으나 계층간에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아직도 650만명은 긴급식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25>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단위: 천톤)

구 분	1995/1996	1997/1998	1999/00	2001/02	2003/04	2005/06
국내생산량	3,451	3,489	4,222	3,946	4,252	4,540
최소소요량	5,145	5,206	5,261	5,307	5,388	5,477
부 족 량	1,694	1,717	1,039	1,361	1,135	937

주: 1) 국내생산량 : 농촌진흥청 발표자료

2) 최소소요량 : 식용은 1인 1일 평균 500g기준, 기타 소요량은 식용의 30% 기준

3) 인구규모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1) 정부차원의 지원현황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하여 정부는 1995년 쌀 15만 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9년 비료 15.5만톤, 2000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형식으로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2001년 비료 20만톤, 2002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 2003년 비료 30만톤,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4년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장기저리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제공하였다. 2005년에는 비료 35만톤을 무상지원하였고 쌀 50만톤을 지원하였다.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한 식량 이외에도 2001년부터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매년 10만톤의 옥수수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북 농업지원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지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 및 농업지원 등 물자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표 3-2-26>

연도별 대북 정부지원 현황

연 도	지 원 내 용	비 고
1995	○ 쌀 15만톤(무상지원)	
1996	○ 혼합곡물 3,409톤(WFP) ○ 분유(UNICEF, 100만달러) 등	
1997	○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혼합곡물 9,852톤 (WFP) ○ UNICEF 등 UN기구 경유 980만달러 등	
1998	○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WFP)	
1999	○ 비료 11.5만톤	
2000	○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식량차관) ○ 비료 30만톤	
2001	○ 비료 20만톤 ○ 옥수수 10만톤(WFP) ○ 말라리아 방제지원(WHO, 46만달러) ○ 아동용 내의 150만벌	
2002	○ 쌀 40만톤(식량차관) ○ 옥수수 10만톤(WFP) ○ 비료 30만톤 ○ 말라리아 방역지원(WHO, 59만달러)	
2003	○ 쌀 40만톤(식량차관) ○ 비료 30만톤 ○ 옥수수 10만톤(WFP) ○ 말라리아 방역지원(WHO, 66만달러) ○ 취약계층 기초의약품 지원(UNICEF, 50만달러)	
2004	○ 쌀 40만톤(식량차관) ○ 비료 30만톤 ○ 옥수수 10만톤(WFP) ○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WHO, 67만달러) ○ 취약계층 지원(UNICEF, 100만달러) ○ 용천재해 지원(WHO, 20만달러)	
2005	○ 쌀 50만톤(식량차관) ○ 비료 35만톤 ○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WHO, 81만달러) ○ 취약계층 지원(UNICEF, 100만달러) ○ 수해 복구지원(19만달러)	

자료출처 : 통일부

(2) 민간차원의 지원현황

1995년부터 2005년 말까지 북한에 총 5억 1,343만달러를 지원하였다. 창구별 지원액 비중은 국제적십자사 0.8%, 대한적십자사 29.3%, 독자창구 69.9%로 독자창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대북지원 초기 민간단체는 독자적인 지원창구를 갖지 못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물품을 기탁하면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에 따라 1999년 2월 10일부터 민간단체는 독자적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창구가 다양해졌다. 1999년만 하더라도 민간단체 독자창구는 10개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33개로 증가하여 2004년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은 1억 4,108만달러(1,661억원) 중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은 26%이며 나머지 74%는 개별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2001년의 경우 한적대 독자창구 비율이 34:66이었던 것에 비하여 3년 동안 한적 창구를 통한 지원이 소폭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7개 단체(7개 사업)에 대해 33.8억원의 기금을 지원하던 것이 2005년에는 23개 단체(25개 사업)에 88.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5년 동안 총 29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2006년에는 48개 대북지원민간단체가 추진하는 50개 개별사업에 116억원, 북한의 사회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3개 이상의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합동사업에 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국제옥수수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농발협, 평화의 숲, 월드비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한국JTS, 한국복지재단, 굿네이버스, 남북나눔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사업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체간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재원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규모사업 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지만 민간차원의 지원이 점차 전문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북한도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에 점차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한다면 남북한 화해협력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2-27> 연도별 대북 민간지원 현황

연 도	지 원 내 용	비고
1995	25만달러 ○ 담요 8천매(국적경유)	
1996	155만달러 ○ 밀가루, 분유, 식용유(국적경유)	
1997	2,056만달러 ○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국적/남북적십자 경유)	
1998	2,085만달러 ○ 감귤 100톤,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비료, 한우, 젓소, 비닐, 설탕 등	
1999	1,863만달러 ○ 감귤 4,436톤, 비료 4만톤 등	
2000	3,513만달러 ○ 감귤 3,031톤, 당근 2,000톤, 옥수수 등	
2001	6,494만달러 ○ 배 3,150톤, 사과 4,000톤, 감자 5,000톤 (우리농산물나누어먹기운동) ○ 감귤 10,000톤, 당근 4,000톤 ○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2002	5,117만달러 ○ 농업복구 - 농기계수리공장, 국수공장 등(우리민족) - 수경재배 시설지원(월드비전) ○ 보건의료, 일반구호 등	
2003	7,061만달러 ○ 잣나무 묘목 등 35만주(대한적십자사) ○ 남북농발협의 씨감자, 농자재 등 ○ 기초의약품, 의료기기, 병원보수 등 ○ 종자, 비료, 농기계 등	
2004	14,108만달러 ○ 밀가루, 분유, 발효기, 운동화, 학용품, 연탄 등 ○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 보일러, 타일 등 건축자재 ○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	
2005	8,866만달러 ○ 농업용 비닐 등 농자재 ○ 밀가루, 분유, 두유기계 ○ 결핵약, 항생제, 의약품, 의약설비 등 ○ 생활용품, 자전거, 화물트럭, 시멘트 등 건축자재 등	
계	51,343만달러 (6,008억원)	

자료출처 : 통일부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이행사업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차회의 준비를 위한 의제 발굴 및 회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행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개최될 회담에 대비, 사전의제 발굴 및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형태와 내용면에서도 다양해졌다.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차관이나 비료지원도 중요하지만 남북간 농업협력의 목표를 남북한 농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안정과 농업회복에 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상호주의원칙을 유지하며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경제협력에 따른 유무상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농업분야의 협력을 북한이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현재의 식량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에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사기업, 공기업, 정부 등 다양한 협력주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실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협력의 형태를 상업적 협력, 농자재지원 및 기술교류, 농업복구 및 개발지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중 민간부문은 상업적 협력, 농자재 지원이나 기술교류 등 소규모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농업복구나 개발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남북한의 농업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농업협력 추진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각 주체별 강점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의 수용상황,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조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연숙)



부 록

1. 2005년도 국무조정실 농림부
주요업무평가 결과 453
2.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477
3. 2006년도 예산개요 831

부록
1

2005년도 국무조정실
농림부 주요업무평가
결과

목 차

2005년도 국무조정실 농림부 주요업무평가 결과

- I 농림부 총평 / 457
- II 연두업무보고과제 추진성과 평가 / 460
- III 자체평가 상위평가 / 472
- IV 향후 개선조치사항 / 475

I. 농림부 총평

1. 연두업무보고 과제

- 농림부의 2005년도 연두업무보고과제(6개 정책목표, 25개 이행과제, 71개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분석 결과
 - FTA/DDA 협상에 따른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조성에 노력**
 -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시장기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쌀 소득 보전 직불제를 시행하여 농가소득 안정 대책 마련
 - 지역 농업 육성·지원 및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추진**
 -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유도함으로써 농촌형 지역혁신 체계 구축
 - 1사1촌 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농촌 문화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도농교류 확대 및 도농 상생기반 여건을 조성
 - 그러나 쌀시장 개방에 대응한 양정제도 개편(추곡수매제 폐지 등), DDA농업 협상 대응에 있어
 - 대국민 홍보 미흡, 농업인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 및 농정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여 과격시위가 발생하는 등 국민공감대 형성에 어려움
- 농림부의 연두업무보고 과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 결과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등 **6개의 이행과제가 실적 미흡, 일정 지연 등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05년 최종 점검 결과, 총 25개 이행과제 중 “자조금제도 활성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가축방역체계 강화” 등 **3개 과제는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과제별 추진현황 종합>

정 책 목 표	이 행 과 제	추진성과		
		목표달성도		
		달성	미달성	근거부족
1. 쌀산업체질강화	양정제도개편	0		
	쌀농가소득보전방안	0		
	고품질쌀생산유통대책	0		
	미곡종합처리장활성화	0		
	쌀전업농육성	0		
2. 전문농업경영체성장 기반구축	전문농업경영체육성	0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강화	0		
	농협개혁	0		
	농지은행	0		
3. 농축산물유통효율화 및 소비촉진	산지유통조직육성	0		
	농축산물유통효율화 및 도매시장 제도개선	0		
	소비촉진 및 농식품산업 연계	0		
	농식품수출확대	0		
	자조금제도 활성화		0	
4. 농축산물안전성강화 및 친환경농업확산	농축산물 안전성관리강화	0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확산		0	
	가축방역체계 강화		0	
5.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질 향상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년계획	0		
	도농교류확대및농촌관광	0		
	농촌지역개발	0		
	농촌복지증진	0		
6. WTO/FTA,농업협상 대응	쌀협상검증 및 국회비준동의	0		
	DDA 농업협상대응	0		
	FTA 농업협상대응	0		

2. 자체평가 상위평가

- 농림부의 자체평가 수행노력은 자체평가위원회 및 내부 평가작업반 등 평가추진체계의 개선, 평정근거의 구체화 등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작업반 운영, 평가결과보고서 대외 공개 등을 연두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등 자체평가를 충실하게 수행
 - 또한 공통 평가기준인 6개 기준 12개 착안 사항별로 구체적인 사실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 내용의 구체성을 확보
- 다만, 자체평가위원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평가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추진하여 평가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 평가결과를 인사·예산·조직 등에 구체적으로 연계·반영시키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

Ⅱ. 연두업무보고과제 추진성과 평가

1. 연두업무보고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 농림부의 2005년도 주요 성과지표 71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 전체 71개 성과지표 중 67개 성과지표는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 “계약재배 물량”, “친환경 축산직불제 참여율”,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등 4개 성과지표는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이 행 과 제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실 적 치	목 표 달성도 (%)
○ 양정제도 개편	① 양곡관리법 개정여부	○ 법 개정	○ 개정완료	100%
	② 가공용쌀 공급물량	○ 158만석	○ 161만석	101.9%
	③ 수입쌀 소비자 시판대비, 부정유통방지 노력 정도	○ TRQ관리방안 마련여부 ○ 포장양곡표시제 이행상황 점검(분기1회)	○ 관리방안 마련 ○ 점검4회 실시	100%
○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시행	④ 쌀농가소득안정정도	○ '01~'03년 평균 1ha당 소득98% 이상유지(목표가격:7,132천원)	○ 7,249천원	101.6%
○ 고품질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	⑤ 쌀품질평가지수	○ 4개 지표중 3개 이상 달성 - 식미 74.0% - 품위 80.4% - 품중순도 77.9% - 소비자만족도 68.9%	○ 3개달성 - 식미 78.4% - 품위 95.5% - 품중순도53.4% (평가방법변경으로실적감소) - 소비자만족도 66.9%	100%

• • • ● 2005년도 국무조정실 농림부 주요업무평가 결과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 미곡종합처리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⑥ RPC 쌀 매입량 비중	○ 유통량의54.5% (1,325만석)	○ 1,334만석	101%
○ 쌀전업농육성	⑦ 쌀전업농의 농지 점유비	○ 30%(297ha)	○ 30%	100%
	⑧ 배수개선담 및 수리담 비율	○ 배수개선담율: 68.6% ○ 수리담율: 78.1%	○ 68.9% ○ 78.1%	100%
○ 전문농업경영체육성	⑨ 창업농 영농정착율	○ 84%	○ 84%	100%
	⑩ 전문농업경영체 농업 생산비중	○ 쌀: 30% ○ 축산: 71% ○ 과수: 41%	○ 쌀: 30% ○ 축산: 74% ○ 과수: 41%	101%
○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장치 강화	⑪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 3.0%	○ 3.2%	107%
	⑫ 직불투용자 비중	○ 12.6%	○ 12.6%	100%
	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및 가입금액	○ 가입율19.1% ○ 금액528,817백만원	○ 가입율 23.4% ○ 528,817백만원	114%
	⑭ 가축공제 가입율 및 가입금액 확대	○ 가입율 26.0% ○ 금액1,484,335백만원 ○ 품목추가 2개(평, 메추리)	○ 가입율27.9% ○ 1,484,335백만원 ○ 품목추가 2개	102%
	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및 가입금액	○ 가입율19.1% ○ 금액528,817백만원	○ 가입율 23.4% ○ 528,817백만원	114%
	⑭ 가축공제 가입율 및 가입금액 확대	○ 가입율 26.0% ○ 금액1,484,335백만원 ○ 품목추가 2개(평, 메추리)	○ 가입율27.9% ○ 1,484,335백만원 ○ 품목추가 2개	102%
○ 농업협동조합개혁	⑮ 농협법하위법령 정비	○ '05.6까지 제도개선 완료	○ 개정완료	100%
	⑯ 순자본비율 4%미만 조합수	○ 224개	○ 224개	100%

부록 1 ●●●●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농지은행제도도입	⑰ 법령정비여부	○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농지법개정	○ 개정완료	100%
	⑱ 세부시행방안 수립	○ 농지임대수탁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세부시행지침 수립	○ 완료	100%
	⑲ 유동화시스템구축	○ 농지유동화포탈시스템구축	○ 완료	100%
○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⑳ 시범사업 추진	○ 10여개소의 시범사업추진	○ 20여개소의 시범사업추진	200%
○ 산지유통조직육성	㉑ 조직수	○ 6개소	○ 6개소	100%
	㉒ 매출성장율(평균,%)	○ 9%	○ 9.8%	109%
	㉓ 공동계산비중(%)	○ 12%	○ 13.3%	111%
	㉔ 축산물종합처리장 도축 점유율	○ 소11%, 돼지 18%	○ 소12%, 돼지 18%	105%
○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제도 개선	㉕ 소모성물류비비율	○ 55%	○ 55%	100%
○ 소비촉진 및 농업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㉖ 우수브랜드인지도 조사	○ 농산물브랜드23%	○ 농산물브랜드 25.3%	110%
	㉗ 국산농축산물소비자만족도조사	○ 소비자만족도 50%이상	○ 50.5%	101%
○ 농식품수출확대	㉘ 수출목표달성	○ 23억불	○ 23억불	100%
○ 자조금제도활성화	㉙ '13년까지 주요품목 32개 확대	○ 23품목 (원예17, 축산6)	○ 23품목	100%
	㉚ 계약재배 물량	○ 950천톤(노지710, 시설 240)	○ 941천톤(노지 701,시설240)	99.1%

• • • ● 2005년도 국무조정실 농림부 주요업무평가 결과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자조금제도활성화	㉑ 사업 참여농가와 사업 주체의규모화	○ 참여농가의 최소 계약면적 - 무·배추·대파·당근: 0.3ha - 고추·마늘·양파 0.2ha ○ 사업주체의 최소 사업량 - 무·배추·양파·대파·당근 300톤 - 고추, 한지형마늘 10톤, 마늘(난지, 대서) 50톤	○ 사업업무편람 반영	100%
	㉒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비중	○ 채소: 15%, 과실: 48%, 축산: 37%	○ 채소: 28%, 과실: 59%, 축산: 40%	140%
○ 농축산물안전성 관리	㉓ 농산물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비율	○ 부적합비율 1.3%	○ 1.25%	104%
	㉔ 잔류물질검사실적 및 위반율	○ 검사건수120천건, 위반율 0.25%	○ 120천건, 0.25%	100%
	㉕ 미생물 검사실적 및 위반율	○ 검사건수120천건, 위반율0.44%	○ 120천건, 0.44%	100%
	㉖ 도축검사원충원실적	○ 100명 충원	○ 100명충원	100%
	㉗ 도축장HACCP운용수준평가에 따른 운영자금차등지원실적	○ HACCP 평가실시 여부 및 차등지원 여부	○ 578억원차등 지원완료	100%
○ 친환경 농업 육성 기반 마련	㉘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3.5%	○ 3.6%	103%
	㉙ 합성농약 사용량 감축	○ ha당 12.3kg 이하	○ 12.3kg	100%
	㉚ 유기질비료사용량	○ 1,960천톤	○ 2,070천톤	106%
	㉛ 원예작물천적방제면적	○ 300ha	○ 331ha	110%
	㉜ 가축분뇨퇴비판매량	○ 1,737천톤	○ 1,812천톤	104%
	㉝ 축분처리시설지원	○ 예산지원	○ 333억원	100%
	㉞ 친환경 축산직불제 참여율(시범사업,누계)	○ '06년까지 목표 900호중 711호 (79%)	○ 653호	91.8%
	㉟ 친환경 축산직불제 프로그램 이행율	○ 프로그램이행율 100%	이행	100%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가축방역체계 강화	④⑥ 해외여행객 휴대유티 검색	○ 20 천건	○ 21천건	105%
	④⑦ “전국일제소독의 날” 및 공동방제단 운영	○ 소독의날 연52회 및 공동방제단 연21회	○ 연52회 및 연21회	100%
	④⑧ 가축방역특별포상제 실시	○ 특별포상실시 (39개소,281백만원)	○ 12월평가후 포상실시	100%
	④⑨ 돼지콜레라·뉴캐슬병 예방접종 면역 형성율	○ 돼지95% 이상 ○ 뉴캐슬병 88% 이상	○ 95.1%(100%) ○ 84%(95.4%) (3/4분기실적)	100%
	⑤⑩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동물보호법 개정 여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	60%
	⑤⑪ 지자체 방역조직 및 인력확충	○ 인력충원232명 ○ 공익수의사 제도 (법제정)	○ 232명(100%) ○ 국회법사위계류중(80%)	90%
	⑤⑫ 축산업등록제 시행	○ 축산업등록대상 농가 100%	○ 100%	100%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 계획추진	⑤⑬ 농촌주민만족도	○ '04년대비 삶의질 불만족도축소 * '04만족도실태조사결과	○ 불만족도축소 2.1%축소 ('04)33.1%→('05)31%	100%
○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문화관광 활성화	⑤⑭ 녹색농촌체험마을별 방문객수	○ 11,533명(전년대비20%증)	○ 11,600명	101%
	⑤⑮ 녹색농촌체험마을별 농촌관광매출액	○ 169,897천 (전년대비20%증)	○ 169,900천원	100%
○ 농촌지역개발	⑤⑯ 농촌지역개발촉진	○ 농촌지역개발 인재육성 대책 수립 및 시행 ○ 농촌지역개발사업계획수립	○ 완료	100%
	⑤⑰ 건강보험료경감율	○ 40%로 상향	○ 40%	100%
	⑤⑱ 농업인재해공제 가입 인원 및 보상금지원 확대	○ 대상확대768천명 및 사망공제금 1,500만원	○ 768천명 및 1,500만원	100%

• • • ● 2005년도 국무조정실 농림부 주요업무평가 결과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 농촌복지증진	⑤9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지원 확대	○ 1인당 지원금액 확대 1,299천원	○ 1,501천원	116%
○ 쌀협상 결과 검증 및 국회비준동의 추진	⑥0 협상참가국과 협조체제 구축 및 공동대응	○ 쌀협상 결과에 대한 원활한 WTO 검증 및 국회비준 동의	○ 국회비준	100%
	⑥1 이행계획서수정안의 원활한 확정여부			
	⑥2 쌀협상 결과의 원활한 국회비준동의 여부			
	⑥3 각계에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국민적 공감			
○ DDA농업협상대응	⑥4 WTO 농업협상에 능동적인 대응체제구축 여부	○ DDA 농업협상 회의 참여 및 대응	○ 농업협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적극대응	100%
	⑥5 주요 쟁점별 대응논리 등 철저한 협상대책 마련 및 대응 여부	○ 주요 쟁점별 협상 대책마련 및 대응	○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전략정립, 단계별 대책 수립	100%
	⑥6 협상에서 입장을 같이 하는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공동대응 노력 여부	○ 유사입장국 공동 대응	○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하면서 우리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반영	100%
	⑥7 세부원칙 및 양허협상 등 모든 협상과정에 개도국입장에서 대응	○ 개도국 지위 유지 노력 지속 추진	○ G33(개도특별품목그룹)과의 협력강화 추진	100%
	⑥8 농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협상결과의 원만한 수용 분위기 조성 여부	○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에 근거한 협상	○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에 근거한 협상	100%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 FTA농업협상대응	⑥9 체계적인 FTA 농업협상 대응체제 구축	○ 동시다발적 협상에대응, 농림부내협상팀 조직보강	○ FTA과를 신설	100%
	⑦0 민간품목에 대한 영향최소화 등 면밀한 협상전략 수립	○ 농업생산액, 품목별 농가인구, 재배면적 등을 기초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철저한 영향분석 및 세부대응 전략을 마련 ○ FTA 기금을 활용한 전문가 용역추진	○ 핵심품목은 최대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비교우위 품목은 집중적으로 양허를 요청하여 협상이익극대화 ○ 협상개시전 연구용역을 통해 상대국 관심품목과 우리측비교우위품목 선정 및 상대국 협상방식 분석	100%
	⑦1 농민단체 등 대국민홍보추진	○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 상품양허안 협의(6.28, 8.3, 8.25)	100%

※ 2006년도 성과지표 설정시, 2005년도 추진실적을 반영·목표치 설정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계약재배 물량”, “친환경 축산 직불제 참여율”,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등 4개 성과지표의 목표미달성 원인분석 결과

○ 관련 법령의 입법지연, 정책추진 미흡으로 인하여 연초에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목표미달성 성과지표 분석결과>

이행과제명	성과지표명	미달성유형	사 유
○ 자조금제도 활성화	○ 계약재배물량	정책추진미흡	○ 시장상황에 대응한 계약 재배 물량 변화로 인하여 당초 목표치 미달성
○ 친환경농업육성기반 마련	○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율	정책추진미흡	○ 시범사업추진부진으로 당초 목표치 미달성
○ 가축방역체계 강화	○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입법지연	○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정애 따른 입법지연으로 제도 도입시기가 늦어짐
○ 가축방역체계 강화	○ 지자체 방역조직 및 인력확충	입법지연	○ 공익수의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지연(병역법 개정안의 의결이 국회 상황변화로 3회 연기됨)

2. 주요정책과제 우수/개선·보완 필요 사례

<우수정책 :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1) 과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과제의 목표

- 일정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사업단 육성
 - '05~'07년까지 20개 클러스터 사업단을 육성(시범사업)하여 정책검증을 실시한 후 2013년까지 100개소 육성계획

♣ 지역농업클러스터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걸집체

□□ 기대효과

- 시장개방 확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참여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산·학·관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촌형 지역 혁신 유도

2) 추진현황

□□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사업시행

- 역량을 갖춘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신청(63개소)→ 도 심사(57개소)→ 농림부 최종심사(20개소 확정)
- 선정된 사업단별로 사업계획을 협의·조정하여 사업비 배정('05.6, 120억원)

□□ 지역농업 클러스터 종합 지원 시스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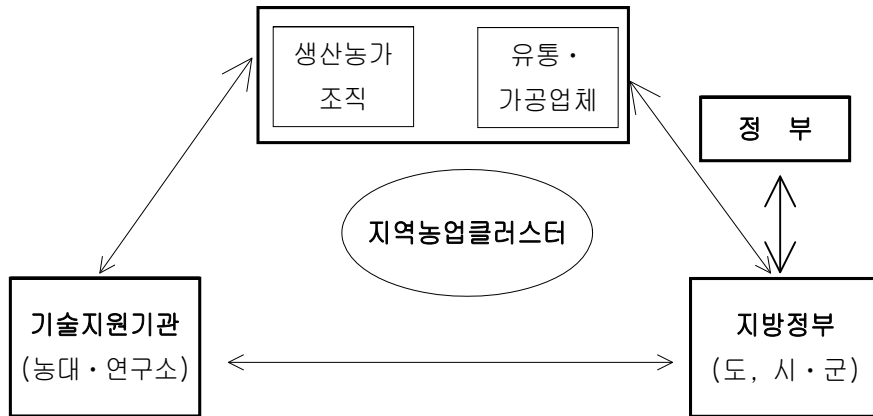
- 지방비 확보 및 사업비 조기집행 독려 등을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05.10),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06년 사업에의 환류 시스템 구축
- 사업 주체들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토론회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 시범사업 종합지원계획 설명회('05.7) 및 워크숍개최('05.9), 클러스터 경영 및 마케팅 전문교육 실시('05.12) 등

□□ 중장기 농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 마련

-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약 체결('05.7, KREI)
- 연구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클러스터 발전방안 모색

3) 정책추진성과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농촌지원 및 농촌혁신 모델 마련
 - 사업참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업 지원을 통해 지방농정의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농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해 농업인과 관련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 생산위주의 농업을 가공·유통·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한 개의 사업에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핵심생산기반 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패키지 지원

<개선·보완필요정책 :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 사업>

1) 과제의 목표

- 쌀의 '생산 후 관리'를 전담하는 RPC의 시설을 개선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건조·저장시설(DSC)을 확충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
- RPC의 관리능력을 개선하여 '05년 양정제도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쌀 시장 유통구조를 개선

※ RPC: Rice Processing Complex, DSC: Dry and Storage Complex

2) 추진현황

□□ DSC(RPC의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

- 2010년까지 우리나라 쌀 유통량의 50%를 처리할 수 있는 건조·저장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
- '05년 중 50개소의 DSC 증설 지원(93억원)

※ 단계별 확충계획

1단계('04)	2단계('05~'08)	3단계('09~'10)
○ 유통량대비저장능력27% ○ RPC벼매입량 50%	○ 유통량대비저장능력40% ○ RPC벼매입량 60%	○ 유통량대비저장능력50% ○ RPC벼매입량 70%

□□ RPC의 경영개선 유도, 운영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PC 경영 실태를 평가하여 운영자금 지원 차등화

- RPC 업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경영우수 RPC 및 통폐합 RPC에 운영자금 집중 지원(5,904억원)

□□ RPC의 경영개선지원

- 통합 RPC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경영 컨설팅 지원
- RPC 경영개선을 위하여 농관원, 농협, 한식연, RPC 단체 등으로 T/F팀 구성·운영

3)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 쌀시장 개방·추곡수매제 폐지 등 쌀 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RPC 시설 확충이 시급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

○ RPC의 건조·저장시설 부족으로 품종별 일괄처리 곤란 및 수확기 야적('04년 기준 야적 비율 15%, 116천톤)에 따른 미질 저하

※ '04년말 기준 RPC 처리능력: 건조 41%, 저장 21%, 가공 65% 수준

○ '05년 이후 매년 120개소 수준의 DSC 증설이 필요하나 '05년균특회계 전환후 지자체의 DSC 증설 신청이 저조한 실정

- '05년도 DSC 증설은 50개소로써 '04년 71개소에 비해 감소하였고, '06년 시·도 신청물량도 66개소에 불과

※ 균특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 '05년 신설된 예산으로 시도별로 부여된 지출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 RPC 시설의 소규모·노후화 등으로 처리능력이 부족하나 이에 대한 개보수 부진

- '04년 말 기준 199개 농협 RPC 중 147개가 8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된 실정

□□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 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 중앙정부의 일관된 계획 하에 당초 계획된 RPC 시설 확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PC 사업예산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환원 추진

※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92년에 신설되었으며, 농림부장관이 관리하므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예산집행 가능

○ 현재 설치 운영중인 RPC 중 노후 RPC(특히 농협 보유 RPC)의 시설 개보수 대책 강구 필요

○ RPC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RPC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지원단가,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Ⅲ. 자체평가 상위평가

1. 평가수행의 충실성

1) 평가계획대비 자체평가 수행실적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작업반 운영 등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었으며, 점검·결과보고서 공개도 적기에 실시되는 등 평가계획대비 자체평가가 **충실하게 수행됨**
- 다만,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 실시

2) 평가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 자체평가관련 회의 참석(3회), 평가관련 지시(7회) 등을 통해 기관장이 평가업무수행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지시사항의 구체성 여부, 평가에의 반영 노력은 미흡

— <사 레> —

- 기관장이 평가와 관련하여 3/4분기 보고대회 및 사업추진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적극적인 지시사항 전달 및 사업부서에 서의 반영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미흡

2. 평가내용의 구체성

1) 평가근거의 구체적 제시여부

- 공통평가기준인 6개 기준 12개 **착안사항별로 구체적인 사실 및 통계 자료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적절하게 실시

- 다만 '자조금 제도 활성화', 'DDA 농업협상 대응' 등의 이행과제에 대한 근거자료가 자체평가보고서에 적절하게 적시되지 못하여 보완이 요구

2) 실적에 대한 성과지표 적용의 적절성

- 각 이행과제별로 목표달성도와 관련된 추진실적이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성과지표에의 적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 다만 '쌀 농가 소득보전방안 시행' 이행과제의 실적치에 대한 성과지표에의 적용이 적절하지 못하는 등 향후 합리적인 판단기준 필요

<사례>

- '쌀 품질 평가지수'의 성과지표는 식미, 품위, 품종순도, 소비자 만족도 등 4개 지표 중 3개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품종순도의 경우 도중에 평가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적절한 평가 곤란

3. 평가의견 반영노력

1) 평가의견에서의 문제점 적시 및 개선사항 발굴노력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자체평가위원 등이 실질적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 다만 의견제출 건수가 37건(하반기 20건, 상반기 17건) 정도로 향후 자체평가위원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필요

<사례>

- '산지유통조직육성관련 성공사례 중심 벤치마킹 유도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정찬길 위원)의 지적에 따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06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2) 제시된 평가의견 반영 및 이행노력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과제 중 부처에서 수용가능한 37건(하반기 20건, 상반기 17건)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추진

— <사 례> —

- '05년 공동마케팅조직 브랜드개발 등 홍보 사업비를 지원(1억원)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유통전문인력에 대한 우수사례집을 발간
- '05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중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4. 평가결과의 환류노력

1) 자체평가 결과와 성과관리시스템 연계노력

-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에 연계시키는 등 성과관리 시스템을 당초 계획대로 충실하게 구축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개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8가지 직무평가 방법(KPI달성도평가, BPM평가, 정부업무평가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을 개발하고 이들 평가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

2) 인사·예산·조직 등과의 연계노력

-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를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하며, 정부업무평가와 자체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조직재설계실시
- 자체평가 결과를 국·과장급 성과급 지급 및 승진에 반영하고 '04년 재정사업평가결과를 '05년 예산 편성시 반영
 - 또한, 성과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

3) 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 이행노력

- 전년도 및 상반기에 지적된 6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 수립 하여 추진 중이거나 완료
 - 조치계획 수립 및 추진 : 6건, - 완료된 사업 : 1건

IV. 향후 개선조치사항

- 1)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시설확충을 위한 지원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행
 -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의 증설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 노후·소규모 RPC의 시설 현대화 및 통폐합
 - RPC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 RPC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 2)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평가업무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 자체평가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기관장 관심도를 제고하고 기관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구체적 반영노력 강화('06년 상)

 - 인사·예산·조직 등과의 연계노력
 - 평가결과를 인사, 조직, 예산운영에 구체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06년 상, 전부처 공통)

 - 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 이행노력
 - 기실시('05년도 상반기 포함)된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의 개선조치계획 추진노력을 강화하고 부처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근거제시가 요구됨('06년 상)

부록
2

· 2005년도 하반기
· 주요업무에 대한
· 자체평가결과

목 차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 I 쌀산업의 체질강화 / 481
- II 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 548
- III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 촉진 / 612
- IV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 686
- V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 727
- VI WTO/FTA 농업협상 대응 / 794

I. 쌀산업의 체질강화

1. 총괄

가. 잘된 점

- 수매제 개편 및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공비축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 *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05.3.2) 및 공포('05.3.31), 하위법령 개정('05.6말)
- 수입개방에 따른 쌀가격 하락으로 예상되는 농가소득 감소분을 탄력적으로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쌀값하락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 고품질 품종 재배, 질소비료 시용량 감축 등 품종선택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RPC에서 일괄 관리하는 **RPC 계열화면적 확대**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RPC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RPC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나. 미흡한 점

- 양정제도 개편 및 쌀소득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지 광고, 리후렛 배포,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하였음에도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 농업인 등은 **이해도가 낮은 상황**
- 쌀품질고급화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재배단계에서 적지 적품종 선택 및 재배관리 표준화, 수확후 단계에서 건조·저장관리 및 단일품종 유지 등에서의 미숙한 처리 등 품질 저해요인 존재
-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이므로 **수탁판매활성화** 등 수확기 시장안정 대책의 마련 필요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 초 계 획	추진 실적
<p>1.양정제도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05.3) ○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개정('05.6) ○ 공공비축제 시행 정부안 확정('05.6) ○ 수입쌀에 대한 양곡표시제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관리법 개정 완료(3.2국회통과, 7.1시행) ○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완료 (7.1시행) ○ 공공비축제 실무자 및 전문가회의 개최 (5회) ○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경제정책조정회의 심의 정부안 마련(5.27) ○ 국무회의 심의·확정(9.13) ○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수입쌀의 유통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쌀 소비자 시판 대비 정부양곡의 매입 자격기준 설정등 근거마련(7.1) ○ 소비자 시판물량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표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수입이익금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이 통과되는 대로 쌀 수입추진 및 소비자 시판 물량에 대하여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계획 - 수입이익금 징수방안 등 TRQ 관리방안 장관보고(8월) <양정제도 개편 및 수확기 대책 홍보> ○ 양정제도 개편 첫해임을 감안 공공비축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수확기 쌀시장 안정대책 등 홍보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홍보실적 : 별첨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포장양곡 표시제 점검('05.3~12)</p> <p>○ 정부관리양곡 주정·가공용 공급('05.3~12)</p>	<p>○ 단속실적 : 농림부 주관 2회, 시·도 주관 2회 - 위반사항 : 과태료 부과18건, 주의시정 조치 35건 - 홍보전단 배포(2,000매)</p> <p>○ 명예감시원제, 신고포상금제 도입(양곡관리법 개정 3.31)</p> <p>○ 정부관리양곡 주정·가공용 공급실적 : 137만석 - 주정용 공급 : 94만석('04.10월기준) - 가공용 공급 : 43만석('05.9월기준) ※ 금년 12월말 기준 150만석 수준 공급 예정</p>
<p>2. 쌀농가 소득보전 시행</p> <p>○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05.3)</p> <p>○ 쌀소득보전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05.6)</p> <p>○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설치('05.5)</p>	<p>○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화 추진 - 쌀소득보전기금법 전면개정 완료('05. 3.31공포, 7.1시행) - 쌀소득보전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완료('05.7.1시행)</p> <p>○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실무 업무수행을 위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설치(4.15)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7.1) · 관계부처 차관, 농업인·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p>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쌀농가 소득안정 - '01-'03년 평균 1ha당 소득의 98%이상 (목표소득 : 7,132천원 이상 유지)</p>	<p>○ ha당 쌀관련 총수입(추정) : 10,149천원 * '04년 수확기 쌀값대비 10%하락 가정 - 고정직불금 : 600천원/ha - 쌀판매수입 : 8,873천원/ha(145,467원 /80kg*61가마) - 변동직불금 : 676천원/ha(1,088원 /80kg*61가마) ○ 1ha당 소득 : 7,249천원(계획대비 101.6%) - 총수입 10,149천원-2,900천원('01-'03년 평균 1ha당 생산비로 추정)</p>
<p>3.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추진</p>	
<p>○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수립시달 ('05.1)</p>	<p>○ '05년도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시달 (1.15), 연찬회개최(280명, 2.15~16)</p>
<p>○ 고품질 벼품종 공급('04.12~'05.3)</p>	<p>○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추진본부 현판식 (3.21)</p>
	<p>○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생산자, 소비자, 농민단체 30여명 참여 - 구성(3.21), 토론회(3.25), 위원회 (3.29, 5.10, 6.24)</p>
	<p>○ 시·도 순회 토론회 개최(4.20~5.12), 심포지엄(6.15), 간담회 개최(6.30)</p>
	<p>○ 쌀 품질고급화 보완대책 발표(7.14)</p>
	<p>○ 고품질 벼 정부 보급종 공급확대(완료) - 공급실적 : ('04) 전체 소요량의 28% → 32 - 공급물량 : ('04)14.0천톤 → ('05) 15.7</p>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지력증진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규산질비료 공급 추진('04.10~'05.3)</p> <p>○ RPC 계약재배 확대('05.4~6)</p> <p>○ 시중유통쌀에 대한 포장표시 사항점검 및 브랜드쌀 평가추진(연중)</p> <p>○ 고품질 벼품종 재배확대 및 재배품종 단순화('05.4~6)</p>	<p>○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 확대 : ('04) 132천ha → ('05.P) 151</p> <p>○ 규산질비료 입상 공급비율 확대 : ('04) 34% → ('05) 59</p> <p>○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 ('04) 50만톤(210억원) → ('05) 70(245)</p> <p>○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팀(T/F) 구성·운영(9월)</p> <p>○ RPC 벼 계약재배 확대 : ('04) 28% →('05) 33 - 벼재배면적 980천ha중 계약면적 33% 321천ha</p> <p>○ 시도 및 관련협회로부터 추천받은 71개 브랜드 평가실시(4회) <'05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결과> - 최우수 : 1점(아산맑은쌀) - 우수상 : 5점(청원생명쌀 등) - 장려상 : 6점(상상예찬 등)</p> <p>○ 브랜드 쌀 한마당 행사 개최 - 우수브랜드 쌀 전시, 우리음식 맛보기 등 이벤트 행사, 홍보리후렛 배포, 보도자료 제공 등</p> <p>○ 평가대상 확대(61→71점), 평가횟수 확대(3→4회)</p> <p>○ 품종통일을 위해 정부매입품종을 시군별로 3품종 선정(3월)</p> <p>○ RPC 중심의 품종별 관리체계 구축 - 품질향상을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05 : 50개소) - 운영자금 지원 : 9,184억원(운영자금 5,904, 벼 매입자금 3,280)</p>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벼 생산기술 지도강화('05.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표준재배방법 지도 추진 - 질소질비료 사용량 감축유도 ○ 쌀품질 평가 목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미 : 74.0% - 품위 : 80.4% - 품종순도 : 77.9% - 소비자 만족도 : 6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수확기 대책 회의 개최(10.7) ○ 고품질쌀 재배관리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작성배포(1만부, 3월) ○ 질소질비료 시비량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10.9kg/10a → ('05) 9.9% ○ '05년 쌀품질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미 : 78.4% - 품위 : 95.5% - 품종순도 : 53.4% - 소비자 만족도 : 66.9% ※ 품종순도 평가방법 변경으로 실적치가 크게 낮아짐 (당초) 혼합률이 높은 품종에 대하여 점수부여→(변경) 평가 해당 품종에 대한 점수 부여
<p>4. 미곡종합처리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 시설지원 및 경영개선 지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 지원(50개소, 9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년 사업비를 농특회계로 전환하여 사업물량 확대 및 지원조건 상향조정 추진(상임위 의결) ○ RPC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차등지원(5,822억원, '05.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30~E 10억원, F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RPC의 조기정상화와 RPC 통합 확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RPC 통합대상자 선정 및 운영자금 우대지원(고창 4, 부여 7, 진천3, 함평 3개 R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 우대자금 지원(311억원) ○ 통합RPC의 경영안정 및 조기정상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10개소)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의 수확기 농가벼 매입 확대 추진 ○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강화, 가공품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벼 매입을 위해 벼 매입특별자금 지원(3,28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별 수확기 벼 매입상황 일자별 점검 및 관리 - 부진RPC 집중관리 및 실적우수 RPC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47억원) ○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를 실시하여 12개 우수브랜드 선정(시도등이 71개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단체에 의한 교육·홍보(8개사업) ○ 농촌현장체험을 위한 “가족쌀사랑체험교실”운영(150가족, 600명) ○ TV캠페인 등 방송 매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소비촉진 TV광고 홍보(204회) - 특집다큐 프로그램방송 협찬(9회) ○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광고홍보(10개소) ○ 흑미음료, 발효제품, 현미식취반기법 등 개발완료하여 산업화 협의중
<p>5. 쌀 전업농 육성 및 생산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전업농육성 세부계획 수립 ('05.1)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0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전업농육성 세부추진계획 수립·시달(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관련기관 등 송부 (1천부)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3월) : 5개 과정(20회) 1,300명 - 교육실적(11.15 현재) : 946명 (72.8%)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 쌀 전업농 조직체 구성 ('05.1~12)	○ 쌀 전업농 선도 조직체 구성·운영 - 계획수립·시달 (3월) : 목표 150개소, 시·도, 생산자단체 등 - 구성실적(10월말) : 180개소(진도율 120%)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05.1~12)	○ 사업추진 (11.17 현재) - 11.2천ha, 4,467억원 (진도율 94%) ※ '05년 목표치 : 30% (297천ha) '05년 실적치 : (11.17 기준) 29.7%(293천ha) (12월말 예측치) 30.0%
○ 배수개선담 및 수리담 생산기반 확충	○ '05 목표치 - 배수개선담율 68.6% - 수리담율 78.1% ○ '05 실적치 - 배수개선담율 68.9%(129.4천ha) - 수리담율 78.1%(881천ha)
○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 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 연구기간 : '05.5~'06.1 ○ 식량자급률자문위원회의 개최(4회) ○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관련 축산분야 전문가 회의 개최(9.9) * 주요곡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 (12월)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양정제도 개편

<총 평>

- DDA/쌀협상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등 양곡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

☞ **공공비축제**란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쌀을 시가로 사들였다가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로 쌀값도 다른 농산물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의 수급조절기능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에 대비하여 **양곡표시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비자시판 물량에 대한 **수입이익금**(Mark-Up)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통질서 혼란 예방

☞ **수입이익금**이란 국영무역기관의 독점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수입쌀에 수입이익금 부과로 국내외 가격차이를 축소하여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공급과잉 기조 속에서 **적정수준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가공 및 주정용 공급확대, 대북 쌀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쌀 재고 감소** ('05.10월말 재고 : 671만석)

☞ **쌀생산조정제**란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ha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공공비축제 도입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이해도는 낮은 상황이며, 일부 농업인 및 농민단체 등은 쌀값보장과 수매제의 부활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 지속적인 가공용·주정용 공급과 대북 쌀지원 등으로 재고는 감소하였으나 구조적인 공급과잉기조는 계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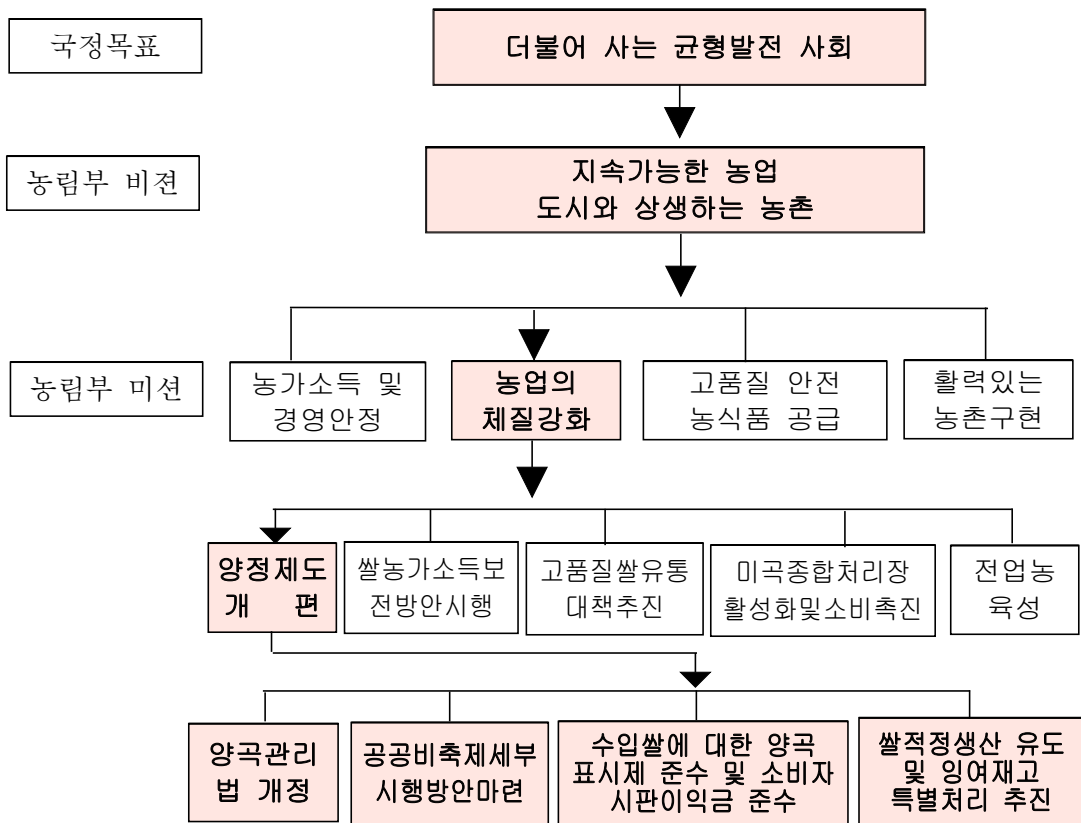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양정제도 개편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쌀협상·DDA협상에 따른 개방폭 확대와 WTO보조금 감축이라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정제도 개편은 불가피

○ 쌀산업 체질강화는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에 기여하고, 농림부의 비전 중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의 미션 중 “농업의 체질 강화”에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 **추곡수매제**의 기능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향후 DDA 협상 이후 수매제 기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매제를 통한 가격지지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필요

- 수매량 감축 : (95) 955만석 → (04) 494만석
- **DDA 협상**의 기본 골격은 관세 부과와 국내보조 수준이 높을 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개방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
- 관세화를 유예하더라도 언젠가는 관세화하여야 하고 관세는 계속 감축 (**Shadow reduction**)되는 것이므로 쌀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4~5배 수준인 국내외 가격차 축소 필요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기회(O)	위협(T)
		강점·약점 분석	○ 10년동안 관세화 유예
강점 (S)	○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 신뢰	○ 품질고급화	○ 부정유통 방지
약점 (W)	○ 국내외 가격차 ○ 구조적인 공급과잉	○ 공공비축제 도입 ○ 국내외 가격차 축소	○ 재고특별처리 추진 ○ 적정생산 유도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 양정제도 개편은 공공비축제 도입 및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
 -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계량화된 성과지표는 제시하지 못함
- ◆ 쌀적정생산 유도 및 잉여재고 특별처리는 계량화된 성과지표 제시

- DDA협상 및 2004쌀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양정제도**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공공비축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포장표시제 강화 등 부정유통 방지 대책 수립 위한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쌀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쌀 시판으로 예견되는 유통질서 혼란 방지 대책과 수입이익금 징수대책 마련
- ※ 업무 특성상 개량화된 성과지표 마련 곤란
- 특별잉여재고 처리 대책은 가공·주정용 쌀 공급물량을 '02~'04년 평균 대비 **30%이상 확대**하는 개량화된 성과지표 제시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	○'05년중 양곡관리법 개정	○법 개정 여부	
○가공·주정용쌀 공급물량 확대	○'02~'04년 평균 30% 이상 공급(158만석)	○가공·주정용쌀 158만석의 95%이상인 150만석 공급여부	○ 3년간 평균공급량 121만석('02 : 151만석 '03:128, '04:83)
○수입쌀 소비자 시판대비 부정유통방지 노력정도	○TRQ관리방안 마련 여부 ○포장양곡표시제 이행 상황 점검(분기 1회)	○TRQ관리방안 및 포장양곡표시제 이행상황 점검(분기 1회)여부	○'04년 점검실적 4회 (양곡표시제는 '04년부터 전면시행)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조직측면>

- 양곡의 수급·유통 등 양곡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양곡정책심의회** 구성·운영('05.8, 4회개최)
 - 생산자 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20인으로 구성
- 수입쌀 관리방안 전문가 회의 구성·운영('05.4, 6회개최)
 - 수입쌀 시장유통시 발생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공사, 학계,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
- 공공비축제 실무자회의 및 전문가회의 구성·운영('05.4, 5회개최)
 - 공공비축제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업체 등 이해관계자, 학계, 농촌경제연구원, 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본부**를 구성,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대북지원상황팀을 구성하여 쌀 40만톤 대북지원 추진

<제도측면>

- 양정제도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정부매입양곡의 매입량 및 매입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 폐지
 - 수확기 물량흡수 및 비축기능 유지를 위한 공공비축제 도입
 - 양곡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강화
 - 수입쌀을 포함한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기준 설정 근거마련
 - 수입쌀에 대한 양곡표시제 준수 및 소비자시판 이익금 징수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공공비축을 위한 매입량,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 도출

-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시행방안 관련기관 **협의 및 여론수렴**
 - 공공비축제 시행을 위한 실무자 및 전문가회의 개최(5회)
 -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경제정책조정회의 심의 정부안 마련(5.27)
 - 중앙·지방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토론회를 개최(7.20-8.4 5회)
 - 양곡정책심의회 심의·의결(4회), 농민단체 설명(8.12)
 -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관련 당정협의(9.2), 국무회의 심의(9.13)
- ※ 공공비축제 세부시행방안과 관련하여 농민단체는 500만석 매입을 주장하고, 관계부처는 300만석을 주장. 시행 첫해인 올해는 400만석을 매입하고 06년부터는 300만석을 매입하기로 결정
- 수입쌀 소비자 시판물량에 대한 이익금 징수방안 등 **TRQ(의무수입 물량) 관리방안** 전문가회의 개최 (6회)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 확정

- 경제정책조정회의(5.27), 재정경제부·농림부 합동 총리보고(7.21)
- 당정협의 개최(9.2), 차관회의(9.8) 및 국무회의(9.13)
- ※ 관계부처 협의결과 **공공비축매입물량 및 수입쌀 포함여부**가 쟁점
 - 관계부처는 매입물량은 300만석, 수입쌀 포함을 주장하였으나 농민들의 요구사항,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매입물량 400만석, 수입쌀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05. 3)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완료(05. 6)
 -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05.7.1)으로 공공비축제를 금년부터 도입
 - 수입쌀의 소비자시판에 대비하여 벌칙규정 신설 등 포장양곡표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시판이익금을 환수근거 마련
 - 수입쌀 시중유통 및 수입이익금 부과 방안(장관결재, 8월)은 쌀협상 비준 후 확정·추진 예정
-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농림부 주관 2회, 시도주관 2회 단속 실시
 - 위반사항 : 과태료 부과 18건, 주의시정 조치 35건
-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잉여재고 특별처리대책 마련
 - 추진실적 : 주정용 공급 94만석(10월기준), 가공용 공급 : 43만석(9월기준)
 - 휴경·타작물 재배시에도 고정직불금 지급토록 제도 개선
 - 논에 콩 등 타 작물 재배 유도(논콩재배사업 5,367ha)
 - * 벼 재배면적 : (04)1,001천ha→(05)980천ha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상황
○ 양곡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정비	완료
○ 공공비축제 세부시행방안 마련	완료
○ 수입쌀에 대한 양곡표시제 준수 및 소비자시판이익금징수	정상추진
○ 쌀 적정생산 유도및 잉여재고 특별처리 추진	정상추진

참고 :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 공공비축의 규모

- FAO권고 수준과 국내 연구결과를 고려, 비축규모는 600만석
 - 공공비축 규모는 쌀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3년 뒤('08년) 재검토
- 기준물량 600만석은 국내산으로 충당한다는 원칙, 수입쌀 재고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운용

□ 매입·판매물량 규모 : 300만석 수준 매입 원칙

- 금년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수확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400만석을 매입
- 국내산 재고를 늘리기 위해 '06년에는 관수용·공공용 등을 포함하여 300만석만 판매

□ 매입 대상

- 농가의 희망에 따라 포대벼 또는 산물벼로 매입가능

□ 매입가격 산정·정산

- 건조 벼 매입 : 농가에게 일정금액을 우선지급, 시장가격(산지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
 - 검사규격에 따라 등급별로 가격을 차등 지급
- 산물(물벼) 매입 : RPC매입시 쌀값의 100%를 지급
 - 일정기간 보관 후 정부로부터 인수하여 판매하되 인수가격은 쌀값(전국 평균)의 변동율을 적용 결정

□ 금년도 매입기간 :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

- RPC를 통한 산물매입은 10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직접 포대매입은 10월 20일부터 시작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쌀협상 및 DDA협상에 대비하여 양정제도를 개편하고, 현지출장점검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반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공공비축물량 매입대금 총 7,000억원중 11.14일 현재 4,500억원(64%) 매정하여 공공비축 물량 매입시 즉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 공공비축물량 매입계획 400만석, 매입실적 83만석(11.9현재) 계획대비 21%
- 쌀협상 비준 후 수입쌀의 소비자시판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환수하여 쌀소득등보전변동직불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계획

④ 시행과정의 효율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FAO권고 수준과 국내 연구결과를 고려, 비축규모는 600만석(2개월분 또는 소비량의 17%)수준으로 운용하되, 쌀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3년 뒤('08년) 재검토
- 공공비축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석 수준을 원칙으로 하되, 금년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수확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400만석을 매입
- 농가의 희망에 따라 포대벼 또는 산물벼로 매입 가능하도록 개선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공공비축제 등 양정제도 개편에 대한 **전방위 홍보**를 하였음에도 국민·이해당사자의 이해도가 저조

- KBS 1 밝아오는 새아침 농수산정책진단(05.3.11) 등 방송인터뷰(9회)를 통한 정책홍보 및 여론 수렴
- 쌀산업의 국내보완대책설명자료 배포(4.11)
- 전문지 광고(양정제도 개편토론회 개최)(7.19)
- 양정제도 개편 농협임직원 교육 및 의견 수렴(2회, 8.9~10)
- 양정제도 개편에 대한 전방위 홍보 실시
 - 방송사, 언론사,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중앙·지역 등 권역별 설명회 개최
 - 리·통장에게 마을방송용 리후렛·가이드 북 제작·배포,
 -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개최, 각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및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초청 토론회 개최
 - 농민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간부급이 개인별 설명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공공비축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협 등 RPC의 수확기 양곡수매를 독려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농림부는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총괄·기획기능 수행
 - 농협RPC 등 민간RPC의 수확기 벼 수매로 쌀값지지 및 농업인 판로보장
- 양곡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수입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위한 합동 단속 실시 등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
- ◆ TRQ는 쌀협상 비준이 통과대는 대로 세부시행방안 확정 예정

- 양곡관리법 개정(3.31)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7.1)
- 주정용·가공용 공급도 당초계획(158만석) 대비 95%이상 달성 전망
 - 금년 12월말 기준 150만석 수준 공급 예정
-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대비한 **TRQ관리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근거 규정 및 세부시행방안 마련
- 부정유통 단속도 당초계획대로 분기별 1회 실시(농림부 2회, 시도 2회)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 적 치	목표달성도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	○'05년중 양곡관리법 개정	- 양곡관리법 개정(3.31)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7.1)	100%
○가공용쌀 공급물량 확대	○'02~'04년 평균 대비 30%이상 공급(158만석)	- (10월말 기준) : 137만석 - (12월말 예측치) : 150만석	(10월말 기준) : 87% (12월말 예측치) : 95%
○수입쌀 소비자 시판대비 부정유통 방지 노력정도	○TRQ관리방안 마련여부 ○포장양곡표시제 이행상황 점검(분기1회)	- 수입이익금 징수방안 등 TRQ 관리방안 (8월) ○ 단속실적 : 농림부 주관 2회, 시·도주관 2회	100% (10월말 기준) : 75% (12월말 예측치) :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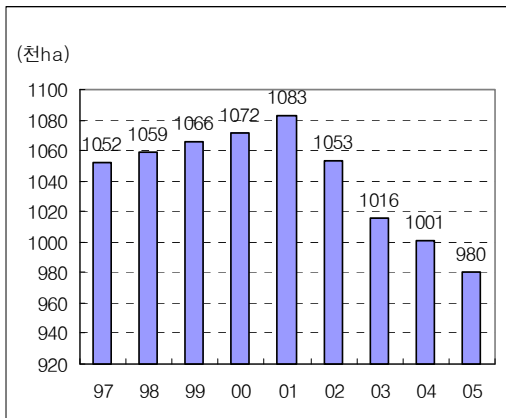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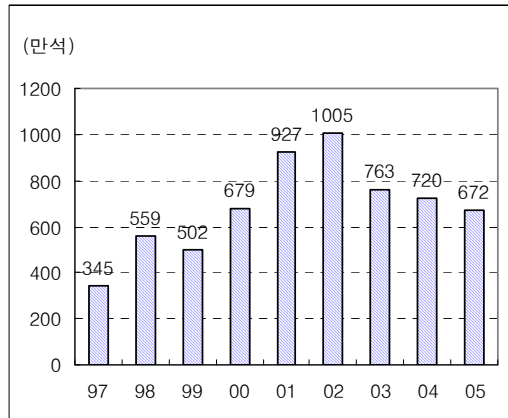
- ◆ 공공비축제·수입쌀 시중유통·수입이익금 징수는 제도 도입초기이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판단하기 곤란
- ◆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주정용·가공용 공급 확대로 쌀 **수급 상황은 호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정부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정부양곡 매입보조금을 직불제 보조금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쌀농가의 소득안정 재원을 마련하고 수입쌀 시판에 대비하여 부정유통 및 포장 표시제를 강화함으로써 **양곡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주정용·가공용 쌀 공급 확대로 올해 10월말 재고는 **적정수준인 671만석**으로 전망

<벼 재배면적>



<쌀 재고량>



나. 쌀농가소득보전방안 시행

<총 평>

- 양정제도를 개편하고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추곡수매제하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가격지지 정책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WTO 협정에 따라 수매물량이 매년 감축되고 있으며 향후 DDA협상 이후 감축폭이 가속화되어 실효성이 크게 감소할 전망
 -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수급 및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감소되는 농가소득은 직접지불제를 통해 보전함으로써 쌀산업에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가격차를 줄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쌀농가소득보전방안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해 줌으로써 쌀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올해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쌀농가소득은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제도도입 초기인데다 제도가 복잡하여 일반 농업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
 - 정부의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오해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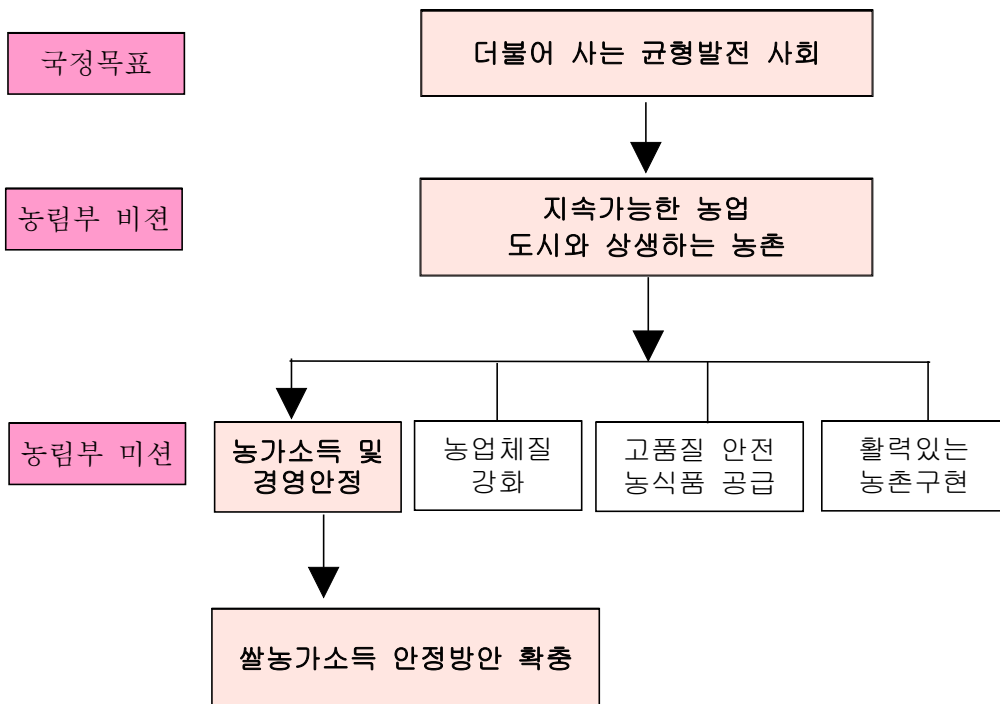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시행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 등 상위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또한 쌀협상·DD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폭 확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 우려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성이 높음

○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시행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라는 국정목표에 기여하고, 농림부의 비전 중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의 미션 중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과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쌀협상·DDA협상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쌀농가의 소득을 탄력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쌀산업의 환경대응성을 높이고 쌀산업의 체질강화라는 상위목표 달성이 가능
- 의무수입물량(TRQ)은 '05년 225천톤에서 '14년 408천톤 까지 증량하고 소비자시판은 '05년 TRQ의 10%에서 '10년 30%까지 증량한 후 '14년까지 30% 유지
- 현재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 기본골격은 관세와 국내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개방 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소비감소, 수입량의 증가 등으로 **구조적 공급과잉기조** 지속 예상
 - * 1인당 쌀소비량 : ('01) 88.9kg → ('03) 83.2kg → ('05) 81.1kg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4년 쌀값은 116천원(80kg쌀) 농가소득은 530만원(ha당)까지 하락할 것을 전망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지회·위협 요인 분석		기회(O)	위협(T)
		강점·약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화 유예는 10년간의 준비기간 확보 ○ 고품질 쌀에 대한 수요 확대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소득 안정장치 마련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영세성 ○ 공급과잉인 수급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규모화 ○ 품질고급화 ○ 적정생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가격차 축소 ○ 공공비축제 등 시장기능 강화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쌀농가소득보전방안 시행은 쌀농가의 소득안정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쌀협상·DDA협상 등 시장개방폭 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쌀농가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쌀농가의 소득안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
- 이와 함께 “**01~03년 평균 1ha당 소득의 98% 이상 유지**”라는 계량화된 지표와 “**쌀소득보전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성과지표로 제시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 과 지 표	'05년도 목표	검 증 방 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 쌀농가 소득안정	○ '01-'03년 평균 1ha당 소득의 98%이상 (7,132천원/ha)	○ 목표소득대비 달성 실적(%)	○ '01-'03년 평균 1ha당 총수입 : 7,278천원/ha
○ 쌀소득보전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사업시행(7.1)이전에 개정완료	○ 개정된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여부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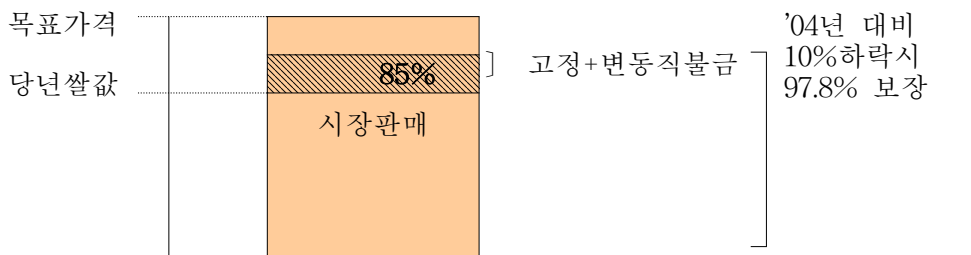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제도·예산 측면의 정책 수단을 충실히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조직측면>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운영과 대상농지 확인 및 농업인 등록 등의 실무업무 수행을 위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설치(4.15)

<제도측면>

-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정비(7.1)
-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시행
-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소득보전



<예산 측면>

- '05년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예산 6,026억원(ha당 60만원, 998ha)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임

참고 : 쌀소득보전직불제

- 목표가격 : 쌀의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산지 평균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 단위로 변경
 - 목표가격을 변경할 경우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시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
- 고정직불금 : WTO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 지급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를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보다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안 : 640천원/ha, 농업진흥지역밖 : 512천원/ha
- 변동직불금 :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9,836원/80kg)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에 1헥타르당 쌀 생산량과 벼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1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쌀 61가마로 정함
- 대상농지 :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 현행 농업인 납부금 제도와 대상농지의 4ha 면적 상한은 폐지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함
-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주요사항인 목표가격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회를 설치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연찬회,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추진한 것으로 평가

-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에 대한 **연찬회** 개최 (2.15~16)
 -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설명
 - 시군담당공무원, 농관원, 농협, 기반공사, 종자관리소 등 300여명
- **쌀농가소득안정방안 및 양정개편 방향 교육**(2.17)
 - 농업기반공사 본사 및 지사 직원, 농협 임직원
- 쌀소득보전방안·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여론수렴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앙·지역 토론회** 개최(7.19~8.3)
 -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은 목표가격 설정시 물가상승을 감안, 고정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을 주장
 -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는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80% 수준이 적당함을 주장
 - * 이와함께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는 소득보전에 따른 구조조정 및 소농영세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지적
-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04.11)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05.6)**재경부·기획예산처·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목표가격·고정직불금 지급단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재경부), 농가소득안정기획단(행자부) 등과 협의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쌀농가소득보전방안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 향후 쌀값 하락 폭이 커지는 경우 정부의 재정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와 협의 추진
 - 목표가격·고정직불금 지급단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보전방안 마련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설치의 경우 정원 및 인력 증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협의 추진
 - 향후 농가소득안정 관련 업무의 증가 등 행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신설의 필요성 인정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당초계획대로 쌀소득보전기금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 완료**
◆ **고정직불금**은 농업인 등록,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완료**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완료(7.1)
 - **목표가격** : 쌀의 산지 평균 수확기 가격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 단위로 변경('05~'07년목표가격 17만원/80kg)
 - 새로운 목표가격은 쌀가격 **변동비율**을 기존 목표가격에 곱하여 산정
 -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1ha당 쌀 61가마 생산 기준**

- 지급대상 농업인 등록, 현지확인등을 거쳐 **고정직불금 지급**
 - 등록 등의 실무업무 수행을 위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설치(4.15)
 - 농업인단체 대표 5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언론인 5인 등을 포함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7.1)
 - 고정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업인 신청접수** (7~8월)
 - 직불제 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지원대상 면적 확정 (10월), **고정직불금 지급**(11월)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과 제	추진상황
□□ 쌀소득보전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	완 료
□□ 고정직불금지급	완 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가소득안정 진단**을 설치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 업무의 **전산화(Agrix)** 추진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설치하여 소득보전 관련 업무를 추진



- 직접지불금이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 등에 전가되는 것을 예방하고, 부정한 직불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내용 전산점검 및 시·군에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 운영(9~10월)

- 수확기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의 불안감이 확대됨에 따라 쌀소득보전 직불금중 **고정직불금 조기 집행** 추진
 - 수매시기에 맞추어 조기집행을 추진(당초 12월 지급 계획)하고, 이에 따른 소요자금 5,988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배정조치(10.25)
 - * 변동직불금은 수확기('05.10월~'06.1월) 쌀가격을 반영하여 '06.4월이전 지급계획
- 직불금 대상자 신청·접수·자금배정·결산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구축(05~09년) 추진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진행 상황을 신속한 파악, 업무처리 간소화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 추진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고정직불금 단가 조정, 추가 예산확보 등 쌀농가소득보전 방안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

- 농업인 단체 등의 **고정직불금 상향조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06년부터 70만원/ha으로 상향 조정 ('05년 현재 60만원)
- 직불제 시행 첫해인 금년 산지 쌀값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추가 소요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하고 입법부에 협조 요청
- 당초 12월 지급예정이던 **고정직불금**은 농업인의 연말 자금수요 등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공비축매입 시기에 맞추어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소요자금 5,988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배정(10.25)조치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 홍보물,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
- ◆ 다양한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복잡하여 현장 농업인의 소득안정방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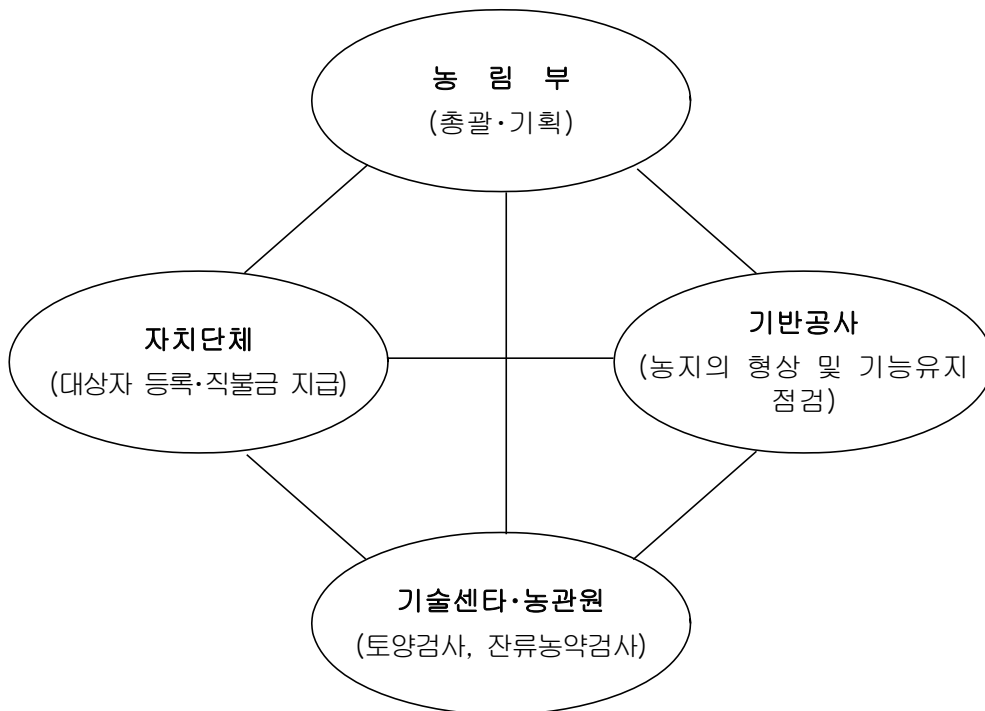
- 제도 마련 이후 수확기까지는 **제도의 도입배경, 내용**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해 홍보
 - 쌀소득보전직불제 리후렛 90만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포(5.8)
 - 목표가격, 보전수준 등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의 기본구조와 도입필요성 등을 농가들에 설명
 - 양정제도 개편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 언론 브리핑(6.28, 차관)
 - PCRМ(5만명 대상 제공) 및 농림부 홈페이지(팝업, 클릭 농정뉴스) 등 인터넷을 매체를 이용한 홍보
 - 2차례에 걸쳐 농민신문 등 농업관련 전문지(13개)를 통한 광고및 기획 기사 게재(7~8월) 추진
 - 현지 출장을 통한 사업설명 및 애로사항 발굴·해소 추진(4회)
 - 텔레비전 자막 홍보 (K-TV, 8.23 ~ 8.30)
- 수확기 이후에는 쌀협상 비준 동의,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 수확기 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대면적 홍보를 적극 추진
 -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공공비축제 리후렛 100만부 제작·배포(10.20)
 - 이장 마을방송 및 당부사항 장관 친서 발송(2회, 8월, 10월)
 - 공공비축제 및 소득보전직불제 문답자료를 작성하여 수매장에서 농가들과 직접 접촉하는 농관원의 수매검사원에 배포 (11.7)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지자체·농업기반공사 등 산하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

- 직불제의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농업기반공사·농업기술센터·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산하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농림부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장단기 기본정책 및 사업지침 수립
 -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인의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의무 이행여부 점검
 - 농업기술센터 및 농관원은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농업인 등록업무 및 직불금 지급업무 담당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 당초 성과지표로 설정된 **쌀농가소득수준**은 내년 3월 이후 확정
- ◆ 최근의 쌀값 등을 기초로 추정한 결과 **101.6% 달성** 전망

○ '05년 목표로 제시된 “'01~'03년 평균 1ha당 소득의 98%이상 유지(목표 수입 : 7,132천원 이상)”의 달성여부는 통계청의 생산비 통계, 수확기 쌀가격('05.10~'06.1월)이 확정되는 내년 **3월경 이후 판단 가능**

- 그러나 최근 쌀값, 과거의 ha당 생산비 규모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ha당 농가소득은 당초 **계획 대비 101%인 725만원**으로 추정

* 쌀소득 = 쌀판매수입(888만원/ha) - 경영비(290) = 598만원

* 직불금 = (목표가격-수확기쌀값) × 0.85 = 127만원

○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 완료(7.1)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쌀농가소득안정정도	'01~'03년 평균 1ha당 소득의 98%이상 유지 (목표수입 : 7,132천원 이상 유지)	7,249천 원/ha	'04년 수확기 쌀값 대비 10% 하락하는 경우 목표 소득의 101.6%수준 수취
쌀소득보전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업시행('05.7.1) 이전에 개정완료	개정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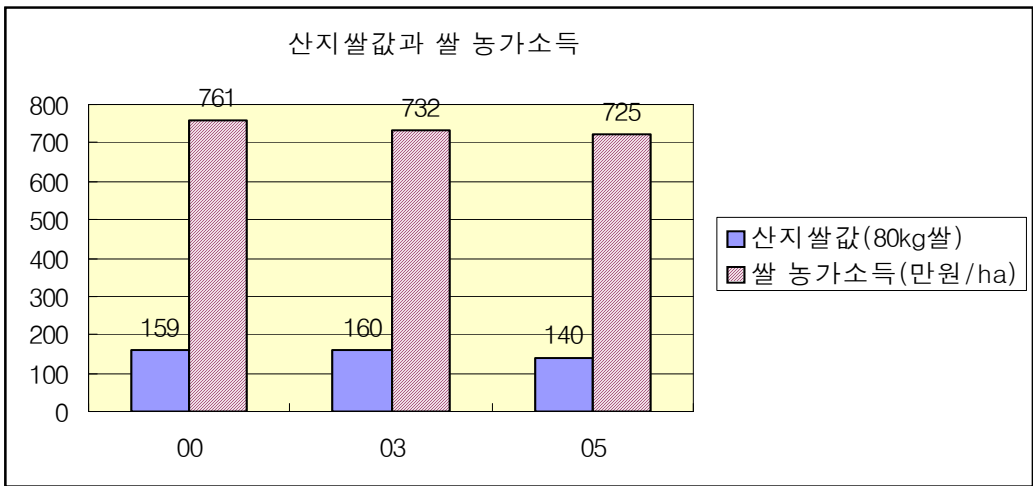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와 실질적 발생 여부

- ◆ 올해 수확기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 향후 시장개방폭 확대 등으로 쌀값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커 소득안정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지난해 과잉생산에 따른 민간의 재고과잉, 수입쌀 시판 등에 따른 시장쌀값에 대한 불안감 및 유통업체의 소극적 매입 등으로 14만원/(80kg쌀) 수준까지 하락
- 지난해 대비 쌀값이 14% 하락하였고 생산량이 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농가소득은 소폭 감소 전망

* 10a 당 쌀 생산량 : ('00) 497kg → ('03) 488 → ('04) 504 → ('05) 490



- 향후 수입쌀 시판물량의 확대, 시장개방 폭 확대, 공급과잉 기조의 지속 등으로 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더라도 농가소득 안정을 통한 쌀산업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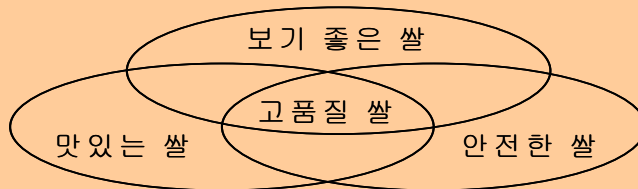
다. 고품질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

<총 평>

- 우리쌀이 수입쌀과의 품질경쟁에서 앞서 나갈수 있도록 **쌀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쌀 품질 고급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6대 중점 과제를 중심·추진함으로써 사업목표 실현성 및 효율성을 제고
 - 고품질품종 재배면적 확대, 질소질비료 시용량 감축 등 품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대농업인 공감대 구축 계기 마련
 - 민간합동 『고품질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기관, 단체와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본부』 설치·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능동적 대응 체제구축
-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시중유통 브랜드쌀에 대한 평가와 홍보 등을 실시**
 - 지자체가 추천한 7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품위, 식미, 품종 및 소비자 만족도(4회) 등을 거쳐 12개 우수 브랜드 선정
 - “브랜드쌀 한마당” 등을 통해 브랜드쌀에 대한 소비자 홍보실시
- 품질고급화를 위해 품종선택 등 **생산단계**, 저온저장 등 **수확후 관리 단계**, 안전립 비율 확대 등 **유통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하면서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

☞ 고품질 쌀의 정의

○ 고품질 쌀 = 보기 좋은 쌀 ∩ 맛있는 쌀 ∩ 안전한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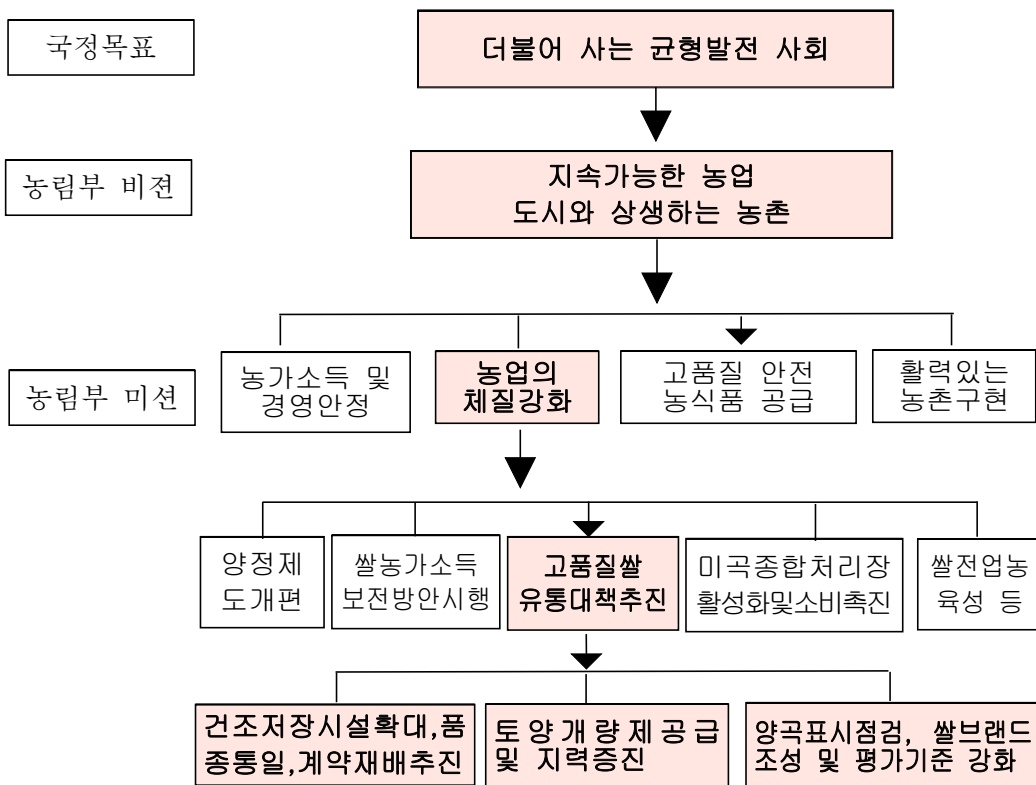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고품질쌀 유통대책 추진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
- ◆ 쌀협상·DDA협상에 따른 쌀시장 개방폭 확대와 수입쌀 시판이라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쌀 유통대책을 추진

○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이라는 국정 목표 수행에 기여하고, 농림부의 비전 중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의 미션중 “농업의 체질 강화”, 정책과제인 “쌀 산업의 체질강화”와 부합

《정책목표 구조》



- 쌀 협상 이후 시장 개방폭 확대가 불가피하고, 쌀 소비감소로 인한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고품질쌀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에서 질 위주의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책으로 정책방향 전환이 시급
- '04년 합의된 DDA기본 골격은 관세와 국내 보조수준이 높을 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규정하여 시장개방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의무수입물량은 '05년 225천톤에서 '14년 408천톤까지 증량
- MMA수입량(소비자시판량) : ('05) 225천톤(22.5천톤) → ('10) 327(98) → ('14) 408(128)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 ('00) 93.6kg → ('02) 87→ ('04) 82

《정책환경 요인에 대한 SWOT 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강점(S)	○ RPC의 계약재배 확대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고품질 쌀 확보 가능	○ RPC 계약재배를 독려하고 쌀품질평가를 객관화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필요 ○ 품종개발,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제고	○ RPC의 경영평가, 부실 RPC 통합지원 등 RPC의 건설화 유도
약점(W)	○ 저온저장시설 미흡, RPC 시설노후화 등으로 유통단계에서 쌀 품질이 취약 가능성	○ 건설한 RPC의 경영지원으로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책임지게 함 ○ 고품질쌀 인증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 RPC 시설지원 필요 - 저온저장시설 설치 - 노후시설 교체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고품질쌀 생산·유통 대책을 재배, 수확후 관리, 유통단계로 구분하여 정책목표를 명확히 함

- 재배단계 : 들녘별 고품질 품종통일 및 지력증진
- 관리단계 : RPC 중심의 품종별 관리체계 구축
- 유통단계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강화 및 브랜드 홍보

- 재배관행을 개선하고 가공·유통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외관, 식미 및 안전성 측면에서 아직 외국의 고급쌀보다 품질이 낮은 수준임
 - 생산단계에서부터 들녘별 고품질 품종 통일을 유도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지력을 증진하여 쌀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수확 후 RPC를 중심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등 품종관리를 하므로써 브랜드 고급화를 유도
 - 유통단계에서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중 유통 우수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여 고품질쌀 유통 지원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단위 : 점)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2년간 평균 실적치		
			평균	'03	'04
○ 쌀 품질평가 지수	- 식미 : 71.4	매년 실시하는 쌀 품질평가 결과로 측정	71.4	73.6	69.2
	- 품위 : 83.0	"	83.0	89.4	78.4
	- 품종순도 : 69.3	"	69.3	61.6	76.9
	- 소비자만족도 : 66.5	"	66.5	65.0	67.9

* 쌀 품질평가 4개 항목에 대하여 '03년부터 평가 실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제도, 예산 등 정책수단은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조직 측면>

- 고품질쌀 생산유통 대책 수립 및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 민관합동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추진위원회』 구성(3.21)
 - 생산자, 소비자, 농민단체, 대학교수, 정부관계자 등 30여명
-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본부**』 설치·운영(3월~11월)
 - 추진업무 : 고품질쌀 생산, 적정면적 유지 및 기상재해 대책추진
 - 설치기관 : 농림부, 농진청, 시·도, 시·군, 농협, 기반공사

<제도 측면>

-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재배, 수확후 관리, 유통, 소비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현장 지도기능을 강화
 - 재배단계 : 들녘별 고품질 품종통일 및 지력증진
 - 수확후 관리단계 : RPC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 유통단계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포장표시제 강화 및 브랜드 홍보
- **포장양곡 표시제도 개편 및 단속 강화(7.1부터 시행)**
 - 수입쌀을 포함한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기준 설정 근거마련
 - 명예감시원제 및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 규정 신설
 - 양곡의 부정유통 등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강화

<예산 측면>

-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 ('04) 209억원 → ('05) 232
- 품질관리를 위한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04) 126억원 → ('05) 93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농업인,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쌀생산·유통관련 기관 단체 관계관 연찬회, 지역별 순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쌀 품질 고급화에 대한 의견수렴
 - 시·도 순회토론회 개최(4.20~5.12), 심포지엄(6.15), 간담회 개최(6.30)
 - 쌀 품질고급화 보완대책 농특위 보고(7.4), 발표(7.14)
- 쌀 품질고급화 및 생산보전대책 연찬회 개최(280명, 2.15~16)
- 민관합동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추진위원회』 구성(3.21)
 - 생산자, 소비자, 농민단체, 대학교수, 정부관계자 등 30여명 참여
 - 농진청 관계자와 대책 토론회(3.25), 추진위원회 1차회의 개최(3.29)
- 쌀 품질고급화 및 소득안정대책 추진 연찬회 개최 ('05.2)
 - 쌀 전업농육성 대책 추진 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이해 제고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농림부, 농진청 등 관련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하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평가

- 농림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하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
 - 농림부 :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 총괄(기상재해대책 포함)
 - 농촌진흥청 : 고품질쌀 품종육성 및 품종특성 교육홍보, 고품질 품종 기술개발, 병충해 방제, 현장기술지도 등
 - 지자체 : 지역별 대표품종 육성 및 종자보급, 지역별 대표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강화, 소포장 쌀 생산시책 추진 등
 - 농협 : RPC 계약재배 추진, 유통브랜드 등 품질관리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

○ 들녘별 고품질 품종 통일 및 지력증진 추진

- 고품질 벼 정부보급종 공급확대 : ('04) 전체 소요량의 28% → 32
- 들녘별 재배품종 단순화를 위한 정부 매입품종 시·군별 3품종 이내 선정(4. 2)
-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 확대 : ('04) 132천ha → ('05.P) 151
-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 ('04) 50만톤(210억원) → ('05) 70(245)
-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팀(T/F) 구성·운영(9월)
- 질소질비료 시비량 감축 : ('04) 10.9kg/10a → ('05) 9.9

○ RPC 중심의 계약재배를 통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 RPC 벼 계약재배 확대 : ('04) 28% → 33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강화 및 브랜드 홍보

- 시중 유통 우수 브랜드 쌀 평가 실시(3~9월)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포장표시위반 단속 실시(4회)
- 부정유통 신고 및 고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9.2)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 들녘별 고품질 품종 통일 및 지력증진	완료
○ RPC 중심의 품종별 관리체계 구축	완료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강화 및 브랜드 홍보	완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추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시행 지침(농림부장관 훈령)을 마련하여 농업인, 지자체, 관련기관에 배포
- 최고 품질 품종 육성을 위한 벼 품종개발비 64억원 지원
- 들녘별 지력증진을 위한 적정시비를 위해 사업비 67백만원 지원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과 벼 이외의 농경지면적을 구분하여 4년 1주기로 공급
 - 2005년 석회, 규산 공급대상지역에는 2000~2004년까지 공급이 누락된 지역을 우선 포함시켜 연차별 공급대상지역 선정
 - 중금속 오염농경지는 매년 공급대상지역으로 우선선정 지원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수입쌀 시장판매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기존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을 보완한 □□쌀품질 고급화 보완대책□□을 수립·시행(7월)
 - 지력 증진을 위한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확대
 - 농업인 건의를 수용하여 분상대신 입상 규산질비료 공급 확대
 - ‘10년까지 9~10개 수준의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 품종 육성
 - 6대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운동 전개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조기 정착 유도
 - 쌀 품종 혼입율 개선, 밥맛이 가장 좋은 유통기간 표기 유도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시군단위 배포**, 고품질쌀 식별방법 등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등 **전방위 홍보 실시**

- 쌀 품질고급화 보완대책에 대한 **보도자료·전문지 특집기사·홈페이지 게시·우수사례 책자발간 배포(7월)**
- 고품질쌀 생산·유통 **관계관 해외연수(9, 10월/농림부)**
- 쌀 품질향상·생산비절감 **연시대회 및 현지 평가회(7, 10월/농진청)**
- 우수 브랜드 홍보강화 : KBS TV **스페셜 프로그램 제작 방영(9월)**
- 고품질쌀 식별방법, 적정구매, 가정내 보관방법 등 소비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고품질쌀 식별방법, 적정구매, 가정내 보관방법 등 소비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고품질쌀 생산 **핵심기술 편람을 시·군단위 지역별, 품종별로 개발 하역 보급(11개 지대, 10개 재배 유형)**
- **6대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 운동 전개**
 - 적기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관리, 질소비료 시용량 감축, 최소 병해충 방제, 적기수확
- 소비자 단체 주관 소비촉진 **홍보 및 결의대회 개최(4.12, 세종문화회관)**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한 협조체제 유지

< 쌀 품질고급화 추진도 >

주 체	소비자(단체) <소비주체>	RPC/산지농협 <유통주체>	농업인/영농법인 <생산주체>
	- 소비자단체 · 유통미 품질평가 · 표시사항 모니터링	- 수매·건조·저장·가공 - 브랜드화·품질관리 - 마케팅·경영개선	- 고품질재배(전업농중심) · 계열화 약정(↔RPC) · 고품질벼 생산관리
지 원	↑	↑	↑
농림부	- 상품정보 제공 · 표시·인증제도 - 불법유통 단속 - 소비자 참여 지원 · 품질평가, 위반단속	- 건조·저장·가공시설 확 충 및 개선지원 - 수매·운영자금지원 - 경영합리화 지원 - 홍보 등 마케팅지원 *평가 및 차등지원	- 품종 추천·종자보급 - 토양개량 지원 - 친환경농업직불 지원 - 품질검사 및 인증 - 공매, 정보화 지원
농진청 (한식연)	- 품질평가 기술 지원	- 수확후관리 기술지원 - 계열화농가 기술지원 - 품종·품질분석 지원	- 고품질품종 육성 - 재배·경영기술 지원 - 친환경자재·기술지원 - 토양검정 및 처방
지자체 (시·도) (시·군)	- 현장 체험·정보제공 - 지자체 품질인증 - 구매알선 및 지원	- 시설·자재지원 - 홍보 및 판촉지원 - 계약재배지원	- 특화사업지원 - 생산시설·자재지원 - 현장기술지도
농 협 중앙회	- 품질분석자료 제공 - 구매알선 및 지원 - 직거래 지원	- 경영평가 및 개선지원 - 시설개선·확충지원 - 홍보 및 판촉지원	- 생산시설·자재지원 - 토양검정지원 - 직거래 지원
농업 기반 공사	- 쌀 구매 알선 및 지원	- 쌀전업농가 기술지원	- 영농규모화사업 - 쌀전업농 정보화관리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품종 순도는 평가방법 개선 등으로 목표 달성도 평가가 곤란

- 품질평가 항목중 식미, 품위, 소비자 만족도 등은 당초 목표를 달성
 - 품종 순도평가는 목표치 지표를 혼입율이 높은 단위품종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토록 하였으나 평가 해당 품종에만 점수를 부여토록 평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목표 달성도 평가가 곤란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 적 치	목표달성도
○ 쌀 품질 평가 지수	- 식미 : 71.4 - 품위 : 83.0 - 품종순도 : 69.3 - 소비자만족도: 66.5	- 식미 : 98.4 - 품위 : 95.5 - 품종순도 : 53.4 - 소비자만족도 : 66.9	138% 115 - 101
목표달성도 평균	100 %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여부

◆ 환경친화적 농업실현, 브랜드쌀의 인지도 제고 등 쌀품질 고급화 대책의 가시적 효과 나타남

- 토양개량제를 4년 1주기로 공급하고 녹비재배를 확대하여 지력을 증진 시킴으로써,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 질소질비료 시비량 : ('03) 11.5kg/10a → ('04) 10.9
- **고품질 품종 확대**, 재배품종 단순화로 품종혼입을 방지하고 **미질을 균일화**하여 브랜드쌀의 품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쌀경쟁력 향상**
 - 고품질 품종 재배비율 : ('03) 93% → ('04) 98
 - 완전미 비율 : ('00) 57.4% → ('02) 74.2 → ('03) 82.1 → ('04) 86.8

— < 정읍 □□단풍미인쌀□□생산·저장·가공·판매 우수사례 > —

《쌀 생산》

- 밥맛 좋은 품종으로 □□농업인+농협+정읍시□□ 3자 약정 체결
 - 땅심을 높이기 위해 **자운영을 의무적으로 재배** ('04) 600ha → ('05) 900

《저장·가공》

- RPC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5개 농협 RPC 통합**(2005. 1. 1)
- RPC 저장·가공 현대화로 **'품질인증'을 받은 고급 브랜드쌀 생산**

《판매전략》

- 쌀 판매를 전담할 **민관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전문 경영인 영입추진**
- **리콜제 실시** 등으로 **평생고객 관리**
 - **소비자의 작은 불만에도 즉시 리콜**하여 철저한 고객만족 전략 도입
 - 평생 고객관리를 위한 **10만여명의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미곡종합처리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총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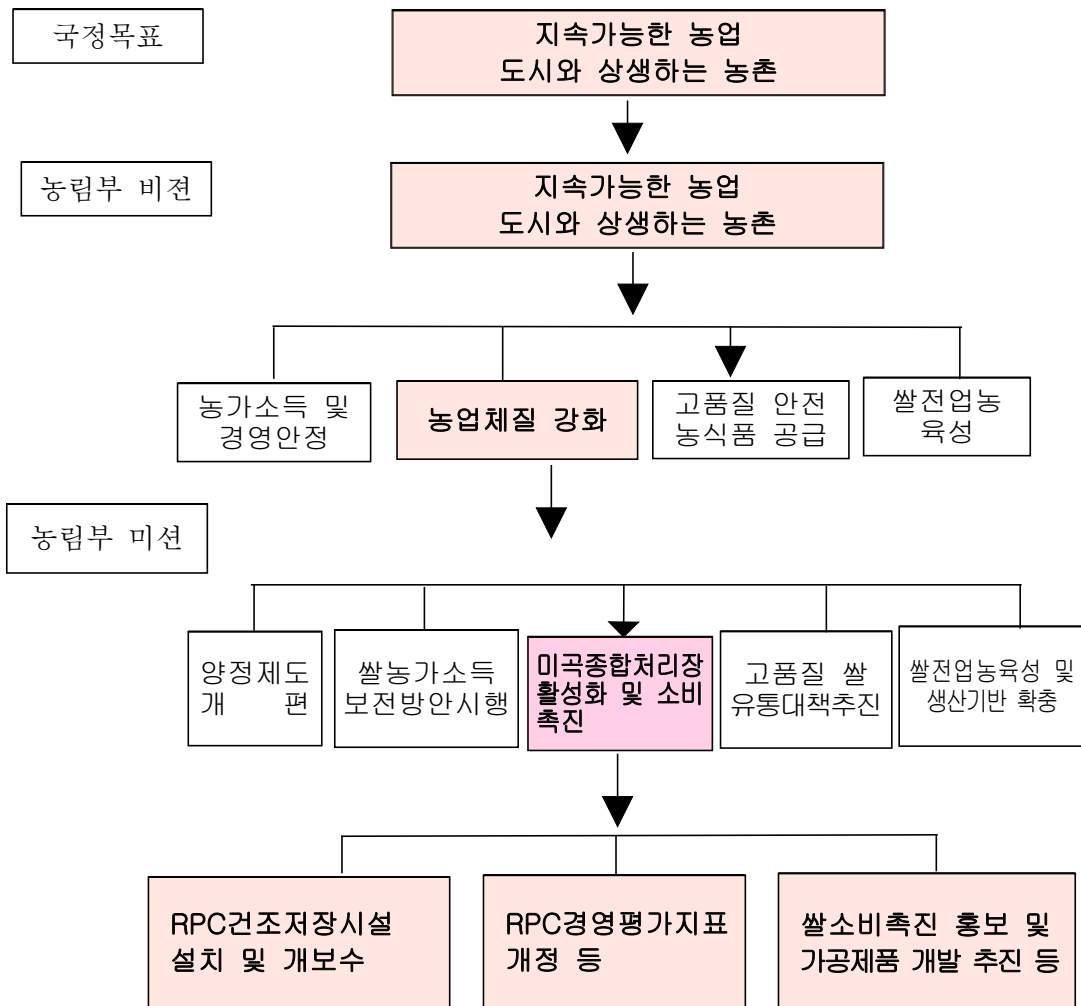
- 정부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으로 정부의 수확기 물량흡수 기능 위축 등으로 정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벼 매입 확대를 유도
- RPC 경영 효율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차등지원하고 통합 유도 등을 통해 변화된 쌀 산업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운영자금 차등지원으로 RPC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RPC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통합RPC에 대한 금리 우대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부진 RPC의 경영개선 노력 유도 및 통합분위기 확산
- 소비패턴의 서구화 등으로 쌀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고미(古米)의 가공용 공급 등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 적극 실시
 - 전문가·생산자·소비자 단체 대표(8명)로 쌀 소비 촉진 T/F팀 구성('05.6)
 - 소비자 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우리쌀의 건강학적 우수성 홍보)
 - 농촌체험행사(가족쌀사랑 체험교실 운영) 등
 - TV광고(9~10월, KBS·MBC 총204회), 대형 전광판 이용 캠페인 광고 추진(9월부터, 서울 5개소, 부산 등 2개소)
 - 소비자 신뢰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브랜드 쌀 평가 실시('05.9, 시도추천 71개브랜드중 12개브랜드 선정)
 - 농협 하나로 마트에 쌀빵 전문점 설치 확대(9말 현재, 80개소)
- 시장개방폭 확대 및 수입쌀 시판 예상 등 쌀유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RPC가 수확기 벼매입을 주저하면서 산지쌀값이 떨어져 농가 등이 정부의 쌀값안정 노력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미곡종합처리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은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농업체질강화** 등 상위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RPC 통폐합을 통하여 규모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소비 감소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므로서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
 - '04년 농협 **RPC 199개소중 36%(69개소)가 적자발생**
 - 통폐합 RPC에 대해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우대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통폐합 적극 유도**
 - 1인당 연간 쌀소비량 : ('00) 93.6kg → ('02) 87→ ('04) 82

《정책환경 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지회·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정부의 쌀수매기능 축소를 RPC가 대행	○쌀값의 급락에 따른 RPC의 부실화
강점(S)	○건전 RPC의 집중지원으로 RPC 중심의 쌀생산 및 유통의 일괄관리 가능	○수확기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 불안 해소 ○RPC 주관의 쌀품종 선택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품질관리 가능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수립 및 일관된 추진으로 RPC에 대한 정책신뢰성 획득 필요
약점(W)	○부실 RPC에 대한 추곡수매 지원으로 퇴출 지연 가능성	○부실 RPC 통합 독려, 경영컨설팅 지원 등 RPC의 경영 건실화 유도	○부실RPC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경영평가와 그에 따른 선별지원 원칙 준수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미국종합처리장의 쌀매입량 비중을 명확한 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RPC의 경영개선을 통한 **벼 매입기능 확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계량화**하고 있음
 - '05성과목표 : 쌀 유통량의 54.5%(1,325만석)를 RPC에서 매입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RPC 쌀 매입량 비중	유통량의 54.5% (1,325만석)	지자체의 RPC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	유통량의 51.7% (1,245만석)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RPC 경영안전을 통해 벼 매입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쌀소비 촉진 홍보 강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RPC의 규모화를 통하여 경영안정과 벼 매입능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RPC에 대해서 전문가의 경영평가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 자금 차등지원 등 실시
 - RPC 업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방안을 마련하되, 평가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행
 - 통합RPC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경영 컨설팅 지원
 - RPC 경영개선을 위해서 농관원, 농협, 한식연, RPC 단체로 T/F팀을 구성·운영
- 국내쌀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브랜드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TV광고, 교육홍보 등 소비촉진 홍보도 강화
 - 소비자 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우리쌀의 건강학적 우수성 홍보)
 - 농촌체험행사(가족쌀사랑 체험교실 운영) 등

- TV광고(9~10월, KBS·MBC 총204회), 대형 전광판 이용 캠페인 광고 추진(9월부터, 서울 5개소, 부산 등 2개소)
- 소비자 신뢰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브랜드 쌀 평가 실시**(’05.9, 시도추천 71개브랜드중 12개브랜드 선정)
- 농협 하나로 마트에 **쌀빵 전문점 설치 확대**(9말 현재, 80개소)
- 114안내시간 **안내방송 홍보**(9.1~10.15)
- TV 특집 **다규 프로그램 방송협찬 추진**(’05.3)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RPC 경영평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쌀소비 촉진을 위한 T/F팀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RPC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
 - 경영자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관련단체별 간담회 개최, 전문가의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
-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쌀소비 촉진 T/F팀 구성·운영(’05.6)
 - 전문가·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8명)로 쌀소비 촉진 T/F팀 구성·운영(’05.6)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농림부 고유업무로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은 문제되지 않음**

- 농림부의 고유업무로서 타부처 정책과의 관련성은 없음
- **RPC 활성화대책은 RPC의 경영안정을 통해 벼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농림부가 농협 및 관련기관(곡물협회, RPC협의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경영평가, 운영자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
 - 농림부 : 제도개선, 운영자금 차등지원, 건조저장시설 지원, 경영평가 계획수립 등

- 농협 및 관련기관 : 운영자금을 통해 벼매입, 품질고급화를 위한 계약 재배 등, RPC 통합 추진 등
- 쌀소비 촉진 대책은 농림부가 농협,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연계 하여 추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RPC 시설지원 및 경영개선 노력 : 정상추진
 -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 지원(50개소, 93억원)
 - RPC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차등지원(5,822억원, '05. 6~7월)
- 통합RPC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통합확대 유도 : 정상추진
 - 농협RPC 통합대상자 선정 및 운영자금 우대지원(고창 4, 부여 7, 진천 3, 함평 3개 RPC)
 - 통합RPC의 경영안정 및 조기정상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10개소)
-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강화, 가공품 개발지원등 정상추진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상황
○ RPC 시설지원 및 경영개선 노력	정상추진
○ 통합RPC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통합확대 유도	정상추진
○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강화, 가공품 개발지원등	정상추진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시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 RPC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RPC 건조저장 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을 지원
- RPC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운영자금 차등지원 체계 구축
 - RPC 운영자RPC 및 통폐합 RPC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자금집행의 효율성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04년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RPC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및 배점개선
 - 수익성 관련 지표의 배점을 축소하고 RPC의 공익성 기능 평가 강화
 - * 수익성관련 지표 배점 축소 : 농협 55점→40, 민간 55→35
 - * RPC의 공익적 기능 강화(수확기 벼 매입, 고품질 쌀 생산노력 등 반영)
 -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RPC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차등지원폭 축소
 - * 평가등급 : ('04) 6단계 → ('05) 10단계
 - * 차등지원폭 : ('04) 5억원 → ('05) 2.5억원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경영안정을 통한 RPC활성화와 쌀소비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

- 경영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RPC 업계의 협조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양곡정책방향 및 RPC 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2회)
 - RPC 경영개선위원회, RPC 연구회 등을 통해 정책 집중홍보('05.1~6)
 - 통합예정 RPC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경영컨설팅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영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 홍보('05.4~6)
- 평가 및 자금지원후에도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05.8~10)
-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
 -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에 의한 교육·홍보(8개사업)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한식연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RPC 경영평가, 통합추진 과정에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수시 RPC 경영개선위원회 개최(6회)
- 효율적인 경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RPC 관련기관·단체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중('05.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대한곡물협회 등 관련기관·단체
- 농협,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쌀소비 촉진 적극 유도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달성될 것으로 전망

- 연말까지 매입예상량은 1,350만석으로 목표치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RPC 수확기 벼 매입이 진행중인 상태로 실적목표의 달성여부 파악은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종실적 파악은 내년 2월중에 가능
 - * 사업시행지침에서는 익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가 RPC 원료벼 매입실적을 보고토록 되어 있음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 적 치	목표달성도
○RPC 쌀 매입량 비중	○유통량의 54.5% (1,325만석)를 RPC 에서 매입	- 연말까지 매입 예상량 : 1,350만석	- (10월말 기준): 75% (12월말 예측치):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		

* '05년 생산량(전망치) : 3,315만석, 유통량(전망치) : 2,410만석(생산량의 72.7%)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에 실질적 발생 여부

- ◆ 미곡종합처리장 경영안정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벼 매입 능력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
- ◆ 소비촉진 홍보효과는 가시적인 성과과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

- RPC의 수확기 벼 매입물량은 쌀 수급여건, 가격불안 등 심리적 요인, RPC 경영 상태 등 여러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침
 -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 물량(400만석)이외에 100만석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민간유통의 활성화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
 - RPC 경우, 건조저장 시설이 확충되고, 벼 매입실적을 고려하여 운영자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올해 벼 매입량은 당초 계획량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쌀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

마. 쌀 전업농육성 및 생산기반 확충

<총 평>

-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의 규모화를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젊고 유능한 쌀 전업농의 농촌 정착 유도 추진
 - 영농규모화 및 경영이양직불사업을 통한 2010년까지 호당 6ha 규모의 7만호를 육성하여 예상 벼 재배면적의 50%인 430천ha를 담당,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주체로 육성 추진
- 배수개선·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영농생산성 제고 및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
 - 상습 침수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배수개선답률을 68.9% 달성
 - 저수지·관정 등 용수원 개발을 통해 수리답률은 78.1% 달성

☞ 배수개선답률 : 상습침수 저지대 농경지 등 배수개선 대상 총면적중 배수개선 사업시행 면적비율 = 배수개선실적 누계/총대상면적(188천ha) × 100
☞ 수리답률 : 수리시설(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에서의 농업용수 공급혜택을 받는 면적에 당년도 용수개발 준공면적(신규면적)을 합산하여 전체 논면적('03년도 기준)에 대한 비율로 산정 = (수리답면적/전체논면적) × 100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통해 장기적인 **식량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공급** 도모
-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은 적당한 대체작목이 없어 **고령농의 경영이양**이 미흡한 만큼 영농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강화가 필요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당초 올해안에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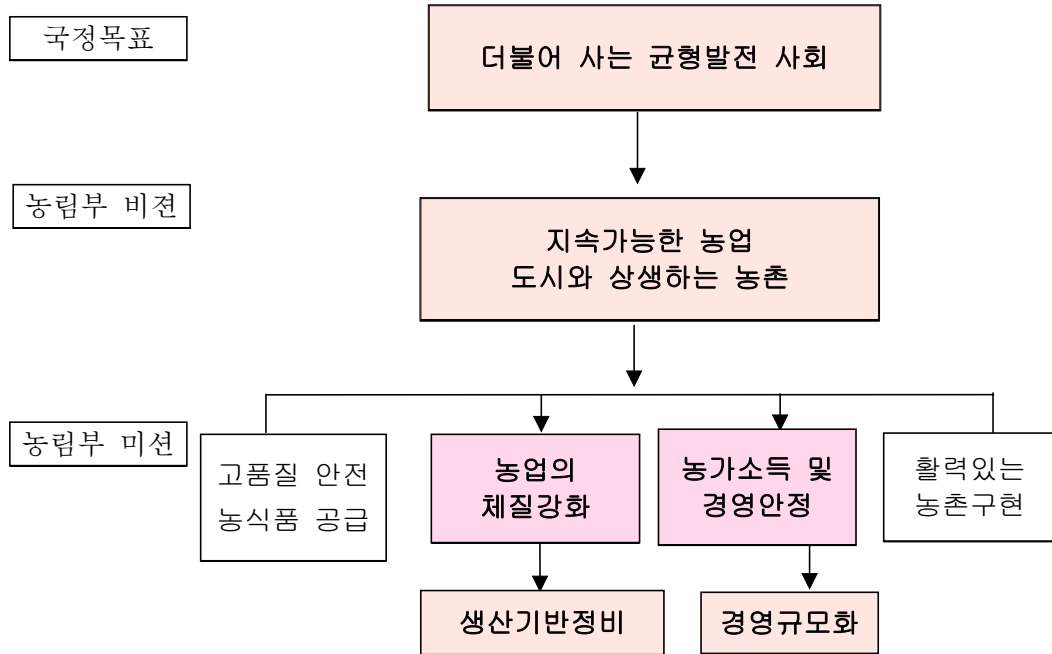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 대응성

- ◆ 쌀전업농 육성 및 생산기반확충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
- ◆ 쌀협상·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쌀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쌀 전업농 육성 및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

- 쌀전업농 육성 및 생산기반 확충은 “**더불어사는 균형발전 사회**”이라는 국정목표 수행에 기여하고, 농림부의 비전 중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의 미션중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부합

《정책목표 구조》



- DDA·쌀 협상에 따른 개방 폭 확대 등으로 쌀 가격 하락 전망, 1ha 수준의 영세소농 생산구조, 농업인의 고령화, 식량자급률의 저하 등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영농규모화와 생산기반 조성,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이 필요
- DDA·쌀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폭 확대와 공급과잉구조의 지속으로 쌀가격의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영농규모화 필요
- UR 타결 이후 지속적인 투자로 영농규모화가 일부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영세소농의 생산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 평균 벼 재배면적 : ('90) 0.82 ha → ('95) 0.88 → ('03) 1.06
-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기반 조성·기계화 지속 추진 필요
 - * 경영주가 60세 이상 농가 비중 : ('90) 31.3% → ('95) 42.3 → ('04) 59.2

-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입개방 확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육류소비 증가 등으로 식량자급률은 지속 하락

* 곡물자급률 : ('90) 43.1% → ('95) 29.1 → ('03) 26.9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기회(O)	위협(T)
		○정책적 지원 확대	○시장개방 확대 ○공급과잉인 수급상황
강점·약점 분석			
강점 (S)	○농업인의 규모화 의지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투자확대를 통한 영농규모화 사업 확대	○농지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규모화 유도
	○영세소농구조 ○농업인의 고령화 ○높은 생산비 ○낮은 식량자급률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영농규모화 추진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생산기반 조성 및 기계화 지속 추진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영농규모화와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전업농 농지점유비·배수개선답률·수리답률 등 **계량화된 지표**를 제시

- 쌀값 하락시에도 쌀농가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10년** 쌀 전업농이 전체 **쌀생산의 50%**를 담당토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 (6ha수준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 정예 쌀 전업농 7만호를 선정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젊고 유능한 2~6ha 규모의 농가에 중점적으로 집중지원
 - '05년에는 규모화사업을 통해 11,505ha를 지원하여 전업농의 농지점유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제시

- 생산기반 정비중 **배수개선**은 총 대상면적 **188천ha**를 1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05년에는 **68.6%** 달성을 성과지표로 제시
 - 용수개발은 수리답률 78.1%로 제고를 05년 성과목표로 제시
- 장기적인 식량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목표로 제시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 쌀 전업농의 농지점유비	경영면적 30% (297ha)	분기별 사업실적을 활용(농업기반공사)	25% (255ha)
○ 배수개선담 및 수리담 비율	배수개선답률 68.6%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활용(농업기반공사)	'02~'04 : 65.0%
	수리답률 78.1%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활용(농업기반공사)	'04년 76.7%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직·제도·예산** 등의 수단을 충실히 마련

<조직측면>

- 영농규모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 지사(93개)에 **영농규모화사업 전담팀** 운영
- 농업인단체와 함께 지역별로 쌀산업의 선도체로서 **쌀 전업농 협의체** 자율 구성 유도
-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05.4)

<제도측면>

- □□지역별·지대별 쌀 전업농 육성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05.6~12)
- 개방 확대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쌀 전업농 육성 추진을 위하여 **쌀 전업농육성 종합대책** 수립 ('04.7, '05.1)
- 기존 전업농 중 1.5ha이상 농가(61천호)와 2ha이상 일반농가(36천호)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가 위주로 7만호 **육성후보군 조성** 관리
- 논에 원예작물 재배추세를 감안하여 **배수개선 설계기준** 마련('05.10.19)

<예산측면>

-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05년도에 11.5천ha에 대해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4,769억원 확보
-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배수개선**을 위해 '05년에 **2,165억원**(31천ha), **용수개발**을 위해 **3,744억원**을 확보

②-4.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의 이행 여부

◆ 농업인,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쌀전업농 육성대책 및 영농규모화 사업** 관련 의견수렴 추진
 - 전업농육성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05.1)
 - 농진청·자치단체·기반공사 담당자 연찬회 개최 ('05.2)
 - 농업인(2천명)을 대상으로 영농규모화 확대관련 설문조사 ('05.3)
 - 전업농·농민단체·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및 여론수렴 ('05.5)
- **배수개선** 시행계획 수립전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동의등 **여론수렴을 제도화**(농어촌정비법 제10조)하여 이행
- 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학계 등의 전문가(27명)가 참여하는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4회)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방향, 추진계획 논의

-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9.9)하여 축산·조사료 부문 생산전망, 생산목표, 정책대안 등 검토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쌀 전업농 육성·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타기관과 관련성이 크지 않음

- 쌀 전업농 육성·쌀 생산기반 정비는 **농림부의 고유업무**로서 타 부처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
-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방향의 변경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영농규모화 사업의 **이자율 인하**를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06년부터 인하(3%→2%)하기로 결정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이 당초 계획(12월)보다 **늦어질 우려**

- 영농규모화 사업은 11. 17까지 목표(11,500ha) 대비 94%인 11,200ha를 지원하였으며, 전업농의 농지점유비중은 29.4%
 -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선도조직체** 구성 및 전업농 교육 실시
 - * 시군별 선도 조직체 구성 180개소, 전업농 611명 교육 실시
- 쌀전업농에 대한 **자연재해 지원** 상한 폐지('06년 시행)
 - 간접보상 상한(현행 5ha) 폐지, 직접보상 상한(현행 2ha) 폐지
- 안전영농을 위한 배수개선·**농촌용수개발** 추진
 - 10월말 현재 용수개발 112지구 53천ha(준공 10천ha)의 90% 완료
 - 10월말 현재 배수개선 109지구 31천ha(준공 1.4천ha)의 87% 완료

-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추진
 -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4단계 작업중 2단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3단계와 4단계 추진중
 - * 제1단계 : 적정 소비모형 구축, 제2단계 : 목표 생산량 시나리오 설정, 제3단계 : 국민여론 수렴, 제4단계 : 목표치(안) 확정 및 정책 추진전략 수립
 - 3단계 작업 여론수렴 및 4단계 목표치 설정은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 후 확정(12월)할 계획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 영농규모화자금 지원 및 생산기반 정비	정 상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지연우려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영농규모화사업과 생산기반확충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추진 및 제도 개선, 현지점검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 농가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2~6ha 규모의 농가**에 집중 지원
 - 집중지원 비율 : 실시전('01) 19.9% → 집중지원후('05) 71.4%
- 쌀 전업농의 경영부실 예방 및 경영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반 공사가 **지원전 경영진단** 실시('05:5,528농가)한 후 지원
- 과잉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가격 상한 설정** 및 **자부담 제도** 실시
 - 지원상한 : 27천원/평 지원, 자부담율 : 지원상한 범위 내에서 10%
- 전산자료 검색, 기반공사의 지역담당자 지정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매, 타직업 종사 등에 관해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시정대상 : 1.94%)
- 규모화 사업 및 예산 집행실태 점검을 위한 **담당자 현지 출장** 실시 ('05:2회)

- 생산기반확충은 분기별 공정관리(공사진도 등) 및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사업추진의 지연을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지역순회토론회('04.8-9)시 건의사항을 '05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젊은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선정 대상농가 자격요건 완화
 - 2ha 이상 농가에서 1.5ha이상으로 1회지원시 2ha가 되는 농가 포함
 - 농지임대차 지원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
- 전업농의 요구를 반영, 상반기 자금집행 계획 조정 · 이자율 인하 추진
 - * 자금집행계획 : (당초) 3,344억원 (70%) → (변경) 4,192억원 (88%)
 - * 이자율 : (종전) 3% → (변경) 2%
- 최근 쌀 공급과잉 등으로 논에 원예작물 재배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배수개선 설계기준 마련('05.10.19)

④-9. 국민 ·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쌀전업농 육성은 사업의 특성상 농업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
◆ 식량자금을 목표치 설정은 12월 자금을 목표치 확정된 후 실시

- 쌀 전업농 선정 · 육성, 영농규모화사업 지원 관련 홍보추진
 - TV ·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744회), 리플릿 제작 배부 (90천부), 현수막(102개) 제작 게시 ('05.9)

- 농업인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확대 실시
 - * 모니터링 웹사이트 구축, 쌀 전업농 위주(2,185명) 모니터링 실시 (4회)
- **쌀전업농 포털시스템(www.pro-farmer.or.kr)**을 구축하여 종합 정보 제공 등 대 농민 홍보·서비스 수준 향상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전업농조직,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쌀 전업농 육성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회** 개최 ('04.5·6)
 - 사업시행부서 및 정책부서, 관련기관간의 육성방안 토론회 개최(2회)
- **농림부**는 사업의 총괄·기획기능을 담당하고, **농업기반공사**는 사업 대상자 선정·자금지원·사후관리를 추진
 - 전업농조직은 자율적인 선도조직체를 구성하고 자체교육을 실시

⑤ 목표의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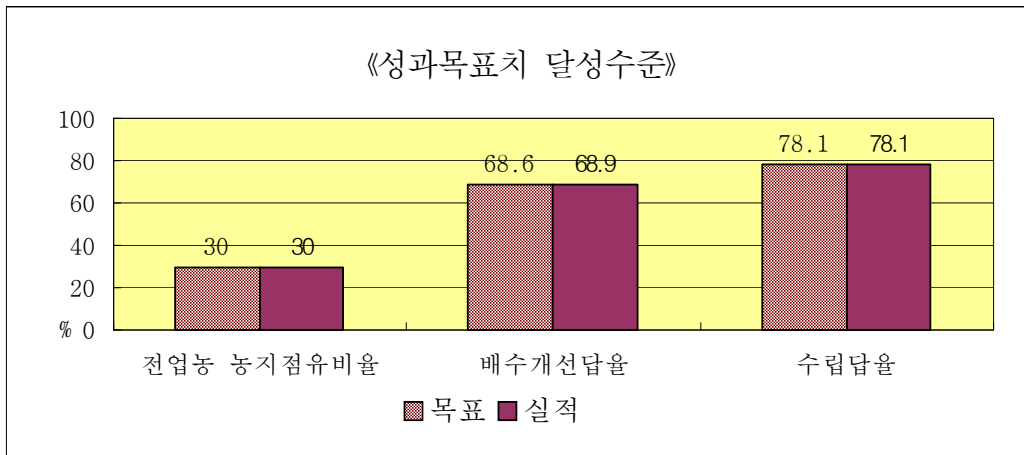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우려가 있음

- **쌀 전업농의 농지점유비** 30%달성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이며, 10월말 현재 실적은 **29.7%**(290천ha)임
- **배수개선답울 및 수리답울**은 목표치를 **100%** 달성
-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은 현재 식량자급률자문위원회에서 논의중이며, 12월말까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주요곡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농림부안)를 설정할 계획임.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쌀 전업농 농지점유비	30% (297천ha)	- (10월말 기준) 29.7%(290천ha) - (12월말 예측치) 30.0%	100%
○ 배수개선답 및 수리답 비율	배수개선답율 68.6% 수리답율 78.1%	- 배수개선답율 68.9% - 수리답율 78.1%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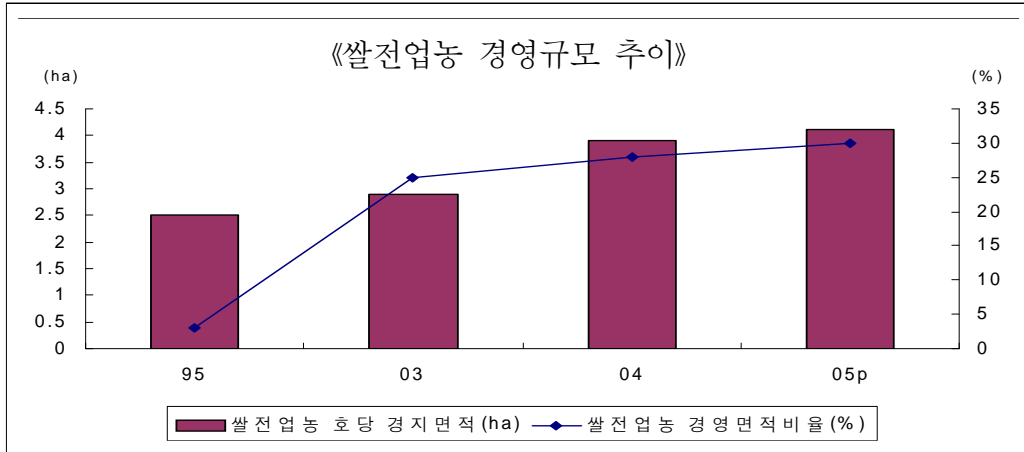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 쌀전업농육성사업으로 전업농의 영농규모 및 평균소득 증가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남
-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설정단계로 영향판단은 이른 단계임

- 영농규모화 사업으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크게 증가
 - * 경영면적 : ('95) 35천ha(전체의 3%) → ('05.10) 290천ha (29.7%)
 - * 쌀 전업농 호당 경지면적 : ('95) 2.5ha → ('05.10) 4.1ha (증 1.6ha)



- 규모 확대에 따라 도시근로자 소득과 대등한 수준의 소득 실현
 - 전체 쌀전업농 소득('04) : 3,718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3,736만원)
 - * 지원받은 쌀 전업농 : 4,613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123% 수준)
-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사업추진으로 안전영농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 배수개선답률 : ('95) 45.1 → ('00) 53.7 → ('03) 67.2 → ('05) 70.5(P)
 - * 수리답률 : ('95) 75 → ('00) 77 → ('03) 78 → ('05) 78.1(P)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의 경우 단기적으로 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의 안정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II. 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1. 총괄

가. 잘된 점

- 인력육성을 위한 3개 시범사업을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업인교육에 바우처제도를 시범도입하여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전환
- 한국농업전문학교 교명변경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교육부와 협의중
- 농작물재해보험에 국가재보험 및 재보험기금 설치, 가축공제대상에 평, 매추리를 추가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장치를 강화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농협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부실조합 합병 등으로 일선조합의 재무건전화 및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
- '06년도 농지은행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폭 넓은 토론 개진 등을 통해 원활히 마련
-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역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농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기여

나. 미흡한 점

- 쌀생산조정제 연장 여부, 경영이양직불제 단가 인상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장기 직불제 추진계획 수립 지연
- 농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경제사업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관련 일부 사업단은 현재 지방의회 일정 등으로 지방비가 미편성 되고 있음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 초 계 획	추진 실적
<p>1. 전문농업경영체 육성</p> <p><input type="checkbox"/> 다양하고 체계적인 창업농 정착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정착자금 지원 규모 확대 ○ 젊은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 도입 <p><input type="checkbox"/>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생 보수교육 강화, 교명변경 등 위상제고 추진 ○ 직업훈련과정 별도 신설('06년) <p><input type="checkbox"/> 농업인 교육체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제도 시범 도입 등 <p><input type="checkbox"/> 정책자금 취급기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수요가 많은 자금 우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농 정착지원 규모 상한 확대(완료) : 1억원 →1억2천만원 ○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3개 시범사업 (사업계획량 각 100명) 도입·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창업연수(104명), 창업농후견인제(108명), 농업인턴제(113명) ○ 졸업생 영농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체 육성지원(8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명변경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교육부와 협의) ○ '06년 직업훈련과정 도입을 목표로 예산(4억원) 반영 ○ 친환경농업과정, 정보화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바우처제도 도입 ○ 농고·농대생에 대한 우수농업인 사례 전파를 위한 교육 지원(40백만원) ○ 농업교육체계 개편(안) 수립(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안) 부내 협의 및 의견수렴 중 ○ 선진국의 정책자금 관리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농림어업금융공고□□의 정책자금 관리자료 수집·분석 ○ 취급은행 확대방안(시안) 작성 및 의견수렴(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단체(업계) 및 시중은행 등 * 현재 촉발기금 3개 사업(691억원) 개방, 향후 개방 대상사업 추가 확대 검토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농업종합자금 방식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구입자금 등을 종합자금방식으로 전환 ○ 정책자금 취급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p>□ 농업경영체 활성화 및 벤처농업 지원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컨설팅 지원 확대 ○ 농업법인 회계처리기준 마련 ○ 창업보육센터 신설 및 운영비 지원 ○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개최 ○ 농업경영CEO협의회 설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구입자금, 우량종자개발사업자금을 종합자금에 통합 완료 ○ 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 지도 감독을 위한 검사인력 5명 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3.21 선발, '05.4.1 임용 ○ 정책자금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계획 수립(1월) ○ 민간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확대 : (추가) RPC, APC, 쌀전업농 - 국고지원 확대:('04년) 30% → ('05년) 50% (자부담 30%) - 사업예산 확대:('04년) 20억원 → ('05년) 40억원 ○ 농업회계 기준 표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4월), 연구용역(6월) 실시 ○ 창업보육센터 신설 사업자 공모(6월), 선정(9월) 및 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1.5억원) ○ 창업경연대회 개최(12월중 포상 시상) ○ CEO 협의회 설립을 위한 기초 조사 실시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농업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생산 중소기업 지원 ○ 기술개발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생산 지원대상 22개 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 15개 업체(156억원) ○ 농림기술개발 신규 181과제 선정 및 331개 계속과제 평가 실시
<p>2.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p> <p>□ 중장기 직불제 추진계획을 마련, 추진체계 재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중 중장기 직접직불제 추진 계획 마련 <p>□ 다양한 직접직불제 본격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경관보전직불제, 조 건불리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축산직불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농가 확대 및 홍보(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및 중점 고려사항을 설정하고, 현 직불제(8종) 및 향후 도입할 직불제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의 기본대강을 마련 ○ 직불제정책협의회(전문가협의회)개최 및 의견수렴(3월) ○ 직불제전문가위원회(7월) 및 워크샵(8월) 개최 ○ 친환경축산직불제 홍보 및 시범사업 평가결과 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축산직불제 우수농가 100인 사례집 발간(3천부)·배부(1.20) ○ 직불제 참여 농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512호(34억)→('05.10) 653호(48억)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공무원 교육 및 홍보추진 후 협약 체결, 시범사업 실시 ○ 조건불리직불제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읍·면지역의 경지경사도 측정사업 실시 □ 국가재해보험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및 품목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 ○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운용 □ 가축공제 대상 가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돼지, 닭, 오리, 말에서 꿩, 메추리를 추가하여 공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교육('05.3)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05.4), 대상지역 신청 및 선정('05.6) ○ 협약체결 및 시범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470ha에 유채·메밀 등 식재관리 ○ 경지경사도 조사 약 1,000개 읍면 완료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04.11~'05.4)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05.5.13) ○ 손해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손해평가요령개정('05.5.24) ○ 국가재보험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제2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 발족('05.3.18) ○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재보험약정 체결('05.5.16) ○ 수도권 시범사업 등 연구용역(6월) ○ 농작물재해보험기금운용규정 제정(6월) ○ 자산운용지침 제정 및 운용(7월) ○ 가축공제 대상가축 확대실시(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돼지, 닭, 오리, 말 → 꿩, 메추리 추가 ○ 축사 전기안전 무료점검 서비스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농가('05.5월~11월) ○ 홍보리후렛 배부(3월) 및 언론홍보(6회) ○ 축산농가 무료검진사업 실시(200농가) ○ 대상가축 및 공제범위 확대 등을 위한 연구용역 (05.5 ~06.2월)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3. 농업협동조합 개혁</p> <p><input type="checkbox"/> 농협법개정에 이은 하위법령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월) ○ 조합 정관례 등 관련규정 정비 <p><input type="checkbox"/>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마련(하반기) <p><input type="checkbox"/> 농협구조조정 지속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합병을 통한 경쟁력제고 및 부실조합 구조개선 추진 <p><input type="checkbox"/> 농협중앙회 신·경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내 신·경분리위원회 구성(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6월)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회계처리기준, 농협공제사업감독감독기준, 농협 재무기준 제·개정 완료(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개정안에 우리부 조세감면 의견 반영(재경부, 행자부) ○ 건교부에 법인의 국민채권 매입면제 요청(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조합 합병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합병지원 ○ 합병완료 11개, 합병의결 48개 등 59개 조합 합병(1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자본금, 자본금 확충 등 검토 ○ 신·경분리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신·경분리 로드맵 초안마련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5.5~'06.4)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4. 농지은행제도 도입</p> <p>□ 관련법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은행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p>□ 세부시행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임대수탁사업 세부시행지침 수립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세부 시행지침 수립 <p>□ 농지포탈사이트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 및 임대차, 시세정보 등을 제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개정안 국회통과('05.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중(10.24~11.13)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국회 상임위 회부('05.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중 본회의 통과목표로 추진중 ○ 농지은행사업 세부 시행방안수립을 위한 T/F 확대 개편 ('05.1) ○ 사업별 주요쟁점에 관한 전문가협의회 개최 ('05.5) ○ 농지은행시행지침(안) 워크샵 개최 ('05.6) ○ 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지침 작성 및 시달('05.09) ○ 농지은행사업 홍보리후렛 10만부 배부 ('05.9)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세부 운영 방안 마련 ('05.11월중 확정) ○ 농지포탈사이트 워크샵 개최('05.4)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정보제공('05.7) ○ □□농지은행포탈시스템□□정식 운영 ('05.10) ○ 농어촌종합정보 포탈사이트 운영('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거래 및 농지가격 정보 외에 농촌주택, 귀농, 농촌관광 등의 정보도 종합 제공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5.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p> <p>□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사업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추진지침 작성 ○ 농산업클러스터 선정절차 마련 ○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구성 ○ 시범사업 심사 및 선정 ○ '05선정사업 시달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05 국고보조금 배정 ○ 20개 사업단 및 정책 홍보 ○ 워크숍 및 사업추진 중간점검 ○ 현장 애로해결 및 행정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방안 수립 보고 : '05.1.4 ○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지침 마련 시달 : '05.1.18 ○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시행지침 보완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자료 시달 : '05.2.4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구성(15명) 운영 : '05.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1차 회의 : '05.4.25 ○ 시범사업 심사 : 사업부서 심사, 서면심사, 현지심사,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심사 ○ 지방농정과장협의회 : '05.4.21 ○ 중앙농정심의회 보고 : '05.5.9 ○ 시범사업단 20개소 선정 : '05.5.9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선정결과 통보 : '05.5.9 ○ 선정결과 보도 : '05.5.9 ○ 시범사업단 '05사업비 배정 : '05.6.1 ○ 사업단별 세부사업계획 협의·조정 : '05.7월중 ○ 세부사업계획 협의·조정 결과 통보 : '05.8.5 ○ '05 국고보조금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9.27(23억원), 10.26(50억원) ○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 '05.10.5~9, 대구 EXCO ○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 워크숍 개최 : '05.9.13~14 ○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점검회의 : '05.10.25 ○ 현장 애로해결 및 행정지도 : 수시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총 평>

- 창업농 육성 등 신규인력 유입대책 추진, 농업교육체계 개선, 농업정책 금융 지원 및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의 기본 토대 마련**
 - 창업농의 **영농정착자금 지원규모 확대**(1억원→1억2천만원) 및 대학생 창업연수, 창업농후견인제, 농업인턴제 등 젊은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신규사업 도입·추진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및 연구모임체 육성 지원 등을 통한 농업인력육성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등 농업인 교육체계 개선
 -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 확대, 농업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정책자금의 이용편의 도모**
 - 민간컨설팅 지원 확대, 벤처농업 지원 등을 통한 농업경영체 활성화에 주력
- 농업관련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나
 - 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한 대출과 한국농업전문학교의 명칭변경은 교육부와의 이견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

- ☞ **창업농후견인제**란 창업농의 초기 영농정착시의 문제해결 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분의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
- ☞ **농업인턴제**란 32세 미만의 잠재농업인력을 대상으로 선도농가 실무연수 지원을 통해 영농정착 동기부여와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
- ☞ **바우처제도**란 직업훈련 대상자에게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인 바우처를 지급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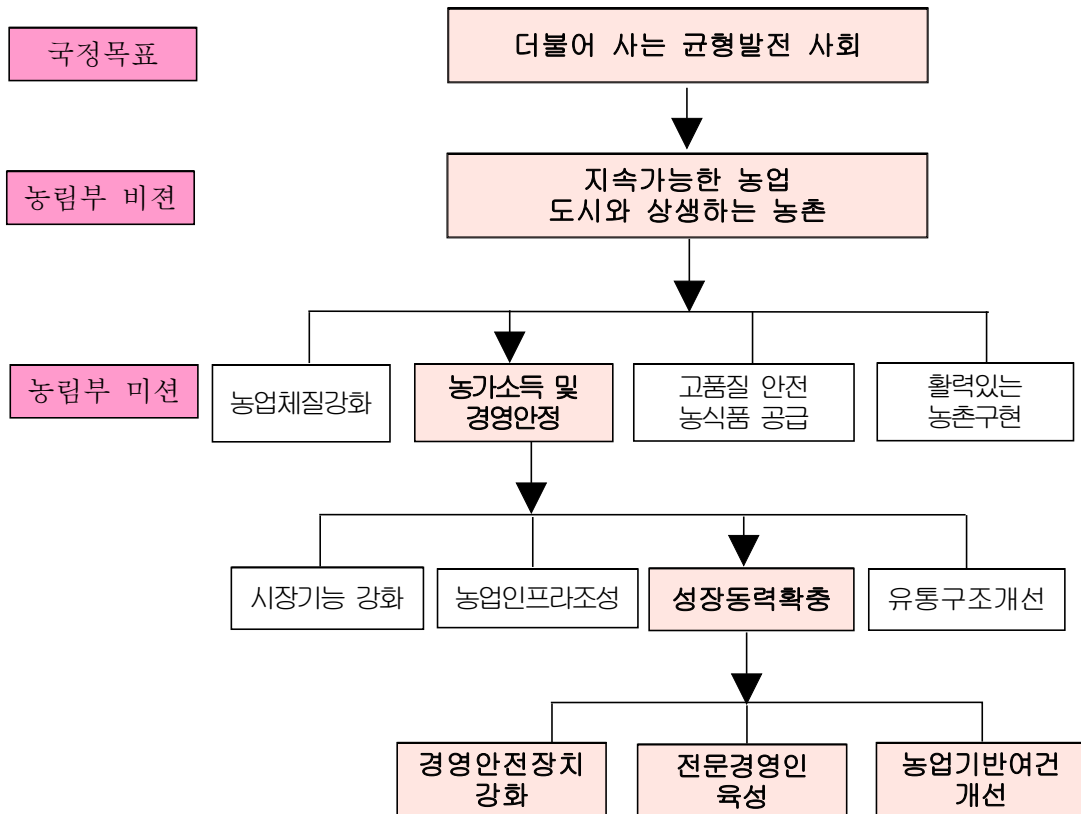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고령농가 비중 확대, FTA, DDA, 쌀협상 등 개방 가속화 및 가격·소득불안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필요

○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농업의 체질 강화 등 상위 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개방가속화에 따라 농가의 경영에 대한 위험요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보호정책은 제한됨에 따라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확보,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강화 필요
 - 창업농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취급기관 확대, 농업종합자금 방식 확대 등 농업정책자금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 창업농 정착지원 규모 상한 확대 : 1억원 → 1억 2천만원
 - 바우처 제도 시범도입, '06년 직업훈련과정 도입 등 농업인 교육체계를 여건변화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농가의 경영능력향상 및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 지원 강화 등 경영체 활성화 대책 필요
 - * 지원대상 확대 : RPC, APC, 쌀전업농 지원대상에 포함
 - * 국고지원 확대 : ('04년) 30% → ('05년) 50%
 - * 사업예산 확대 : ('04년) 20억원 → ('05년) 40억원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 전문농업경영인육성 공감대 형성	○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 농산물개방 가속화
강점(S)	○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개발중	○ 영농정착자금 지원 확대 ○ 농업지원자금 방식 확대	○ 젊은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시범사업 도입 ○ 농업인 교육체계 개선
약점(W)	○ 영세화, 전문화 미흡 등 구조적 취약성	○ 농업경영체 활성화 ○ 민간컨설팅 지원확대	○ 수요자 중심의 품목별 전문 교육 강화 ○ 벤처농업 활성화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은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전문경영체의 확충**이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지표 제시

- 우수한 젊은 인력유입, 기존 농업인의 교육·경영혁신 지원, 농업금융지원 및 농업경영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은 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의 체질강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은 젊은 창업농의 유입·정착,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체로 성숙·발전 등의 발전단계를 거치게 됨으로, **창업농의 정착 정도와 전문농업경영체의 비중**을 성과지표로 제시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창업농 영농정착율	84%	시도의 실적보고	('04년) 84%
전문농업경영체 농업 생산 비중	쌀전업농 30%	농업기반공사의 실적보고	25%
	축산전업농 71%	가축통계자료	67%
	과수전업농 41%	농업기반공사의 실적보고	40%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경쟁력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직, 제도 및 예산측면의 다각적이고 충실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조직측면>

-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검사인력 5명** 충원
- **농업경영CEO협의회** 설립을 위한 기초 조사 실시 및 **표준회계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 한농전 졸업생의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체** 육성 지원

<제도측면>

- 신규인력 유입을 위하여 **3개 신규인력 유입 프로그램** 신설
- 농업전문교육기관의 기능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 창업보육센터 신설, 창업경연대회 개최 등 **벤처농업 활성화**
- **민간컨설팅 지원 확대**, 농업법인 회계처리기준 마련 등을 통한 농업 경영체 활성화

<예산 및 자금 측면>

- **농업종합자금 지원방식 확대** 등 농업정책자금의 대출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 **영농정착자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04년 : 1억원→'05년 : 1억2천만원)
- 농업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원료구매 및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컨설팅 지원 예산** 확대('04년 : 20억원→'05년 : 40억원)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농업인, 관련기관·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시·도 공무원 등 업무 관련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전문농업인력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안) 의견 수렴**
 - 시·도 전문가 토론회 : '04.12.8~10(3일간), 4개도 70명

- 시·도 인력육성 업무담당자 합동토론회 : '04.12.16~17, 183명
- 전문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4.12월)
- **농업인 교육체계 개편**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농고(7.1, 7.19), 품목단체(6.28, 10.12), 일반 농업인단체(7.8, 10.20), 농과대(6.23, 10.26), 지자체(11.10) 등
- 정책자금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3회)
- 농업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4월) 및 **연구용역** 추진(6월~12월)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농림부 고유 업무**이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T/F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의 추진

- 정책방향 및 예산,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지자체, 대학 및 관련부처와 정책방향 조율**('04.11월~12월, '05년 10월~11월)
- 농업회계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T/F**(농과대 교수, 농협, 농진청, 회계사 등) 구성(6월) 운영
-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추진 중(8월~)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다만 한국농업전문학교 교명 변경은 다소 부진

- **인력유입을 위한 창업농 정착지원 단가 상향 조정** 및 3개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중**
 - 창업농 정착자금 지원단가를 종전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1월)
 - 창업농 대상자 1,050명 선정(2월), 940명 기본교육완료(9월)

- 시범사업(계획 각 100명) : 대학생창업연수 104명, 후견인제 108명, 농업인턴제 113명 참여중
- 바우처제도 도입, 우수농업인 사례 전과 교육 및 농업교육체계 개편 (안) 마련 등 **농업인 교육체계 개선 추진중**
 - 친환경농업과정과 정보화교육과정 대상으로 바우처제도 도입
 - 우수농업인 사례 교육지원(40백만원), 농업교육체계 개편안 마련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중
- 농업종합자금 지원방식 확대 및 정책자금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사례 분석 등 **자금지원 활성화 추진**
- 민간컨설팅 지원확대, 농업회계기준 마련 및 농업벤처 지원 등 **농업 경영체 활성화도 계획대로 추진중**
 -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RPC, APC, 쌀전업농 추가), 국고지원 비율 확대(30%→50%) 및 사업예산 확대(20억→40억)
 - 농업회계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4월), 연구용역(6월) 실시 중
 - 벤처농업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설립 사업자 공모(6월) 및 선정(9월), 창업경연대회 추진(10월)
- 농업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지원도** 계획대로 추진중
 - 농기계생산 지원대상 22개 업체 선정 및 15개 업체에 156억원 지원중
 - 농림기술개발 신규 181과제 선정 및 331개 계속과제 평가 실시
- 다만, **한국농업전문학교 교명 변경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교육부 협의 결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기로 방향 설정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신규인력 유입촉진	정 상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일부 지연
농업인교육체계 개편	정 상
정책자금 취급기관 확대	정 상
농업종합자금 지원방식 확대	정 상
농업경영체활성화 및 벤처농업지원체계 구축	정 상
농업관련 중소기업 지원	정 상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현지 출장 점검, 신규사업은 본사업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후계농업인 사업점검을 통해 사업자금 불용 방지를 위한 적격사업자 선정 실무위원회 구성 등 **사업개선방안 마련**(11월)
 - * 현장점검 : 7.19~21일, 4개팀, 5개 시·도(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 신규인력유입을 위한 **3개 신규사업**은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검증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량을 각각 100명으로 최소화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창업농의 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현지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농지구입지원단가 상향조정, 적격사업자 선정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금리인하 추진 등의 사업개선 방안 마련
 - * T/F 구성(3개반 8명) : 협동조합과, 경영인력과, 농협, 농신보, 농업인 단체
 - * 현장점검 : 7.19~21일, 4개팀, 5개 시·도(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 신규인력유입을 위해 도입한 **농업인턴제, 창업농후견인제**의 사업 신청자 저조 등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7월)
 - 사업시행주체인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소 약정기간 조정, 사업 신청자격 완화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확보 성과
- 금년도에 도입한 **3개 시범사업의 사업 성과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현장점검을 거쳐 '06년도 사업개선방안 마련 중
 - * 설문조사(9.30~10.10) : 농업인턴제, 대학생창업연수, 창업농후견인제
 - * 현장점검 : (시도 자체) 9.30~10.26, (농림부 합동) 10.19~20, 25~26일 2개팀
 - * 주요 제기내용 : 사업기간 조정, 사업후 추가지원 방안 마련 등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사업 준비 및 시행과정에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홍보방식도** 토론회, 설명회, 워크샵, 설명자료 배포 등 **다양하게 추진**

- 사업추진 전단계에 농업인, 관계기관, 외부전문가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및 **사전홍보 실시**(~'04.12)
-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농림부 홈페이지에 사업시행지침 및 별도 설명자료 게시
 - 사업신청 접수, 선정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보도자료 배포
 - 문답자료집을 작성 배포 및 농업관련 전문지에 게재
- 인력육성 정책의 집행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홍보 추진**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및 지역의 농업인 주최 토론회·협의회와 한국 농업교육학회 등 관련 전문가 모임 등
- 농업인교육체계 개편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워크샵 개최**
 - 농고(7.1, 7.19), 품목단체(6.28, 10.12), 일반 농업인단체(7.8, 10.20), 농과대(6.23, 10.26), 지자체(11.10) 등
- 정책자금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3회)
- 농업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4월) 및 연구용역 추진(6월~12월)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기획예산처, 지자체** 등과 예산과 정책에 대하여 **긴밀 협의**
 - 합동점검, 협의회, 워크샵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협조체제 구축
-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재정경제부** 등과도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추진
- 농고 현장체험 교육 지원에 관한 **T/F**(교육부, 교육청, 농고) 운영

- 농업인 단체의 인력육성관련 **정책토론회 행사** 등에 적극 참여
 - 후계농 대출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시 관련 단체도 포함
- 농업회계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T/F**(농협, 농진청, 회계사 등) 구성
- 농업벤처육성을 위해 관련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농업벤처창업 경연대회 협력 추진

⑤ 목표의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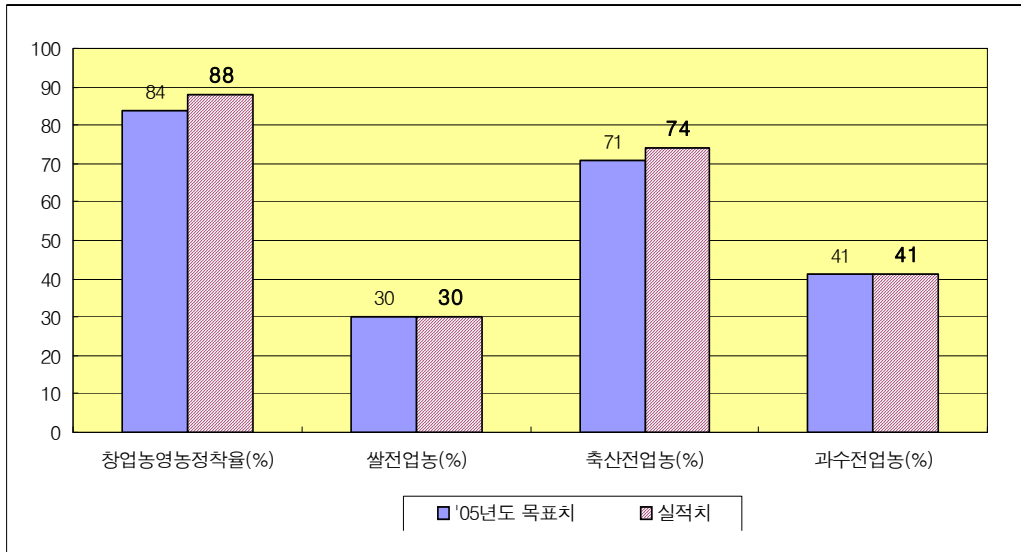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 (달성도 100%)

- 창업농 영농정착률(추정)은 88%로 목표를 초과 달성
- 전문경영체의 생산비중도 쌀 100%, 축산 103%, 과수 100% 달성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 달성도
○ 창업농 영농정착률(%)	84	88(추정)	100%
○ 전문농업경영체 농업생산비중	- 쌀전업농 : 30% - 축산전업농 : 71% - 과수전업농 : 41%	- 쌀전업농 : 30% - 축산전업농 : 74% - 과수전업농 : 41%	100% 103%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와 실질적 발생 여부

- ◆ 창업농 육성 등 신규인력 유입대책 추진, 농업교육체계 개선, 농업정책금융 지원 및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의 체계 마련**
- ◆ 전업농 생산비중 확대 등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

-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에 따라 품목별 전업농의 생산비중 증가 등 성과가 가시화**
 - 창업농의 영농정착자금 지원규모 확대,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3개 신규 인력유입 프로그램 마련
 -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체계 개편
 -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 확대 등 정책자금의 이용편의 증대
 - 민간컨설팅 지원 확대, 벤처농업 지원 확대
- 아울러, 가시적 성과는 현시점보다 **일정기간이 소요된 후 점차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창업농 정착율**은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는 익년도 이후 점차 개선될 전망

- 특히, 워크샵, 토론회 등의 개최로 농업분야의 잠재인력인 농고·농대생, 농업인, 전문지 및 교육기관 등에서도 인력육성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의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점차 긍정적인 성과가 예상됨

나.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

<총 평>

- 참여정부의 중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진행
 -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농가피해의 최소화, 농가소득 안정망 강화로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필요
 -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입법화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조성
- 친환경축산, 경관보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 시행 및 중장기 대책마련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 쌀 조정직불제 폐지여부, 경영이양직불제의 사업재설계 논란 등 세부계획은 확정되지 못함.
- 국가재보험제 도입에 따른 품목확대, 가축공제대상 가축확대 등 경영안정장치 확대·시행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소방방제청의 풍수해 보험도입과 관련하여 보험대상, 시범사업 실시방안 등 협의 필요
- 그러나 농가소득중 직불제 비중이 3%수준으로 아직 낮고, 재해보험과 가축공제 가입율이 낮아 농가의 경영안정에는 미흡한 수준

☞ 직불제는 정부가 시장과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 보조를 하는 제도

☞ 국가재보험제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민영보험사가 인수하지 못하는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인수하는 제도

☞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민영보험사가 보험화하지 못하는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원리를 이용 보전해 주는 보험제도 (WTO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수단(green box)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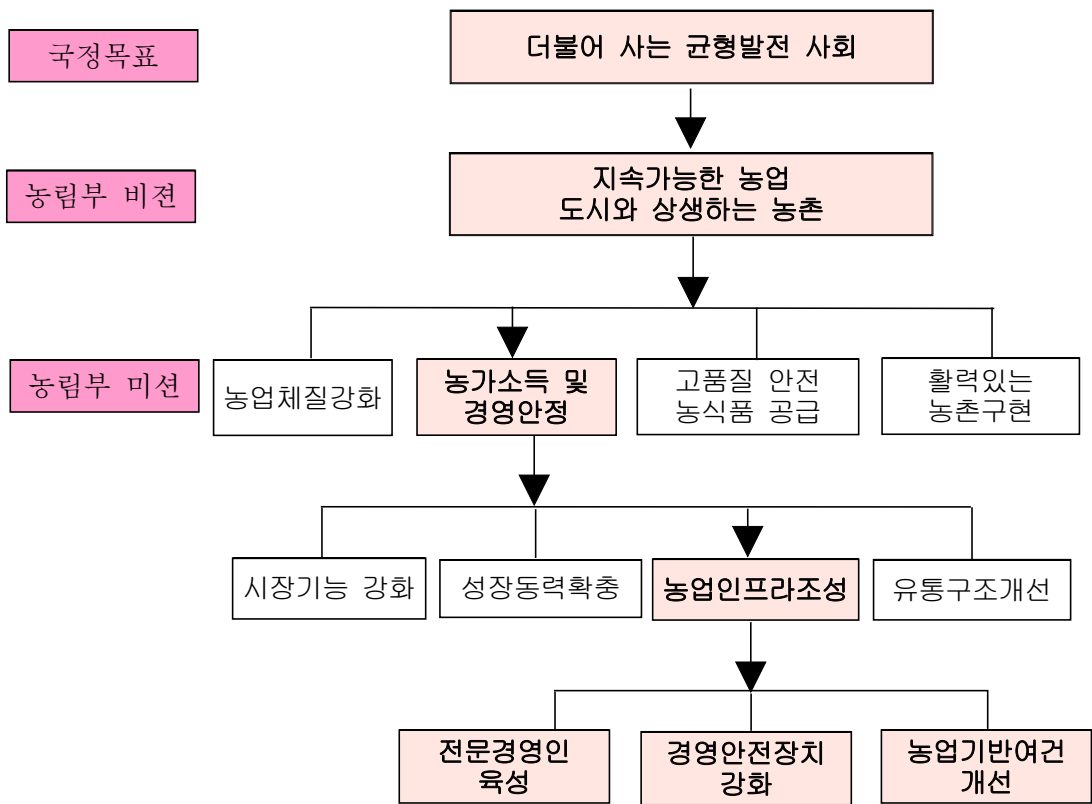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저가 농산물과의 경쟁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책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 국정목표중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 농림부 미션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등 상위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 방지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저가 농산물과의 경쟁 등 어려운 농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
- 각종 직불제는 **WTO농업협정에 합당하도록 운영**하되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할 필요
 - *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 (최근 3년)1.8%→('05)3.0%
 - * 직불 투융자 비중 : ('04)10.8%→('05)12.6%
- 농가소득의 보전 및 안정경영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공제** 가입을 확대가 절대 필요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중장기 직불제 시행계획**의 조속 수립 및 추진이 필요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기회(O)	위협(T)
		강점·약점 분석	○농촌유지 및 농업인 소득 보전 공감대 형성
강점(S)	○다양한 소득보존 및 안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농작물재해보험에 국가재 보험제도 도입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 새로운 직불제 도입 ○가축공제의 대상확대 - 소, 돼지, 닭, 오리에 핏, 메추리 추가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보전방안 도입검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의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장기 직불제 추진체계 재정비 - 현 직불제를 유형별로 체계화
약점(W)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불재정	○'13년까지 농업예산의 23% 수준으로 직불제 확대 - 단가인상, 대상지확대	○DDA협상에서 직불제의 감축논의(AMS등) ○직불예산 확대에 대한 예산당국의 부정적 시각 - 투융자계획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부조화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이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인한 농촌유지 기능, 직불제 제도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성과지표 보완 필요**

- 농가소득중 직불금 및 직불투융자 비중을 명확히 계량화하여 제시 하였으며 '13년까지 장기적 정책목표를 가지고 점차 확대할 계획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및 가축공제 **가입율**을 **확대**하고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
 - 농작물 재해보험에 벼 포함방안 금년 용역중
 - 가축공제 추가 : ('02년)닭, '04년 오리, '05년 꿩, 메추리
- 농작물 재해보험 등 보험 프로그램은 손해사정인 등을 통한 사정 및 점검 등 보험사업상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노력
 - 보상과 심사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3.0%	○농가소득중 직불비중 파악	1.8%
○직불 투융자 비중	12.6%	○예산중 직불비중 파악	'04년 10.8%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및 가입금액	○가입율: 19.1% ○가입금액: 528,817백만원	○'05년 실적대비 검증	○가입률: 17.2% ○가입금액: 363,754백만원
○가축공제 가입율 및 가입금액 확대	○가입율: 26.0% ○가입금액: 1,484,395백만원 ○꿩, 메추리 추가	○공제약관 및 청약실적으로 확인	○'02년 닭, '04년 오리를 공제대상에 추가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제도측면>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05.3월)하여 제도적 기반조성
-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책시행과 자금지원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두는 등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충실히 준비됨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손해평가요령 등 하위법령 개정(5월)

<조직측면>

- 직불제정책협의회 및 직불제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체제 구축
 - 농경연, 학계 등의 직불제전문가(11명)로 자문위원회 구성
 - 부내 회의체(직불제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조정
- 국가재보험제의 안정적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제2기 T/F 구성, 운영

<예산측면>

-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기금 설치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
 - 재해보험예산외에 별도의 재보험기금을 신설('05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도입에 따른 예산 확보, 소득안정계정,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연구용역 수행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농업인,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사업시행에 있어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지침을 시달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
 - 직불제전문가위원회(7월) 및 워크샵(8월)의 개최
 -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기준 개선(서리피해, 돌풍 등) 관련 농업인 의견 수렴 및 현지출장확인 8회 (5월~8월)
 - 가축공제사업의 의견 수렴 및 공제가입 독려 등을 위한 **현장점검** (17회), 일선 담당자 대상 의견 수렴 조사('05.9~10월)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전문가협의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10월)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 **농림부 고유 업무**로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이 문제되지 않음
- ◆ 민간보험사와 및 풍수해보험(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과의 협의

- 경관보전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는 **WTO농업협정**(부속서2)에 합당하도록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운영
- 조건불리직불제는 **행자부** 등 관련기관(오지개발촉진법)과 협의
- 농업재해대책법 등과 연계 축산농업인의 사회안정망 구축 실현
- 민영보험사의 농작물재해보험의 공동인수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의(보험업법 관련)
-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풍수해보험(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종합위험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 다만 중장기직불제 확충방안 수립은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

- 중장기 직불제 추진방안(안)을 작성하였으나, 쌀생산조정제 폐지여부에 대한 직불제전문가위원회 및 농업인단체의 의견불일치, 경영이양직불제의 사업재설계에 대한 논란 등으로 계획 확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함
 - 쌀생산조정제의 연장(3년단위)에 대하여는 한계농지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대북식량지원 증가에 따른 식량과잉기조의 완화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 결정이 지연
- 경관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 등 시범도입 중인 사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과 홍보에 주력
 - 경관보전직불제는 전국 39개 지역(470ha)의 지자체와 마을이 협약(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을 식재·관리함
 - 399개 오지면중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인 지역 31천ha에 1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을 순조롭게 시행하고, '06년 본사업에 대비한 최종 모니터링 시행

세 부 사 업	추진상황
중장기 직불제 추진계획 마련, 추진체계 재정비	지 연
다양한 직불제 본격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정 상
국가재보험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및 대상품목확대추진	정 상
가축공제대상확대	정 상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시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 제도개선, 현지 출장 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농업구조조정과 농가의 소득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직불제간 상충점을 보완하였고 중장기 직불제 추진방향을 제시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대상지 조사를 현장실사 대신 도면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함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 선정시 지역축제 및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여 도·농교류 증진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요율 인상억제와 최저가입기준 조정**
 -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액 회수기간(Pay back) 적용을 배제하고, '05년 보험료 인상을 50.4%로 조정(보험업계 100%인상요구)
 - 최저가입기준을 1,000㎡에서 1,500㎡로 상향조정
 - 운영비지원의 체계화 : 추진성과에 따라 운영비를 정률지원
- 직불금 대상자 신청·접수·자금배정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구축 추진('05~'06)
 - 하반기에 업무재설계(BPR) 실시를 통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면처리를 대폭 전산처리로 대체하여 업무효율화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쌀재배농가에 대하여 개방피해 소득감소 보전 및 소득안정장치로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법제화(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 농업의 공익적기능 유지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전국 확대 추진**
 - 본사업의 시행을 맞이하여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지역('05년 31천ha → '06년 187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산('05년 123억원 → '06년 532)을 대폭 증액하여 확보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가입**을 추진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요령**을 개정
 - 보험가입기간 중(3. 14~3. 31) 소요예산 소진으로 희망 가입농가의 보험가입이 불가했을 때 신속히 관련 부처, 기관과 협의하여 67억원의 추가 보험가입
 - 가입농업인 및 현지 손해평가인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공정·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요령(농림부고시)을 개정
- 가축질병에 대한 보험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췌, 메추리 등으로 **가축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율**의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
 - 주요 축종 가입률('04→'05) : 소 7%→10, 돼지 50→56, 닭 22→28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적절하였음**

- 직접지불제와 재해보험 등 각종 소득안정장치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홍보책자**(우리 농업의 미래 직불제로 지켜갑니다)를 발간 배포
- 재해보험 시행계획 및 법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7회), 가입안내 홍보(15회), 안내장 **홍보자료**(33만매) 등
- 가축공제 대농민 홍보 및 사업시행기관 **직원 교육**(10월, 120명)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및 대농업인 **교육·홍보**(안내 팜플렛 334,00매, 포스터제작 7,000매, 손해평가인 3,300명 교육)
 - 태풍다발 시기를 앞두고 홍보팜플렛 17만매 제작 배포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직불제 전문가위원회(7월) 및 워크숍 개최(8월), 생산자단체와의 협의 등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에 대해 관련기관과 예산과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 후 정책방향 조정 - 법령개정, 보험대상농작물 등에 대해 관계부처(재경부, 예산처 등)와 긴밀 협의(T/F팀 참여)
-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대상, 시범사업 실시 방안, 장기적 업무분담계획 등을 협의

⑤ 목표의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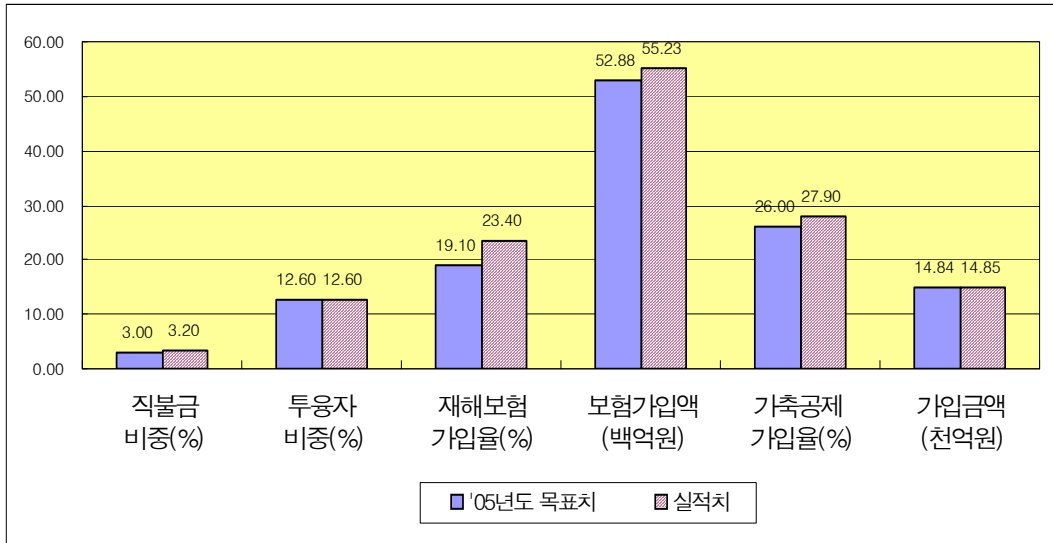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달성** (달성도 100%)

- 농가소득 중 직불제 비중이 3.0%이상 차지 1농가당 지원액이 94만원 상회, '04년 농가당 직불비중 2.1%(62.3만원)보다 크게 증가
- 직불금의 투융자비중이 12.6%(직불예산 8,638억원)로서 목표 달성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율 역시 목표치 상회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 표 달성도
○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3.0%	3.2%	100%
○ 직불 투융자 비중	12.6%	12.6%	100%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및 가입금액	○ 가입율 : 19.1% ○ 가입금액 : 528,817백만원	○ 가입율 : 23.4% ○ 가입금액 : 552,289백만원	100%
○ 가축공제 가입율 및 가입금액 확대	○ 가입율 : 26.0% ○ 가입금액 : 1,484,395백만원 ○ 평, 메추리 추가	○ 가입율 : 27.9% ○ 가입금액 : 1,485,278백만원 ○ 평, 메추리 추가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직불금 확대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 및 가축공제 대상가축 확대 등의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

- 직불금 예산을 확대한 결과 '04년의 경우 직불금이 1농가당 62만 2천원으로 농가소득의 2.1%를 차지하였으나, '05년에는 94만 3천원으로 3.0%를 상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 총 8,639억원의 농가소득 지원 효과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이 목표치(19.1%)를 상회(23.4%)하여 과수 농가의 경영안정장치(태풍 등 풍수해에 의한 수확량 감소에 대한 손실 보전)로 확대되고 있음
 - 총 27천농가에 6천억원의 농가소득 보장 효과
- 가축공제 대상가축을 **평과 메추리**까지 확대(종전은 소, 돼지, 닭, 오리, 말)하고, 가입율은 27.9%로서 목표치(26.0%)를 상회하여 질병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

- '05년 시범도입한 경관보전직불제도를 통하여 농촌경관의 유지·보존에 기여하고 지자체-마을간의 협약(경관보전협약)을 통한 정책협력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농촌개발에 기여
 - 코스모스, 메밀, 유채 등 다양한 경관작물을 경관작물로 재배하여 휴경지 등의 방치를 제어하고 농촌개발에 기여

다. 농업협동조합 개혁

<총 평>

- 농협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농협 자율개혁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생산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일선조합 규모화,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방안 마련 등 농협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정부와 농협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농협개혁을 추진
 - 농협법령 개정을 통해 개혁의 제도적 틀은 정부 주도로 마련하고 농협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농협중앙회 스스로 개혁프로그램을 갖도록 유도
 - * **농협은 자율개혁프로그램인 □□새농촌·새농협 운동□□을 적극 추진**
-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조합원의 실익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농협개혁 차원**에서 접근 필요
 -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필요

♣ **새 농촌·농협운동**이란 농협중앙회가 조합이 완전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도 지속 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04. 9월부터 전사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전사적 과제 33개, 공통과제 382개)

♣ **신·경분리**란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법인을 구성하는 것임(농협법 부칙 제12조)

♣ **농협 법령이외의 개혁과제**란 농협중앙회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법령 외의 사항에 대해 농림부와 협의하여 농협이 자체적으로 정한 50개 개혁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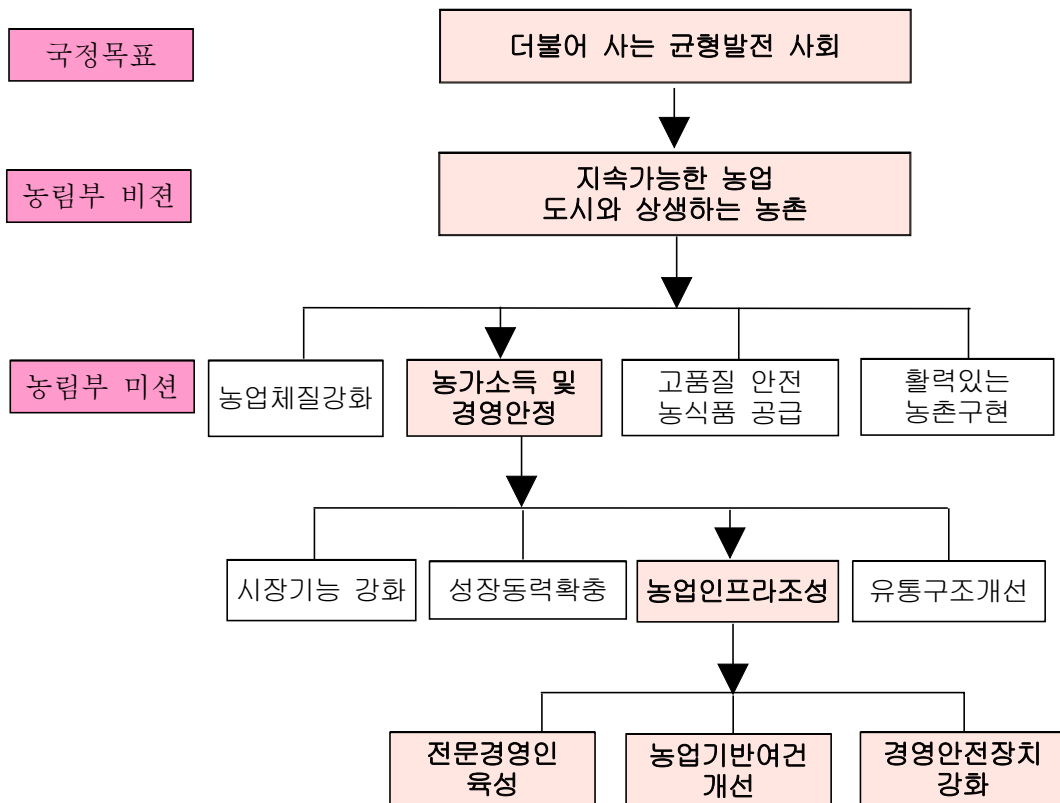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농협협동조합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농산물시장 개방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욕구 증대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책

○ 농협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농림부 비전중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의 미션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등 상위 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생산자조직의 규모화**국민소득 증대와 고품질·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증가, 라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
 - 급변하는 유통·금융시장여건 변화 속에서 농협이 조합원의 실익 제고를 위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전문가)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이 필요
 - 일선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조합 합병을 통한 **규모화·전문화**가 필요
 - * 순자본비율 비율 4%미만 조합수 : ('04) 317개 → ('05) 224개
- 신·경 분리 문제는 농협법 부칙에서 시행후 1년내 농협이 세부추진계획을 정부에 제출, 정부는 농업인대표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도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준비가 필요

《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

지회·위협 요인 분석		기회(O)	위협(T)
		강점·약점 분석	○정부 및 국민(조합원), 개혁주체인 농협 모두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강점(S)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개혁의 제도적 기반 마련	○법 하위법령 등의 적기 개정 ○농협의 자율개혁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개혁가속	○중앙회 조직과 인력 개편을 통한 기능 효율화 ○조합의 전문경영체제 구축
약점(W)	○농협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조합원 및 학계에서 불신	○자율개혁프로그램 적극 추진 - 주요 개혁과제(50개)의 이행철저 실천 - 조합원(농민)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현장농정 실현	○부실조합 및 영세조합의 합병을 통한 규모화 ○조합임직원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 정착 ○조합투명성 제고 및 경영 공개 확대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농업협동조합 개혁은 농협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일선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 지표**를 제시

- 농협 개혁을 위한 법령 및 농협 정관례, 지역축협정관례, 품목별·업종별 조합정관례 및 회계처리기준, 공제 및 재무기준 제·개정을 통해 **농협 개혁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앙회 기능을 일선 조합 지도·지원 체제로 전환
 - 일선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규모화·전문화 추진
 - 농협 스스로 제2의 창립차원에서 『새농촌·새농협』운동을 통해 법 이외 개혁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05.12 반영)
 - 재경부, 행자부에서 관련규정 개정시 조세감면 반영 예정
 - 건설교통부에 법인의 국민채권 매입면제 협의중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각계 전문가들로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검토** 추진
 - 농협에서는 신·경분리 자체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중('05.5~'06.4)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분리 작업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농협법 하위법령 정비	'05.6월말까지 제도개선 완료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실적	-
순자본비율 4%미만 조합수	224개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에서 정한 순자본비율 산정 기준 적용	317개

<참고>

농업협동조합 개혁 추진체계

추진 방향	
◆	농협법령 개정을 통해 개혁의 제도적 틀은 정부 주도로 마련
◆	과거 단순한 지도·감독 대상인 농협에서 농정의 실질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여 자율개혁 프로그램을 갖도록 유도



추진 전략	
정 부	<input type="checkbox"/> 농협 개혁의 제도적 틀 마련 <input type="radio"/> 농협법령 개정 <input type="radio"/> 조합정관례 등 고시 제·개정
농 협	<input type="checkbox"/> 농협 스스로 법외 개혁과제를 선정·마련 <input type="radio"/> 농협법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주요개혁과제(50개과제)를 농협 스스로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 <input type="checkbox"/> 농협은 제2의 창업차원에서 자율개혁 프로그램인 <input type="checkbox"/> 새농촌·새농협운동 <input type="checkbox"/> 을 전사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극대화 <input type="radio"/> 농·축산물 유통사업혁신, 조합자립기반 구축, 농업·농촌활력화 등 추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

<제도측면>

- 농협개혁의 기틀인 개정농협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완료('05.6월)
- 이를 바탕으로 농협이 자율 개혁프로그램 속에서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개혁되도록 유도
- 일선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순자본비율을 4%로 강화하고 순자본 비율 산정시 경제사업 부실채권도 포함시켜 부실방지 기능 강화

<조직측면>

- 농협 자율개혁 추진을 위해 새농촌·새농협추진단 구성·운영(15명)
- 농협 자율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에 경영진단국 신설('04.10월)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신·경분리위원회』를 올 하반기까지 농림부내에 구성·운영할 계획

<예산측면>

- 일선조합의 구조조정 지속 추진
 - 합병시 무이자자금 지원 : 정부는 소멸조합당 2억원('06부터 5억원), 중앙회는 30억원(최고 60억원)
 - 내년부터 정부 무이자자금을 5억원으로 확대 추진
- * 조합합병 및 구조개선자금으로 119조 투융자계획('05~'13년)에 2,134억원 반영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농업인,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을 추진

- 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23~3.15)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추진**
 - 국무조정실,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9개부처에 의견 조희(2. 4 ~ 2.19)
 -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농민단체(3), 개인(총 6명) 등이 의견제출
 - * **일선조합의 상임이사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 대상 조합범위,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농협법상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한 의견**
 - 당·정협의(4.7)를 통해 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설명
 - * 농협개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농협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
- 농협에서는 현장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농협 자율개혁프로그램**(“새농촌·새농협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 열린토론회(3회), 사업주제별현장토론회(22회), 권역별임직원현장토론회(32회) 개최
- 농협의 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경영상태실사시 조합임직원, 대의원, 주요 조합원 등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 등을 반영
 - 자율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조합은 합병대상조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병의 필요성, 효과 등을 조합원에게 홍보하여 **조합원 투표로 합병을 최종 결정**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및 농림부내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 의견수렴 예정
 - 중앙회는 신·경분리 자체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05. 5~'06. 4)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관련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정책공유

- 농협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시 관련부처 **의견조회**
 - 국무조정실,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9개부처에 의견조회
 -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 제출
 -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농협법상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한 의견
- 농산물유통활성화 차원에서 설립 규정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조세감면 등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추진(재정부, 건교부 등)
 - 관련법령 개정안에 우리부 조세감면 의견 반영
 - 건설교통부에 법인의 국민채권 매입 면제 협의 추진 중
-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 등 추진중인 농협개혁에 대한 재정부, 금감위, 금감원 등 관련법령에 의한 **지도·감독기관간의 상호 업무 협의 및 공유**
 - 지도·감독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개정 농협법에 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적기 제·개정 완료**(6월)
 - 조합정관례 등 농림부 고시(8개) 제·개정 완료(6월)
-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방안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 관련법령 개정안에 우리부 조세감면 의견 반영(재정부, 행자부)
 - 법인의 국민채권 매입면제 요청(건교부, 7.6)

- 조합의 자율합병을 적극 유도,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 합병완료 11개, 합병추진중 186개('05.10월)
-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농림부내에 신경분리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 추진
 - 신·경분리시 추가자본금 추정, 자본금 확충 등 **기초적인 검토** 진행
 - 신·경분리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농협, '05.5~'06.4)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하위법령 정비	정 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방안 마련	정 상
조합 구조조정(합병) 추진	정 상
중앙회 신·경분리	정 상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 농협구조조정은 자율합병 원칙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 주도로 추진하도록 유도
- ◆ 경영상태 조사를 통해 일선조합의 구조개선을 촉진

-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조합의 합병 및 구조개선은 **원칙적으로 조합 스스로 추진**
 - 자율합병조합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등 우대 조치하되, 부실조합 등은 강력 제재
- 일선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병을 유도·촉진하고자 **합병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소멸조합당 2억원씩 용자지원)
 - * ('05. 10월말 현재 지원실적) : 12개조합에 24억원 지원
- 농협중앙회에서는 조합 임직원, 대의원, 조합원 등의 의견수렴 및 **경영상태 실사**를 통하여 합병 등 조합 구조개선 추진

- 자율합병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자체자금으로 부실액 전액 보전 등 인센티브 강화
 - 소멸 조합당 30억원(최고 60억원)을 6년간 무이자 지원
 - 부실액 전액 보전, 조합육성자금 우대지원, 합병 추진비용 지원 등
- 다만, 합병을 거부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무이자자금 지원중단, 기지원 자금 회수 등 강력한 패널티 부여(5개조합 지원제한 실시)
- 부실(우려)조합중 합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부실액 보전 등 구조개선 추진
 - 지·사무소 통폐합, 고정자산 처분, 출자금 감액, 인력감축 등 **경영 개선조치 부과로 경영합리화 추진**
 - '05.1~10월 현재 197개조합이 합병추진중이며, 이중 59개조합은 합병 의결 또는 완료(완료 11개, 의결 48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관련 제도 정비시 관련 부처 및 기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취합 및 정책공유를 통한 대응성 증대
 -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 등 추진중인 농협개혁에 대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관련부처와 상호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고위 당·정 간담회시('05. 4) **조합장 불법선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 의견 반영
 - '04. 개정된 농협법에서 투명성 확립차원에서 선관위에 위탁한 조합장 선거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반영
 - 국회에 우리부 개정의견을 제공하고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

- 합병 조합에 소멸 조합당 지원하는 2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다는 의견
 - 합병조합 촉진 차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06. 예산안에 반영)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는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예정
 - 농협의 자체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농림부 차원에서 세부주제별로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관련 규정개정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개

- 농협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및 보도문 배포**(2.22)
 - 관보게재 및 우리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관련부처 및 농협 임직원들과 수시 업무 협의
 - 관련법령 및 규정 정비시 수시 업무협의(2~6월)
 - 농협 임직원들과의 수시 업무협의로 자율개혁 적극 유도
- **조합정관례 고시 개정**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6.15)
 - 조합 경영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대폭 강화
- AFFIS(농림수산정보센터) 인터넷 방송에 출연(9.7)
 - 개정 농협법 등 농협개혁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
- 일선조합의 **구조조정** 지속 추진
 - 합병업무편람, 조합합병 성공사례집 발간·배포
 - 농협 구조개선 관련 세미나 개최(일본사례발표, 10.28)
 - 조합 합병동향 등 보도자료 배포(5.23, 8.25)
- 신·경분리 관련 교수, 연구원(금융연구원, KREI) 등 전문가 의견수렴(1회, 10.13) 및 설명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관련부처 등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농협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시 **관련부처 의견조회**
 - 국무조정실,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9개부처에 의견조회
 -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 제출
 -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농협법상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한 의견
 - 조합장 선거 위탁과 관련하여 선관위와 지속적 협의 추진
- 농산물유통활성화와 산지생산자 조직 규모화를 위해 신규 도입한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추진(재정부, 건교부 등)
 - 관련법령 개정안에 우리부 조세감면 의견 반영
 - 건설교통부에 법인의 국민채권 매입 면제 협의 추진 중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농림부, 재정부, 금감원 실무자간 네트워크 구축**
 - 농협관련 감독기관간의 상호의견 교환 및 농림부에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계당국의 이해와 협조 당부(9월)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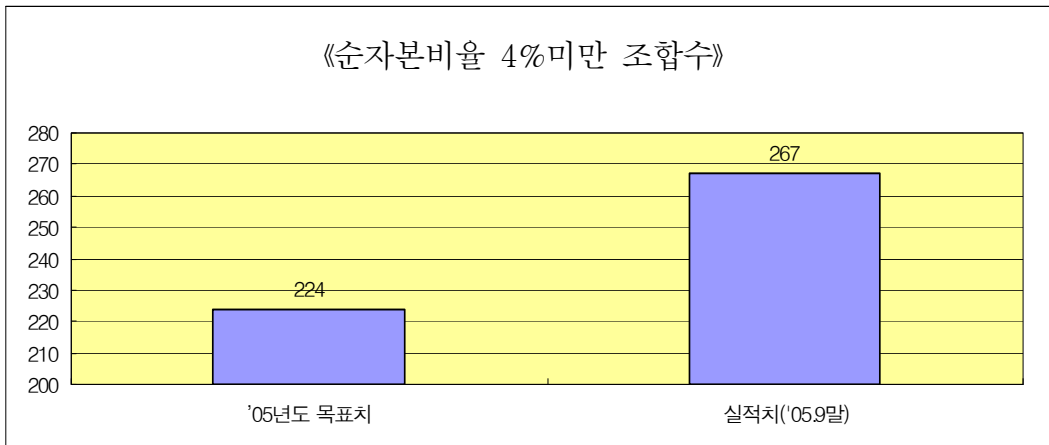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 (달성도 100%)

- 농협법 하위법령 **적기 제·개정 완료**(6월)
- 일선조합 **합병**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197개 조합 합병 추진 중
 - '01~'04년 기간중 60개 조합이 합병된 반면 **올해는 59개 조합이 합병(합병완료 11개, 합병의결 48개)**

○ 순자본비율 4% 미만 조합수는 목표치 224개보다 43개 많은 267개소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 달성도
○농협법 하위법령 정비	- 농협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6월)	- 하위법령 등 제·개정완료 (10월말 기준)	100%
○순자본비율 4%미만 조합수	- 224개	- 267개 (전년동기 대비 80개 감소)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농협의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강화, 규모화 진전, 불법선거 차단 등의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

- 개정농협법의 시행으로 **농협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 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집행간부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각 대표이사가 행사
 - 일선 조합도 자산 2천억원 이상 조합(대상조합 176개)에 **상임이사를 의무도입** 됨에 따라 현재 53개 조합에서 도입, 올 하반기까지 8개 조합 추가도입 예정
 - * 개정농협법 시행이후 새롭게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에 대하여 상임이사를 의무 도입토록 함
- 자산총액 500억원이상 조합(909개)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조합에 운영공개방을 설치**하여 임·직원 급여기준 등의 공개도 의무화
 - 조합운영 공개방 설치 현황('05.9월말 현재): 1,319개 조합중 1,200개 (91%)
- 합병으로 **일선조합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
- 중앙회는 '07년까지 무이자자금 1조원을 추가 조성('05:7,000억원)하여 경제사업 우수조합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는 등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지도·지원 기능을 강화**
- 직선으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여 불법선거 사전 예방 및 공정선거 확립(기존에는 조합자체 관리)
 -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
 - 불법선거 단속 등 선거관리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

라. 농지은행제도 도입

<총 평>

- 쌀소비 감소·농산물 소비구조변화·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유희농지 증가, 농지수급 불균형 등 중장기적 **농지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 관리하기 위한 기반(**농지은행제도**) 마련
 - 농지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농지수탁사업**)

- 고령농가의 탈농을 지원하고, 젊은 층의 농업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소유·이용 규제완화** 등 농지제도 개선
- 부채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사업 마련
 - 부채농가의 농지와 시설물 등을 매입·임대·환매하여 영농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영회생을 지원을 통한 도시·사회문제 발생 예방 (**경영회생지원사업**)
- 농지은행 포털시스템(www.fbo.or.kr)을 구축하여 On-Line을 통해 농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자본 및 인력의 농촌 유입과 농지 유동화 촉진(농지유동화정보사업)
 - 도시자본 및 인력의 농촌 유입·정착과 농지 유동화 촉진을 위한 농지 매물·임대정보 등 제공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필요
- 그러나, 그간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한 농지은행제도 도입이 도시민의 자유로운 농지매입·소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오해가 있었고, 관행적 임대차를 하고 있던 농지 소유자나 농가로부터 제도 도입의 추진에 대한 **이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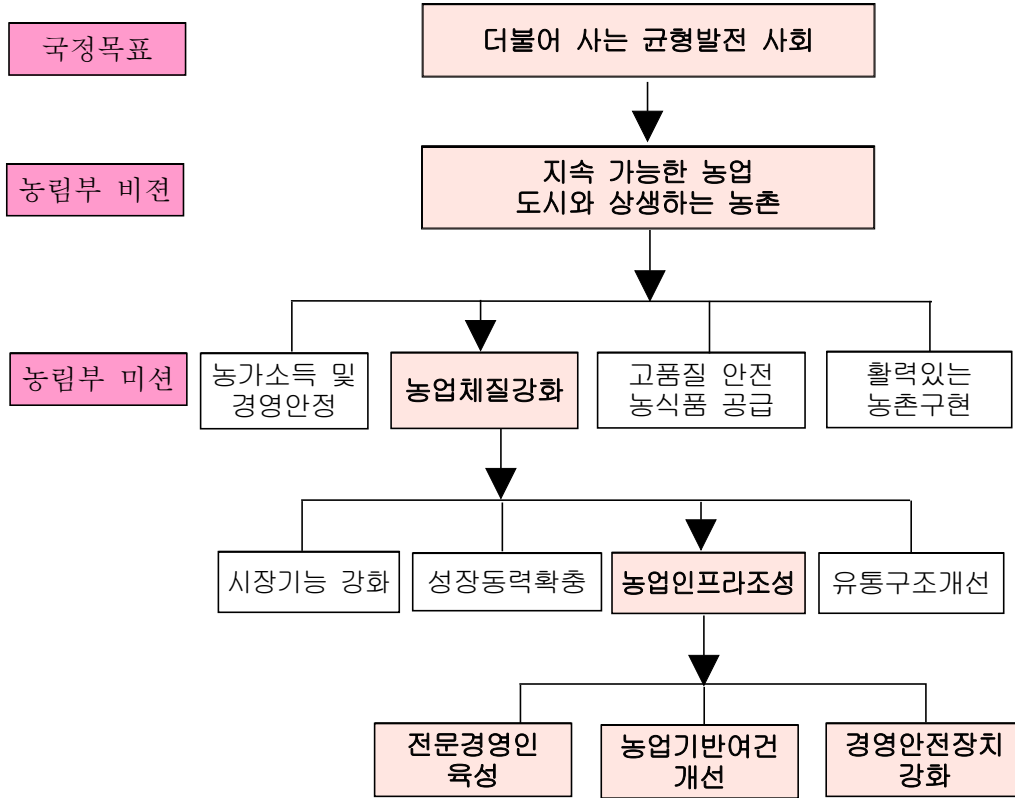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 대응성

- ◆ 농지은행제도는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 농지시장 불안,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책

- 농지은행제도 도입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및 농림부 비전인 □□**지속 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농업 체질 강화**□□등 상위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 전업농 등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화 촉진 및 농지 시장의 안정적·효율적 관리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법령정비 제도도입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
- ◆ 다만, 내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면 농지 유통화 실적, 경영회생지원농가실적 등에 관한 **성과지표 보완 필요**

- 농지시장의 안정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은행제도 의 □□법적·제도적□□장치 마련
- 농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지침□□ 마련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등
-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지은행포탈사이트□□를 구축·운영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 법령정비 여부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농지법 개정	○ 관보게재 확인	○ '05년중 법 개정
○ 세부시행방안 수립	○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 수립	○ 결재(방침)문서 확인	○ '05하반기 수립
○ 유동화시스템 구축	○ 농지은행포탈시스템구축	○ 홈페이지 확인	○ '05하반기 구축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조직·예산측면의 **정책수단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제도측면>

- 농지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한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농지임대수탁사업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세부시행지침 마련
 - 「농지은행 포탈시스템」 구축을 통한 매도·임대농지가격정보 등의 제공

<조직측면>

- 농업기반공사의 조직 개편을 통한 사업추진 체계 정비
 - 농업기반공사, 본사 □□농지은행사업본부□□발족('05.1.1)
 - 농업기반공사 전국 93개 시·군지사를 통한 사업추진
 - 기존 조직활용 및 유사사업 수행기관에 의한 추진으로 행정력 및 예산 절감

• • • ●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 영농규모화사업('90년), 쌀전업농육성사업('95년), 경영이양직불사업('97년), 과원규모화사업('04년)등 농업구조개선사업 수행
- 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거래에 관한 다양한 경험 축적(매매 105천건, 임대차 65천건)
- 86천명의 쌀전업농에 대한 정보 D/B화 및 전산 관리

<예산추면>

- 119조 투융자계획상 '06~'13년간 3조 5천억원 반영
- '06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확보(422억원, 277ha)
- * 향후 농지시장 여건을 감안, 농지매입 및 비축사업의 시행시기 결정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제도도입을 위해 농업인,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여론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였음

- 농경연(KREI), 농업기반공사등 농지은행T/F팀을 구성·운영('04.6)
- 농지제도 개선(농지은행 도입 등) 관련 공청회 개최('04.7)
- 농지은행 도입방안 관련 토론회(2회) 개최('04.8, 농특위)
- 외국(프랑스, 일본)의 농지은행제도 운영사례 연구조사('04.9)
- 농지은행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 실시('04.6~10, 농경연)
-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대비한 수요조사 실시('05.2.21~3.18)
- 농지은행제도 도입관련 현장의견 수렴('05.2.24~25, 3.21)
- 농지은행 전문가 협의회 개최('05.5)
 - 농경연, 농협, 농업인단체, 농업기반공사 등
- 국회(김명주·강기갑의원실) 농지은행사업 공사 추진 당위성 설명(6.13)
- 농림부 장관 농지은행포탈 시연(7.11)
- 농지수탁사업지침 법률자문(8.1~5)
- □□농어업특위□□농지은행사업 설명 및 포탈 시연(8.16)

- 국회 □□농업정책연구회□□(의원보좌관) 농지은행사업 설명회(8. 26)
- 리후렛 10만부 제작, 지자체·농민단체등 유관기관 배부 홍보(9월)
- □□농업인단체□□초청 사업 설명회 및 농지은행포탈 시연회 개최(9. 28)
 - (사)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12개 단체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 인터넷 활용 광고 : Naver, yahoo 키워드 검색 광고('05.10.1~)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국유재산 총괄부서인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정책방향 조율
 - 가용토지 확보차원에서 농지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재경부)
 - 비농업부문 토지공급을 위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 기능 신설 필요 요청('04.10 10. 7)
 - 농지은행제도 시행을 위한 조속한 법령정비 요청(기획예산처)
- '06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심의 대비 기획예산처 사전 설명(3. 2)
- 농지은행사업 관련 해양수산부 업무협의(4.12)
 - 공사법개정안 중 간척농지를 공사(농지은행)에서 매입하는 조항의 필요성 등 관련내용 설명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농지법□□개정안 국회 통과('05.6.30)
 -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4~11.13), 농림부 규제 심사위원회 개최(11.24)

- 올 정기국회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추진
 - 국회 상임위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11.22)
- 농지은행 사업별 세부 운영방안·시행지침 수립
 - 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지침 마련 및 사업 시행중('05.10)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05년 계획수립 후 '06년 시행
 - 농촌종합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련정보 제공('05 하반기)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기존의 사업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집행도모

- 농지은행 운영을 기존 영농규모화 사업조직인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토록 함으로써 인력·예산집행의 효율성, 업무의 통합 효과
 - 영농규모화사업('90년), 쌀전업농육성사업('95년), 경영이양직불사업('97년), 과원규모화사업('04년)등 농업구조개선사업 수행
 - 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거래에 관한 다양한 경험 축적(매매 105천건, 임대차 65천건), 86천명의 쌀전업농에 대한 정보 D/B화 및 전산 관리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DDA, 쌀협상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농지가격 하락 및 경지면적 축소 등에 대비한 농지시장 안정 대책 추진
 - '14년 농지소요 면적은 약 160만ha 수준으로 추정되며, 쌀시장 개방 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지가격 동반 하락 예상
- 농업 여건변화에 맞춰 이·탈농 희망농가, 경영위기 농가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대책 마련으로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도모

- 농지은행제도는 농촌유지를 위해 대농·기업농 지원문제, 창업농·전업농 육성을 위해 큰 역할 기대(농지법 공청회)
 - 장기저리 임대 등 20ha 이상의 전업농 육성을 뒷받침 할 수 있고, 농지가격 연착륙, 투기 및 난개발 등의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결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 정책 형성단계부터 결정단계 까지 각 단계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를 참여시키고, 홍보하는 단계별 맞춤형 홍보 추진
 - 법, 제도, 지침 마련시 현장 토론회, 전문가협의회, 관련기관협의회, 법률자문 등 다각적인 홍보추진

- 농림부 장관 농지은행포탈 시연(7. 11)
- 국회 □□농업정책연구회□□(의원보좌관) 농지은행사업 설명회(8. 26)
- 농어업특위 위원장 농지은행 사업설명 및 포탈 시연(8. 16)
- 리후렛 10만부 제작, 지자체 및 유관기관 배부(9. 14~15)
- □□국정감사□□(농업기반공사)시 농지은행포탈 시연(9. 26)
- 농업인단체 초청(12개 단체) 농지은행사업 설명회 개최(9. 28)
- 중앙지 청사출입기자단 농지은행사업 착수 설명회 개최(9. 28)
- 농지은행사업 홍보(농업기반공사 CEO)
 - KBS, YTN, 중앙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 한국경제신문, 세계일보, MBC라디오(손에 잡히는 경제 인터뷰)
 - 농지소유자(부재지주)에 대한 안내문 발송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 정책 형성단계부터 결정단계 까지 각 단계마다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농지은행 담당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의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 농지은행 T/F를 구성 월 1회 주요 쟁점사항 토의

- 사업의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해 기반공사 담당자와 농림부 담당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05.6월) 개최
-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대비한 수요조사 실시('05. 2. 21~3.18)
- 농지은행제도 도입관련 현장의견 수렴(2. 24~25, 3. 21)
-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협의회 개최(5.10)
- 농지은행사업 워크숍 개최(6. 8~10)
- 농지수탁사업 업무지침 협의회 개최(6. 29)
- 농지수탁사업지침 법률자문(8.1~5)
- 농어업특위 농지은행사업 설명 및 포탈 시연(8. 16)
- 리후렛 10만부 제작, 관련기관 배부(9. 14~15)
-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전국 상담서비스 시작(10.17)
- 농업인단체 초청(12개 단체) 농지은행사업 설명회 개최(9. 28)
- 중앙지 청사출입기자단 농지은행사업 착수 설명회 개최(9. 28)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계획대로 농지은행 제도 도입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
 -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05.6.30)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4~11.13)
 - 농지은행 전문가 협의회 개최 ('05. 5)
 - 농지은행 시행지침(안) 워크숍 개최('05.6)
- 농지임대·수탁사업시행('05.10)
- 현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추진
 - 국회 상임위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부(11.22)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 달성도
○ 법령 정비여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 기금법 개정, 농지법 개정	- 농지법 개정 완료('05.6)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 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05.11)	100%
○ 세부시행방안 수립	농지수탁 및 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세부시행지침 수립	- 농지수탁 및 매입사업은 기본 방침 수립(장관결재 '05.8)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세부 시행지침 12월중 수립 계획	100%
○ 유동화시스템 구축	농지유동화포탈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에 구축· 운영('05.7)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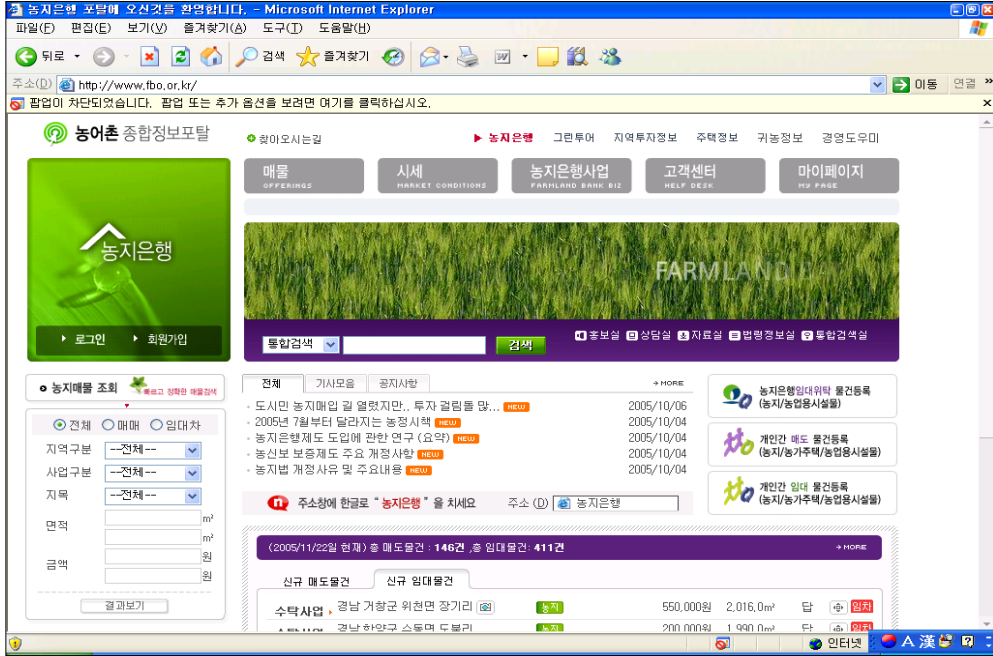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 (달성도 100%)
- '06년부터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매입사업 등이 본격시행 되면
추진실적 등을 분석하여 정책영향 등 평가 가능
- 농지은행사업 착수 시기
 - 농지임대수탁사업 : '05. 10. 1 시행 (개정 농지법 부칙 제1조 단서)
 - 농지매도수탁사업 : 공사법 개정 시기에 의해 결정 ('06.4월 예상)
 - 단, 자경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의 매도수탁은 '06. 1. 22 시행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공사법 개정후 시행 ('06.4월 예상)
 - 농지매입비축사업 : 향후 농지가격 변동 추이 등을 고려 추후 결정

• • • ●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농지은행 포탈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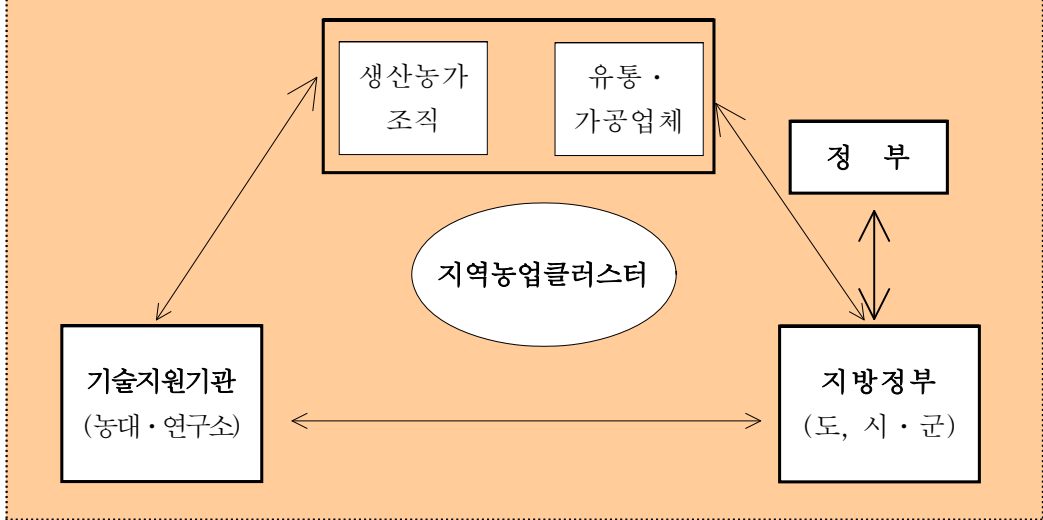
마.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총 평>

-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참여주체의 자발성을 유도하고 농촌형 지역 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학·관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
 - 지역 농업전문가들과 T/F를 구성, 추진방안 마련('04.12)
 - 금년 예산 120억원 확보, 20개 시범사업단 운영
- 개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로서 지방정부 및 지역농업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확대 요구
 - 현재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05.7~12)
- 금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농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 수립 필요
 - 특히, 향토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 지역농업클러스터란 ?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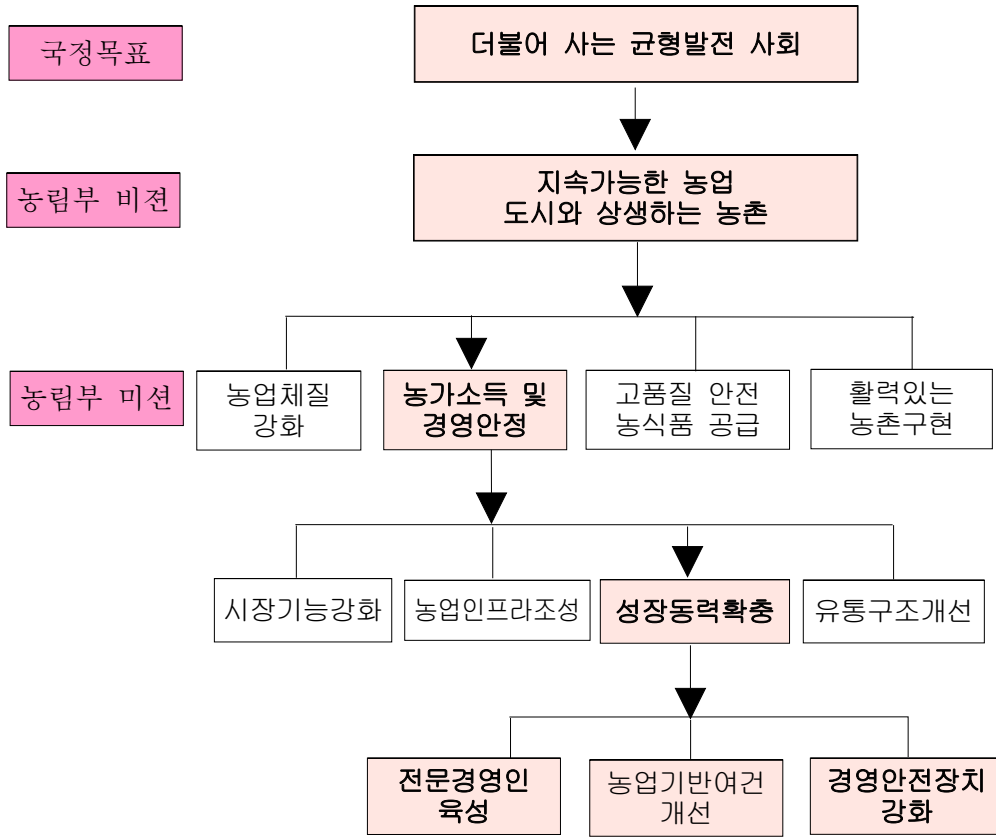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시장개방 확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책

-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라는 국정목표에 기여하고, 농림부의 비전중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의 미션중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과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지방자치체가 정착되고 지역농업의 성장동력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농림정책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 하면서 추진하는 지역농정 및 농산업의 혁신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역량을 갖춘 시범 클러스터를 선정, 집중 육성하여 확산 유도
- 참여주체의 자발성 유도과 산·학·관이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촌형 지역혁신의 단계적 구축 추진

* ('05~'07년) 20개 사업단 → ('13년까지) 100개 사업단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지방자치체의 정착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농업 대외시장 가속화 ○농축산물 가격 유동성
강점(S)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기반 마련	○사업시행지침 마련 ○사업자 20개소 선정 - 국고보조금 배정	○'05~'07년까지 20개 사업단 육성 - '13년까지 100개소 육성 ○농업인과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약점(W)	○지원 사업 및 예산의 한계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농산업 육성 ○지역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 추진	○생산위주의 농업을 가공·유통·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산업으로 전환 ○품종 및 재배기술, 가공 및 유통 등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은 산·학·연·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농산업 결집체로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
- ◆ 금년은 시범사업으로 본사업 시행시점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생산성 및 소득 향상 등에 관한 **성과지표 보완 필요**

- 일정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사업단 확대 육성
 - 3년간 20개 클러스터사업단 육성하여 정책검증을 실시한 후 '13년까지 100개소 육성 계획
- 지역의 활용가능한 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하여 생산위주의 농업을 **가공·유통·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산업으로 전환
 - 품종 및 재배기술, 가공 및 유통 등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지역농업발전계획□□에 따라 지역 농산업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혁신과 농가소득을 증대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시범사업 추진 - 산·학·연·관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10여 개소의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선정 및 평가 결과	시범사업으로 실적 없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역량을 갖춘 지역농업 클러스터 선정·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심사과정 마련
 - 시범사업 선정시 여러 단계의 심사과정을 마련하고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05.4)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에서 대상자 심사·평가시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평가 등 실시
 - * 28개 사업단 사업신청 → 20개 사업단 선정
-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교육프로그램운영, 타사업 및 제도의 연계방안 등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추진
 - 사업주체(리더)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05.7~12)
 - 워크숍('05.9), 중간리더 실무교육('05.11) 등 실시
 - 지역특구 제도 등과 연계, 종합적·지속적 지원시스템 구축('05.7)

- 사업단별 사업계획 협의·조정을 거쳐 사업비(120억원) 배정
 - '05 예산배정('05.6)
 - 국고보조금 배정('05.9월, 10월)
- **중장기 농산업클러스터 추진계획** 마련
 -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약 체결('05.7~12)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농업인,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종합지원계획 설명회('05.7), 지역농업클러스터 워크숍('05.9), 지방농정과장협의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 시·도에 사업시행 지침 시달('05.1)
 - 시범사업단 선정 절차 : 클러스터사업단 →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시·도) → 심사 및 평가(시·도) → 사업대상자 확정(농림부)
- 시범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추진 점검회의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의견 수렴**
 - 지방농정과장협의회(9명), 종합지원계획설명회('05.7), 지역농업발전 워크숍('05.9), 사업추진 점검회의('05.10)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사업추진상 여론수렴 등을 위한 **학습모임 구성운영**('05.10)
 - 농림부 담당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 지방비 확보 및 집행실태 파악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단 대표 및 도 관계관 회의개최('05.10)
 - 장관 주재하에 사업추진 실태 점검
 - 클러스터 발전방안 토의 등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균형발전위·행자부·기획예산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정책 방향 및 관련 제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부처)과 정책방향 등 조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 등과 의견 조정 및 협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 현재 시범사업으로 '07년부터 본사업 실시

-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사업시행
 - 자자체의 자체 심사를 거쳐 28개 사업단이 사업신청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단(20개) 선정 ('05.5)
 - 사업단별 사업계획 협의·조정을 거쳐 사업비(120억원) 배정('05.6)
 - 클러스터 사업단별 세부사업계획 수립('05.9)
- 지역 클러스터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시스템 마련('05.7.4)
 - 사업주체(리더)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토론회 활성화, 타사업과의 연계지원 방안 마련
 - 시범사업 종합지원 계획 설명회('05.7) 및 워크숍 개최('05.9)
- 중장기 농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 마련
 -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05.7~12, KREI)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선정 및 사업시행	○ 대상자선정(완료), 사업시행(정상)
○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완료
○ 중장기 농산업클러스터 추진계획 마련	○ 정상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시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 제도개선, 현지 출장 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추진단” 구성·운영('05.7)
 - 농림부 각 실국, 농진청, 농관원,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구성
 - 선정된 클러스터 지역내의 타 농림사업·제도 및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
- 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협약하여 예산확정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시범사업실시 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06년 소요분을 미리 선정하고 '06년의 신규 사업을 중단하는 등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
- 시범사업으로서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지도 및 협의 강화(10회)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관련 Q&A 시달('05.11)
- 사업단-지방정부-중앙정부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해 싸이월드를 활용한 ON-LINE 대화창구 운영('05.8)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설명회 및 워크숍, 보도자료 배포, 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 지역농업추진과정에서 국민 등 정책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사업지침의 농림부 홈페이지 게시 및 책자 유인 배포('05.1)
 - 지역농업클러스터 '05사업 신청현황 보도자료 배포('05.3.28)
 - 지역농업클러스터 '05 시범사업단 선정결과 보도자료 배포('05.5.9)
 - 시범사업 종합지원계획 설명회 보도자료 배포('05.7.12)
 - 시범사업 추진 점검회의 보도자료 배포('05.10.25)
 - 정책추진방향을 지방농정과장 협의회를 통해 안내
- 지역농업클러스터 관계자 설명회, 워크숍 개최 및 박람회 참가
 - 시범사업 종합지원계획 설명회 개최('05.7.12)
 -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 워크숍 개최('05.9.13~14, 천안상록리조트)
 -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05.10.5~9, 대구 EXCO)
 - 시범사업 추진 점검회의 개최('05.10.25)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지방농정과장협의회,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추진단 운영 등을 통한 유관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 지방농정과장협의회 : 각 도 농정과장 9명으로 구성
 - 지역농업클러스터지원추진단 : 농림부(각 실국), 농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KREI,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달성** (달성도 100%)

- 시범사업단 확대 선정 : (당초) 10 → (조정) 20개소
- 사업주체(리더)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타사업·제도의 연계지원 등 **종합·지속적인 지원시스템 마련**(’05.7.4)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5.7~12월)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시범사업 추진	10개소 시범사업 추진	20개 소 선정, 시범사업 추진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사업단별로 세미나 및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는 등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

- 상반기에 사업단을 선정한 이후 사업단별로 사업단을 확대 운영하거나 세미나 및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는 등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효과 발생
- 특히, 지역에서는 기존의 농림사업방식과는 달리 **지방의 자율과 책임** 하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음

•••●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 클러스터 사업시행으로 인해 참여주체간 협력과 지원체계가 가동되어 지역 스스로 농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보성녹차 클러스터 사례> —

- 녹차 생산현황 : 군 농가의 3%(274호)가 재배(574ha)
-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 생산·유통주체(녹차연합회, 가공업체) : 녹차 생산, 품질 및 판매 혁신
 - 연구주체(전남대, 한국식품연구원) : 보성녹돈 등 60여 품목 연구
 - 행정주체(도, 군) : 사업지원, 관광사업 등 타산업과 연계 추진

Ⅲ.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및 소비촉진

1. 총괄

가. 잘된 점

- '05년도부터 산지유통조직 기존의 평가제도를 「산지유통종합평가제」로 개편하여 규모화·전문화·브랜드화 등의 조건을 갖춘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32개 공영도매시장에 주대마늘 반입을 전면금지 하여 물류비절감 및 공영도매시장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도매시장제도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중
- 식품산업에서 농업적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균형적 육성을 도모하고자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안) 수립
-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조금 조성 생산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확대(1 → 3%)하여 사업 역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도록 근거 마련(농안법시행령 개정)
 - 주요 품목의 자조금 조성 단체 결성 확대('04:15→'05:23)

나. 미흡한 점

- 산지조직의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유통시설 등이 아직 미흡
- 균특회계로 이관된 APC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시설지원과 연계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재배면적이 많고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일부 노지작물은 호당 경영규모가 적고 영세소농구조로 되어 있어, 자조금 거출이 어렵고 단체 형성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조단체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 초 계 획	추진 실적
<p>1. 산지유통조직육성</p> <p>□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을 벤치마킹 사례로 육성</p> <p>○ '05 공동마케팅조직시행지침제정 및 시행('05.3) - 유통종합자금,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 등 지원</p> <p>○ '05 산지유통전문조직 신청접수 및 선정 심사('05.4) -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등 시행</p>	<p>○ '04년말 선정된 공동마케팅조직 시행지침 제정완료('05.3월)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05.4) -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을 벤치마킹사례로 육성 * '04년말 선정된 공동마케팅조직(9개소)에 대해 독립 회계 등 사업기반 구축후 자금지원 완료(1,132억원) * 사업비(3%, 3년, 932억원), 무이자인센티브(200억원, 1년) 지원완료, 공동선별비 상향지원(30~40%→40~50) 적용('06.1.1부터)</p> <p>○ '05년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 및 지원 완료('05.5) * 2,316억원(3년, 3%), 무이자인센티브(482억원), 공동 선별비 지원(30~40%) 등</p> <p>○ 지역단위로 「산지유통 Marketing-up 포럼」 개최, 현장중심의 농정 실천(6회) * 안성, 봉화, 오송, 논산, 평창, 무주</p> <p>○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을 통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완료 및 후속조치 완료(9.25, 369개소 대상 평가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차등지원 및 우수 조직에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등 지원 * 47개 우수조직에 482억원 인센티브 지원하고 6개 그룹별로 차등금리적용(1~3%)</p> <p>○ '06년도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관계기관 회의 개최(9.20) - 선정평가지표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의견수렴 * 현재 선정평가지표 보완 등 사업계획 수립중</p>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지역축협 등을 중심으로 규모화된 축산브랜드 경영체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일정) : 사업비 93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05.1월)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05.3월) → 사업주관기관 추천 (05.3월) → 사업추진심의회('05.5월) * 우수 경영체 선정을 대상으로 무이자 인센티브 등을 통한 브랜드경영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화된 축산브랜드경영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지원(6월) ○ 체계적 브랜드 관리를 위해 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경영지침서 발간·배부(2,000부, 6월) ○ 생산·유통·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보급(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의 수준을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후 우수 브랜드 인증 또는 브랜드 경진대회 참여 유도 ○ 일정 규모이상 농가 조직화, 품질·위생관리 브랜드규약제정 등 일정기준을 갖춘 경영체 31개소를 선발하여 834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19개소, 50,050백만원) * 돼지(12개소, 33,340백만원) ○ 전년도 사업대상 경영체의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지원과 향후 개선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경영체에 85억원 무이자 인센티브 지원
<p>□ APC·LPC 등에 대한 경영평가 및 우수조직 차등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유통 종합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제도」 연구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에 의한 산지유통센터 및 전문조직을 대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연구용역 및 후속조치 완료(T-plus, 5억원, '05.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APC 및 전문조직)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분(5%, 20, 25, 25, 20, 5)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C 등 도축장에 대해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금리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권(1/3) 0%, 중위권(1/3) 3%, 하위권 지원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에 따라 47개 조직에 인센티브 자금 482억원 지원(1년, 무이자) 완료('06.10.27) * 그룹별로 차등금리 지원(3%→1~3%) 예정('06.1.1일부터) ○ 우수조직 경영컨설팅 대상 통보 및 부진 조직에 대한 경영개선 클리닉 실시중 ○ 한국소비자연맹 주관으로 전국 119개 도축장(소·돼지·닭) 현지실사 후('05.2~5월) 평가결과 발표('05.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권 이상 도축장 지원신청 접수('05.6) 및 지원계획('05.2/4분기) ○ LPC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및 지원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C 경영평가 및 컨설팅 사업 실시 * 한국산업개발연구원('05.3~9월) ○ LPC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 실시 및 운영자금 차등지원
<p>2.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 개선</p> <p>□ 파렛트출하 및 도매시장 하역기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물류설비·장비 구입 지원 ○ 농산물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 ○ 파렛트 출하 유도로 물류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생산자조직,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등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억원('05.6.10현재 100% 집행) ○ 산지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국고보조 60, 자부담 40 조건으로 76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0월말 현재 67억원 집행(88%) ○ 산지유통센터별 파렛트 출하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10%출하 추진('05.3.31) - 출하실적점검 및 '06계획: 11월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 및 시설현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거래제도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 ○ 농산물의 청소비 절감과 소비지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추진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가·수의매매 확대, 도매시장법인 경영사업 확대 등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5회), 실무협의회(3회), 공청회(2회) - 법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대로 추진 ○ 마늘포장화대책추진 :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도매시장내 주대마늘 반입 전면 금지 ○ 배추·무 포장화대책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혁신 실무(9.5), CEO포럼(9.8) ○ 개장 20년이 경과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05.4~8월)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인정 * 총사업비 : 5,066억원, 기간 : '06~'16년
<p>□ 소모성물류비 절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목표 : 53.9% ('06년 1/4분기 산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성물류비절감 추진사항 중간 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유통공사 유통조사팀(10.6) ○ 예비조사결과 : 55%(추정)
<p>□ 종합적 물류효율화 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비용·저효율 물류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개선 및 소비자가격 상승요인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물류혁신위원회 구성 운영(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물류현황 및 물류혁신방향 ○ 제2차농산물물류혁신위원회 개최(6.29) ○ 분야별 T/F구성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소비지·운송 T/F회의 총15회 개최 · 각 분야별 물류개선 방향 논의 ○ 농산물물류효율화대책 발표 12월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물류혁신위원회 개최(11.28) - 경제정책조정회의 상정 : 12월 초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3.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강화</p> <p>□ 농식품산업 육성종합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농식품산업 수립완료 ○ 농식품산업육성 T/F구성 ○ 업계 전문가 의견 청취 <p>□ 국산농산물과 식품산업간 푸드 체인 강화대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전처리시범사업 추진 ○ 원료수매자금지원 ○ 국산과실주 경쟁력강화 지원 ○ 전통식품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 수립 완료 ('05.9.27) ○ 관계전문가 T/F구성(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팀 실무회의 3회 ○ 의견청취 및 회의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품정보원, 외식학회 등 의견수렴(9회) - 업계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3,215개 업체) - 전통식품육성실무협의회 구성(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 개최 및 의견수렴(2회) - 식품산업발전 혁신연찬회 개최 ('05.5.26~27) - 식품산업국제심포지움 개최('05.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계획 수립 완료(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30억원) ○ 원료수매자금 지원 완료(1,021억원) ○ 주세율인하(30%→15%), 주류출고 가격 표시제 폐지(2.18) ○ 전통식품명인지정(2건), 가공식품 KS규격인증(9건), 지리적표시제등록(4건), 전통식품품질인증(24건), 농민주 주류제조면허 추천(40건)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농촌홍보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촉진 홍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계획 수립 ○ 소비촉진 홍보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 ○ 한국식문화 해외홍보 ○ 국산농축산물 소비자 만족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계획 수립 (3.14)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정보문화센터”발족(7.6) ○ TV 등 영상매체 활용 우리 농식품 우수성 및 이미지 제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농산물 우수성 및 이미지홍보 TV 및 라디오 캠페인(7~9월) - 농식품 건강식단 홍보 TV연속기획물 제작·방영(7.21~11월중, SBS) - 도심 전광판 활용 이미지 홍보 (9.1~10월중) ○ 어린이·청소년 등 홍보대상별 차별화 된 홍보로 홍보효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싸이월드내 미니홈피 개설 농식품 온라인 홍보(9.7~11월중) - 어린이 대상 우리 농식품 홍보만화 제작 추진(제작중) ○ 우수브랜드 발굴·육성으로 농산물 브랜드화 촉진 및 브랜드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 개최 (10.13~15)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시범사업 추진 ○ 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농촌사랑 한가위 대축제(9.9~13) - '05 서울국제식품전시회 개최(11.2~5 예정) ○ 농식품홍보대사 위촉 (3.2, 양미경) 및 홍보활동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르동블루□□와 김치퓨전요리 책자 발간(5천부), 시연회 개최(5회) - 김치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음식요리 교실개최(동경, 3.9) ○ 목 표 : 소비자 만족도 50%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대상 : '05.9.26~11.10(1,000호)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4. 농식품 수출확대</p> <p><input type="checkbox"/> 농식품 수출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액 : 23억불 <p><input type="checkbox"/> 수출박람회 참가·해외관측전 개최 등 신규시장 개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박람회 참가 : 23회 ○ 해외관측전 : 53회 ○ 김치학술세미나 개최 <p><input type="checkbox"/> 농식품 홍보대사 위촉 및 Whimori Week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홍보대사 위촉 및 지원활동 <p>○ Whimori Week 행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1~9월) : 1,576백만불 - '05년 목표대비 68.5% 달성 - '04년 동기 대비 8.1% 증가 * 10월말 추정실적 : 1,840백만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박람회 참가 : 19회 ○ 해외관측전 : 29회 ○ 김치학술세미나 개최(3.9) - 동경식품박람회장 국제회의실 * 해외관측전은 농산물 수확기인 9~11월에 집중 실시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대사 위촉 및 농식품홍보 활동 전개 - 홍보대사 위촉 : 양미경(대장금 등 출연) / '05.3.2~'06.3.31 - 동경식품박람회('05.3.8), 홍콩식품박람회('05.5.10)와 대만식품박람회('05.6.18)에서 한국궁중요리 시연 및 팬사인회 실시 - 일본 NHK TV 공동주최 한국식품 특별홍보전('05.10.30)에서 언론인터뷰 및 팬사인회 등을 통한 한국식품 우수성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mori Week 개최 - 기간 : '05.5.25~6.19 - 장소 : 일본 야스코 등 대형유통업체 198개 매장(매장별 1주일 내외) - 내용 : 시연시식 및 관측홍보, 판매장 '디스플레이 콘테스트' 등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새로운 수출유망품목 개발 지원</p> <p>○ 수출유망품목 : 25개 품목</p> <p>□ Whimori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마케팅 강화</p> <p>○ 휘모리 부착품목 수출 - 파프리카 3,500톤 / 국화 2,000만본 / 배 300톤</p> <p>○ 공동대표브랜드품질관리위원회 조직 및 매뉴얼 제작</p>	<p>○ 수출유망품목 선정 : 27개 품목 - 신선 : 7품목(아스파라가스, 오이 등) - 가공 : 20품목(선식, 머루주, 볶음김치 등) * 선정품목에 대하여는 정보·기술지원, 마켓테스트, 시험수출 등 토탈 지원 (’05소요예산 : 700백만원)</p> <p>○ 휘모리 부착품목 수출 추진(10월말 현재) - 파프리카 2,895톤(83%), 국화 1,095만본(55%), 배 14톤(5%)</p> <p>○ 품질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위촉 / 6.9) ※ 위원구성 : 농림부, 원예연구소, 대학, 수출업체 및 생산자 대표 - 운영내용 : 품목별 재배, 선별, 포장, 물류 등 품질관리매뉴얼 제작관리</p> <p>○ 품질관리매뉴얼 제작 - 제작부수 : 500부(5품목×100부) - 제작품목 : 파프리카, 국화, 배, 장미, 방울토마토 - 배 포 처 : 수출업체, 농가 등 - 추진일정 : 제작업체 선정 및 제작 (6~11월초), 완료 및 배포(11월중순)</p>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한류열풍과 연계, 일본내 한국산 소비 붐 조성 마케팅 강화</p>	<p>○ 일본 아이치엑스포에 참여하여 한국 식문화 홍보관 설치 및 판매장 구축 ('05.3~9월) - 한국식문화 홍보관(5평), 판매관(10평)</p> <p>○ 일본 NHK TV와 공동으로 현지 인기드라마인 대장금과 연계한 한국식품특별홍보전 개최를 통해 한국농식품 이미지 가치 제고 및 한국식문화 붐 조성 - 일시 및 장소 : NHK홀 및 로비 ('05. 10.30)</p>
<p>○ “르 꼬르동 블루”와 공동으로 한국 농식품 마케팅 강화</p>	<p>○ 김치요리책자 제작 및 배포 - 영불판(3월), 한일판(11월 예정)</p> <p>○ 김치퓨전요리 홍보 및 보급 - 국제박람회참가시 시연시식회 개최 : 베를린(1월), 동경(3월), 쾰른(10월) - 꼬르동블루 및 해외 aT Network 활용 시연시식회 : 캐나다(2월), 한국(5월), 멕시코(6월) - 출판기념회 개최 : 프랑스(3월), 영국(4월), 한국(5월)</p>
<p>□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정비</p> <p>○ 원예전문생산단지 활성화</p> <p>○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개선</p>	<p>○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사 및 평가 완료 (104개소. '05.4) - 평가 결과 우수전문단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지원(7~10%)</p> <p>○ 우량수출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기준 개선 - ('04) 10만불 이상 수출업체 → ('05) 15만불 이상</p>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5. 자조금제도 활성화</p> <p>□ 품목별 자조금 단체 결성 적극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 : ('04) 11개 → ('05) 17 ○ 축산 : ('04) 5개 → ('05) 6 <p>□ 자조금 단체 생산점유 비중 확대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지원확대를 위한 농안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 생산액의 1%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분야 17개 자조금단체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사업계획 심의를 위해 자조금 분과위원회 구성(4.22) - 상반기 파프리카 사과, 분화 등 13품목 승인(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지포도, 절화는 신규승인 * 분화 : 기존 선인장을 포함한 12개 품목으로 확대 조성 - 하반기 양파, 토마토, 가지, 당근 4품목 신규승인(9.12) ○ 축산분야 6개 자조금단체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의무자조금 조성결정('05.2) ○ 농안법 시행령 개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회의 심의(6.9) - 국무회의 심의(6.14) - 시행령 개정(6.23) 및 시행(7.1) ○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등지원, 지원확대 근거마련을 위한 농안법 시행령 개정 등(4.22) - 생산자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문가 토의(4.27) · 축산·원예분야 토론회(5.4) · 원예분야 토론회(5.24) - 자조금분과위원회(9.12) -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05.10~'0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조금사업분석 및 외국의 자조금사업 사례분석 · 자조금사업 관리개선과 생산자조직의 사업역량 배양 등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 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 : ('04)10.2%→ ('05) 15.0 - 과수 : ('04)41.6%→ ('05) 48.0 - 축산 : ('04) 26% → ('05) 37% 	<p>○ 채소분야 점유비중 :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프리카 76%, 겨울배추 52, 고랭지 채소 60, 토마토 32, 가지 70, 당근37, 양파 62 <p>○ 과수분야 점유비중 : 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다래 66%, 감귤 57, 단감 56, 시설포도 72, 사과 74, 배 32, 노지포도 55 <p>○ 축산분야 점유비중 :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 92%, 낙농 52, 양계 32, 양육 2, 한우 61, 오리 0
<p>□ 축산의무자조금 조성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돈 이외 한우 의무자조금 추가조성 ○ 낙농, 양계 등 의무자조금 조성 유도 ○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연구용역 ○ 축산자조금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제도 개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05.3) ○ 의무자조금(두당2만원) 거출('05.5) ○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대의원 선출 등 제반절차 추진 중 ○ 자조금 사업 발전대책 세미나개최 (자조금연구원 '05.2) ○ 자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05.5) ○ 축산자조금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완료('05.10) ○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05.10) ○ 일부개정안 법제처 및 규제위 심사 ('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 결원시 보궐선거 규정 및 관리 위원회에 학계·유통업계 전문가 추가 등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계약재배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사업물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950천톤(채소 789, 과수 161) → ('05.P) 1,130(채소 950, 과수 180) ○ 참여농가 최소계약면적 상향 조정 (0.2ha → 0.3) 등 제도개선 ○ 과잉생산시 폐기 등 수급조절 <p>□ 농업관측정보 수집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패널운영 및 조사강화(품목별 연 4회조사) ○ 산지정보 수집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DA보급 확대(10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1,085천톤(계획대비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사업 실무자교육(3~10월) : 4회, 434명 - '05사업안내 홍보(3~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광고 12회, 팜프렛 3만부 등 ○ 참여농가의 최소계약면적 상향조정, 김치업체 등 민간법인체에 사업문호 개방, 위약농가 제재 강화 등 사업지침 개선(총 2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계약기준 상향 설정 - ('04) 0.2ha(고추,마늘, 등 저장성품목 0.1) → ('05) 0.3ha(저장성 0.2ha) ○ 겨울배추 및 대파 가격하락으로 산지 수매·폐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배추(1.14~2.14) : 245ha - 겨울대파(1.17~3.31) : 1,266ha ○ 양파 재배면적 증가 전망에 따라 생육기에 면적감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면적(2.1~3.15) : 588ha ○ 소비구조 파악을 위한 소비자 동향 조사 실시(소비자 패널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 과일·과채, 축산으로 나누어 각각 연 4회 조사 ○ 산지정보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웹(web) 및 PDA 조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web)조사를 위한 기반 확충 : 2005년 2월 - PDA 확대 보급계획 수립 및 확대 보급 : ('04) 60 → ('05) 100대 추가 보급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산지유통조직육성

<총 평>

-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운영실태 평가를 **산지유통종합평가 체계로 개편**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별 차등지원 체계를 마련**
- 공동마케팅조직과 브랜드경영체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규격화된 물량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
 - 규격화·규모화된 물량확보를 위해 회원제 공동계산조직을 재구성하는 등 **전업농을 중심으로 공동계산 확산노력**
 - 축산물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의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시장개방·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전문마케팅조직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반면, 농산물 산지조직의 **경영규모는 영세한 상황**이며 **전문인력, 유통시설 등도 아직 미흡한 실정**
 -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소규모 도축장과 경쟁으로 가동률이 낮아 많은 업체가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

- ♣ **공동마케팅 조직**은 산지유통조직의 전문화·광역화·조직화를 위해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이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체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는 산지농가와 연계하여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일괄처리하는 유통주체
- ♣ **브랜드경영체**란 산지농가를 조직화 또는 계열화한 주체를 뜻하며 생산·유통과정을 거쳐 판매단계까지 브랜드 경영체의 상표로 판매하는 것을 말함
- ♣ **축산물종합처리장(LPC:Livestock Packing Center)**는 산지농가와 연계하여 가축의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일괄처리하는 유통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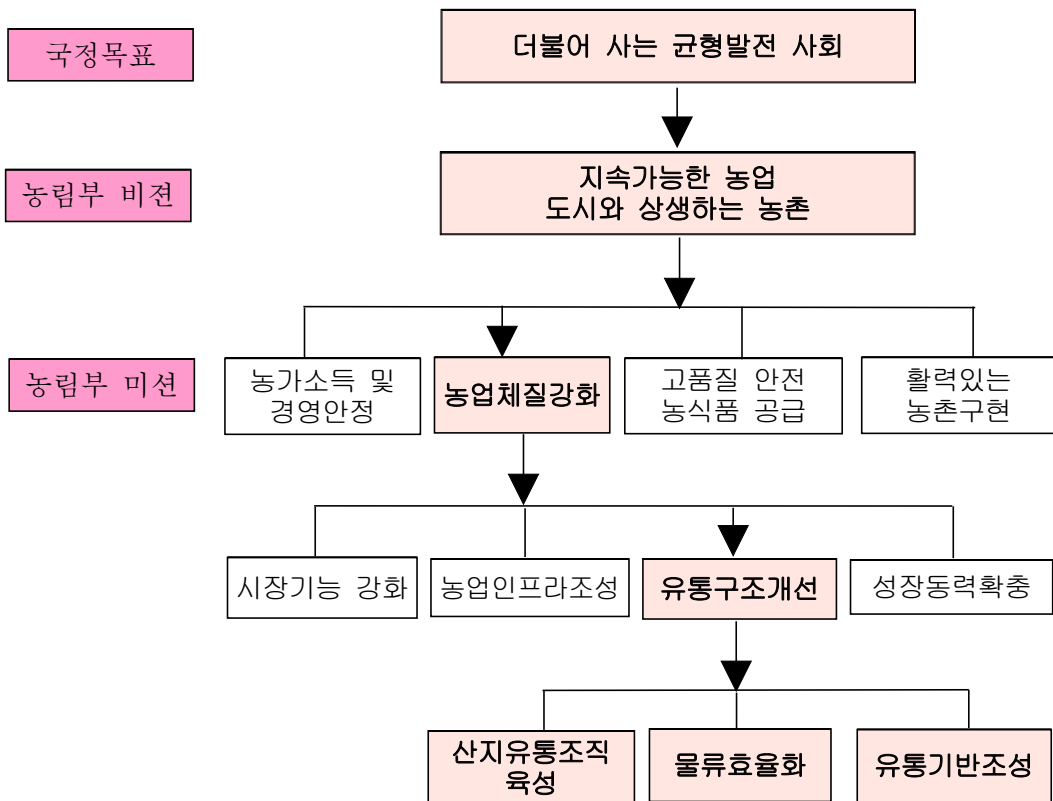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산지유통조직육성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시장개방 확대, 구매자·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시장구조로의 변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책

○ 산지유통조직 육성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농업의 체질 강화** 등 상위 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구매자·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시장구조로의 변화, 고품질·친환경·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증가라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
 - 농산물 시장구조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농산물의 품질관리 및 마케팅을 뒷받침할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필요
 - * 대형유통업체 취급 비중 : ('03) 9.7% → ('04) 13.0%
 -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교섭력 제고 및 품질고급화·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산지유통주체의 규모화·조직화가 필수 과제
 - 또한 산지유통의 핵심주체인 APC, LPC, RPC 등의 경영상태가 적자인 업체가 상당수인 상황
 - * APC 적자개소수 (총개소수) : ('02) 36개소/204개소 → ('04) 29개소/213개소
 - * LPC 적자개소수 (총개소수) : ('02) 6개소/7개소 → ('04) 5개소/ 7개소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수요확대 ○ 식품산업 비중 확대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 신뢰 ○ 수입농산물과 비교시 신선도 유지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고급화·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강화 ○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홍보 전개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조직의 영세성 ○ 경영상태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유통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 ○ 책임·전문경영체제 확립 필요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 산지유통조직육성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유통조직의 역할 확대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 다만 원예작물 처리비중,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 브랜드육 유통비중, 경영 개선 수준 등에 관한 **성과지표 보완 필요**

- 산지 마케팅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13년까지 산지마케팅조직 유통 점유비를 원예작물 50%, 축산 60%까지 확대할 계획
 - 다만 산지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은 '04년부터 시작되어 초기인 점을 감안, 공동마케팅 조직 수와 매출성장을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
- 축산물 브랜드육성계획 수립시 '13년까지 축산구조를 우수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확대해 나갈 계획
 - 또한 축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주체인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경영 개선과 브랜드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처리물량 확대를 성과지표로 설정
 - * 한우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 : ('03) 17.4% → ('08) 35% → ('13) 50%
 - * 돼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 : ('03) 41.4% → ('08) 55% → ('13) 70%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실적치
공동마케팅조직수 (공동,100억이상 누계)	6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후 선정(공고 11.7~20)	'04년 처음으로 9개 조직 선정
매출성장률(연평균, %)	9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8.5
공동계산비중(%)	12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9.8
축산물종합처리장 도축 점유율	소 11%, 돼지 18%	도축실적 집계(매월)	소 10%, 돼지 17%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경쟁력 있는 산지유통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규모화·전문화된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육성, 가공·유통시설(APC, LPC)에 대한 경영평가** 등의 정책수단을 마련·추진
- 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해서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홍보 및 정보화 비용 등 정책자금 지원('05:1,132억원)
 -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원칙에 따라 우수조직에 시설지원 집중
 - 경영개선·기술개발 등을 위한 경영·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농가조직화 등 축산물 브랜드경영체를 선정('05:31개소)하여 원료구매·브랜드 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05:834억원)
 - 축산물 브랜드에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중심의 축산물 브랜드인증제를 도입하고 브랜드경진대회·전시회 개최
 - 브랜드의 위생안전·품질통일을 위해 경영지침서 보급
 - 브랜드경영체의 생산·유통·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가 진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 산지유통센터(A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 산지유통주체의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무이자자금 지원
 - * 산지유통종합평가기준 : 독립 체산제, 전문경영인 책임경영체제, 공동브랜드 및 품질·안전성 규약, 품질관리전문인력, 상품화가능 통시설, 광역 원료확보권 등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농업인,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공동마케팅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사업지침 작성시 **설명회, 간담회,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조직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 개최(2회)하여 대상자 선정 및 정책방향 토론
 - 산지유통정책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종사자 간담회 개최(2회)
 - 산지유통종합평가 추진을 위해 설문조사·설명회·전문가회의 등 개최
 -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설정을 위한 설문 설문조사 실시(393개 조직, 6.9)
 -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전문가회의 개최 (6.29)
 - 산지유통종합평가 관계기관 및 종사자 대상 공청회 실시(영동, 7.7)
 - 산지유통조직 및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대전, 7.14)
- 축산물 브랜드경영체의 선정·사업지침 작성·경영지침서 작성·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 브랜드경영체 선정 및 사업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심의회** 개최 (2회)
 - 생산자단체, 학계, 관련기관 전문가로 T/F(소, 돼지)를 구성하여 운영(10회)하고, 축산물 브랜드경영지침서 발간 배부(6.30)
 - 브랜드 사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정책방향 설명을 위해 사업대상자 및 신청희망자가 참여하는 연찬회 개최(9.6)
 - 축산물 브랜드 현황 및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 (10.28~30)**
 - * 브랜드에 대한 생각 : 우수한 품질(40%), 위생과 안정(32%), 믿을 수 있음(23%)
 - * 향후 축산물 구입기준 : 브랜드(58%), 가격(16%), 판매업체(15%), 기타(11%)
- **LPC 경영평가** 관계자 간담회('04.6) 및 개편방향 설명회('05.9)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농림부 고유 업무로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이 문제되지 않음**

- 농림부의 고유 업무로서 타부처 정책과의 관련성은 없음
 - 투융자 효율성 제고 및 명확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농림부 사업중 **유사사업인 산지전문조직, 원예작물 계약재배, 산지일반조직 지원 사업의 통합을 추진중**
- 또한 매년 산지마케팅조직에 대한 사업자 선정·사업 집행 및 실적 평가를 위해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지자체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중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다만 **산지유통종합평가**의 경우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

-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 및 자금지원, 공동마케팅 조직 시범사업 자금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지원 완료('05. 5)
 - 산지유통전문조직 : 108개소(2,508억원), 우수조직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47개소, 482억원) 지원
 - * '05년도 새롭게 도입·시행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 공동마케팅조직 시범사업에 대한 시행지침 마련·시행('05.3월) 하고 독립회계 등 기반구축이 완료된 조직에 대해 우선 자금지원('05.5)
 - * 사업비(3%, 3년, 932억원), 무이자인센티브(200억원, 1년) 지원완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 33개소, 19,480백만원 지원
 - 균특회계로 이관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사업**도 10월말 현재 당초 계획(47개소, 15,975 백만원) 집행 완료

- **축산물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자금 지원대상자 선정(6.25, 31개 경영체) 및 운전자금 지원 완료 (834억원)
 - '04년 브랜드사업 참여 경영체 (26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실적을 평가 (05.7월)하여 3개 우수 경영체에 85억원을 지원(9월)
 - 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05.3), 업체신청 및 현장실사 실시('05.4-12월)
 - 브랜드 경진대회(8개 브랜드 선정) 및 브랜드 전시회 개최(10.28~30)
-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해 **산지유통주체 운영실태 평가** 완료('05.9)
 - 평가결과 **우수조직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경영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강구·실행**토록 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유도
 - * 부진조직 경영클리닉 지원('05.11~12) : 총33개(농협 25, 영농법인 8)
- 외부 전문기관(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 통한 **LPC 경영평가 완료**('05.2월)
 - LPC에 대해 운영자금(7개소, 220억원) 지원 완료('05.6월)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 공동마케팅조직	정상
규모화된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육성	정상
APC·LPC 경영평가 후 차등지원	정상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시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 제도개선, 현지 출장 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사업 실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농림부장관 훈령)**을 수립하여 농업인·지자체·관련기관에 배포

-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절차, 자금 전수배, 결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 점검을 위한 **사업담당자 현지점검** 실시
 - 산지유통조직(2회), 브랜드 경영체 육성(2회), LPC·APC(5회)
- **축산물 브랜드경영체**의 사업의지, 계획과 발전가능성 등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된 경영체에만 지원하고 준비가 부족한 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브랜드경영체 지원실적 : ('04) 680억원 → ('05) 834(22.6% 증)
- **축산물 브랜드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추진**
 - 3통(혈통, 사료, 사양관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브랜드사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원자금 용도를 사료통일에 우선 지원되도록 제도 개선('05.2월)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법인간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사업실시규정 개정**('05.9월)
 -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장관 훈령)에는 농업법인의 내실화와 2중 지원의 방지를 위해 농업인이 2중 가입한 법인의 경우 정책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농업법인 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2중 가입이 발생하고 있어 농림사업 실시규정을 개정하여 조합공동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예외조항** 신설

- 사업대상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브랜드경영체 평가기준 보완 및 소규모 농가의 사업 참여 허용** ('06년부터 적용)
 - 친환경(약취, 분뇨처리 등), 위생적인 도축·가공장 이용, HACCP 인증 사료공장의 사료 이용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
 - 브랜드사업 참여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자금의 금리를 인하
 - 브랜드경영체의 소규모농가(한우, 돼지) 관리실적을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소규모농가도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유도
- 현재 별개로 실시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와 LPC 경영평가 통합** 방안 마련 ('05.9, '06년부터 시행)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제외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홍보수단도 토론회, 설명회 중심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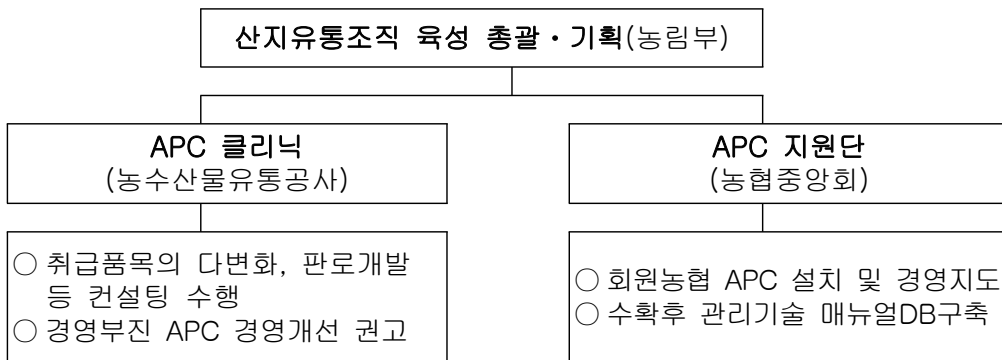
- 산지 현장농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또는 참석하여 **산지유통정책방향**을 홍보하고 의견수렴
 -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 농가 등 현장 토론 등 추진(3.26,부여)
 - 광역마케팅조직화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4.27, 영천)
 - 산지유통전문조직 종사자에 대한 유통정책방향 설명 (5.21, 안성)
 -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개최(농민신문사, 6.16)
 - 경남지역 “농산물유통혁신 포럼” 대토론회 참석(경남 창녕, 7.7)
 - 전남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의 활성화 세미나(나주, 8.17)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 경영개선 교육 및 홍보 실시(10.11, 수원)
 -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등 발전을 위한 전문가 대담 개최(안성, 8.23)
 -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산지유통 Marketing-up포럼**」 추진 (안성, 봉화, 논산, 평창, 청원, 무주 등 6회 실시)
-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육성·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전개
 - '04년도 “**우수 축산물 인증브랜드 발표회**” 개최 ('05.01.26)
 - '04년 우수 브랜드로 인증된 경영체(한우 8, 돼지 10)에 대한 홍보

- 축산물 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10.28~30)
 - 브랜드전시회시 보도자료 배포, 신문·방송에 광고·보도
- 브랜드 사업대상자 및 신청희망자가 참여하는 연찬회 개최(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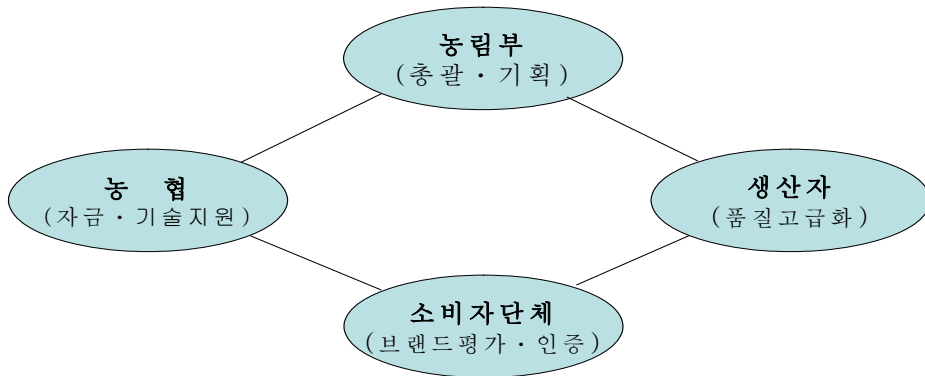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인 농협중앙회,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농림부는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위한 총괄·기획 기능 수행
 -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 APC 설치 및 경영·기술지도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APC클리닉을 설치하여 APC 컨설팅 지원



-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육성 및 축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농협·소비자단체·생산자가 역할분담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 (달성도 105%)
- ◆ 그러나 일부지표(매출성장율 등)는 '06.5월경 실적치가 나올 예정

- '04년말 선정된 **공동마케팅조직**(9개소) 지원 완료
 - '05년도 공동마케팅 조직 6개 선정을 위한 신청 공고중(12월 선정 계획)
-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평가결과 **매출, 공동계산** 등이 '03년 대비 '04년에 약 10% 수준 향상
 - 개소당 평균매출 실적 : '03) 83.3억원 → '04) 91.5 (증9.8%)
 - 개소당 평균 공동계산실적 : '03) 1,048백만원 → '04) 1,220(증16.4%)
 - * '05년 사업추진 결과는 '06.5월경 나올 예정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도축점유율**은 10월말 현재 전체 도축두수중 **소는 12%, 돼지는 19%** 수준으로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
 - 평균 도축두수(일) : (04) 소 1,921, 돼지 48,734 → (05) 소 1,988, 돼지 44,60
 - LPC 도축두수(일) : (04) 소 187, 돼지 8,300 → (05) 소 231, 돼지 8,347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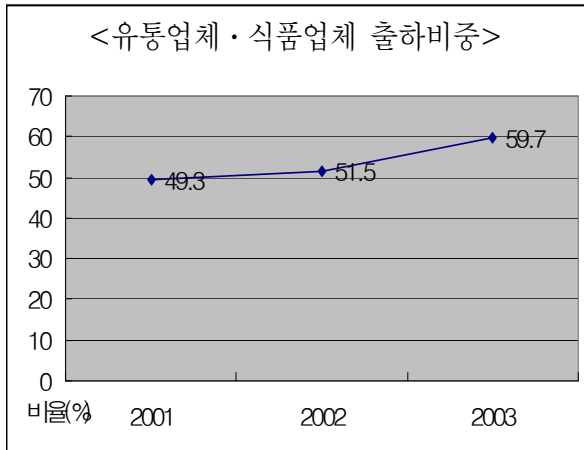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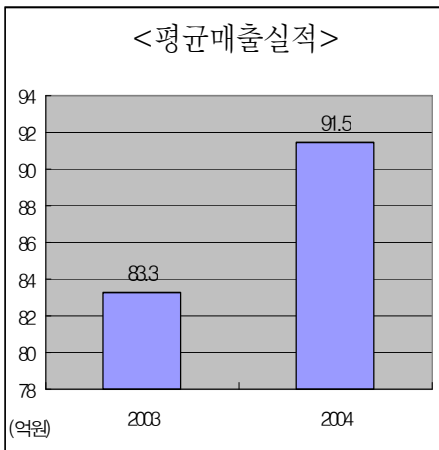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공동마케팅조직 선정	6	6개소	100%
매출성장율(연평균, %)	9	-	-
공동계산비중(%)	12	-	-
LPC 도축 점유율	소 11%, 돼지 18%	소 12%, 돼지 19%	소 109%, 돼지 106%
목표달성도 평균	105%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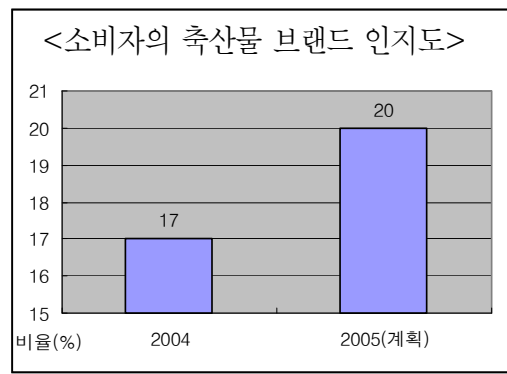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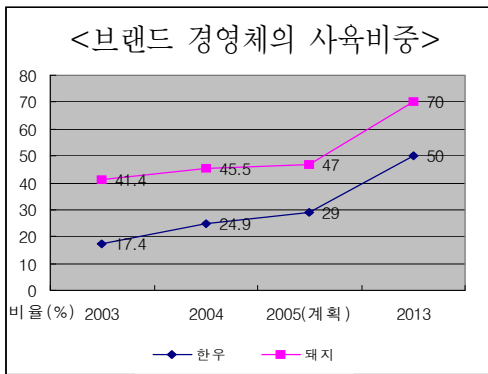
◆ 산지유통조직의 매출증가, 브랜드경영체의 사육비중 확대 및 인지도 증가, 경영개선 등의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

- 소비지 유통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산물 마케팅사업**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상품물량의 규모화, 품질균일화가 가능하게 되어 대형 유통업체 등과 거래할 수 있는 **선진적 산지조직 성장 토대** 마련



- 포장화가 정착되고, 규격 상품화가 진전되어 파렛타이징, 바코드 등 **선진적인 물류효율화 기반**을 마련
- 산지유통시설을 중심으로 예냉·세척 등 **체계적인 수확후관리**가 가능하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상품성 향상에 기여
- 경영평가제도가 정착되면 독립법인화, 책임경영체제·독립채산제,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시 등 **유통개혁 및 경영개선** 기대

- **우수 축산물브랜드**를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우수 브랜드육 생산·유통 및 축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 브랜드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위생·안전성, 축산업등록, 방역, 전업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등 당면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여 정책 투입 성과율 제고
 - 개별 농가위주의 각종 제도 및 지원방식을 경영체 단위로 전환시켜 **농가 체질강화** 유도
 - 시행초기라 가시적인 효과는 논의하기는 다소 이른 상황이나 경영평가가 정착되면 **축산물종합처리장, 도축장의 경영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나.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

<총 평>

- 농산물물류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효율화대책을 논의하고, 산지·운송·소비지·총괄 등 분야별 T/F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물류효율화 대책을 수립**
 - □□농산물 물류효율화□□는 농산물 물류의 각 단계에서 지출되는 운송비, 포장비, 감모·청소비, 보관비, 하역비 등을 절감하여 농산물 물류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 농가소득증대 및 소비자가격 상승요인을 억제하는데 기여

- 도매시장제도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여 정가·수의 매매 확대 등 **거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매시장활성화와 경쟁력제고에 기여
 - 관련부처 협의 진행중으로 절차진행 과정에서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어 연내 개정완료는 힘든 상황
- 산지농산물의 파렛트 출하 및 도매시장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하역비, 운송비 등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의 포장·규격 출하율을 높이는데 기여
 - 다만, 파렛트의 출하후 수거 및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양의 분실이 발생하는 문제는 개선할 필요

☞ 소모성물류비란?

전체 물류비 항목 중 부가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되는 포장·가공비, 보관비 등은 제외하고 정부의 물류효율화 정책으로 비용절감이 필요한 운송비, 하역비, 감모·청소비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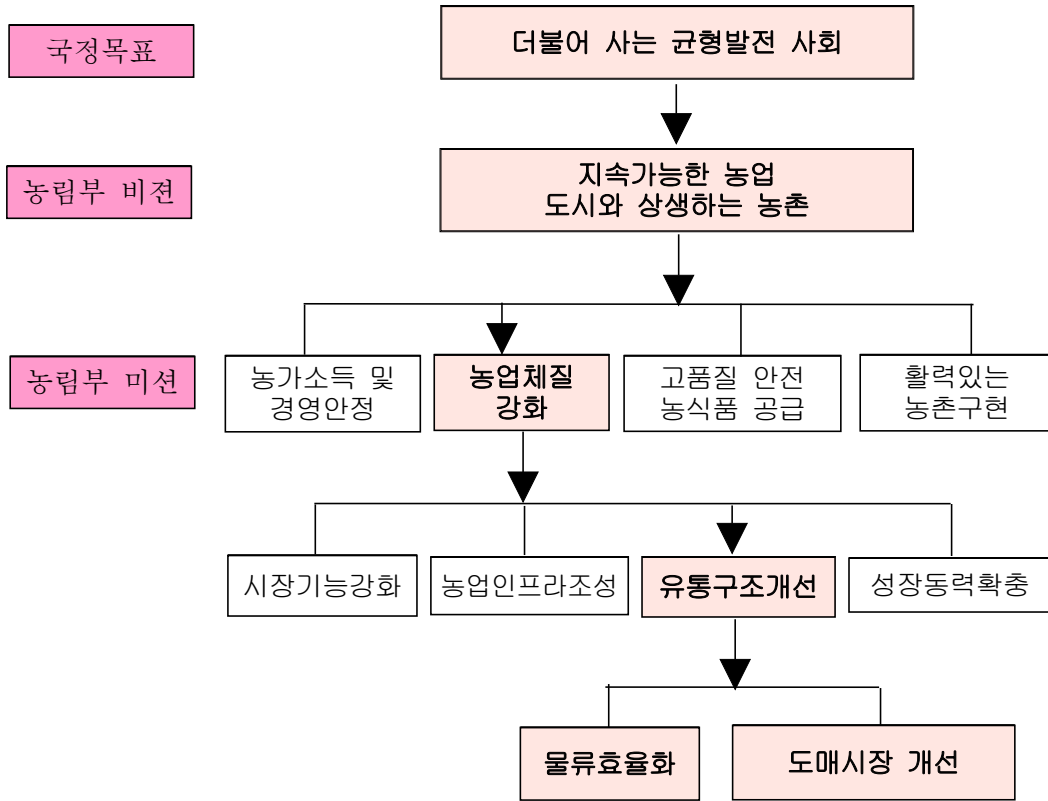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농축산물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제도 개선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전자상거래 발달·도로 및 유통수단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책

-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농업체질강화** 등 상위 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및 소비촉진이라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비용중 소모성물류비를 절감하고 도매시장제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물류효율화 추진
- 전자상거래의 발달, 농산물 가공처리·보존기술의 발달, 도로 및 유통수단의 발달, 저가 외래농산물 수입의 증가 등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주변 환경의 변화에 비해 농산물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시설장비 등이 아직 부족하여 농산물 가격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필요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국민 소득 증대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가	○ 대외개방 가속화 ○ 농산물의 특성상 소모성물류비의 비율이 높음
강점(S)	전자상거래의 발달, 가공처리보존기술 발달, 도로 및 유통수단의 발달 등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 능력 확대	○ 안전농산물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인증기준 강화 ○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하여 소비촉진	하역장비의 구입 및 이용지원, 냉장유통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감모비, 운송비, 하역비 등의 소모성물류비 비율절감 추진
약점(W)	시장거래제도의 미비점, 시설부족, 지방유통시설의 기능부족 등으로 인한 유통지연	○ 산지·운송·소비지 별로 특색에 맞는 농산물 물류 혁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추진	○ 도매시장거래제도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추진 ○ 주대마늘 반입금지 등 비용 유발요소가 큰 요인의 제거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효율화를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소모성물류비 비율을 산정하여 전년 대비 효율화 정도를 측정 ◆ 산지·소비지 하역기계화율 등의 지표를 보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 선정필요

-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거래제도개선을 위해 비효율적인 물류비의 감축, 도매시장제도 개선, 종합적인물류효율화 대책 수립 등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
- '04년부터 '13년까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 따라 농산물 하역 기계화율을 파렛트 출하가능 농산물의 50%수준까지 제고할 계획
 - '04년 농산물하역기계화율은 17% 수준

- 구체적인 성과지표마련을 위해 물류효율화지표로써 소모성물류비 비율을 55%이하로 제시
- 도매시장제도개선을 위해서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여 거래제도개선을 마련코자함
- 하역기계화를 지원하고 물류혁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3년까지 소모성물류비 비율을 5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정책목표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소모성물류비감축	55%	소모성물류비 달성여부	59.5%
도매시장제도개선	제도개선	농안법 개정추진	
물류효율화대책 수립	대책수립	대책수립여부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 T/F구성 등의 정책수단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농산물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을 위해서 농안법 개정추진 위원회, 물류혁신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
 - 이를 통해 농안법개정, 농산물물류혁신종합대책 마련,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농업인, 유통상인, 농업인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안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추진기구 구성·운영

-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 성진근)을 구성하여 유통주체별로 제시된 농안법 개정수요를 5차에 걸쳐 논의
 - 1차(3.14일), 2차(4.1일), 3차(5.13일), 4차(6.10일), 5차(8.5일)
 - 유통인, 농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마련함
- 위원회의 논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실무급협의회□□(좌장 : 허길행 Krei부원장)를 3차례 개최
 - 1차(4.20일), 2차(4.29일), 3차(5.19일)
- □□실무작업반□□ 상시 운영
 - 개정수요에 대한 실무검토 및 대안작성을 위해 담당실무(반장 : 유통정책과장) 및 농협, 유통공사의 전문가로 구성
- 개정추진위원회 등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정법안을 작성, 지방(광주, 5.27)과 서울(6.24)에서 각기 1회씩 공청회 개최

□ 농산물물류혁신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2회)

- 1차(3.3일), 2차(6.29일)
- 농산물물류혁신종합대책(초안) 수립 실무작업반 운영(4.18~20)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류혁신대책(안) 마련
- 총괄·산지·소비지·운송 TF회의 총15회 개최
 - 각 분야별 물류개선 방향 논의
 - 추가로 □□배추·무 포장화T/F□□구성(10.21)하여 배추·무의 포장화를 위한 의견수렴
- ※ 농산물유통혁신실무포럼(9.5) 및 CEO포럼 개최(9.8)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 물류혁신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자부, 재경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대책 마련
- ◆ 농산물물류혁신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후 최종 확정

- 농산물물류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산물물류혁신종합대책 수립추진
 - * 농업인대표 3, 유통중사자 6, 학계 3, 관련단체 3, 관계 공무원 7인 등 22명의 위원으로 구성, 물류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사전 조율
 - 위원회 산하에 총괄·산지·운송·소비자 T/F팀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생산자, 각계 의견을 반영
- 도매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농안법개정 실무추진반에 직접관련기관인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을 반원으로 참석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 전체적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 ◆ 다만, 농안법 개정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진행에 기간 소모로 당초 일정보다 지연

- 파렛트 출하 및 도매시장 하역기계화를 위한 물류장비 구입지원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 산지유통센터별 파렛트 출하계획 수립 : '05. 3. 31 완료
 - 농산물물류기기 구입지원 : 예산 67억원(67억원 전액 집행)
 - 농산물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 예산 76억원(67억원 집행 88%)
- 시장도매인제 등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노력('05.6월 농안법 시행령 개정)
 - '05.7월부터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근거 마련
- 농안법 개정안은 차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 상정 등의 절차 수행 예정
- 농산물의 청소비 절감과 소비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추진
 - * 공영도매시장내 주대마늘 반입 전면 금지('05.4.1)

- 가락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 추진
 - 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05. 4 ~ 8월)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인정
 - 총사업비 : 5,066억원, 기간 : '06 ~ '16년
- 종합적 물류효율화 대책 수립
 - 농산물물류혁신위원회 3차회의(11.28) 개최 및 **경제정책조정회의**(12월초) 안건 상정 예정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산지농산물 파렛트 출하 및 도매시장하역기계화 추진	정상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 및 시설현대화계획 수립	지연/정상
유통환경에 대응한 종합적 물류효율화대책 수립	정상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국고지원 물류장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표준규격 물류장비에 대한 지원을 배제

- 물류기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용연수를 지정하고 물류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한 것임을 시설 및 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여 부착
 - 표준규격 물류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물류표준 인증설비□□물류기기를 의무 구입하도록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반영
- 산지유통센터별 파렛트 출하 실적점검(11월)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갈수록 치열해지는 농산물유통 경쟁환경에 맞추어 물류혁신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도매시장제도 개선을 추진

- 농산물 유통비용(22조 8,432억원)이 소비지 구입액(52조 2,727억원)의 43.7%를 차지('03년 기준)하고 있으며, 유통비용중 농산물 물류비(7조 2,267억원)가 31.6%를 차지
- 이러한 여건에 따라 농산물 물류구조개선을 위한 농산물 물류혁신종합대책의 수립, 도매시장거래제도개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산지 Pallet출하 등 적정대책 추진 중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농안법 개정안, 농산물물류혁신종합대책 마련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직접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는 부족

- 11월말 농산물물류혁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언론에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
- 도매시장 주대마늘반입금지 및 마늘포장출하대책 홍보
 - 홍보리플렛 5만매 농가까지 배포하고 PCRМ 정책고객 홍보(75천명)하고 관련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05.1.10부터 계속)
 - 소비자시민모임의 협조로 소비지 홍보실시(3.28일 토론회 개최, 5.6일 가두캠페인 실시)
 - 시장종사자(관리사무소,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설명·협조 요청 및 국회, 농업인단체, 주요 생산지역 홍보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관련기관, 학계, 전문가, 유통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

- 농안법개정위원회, 농산물물류혁신위원회에 관련기관, 학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농산물 중 **표준규격출하율**이 낮은 배추·무 포장화 방안을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5.8.30~11.29)
- 농산물의 효율적인 운송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산물 표준운송 규격제정방안 연구용역('05.9.27~12.26)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농협중앙회(농협가락공판장)과 협의하여 **배추 포장 출하 시범사업** 실시('05.11.7~12.16, 38일간)
 - * 흥성 결성농협 650톤(100대), 서산 해미농협 520톤(80대)

⑤ 목표의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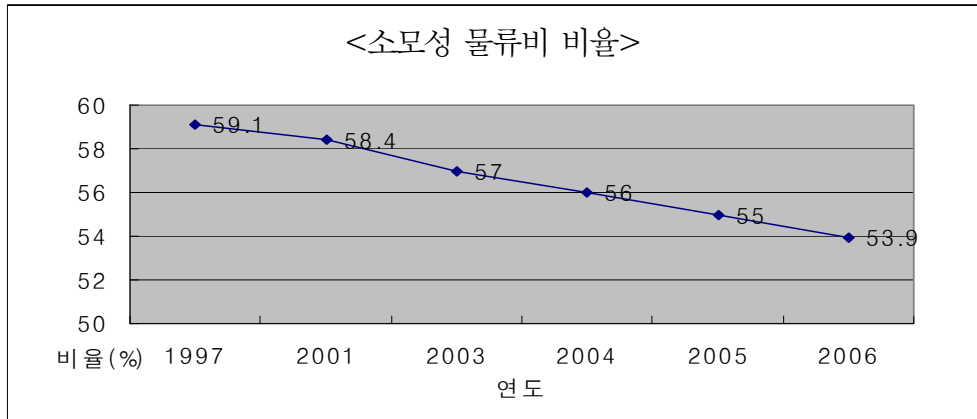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농안법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 등 절차진행으로 계획보다 지연됨

- 소모성물류비 비율 목표달성 : 계획 55%, 달성 55%
- 도매시장 제도개선 : 법안 관계부처 협의 중
- 물류효율화대책 수립 : 12월초 대책확정 및 발표 예정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소모성물류비 비율	55%	(10월말) 55%	100%
도매시장제도개선	농안법 개정	법안 관계부처 협의 중	-
물류효율화대책 수립	대책수립	(12월초)대책수립 및 발표	100%
목표달성도 평균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 물류기기 공동이용 및 장비구입의 지원으로 하역기계화율은 계속 상승중이나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율은 매우 저조
- ◆ 법안 개정 및 물류혁신대책은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정 기간 소요

- 농산물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제도개선
 - 정책효과는 농안법 개정 및 농산물물류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06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농산물의 감모·청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마늘포장화대책추진으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내 주대마늘 반입을 전면금지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청소비 절감 및 도매시장환경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하역기계화율
 - '03년 14% → '04년 17% → '05년 20%(목표치)
 -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하역기계화율('03년 64% → '04년 76 → '05년 83)에 비해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율은 아직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정책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

다.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강화

<총 평>

-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수립으로 식품가공·제조·외식산업 등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통해 **농산물의 대량수요처를 확대**하고 식품공급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 지속적인 농업성장과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달성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
-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계획을 수립** (3.14)하고 **농촌정보문화센터**를 **발족**(7.6)하여 대중매체 및 홍보대상별 차별화 된 홍보로 국산 농산물의 소비자 이미지 개선 및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
 - 농산물 소비촉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방송홍보,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참여형 홍보, 대규모 전시·판매 행사(농촌사랑 한가위 대축제, 2005 서울국제식품전시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우리 식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

♣ 르 꼬르동 블루란?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학교이자 다국적 요리전문 법인으로 출판, 레스토랑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중이며 본원은 프랑스 파리에 있고, 전세계 15개국에서 26개 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

♣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으로 전통식품명인은 전통식품제조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존·실현할 수 있는 자, 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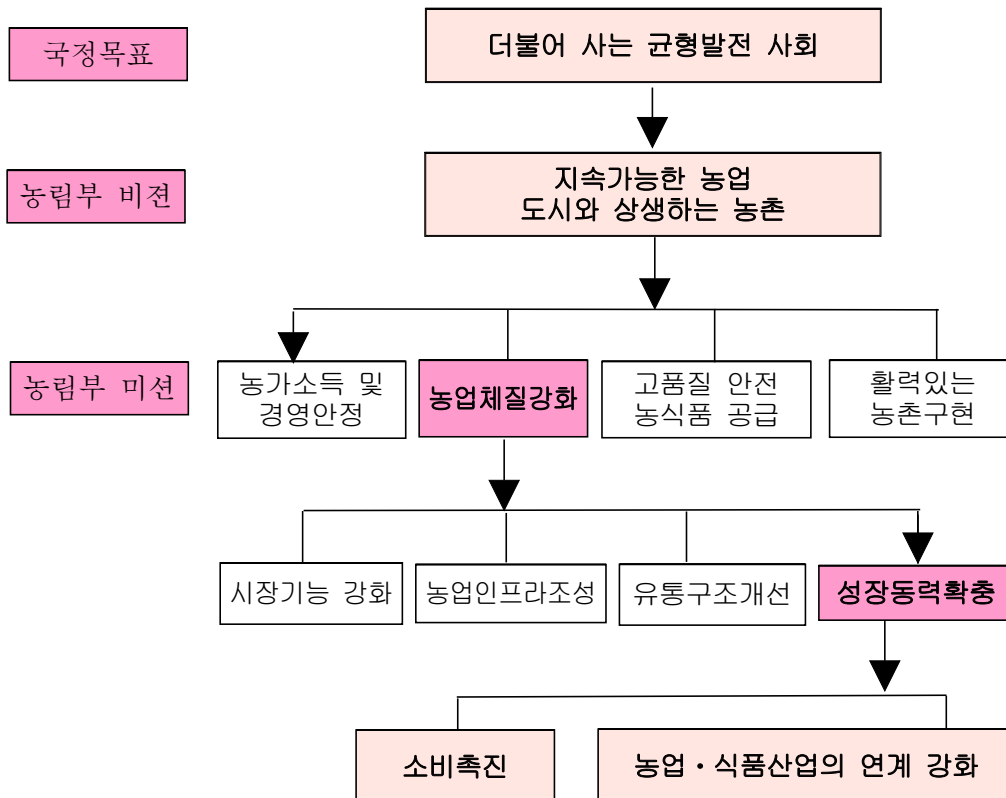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식품가공·제조·외식산업 등 성장하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

○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등 상위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세계 각국은 적정수준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반발전 정책을 수립·시행
 - 식품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나, 그동안 규제위주의 행정으로 산업측면의 육성정책은 미흡
 - 농업과 식품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농업성장과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 대두
 -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국산농산물과 식품산업간 푸드체인 강화 필요**
 -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의 육성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
 - 생계위주의 식품소비에서 웰빙 우선의 식품소비구조에 부응
- *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등)들은 일찍부터 자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지회·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생활패턴 변화 ○식품가공·외식업체가 농산물 주소비자로 등장	○시장개방 확대 ○국내산 농산물 소비감소
강점 (S)	○식품가공·제조·외식산업 등 성장하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농식품산업육성 종합대책 수립 - 농식품유통인프라 구축 - 생산자단체와 식품산업체간 계약재배지원 - 국산농식품 기술개발 등	○농산물과 식품산업간 푸드체인 강화 - 외식·전처리업체 국산농산물 구매자금지원 - 가공산업 및 전통식품산업의 원료수매자금 지원 등
약점 (W)	○마케팅 취약	○브랜드화·소비촉진 등 마케팅 강화를 통한 외국 농산물과의 차별성 부각 - 해외 우리 식문화전 개최	○농촌홍보센터 운영 - 농업·농촌가치 홍보 -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 산업과의 연계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국내농산물과 식품산업간 푸드체인 강화를 위해 외식·전처리 시범 사업을 추진 및 원료수매자금 지원 국산과실주 경쟁력강화 지원, 전통식품 육성을 추진하여 안정적 공급기반의 마련
- 농식품유통인프라 구축, 생산단체와 식품산업체간 계약재배 지원, 국산농식품 기술개발, 산지농산물 구매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산업육성 종합대책**을 수립
- 또한,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국내 소비기반**을 구축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우수브랜드 인지도** 및 **국산 농축산물 소비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 우수 브랜드 인지도 조사	23%	전문리서치업체의 인지도 조사 용역 결과 확인	○ '03년 인지도 - 19% * 격년제로 조사
○ 국산 농축산물 소비자 만족도 조사	50%	전문리서치업체의 조사 결과 확인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국산농산물과 식품산업간 **푸드체인 강화**를 위하여
 - 외식·전처리산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가공산업 및 전통식품 산업의 원료수매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전통민속주의 주세울 인하, 전통식품 명인 지정 등을 추진
- 식품산업의 현대화 시설, 수출증대, 기술개발, 컨설팅 활성화, 외식·식자재 산업 등의 지원과 농식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전통식품, 산지가공산업 위주에서 외식산업, 농산물가공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수립
 -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프레임닷컴 등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 대책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연구 추진
 - 식품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농림부 식품산업육성 T/F팀을 구성(팀장: 농산물유통국장)하고 정책조정실무회의 개최
 - 식품산업발전 혁신연찬회, 식품산업 국제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지원 등을 논의
-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
 - 홍보사업을 담당할 농촌정보문화센터 발족(7.6)
 - 2005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계획 수립('05.3.14) 및 홍보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마련·추진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관련업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종합대책(안)에 대한 산·학·연 등 각계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 한국식품정보원, 외식학회 등 의견수렴(9회)
 - 업계애로사항 및 의견수렴(3,215개 업체)
 - 전통식품육성 실무협의회를 구성(4.19)하여 실무협의회 개최 및 의견수렴(2회)
 - 식품산업발전 혁신연찬회 개최(5.26~27)
 - 식품산업 국제심포지움 개최(6.15)
- 식품 전문기관, 단체 및 업체의 정책제안('05. 5. 24)
- 도시가구 1천호를 대상으로 국산농산물소비자만족도조사 실시(9.28~11.10)
-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사업 계획수립(3.14)시 농수산물유통공사, 시·도, 생산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반영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국무조정실의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다만, 민속주와 관련한 사항 등은 주무부서인 재경부가 우리부의 의견에 반대입장 표명

- 농림부는 농산물가공및식품산업육성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04. 9)하였으나
 - 일부 부처에서 이견을 제출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국민건강 T/F 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키로 함('04.12)
 -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별 실행전략('04.11)에서 식품안전·육성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표명

- 식품산업육성법 제정여부 및 주무부처 결정 등을 포함하는 육성대책(안)을 마련('05.7)하고
-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05.7)하여 의견을 조율중임
- 국무조정실의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우리부의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9.27)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식품공업협회, 한국식품정보원, 전통가공식품협회 등의 관계 전문가들로 농식품산업육성 T/F팀을 구성(11명)하여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침
- 주세법개정안(재정부 의견은 증류주류의 현행세율 72%를 90%로 인상)에 대한 농림부 의견 제출(9.6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증류주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45 적용 요청
- 전통민속주 육성을 위한 민속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주종별로 주세율을 차등하여 추가인하하고 주류의 전자상거래 이용판매 제한 규정의 개선을 검토해주도록 재정부 방문 설명(6.23, 9.7, 9.9)
 - 현재는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민속주·농민주만 우체국을 통한 통신주문판매 허용
 - 전통주의 전자상거래(홈쇼핑 포함) 허용 및 통신판매기관에 농협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
 - 청소년의 주류구입 가능성이 높고, 제조자에 따른 차별과세는 동일품목 동일과세 원칙에 어긋나며 통상마찰의 야기 가능성 등을 들어 재정부는 반대 입장 표명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
- ◆ 민속주 관련 제도개선은 주류에 관한 주무부서인 재경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임

- 국산농산물과 식품산업간 푸드체인 형성을 위한 외식·전처리산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 외식·전처리 시범사업계획을 수립(4.19)하여 4차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
 - 당초 계획된 예산 30억원에서 480백만원이 상환처리되어 회수되고, 2,520백만원 중 1,620백만원 지원(11.25현재)
- 가공산업 및 전통식품산업의 원료수매자금 1,021억원 지원 완료
- 전통민속주 육성을 위해 과실민속주의 주세율을 30%에서 15%로 인하하고 주류출고가격 표시제 폐지(2.18)
-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농림부의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 수립 완료(9.27)
- 2005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3.14)
 - 농촌경제연구원 산하에 농촌정보문화센터를 발족(7.6)하여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차질 없이 홍보 중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상황
□□ 국내농산물과 식품산업간 푸드체인 강화대책 추진	일부부진
□□ 농식품육성종합대책 수립	완료('05.9.27)
□□ 농촌홍보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촉진 홍보 추진	정상추진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지원 등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식품산업T/F구성 및 운영(1차회의 '05.4.20)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식품공업협회, 한국식품정보원, 전통가공식품협회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대책 마련
 -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규격화 및 품질향상, 외식산업 육성 및 전통식문화의 세계화 등 과제별 논의는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
- 농림부 식품산업과의 기획기능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05.3월)
 -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1명 증원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시대 환경변화에 맞추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싸이월드를 활용 농식품 소비촉진 온라인 홍보 추진 및 어린이·청소년·주부 등 대상별 차별화 된 홍보로 홍보효과 극대화
 - '05. 9. 7일부터 “싸이월드”에 우리 농산물 사랑 미니홈피를 구성·운영 중(10월말 현재 40만명 이상 방문)
- 2005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계획상 개별행사로 계획된 추석직거래장터, 제2회 우리술·페스티벌, 쌀 전시판매 행사 등을 “ 농촌사랑 한가위 대축제” 라는 통합된 소비촉진 홍보행사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와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마련

- 특히 주간방송사(KBS)를 통한 특별생방송(6시간)이 가능하여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집중소개하고 소비자를 적극유치(5일간 50만명)하여 추석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전통민속주 육성을 위해 주류에 관한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과실주 이외에 일반민속주의 주세 추가인하, 민속주의 국산원료 사용규제 개선,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 외에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추진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농촌정보문화센터 발족 및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3,215개), 식품산업발전 혁신연찬회 개최(5.26~27), 국제산업심포지움 개최(6.15)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행사개최
- '05 농촌사랑 한가위 대축제 (9.9~13)

- 우수브랜드 발굴 행사 개최 :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 개최(10.13~15)
- 홍보 시행과정에서 생산자,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 등 정책고객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
 - PCRM(홍보시스템)을 통한 정책고객(43,000명)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 전통식품 및 건강식단 홍보 TV연속기획물 제작·방영
(기간 : '05.7.21~11.30 예정) 등
- 농식품홍보대사 위촉(3.2, 탤런트 양미경) 및 홍보활동 지원
 - □□르꼬르동블루□□와 김치퓨전요리 책자 발간(5천부), 시연회 개최(5회)
 - 김치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음식요리교실개최(동경, 3.9)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관련단체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식품산업종합육성대책 수립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식품산업육성 T/F팀 구성·운영 추진(9.27)
 - 실무회의 개최(3회) 및 업계 전문가 회의 개최(9회)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 추진시 시도,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행사 추진
 - 농촌사랑 한가위 대축제,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과 관련하여 시·도 관계관 회의 개최(3회)
 - 2005 서울국제식품전시회와 관련하여 시도·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 시·도 관계관 회의 개최(2회)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모두 초과 달성
- ◆ 지표외 세부추진사업도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민속주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재경부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

- 농축산물 소비자 만족도 조사
 - '05.9.26~11.10일까지 전국 10대도시 1천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통계분석 진행중
 - 목표 50%이상은 무난히 달성 예측

- 시도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25.3%**로 당초 계획(23%) 대비 **10% 초과 달성**
 - 브랜드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서울, 광역시 및 5대 도청소재지의 가정주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 실시
 - 조사결과 순위가 높은 브랜드를 선정하여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 (10.13~15)**”에 전시하고 우수업체 포상도 실시
- 국산농산물과 식품산업간 푸드체인 형성을 위한 외식·전처리산업지원 **시범사업 추진**(1,620백만원)
 - 금리가 4%로 시중금리에 비해 별다른 잇점이 없고 담보규정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자금소요 부진(예산 30억원 배정)
- 가공산업 및 전통식품산업의 원료수매자금 지원 완료(1,021억원)
- 전통 과실민속주의 주세율 인하 및 주류출고가격 표시제 폐지, 전통식품 명인지정 완료(2건) 등
 - 다만, 전통민속주 육성을 위한 주세의 차등인하, 전자상거래 이용 제한 규정의 개선은 주무부서인 재경부가 반대
-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식품산업육성종합대책 수립 완료**(9.27)
- 2005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3.14)하고 **농촌정보문화센터를 발족**(7.6)하여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차질 없이 홍보 중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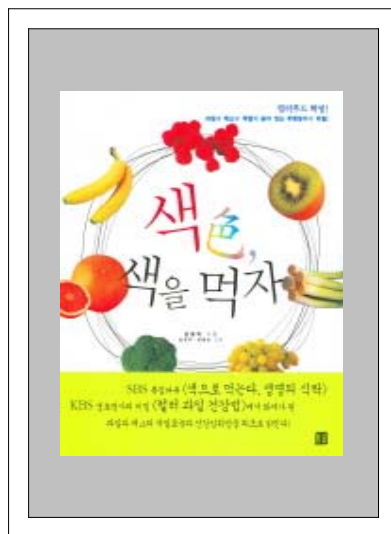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농축산물 소비자 만족도 조사	50% 달성	50%(12월말 예측치)	100%
○ 우수 브랜드 인지도 조사	23%	25.3%	110%
목표달성도 평균	105.0 %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우리농산물 수요의 안정적 확보 및 소비자들의 관심도 제고 등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

- 국내농산물 생산과 식품산업(외식산업, 농산물전처리산업 등)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으로 우리농산물 수요의 안정적 확보 등의 효과가 나타남
 - 아직은 수요증가 등의 가시적인 효과 계량화 곤란
- '05. 9.7일부터 “싸이월드”에 구성·운영하는 우리 농산물 사랑 미니홈피에 10월말 현재 4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방문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냄
 - * 싸이월드내 미니홈피 주소 : www.cyworld.com/ourfood
- TV특집 다큐멘터리 “생명의 식탁(SBS)” 방영 이후 농산물의 색깔에 들어 있는 건강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색깔을 주제로 한 책자가 발간되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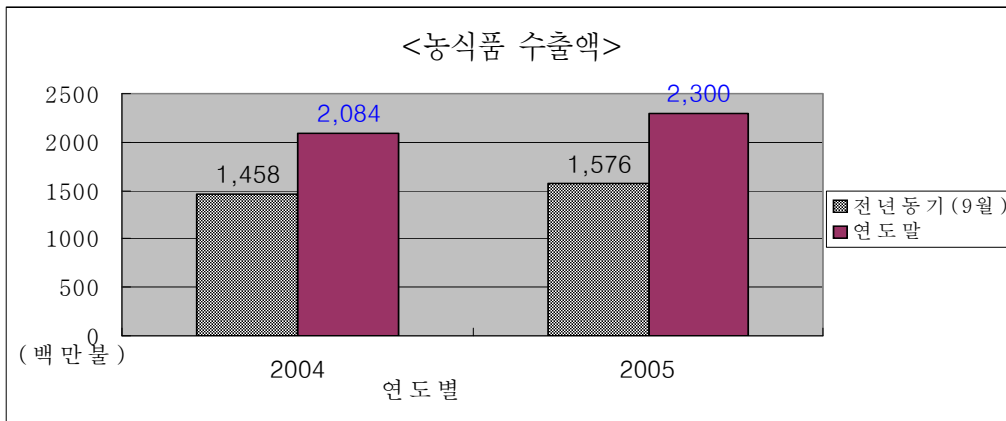
* 시판중인 책자 : 색, 색을 먹어라 (저자 : 윤동혁)

라. 농식품 수출확대

<총 평>

□ 국제유가의 폭등('05.11월 50\$ 상회), 원/달러환율의 하락, 원/엔화 환율의 하락('04년 1000원대에서 '05.11월 현재 870원대로 하락)에도 불구하고 '05.9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1,576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

- 수출액 : ('04.9월) 1,458백만불 → ('05.9월) 1,576(증 8.1%)
- * '05년 목표액(2,300백만불)의 68.5%('05.9월 목표치의 98.0%)



- 일본 아이치엑스포에 참여하여 한국 식문화 홍보관 설치 및 판매망을 구축하고, 일본 NHK TV와 공동으로 현지 인기드라마인 대장금과 연계한 **한국식품 특별홍보전 개최**를 통해 한국농식품 **이미지 가치 제고** 및 한국 식문화 붐 조성('05.10.30)
- ※ 대장금에 출연한 양미경씨를 농식품 홍보대사로 위촉 ('05.3.2~'06.3.31)
-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으로 27개품목(신선 7, 가공 20)을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정보·기술지원, 마켓테스트, 시험수출 등 토탈 지원('05소요예산 : 700백만원)
- 국내에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품목과 수출업체가 별로 없어서 외국바이어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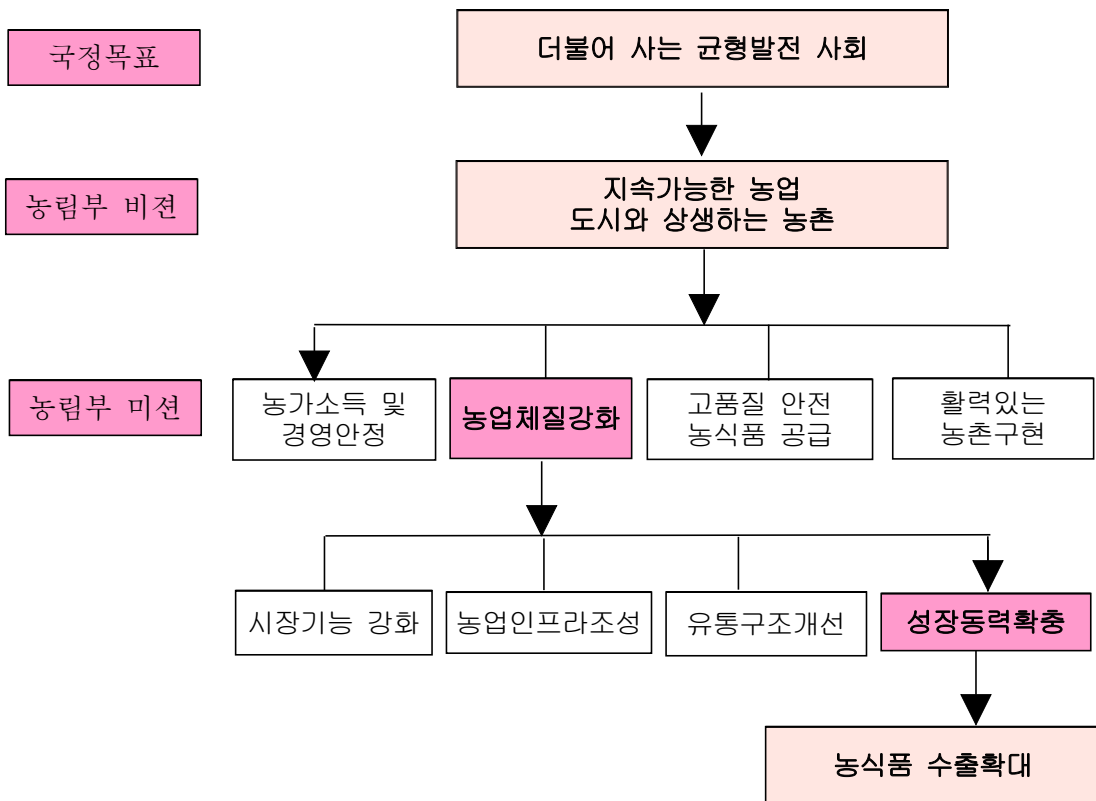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농식품 수출확대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DDA협상 추진, 한·칠레 FTA 체결, 한·일 등의 FTA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농산물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시책

○ 농식품 수출확대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농업체질강화 등 상위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또한, 수입개방의 가속화로 많은 농식품이 수입되어 국내농산물의 생산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확대 필요
 - 특히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농산물 시장개방화의 진전은 우리농업의 위기와 기회요인이 동시에 작용
 - 이를 위해서는 수출박람회 참가·해외관측전 개최 등 신규시장을 개척해야 하며, 새로운 수출유망 품목을 개발 지원해야 할 필요
 - 또한,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기반을 정비하여 해외 시장에서 우리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필요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실적>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금액(100만엔)	6,376,733	6,669,032	6,651,860	6,544,364	6,912,549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시장개방확대에 따른 수출기회 증가 ○한류 열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출범, FTA체결 등 수입개방의 가속화
강점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지원 마케팅 활동 강화 ○수출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해외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랜드 출범 및 인지도 제고 노력 ○국내외 박람회 참가
약점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생산기반 위축 ○품질·브랜드에 대한 차별화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정비 추진 ○농식품 수출확대대책 설명회 개최 등 국민에 대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류열풍에 따른 일본 등 해외여행객 초청, 생산시설 견학 홍보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농식품 수출은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수출 확대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세부사업별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신규시장 개척, 새로운 수출유망품목 개발 지원, 수출용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정비 등을 통하여 ‘13년까지 50억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달성 목표를 설정
- '05년도 농식품 수출목표 : 23억불
- 신규시장 개척 : 수출박람회 참가 및 농식품 판촉전 등 개최
- 연간 수출유망품목 25개를 선정, 상품개발비 등 지원(7억원)
-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정비, 평가를 통한 원예 전문단지 활성화 및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상향 조정
- Whimori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마케팅 강화
 - '05년 목표 : 파프리카 3,500톤, 국화 2,000만본, 배 300톤

☞ Whimori 란 ?

판소리에서 분주한 대목이나 절정을 묘사하는 대목에 사용되는 장단의 이름으로 품질절정의 상품으로 세계농산물시장을 석권하겠다는 한국 수출농업의 의지를 함축한 브랜드임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 과 지 표	'05년 목표	검 증 방 법	최근3년간 평균실적치
○ 농식품 수출확대	○ 수출목표 : 2,300백만불 - '95.9월말 : 1,576백만불	○ 관세청 통관 실적치 ('06.2월 확정)	○ 1,862백만불 - '02 : 1,640백만불 - '03 : 1,860백만불 - '04 : 2,085백만불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05수출목표액(23억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국내생산·유통기반의 정비, 해외시장개척 및 전략적 수출품목 육성, 해외시장에서의 우리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추진
-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정비를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사 및 평가를 완료('05.4, 104개소)하고 우수단지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수출물류비 7~10%)하였으며, 우량 수출업체 육성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10만불 이상→15만불)
-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19회), 해외관측전(29회), 김치 학술 세미나 개최(3.9), 농식품 홍보대사 위촉(텔런트 양미경) 하였으며, 27개의 수출유망품목을 선정(신선 7, 가공 20)
- Whimori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공동대표 브랜드 품질관리위원회 운영(6.9), 품질관리메뉴얼 제작·배포(500부, 11월), 한류열풍과 연계하여 일본 아이치엑스포에 참여하여 한국 식문화 홍보관 설치 및 판매망 구축('05.3~9월)
 - 또한, “르 꼬르동 블루”와 공동으로 한국 농식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김치요리 책자 제작 및 배포(영불판, 3월 / 한일판 11월)
 - 김치 퓨전요리 홍보 및 보급(국제박람회 참가지 시연시식회 개최, 꼬르동 블루 해외 aT Network를 활용한 시연시식회, 출판기념회 개최)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매월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하는 등 관련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05년 농식품 수출확대대책 수립('05.3.2) 후 매월 수출대책 회의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 등 의견수렴
 - 농진청, 산림청, 경기도 등 9개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 8회의 회의개최('05.3.2, 3.31, 5.25, 6.3, 7.19, 8.31, 9.28, 10.27)
 - '05년 농식품 수출확대대책 지자체 교육 및 의견 수렴(9개도 859명)
- 우리 수출농산물의 대표브랜드인 Whimori 해외인지도 등 조사(2회)
 - 우리의 농산물 주수출국인 일본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전반적인 이미지, 농산물 구매시 주요고려항목, 휘모리 제품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
- Whimori 품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시 민간전문가 참여('05.6, 9월)
 - 과실, 채소, 화훼 수출업체 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의견 수렴·반영
- 수출농산물 청산 소독제도 도입시 수출업체 등 의견수렴
 - 청산실증시험 평가단 구성시 지자체, 한국수출입식품 방제협회, 수출업체 등 참여
-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시 매번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05.11.15 현재 19회)
 - 한국관 부스 위치선정, 참가업체 지원확대, 현지바이어 다수소개, 계약장소 노출 개선 등 요구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매월 농식품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출애로사항 등을 무리없이 해결하는 것으로 평가

- '05년 농식품 수출 확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회의 개최('05.3.2)
 - 농진청, 산림청, 경기도 등 9개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관원, 식물검역소, 수출업체, 수출농업인 등
- 수출 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각 기관별 사업추진결과 및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조치

- 수출업체, 수출농업인,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관원, 식검 등 회의 개최 8회('05.3.2, 3.31, 5.25, 6.3, 7.19, 8.31, 9.28, 10.27)
- 매월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수출목표 달성율을 점검하고, '05년농식품 수출 확대대책의 시·도 설명회 개최
 - 지자체공무원, 수출업체 대표 등 859명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 다만, Whimori 부착품목 수출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

- 신규시장 개척은 국제박람회 참가(19회), 해외판촉전(29회), 김치학술 세미나 개최(3.9) 등을 실시
 - 수출유망품목 개발·육성은 당초 계획보다 2개 많은 27개 품목 선정 완료
-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정비는 원예전문생산단지 활성화를 위해 조사 및 평가를 완료(104개소, '05.4월)
 - 우수전문단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지원(수출물류비 7~10%)
- 우량수출업체 육성을 위한 수출물류비지원기준 개선 완료
(10만불 이상 → 15만불)
- Whimori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마케팅 강화는 브랜드 품질 관리위원회 운영(6.9), 품질관리메뉴얼 제작·배포(500부, 11월)
 - 일본 아이치엑스포에 참여하여 한국 식문화 홍보관 설치 및 판매망 구축 완료('05.3~9월)
 - 다만, 휘모리 부착품목 수출은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여 파프리카는 2,895톤(계획 대비 83%), 국화는 1,095만본(계획 대비 55%), 배는 14톤(계획 대비 5%) 수출
 - ※ 배의 경우는 본격적인 수출이 9월 이후에 시작되어 실적개선 기대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농식품 수출증대 - ('04) 2,085 → ('05) 2,300백만불	정 상
Whimori 인지도 제고 등 마케팅 강화	정상
수출용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정비	정상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유망품목 개발	정상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라 사업추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별 평가실시 후 우수단지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7~10% 가산 지원하고 시설, 장비 우선지원
 - 고품질 안전농산물만이 수출시 클레임이 적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일수 있어 평가제도 도입
- 무분별한 영세업체 난립으로 농약검출, 덤핑수출 등 문제점이 있어 우량수출업체 육성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개선
 - ('04) 10만불 이상 수출업체 → ('05) 15만불 이상
-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선정품목에 대하여는 정보·기술지원, 마켓 테스트, 시험수출 등 토탈 지원
 -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는 영세하여 제품개발 능력이나 홍보활동 부족 등으로 수출확대에 어려움 산재
 - ※ '04년 1,000만불 이상 수출업체 4개
- 분기별 수출동향 및 집행실적 점검을 통한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예산운용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또한, 중장기적인 농식품 수출목표액을 설정하고, 매년 수출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05년 수출관련 예산집행현황〉

(’05.9.30기준)

구 분	예 산	집 행	비율(%)
해외시장 개척사업(농특)	127억원	111억원	87
농축산물 판매촉진비(농특)	289억원	170억원	59
운영활성화자금(농안)	3,395억원	2,496억원	74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한류열풍,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시설·장비가 열악하고, 안전성·신선도 유지 등 수출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수출물류비 지원업체의 기준을 상향조정('04년 10 → '05년 15만불이상)
- 원예전문생산단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수전문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최우수 물류비의 10%, 우수 7%)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설명회, 책자발간, 홈페이지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추진
 ◆ 특히, 일본·중국 등의 한류열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홍보추진

- '05년 농식 수출확대대책 설명회를 경기도 등 9개도에서 개최하여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참여의식 고취 : 수출업체 등 859명

- 매주 2회 농수산물 수출입 뉴스 발간(매회 820부)
- 농산물 해외홍보용 □□Agra Food□□발간(10월까지 95개국 28,000부 발송)
- 농수산물무역정보 홈페이지 운영(10월말 현재 44만6천건 조회)
- “르 꼬르동 블루”와 공동으로 한국 농식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김치 요리 책자 제작 및 배포(영불관, 3월 / 한일관 11월)
 - 김치 퓨전요리 홍보 및 보급(국제박람회 참가시 시연시식회 개최, 꼬르동 블루 해외 aT Network 활용 시연시식회, 출판기념회 개최)
-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열풍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 적극 추진
 - 일본 아이치엑스포에 참여하여 한국 식문화 홍보관 설치 및 판매장 구축('05.3~9월) : 홍보관(5평), 판매관(10평)
 - 일본 NHK TV와 공동으로 한국농식품 특별홍보전 개최를 통해 한국 농식품 이미지 가치 제고 및 한국식문화 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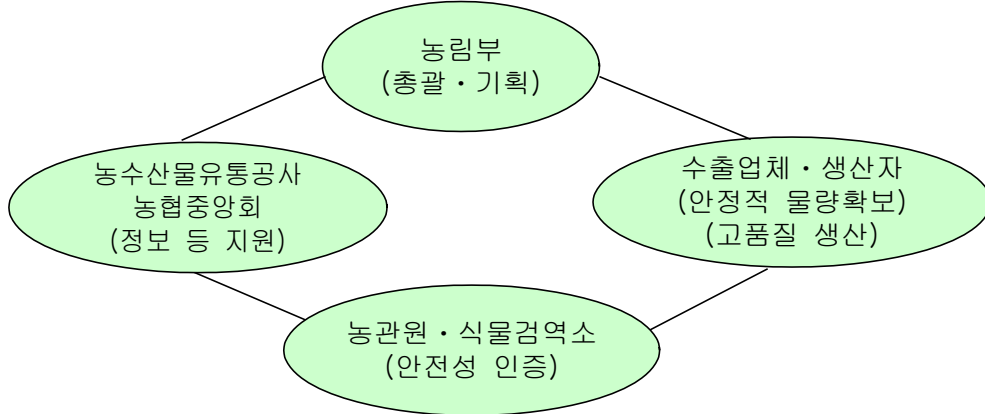
※ □□대장금□□의 양미경씨를 □□한국농식품홍보대사□□로 위촉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유통공사, 농협 등 수출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매월 수출관련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체제 유지

○ 농산물 수출진흥을 위한 역할분담 체계도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인 **농식품 수출액은 달성 전망**
- ◆ 세부사업인 Whimori 부착품목의 수출 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저조

○ 2005.1~9월 농식품 수출액은 1,576백만불로 '05.9월말 목표액 1,610백만불 대비 98.0% 달성. 12월까지의 목표액 2,300백만불은 충분히 달성할 전망(관세청 통관실적 '06.2월 확정예정)

- 국제박람회 참가(19회) 등 신규시장 개척, 수출유망품목 개발(27개 품목)
-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정비를 위한 원예전문생산단지 활성화 조사·평가완료(104개소, '05.4월) 및 인센티브 지원 (수출물류비 7~10%)

※ Whimori 브랜드 인지도 제고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

○ 다만, 휘모리 부착품목 수출은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상황

- 파프리카는 2,895톤(계획 3,500톤의 83%), 국화는 1,095만본(계획 2,000만본의 55%), 배는 14톤(계획 300톤의 5%)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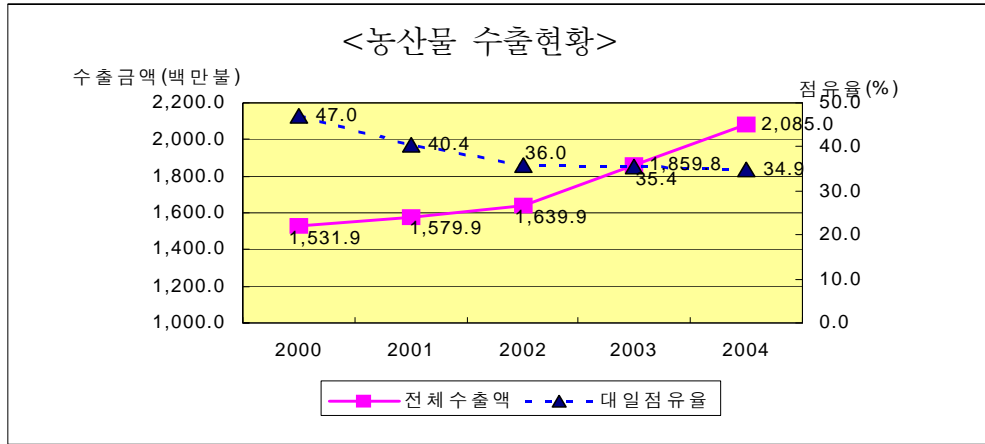
성 과 지 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 목표치	실 적 치	목표달성도
○ 농식품 수출확대	○ 2,300백만불	- ('05. 9월말) 1,576 - ('05. 10월말) * 추정치 : 1,840 - ('05.12월말) 2,300 ※ 관세청 통관실적 '06.2월 확정예정	68.5% 80% 100%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박람회 참가, 홍보활동 지원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선농림축산물 수출이 20.0%가 증가**하여 실질적 효과 가시화

- 농식품 수출확대대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나는지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박람회 참가, 홍보활동 지원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선농림축산물은 20.0%가 증가**하였으나, 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담배, 합판, 라면** 등은 부진하여 가공품은 4.5%증가
- 농식품 홍보대사 활용 등 한류와 연계한 적극적인 수출대책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 등 신선 농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20.0% 증가**)
 - 채소류 : ('04.1~9월) 80.5백만불 → ('05.1~9월) 100.1(24.3%)
 - 화훼류 : ('04.1~9월) 29.4백만불 → ('05.1~9월) 36.2(23.1%)
 - 과일류 : ('04.1~9월) 45.5백만불 → ('05.1~9월) 65.1(43.1%)



마. 자조금제도 활성화

<총 평>

- 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수 확대, 자조금 단체의 생산 점유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등 세부 사업계획을 충실히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
-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확대(1%→3%)**하고, 사업 역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도록 근거 마련(농안법시행령 개정)
- 재배면적이 많고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일부 노지작물은 영세소농구조로 되어 있어, 자조금 거출이 어렵고 단체 형성이 어려움
 - 이런 품목에 대해 자조단체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검토중
- 자조금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05.10~'06.3) 및 다양한 홍보 실시



<단감의 신문, 지하철광고>



<소비촉진 행사>

☞ 자조금(self-help funds)의 의미

광의적 의미로는 이익집단이 스스로 조달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자원(회비와 같은 성격)을 총칭 그러나, 협의의 의미로는 법률상의 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하여 특정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check-off funds) 또는 목적기금의 성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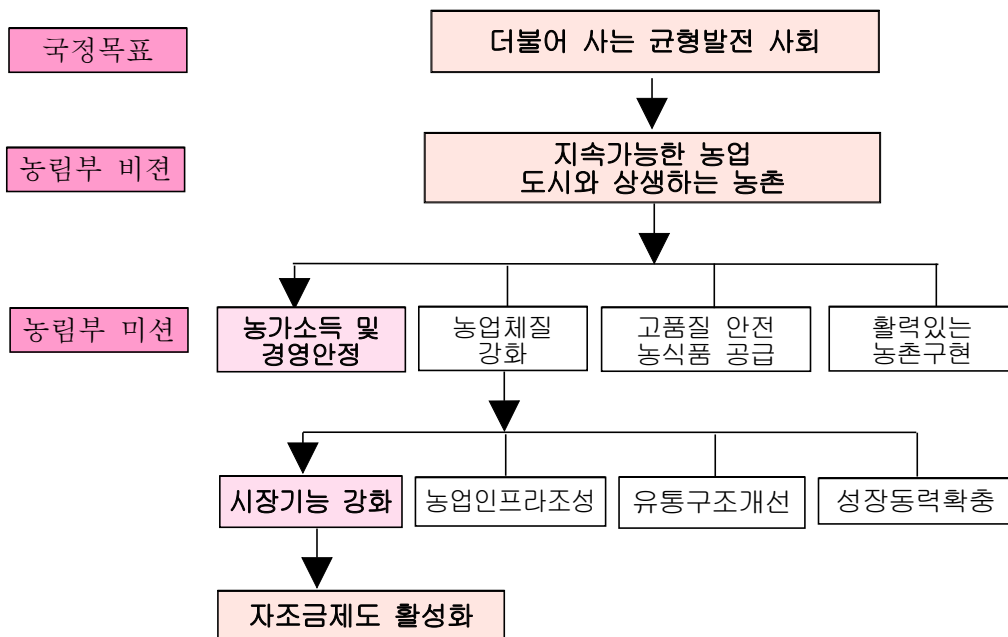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자조금 제도의 정책목표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WTO체제하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지지, 수급안정, 판매촉진 활동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여 도입한 제도

○ 자조금 제도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등 상위 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시장개방 확대와 최근 소비지 유통환경변화와 마케팅의 중요성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조직화를 통한 **시장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자조금 대상품목 및 생산점유비중 확대를 통하여 품목별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 도모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무임승차자 배제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계약재배물량확대 및 참여농가의 최소계약면적 상향조정을 통한 계약재배 내실화로 수급안정 도모
 - 관측정보 수집기능강화를 위해 PDA 보급으로 정보수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구조 파악을 위해 소비자 동향 조사 실시(연4회)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강점(S)	○생산자조직의 역할 강화를 위해 품목별 자조금단체 활성화	○자조금 대상품목 및 생산점유비중 확대 - 품목별 농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 도모	○산지생산출하 및 소비동향 관측정보 수집기능 강화 - 효율적 정보수집을 위해 모니터 요원에 PDA 지급 ○계약재배 내실화
약점(W)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분산재배되는 일부 노지작물은 영세 소농구조 문제 - 자조금 거출이 어렵고 단체 형성이 어려움	○단체형성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자조단체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자조금 제도개선 추진 - 농산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자조금 대상품목 및 생산점유 비중 확대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지표 제시

-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자조금단체의 역할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자조금 대상품목 및 생산점유비중 확대는 반드시 필요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
- 계약재배 내실화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농가의 적정수입 지지 - 계약재배물량 확대, 참여농가 최소계약면적 상향조정, 과잉생산시 폐기 등 수급조절
- 신속 정확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웹(web) 및 PDA 조사체계 확립, 소비자의 소비동향을 반영한 관측정보 생산·제공을 위해 소비자 패널을 선정(1,000명)하여 부류별 연 4회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 과 지 표	'05년도 목표	검 증 방 법	최근 3년간 평균실적치
'13년까지 주요품목 42개 확대 (원예32, 축산 10)	23(원예 17품목, 축산 6)	사업 승인 품목수	-
계약재배물량	1,130천톤 (노지 950 시설180)	계약완료 물량	809톤
사업참여농가와 사업주체의 규모화	○ 참여농가의 최소계약면적 - 무, 배추 등 0.3ha - 고추, 마늘 등 0.2ha ○ 사업주체의 최소사업량 확대 - 무, 배추등 300톤 - 고추, 마늘(한지)10톤 - 마늘(난지)50톤	지침서 반영여부	-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 비중	채소류 15%, 과실류 48%, 축산물 37%	유통관련 통계자료 및 자조금 단체가 제출한 생산량자료 활용	계획량 대비 100%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및 조직화 정도, 사업추진상황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근거마련, 자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자조금 단체간에 성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지원(1:1)으로 인해 운영활성화 동기부여가 미흡하여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및 조직화 정도, 사업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근거마련(농안법 시행령 개정, 6월)
- 제도개선, 신규자조금단체 승인 등을 위해 자조금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품목별 자조금 지원한도를 생산액의 1 → 3% 이내로 확대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 추진하여 자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수납기관 추가지정 및 대의원 결원시 보궐선거 실시 등 근거규정 마련
- 한우 의무자조금 도입 결정('05.2)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05.3)
- 계약재배 참여농가 최소계약면적의 상향조정 : 0.2ha → 0.3
- 관측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PDA 보급 및 소비자 패널 구성(1,000명)
-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중('05.10~'06.3)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시안) 토론 및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자조금분과위원회, 4. 27)
 - 지역단위 자조금제도 도입, 자조금 사업성과 제고, 거출방식의 투명화 등 논의
 - 파프리카, 감귤, 질화, 분화, 노지포도 등 13개 품목 승인

- 자조금제도 개선방안(시안) 토론회(5.24)
 - 13개 자조금단체, 신규조성예상 단체, 관련 전문가 등 25명 참석
 - 자조금 조성절차 투명화, 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 ※ 농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조금 지원확대(6월)
- 신규 자조금단체 및 하반기 자조금사업계획 승인(9.12)
 - 양파, 당근, 가지, 토마토, 육묘의 자조금단체 승인여부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육묘를 제외한 4품목 신규승인
- 농업관측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구조 파악을 위한 소비자 동향조사 실시(소비자 패널 1,000명)
 - 채소, 과일, 과채, 축산으로 나누어 각각 연 4회 조사 실시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농림부 고유 업무로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이 문제되지 않음

- 품목조직의 사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자조금 사업을 평가하여 차등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중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 다만, 축산자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관련단체간의 이견으로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

-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결성을 적극 추진 완료(원예분야 17개, 축산 6개)
- 자조금단체 생산 점유비중 확대
 - 원예분야 차등지원, 지원확대(1→3%) 근거 마련을 위한 농안법 시행령 개정 완료('05.6월)

- 축산의무자조금 조성 추진
 - 한우 의무자조금 추가 조성(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05.3월)
 - 수납기반 추가지정 및 대의원 결원시 보궐선거 실시 등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중('05.11 규제개혁 심사중)
- 채소·과실의 계약재배사업 물량 확대(950천톤→1,085) 및 참여농가 최소계약면적 상향조정(0.2ha→0.3) 완료
- 농업관측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동향조사 실시(소비자 패널 1,000명으로 구성)
 - 채소, 과일, 과채, 축산 각 연 4회 실시
 - 산지정보 수집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DA 100대 추가보급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품목별 자조금단체 결성 적극추진	정상
자조금단체 생산 점유비중 확대유도	정상
축산의무자조금 조성추진	정상
계약재배 내실화(과잉생산시 폐기 등)	정상
관측정보 수집기능강화	정상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라 사업추진, 농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체별 사업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자조금 조성 등 자구노력이 있는 생산자 단체에게 판매촉진, 소비홍보 사업 등에 대하여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운영 활성화 동기가 미흡하여 자조금 지원확대 및 차등지원체계 마련

- 자조금 조성이 활발한 품목조직의 사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조금 조성규모 상한 확대(생산액의 1%→3)
- 조성 상한 확대와 연계하여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및 조직화 정도, 사업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근거마련(농안법 시행령 개정, 6월)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자조금제도 개선방안(시안) 토론회(5.24)시 자조금 조성절차 투명화, 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농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조금 지원 확대방안 마련('05.6월)
- 농업관측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구조 파악을 위한 소비자 동향조사 실시(소비자 패널 1,000명)
 - 채소, 과일, 과채, 축산으로 나누어 각각 연 4회 조사 실시
- 한우 의무자조금 추가 조성(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05.3월)하고, 수납기판 추가지정 및 대의원 결원시 보궐선거 실시 등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05.11월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중)
-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중('05.10~'06.3)
- 재배면적이 많고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일부 노지작물은 영세소농구조로 되어 있어, 자조금 거출이 어렵고 단체 형성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조단체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검토중
- 사업주체 다양화를 위해 일반유통업체 등에게 채소수급안정사업을 개방하여 사업주체간(농협 및 유통업체) 경쟁촉진을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

- 사업평가팀 인력을 확충하여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까지 평가 실시하여 사업내실화 도모
- 사업 참여주체의 규모화 및 전문화 촉진, 계약농가 DB화, 위약농가 제재 강화, 우수농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 비참여주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을 통하여 사업확대 추진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각 종 토론회, 교육, 언론, 팸플릿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실시

- 자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홍보하고 의견수렴 실시
 - 관련 전문가 토의(4.27)
 - 축산·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토론회(5.4)
 -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 활성화 토론회(5.24)
 - 자조금단체 승인 및 사업계획 심의(9.12)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05사업 실무자 교육 : 4회, 434명
 - '05사업안내 홍보 : 전문지광고 12회, 팸플릿 3만부 등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농협중앙회, 유통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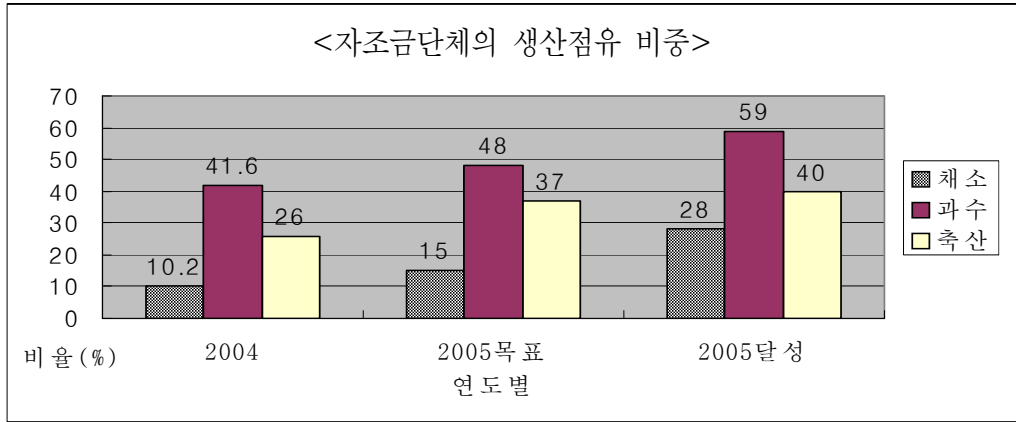
- 자조금 및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유통공사, 지자체 등 협력
 -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평가지표, 유통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등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
- ◆ 그러나 계약재배물량은 계획보다 4%가 부족한 96% 달성

- 품목별 자조금단체 결성을 적극 유도하여
 - 원예품목 17개, 축산 6개 축종으로 총 23품목 목표달성
- 계약재배물량 계획대비 1,085천톤으로(목표 1,130천톤) 96% 달성
- 계약재배사업물량 확대와 참여농가 최소계약면적 상향 조정(0.2ha → 0.3) 및 사업주체의 최소 사업량 확대 완료
 - 공급과잉(예상) 채소품목에 대한 산지수매·폐기 실시(1~3월)
 - 폐기실적 : 2,099ha(겨울배추 245, 겨울대파 1,266, 양파 588)
- 자조금 단체의 생산점유 비중 당초 목표보다 10% 초과달성
 - 채소(15→28%), 과수(48→59%), 축산(37→40%)
- 산지생산출하 및 소비동향 관측정보 수집 강화
 - 소비자 패널 1,000명 선정하여 채소, 과일·과채, 축산 각 분야별로 소비자 동향조사 4회 실시완료
 - 관측정보수집 모니터요원에게 PDA 추가 보급 완료('05년 누계 160대)
- 축산자조금 제도 개선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거출금의 종류(의무·임의 거출금)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의원 권원시 보궐선거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 추진 중(현재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중)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13년까지 주요 품목 42개 확대	23 (원예17, 축산6)	23 (원예17, 축산6)	100%
계약재배물량	1,130천톤 (노지 710, 시설240) (과수 180천톤)	588천톤 (노지 261, 시설 188) (과수 139천톤)	52% (채소 47.3) (과수 77.2)
사업참여농가와 사업주체의 규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농가의 최소계약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 배추 등 0.3ha - 고추,마늘 등 0.2ha ○ 사업주체의 최소사업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 배추등 300톤 -고추,마늘(한지)10톤 - 마늘(난지)5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목표대로 계약재배 사업업무편람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 배추 등 0.3ha - 고추, 마늘 등 0.2ha ○ 당초 목표대로 계약재배 사업업무편람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 배추등 300톤 - 고추,마늘(한지)10톤 - 마늘(난지)50톤 	100%
○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비중	채소류 15%, 과실류 48, 축산물 37	채소류 28%, 과실류 59, 축산물 40(10월말 기준)	110%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 난 유통협약에 의한 자율 폐기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제고 등 **실질적 효과가 가시적**
- ◆ PDA보급으로 산지생산출하 및 소비동향 등 농업관측정보 통계조사 실시간 처리로 기간 단축

- 난 자조금 사업으로 인한 수급조절 효과
 - 유통협약에 의한 자율 폐기(비용 : 1억4천만원)로 33억원의 농가소득 제고
 - * 자조금 사업이 시작되면서 생산자 스스로 난 산업의 문제인식 및 해결하려는 장이 마련됨
- 돼지고기, 우유 등 축산물의 소비촉진 효과
 - 양돈의 경우 자조금 1원당 14원의 소비증대 효과 발생
(’04년 양돈 자조금 사업성과분석 : 한국자조금연구원, ’05.5)
- 가격하락폭이 컸던 겨울배추와 대파에 대해 산지 수매·폐기로 가격 회복
 - 겨울배추 : (수매전) 125만원/5톤차 → (수매후) 177만원(42%↑)
 - 겨울대파 : (수매전) 470원/kg → (수매기간) 605원(29%↑)

IV.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1. 총괄

가. 잘된 점

-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 GAP제도정착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법률개정)하고 시범사업 실시
 - 농산물 명예감시원 대폭 증원으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감시체계 기반 구축
(’04) 2,800명 → (’05.11월)17,482명 (증 14,682명)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간 주관으로 도축장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578억원) 차등지원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농자재 지원체계 및 인증제도 개편**
 - 화학비료 차손보전사업을 폐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신규 추진으로 중·소규모 농가단위 친환경농업을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연순환농업팀**□□구성·운영
-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감염 예방관리 강화**
 - 농림부·보건복지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 교육·홍보·정보교류 등 협력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조기수립(9월), 사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보발령(10월)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43천호)의 **96%**(41천호) **등록완료**

나. 미흡한 점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대한 인식 미흡
 - 상당수의 농가 및 소비자들이 타 인증제도(친환경, 품질인증)와 혼동하고 있는 상황
 - 시행초기에 다소 높은 기준 선정으로 일부 중도 탈락자 발생
- 유통·소비측면에서의 친환경농업 확산정책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소비기반 확대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
- 밀집사육지역 축사이전 유도를 위한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대상자의 신청 부진
 - 농지전용 등 부지확보에 따른 제도적·환경적 제한으로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 적극 참여 미흡
- 여행객 휴대 축산물 검색 및 국경검역 애로
 - 세관심사 위주의 입국절차 진행과 전용 검역·검사대 부족 등으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집중검색 곤란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 초 계 획	추진 실적
<p>1.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p> <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조기 정착 및 효과가시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96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관리지침 마련 ○ GAP, Traceability 시범사업 확대실시 ('05년 : 700호) ○ GAP, Traceability 전문가 양성 과정 마련 (140명 교육) ○ 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한 위생설비 지원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완료('0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시행규칙 규개위 심사중 ○ 시범사업 농가선정·추진(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결과 : 47품목 965농가 ○ 한국농업전문학교에 교과과정 마련하여 전문교관 140명 교육 (10.21일 교육완료) ○ 3개소를 선정하여 위생설비 지원(6억원) (2개소 사업완료, 1개소 12월 완료 예정)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농업인 안전성 교육 확대 실시 및 안전성 조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해 안전성교육 실시 (약 50만명) ○ 부적합농산물 생산자 교육(6월, 12월) ○ 농산물안전성조사 실시(62천건) ○ 부적합농산물 생산자를 정책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p>□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및 벌칙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형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명예감시원 대폭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에 15,000명 수준으로 증원 ○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 → 200만원 <p>□ 사육단계에서 농가의 위생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HACCP) 기준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제 등 초과 검출시 제재 강화 ○ 유해물질 잔류방지 전국순회교육(2회) ○ 돼지사육단계 HACCP지침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약56만명 교육 실시(1~2월) ○ 부적합농가 89명 집합교육(6월) ○ 42,110건 조사(9월말), 492건 부적합, 부적합율 1.2% ○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게 친환경 직불제 및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신청시 불이익 조치 <p>○ 원산지 위반사범 처벌강화(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05.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이하징역·5천만원이하벌금→ 7년 이하징역·1억원이하벌금(병과가능) - 상습위반자 공표명령 조항 신설 <p>○ 명예감시원 신규위촉(14,68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00명('04)에서 17,482명으로 확대('05.11) <p>○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인상(2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에 반영)</p> <p>○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05.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검사기간연장(3→6월) 및 과태료 인상 <p>○ 전국순회교육 실시(2회 ; '05.6월, 11월)</p> <p>○ 지침·적용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05.4~12)</p>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도축·가공단계에서 미생물과 잔류물질 등 검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중 미생물검사 기준 강화 ○ 잔류물질/미생물검사 각 120천건(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율(%): 잔류물질 0.25, 미생물 0.44 ○ 도축검사원 총원 100명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도축장 운영자금 차등지원 <p>□ 유통단계에 적용할 안전관리기준 제정 및 위생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판매업 HACCP 지침 제정 ○ 쇠고기이력추적 시범사업 시험 가동 (2월부터)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등을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등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 개정('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오리고기 대장균수 권장기준 강화, HACCP 도축장도 일반세균수·대장균수 검사 ○ 잔류물질 92,679건 / 미생물 101,389건 검사 (9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율(%): 잔류물질 0.24, 미생물 0.29 ○ 도축검사원 100명 선발(3월), 검사기법 교육(4~6월, 8주), 배치(6월) ○ 도축장HACCP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상위 39, 중위 41개소)에 따라 운영자금(578억원) 차등지원(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권 : 무이자, 중위권 : 3%, 하위권: 지원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업 HACCP 평가기준 마련(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05.6~12월)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을 판매 단계까지 확대 하여 실시(2월)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11월) ○ 60,069개소 점검, 위반업소(3,029개소) 행정 처분(9월말)
<p>2.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확산</p> <p>□ 농자재 지원체계 개편 및 저투입농법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 차손보전사업 폐지 (7월) ○ 유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 70만톤 245억원 지원 ○ 시설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ha 시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7.1일부로 화학비료 차손보전사업 폐지 ○ 유기질비료 지원확대 계획에 의한 지원 완료(24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유기질비료 750원/20kg, 퇴비 650 ○ 10개시도 1,039농가지원(331ha) 확정

당 초 계 획	추진 실적
<p>□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편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중확대 ('04) 2.5% → ('05) 3.5% ○ 현재 4단계 인증종류 간소화,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 인증제 및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도입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점검 <p>□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시범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조사 및 사업모형 개발 ○ 사업지침 마련 및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은 '06부터 시행 <p>□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이용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지원조건 개선 - 가축분뇨 전처리 시설 추가지원 ○ 축분퇴비 판매량 확대 (170만톤 이상) <p>□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제정 추진 ○ 지역별 양분총량 등의 조사·연구를 위해 축산환경 모니터링 T/F구성 운영 ○ '양분총량제' 세부 추진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농가 : ('04.12) 28,951호→('05.9) 40,121 인증면적 : ('04.12) 28,218ha → ('05.9) 39,334 - '05말기준 친환경인증 비중(추정) : 3.6%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 중 -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11.8) ○ 7개 광역지자체별로 소비자단체(소시모)와 친환경농산물 시판품 합동조사 실시(6,10월) ○ 기본조사 설계종합계획 수립(3월) ○ 사업모형 및 지침안 작성(8-10월) ○ 연도별 사업후보단지 통지(9월)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조건 개선 및 설치지원 - 보조율(30%→50), 318억원 지원(10월말) - 신고대상 미만 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고액분리기 설치비용 지원 ○ 축분퇴비 판매량 1,510천톤(10월말 추정) ○ "가축분뇨 법률" 제정 추진 중 - 법률안 법제처 심사(10.26) 진행 중 ○ 자연순환형 농업확산을 위한 □□자연순환 농업팀□□ 구성(9.1)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5.5~12월)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친환경축산직불제 정착 및 밀집사육지역 축사 이전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축산직불 참여농가 확대 ('04) 512호 → '06년까지 900호 중 ('05) 711호(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우수사례 홍보 ○ 가축밀집지역 축사이전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07년간 6개소 시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제 참여 농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512호→('05.10)653호 - 친환경축산직불제 홍보 및 시범사업 평가결과 보고회 개최(2월), 연구 용역 완료(4월) - 친환경축산직불제 우수농가 100인 사례집 발간(3천부) ○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 계획수립 (3.19) 및 대상자 선정(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 2개소 (1개소 사업포기)
<p>3. 가축방역체계강화</p> <p>□ 공항·항만 검역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악성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 탐지건 운영 - 육류휴대품 검색 확대 (20천건) - 여행객 발판소독조 설치 ○ 악성가축질병 발생국가의 축산물 수입금지 <p>□ 농가·지자체의 자율소독, 예찰 등 방역활동 및 책임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52회) 운영 ○ 공동방제(3,880명)을 통해 고령·취약농가 소독지원 ○ 지자체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3~5월) ○ 돼지콜레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면역형성율(95% 이상) ○ 뉴캐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면역형성율(88% 이상) ○ 가축방역특별포상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39개소, 시상금 28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지건 19두 배치·운영중(인천·제주공항 등) ○ 휴대품 검색실적 : 16천건(43천톤) ○ 발판소독조 233개소 399개 설치 운영 ○ 해외가축질병 발생동향 파악 대처(매일) ○ “전국 일제소독의 날”(42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예찰의 날 병행 실시 ○ 공동방제단(3,968명) 동원, 소규모 및 고령농가(311천호) 소독지원 ○ CPX 실시 : 9개도 72개 시·군 (3~5월) ○ 면역형성율 :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실적 : 141천건(9월누계) ○ 면역형성율 : 8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실적 : 157천건(8월누계) ○ 세부실시요령 시달(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에 평가후 계획대로 시상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인수공통전염병 인체감염 예방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합동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개최·공동대응·정보공유 및 홍보활동 전개 ○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개최(10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총리실, 국조실 등, 10월)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인체감염 대책 협의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북한) 발생시 6개부처 합동 T/F 팀 운영 및 국경검역·방역지원('05.4~5) ○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에 대비, “특별방역대책” 조기 수립(9월) ○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발령(10.14) 등 홍보 활동 전개
<p>□ 방역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및 인력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방역인력 증원 - 232명 충원 ○ 공익수의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익수의사법” 제정 및 “병역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2~6월) ○ 보건복지부 반대의견(실험동물 관련) 제출에 따른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을 통해 입법예고(10.13)
<p>□ 축산업등록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대상농가 등록 완료 ('05.12.26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가축방역 인력 218명 충원 - 수의과학검역원 방역 및 축산물 관련 인력 충원(2과 42명) 확정 ○ “공익수의사법”은 법사위(6.28), “병역법”은 국방위 회부(6.22) 계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대상농가(43천호)의 96%(41천호) 등록 완료 (10월말)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총 평>

- 선진적인 **안전 농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생·안전관리 문제점 및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GAP제도 추진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완료하였고, GAP·Traceability 시범사업 정상추진 등 실적 양호
 - 원산지표시 위반 감시등 안전성 감시업무는 위반 벌칙을 강화하고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대폭 증원 등을 통해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감시체계 기반을 구축
 - 도축·가공단계 안전성관리는 도축검사원 확충, 민간 주관으로 HACCP 운용수준평가를 통해 운영자금을 차등지원하는 등 실적 양호
- **GAP제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한 상황**
 - 상당수의 농가 및 소비자들이 타 인증제도(친환경, 품질인증)와 혼동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연구용역중인 사육단계 **HACCP 지침 제정**은 연내 마무리를 위해 단계별 추진절차에 철저를 기할 필요

☞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유해요소를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

☞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가축의 사육·도축·가공·유통의 전과정에서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위생관리기법

☞ **Traceability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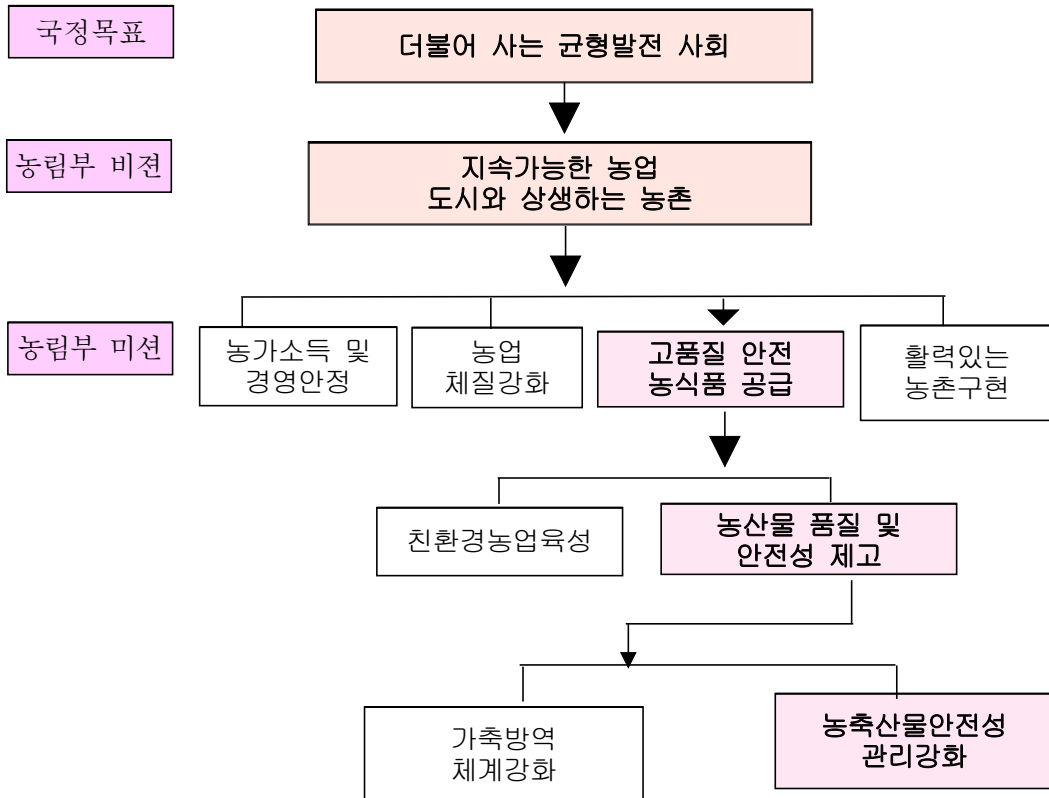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임

○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고품질 안전농식품 공급 등 상위 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기회(O)	위협(T)
		강점·약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소비자의 관심 급증 ○ 소비자가 가격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경향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 수입 농축산물과 비교 시 신선도 유지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Traceability 등 안전성 확보 제도 조기 정착으로 효과 가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및 벌칙강화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유통 주체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집중관리 곤란 ○ 생산 유통 주체의 안전성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안전성 교육확대 및 안정성 조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에 대한 단계별(생산, 가공, 유통) HACCP 기준 제정 및 검사 강화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전농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 다만 안전성이 인증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및 생산자의 소득효과 검토 분석 필요**

- **GAP제도는 '05시범사업**을 거쳐 '06년 본격시행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및 농가선정, 교육 등 추진목표를 명확히 설정
- 농산물 및 축산물 안전성 조사건수 및 결과지표인 부적합비율(위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
 - * '08년까지 농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1.1%, 축산물 잔류물질 위반율 0.2%, 미생물 검사 위반율 0.4% 이하 유지를 목표
- 과정지표로 안전성 조사 인력충원 및 **HACCP 운용 수준 평가** 및 활용여부를 성과지표에 포함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농산물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비율	검사건수 62천 위반율 1.3%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실적	검사건수 60천건 위반율 1.34%
잔류물질 검사실적 및 위반율	검사건수 120천건, 위반율 0.25%	국내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실적보고서	검사건수 112천건, 위반율 0.20%
미생물 검사실적 및 위반율	검사건수 120천건, 위반율 0.44%	국내산 식육 중 미생물검사 실적보고서	검사건수 119천건, 위반율 0.38%
도축검사원 충원실적	100명 충원	도축검사원 채용 및 도축장 배치실적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에 따른 운영자금 차등지원 실적	HACCP 평가실시 및 도축장운영자금 차등지원	평가결과 발표 및 운영자금 차등지원 실적	-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선진적인 안전 농축산물 생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 제도, 예산 측면의 정책수단을 충실히 구비한 것으로 평가

<조직측면>

- 농림부,농진청 등 10개 기관이 GAP정착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여 근거규정 마련, 시범사업, 위생기반구축, GAP 교육체계 마련
- 농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을 활용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44개소) 및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도축·잔류물질·미생물·수거검사 등 안전성검사업무를 수행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추진위원회**(19명) 및 실무작업반(12명), 판매업(15명)·집유업(13명) HACCP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제도측면>

-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5.8.4)
- 명예감시원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명예감시원운영에관한고시” 제정(’05.3 : 기존 “농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 폐지)
-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요령(3.2) 및 미생물검사요령(3.29) 개정
- 사육단계 HACCP 도입, 도축검사원제도,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의무화 등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중

<예산측면>

- GAP 시범사업 운영 및 농산물안전성 홍보 등에 30억원 투입
-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우수 도축장 운영자금 등에 659억원 투입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새로운제도 도입 및 기존제도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국내외 관련제도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

- **농산물안전관리제도(GAP) T/F**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05.7월)
- 프랑스의 GAP 및 Traceability 운영실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도입 시 미비점 보완(’05.4)
- 명예감시원 활성화대책 수립(’05.2) 과정에서 생산자 단체(한농연 등 6개단체)·소비자단체(주부교실 등 2개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 마련 및 참여 확보
- 사육단계 HACCP 도입, **도축장 HACCP** 평가, 도축검사원제도 등은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종합대책(’04.7.29)에 따라 추진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제도 수립 및 법령 개정과정에서 이해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음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법제처의 의견수렴
 -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제도 삭제(복지부 의견 수용)
 - 원산지 위반 벌칙 강화시 공표제도 도입(법제처 의견 수용)
-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축산물위생·안전성제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04.7월), 보건복지부·식약청·지자체·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04.7.26)를 통해 의견을 수렴 및 정책 공유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이행 세부과제는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며, 추진중인 과제는 연내에 완료될 전망

- GAP제도 추진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완료('05.8.4) 및 시범사업 농가선정 완료(3월)
 - 한국농업전문학교에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GAP, Traceability 전문교관 140명 교육(10.21일 교육완료)
- 새해영농교육 등을 통해 연초에 농업인 약 56만명에 대해 안전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조사 건수도 '05년 62천건 계획에 3/4분까지 42,110건으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 전망
- 농산물명예감시원은 14,682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하였고('04 : 2,800명 → '05.11 : 17,482명),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원산지 위반사범 처벌강화(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7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및 상습위반자 공표명령 조항 신설
- 식육중간류물질검사요령 개정('05.3)하여 규제검사기간연장(3→6월) 및 과태료를 인상하였으며, 돼지 사육단계 HACCP 지침은 연말까지 완료예정

• • • ●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 식육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건수는 각각 120천건 계획에 3/4분기 까지 잔류물질 검사 92,979건, 미생물검사 101,389건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 전망
- 도축검사원 충원은 계획대로 100명을 선발(3월)하여 교육(4~6월)후 현장배치 완료(6.28)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 및 운영자금 차등지원은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상위 39, 중위 41개소)에 따라 운영자금(578억원) 차등지원(6월) 완료
- 식육판매업 HACCP기준은 제정완료('05.1)하였고,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2월부터 판매단계까지 확대 적용 시험가동 중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등을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은 개정안이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11월)된 상황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상황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조기 정착 및 효과 가시화 추진	정상추진
○ 농업인 안전성 교육 확대 실시 및 안전성 조사 강화	정상추진
○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및 벌칙 강화	정상추진
○ 사육단계에서 농가의 위생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기준 제정	정상추진
○ 도축·가공단계에서 미생물과 잔류물질 등 검사 강화	정상추진
○ 유통단계에 적용할 안전관리기준 제정 및 위생관리 강화	정상추진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시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 현지 출장 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예산 투입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여 분기별 실적점검 등 실시

- 소비자단체의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축장 운영자금 (578억원) 차등 지원 등 정책자금 인센티브제 실시로 지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우수(33%) : 무이자, 중위권(33%) : 3%금리, 하위권(34%) : 지원제외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상황변화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부적합농산물 생산자 교육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여 혼란이 예상되어 지자체 교육계획 사전수립 및 정상실시 여부 점검('05.6월)
 - * '04.10월에 □□농산물안전성조사요령□□을 개정, 관련규정 마련
- 주산단지별로 현장 중심의 안전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산지 농산물안전성 교육과정을 운영 (연중 150회, 1만명)
 - 산지농협 등 잔류농약 안전성관리가 필요한 지역농가를 대상
 - 교수, 관련 공무원 등 35명의 전문가를 순회교육반으로 임명('05.5월)
- 도축장간의 HACCP 운용수준 편차를 줄이고 사후관리에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운용수준 평가제 도입
- 명예감시원을 대폭 확대하고 감시기법 교육(6월) 및 소비자 대상 축산물 안전관리 교육·홍보 강화 등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 안전관리제도 개선과 도축장 등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축산물안전에 관한 소비자 인식개선은 다소 미흡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정책 중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언론 및 현장교육 등을 통해 실시

-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시행과정에서 생산자, 소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
 - 지역별 명예감시원 발대식 및 부정유통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 발대식 10회 및 발대식 행사 언론홍보(TV 22회, 라디오 55회 등)
 -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위주로 캠페인 실시(130회)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 홍보(보도자료, '05.3.7)
 - 도축검사원 충원 등 도축검사 내실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등 정책추진사항 언론홍보 ('05.6)
 -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한 전국순회교육 실시(5개 권역별로 6월, 11월 실시)
- 새로운 제도인 GAP제도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추진
 - GAP홍보관 운영(2개소), 라디오 인터뷰(2회), 홍보물(책자 2,000부, 포스터 30,000매, 리플렛 60,000매 등) 제작·배포
 -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에 홍보(7,677개소)
 - GAP농산물 전시 및 홍보 관측행사(8개 농협유통센터)
 - 지하철 GAP 광고(동화상 2개역 및 5호선 125량)
 - 시범사업 참여농가 및 관련기관 교육('04.3~6)



<GAP로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판매업소>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사업추진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하에 사업추진**

- 농림부, 농진청, 농관원 및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GAP T/F ('03.7월, 16명)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정기 협의
 - GAP, Traceability 각종 기준안 점검, 홍보 추진 등 논의
- **명예감시원 위촉·운영** 및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계획 수립, 시행시 상시 협의
-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와 내성균 출현 방지를 위해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을 구성(10.6), 항생제 사용절감대책 논의
 - 공무원, 학계, 소비자·생산자단체, 동물약품·사료업계 등 관계전문가 78명으로 구성
- 축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관계부처 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대책협의회**” 구성(2.18), 축산물위생관리 제고방안 협의
 - 국무조정실·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학계, 소비자·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 61명으로 구성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달성하였거나 달성가능 전망**

◆ 연간 누계치 등 **연말기준 지표**는 대부분 분기별 실적집계가 이루어지므로 기간환산시 **정상추진 중**으로 판단

- GAP 시범사업은 당초보다 확대(21개품목/357농가→47/965) 추진되었고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율은 9월말 현재 1.2%로 당초 목표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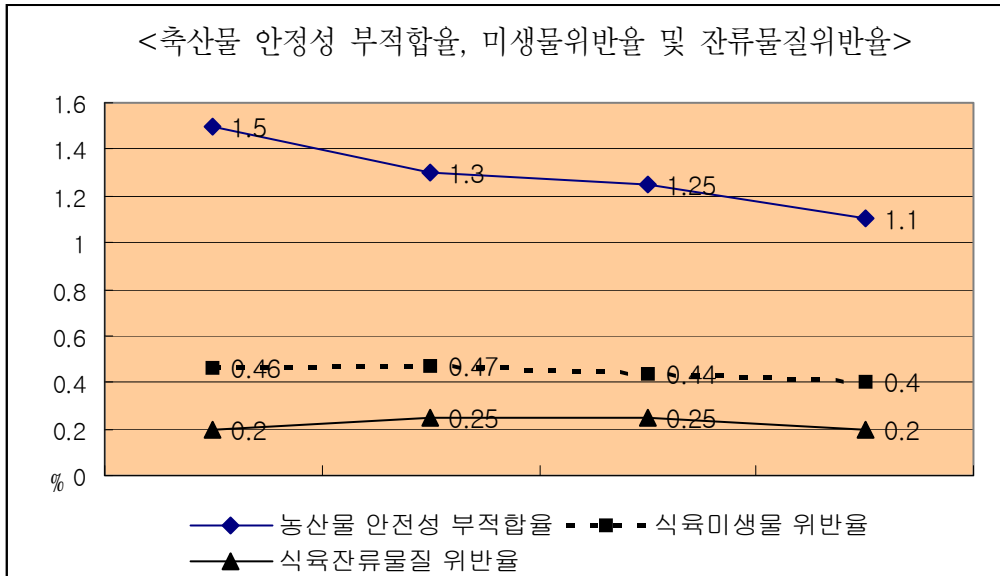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05.8.4) 완료
- 축산물 안전성검사에서 **잔류물질**은 93천건 검사(9월 현재), 225건이 위반되어 위반율은 0.24%로, 당초 목표(0.25%)보다 낮은 수준
- **미생물**검사도 101천건 검사(9월 현재), 297건이 위반되어 위반율은 당초 목표(0.44%)보다 낮은 0.29%
- **도축검사원**도 계획대로 100명을 충원하여 교육실시후 현장배치 완료(6월)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 및 운영자금 차등지원은 계획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상위 39, 중위 41개소)에 따라 운영자금(578억원) 차등지원(상위 : 무이자, 중위 : 3%) 완료 (6월)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률, 축산물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위반율이 개선되어 정책추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은 '04년 말 부적합율이 1.3% 수준인데 비해 9월말 현재 1.2%로 감소한 상태로 농산물 안전성 제고 정책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인식확산 및 정착, 안전성조사 강화 등 관련 사업들을 지속 추진시 농산물 부적합율 개선 전망
- **잔류물질 검사항목 확대(75→80종)**, **미생물 권장기준 상향조정**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보다 낮은 위반율을 나타냄으로써, 안전성 수준이 전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판단
- 향후 가축사육농장과 축산물판매단계 HACCP 적용,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나.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총 평>

- 화학비료 차손보전제 폐지, 유기질 비료지원 확대추진, 친환경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친환경 지원체계 개편 실적은 양호
-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신규 추진으로 중·소규모 농가단위 친환경농업을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은 관련기관·단체와 사전협의 및 공청회 등 사전준비는 적정하게 추진
- '06년부터 개선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필요
-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사업물량으로는 다소 미달되나, 농가당 사업규모는 계획을 초과하여 시범사업으로서 성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
- 가축밀집지역 축사 이전은 축사 대상지 확보곤란으로 미진한 상태
 - 자금지원 외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 검토 필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및 요건(4단계)**

- ① **유기농산물** : 3년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② **전환기유기농산물** : 1년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③ **무농약농산물** :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④ **저농약농산물** : 농약을 1/2이하로 사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축산농가에 소득감소분 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 지급요건(이행 프로그램)
 - 소 :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 환원(60%이상)
 - 돼지·닭 : 사육밀도 완화(20~30%), 분뇨의 자원화
 - 인센티브 :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 식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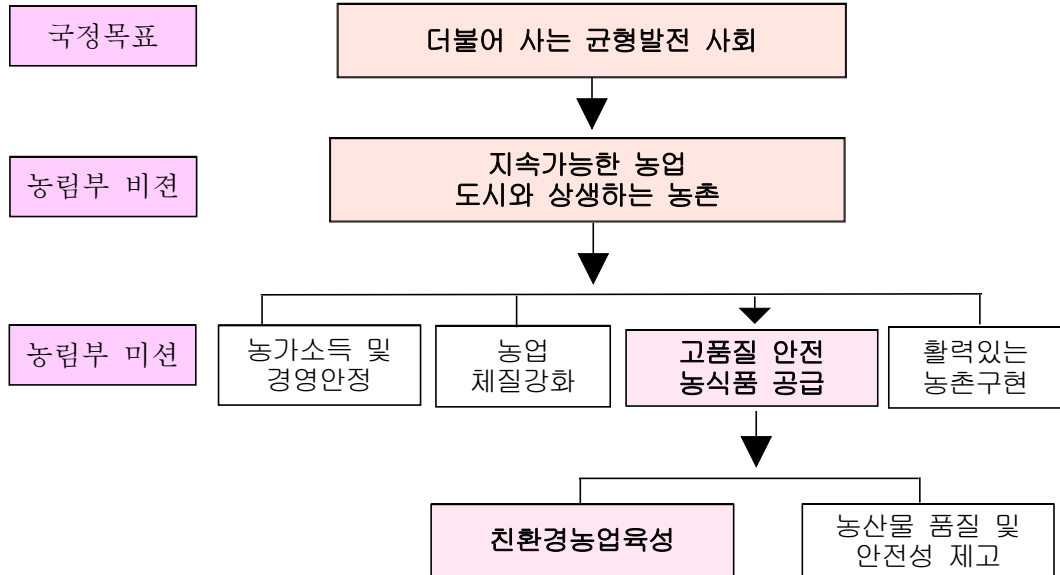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확산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 추세에 부응하고, 교역증대에 따른 **우리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강화 정책은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임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확산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고품질 안전농식품공급** 등 상위 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고투입농법에서 벗어나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우리의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유도하고 국토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시책으로 평가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기회(O)	위협(T)
		강점·약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에 소비자의 선호 ○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 및 정책지지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 및 보급 ○ 축산과 경종의 연계 가능한 농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 ○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자재 지원체계 개편 및 저투입농법 확산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주체가 조직화 되어있지 못함 ○ 친환경농업 전환·유지에 비용이 많이 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친환경축산 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편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 강화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이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세부사업별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 다만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소득효과에 관한 성과지표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실시효과에 관한 **성과지표 보완 필요**

- 친환경농산물 유통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13년까지 40%수준 감축 목표하에 연차별 목표를 설정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3년까지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1,000ha 규모의 단지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05년에는 연도별 사업후보단지 선정 등 예비작업을 추진
- **화학비료 차손보전사업 폐지**('05.7.1)와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사용량 및 가축분뇨 판매량 증가 지표를 채택
-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설치율이 약 98%에 달하나 노후시설 교체, 일부 미설치 농가 지원을 위해 예년 수준의 지원목표 설정
- 원예작물천적방제 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 추진방법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일정규모만을 대상으로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3.5%	농관원 인증실적	1.9%
합성농약 사용량 감축	ha당 12.3kg 이하	농진청 집계자료	12.6('04추정 : 12.6)
유기질비료 사용량	1,960천톤	농진청 집계자료	1,870
원예작물천적방제면적	300ha	천적방제 지원실적	-
가축분뇨퇴비판매량	1,737천톤	가축분뇨퇴비판매량 행정통계(농촌진흥청)	1,654천톤
축분처리시설 지원	예산지원(333억원)	예산지원 실적	398억원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율(시범사업, 누계)	'06년까지 목표 900호중 711호(79%)	시·도별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참여율	'06년까지 목표 900호중 512호(57%)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 이행율	프로그램 이행율 100%	시·도별 사업참여 농가의 프로그램 이행여부 조사실적	프로그램 이행율 100%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조직, 제도, 예산 측면의 정책수단을 비교적 잘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 ◆ 밀집지역 축사 이전 시범사업은 재정적 지원 외 이전부지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화학비료 차손보전사업 폐지(7.1)로 저투입농법 확산 유도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제도 지원 및 가축분뇨 자원화·이용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
-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연순환농업팀□□ 구성·운영(9.1)
- 지역단위 축산분뇨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05.5~12)을 실시
- 세부사업(유기질비료 가격보조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 지원, 친환경축산직불제, 밀집사육지역 농가이전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반영('05 : 663억원)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 신규 시범사업 추진 및 관련제도(법령)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위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심의(1.11), 부내 법령정비협의회 심의(3.17), 부처의견 조회(5월)
 - 전문가협의회('04.12, 11명) 개최, 환경농업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 (*친환경농산물 명칭변경 반대의견 수렴)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 사업설명회(5.4) 및 T/F회의 개최, 전문가협의회(2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수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6월) 및 공청회(7.22) 실시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제도수립 및 법령 개정과정에서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조율 등을 하였음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조회(5월)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시한 산자부 및 식약청과 입법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 후 개정안 입법예고
 - * 산자부 : 화학자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친환경농업 범위에 포함요망(미반영)
 - * 식약청 : 유통업자의 범위에 가공업자 포함 제외 의견(농림부와 동일의견)
-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농림부·환경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수립('04.11)
 - 양 부처간 상호 추진정책의 점검 및 이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구성('05.2, 9명)·운영
- 농림부 및 농진청, 농협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순환농업팀□□을 설치('05.9, 6명)하여 관련기관간 업무연계를 강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제고
 - * 분뇨처리 위반자에 대한 벌칙수준, 용어선택(축산폐수→가축분뇨) 등에 관해 의견조율 반영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다만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밀집사육지역 축사 이전은 일부미진

- 화학비료 차손보전사업 폐지는 계획대로 '05.7.1에 폐지
- 유기질비료 지원확대는 계획에 따라 245억원을 지원완료
- 시설원에 천적방제 지원은 당초계획(300ha)보다 많은 331ha를 선정·지원 확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05. 3/4분기까지 인증농가는 약 40천호, 인증면적은 39천ha, 인증비중은 3.6%로 추정되고 있어 연말목표 달성 전망
- '친환경육성법' 개정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연내 처리 전망
-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점검**은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2회(6월, 10월)에 걸쳐 실시 완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시범조성 사업은 연도별 사업후보단지 선정·통지(9월)를 완료 ('06부터 사업시행)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지원조건을 개선(보조율 30%→50%)하였고, 지원액 333억원 중 10월말 현재 95%을 집행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은 법제처 심사(10.26) 진행중
-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사업참여 신청농가가 계획대비 다소 미달할 전망이며 **밀집지역 축사 이전 시범사업**은 이전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적이 미진한 상황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자재 지원체계 개편으로 저투입농법 조기확산	정상추진
○ 친환경인증제도개편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강화	정상추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시범조성	정상추진
○ 가축분뇨의 자원화촉진 및 이용활성화 유도	정상추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정상추진
○ 친환경축산직불제 정착 및 가축밀집사육지역 농가이전유도	일부부진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시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 현지 출장 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예산 투입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여 분기별 실적점검 등 실시
-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 천적해충방제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관계기관·단체·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재정낭비 요인을 점검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34% 초과 집행(10월말 현재)되는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탄력적·효율적으로 집행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상황변화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축산분뇨 처리 신고대상 미만 농가에 대해서도 고액분리기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정책지원 효과 거양
- 내실있고 신속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 한시적인 □□자연순환농업팀□□ 구성·운영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중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언론 및 현장교육 등을 통해 실시

- 친환경인증제도 개편 등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내용에 대해 언론(연합신문, 농업전문지 등)을 통한 홍보(3~6월)
 - □□나라경제□□에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고(10월)

- “천적해충방제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언론 홍보(4~5월)
- 축산과 경종농가의 연계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이용확대를 위한 □□자연순환농업팀□□ 구성·운영을 언론 홍보 실시(9월)
- 친환경축산직불제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농가 100인 사례집 3천부를 발간하여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등에 배부('05.1)
- 축산환경개선컨설팅(1,500농가)을 통해 농가환경개선교육 실시와 가축분뇨 자원화와 이용촉진을 위한 세미나(11.2, 논산), 액비살포 시연회 개최(11월, 9개도)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사업추진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하에 사업추진

- 친환경 농업 확산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친환경인증 사업 협력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환경부
 - 니켈 함량기준 현실화에 대한 협의(8.30) : 농관원, 환경부 등 9명
 - 저농약 인증기준 협의 개선 (4.30) : 농관원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확대 협의(170→200개) : 농협
 - 천적해충방제 사업 협력 : 농진청, 지자체와 수시협력
 - 광역친환경단지조성 사업 협력 : 농진청, 기반공사, 학계, 지자체와 수시협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환경부 및 시도, 생산자단체와 협력체제하에 입법추진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05.5-12)에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 협조제제 유지
 - 용역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환경농업연합회 등에 수시 중간 자문 실시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달성하였거나 달성 전망
- ◆ 연간 누계치 등 **연말기준 지표**는 대부분 분기별 실적집계가 이루어지므로 기간 환산시 **정상추진** 중으로 판단되나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수는 계획에 다소 미달할 전망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연말기준으로 당초계획(3.5%)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3.6%)
- **합성농약** 사용량 감축 및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연말 추정치 기준으로 당초계획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
- 원예작물 **천적방제 시범사업** 물량은 당초계획(300ha)을 초과달성(계획 대비 110%)
- 가축분뇨 **퇴비판매량**은 10월말 현재 84%수준 달성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10월말 기준 95%집행으로 연말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
-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수는 10월기준 목표대비 92%에 달하나 추이를 볼 때 당초계획에 다소 미달 전망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 달성도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3.5%	3.6(년말 추정)	103
합성농약 사용량	ha당 12.3kg 이하	12.3(년말 추정)	100
유기질비료 사용량	1,960천톤	1,960(년말 추정)	100
원예작물 천적방제 면적	300ha	331	110
가축분뇨 퇴비판매량	1,737천톤	1,510천톤(10월말 추정)	84
축분처리시설 지원	예산지원(333억원)	318억원(10월말 기준)	95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	'06년까지 목표 900호중 711호(79%)	653호(10월말 기준)	92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 이행율	프로그램 이행율 100%	프로그램이행 점검중	-
목표달성도 평균	98.0%***		

⑥ 정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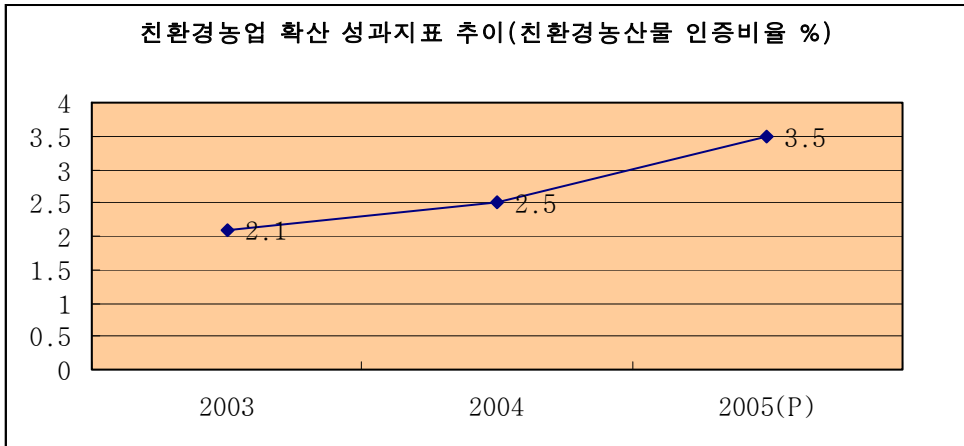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친환경농산물 관련 지표의 추세를 볼 때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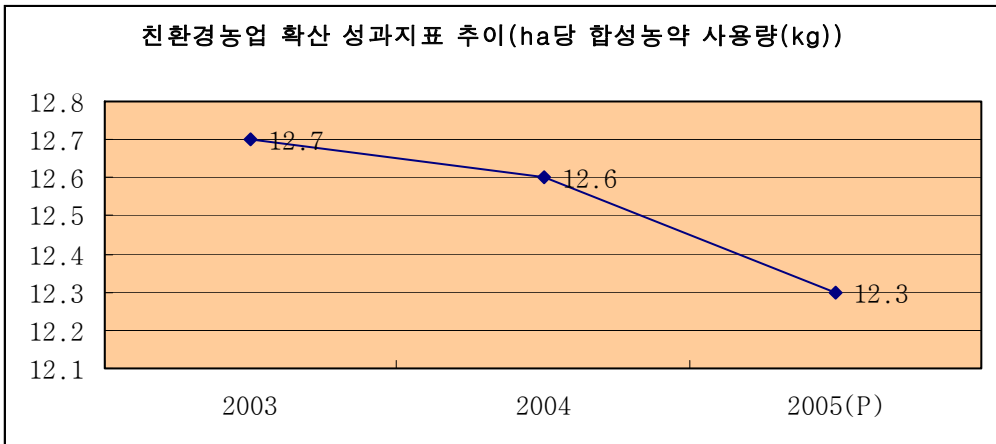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중 증가, 단위면적당 화학농약 사용량 감소, 가축분뇨 퇴비 판매량 증가 등의 추세를 볼 때 정책추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율 : ('03) 2.1% → ('04) 2.5% → ('05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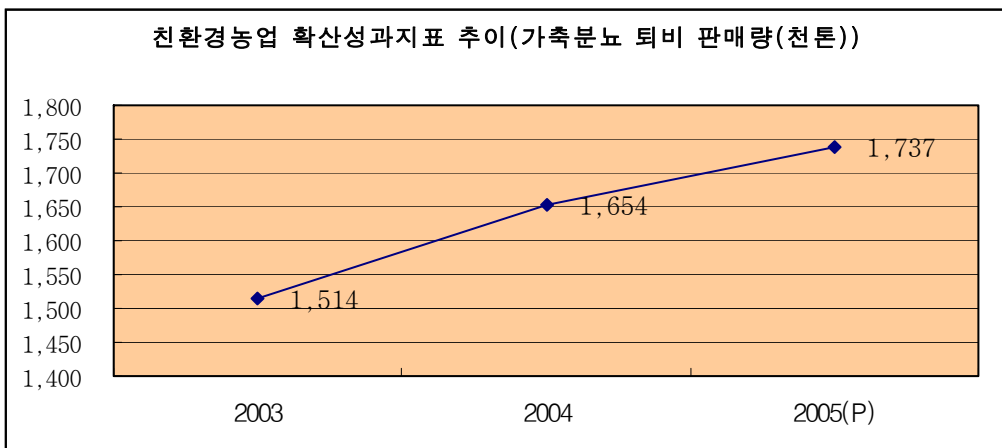
... ●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 ha당 합성농약 사용량(kg) : ('03) 12.7 → ('04) 12.6 → ('05p) 12.3



* 가축분뇨퇴비 판매량(천톤) : ('03) 1,514 → ('04) 1,654 → ('05p) 1,737



-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3/4분기 친환경인증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작년동기 대비 49.9%, 48.9% 각각 증가
 - 인증농가수 : ('04.3/4분기) 27,373호 → ('05.3/4분기) 41,021
 - 인증 면적 : ('04.3/4분기) 26,414ha → ('05.3/4분기) 39,334
- 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 확산으로 농약잔류에 의한 수출국의 클레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채소 수출액 증가**
 - 채소 수출액 : ('04.3/4분기) 81백만\$ → ('05.3/4분기) 100 (24%증가)
 - 파프리카 수출액 : ('04.3/4분기) 36백만\$ → ('05.3/4분기) 43 (20%증가)
- 축산폐수로 인식되던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 자원으로의 인식전환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토대 마련
- 친환경축산직불제 시행으로 가축사육밀도 완화, 분뇨발생량 감축 및 분뇨의 조사료포·농지환원에 의한 자원화
 - **가축분뇨 6만톤 감축** 추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4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 '05.2)
 - 사육밀도 완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효과 및 **가축질병 감소** (축산연구소 연구 및 친환경축산 우수농가 사례조사 결과)

다. 가축방역체계 강화

<총 평>

- **공항·항만 검역**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중이나, 세관심사 위주의 입국절차 진행과 전용 검역·검사대 부족 등으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집중검색에 애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농가·지자체의 **방역활동**은 소독과 질병예찰이 정례화 되어있는 상황이며, 예방접종 실적 및 면역형성율도 목표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
-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감염 예방관리**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대책 등이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
-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은 관계부처와 이견발생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금년내 완료가 불투명한 상황

•••●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은 목표대비 90% 이상을 확보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익수의사법” 제정과 “병역법” 개정은 국회계류 중으로 금년내 완료 전망
- **축산업등록제** 추진은 현재 96%진척도를 보이고 있어 금년내 등록 완료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
 - 등록정보의 세부활용방안과 자료 갱신업무 담당체계를 준비할 필요

☞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기준**

사육규모기준(이상) : (소) 300㎡·30두, (돼지) 50㎡이상·50두, (닭) 300㎡이상·3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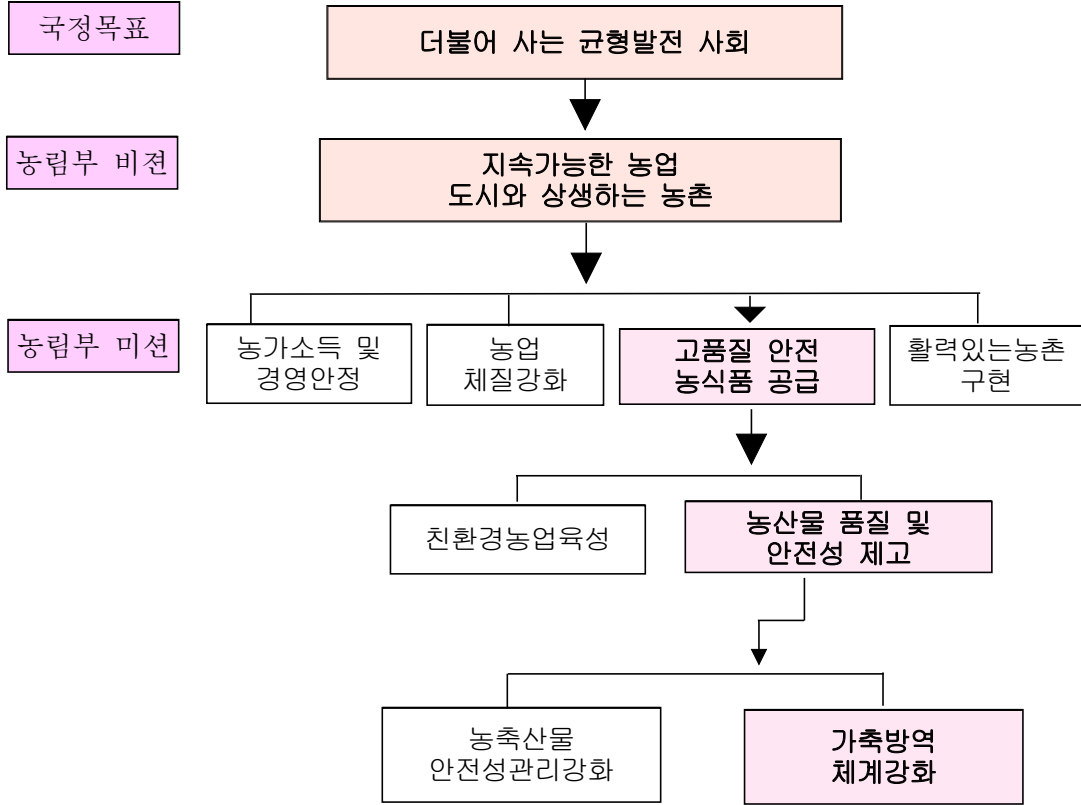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가축방역체계 강화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동·축산물의 교류 증가 및 중국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 인접하고 있어 철저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이 절실히 요구

- 가축방역체계 강화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등 상위 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

기회·위협 요인 분석		기회(O)	위협(T)
		강점·약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증가로 악성가축질병 유입가능성 증대 ○ 가축방역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 가축질병 퇴치에 대한 노하우 ○ 잘짜여진 가축방역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항만 검역강화 ○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 감염 예방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지자체의 자율적 소득, 예찰 강화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가축사육 밀도 ○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과다 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조직 및 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제 시행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정책목표**하에 세부사업별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04.8)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강화, 인수공통 전염병의 철저한 차단을 목표로 설정
- 해외로부터 유입차단을 위해 여행객 휴대품 검역 실적을 지표로 선택
- 농가 및 지자체의 자율방역체제 확립을 위해 자율소독·예찰실적을, 방역활동의 실효성 측정을 위해 주요 가축질병 면역형성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축산업등록제를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성과지표화하여 관리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실적치
해외육류 휴대품검색	20천건	공·항만 휴대품 검색실적 (수의과학검역원)	12.3천건
소독의날 운영실적 공동방재단 운영실적	연 52회 연 21회	운영실적 취합 (시·도)	44회 21회
가축방역특별포상제	39개소(281백만원)	특별포상 실시 결과 (농림부)	-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율 뉴캐슬병 면역형성율	95% 이상 88% 이상	혈청검사 실적 (검역원)	92.9% 84.5%
애완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 개정	법 추진상황 (농림부)	-
지자체 인력충원 공익수의사제도 도입	232명 제도도입여부	충원실적(지자체) 법 추진상황(농림부)	-
축산업등록제 시행	등록대상농가 100% 완료	추진실적(지자체)	-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 가축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조직, 제도, 예산 측면의 정책수단을 비교적 잘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지자체 방역조직 및 인력 확충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한계

- 증가하는 방역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가축 방역 조직 및 인력 확충(232명 충원)
- 구제역(3~5월) 및 조류인플루엔자(11~2월)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공항·항만 휴대 축산물 검색강화를 위해 탐지견 집중배치 및 CIQ 현장검역관(평시 : 57 → 특별 81) 확대 배치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의심가축 신고 및 예찰활동 강화를 위한 예찰요원 확대
 - ('04) 2,348명 → ('05) 6,403
- 가축 방역업무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익수의사제도” 도입 추진(병역법 개정 병행)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가축질병 예찰의 날”로 추가 지정
- 북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북 방역지원(진단키트, 소독약품 등 1,270백만원)
- 지자체의 적극적 방역활동 제고를 위해 가축방역특별포상제를 도입(281백만원)하여 우수기관은 시상금 지급·정책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미흡기관은 언론공표·표창 축소·사업독려
-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광우병 검사능력 확보를 위한 검사시설 설치·지원(4개소, 732백만원)
- 소규모 농가(311천호)의 일제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3,968개반) 운영사업비(6,523백만원) 및 소독약품 (5,859백만원) 지원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마련을 위해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

- **동물보호법 개정**(애완동물 등록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 개정안 마련,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05.2 ~ 4월)
 - 관계부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 작성 및 재협의(5~6월)
 - ※ 수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당초 의견보다 더 강한 반대의견(실험동물 관련) 제출로 입법예고 지연
 -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을 통해 협의 완료 후 입법예고(10월)
 - 현재 애완동물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중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사업시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연계 추진**하여 효과 극대화

- 북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 **6개부처**(농림부·통일부·질병관리본부 등) **합동 T/F팀** 운영으로 대북방역지원(진단키트, 소독약품 등) 추진
-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총리실·국무조정실 등)를 통해 방역대책 및 인체감염 대책 등 협의 및 기관별 역할분담 체제 강화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광주) 발생시 방역인력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인체감염 예방협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 대부분의 시행과제는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며, 추진중인 과제는 **연내에 완료** 될 전망
- ◆ 다만 **동물보호법** 개정은 관련부처간 이견 등으로 **지연** 전망

- 공항·항만 검역은 탐지견운영, 여행객 발판소독조 설치 등이 계획대로 시행되었으며, 휴대품 검색 실적은 3/4분기까지 82% 진척을 보이고 있어 연말 목표달성 가능 전망
- 농가·지자체의 자율소독, 예찰실적은 ‘진국일제소독의날’ 및 공동방제단 운영이 3/4분기 기준 75%, 85% 진척도로 정상추진 중
-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은 입법예고(10.13)한 상태로 당초 계획대비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
-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은 계획(232명) 대비 94%(218명) 충원된 상태
- **공익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공익수의사법’제정안 및 ‘병역법’개정안은 국회계류중인 상태로 연내 개정가능할 것으로 판단
- 축산업등록제 추진은 10월말 현재 41천호 등록으로 96% 달성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상황
○ 해외악성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공항·항만 검역강화	정상추진
○ 농가, 지자체의 자율적 소독, 예찰 등 방역활동 및 책임 강화	정상추진
○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감염 예방활동 강화	일부지연
○ 증가하는 방역업무에 대응하여 조직 및 인력확충	정상추진
○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구축을 위해 축산업등록제시행	정상추진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시침에 따른 사업추진상 낭비요인 최소화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 탐지견(19두)·검역관(81명) 확대배치로 효과적인 휴대 축산물 검색 실시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연 52회)”을 “가축질병 예찰의 날”로 추가 지정, 정례화하여 소독과 질병예찰을 동시에 수행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화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상황변화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조류인플루엔자(11~익년 2월) 및 구제역(3~5월) 특별방역기간을 설정, 유입경로별 국경검역과 소독·예찰 등 국내방역 강화로 국내에서 해외 악성 가축질병 발생 예방
-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
 - 관계부처 합동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
- 방역업무 급증에 따른 조직 및 인력확충 추진
 - 지자체 방역인력(232명) 확충 및 공익수의사제도 도입 추진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가축방역업무 관련 국민이 인지해야할 사항이나 협조요망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아시아·북미·유럽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 사전 **예보발령**(10.14)으로 경각심 고취, 방송·신문사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언론 과잉보도 자제 및 우리 축산물 안전성 보도 협조요청, 자이툰 부대 방역기술 지원, 병리학 도감 발간·배포(800권), 홍보리후렛 배포(150천부)
- 휴대축산물 반입 예방 및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사전 홍보·교육
 - 전국 공항·항만 홍보캠페인 실시(1,069회, 연인원 4.7천명)
 - 선·기내 비디오/안내방송 44천회, 전광판 자막안내 12,179천회, 홍보물(검역안내서, 리후렛 등) 366천부 배포, 관계자 등 29천명 교육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방역업무 추진에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하에 사업추진**

-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총리실·국조실 등)를 통해 방역대책 및 인체감염 대책 등 협의 및 기관별 역할분담 체제 강화
 - **북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6개부처(농림부·통일부·질병관리본부 등) 합동 T/F팀 운영으로 대북방역지원(진단키트, 소독약품 등) 추진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광주) 발생**시 방역인력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인체감염 예방협력
- 지자체 방역인력 증원 및 공익수의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익수의사법” 제정 및 “병역법” 개정추진
 - 지자체 방역인력 218명 증원(목표 232명 대비 93% 달성, **행자부** 협조)
 - “공익수의사법”은 법사위(6.28), “병역법”은 국방위(6.2) 회부·계류 중 (**국방부·병무청**의 협조)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 대부분 성과지표는 달성하였거나 달성중에 있음
- ◆ 동물보호법 개정은 연내 개정이 불투명

- 여행객 휴대육류 검색실적, 소독의날 및 공동방제단 운영실적, 돼지 콜레라 및 뉴캐슬병 면역형성을, 지자체 방역인력 충원, 축산업 등록 실적은 3/4분기 실적치로 연말실적 추정시 당초계획 달성 전망
- 제도적 측면의 ‘공익수의사법’ 및 ‘병역법’ 제·개정은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입법예고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은 관련 단체의 의견 제출이 많아 연내 개정 불투명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해외 여행객 휴대육류 검색건수	○ 휴대육류 검색실적 20천건	- (9월말 기준) : 16,454건 - (12월말 예측치) : 20,000건	100%
○ 소독의날 운영실적	○ 연 52회	- (9월말 기준) : 39회 - (12월말 예측치) : 52회	100%
○ 공동방제단 운영실적	○ 연 21회	- (9월말 기준) : 18회 - (12월말 예측치) : 21회	100%
○ 가축방역특별포상제 실시	○ 39개소 281백만원	- (12월중) 평가후 포상실시	100%
○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을	○ 95% 이상	- (9월말 기준) : 95% - (12월말 예측치) : 95%	100%
○ 뉴캐슬병 면역형성을	○ 88% 이상	- (9월말 기준) : 84% - (12월말 예측치) : 88%	100%
○ 애완동물등록제	○ 동물보호법 개정	- (9월말 기준) : 관계부처 의견 조희 완료 - (12월말 예측치) : 국회제출	일정지연으로 연내개정 불투명
○ 지자체 인력충원	○ 232명	- (9월말 기준) : 218명 - (12월말 예측치) : 232명	100%
○ 공익수의사제도 도입	○ 제도도입 여부	- (9월말 기준) : ‘공익수의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2월말 예측치) : 연내 제도도입	100%
○ 축산업등록제 시행	○ 등록완료	- (9월말 기준) : 96% - (12월말 예측치) : 100%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 ***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가축질병 예방 활동의 철저한 이행으로 현재 악성가축질병 청정국을 유지하고 있음

- 조류인플루엔자('04.11~2월)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5월) 유입 경로별 국경검역과 소독 · 예찰 등 국내방역 강화로 악성 가축질병 국내유입을 방지, 청정국 유지
 - * 구제역('02.6월 이후) 및 조류인플루엔자('04.3월 이후) 국내 발생없음
- 지자체 가축방역 조직 · 인력확충과 공익수의사 제도 도입은 아직 정책 효과를 측정 ·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인력확충 및 공익수의사의 현장 배치시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V.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1. 총괄

가. 잘된 점

-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으로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산어촌 대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서 **정책의 총괄·조정**을 통한 시너지효과 기대
-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농업인 재해공제지원사업의 보장수준 확대 등 '05년 설정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해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1社1村운동의 확대**,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발** 및 **참여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 '05.10월말 현재 1社1村 자매결연 실적이 7,281건에 달하는 등 짧은 기간내에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도농교류 모델로 발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기존의 하향식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지역 개발 추진방식에서 벗어난 **상향식의 소권역(3~5개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지자체의 의식형성, 주민합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친화사업추진체계 구축·시행

나. 미흡한 점

- 농촌체험시설, 프로그램 등 **농촌지역의 수용기반이 미흡**
-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위한 정책사업의 직접 추진이 미흡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한 각 기관간 노인복지 증진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에 대처하는 **우리부차원의 농촌노인정책 수립 및 대책 추진이 필요**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 초 계 획	추진 실적
<p>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p> <p>□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확정(3월), '05년도 시행계획 수립(4월), 시·도, 시·군별 5개년계획 수립(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확정('05.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부문 133개 세부과제 확정(복지 32, 교육 35, 지역개발 36, 복합산업 30) - '05~'09기간중 20.3조원 투융자계획(복지 3.4조(17%), 교육 3.1조(15%), 지역개발 11.3조(56%), 복합산업 2.5조(12%)) ○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확정('05.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부문 93개 세부과제의 시행계획 수립(15개부처, 3개청) - '05년 투융자계획은 3.4조원(국비 1.7조(51%), 지방비 1.6조(46%), 자부담 등 기타 0.1조(3%)) ○ 기본계획 및 2005년도 시행계획 국회보고(6.22) ○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설명 등 홍보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V, KBS 제1라디오등의 프로그램 출연 - 기본계획의 홍보자료(CD 및 리플릿)를 제작·배포 ○ 시·도 5개년 계획 수립(9월), 시·군 5개년 계획수립(10월)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기본계획의 평가 및 보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시·도 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05. 5.26~6.14) ○ '05년도 시행계획 중간추진상황 점검 및 '06년도 삶의질과제에 대한 예산 확보현황 파악(9월) -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연말 까지 정상추진토록 촉구(10.26) ○ 기본계획 점검·평가방안 마련등 계획 추진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 연구과제 추진중(12월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점검·평가방안 연구 - 도시와 농촌의 삶의질지수 측정방안 연구 -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만족도 조사 ○ 농업인단체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등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기본계획 점검·평가단 구성 추진('05.10) 및 점검·평가방안 마련 추진중(12월완료)
<p>2. 농촌복지증진</p> <p>□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감률 확대 : 30 → 40% ○ 휴폐경지 감액비율 확대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확대(40%) 시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감률 : ('04) 30% → ('05) 40%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6조 개정 ○ 경감률 확대 소요액 '06예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감률 : ('05) 40% → ('06) 50% - 예산액(억원) : ('05)666→('06)1,359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삶의질 계획 및 보건복지부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반영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농작업 재해보상수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수준(사망) : 1,000→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부터 사망시 보장수준(1,500만원) 확대 시행 ○ '06년부터 사망보장 단가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수준 : ('05)1,500→('06)2,500만원 - 예산액(억원) : ('05)114→('06)183
<p>□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0~5세)양육비 지원대상(농지소유 1.5ha→2ha)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0~5세)양육비 지원대상(농지소유 1.5ha→2ha)확대 시행('05.1) 및 지원단가 인상('04:102→'05:1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출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454만원, 26천명 →연간 460만원, 27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출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이자 용자 : 25천명, 637억원 -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 보조 : 9천명, 102억원 *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 보조사업은 '06년부터 농과대생중 영농종사 희망자와 성적우수 및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지원으로 제도 개편('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출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454만원, 26천명 →연간 460만원, 27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출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이자 용자 : 25천명, 637억원 -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 보조 : 9천명, 102억원 *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 보조사업은 '06년부터 농과대생중 영농종사 희망자와 성적우수 및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지원으로 제도 개편('05.7)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노인복지사업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친화농업모델 개발 ○ 고령은퇴농 귀농교육 ○ 전원형 은퇴농장 조성 ○ 지역단위 노인 공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농업 모델개발 및 연구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실버농업인 설문조사(1,922명) - 도시 장년층의 은퇴후 귀촌의사 조사(도시인 386명) ○ 전원 농업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05.3.2~7.29 - 인원 : 840명(주말농장204, 전원영농 636) ○ 민간주도형 은퇴농장 조성(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나주 봉황면 만봉리 - 단지규모 : 6천평 - 사업기간 : 3년('05~'07) - 사업비 : 15억원(국비 12, 지방비 3) ○ 거주지역, 경제능력 등에 따른 농촌 노인의 유형화 및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05.5~'05.11 * 중간보고 : '05.9.15
<p>3.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문화관광 활성화</p> <p>□ 1사1촌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도농교류모델로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를 거쳐 1사1촌운동 발전 방안을 마련(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1촌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도농교류의 모델로 정착되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0월말 현재 1사1촌 자매결연 실적이 7,281건('04년 2,473건 대비 4,803건 증가)

당 초 계 획	추진 실적
<p>○ 1사1촌 운동의 유형별, 추진 단계별 내실화를 위해 참여 가이드북 발간 · 보급 및 우수사례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 3,687(51%), 관공서 976 (13%), 소비자단체 648(9%), 사회·종교단체 334(5%), 기타(농협, 동호회 등) 1,636 (22%) 참여 ※ 중앙정부부처 22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9개 실국별로 참여 ○ 1사1촌운동 발전지원계획 수립('05.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실시('04.12~'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 총3차에 걸쳐 전화 샘플조사 ('04.12.22~30), PCRM설문조사 ('05.1), 현장실태조사('05.2.15~19),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05.3.7~20) 실시 · 농협, 농기공 주관 실태점검 실시 ('05.1.10~20) -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1사1촌운동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안 마련(5.9) ○ 1사1촌 운동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마련 T/F팀 구성 및 운영('0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농협, 농기공, 전경련, 기업체, 마을대표, 학계, 언론사 등 각계 참여 - 1단계 점화 → 2단계 도약 → 3단계 국민대통합 - '05.9.23 1차회의 개최, 활동계획협의 ○ 가이드북 발간·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1촌 자매결연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365 생활속 농촌사랑 아이디어북 “내 삶의 스키텔에 농촌이 들어 왔다”□□ 10,000부 제작·배포 ('05.6)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농촌체험활동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상품 보급</p>	<p>○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수사례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일간지의 기획기사 연재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의 '1사1촌에 미래있다-한국농촌의 희망찾기' 기획기사, 1사1촌 교류사례 등 ('05.10월까지 250여회) - 1사1촌 자매결연기업체 초청 워크숍 개최 (농협, '05.9.6) <p>○ 도농상생 한마당행사 개최('05.10.13~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 경제5단체, 1사1촌 자매결연 기업·단체, 농촌마을주민, 농협 등 8만여명 참석 <p>○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의 100만회원 가입 캠페인 전개('05.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0월말 현재 137만명 가입 - 40대 이하의 젊은층이 전체 회원의 79%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0대 : 46만명(34%) • 30~40대 : 62만명(45%) • 50대이상 : 29만명(21%) <p>○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상품 가입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9월말 현재 20개 마을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10개마을→('05) 20 (100%증) - '06예산(안) 75백만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개마을 보험료 지원계획(마을당 2백만원, 국고50%, 지방비 50%)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박람회 개최(4.27~5.1) 및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농촌문화관광의 다양한 정보제공 및 체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05.4.27~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무역전시장(SETEC) - 농촌체험마을(50개), 지자체(13개), 유관기관 및 업체(22개) 등 참가 - 당초 목표 5만명을 크게 초과한 6.8만명 방문 ○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신 농산촌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5.21 단양 한드미마을 ○ TV, 신문, 잡지, 대중교통,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1TV 6시 내고향·싱싱 토요일, KBS 2TV 세상의 아침 등 프로그램에 농촌체험마을 소개 코너 등 마련 - 중앙 일간지와 지방신문의 체험사례 및 이벤트 적극 보도 - 체험휴양시설 안내를 위한 콜센터(1577-1417) 및 관광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 운용 - PCRM을 통한 정보제공 -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소개 책자·지도 등을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농협,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 비치 · 농촌체험관광 2만부, 그린맵 7만부 등 - 전국 아파트 반상회 회보를 통한 홍보 ('05.4.7)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도시지역 초·중·고생이 재학 중 최소한 1회 이상 농촌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p> <p>- 초·중·고생 대상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농촌생활체험캠프 등 운영</p>	<p>○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05.7~8월)</p> <p>- 농림부장관·농협중앙회장 공동명의로 캠페인 참여 협조서신 발송(8천명, '05.7.4)</p> <p>- 캠페인 발대식 개최('05.7.11, 서울 명동)</p> <p>- 농림수산 유관기관 직원의 1+1운동 전개 등 출선 참여</p> <p>· 농림수산 유관기관 직원의 52%가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실시</p> <p>- 7~8월중 농산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22% 수준 증가</p> <p>○ 중·고·대학생, 일반국민 대상 □□나의 농촌체험기□□ 공모</p> <p>- 공모기간 : '05.6~9월</p> <p>- 응모 : 1,973편 응모('04년 1,036편 대비 90% 증가)</p> <p>- 10~11월중 심사하여 12월 초 시상 계획</p> <p>○ 초등교사 체험행사 실시('05.8월)</p> <p>-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소재 187개교 초등학교 교사 등 442명 참여</p> <p>○ 초등학생 체험행사실시('05.5~10월)</p> <p>-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7,327명 참여</p> <p>○ 초등학생 도농생활 체험캠프 운영('05.7~10월)</p> <p>- 4개교 98명 참여</p> <p>· 도시 초등학생의 농산어촌문화체험 : 2개교 47명</p> <p>· 농촌 초등학생의 도시문화체험 : 2개교 51명</p>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개최,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등을 통해 우수관광마을 홍보 및 도농교류 공로자 포상 정례화</p> <p>□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후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p> <p>○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확대('04 : 32개소 → '05 : 47) 및 '04년까지 조성된 체험마을 성과평가후 민간전문가 전담컨설팅 시범실시</p> <p>- 저수지 주변에 체육공원·산책로 등 휴양시설 개발도 병행추진</p>	<p>○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및 1도1촌 우수마을 선정</p> <p>- 공모기간 : 6~9월</p> <p>- 응모 : 44개 마을</p> <p>- 10~11월중 심사하여 12월초 시상계획</p> <p>○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p> <p>- 공모기간 : '05.9~10월</p> <p>- 추천건수 : 67건('04년 48건대비 40% 증가)</p> <p>- 10~11월중 심사하여 12월초 시상계획</p> <p>○ 농촌체험관광 우수여행사 포상</p> <p>- 공모기간 : 10~11월초</p> <p>- 11월중 심사하여 12월초(12.8) 시상계획</p> <p>○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확대추진</p> <p>- ('04) 32개소 → ('05) 47개소</p> <p>○ 여름철 휴가대비 농촌체험마을의 도시민 수용태세 점검 및 지도('05.7~8월)</p> <p>- 체험P/G, 숙박 및 편의시설 관리상황, 친절도 등 점검·지도</p> <p>- 마을주민 대상으로 교육실시('05.8월, 430명)</p> <p>○ 체험마을 컨설팅을 위한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p> <p>- 1인1촌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05.6.17)</p> <p>- 마을과 전문가 참여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전문가 인력 pool 구성 · 40개 농산어촌체험마을과 전문가간 협약 체결하여 자문 실시중('05.7~)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투어포럼을 결성하고 지역단위의 체험마을 지원 네트워크 구축(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관련기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추진방향등 협의('05년 2회 운영 : 2.1,4,25) ○ 농촌방문고객 서비스향상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 시설안내표지 설치협조요청(건교부, 10.28) ○ 체험마을 평가·사후관리방안 마련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체험마을 운영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현지점검실시('05.8.31~9.1) - 농산어촌체험마을 대표자와 방문자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등 설문조사 결과 분석중('05.9~11) · 설문대상 : 1,223명 - 체험마을 평가·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05.5~12) - 현지점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후관리방안 마련계획('06.1) ○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의 수변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말까지 5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완료목표로 추진중 · 10월말까지 진도 88%로 정상추진중 ○ 강원도 : 그린투어리즘 혁신보고대회('0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지사, 18개 시장·군수, 관련분야 전문가 및 마을대표 등 108명 참석 - 강원도 농촌관광 혁신방안 및 우수 사례 등 발표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농어촌 민박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민박 제도 보완 추진('04.11,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제출) - 시장·군수의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도입, 소방안전 시설 기준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 : 민간단체 및 지자체장(경북도지사, 9개 시장군수)이 참여하는 도농상생 경북네트워크 발족('04.7) - 경북 도농상생 촉진대회 개최('05.11.4) · 주관 : 도농상생경북네트워크/농협경북지역본부 · 약 1천여명 참석 ○ 10개 시군(남원·나주·안동·영주·문경시, 양양·증평·당진·부안·강진군)이 참여하는 농촌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05.11.2, 63빌딩, 6백여명 참가 ○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계획 - '05.12.8, aT센터 ○ 농어촌정비법개정법률안 국회의결 ('05.6.30, '05.11.5 시행) - 농어촌민박의 범위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한정 -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05.11.5시행) - 농어촌민박의 허용규모를 객실(7실이하) 기준에서 주택연면적(45평미만) 기준으로 개선 -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갖추도록 함 ○ 개선된 농어촌민박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실시 ('05.10.24)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4. 농촌지역개발</p> <p>□ 농촌지역개발 인재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형 복합산업을 주도할 농촌지역개발 인재육성 대책 수립 ○ 지역리더, 마을주민, 공무원 등 농촌 인적자원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범교육(1,3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수렴('05.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관련전문가,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05.1) - 대책(안)에 대한 전문가 심의('05.3) ○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수립('05.4.13) ○ 인적자원 유형별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05.7~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과정으로 구분하여 '05.10월말까지 1,332명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화과정(순회교육), 농촌지역개발 리더쉽육성과정, 사업주체별 특화과정, 특별과정 * 11~12월 기간중 300여명 추가 교육 예정 ○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방안 수립중('05.7~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05.8~9월) 및 교육생 설문조사('05.7~9월) - 연말까지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계획 ○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재 개발 추진 중('05.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05.9~10월) 및 교육생 설문조사('05.9월) - 연말까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초급 수준의 교재(안) 제작계획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국내외 지역개발 전문가 발굴 및 DB화 등</p> <p>□ SOC 위주의 면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농촌경관보전·개선분야를 포함하고 생활용수개발사업 확대 추진('05 : 346개소)</p>	<p>○ 농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DB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중('05.8~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축계획 홍보('05.9~10월) * '05.10월말 현재, 대학교수, 연구원, 민간 기관 등 전문가 170여명에 대한 자료수집 완료 ※ 1인1촌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마을컨설팅 등에 활용계획 <p>○ '06년부터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심의('05.8~10월) - 사무장 제도 시행방안 마련('05.10.19) · '06예산(안) : 100명, 6억원(국고) * 사무장 1인당 월100만원(국고 50%, 지방비 등 50%) 지원 계획 - '06.1월부터 사무장 채용·운용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중 · 지자체에서 지원대상마을 및 사무장 채용 공모 및 심사 등 추진중('05.10~12) <p>○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시 경관보전 및 개선분야를 포함토록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개정('05.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8개면을 대상으로 추진 - 10월말까지 진도 80%로 정상추진중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면 소재지 등 생활권을 고려한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미래형 복합생활공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36개)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사업 착수 - '05신규권역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확대를 위해 사업대상 마을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마을도 사업시행 가능토록 지침 개정('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마을 기준 확대 : 50호→20호 - '05년 471억원의 예산으로 346개소 추진중 · 10월말까지 진도 82%로 정상추진중 ○ 기선정된 36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실있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에 대하여 3단계(구상·중간·최종)에 걸친 전문가 자문·평가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검토 ○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36개 권역에 대해 시행계획수립 및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권역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단양 가곡권역('05.9.30) · 경남 하동 평사권역('05.10.7) - 나머지 34 권역은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중, 연내 착공계획 ○ '05년 신규 기본조사 권역 선정(40권역) 및 조사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신청한 50개권역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실시('05.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공사(75명)과 외부전문가(51명, 권역당 3명) 공동으로 조사 · 사업신청내역의 적정여부, 발전가능성, 인근지역 파급효과 등 타당성 검토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면소재지 등 생활권 중심지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회관, 체육·녹지공원, 소재지 기반정비 등 <p>□ 도시민·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공동사업 추진방안 도입</p> <p>○ 전원마을 조성시 진입도로, 부지조성 지원(51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 계획수립대상 40개권역 선정('05.8) ·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23명)회의를 통해 평가결과 중점토의 · 적정 권역으로 조사·평가된 45개 권역중 평점순으로 40권역 선정 - 40개 권역중 '06사업 착수대상 20개 권역 선정 - '06신규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연내 40개권역 기본계획수립 완료계획 · 31개 권역은 농업기반공사가 전문가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실시 · 9개 권역은 농업기반공사가 민간기관에 위탁실시 ·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권역별 기본계획 2단계 평가실시('05.11~12) <p>○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관계관 교육 실시('05.3.29, 7.19, 11.4)</p> <p>○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기반, 문화복지, 농촌경관개선, 재해방지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종합정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회관, 마을회관, 농촌경관개선 등 2,116개소 사업추진 <p>○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민관공동방식으로 사업추진토록 지침개정('05.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진입도로·상하수로·오페수처리 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지원(10~20억원) - 민간은 토지매입, 부지정리 및 주택 건축 등 추진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농촌지역개발 모델을 발굴하여 전문가 워크숍 등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마을조성사업은 3개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05년 3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주거단지(26개소) - 체재형 주말농장(2개소) - 은퇴농장(2개소) ○ '05년 277억원의 예산으로 51개소(전원마을조성 30, 문화마을조성 계속사업 21개소) 추진중 ○ 농촌지역개발 모델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워크숍 ('05.9.9-9.10) - 전원마을조성 관련 지자체 관계관 교육('05.10.18)

3. 자체평가결과

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총 평>

-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05.4)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범 정부적인 복지·교육 여건 개선 및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부처의 ‘2005년도 시행계획’과 ‘시·도, 시·군 5개년 계획’ 수립을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여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

- 그 동안 각 부처별로 농촌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추진하던 농산어촌 대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총괄·조정**이 가능해짐으로서 **시너지 효과** 기대
- 농어업인 단체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에 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경제정책조정회의('05.2.25, '05.4.1) 등 관계부처 협의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1차 '05.2.1, 2차 '05.4.16) 절차 진행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고, 동 기본계획에 따른 '05년도 시행계획 및 시·도, 시·군 5개년 계획도 다소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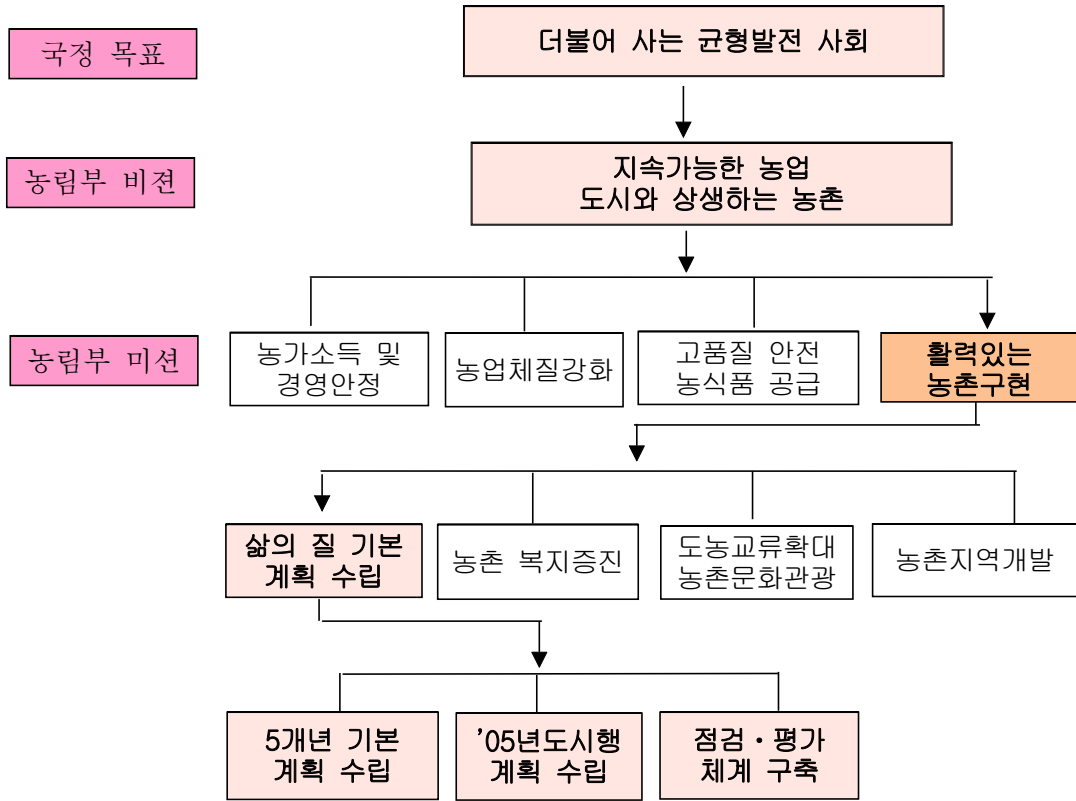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농어촌 지역을 도시와 상생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 계획□□의 수립·추진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 농림부 미션인 **활력 있는 농촌구현** 등 상위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시장개방 확대와 도농간 생활격차 심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
 - 대외적으로 DDA협상,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와 대내적으로 국가경제와 농림어업 부문간 격차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
 -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로 농산어촌 활력 저하
 - * 농어촌 인구비중 : ('90) 25.6% → ('00) 20.0%
 - * 만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율('04) : 농어가 28.6% > 도시 6.7%
 -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도시에 집중되는 등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과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및 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의 취약으로 도농간 생활격차는 계속 심화

- * 의료기관 도시집중도 : 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8%)
-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04) : 2,420개교(전체 학교 5,149개의 47%)
- * 도로 포장율('03) : 농산어촌 51.5% < 도시 89.5%
- * 상수도 보급률('03) : 농산어촌 52.9% < 도시 98.0%

- UR이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으로 농산물 유통기반 마련 및 농업 내부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농어촌의 생활 인프라라는 정책적 관심부족과 추진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범정부차원의 통합 조정 결여와 농산어촌지역의 특수성 고려 미흡으로 평균 지원에 그침

《정책환경 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위협 요인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농촌주민의 삶의질향상 대책마련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농가경제의 어려움 가중, 이농확대, 고령화 진전
강점(S)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특별법 제정·시행 및 농특세 10년 연장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 공간으로 조성 ○각 부처 농어촌대책들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약점(W)	○농업·농촌의 활력 저하	○농촌지역의 복지·교육 및 기초생활여건 개선 추진 ○농촌다움을 유지한 지역개발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 구축	○경관자원 개발,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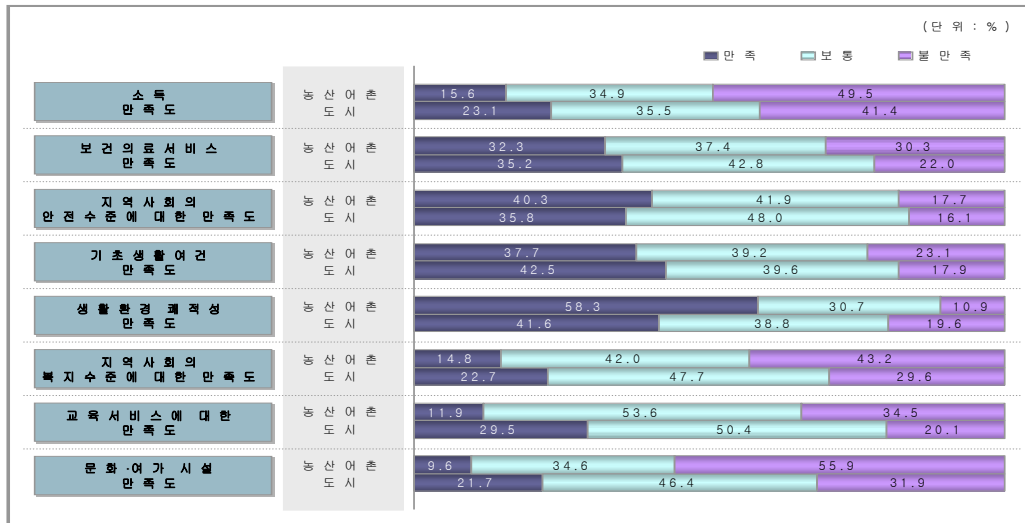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05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 후,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을 축소시키고 만족도를 전년('04.8)보다 제고하겠다는 성과지표를 제시

○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촌인구를 현 수준인 20%로 유지하겠다는 정책목표는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이라는 농정목표 체계내에서 목표를 명확히 제시

- 또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도를 축소시키고 만족도를 전년('04.8)보다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결과('04.8~11)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 농촌주민의 만족도	○ 전년대비 불만족도 축소 및 만족도 제고	○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한 결과로 평가	○ 없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의 실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0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도·시군별 5개년 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평가 및 보완체계 시스템 구축 등 정책·제도 운영측면에서 목표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구비하고 추진

<조직측면>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부처 장관과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위원회”를 구성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으로 각종 정책의 총괄·조정을 통한 목표 달성 지원

<제도측면>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04.3.5)하여 삶의질향상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된 농특세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의 자본·인력·경영기법 등을 도입한 제도마련 등 이행의 효율성 제고

<예산측면>

- 복지기반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복합산업 활성화의 4대중점 과제에 총133개 과제를 15개부처에서 추진
- 계획기간중('05~'09) 총투융자 규모는 20조 2,731억원으로 국비 11조 5,527억원은 기 마련된 119조 투융자 재원과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 재원 범위내에서 충당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복지실태조사,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04.8~11)
 - 조사대상 : 5,000 가구(농산어촌 3,500, 도시 1,500)
 - 조사결과 : 교육, 보건, 의료, 문화여가, 복지, 소득, 기초생활여건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농산어촌의 만족도가 도시보다 낮게 나타남
 - ⇒ 반면, 생활환경 쾌적성과 지역사회 안전수준은 농산어촌이 높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안) 토론회 개최
 - '04. 12. 20, 복지·교육·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농업인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 50여명 참석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및 협의회(3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2회 개최('05.2.1, '05.4.16)하여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05.1.25) 심의 및 두차례의 경제정책조정회의('05.2.25, 4.1)를 거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의 심의('05.6.20)를 거쳐 □□'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확정 등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삶의 질 향상 대책은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 및 '05년 시행계획에 따라 **15개 관계부처 및 3개청에서 자율적으로** 소관사업을 추진하는 체계
 - 우리부는 '05년 삶의 질 향상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05. 10)
 - '05년 사업 93개중 89개 사업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제도 개선 사항은 실시하였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 다소 부진이 예상되는 4개사업(여성가족부 소관)은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협조 요청('05.10)

- 부처별 사업현황('05)
 - 총 133개 과제(복지 32, 교육 35, 지역개발 36, 복합산업 30)
 - 2005년 시행사업 : 93개 사업(비예산사업 : 8개 포함)
 - * 부처별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5, 해양수산부 8, 여성부 2, 행정자치부 6, 문화관광부 8, 환경부 3, 정보통신부 1, 건설교통부 1, 산업자원부 1, 노동부 1, 소방방재청 1, 농림부 34, 농촌진흥청 6, 산림청 4

담당부처	'05년 시행계획 수립 대상사업
교육부 (12)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우수고교 육성,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방학캠프 운영 지원,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특수교육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복지부 (5)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공공보건기관 의료기반 확충, 농산어촌계가노인복지센터 확충, 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 설치·운영
해수부 (8)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 지원, 자영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업인 정보화교육, 국고 여객선 건조,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여성부 (2)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농산어촌 만5세아 보육지원
행자부 (6)	정보화마을 조성, 농어촌도로 정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주택,마을하수도, 빈집), 소도읍 육성사업, 오지개발촉진사업, 도서개발촉진사업
문화부 (8)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지방문화프로그램운영, 문화역사마을 조성,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 • • ●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담당부처	'05년 시행계획 수립 대상사업
환경부 (3)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면단위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정통부 (1)	농어촌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조성
건교부 (1)	농어촌교통서비스 강화
산자부 (1)	농공단지 조성
노동부 (1)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소방방재청 (1)	소하천정비
농림부 (34)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여성 농어업인센터 설치, 농어가도우미 지원,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농산어촌대학생 학자금 지원, 자영농과계고 급식비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정보화인프라구축,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선정 및 활용, 농어업 관련정보 제공 확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공단지 조성, 저수지 수변개발,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경관보전직불제, 농산어촌 경관보전 제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입, 1사 1촌 운동, 도시민 농촌주택 갖기 활성화,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농업인 정보화교육, 향토자원 소득화사업, 농산어촌 커뮤니티센터 운영,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도농교류센터 운영,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농진청 (6)	건강관리실 확충,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건강장수마을 육성,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산림청 (4)	산림박물관 건립, 산촌종합개발사업,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수목원 조성
총 계	93개 사업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확정('05.4.16)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1.25) 및 위원회('05.2.1) 제1차 심의
 - 두 차례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2.25, 4.1)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2차 심의를 거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확정
-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확정('05.6.20)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제2차 심의를 거쳐 확정
- 시·도, 시·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 수립 완료
-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점검·평가방안 마련 등 계획추진관련 환류 시스템 구축 추진
 - 농업인단체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등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기본계획 점검·평가단 구성 추진중('05.10)
 - 기본계획 추진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 연구과제 추진중(12월 완료)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시·도, 시·군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추진 - 기본계획 수립(4.16), 2005년도 시행계획 수립(6.20) 및 시·도(9.30), 시·군계획 수립(10.30) 등 모든 계획수립 완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T/F팀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점검·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연계·반영 추진
- 기본계획 수립은 교육부, 복지부, 행자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04.6)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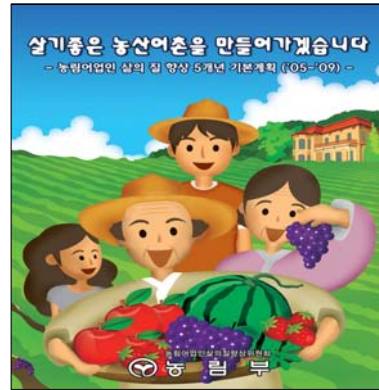
◆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

- 기본계획 수립시 농어업인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부처, 시·도가 참석하는 토론회('04.12.20)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
 - 여성농업인센타 기능 확대(보육중심 → 종합복지센터), 농가도우미 제도의 지원범위(출산 → 사고, 질병, 교육) 확대 등
- 향후 매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에서 세부과제를 총괄 조정
 -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축소 또는 삭제 추진
 - 매년 농촌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Feed Back 시스템 구축으로 계획의 실효성 제고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농촌주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및 CD 제작·배포, 언론기고, 대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의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도, 시·군, 농촌주민 및 일반국민 등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실시



- 농업인·소비자, 언론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홍보 추진
 - 국 회
 - 관심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자료제출 및 국회에서 의원주재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여
 - * 주승용의원('05.2.17), 강기갑의원(5~6월)
 - 농업인·소비자 등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CD 및 리플릿(10만부) 제작·배포(9월)
 - 시·도를 통해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설명
 - * 농어업인 단체, 교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실시(경북, '05.7.15)
 - 언 론
 - 언론인터뷰 및 대담(5회), 기자설명회, 신문기고, 인터넷 게재 등
 - * KTV 생방송 국정 오늘 대담(4.22), 춘천 KBS라디오 시사플러스 인터뷰(4.25), KBS 광주(R) 남도투데이 인터뷰(4.25), KTV의 KDI와 함께하는 미디어 경제이슈 대담(5.7), KBS 제1라디오 농수산 정책진단(5.8)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15개 관계부처가 범 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체계
 - 교육부, 복지부, 행자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T/F팀 구성('04.6)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장관과 농어업인 단체 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된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서 총괄 심의하여 확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밑에 15개부처 차관, 민간위원 9명 등으로 실무위원회 설치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림부 농촌정책국에 사무국 설치
 - 매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및 투융자계획 조정(안) 제시 등을 위해 농림어업인단체, 전문가 등으로 점검·평가단 설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 관련 기구>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인
 - 당연직(정부) : 15개부처 장관(간사위원 : 농림부장관)
 - *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 필요시 위원이 아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영 제3조제2항)
 - 위 축(민간) : 농어업인단체 대표 및 농촌분야 전문가 등(9인)
 - 역할 : 농산어촌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정책 총괄·조정, 기본계획 심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
 - 구성 : 농림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
 - 당연직(정부) : 관계부처차관(15), 위축(민간) : 농촌분야 전문가등(9)
 - 역할 :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특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무국
 - 구성 : 농림부 농촌정책국(사무국장 : 농촌정책국장)
 - 역할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 지원(의안 준비, 회의운영 지원 등)
-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단
 - 구성 : 총괄,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의 5개분과(총 20명)
 - 역할 : 매년도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및 투융자계획 조정(안) 제시 등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12월 중순이후** 가능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만족도 조사 추진중('05.9~)**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 달성도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 '04년도 대비 삶의질 불만족도 축소 및 만족도 제고	○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 추진 중('05.9~12월)	○ 조사 미완료 * 12월중순 완료예정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기본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평가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되었지만,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는 아직 이른 상황**

- 그 동안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추진해오던 농어촌 정책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확정·시행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므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음
-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나. 농촌복지 증진

<총 평>

-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농업인 재해공제 보상 수준 확대, 영유아 양육비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노인 복지사업 준비 등 복지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농촌형 사회안 전망 확충에 기여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30% → 40%)
 -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을 및 보장수준 확대
 - 가입을 및 보상한도 : ('04) 37%, 1,000만원 → ('05) 44%, 1,500만원
 - 영유아 양육비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노인복지사업 준비
 - 영유아(0~5세) 양육비 지원 대상확대(농지소유 1.5ha → 2ha), 농촌출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04년 : 26천명, 607억원 → '05년 25천명, 637억원)
 - 은퇴자 귀농교육과정(840명) 신설 및 전원형 은퇴농장 선정 (1개소, 전남 나주)
- 사망 또는 장애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상해 공제료 지원수준도 매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직장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상수준보다는 미흡한 상황
 - * 공제료 지원 수준 : ('03) 평균공제료(22천원) 50% → ('05) 평균공제료(28천원) 50% → ('13전망) 평균공제료(125천원) 50%
 - 또한,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농약중독, 어깨 결림, 요통 등) 등도 재해보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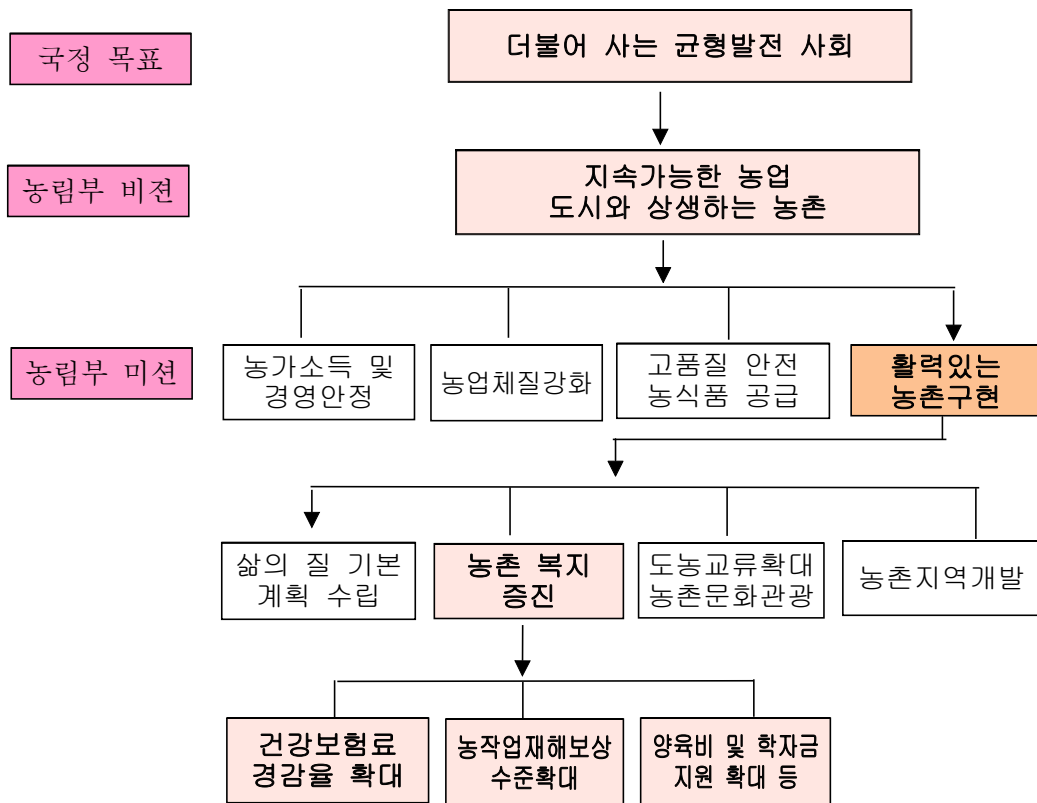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 대응성

- ◆ 농촌복지 증진대책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04.8)에 따라 농촌지역 복지 여건을 고려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책

○ 농촌 복지대책 수립·추진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 농림부 미션인 “활력있는 농촌구현” 등 상위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건강 보험료 과중, 농작업 재해 및 학자금 등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노인복지가 도외시 되는 등 농촌 복지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의 변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

《정책환경 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기회 · 위협 요인 분석		기회(O)	위협(T)
		○농촌주민의 복지수요 지속 증대	○가격지지 축소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농가경제의 어려움 가중
강점 · 약점 분석			
강점(S)	○농촌주민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성 증대	○건강 보험료 및 재해공제 지원 ○농촌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등	○건강보험료 경감추진 ○재해공제 가입율 및 보장수준 확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확대
약점(W)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복지여건 미흡	○농촌지역 복지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농촌복지 증진을 위해 **명확한 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율, 재해공제 가입율 및 보장수준,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핵심지표로 제시하여 목표를 계량화
 - 건강보험료 경감율 : ('04) 30% → ('05) 40 → ('06이후) 50
 - 재해공제 가입율 : ('03) 37% → ('04) 40→ ('05전망) 44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3년간('03~'05) 평균실적치
○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	○ 경감율 40%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6조 개정여부	○ '04년 신규사업 - '04 경감률 : 30%
○ 안전공제 가입률 및 보장수준	○ 가입률 : 44% ○ 보장수준 : 1,500만원 * 사망시 기준	○ '05년 사업정산서 및 예산서 확인	○ 가입률 : 38% ○ 보장수준 : 933만원
○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지원 확대	○ 영유아 양육비 : 농어가 총영유아의 28% 지원 ○ 학자금 지원 : 621억원(27천명)	○ '05년 사업정산서 ○ 지원결과보고서	○ '04 신규사업 ○ '04 지원실적 : 19% ○ 537억원(23,856명) 지원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촌 교육여건 개선 및 복지기반 확충은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음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40%까지 확대
 -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공제 지원수준을 확대
 - 농작업 사망시 : 1,000만원 → 1,500만원(증 500만원)
 -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농지소유 : 1.5ha → 2ha
 - 학자금 637억, 25천명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복지실태조사,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5개년 계획안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규모 등을 결정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04.8~11)
 - 교육, 보건, 의료, 문화여가, 복지, 소득, 기초생활여건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농산어촌의 만족도가 도시보다 낮게 나타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안) 토론회 개최('04.12.20)
 - 5개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및 협의회(3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2회 개최('05.2, '05.4)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기본계획□□을 심의·확정
 - “지역개발 실무위원회”의 심의('05.6.20)를 거쳐 □□'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확정 등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보건복지부와 협의 및 관련기관간에 협력체계를 통하여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경감을 확대(30%→40)를 위해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05.7)
 - “휴폐경지 감액비율 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에 반영('05.3)
- 농작업 재해보험,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은 농림부의 고유 업무로서 타 부처 정책과의 관련성은 없음

- 농작업 재해보상은 사업추진기관인 “농협중앙회”와 학자금 지원은 “학술진흥재단” 및 “농촌희망재단”과 영유아 양육비는 지자체 등과 협력 체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중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각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상황
○ 농어민 건강보험료지원	○ 정상추진
○ 농업인 재해공제지원	○ 정상추진
○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확대	○ 정상추진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시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 현지 출장 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추진 사업별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지출장 점검 등을 실시
 - 각 사업별로 매분기별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보고토록 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
 - * 농업인 재해공제 현장 점검 실시('05. 11.15~18, 경기, 경북)
-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 시행후 여건 변화는 없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는 없었지만,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자금집행계획 등을 수립·추진**
 -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의 경우 평가부서(재정평가담당관실)에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위한 집중평가 실시중('05. 10~11)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각 사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 실시**

- 농어민건강보험료, 농업인재해공제지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 등 지원 대상에 맞게 **다양한 홍보를 실시**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공단 소식지 게재('05. 6), 매월 발급하는 납입 고지서에 경감내용 고지,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게시
 - 재해공제 : 재해공제 안내장(530천부) 및 포스터(60천부) 배부, 공제 상품 설명서 농협 비치 등
 -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증: 보도자료 배포(3회), 학자금 지원 포스터 제작배포(2천부) 등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각 사업별로 사업시행 주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사업 추진**

- 농촌복지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가 **유기적인 협조하에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 **건강보험료** :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관련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사업 지침 운영, 예산 및 자금교부),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징수 등 집행 업무, 홍보 등), 지자체(농림어업인 과약 등)
- **재해공제** : 농림부(사업지침 운영, 예산 및 자금교부), 농협(사업관리, 상품개발, 홍보 등)
-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 농림부(사업지침 운영, 예산 및 자금교부), 지자체(양육비 사업집행), 한술진흥재단·농촌희망재단(학자금 지원, 홍보 등)

⑤ 목표의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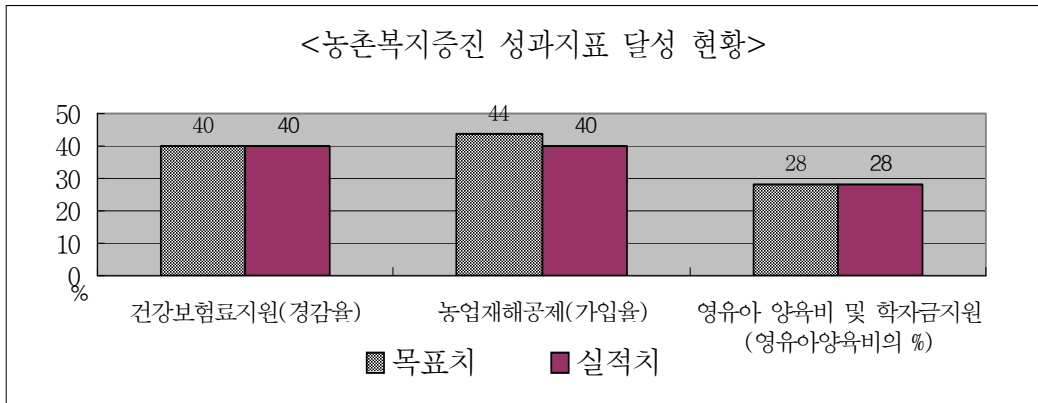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달성될 전망

-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05. 10월 현재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
 -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율의 경우 10월 현재 40%를 달성하였으나, 12월까지는 계획목표치(44%)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 달성도
○ 건강보험료지원 - 경감률 확대 - 휴폐경지 감액비율 확대	○ 경감율 : 40% ○ 20% 이상	○ 40%(관련법시행령 개정) ○ 삶의질기본계획 및 보건복지부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반영 완료	○ 100% ○ 100%
○ 농업인재해공제지원 - 가입률 확대 - 보장수준 확대	○ 44% ○ 1,500만원	○ '05.10현재 40% (690/1,726천명) ○ 1,500만원(예산반영 시행중)	○ 91% *'05말 100% ○ 100%
○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지원	○ 영유아 양육비 : 농어가 총영유아의 28% 지원 ○ 학자금지원 : 621억원, 27천명	○ 영유아 양육비 : 월평균 29천명 지원(28%) ○ 학자금지원 : 637억원, 25천명	○ 100% ○ 102%
목표달성도 평균		100.0 %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복지대책 추진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가시화

-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재해공제 가입율 및 보장수준 확대,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매년 지원예산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부담할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 농업인 재해공제 사고 등으로 인해 농업인 지급 공제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
- * 농업인 공제료 지급액 : ('03) 145억원 → ('04) 177억원 → ('05.8) 109억원

다.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문화관광 활성화

<총 평>

-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1社1村운동이 체계적인 지원계획, 적극적인 홍보 등에 의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
- 도농교류에 대한 실태조사('05.3월)를 거쳐 1社1村운동 실천계획을 수립('05.5월), 유형별·단계별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도시지역의 자원과 여가인력을 농촌에 유입시켜 활력있는 농촌지역으로 변화·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체험활동 등 **농촌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체계**로 역량 강화
 - 농산어촌체험박람회 개최 및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을 통해 농촌 문화관광의 **다양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
 - 농어촌 민박제도의 보완,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등 **홍보강화**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역량 강화**
- 일부 농촌마을은 편의시설 및 도시민 수용 태도면에서 개선 필요
 - 침구류·화장실 등 청결성 확보, 체험 프로그램 확충 등

☞ 1社1村운동

한·칠레 FTA 협상,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농촌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도·농간 이해증진과 교류를 통해 상생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인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는 사회적인 운동

☞ 농어촌민박제도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 이용객에게 편의제공과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숙박업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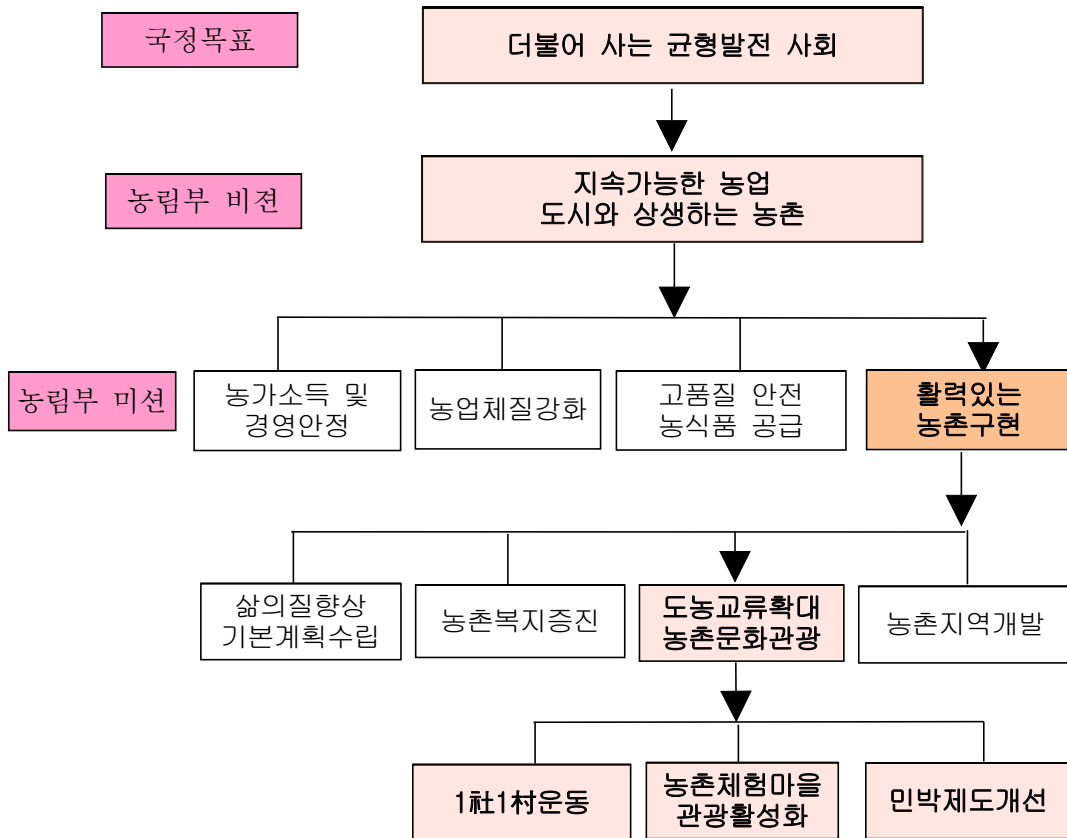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도농교류확대와 농촌관광활성화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도시의 자원과 여가인력을 농촌지역에 유입시켜 **활력있는 농촌구현**을 위해 1社1村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시·농촌 지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책

- 도농교류확대와 농촌관광활성화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활력있는 농촌구현** 등 상위 목표와 부합

《 정책목표 구조 》



-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 교통망 확충, 노령연금 정착 등의 영향으로 농촌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인구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의 기능과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코자 도시·농촌지역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
 - 농가인구비율 감소세 심화
 - ('90)15.5% → ('95) 10.8% → ('00) 8.6% → ('03) 7.4%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
 - ('90)97.4% → ('95) 95.1% → ('00) 80.6% → ('03) 76.2%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 분석》

기회·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O)	위협(T)
		○주 40시간 근무 등 여가수요 증대	○대외개방 가속화로 농촌소득 감소 우려
강점(S)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쾌적한 환경여건 보유	○농촌관광수요 창출 - 언론홍보 - 농촌관광박람회 개최 및 포털사이트운영등	○농촌관광 지원체제 구축 -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제도 도입 - 농어촌민박 육성제도 보완 등
약점(W)	○농업·농촌의 활력 저하	○농촌지역의 수용능력 확충 등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도시민·도시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력증진 - 1사1촌 운동 - 민관공동의 사업추진 방안 도입 등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는 활력있는 농촌구현을 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방문객 수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매출액 확대**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

- 늘어나는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3까지 농촌 체험마을을 시·군당 5~7개 수준으로 확대·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
 - 녹색농촌체험 방문자수는 마을당 29,533명을 유지하고 관광매출액은 4.3억원을 달성할 계획
 - '05년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전년대비 20% 증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 매출액은 전년대비 20% 증가를 달성목표로 설정
 - * 녹색농촌체험마을당 방문객수 : ('04) 9,611명 → ('05) 11,533명(20%)
 - * 녹색농촌체험마을당 관광매출액 : ('04) 141백만원 → ('05) 169백만원(20%)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실적치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	○ 20% 증가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를 행정조사에 의해 검증	○ 9,383명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 매출액	○ 20% 증가	○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매출액을 행정조사에 의해 검증	○ 138,785천원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 조성 등 기반구축, 도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마련,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지속적인 교류 농촌관광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 확립 등이 필요
-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실태 조사후 1사1촌 운동 발전방안 마련('05. 5월)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확대(47개소),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의 수변개발 등
- 농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체험기회 제공
 - TV, 신문, 잡지, 대중교통,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 농산어촌체험 박람회 개최, 체험캠프 운영, 농촌문화체험기 및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등

-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
 - 여름철 휴가대비 농촌체험마을의 도시민 수용태세 점검 및 지도('05.7~8월)
 - 1인1촌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05.6월)
 - 체험마을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농어촌민박의 편법운영 방지** 등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 개정**
 - 민박은 농어촌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객실규모는 7실 이하 → 주택연면적 45평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 등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농업인,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사1촌운동 발전지원계획수립 등을 위해 **농업인,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건의와 애로사항, 의견 등의 여론을 수렴**
 - 1사1촌운동 발전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04.12~'05.3)
 - 농림부 : 총3차에 걸쳐 전화 샘플조사('04.12.22~30) PCRM 설문조사('05.1), 현장실태조사('05.2.15~19)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05.3.7~20) 실시
 - 농협, 농기공 주관 실태점검 실시('05.1.10~20)
 - 1사1촌운동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T/F팀 운용('05.9~'06.3)
 - 팀원은 농림부, 농협, 전경련, 기업체, 마을대표, 지자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참여
- 체험마을 **사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실시 및 의견수렴 반영**
 -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05.8~9월)
 - 농산어촌체험마을 대표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필요사항 등에 관한 설문조사('05.9~11)
 - 체험마을 평가·사후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05.5~12)

- 농어촌민박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여론수렴
 - 관계부처 협의 : '05.7.26~8.4
 - 입법예고 : '05.8.10~8.30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농산어촌체험관광 및 농촌민박제도 등은 해양수산부등 관계부처들과 연계된 업무로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

- 농산어촌체험 관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농어촌민박제도 정비시에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등 관련기관의 정책과 연계되도록 추진
 - 농림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04.11),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04.12, '05.2, '05.4), 자문위원회 구성·운영('05.4)
 - * 참여부처 : 농림부(녹색농촌체험마을), 행자부(아름마을), 해수부(어촌체험마을), 농진청(전통테마마을), 산림청(산촌개발사업)
 -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실시('5.8.31~9.2)
 -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등 합동조사 실시후 공동개선방안 마련 중 ('05.12)
- 농어촌민박제도 정비를 위해 농어촌정비법령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을 개정('05.11.5시행)
 - 농어촌민박의 허용규모를 객실(7실이하) 기준에서 주택연면적(45평 미만) 기준으로 개선
 -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갖추도록 함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대부분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하였거나 차질 없이 추진

- 도농교류확대 및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세부사업중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은 모두 정상추진

○ 1사1촌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도농교류 모델로 발전

- 1사1촌 자매결연 : '05.10월말 7,281건의 자매결연 실적
- 1사1촌운동 발전지원계획수립 완료('05.5.9)
- 1사1촌운동 홍보 강화
 - 가이드북 발간·보급 완료
 -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수사례 홍보 실시(계속)
 - 도농상생한마당 행사개최('05.10.13~15)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의 100만 회원가입 운동 목표 달성('05.10월말 현재 137만명 가입)
- 농촌체험 활동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상품 보급
 - '05.9월말 현재 20개마을 가입('04년 10개 마을가입, 100%증가)

○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 정상 추진중

- 농산어촌박람회 개최 및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체험기회 제공 완료
 - 농산어촌체험박람회개최('05.4.27~5.1),
 - 농산어촌체험 행사('05.5.21)를 개최(VIP참석)
 -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05.7~8월)
 - TV·신문·잡지·대중교통,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동원 홍보
- 초중고생의 농촌문화체험 유도를 위한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공모행사('05.6~9월), 농촌생활체험캠프 운영('05.5~10)

• • • ●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공모('05.6~9),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 교류상 공모('05.9~10), 농촌체험관광 우수여행사 공모('05.10~11월 초)도농교류 공로자 포상 정례화
-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 : 정상 추진중
 - 녹색농촌체험마을 확대조성('04 32→ '05 47개소) 및 체험마을 성과평가, 민간 전문가 전담 컨설팅 시범실시
 -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 수변개발을 위한 기본조사 5개소 추진중
 -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투어포럼 및 지역단위 체험마을 지원 네트워크 구축
 - 강원도 그린투어리즘 혁신보고대회('05.6),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투자유치 설명회 개최('05.11), 지자체장 주도 그린포럼 계획('05.12) 등
- 농어촌민박육성을 제도정비를 위해 농어촌정비법령 및 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 완료 ('05.11월)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상황
1사1촌 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도농교류 모델로 발전	정상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정상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방안마련	정상
농어촌 민박육성을 위한 제도보완	완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시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 제도개선, 현지 출장 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사업 실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농림부장관 훈령)**을 수립하여 농업인·지자체·관련기관에 배포

-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절차, 자금 전수배, 결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 농어촌민박 제도보완 추진(농어촌정비법개정 국회의결'05.6.30)
 - 농어촌민박의 범위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한정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행자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05.8.31~9.1)
 - 대부분 젊은 인력부족으로 마을리더의 고령화 추세 및 1인 중심의 운영체제로 인력 지원 요구 및 농촌주택의 욕실 및 샤워실 등 시설이 미흡하여 민박으로 활용 시 도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 개선사항 제기 → 추후 제도개선시 반영 예정
-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점검은 수시 실시
 - 집행점검(3회) : 체험마을조성사업비 47억원 집행 완료
-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의 수변개발 기본조사(5지구) 추진상황 점검
 - '05년 10말 현재 88% 진척율, 연내 완료 가능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관련기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방향등 협의('05년 2회 운영 : 2.1,4.25)
- 농촌방문고객 서비스향상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 시설안내표지 설치 협조요청(건교부, 10.28)
-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대다수 마을주민의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마을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체험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인1촌 전문가 시스템과 마을 사무장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여건변화 대응
- 체험마을 평가·사후관리방안 마련 추진중
 - 농산어촌 체험마을 운영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방안 마련계획('06.1)
 - 농산어촌체험마을 대표자와 방문자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 결과 분석중('05.9~11) * 설문대상 : 1,223명
 - 체험마을 평가·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05.5~12)
- 정책고객관리(PCRM) 및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분야별, 계층별로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 여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1社1村운동, 농촌문화관광, 농촌체험마을 지원체계 및 농어촌민박제도 등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홍보수단도 TV 등 언론매체 토론회, 설명회 등 다양하게 추진

- 도농교류 및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인 농촌지역 주민과 수요자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05.7~8월 기간중 농산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이 전년보다 22%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홍보성과가 크게 나타남
- TV, 신문, 잡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인터넷 포털사이트, 콜센터 운영, 전국 아파트 반상회 회보 등에 의한 홍보와, 농촌체험관광 2만부, 그린맵 7만부 등을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비치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제공 및 우수사례 등에 관한 홍보 적극실시
- 박람회 및 한마당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추진으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문화관광 활성화 홍보효과 극대화

- 농산어촌체험박람회 개최('05.4.27~5.1)
 - 대통령 내외분의 농산촌 체험행사 참여('05.5.21)
 -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대상으로 체험행사 실시('05.5~10)
 -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05.7~8월)
 - 도농상생 한마당행사 개최(잠실올림픽 주경기장, '05.10.13~15)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의 100만회원 가입 캠페인 전개 등
-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농촌체험관광 우수여행사 포상 등에 의한 홍보활동 병행추진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관계부처, 유관기관의 적극 참여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도농교류 및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
- 1사1촌 운동에 중앙정부부처 22곳이 참여
 -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감사원, 재정경제부, 교육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 농산어촌체험마을 관련기관(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의 적극 협조
 - 농산어촌체험마을 통합지침 마련('04.11)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관련기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추진방향 등 협의 ('05년 2회 운영 : 2.1, 4.25)
 -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에 관한 관계기관 합동 현지점검 실시 ('05.8~9월)
- 농촌방문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에 대한 시설안내 표지를 설치**키로 협의(건교부, 11.7)

- 교육부 ‘주5일 수업제 대책’ 관련 공동 협의·추진('05.3~)
 - 우리부 ‘농촌체험학습 인프라 구축’ 추진과제 진행
- 문화관광부 ‘여가문화활성화대책’ 공동추진('05.1~12)
 - 농어촌을 도시민의 체험관광공간으로 개발·활용, 초·중·고생의 농촌체험학습 장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
-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공동추진('05.1~12)
 - 우리부 생활권내 여가활동과 주말여행을 위한 여가환경정비방안으로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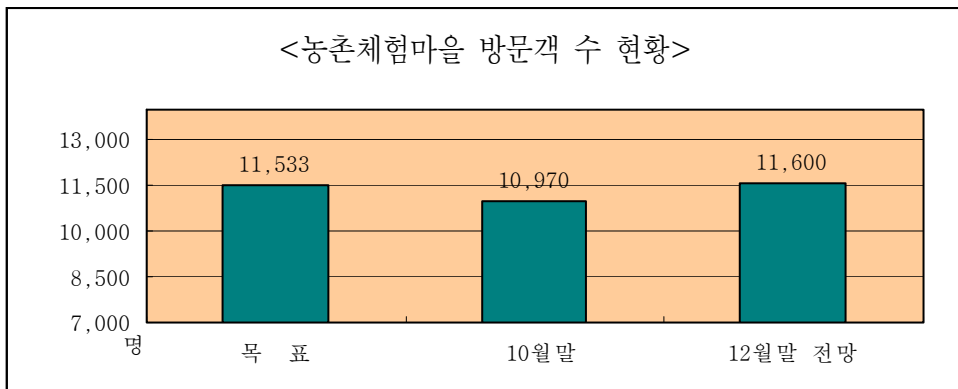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달성도 100%)**가능 전망

-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마을당 방문객수와 농촌관광 매출액을 **전년대비 20% 증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10월말까지의 목표대비 실적은 방문객은 95%, 농촌관광 매출액은 81%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 12월말까지는 당초 설정된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목 표	10월말	12월말 전망
· 방문객 수(명)	11,533	10,970(95%)	11,600(100%)
· 매출액(천원)	169,897	138,390(81%)	169,900(100%)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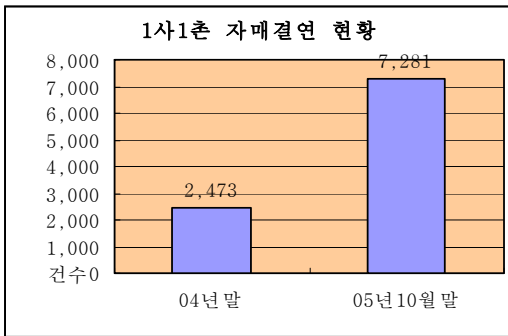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증가율	○ 마을당 방문객 수 : ('05) 11,533명 * ('03) 7,007 → ('04) 9,611 → ('05) 11,533	○ (10월말 기준) · 10,970명 ○ (12월말 예측치) · 11,600명	100% 달성 (12월말 예측치 기준)
○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액 증가율	○ 마을당 농촌관광 매출액 : ('05) 169,897천원 * ('03) 104,878 → ('04) 141,581 → ('06) 203,876	○ (10월말 기준) · 138,390천원 ○ (12월말 예측치) · 169,900천원	100% 달성 (12월말 예측치 기준)
목표달성도 평균	100%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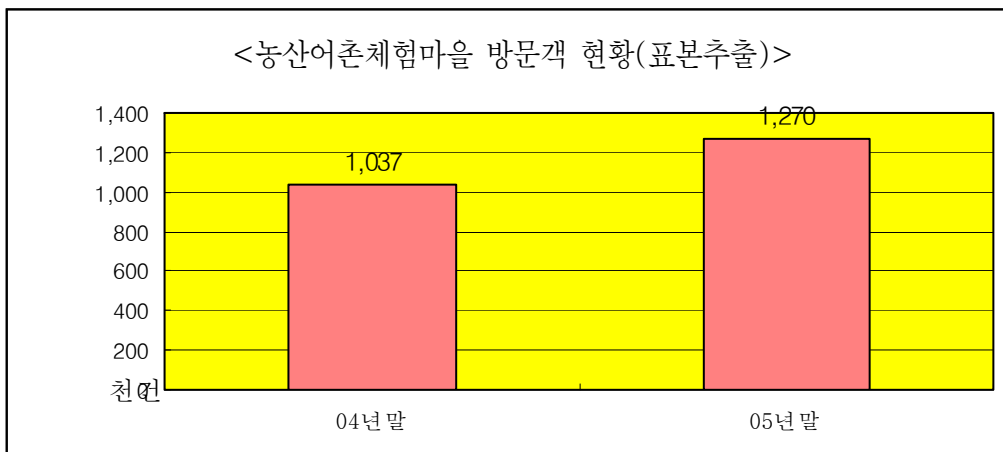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관련 정책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에 따라 범국민적 참여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
- 1사1촌운동은 짧은 기간에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05.10월말 현재 7,281건 결연체결('04년말 2,473건 대비 4,803건 증) 하여 농촌마을방문, 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 활발한 교류 전개



<자매결연 현황 및 삼성카드와 여주군 금사면 주록마을 1사1촌 자매결연 현장>

- 22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참여하는 등 확산 추세
- PCRМ 설문조사('04.12~'05.1)결과 국민의 85.9%가 1사1촌 운동이 농촌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반응
-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생각과 농업인들의 태도도 상호 이해와 공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 양상
 - 1사1촌운동 및 농촌마을방문 체험활동을 참여함으로 이해 계기
 - 기업·사회단체 : 농업·농촌 실태 파악 및 이해 계기
 - 농촌 :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 확대 등에 의한 소득향상 및 지역활성화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회원이 10월말 현재 137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가입회원 중에서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79%에 도달
 - 여름철 농산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가 전년보다 22%수준 증가



라. 농촌지역개발

<총 평>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05년에 계획한 세부추진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생활권이 같은 3~5개의 농촌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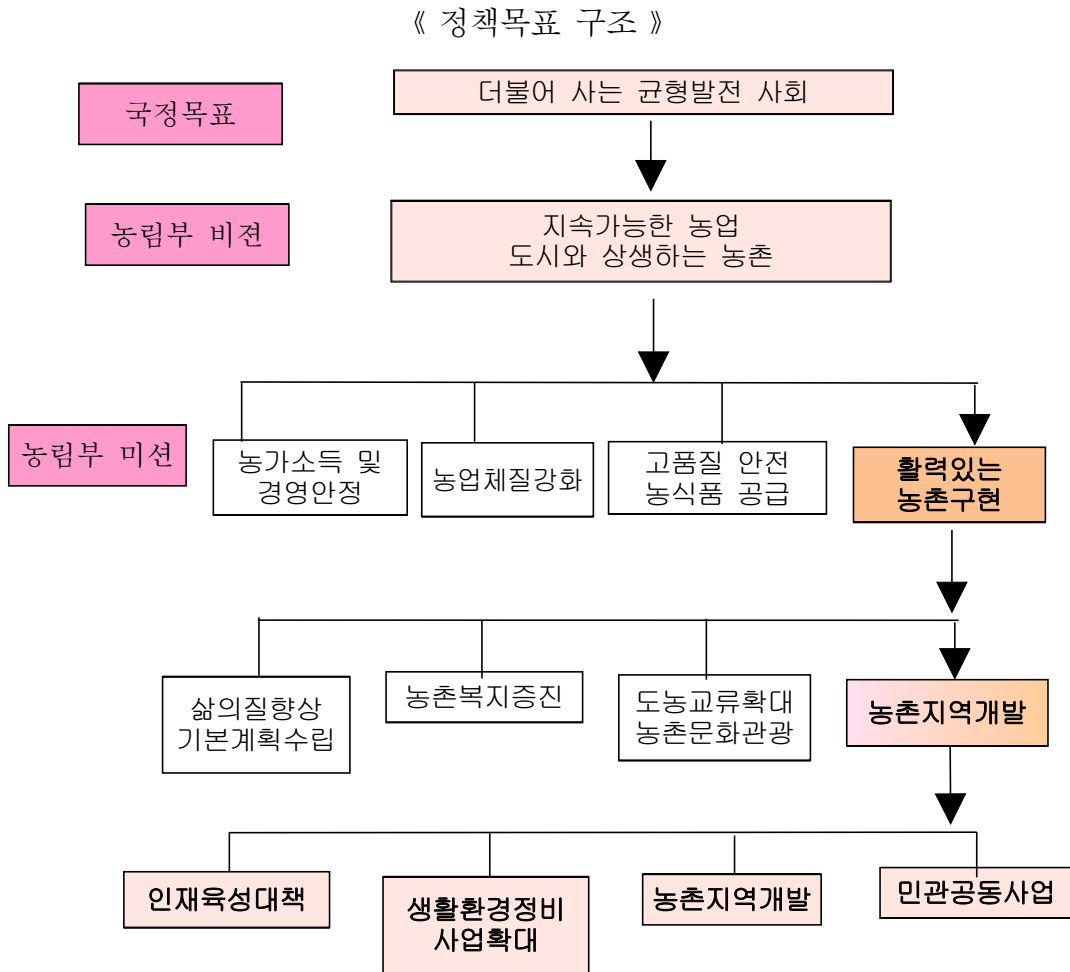
- 농촌지역개발은 기존의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적자원 위주로 유형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실시
-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시에는 경관보전 및 개선분야를 포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촌지역개발 모델을 발굴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시행과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원('05.7~12)
- 농촌에는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선도해 나갈 인적역량이 부족하여 농촌지역개발리더, 참여주민,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농촌개발사업의 기획·추진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고 인력육성전문 교육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다소 미약한 상황
 -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인력육성대책 수립('05.4)
 - 농촌지역개발리더쉽 육성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05.7~12)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 농촌지역개발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농림부의 비전·미션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을 증진하여 활력있는 농촌구현과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지역개발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책

○ 농촌지역개발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와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림부 미션인 활력있는 농촌구현** 등 상위 목표와 부합



- 또한 농촌지역개발은 상위 정책과제인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간 삶의 질 격차” 그에 따른 농촌인구감소 및 농촌지역 활력감소라는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 농촌지역 개발 및 농촌형 복합산업을 주도할 인재육성
 - SOC 위주의 면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농촌경관보전·개선분야를 포함하고 생활용수개발 확대 추진
 - * 생활환경개선 및 농촌경관보전 대상면 : 338개면
 - * 생활용수개발대상마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마을호수 축소 : 50호 → 20호
 - 면 소재지 등 생활권을 고려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미래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등
 - *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36개권역에 대해 시행계획수립 및 본격 사업추진
- 농촌지역개발 모델발굴 등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지회·위협 요인 분석		기회(O)	위협(T)
		강점·약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40시간 근무 등 여가수요 증대 ○도농상생 분위기 조성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형 농촌지역 개발 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개발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농촌 정주기반확충, 농촌마을 종합개발, 전원마을 조성,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자문·협조 체계 구축 - 해당분야 전문가 집단 컨설팅 제도 도입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 활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중장기대책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발굴 및 D/B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 문학, 생태, 지역개발, 미술, 정보통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농촌지역개발은 농촌개발의 선도인력 육성대책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비계량적 성과지표**를 제시
 - 동사업이 초기단계로 비계량적지표가 유용하나, 본격 추진시 과정지표 및 산출지표 등으로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인력 육성대책 수립**
 - 인력육성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 관련 연구용역, 지자체·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 반영
- 마을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자원 유형별 역량을 배양하도록 전문교육 실시**
 - * '05년 1,300명 교육 실시
- 면소재지 등 생활권을 고려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 기 선정된 36개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착수할 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 농촌지역개발 촉진	○ 농촌지역개발 인재 육성 대책수립 및 시행 ○ 농촌지역개발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인재육성 대책수립 및 시행여부 ○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여부	○ 해당없음 ○ '04년 36개권역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충실하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운영·제도·예산 측면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충실히 마련 추진
 -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 육성 중장기대책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발굴 및 D/B화 추진
 - 농촌 정주기반확충, 농촌마을 종합개발, 전원마을 조성,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 등 추진
 -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시 경관보전 및 개선분야를 포함토록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개정
 -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확대를 위해 사업대상 마을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마을도 사업시행 가능토록 지침 개정
 -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 구성('05.7월)
 - 문학·생태·지역개발·미술·정보통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15인) 및 실무위원회(13인) 구성
 - '05예산은 '04예산 1,078억원 대비 181% 증가된 3,032억원 투입
 - * 농촌마을종합개발 645, 농어촌생활환경정비 1,916,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471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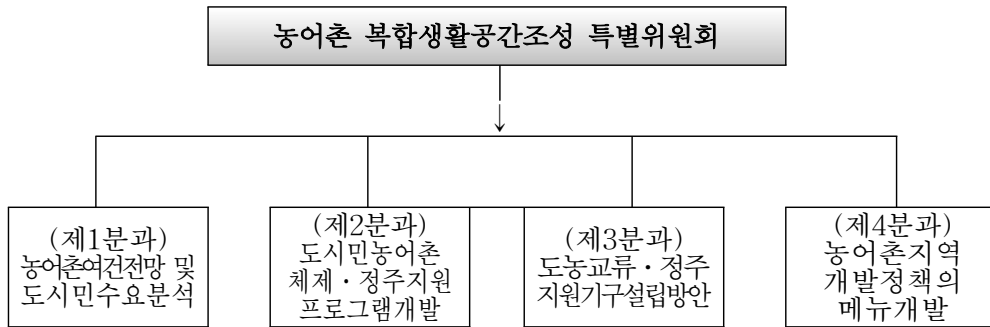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관련전문가, 유관기관, 참여농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농촌지역개발 선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심의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
 -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수립을 위해 지자체, 관련전문가,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05.1), 대책안에 대한 전문가 심의('05.3) 실시
 -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05.8~9)하였고,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05.7~9) 실시
 -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관련전문가 자문회의('05.9~10) 및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05.9) 실시
 - '06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도입을 위해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심의('05.8~10)
-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효율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자문**
 -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방향 자문
 - 문학, 생태, 지역개발, 미술, 정보통신 등 사회 각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15인) 및 실무위원회(13인) 구성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시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대하여 3단계에 걸친 전문가 자문·평가 실시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관계관 교육실시('05.3.29, 7.19, 11.4)
 - 다양한 농촌지역개발 모델 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 개최(9.9~10)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농촌지역개발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농·도 상생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 지역개발 관련사업을 반영하여 **관련 기관의 정책과 연계**되도록 추진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후속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내에 **특별위원회** 및 **범정부 T/F 팀**을 구성·운영(’05.8~’06.4)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 특별위원회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도시민 수요분석, 정주지원 프로그램 개발, 정주지원 기구 마련, 사업메뉴개발 등 총 4개분과(18명)로 나누어 운영중



- 범정부 T/F : 농림부차관(팀장), 13개 부처·청 1급 참여
 - 7.14 보고한 과제별 추진상황 및 부처별 신규과제 추진계획관련 회의 개최(’05.10.27)
 - * 행정자치부(정주기반확충, 오지개발, 농촌주택개량지원), 해양수산부(농어촌체험마을축진), 건설교통부(국민주택기금의 농어촌주택 신축·개량확대), 환경부, 보건복지부(도농교류축진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인적자원부(폐교활용), 산림청(농어촌마을 국유림활용) 등
- 농촌개발 관련 **부처별 미션과 기능을 고려하여 상호 협력 및 보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지침** 마련중
 -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용역중(’05.10~’06.4)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4개 세부사업중 2개 완료, 2개 정상 추진)

- 농촌지역개발 인재육성대책 및 민관공동사업 추진방안은 완료
 -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수립 완료('05.4.13)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민관공동방식으로 추진토록 지침 개정('05.3)
 - 정부는 도로·상하수도·오폐수처리시설등 마을기반시설 지원
 - 민간은 토지매입,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추진
- 면지역 생활환경정비 및 생활용수개발사업은 확대 추진중이며, 생활권을 고려한 농촌지역개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중
 - 농촌정주기반확충은 '05년 338개면(1,639억원)을 추진, '05.10월말까지 80%의 진척율, 연내 완료 예정
 - 농촌생활용수개발은 '05년 346개소(471억원)를 추진, '05.10월말까지 82%의 진척율, 연내 마무리 예정
 - 기선정된 36개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의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2개 권역을 착공하였고, 나머지 34개 권역은 연내에 모두 착공, 본격적인 사업 추진 예정
 - 신규의 농촌종합개발 40개 권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중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농촌지역개발 인재육성대책 수립	완료
면지역 생활환경정비사업 확대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확대 추진	정상
생활권을 고려한 농촌지역개발 추진	정상
민관공동사업 추진방안 마련	완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농림사업시행시침**(농림부장관 훈령)에 따른 사업추진, 제도개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평가, **지자체 관계관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

-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사업 실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농림부장관 훈령)을 수립하여 농업인·지자체·관련기관에 배포
 -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절차, 예산배정 및 결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 경관개선을 포함한 생활환경정비 추진 및 **생활용수개발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
 -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및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시달('05.3월)
 - * 50호 이하 20호 이상 소규모 마을까지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개정
- 생활환경정비 및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실태 현지점검**('05.4월)
 -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등록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 조기 등록하도록 조치
- 생활권을 고려한 **농촌지역개발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100여명)의 3단계(구상·중간·최종) 자문·평가를 실시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기본계획 수립
 - 36개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확정 후 시행계획 수립·추진



<경기 화성 고정권역 현지평가·자문('05.11.10)>

- '05년 시도 신청 50개 권역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05.5~7)를 실시, '05년 기본계획 수립대상 40개 권역을 선정('05.8)하고, 연내 40개 권역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예정
 - 40개 권역중 '06년 사업시행 대상 20개 권역 선정
 - * 농업기반공사(75명)과 외부전문가(51명, 권역당 3명) 공동으로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발전가능성, 인근지역 파급효과 등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수립지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평가지 현지점검 병행 실시 15차례(상반기 10차례, 하반기 5차례)
- 지역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농촌지역개발 지자체 관계관 교육 및 토론실시(3.29, 7.19, 10.18, 11.4)
 - 다양한 농촌지역개발 모델 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워크숍 실시(9.9-9.10)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평가,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 이농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 농촌 어메니티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농촌마을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관련 전문가 발굴 및 D/B화를 추진하고, 마을 사무장 제도는 '06년부터 시행

- 농촌인구 감소와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확대 요구 등을 감안하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대상 마을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마을도 사업시행 가능토록 지침 개정('05.3)
 - 사업대상 마을 확대를 위한 기준 축소 : 50호 → 20호
- 농촌 **어메니티**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감안하여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시 경관보전 및 개선분야를 포함**토록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개정('05.3)
- 농촌지역개발사업에는 생태, 경관, 지역개발, 건축, 문학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각으로 사업계획 평가 및 보완 조치 필요

☞ **어메니티란?** (Amenity :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을 일컫는 용어) 농촌 특유의 자연환경과 전원풍경, 지역 공동체 문화지역 특유의 수공예품, 문화 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쾌적성을 주는 요소를 통틀어 일컫음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농촌지역개발 위주로 TV·PCRM·리후렛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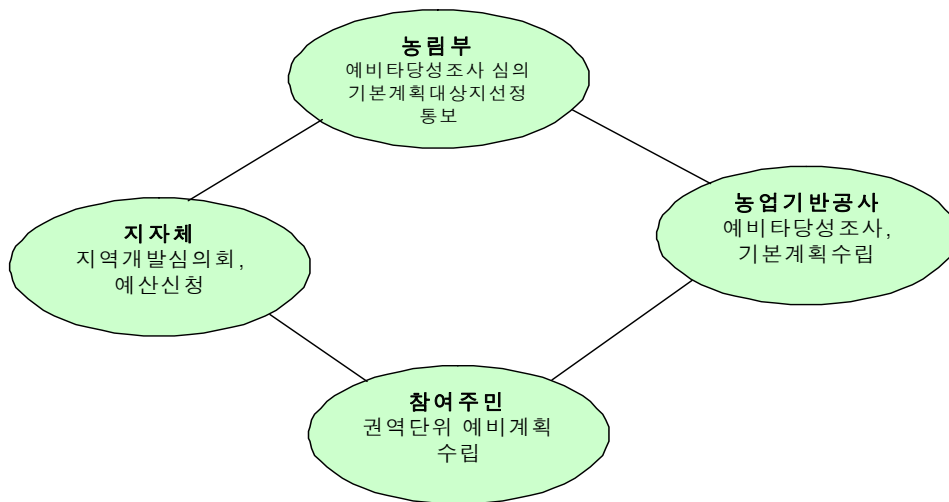
- 농촌지역개발 시책 추진에 대한 **언론홍보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 적극 추진**
- 농촌지역개발 인재육성과 관련
 -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05.5)과 마을 사무장제 도입계획('05.10)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언론홍보 및 농림부 PCRM을 통해 홍보(개인 E-mail로 제공되는 클릭농정뉴스)
- 농촌마을종합개발 부문은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고 홍보
 - 농촌마을종합개발 정책진단 좌담회 및 특집기사 게재(9.28, 경향)
 - 농림부장관, 농기공사장, 서울대 임승빈 교수

- 권역별 사업추진 우수사례 전문지 기획기사 연재
 - '05.11-'06.2, 농수축산신문(살기좋은 농촌마을가꾸기 프로젝트)
 - 기획기사 연재 내용을 책자로 발간, 배포 예정('06상반기)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TV 특집 기획프로 제작 방영
 - '05.11.11(농업인의 날), KBS-1TV
 - 농촌지역개발 추진 필요성, 해외사례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등 소개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홍보 팜플렛 제작·배포('05.11)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종합 안내 및 홍보 홈페이지 구축('05.12)
 - '농어촌종합정보포털사이트'를 활용, 사업소개, 안내, 추진상황, 정보 교환 콘텐츠 구축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참여주민 등 관련 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평가회 등을 통해 협의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 관련기관간의 역할 분담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05사업지침을 정비하여 관련기관간 협력도를 제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기공, 민간간의 역할분담체제 정비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관련기관간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정과 자문회의, 토론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 문화마을·전원마을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 * 건설교통부 국토이용계획,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목표로 설정한 **성과지표는 달성되었거나 연내 달성 예정** (인재육성대책 완료,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중)

-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수립('05.4.13)
 - 농촌지역개발 인재육성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심의('05.3)
- 인적자원 유형별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05.7~12월)
 - 4개과정으로 구분하여 '05.10월말까지 1,332명 교육실시
 - * 교육과정 : 동기화과정, 리더쉽육성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특별과정
 - * 11~12월 기간중 300여명 추가 교육 예정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 정상추진
 - 36개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완료 후 시행계획 수립·추진
 - 기본계획수립 완료권역중 10월말 현재 2개권역을 착공, 나머지 34개 권역은 연내 착공 예정
 - * '05년 시도 신청 50개 권역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05.5~7)를 실시, 기본계획 수립대상 40개를 선정('05.8)하고, 연내 40개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예정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농촌지역개발	○ 농촌지역개발 인재육성 대책 수립 및 시행 - 대책수립 - '05년 1,300명 교육실시	○ 완료 - '05.4.13대책수립 - '05.10월말 현재 1,332명 교육완료	○ 달성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기본계획수립 : 36권역 - 사업착수 : 36권역	○ 정상추진중 - 36권역 기본계획 수립 완료 - '05.10월말현재 2개권역 착공 · 나머지 34개 권역은 연내 착공 예정	○ 달성 (12월말 예측치 기준)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농촌지역개발 사업은 초년도에 해당되어 정책효과가 발생여부 판단이 어려운 상황

- 농촌지역개발 인재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농촌지역개발 사업은 대부분 '05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초기단계이므로 현재로서는 정책효과를 측정·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내 관련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개발의 모범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음

VI. WTO/FTA 농업협상 대응

1. 총괄

가. 잘된 점

-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쌀 협상결과가 원안대로 조기 확정되어 **쌀 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 확보
- DDA 농산물 협상에서 수출국들의 급진적인 공세에도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개혁추구**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국내적으로는 협상동향 설명 등 **투명성 제고노력** 병행
 -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민감품목에 관한 수입국 그룹(G10) 공동 발언문을 작성하고 공조체제 강화
- 국민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FTA 확대필요성을 인정**하되, 농업 부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결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양허안·협상대응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 FTA협상 상대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 체결내용 및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여 최선의 협정안 작성에 노력

나. 미흡한 점

- 쌀 협상결과에 대한 농민단체·야당의 이면합의 의혹제기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정당간 의견차이로 **국회비준 지연**
- DDA 협상에서 **개도국 및 수출국** 등의 급진적인 개혁요구로 앞으로의 협상에서 어려움 예상
 - **개도국지위 유지** 관련 국제사회 분위기도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 아직까지는 대외개방 및 FTA 추진에 반대하는 **농업인 및 NGO** 등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 초 계 획	추진 실적
<p>1. 쌀협상 검증 및 국회 비준동의 추진</p> <p>□ 쌀 협상 결과 검증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 되도록 검증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 검증과정에 대비, 쟁점별 대응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계획서 수정안 WTO 제출('04.12) ○ 쟁점별 대응방안 마련 및 이해관계국 설명(05.4) ○ WTO 사무총장 서명 인증문서 (certificate) 발급(05.4.12)
<p>□ 국회 비준동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농가소득안정방안 홍보 등을 통해 비준동의 분위기 조성 ○ 쌀 협상내용 및 성과, 비준이 안 될 경우 문제점 등을 국회·언론 등에 중점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준동의안 국회 접수(6.7) ○ 방송 토론프로그램 출연·홍보(14회) ○ 홍보리플렛 100만부 제작 배포(4월말) ○ 농민단체 등 대상 설명(12회) ○ 부처별로 소관상임위원 설득 추진 ○ 통외통위 상정(10.21), 가결(10.27)
<p>2. DDA 농업협상 대응</p> <p>□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고관세 구조를 고려한 관세 상한 설정 저지 노력 ○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범위 확대와 신축성 확보 ○ G10(수입국그룹), G33(개도국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농업위원회 회의 등 농업협상 관련회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위 특별회의(11회), G10 각료회의('05.5), G33 각료회의('05.6), 미국 주관 각료회의('05.10) 참석 등 * 관세상한 설정 저지, 민감품목의 TRQ 증량 최소화, 민감 및 특별품목의 범위와 신축성 확대에 중점 ○ G10(수입국), G33(개도국) 그룹과 공조 강화 및 우리입장 적극 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10·G33과 수시로 만나 입장 조율 및 공동발언문 작성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각료회의 등을 이용하여 주요국과의 관심사항에 대한 양자협의 추진('05.2~'05.10)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원칙 협상단계에서는 개도국 우대조치 확대에 노력하고,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 ○ 세부원칙 타결후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및 양자협약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여 실리를 최대한 확보 <p>□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영향분석과 의견수렴 결과를 협상전략에 반영 ○ 협상의 주요 단계마다 농민단체, 학계 등 대국민 설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상의 각분야에서 개도국 입장으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그룹 개도국과 공동발언문 작성에 적극 참여 * 개도국 지위는 세부원칙 타결 이후 논의 될 쟁점이나 경제발전 정도와 무역규모(2위) 등 국제적 여건은 비호의적 ○ 개도국 지위 유지를 목표로 협상단계별 적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단계에서는 개도국 우대조치 확보 및 우호적 분위기 조성 집중 - 세부원칙 타결후 양자협약 단계에서 최대한 실리 확보 ○ 협상과정에서 농업인단체 대표 및 실무자의 제네바 방문 관계국 대사 면담 등 지원(4회) ○ 농민단체 등에 협상동향 설명회 개최 및 협상 대응방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단체 설명회(8회), 시도 설명회(2회), 기자설명회 (9회), 기자워크샵(2회), 전문지기자 설명회(4회) 논설위원 설명(11.2), 통상정책연구협의회 개최 등(4회) 협상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 ○ 협상동향을 신속히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배포(15회) - 협상동향 홍보책자 배부('05.7) ○ 월간 국제농업소식지 발간(2회)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3. FTA 농업협상 대응</p> <p><input type="checkbox"/> 체계적인 FTA 농업협상 대응체 제 구축</p> <p><input type="checkbox"/> 민감품목에 대한 영향최소화 등 면밀한 협상전략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FTA과를 신설(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 5명 증원 · 4급 1, 5급 3, 6급 1 순증 ○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중심으로 협상지원 네트워크 구성(4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진청, 농경연, 서울대, 경상대 등의 공동연구 추진 중 - 농경연과 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D/B 공유 및 FTA홈페이지 구축 (11월말 예정) ○ 협상개시전 연구용역을 통해 상대국 관심품목과 우리측 비교우위 품목을 선정하고 상대국의 협상방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영향분석 : ASEAN('04.8), EFTA ('04.12), 캐나다('04.12), 미국·인도 ('05.10) - FTA 협상대응방안 : 캐나다('05.9), ASEAN('05.10) - 협정문 조문별 분석 및 대응방안 : SPS분야, 투자·서비스분야('05.10) ○ 품목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세부 대응전략 마련 ○ 민감품목은 최대한 현행관세를 유지 하고 비교우위 품목은 집중적으로 양허를 요청하여 협상이익을 극대화 예) EFTA와의 FTA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사과, 배에 대해서는 아이슬랜드와는 무관세, 나머지 국가와는 계절관세 및 쿼터 물량내에서 관세감축을 받음. ○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적용을 강화하여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 방지 ○ WTO 협정 및 한-칠레 FTA 협정 등과 일관성을 유지토록 협상

당 초 계 획	추 진 실 적
<p>□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민단체와 협상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군별 생산자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위원회”를 구성(6.28), 상품양허안 협의(6.28, 8.3, 8.25) ○ ASEAN, EFTA 협상관련 농민단체 간담회 개최(2.17, 3.21, 5.23, 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공동연구중인 FTA에 대하여 필요성, 추진목표,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여 -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농업분야의 대응방안을 논의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쌀 협상 검증 및 국회 비준동의 추진

<총 평>

- 쌀협상 결과인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통해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우리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 우리의 의무수입물량 7.96%, 10년 관세화유예는 일본의 6년 8%, 대만 1년 8%, 필리핀 7년 5.8%(단 초년도부터 5.8%)에 비해 매우 성공적인 협상으로 평가
- WTO 사무국의 3개월간의 검증기간 동안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로 사무국으로부터 조속한 인증 도출
 - 쌀 협상결과에 대하여 타회원국의 유보없이 원안대로 확정
-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국회·농민단체 등에 조기 비준동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쌀산업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 재경부차관을 단장으로 농림부·기획예산처·외교통상부가 참여하여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
 -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농민단체와의 대화**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대책 마련**
 - 농해수위, 통외통위 위원 설명 및 광고, 인터뷰, 기자 브리핑, 공청회 및 농민단체 설명회 개최
- 그러나 여·야간 의견차이 및 농민단체 반대 등으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상위목표에 부합하고 환경변화에도 적절히 대응

-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이 아직은 낮다는 판단하에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에 기여
 - **농업분야 시장개방확대는 불가피한 추세**이나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 UR협상 및 한·칠레 FTA협상이후 협상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만큼 모든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하고 협상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조기 국회비준 필요성 등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명확한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것으로 평가

- 농업협상의 성격상 목표치를 계량화할 수 없는 한계는 있으나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원안대로 인증을 받는 것과 국회비준 동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 과 지 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협상 참가국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공동대응 여부	쌀협상 결과에 대한 원활한 WTO 검증 및 국회비준 동의	- WTO 검증 여부 - 국회 비준안 동의 처리 여부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원활한 확정 여부			
쌀협상 결과의 원활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			
농민단체, 국회, 언론계, 학계, 일반국민 등 각계에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국민적 공감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범정부적인 대응체제 구축·국내대책 등 정책수단 마련**

<조직측면>

- 쌀 협상결과 검증을 위하여 ‘**쌀협상 실무대책반**’을 계속 운영하여 검증추진상황 점검, 대응방향 결정 등 신속히 추진
 - 쌀 협상 대책 실무추진단장 : 농림부 차관, 협상대책팀장 : 외교통상부 1급, 국내대책팀 : 재경부 1급과 농림부 차관보가 공동팀장 수임
 - 검증과정에서는 협상국 및 회원국 상대 검증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재외공관 및 농무관** 등을 통하여 지속적 설득작업 추진
- 국회 비준동의 추진을 위해 재경부차관을 단장으로 농림부·기획예산처·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범정부적 대응체제 구축(6.20)**
 - 농촌대책팀, 국회대책팀, 홍보대책팀으로 구성
 - 각 대책팀 5차회의 개최 및 관계 부처회의 3회 실시
- 농림부 자체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 **실무 T/F 설치·운영(6.27)**
 - 관계부처 회의 준비 및 범정부 실무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농촌, 국회, 홍보대책 추진

<대책측면>

- 쌀 협상결과 국회비준을 위해 고위 당정회의, 농해수위, 통외통위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국회비준동의 필요성 설득
- 또한 쌀 협상비준으로 인한 **농가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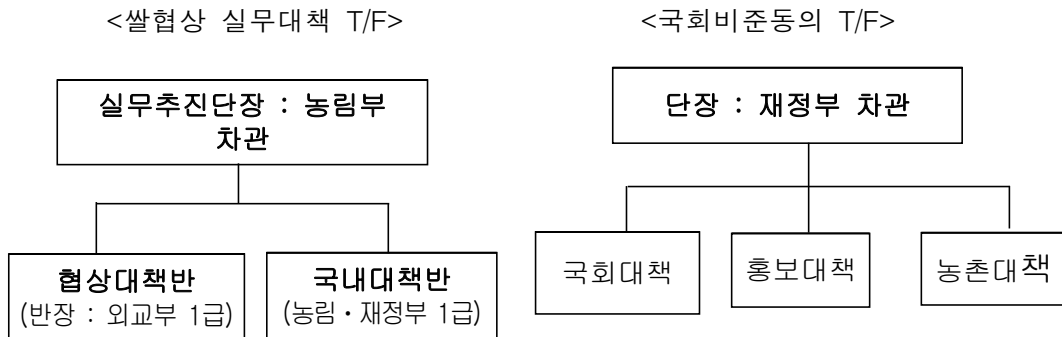
◆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

- 쌀협상 검증 및 국회비준 동의를 위해 관계부처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쌀협상 T/F** 및 **쌀협상 국회비준 T/F**에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조율한 후 **대외경제장관 회의, 경제정책조정 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
- 당정협의·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에 설명하고 **농민단체장 간담회·사무총장 간담회** 등을 통해 농민단체에 지속 설명
- 쌀협상 결과 **도별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회의, 기자단 간담회,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쌀협상 국회비준 관련 여론수렴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응한 것으로 평가

- **쌀협상 T/F** 및 **국회비준동의 T/F**를 통해 관계부처간 실무 의견 조율



-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건의 건의사항** 및 **추가보완대책** (5건)은 재경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 장관회의를 거쳐 확정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 쌀 협상 검증은 당초 목표대로 **이행계획서 수정안 원안 통과**
- ◆ 국회 비준동의는 **정당간 이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쌀 협상결과 **WTO 검증 완료**
 - 협상결과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제출('04.12.30)
 - 검증 종료시점에서 개별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확정
 - WTO 사무총장이 서명한 공식적인 인증문서(certificate) 발급(4. 12)
- **국회 비준동의 추진**
 - 쌀 협상내용 및 성과, 비준이 안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 중점 설명
 - 방송 토론프로그램 출연(14건), 농민단체에 설명(12회) 등 추진
 - 이를 바탕으로 정부 **쌀 협상 비준안 국회제출**('05. 6. 7)
 - 국회 농해수위·통외통위 의원 방문설명, 농민단체 간담회 등 추진
 - 협상 상대국의 비준지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입장 설명**(10월)
 - 쌀 협상결과 비준동의안 **통외통위 상정**(10.21), 가결(10.27)
 - 11.23 **본회의** 처리 예정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쌀 협상결과 검증	완 료
쌀 협상결과 비준동의안 처리	지 연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범 정부적인 대응체제 구축 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쌀 협상검증 관련 ‘쌀협상 대책실무추진단’ 계속적 운영을 통하여 외적으로 재외공관과 공조체계 활용, 대내적으로는 협상담당인력, 부처간 협조체계, 연구인력 활용 등 대·내외적, 물적 인적 자원 활용
 - 의제는 협상대책팀장 및 국내대책팀장이 실무적 논의를 거쳐 상정하는 안 및 실무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으로 하고, 논의결과는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상정
 - 실무추진단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반을 두며 농림부 국제협력국장이 실무지원반장 역할 수행
- 특히 쌀 협상결과 비준동의안 추진 관련 재정부차관을 단장으로 농림부·기획예산처·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6.20)을 통하여 국회와 농민단체 설득 등 동의안 처리 효율적 추진
 - 국내 공감대 형성방안, 홍보대책 및 조속한 비준 추진 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
 - 비준동의안 처리 단계별 국내 상황 점검 및 활동방향 조정
 - 특히 국회,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시 우리부내 비준대책반과 회의 결과 정리, 정보공유 등 실무지원 협조체제로 운영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국정조사 보완대책 마련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쌀협상결과 이행계획서 수정안 검증은 당초 목표대로 원안대로 확정(4.12)

- 협상결과 발표 이후 이면합의 논란 등이 제기되어 리플렛 백만부 제작 배포, 대국회 설명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국정조사에 적절하게 대응 하였으며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농민단체와의 대화**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대책 마련**
 - 제1차 합동 간담회(7.14)에서 22개 농민단체가 쌀뿐 아니라 농정 전반에 걸쳐 **64건의 건의사항**을 제기
 - * 64건 건의사항 : 쌀 11건, 농정 32건, 유통 14건, 축산 7건
 - 세 차례 간담회(7.25, 8.4, 8.8)에서 **핵심건의사항(20건)**을 선정
 - * 핵심건의사항 : 쌀 분야 6건, 농정분야 14건(제도개선 6건, 예산수반 14건)
 - 재정부·농림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7.21, 8.11) 및 장관회의(8.16)에서 **추가 보완대책 정부안을 마련**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9.14)와 통외통위(10.27)도 정부에 추가 지원 대책의 수립·발표를 요구함에 따라 10.28일 추가로 5건의 지원대책을 발표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농업인, 국민 등에 홍보

여론수렴 및 홍보실적

- 쌀협상 검증경과 및 검증완료 보도내용 설명(4. 8, 차관보)
- 농민단체장 등 대상 설명회(4.12, 통상정책관)
- 과수 생산자 단체 설명회(4.14, 통상정책관)
- 농민단체(10개) 사무총장 간담회(4.14, 기획관리실장)
- 한농연 임원단 설명회(4.15, 마사회, 통상정책관)
- 농민단체장 설명회(4.15, aT센터, 차관)
- 쌀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4.18, 장관)

여론수렴 및 홍보실적

- 한농연 경기연합회임원 및 시군회장 대상 설명(4.19, 장관)
- YTN □□뉴스Q□□생방송 인터뷰(차관)
- K-TV “국정 오늘” 출연(통상관)
- KBS-1R □□열린토론□□생방송 개최(4.21, 차관)
- 쌀 협상결과 각 언론사 논설위원 설명회 개최(4.26, 차관)
- 한농연 경남도 시군회장단 농정토론회 개최(4.28, 장.차관)
- 농림부 취재기자단(21명) 워크숍 개최(4.29~30, 장.차관)
- 한농연 전남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 토론회개최(5.6, 장관)
- 한농연 전남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 토론회개최(5.6, 장관)
- 고위 당정회의 (6.20)
- 통외통위, 농해수위 의원, 비준간담회(7.6)
- 13개 농업전문지에 쌀산업 대책 광고 홍보
- 농민단체 사무총장 면담(7.6, 차관보)
- 전북지역 한농연 농정토론회 참석(7.6,소득안정추진단장)
- 제2차 농민단체 간담회(8.4, 차관)
- 제2차 농민단체 간담회(8.4, 차관)
- 제3차 농촌대책팀 회의(8.8, 차관보)
- 제2차 국회대책팀 회의(8.9, 재경부2차관, 농림부 차관보)
- 열린우리당 통외통위·농해수위 2차 당·정간담회(8.9)
- 양정제도개편 수도권지역 농협 임직원 교육(8.10,차관보)
- 장관님, 중앙일간지 경제부장 간담회(8.12)
- 국회 상임위(농해수위)비준대책 추진상황 보고(8.12, 장관)
- 농민단체 간담회(8.12, 차관보)
- 농림부 장관 한나라당 대표, 원내대표 예방, 협조요청(8.18)
- 김재원 의원 주관 쌀 대책 토론회(8.19, 차관보)
- 농림부 장관, 방송사 경제·사회부장 간담회(8.19)

여론수렴 및 홍보실적

- 한나라당 국회 비준 공청회(8.22, 차관)
- 장관님 이시중 의원 토론회 참석(8.22, 차관보)
-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중앙부처 국장급 대상 쌀협상 관련 설명회(8.29)
- 농어업 회생 9인 의원 모임(대표 한화갑) 공청회(9.1)
- 국무조정실 □□정책홍보협의회□□쌀협상 비준 협조요청(9.1)
- 농림부장관, 국회의장 예방, 협조요청(9.1)
- 마을 이장 등 농업인 대상 홍보자료 배포(9.3-5)
- 농림부 장관, 축산신문 인터뷰(9.3)
- 쌀협상 비준 필요성 전문지 전면광고(9.3)
-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시·도, 시·군 농정담당 공무원 교육
- 쌀협상 조기비준 필요성 전문지 전면광고(9.5)
- 쌀협상 비준 필요성 일간지 전면광고(9.9)
- 농해수위 위원 3차 설명(9.9, 각 국장)
- 쌀협상 비준 필요성 일간지 전면광고(9.12)
- 농림부 간부, 농민단체장 면담, 협조요청(9.12, 차관보)
- 국회대책팀 제4차 회의(9.13)
- 쌀협상 비준 필요성 일간지 전면 광고(4개사, 9.13)
- 농림부 간부, 농민단체장 면담(9.13, 차관)
- 농림부 차관, KBS1 라디오 인터뷰(9.16,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
- 쌀협상 국회비준, 농촌지역 의원 간담회(9.21)
- 평화방송·중앙일보 쌀협상 비준관련 공동대담 참석(9.21, 통상정책관)
- 농림부, 농민단체 합동간담회(9.21, 장.차관)
- 국회대책팀 제6차 회의(10.14, 정책홍보관리실장)
- 통외통위 주최 쌀협상 비준 공청회(10.18, 차관)
- 차관님 KBS 1 라디오 열린토론 출연(10.24, 차관)
- 장관님 CBS 라디오 인터뷰(10.24)
- 차관님 KBS 1 라디오 인터뷰(10.26)
- 쌀협상 비준 추가대책 한나라당 협조 요청 (10.26, 차관)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관계부처·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 모든 협상에서 협상지침 수립, 결과발표의 전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 통상자문변호사·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검증관련 자문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쌀 협상 검증은 당초 목표대로 완료되었으나 국회비준 동의는 지연

- 쌀협상 검증은 당초 목표대로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 국회 비준동의는 정당간 입장 차이로 처리되지 못하였으나 11. 23 본 회의에서 처리 예정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협상 참가국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공동대응 여부	○쌀협상 결과에 대한 원활한 WTO 검증 ○국회비준 동의	○쌀 협상 검증 : 달성 ○비준동의 추진 - 비준동의안 국회에 접수 (6.7) - 통의통위 상정(10.21), 가결(10.27) ○대다수 국회의원은 비준동의 필요성을 인식	○WTO 검증은 완료 ○비준동의안 추진은 농민단체의 반대와 정당간 의견차이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임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원안 확정 여부			
쌀협상 결과의 원활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			
농민단체, 국회, 언론계, 학계, 일반국민 등 각계에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국민적 공감			
목표달성도 평균	%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협상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쌀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 확보

- 협상은 종료되었으나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DDA 협상에 관계없이 관세화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

나. DDA 농업협상 대응

<총 평>

- 수출국들의 급진적인 공세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도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개혁추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 국가들과 공동제안서 작성 논의에 수차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입장 적극 반영
 - 개도국 특별품목 그룹(G33) 핵심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특별품목, 특별 긴급수입제한제도(SSM) 등 공동제안서 작성 등에 주도적인 역할로 개도국 유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저변확대 여건조성에 기여
 - 관세상한설정, 관세감축폭 확대 등 수출국들의 무리한 관세감축요구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DDA 농업협상이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협상이 될 것임을 수차례 지적
- 국내적으로는 농업인단체의 협상동행 등 NGO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상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
 - 다양한 설명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협상대안 마련, 협상결과 수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최근 DDA 농업협상에 대하여 언론, 농민단체 등의 인식 제고

- DDA 협상에서 우리는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나
 개도국 및 수출국 등의 급진적인 개혁요구로 앞으로의 협상에서
 어려움 예상
 -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에서의 **개도국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상위 목표에 부합하고 무역자유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

- 참여정부의 농정 추진방향인 농업 시장개방으로부터의 연착륙 유도가
 가능하도록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농업에 미치는 피해의 최소화 및 농가소득·경영안정 도모
 - 관세감축폭 최소화, 관세상한 반대,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및 쿼타증량
 최소화, 특별품목의 범위와 신축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우리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 또한, Modality 타결이후 이행계획서 협상에서 핵심쟁점이 될 개도
 국특별품목그룹(G33)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가 개도국임을 간접
 적으로 내비치고 있으며, 세부원칙 타결후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양허협상에 대비
- 대내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상정책협의회, 설명회 등을 협상의
 주요국면마다 실시하여 협상동향에 대한 정보공유와 각 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
 - 농업인 단체, 의원외교 등 NGO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농민단체 등의
 참여·공조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참여농정을 추구하고 있음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최소화, 투명성 제고 등 목표 제시

- 농업협상의 성격상 목표치를 계량화할 수 없는 한계는 있으나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
 -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총력 대응
 - DDA농업협상 진행상황의 입장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협상전략 및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세부원칙 협상에도 적극 대응
 - 대내적으로 투명성 확보에 우선을 두고 협상 추진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WTO 농업협상에 능동적인 대응체계구축 여부	DDA 농업협상회의 참여 및 대응	DDA 농업협상회의 참여 및 대응여부	
주요 쟁점별 대응논리 등 철저한 협상대책 마련 및 대응 여부	주요 쟁점별 협상대책 마련 및 대응	주요 쟁점별 협상대책 마련 및 대응여부	
협상에서 입장을 같이하는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노력 여부	유사입장국 공동대응	유사입장국 공동대응 여부	
세부원칙 및 양허협상 등 모든 협상과정에 개도국 입장에서 대응	개도국 지위 유지 노력 지속 추진	개도국 지위 유지 노력추진여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협상결과의 원만한 수용분위기 조성 여부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에 근거한 협상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에 근거한 협상여부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통해 수출국의 협상전략에 대응

- DDA 농업협상의 적극 대응으로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한 노력 경주
 - DDA 농업협상에서 고위급 외교활동 강화를 위해서 농업통상정책관의 활동연장과 협상 대응역량 강화
 - 농업위 특별회의, 우리나라와 유사입장국과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G10, G33 실무회의 및 각료회의 참석 및 제안서 제출
 - 관세상한 설정 저지 노력,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범위 확대와 신축성 확보,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
- DDA 농업협상 진행에 맞추어 연구용역 등의 사업 추진
 - DDA Modality 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등 3회 연구용역실시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협상에 관한 의견수렴 추진

-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설명회, 간담회, 농업통상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인사에 대한 협상동향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 매 협상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5회)하여 협상 대응전략 및 입장 등 의견조율과 향후 대응방향을 공동으로 마련
 - 협상의 주요단계 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4회)
 - 기자설명회(9회) 및 농민단체 설명회(8회), 기자워크샵(2회) 등
- 홈페이지, 교육 등을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여론수렴 계속
 - 홈페이지 최근이슈, WTO농산물협상 코너,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 협상단계별 홍보시리즈 책자발간, 부내 홍보 Network구성, 협상동향 E-mailing 등 추진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실무협의를 통한 대외경제 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부입장 정리

-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협상의 주요국면마다 관련기관 협의회를(5회) 개최
 - G20 제안서 제출('05.7), 미국, EU, G20 제안서(10.10), EU 추가제안('05.10.28)에 대한 대응 관련 관계부처 협의
 - 협상의 주요단계 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처가 협의 후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응방안을 마련
 - 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책('05.7.8), DDA 협상 현황과 대응방안('05.7.20), DDA 농업협상 향후 대응계획('05.10.7), WTO/DDA 농업협상 향후 대응방향('05.11.4)
- 농업계내에서도 농경연, 농협 등 유관단체와 정보교류 및 공유체계를 구축

☞ G-10이란?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 일본, 스위스 등 10개국으로 관세상한 설정 반대, 관세감축에서의 신축성 등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

☞ G-20이란?

아리헨티나, 브라질, 중국 등 강력 개도국 20개국으로 선진국의 보조대폭 감축, 수출보조 철폐, 개도국 우대 강화 등을 주장

☞ G-33이란?

한국, 인도, 중국 등 33개 개도국으로 민간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 인정, 특별긴급수입제한 제도(SSM)를 주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협상 대응체계 구축, 관세·보조금 감축 최소화·투명성 확보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

-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총력 대응
 - DDA 농업협상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우리 입장을 담은 G10 공동제안서(10.10)를 적극 제출
 -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과의 공조 유지를 강화하고 공동제안서를 제출
- DDA 농업협상 진행상황의 입장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협상전략 및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세부원칙 협상에도 적극 대응
 - DDA 농업분야 Modality 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05.7)
 - 개도국 분류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분석 및 우리의 개도국 지위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05.8)
 - 블루박스 관련 Modality 협상 전망과 전략 국내활용에 관한 연구('05.7)
- 대내적으로 투명성 확보에 우선을 두고 협상 추진
 - 농민단체 설명회 8회 시도 농정과장설명회1회, 기자설명회 9회, 기자 워크샵 2회, 전문지 기자설명회 4회, 농민단체대표 및 실무자의 제네바 방문 관계국 대사 면담 등 지원 4회 등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최소화	정상추진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지속	정상추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정상추진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협상과 관련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DDA협상은 대외적으로 유사입장국과 공조체계 활용, 대내적으로는 협상담당인력, 부처간 협조체계, 연구인력 및 연구용역 재원 등 대내외적, 물적 인적 자원 활용
 - 협상관련 WTO회의 참석('05.2~10 : 11회), 수입국간 공조체계 강화,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국내외적인 협상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WTO 농업협상 일정에 맞추어 단계별, 분야별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협상추진 체계도 이와 병행하여 적절히 갖추고 대응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협상과정에서 각국의 제안 등에 신속히 대응

- DDA 협상은 업무의 성격상 그간 특별히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음
 - 다만, 협상과정에서 논의주제나 흐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협상동향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협상동향 홍보

- DDA 협상동향 및 주요국 움직임 등 설명을 위해 농민단체 설명회 8회('05. 5.4, 5.23, 5.31, 6.30, 7.14, 7.25, 9.30, 10.20), 시도 농정과장 설명회 1회('05.5.9), 기자설명회 9회('05.2.16, 3.23, 6.8, 7.13, 7.20, 8.3, 9.21, 9.30, 10.26), 기자워크숍 2회('05.4.29, 10.14), 전문지 기자설명회 4회('05.5.4, 7.4, 9.29, 10.18), DDA 농업협상회의개시 및 결과 보도자료 배포 15회, 협상동향 홍보책자 배포 1회, 핵심그룹에 이메일 송부 등 추진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협상 대응

- 모든 협상에서 협상지침 수립, 결과발표의 전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 매 협상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대응전략 및 입장 등 의견 조율과 향후 대응방향을 공동으로 마련
 - DDA 농업협상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5회)
- 통상자문번호사(2인)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상 대응 방향 등 자문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계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당초 목표 달성한 것으로 평가

- 협상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관심사항 쟁점화
 - 농업위 특별회의 11회('05.2~10), G10각료회의('05.5), G33 각료회의('05.6), 미국주관각료회의('05.10) 참석 등 협상관련 회의시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적극 개진
 - 관세상한 설정 저지, 민감품목의 TRQ 증량 최소화, 민감 및 특별 품목의 범위와 신축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반영 노력
 - G10(수입국), G33(개도국) 그룹과 공조 강화 및 우리입장 적극 개진
- 주요 협상국의 동향파악 및 수입국 그룹·개도국과의 협력강화 추진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각료회의 등을 이용하여 주요국과의 관심사항에 대한 양자협의 추진('05.2~'05.10)
 - G10, G33 그룹과의 공조·협의 추진('05.2~'05.10)

- G10·G33과 수시로 만나 입장 조율 및 공동발언문 작성
- 특별품목 및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위한 기본요소를 정리하여 G33에 제공
- 농업협상의 각 분야에서 개도국 입장으로 대응
 - SP그룹 개도국과 공동발언문 작성에 적극 참여
 - * 개도국 지위는 세부원칙 타결 이후 논의될 쟁점이나 경제발전 정도와 무역규모(12위) 등 국제적 여건은 비호의적
 - 개도국 지위 유지를 목표로 현 단계에서는 개도국 우대조치 확보 및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세부원칙 타결후 양자협의 단계에서 최대한 실리 확보
- 협상과정에서 농업인단체 등 NGO 활동 적극지원
 - 농민단체 대표 등의 제네바 방문 관계국 대사 면담 등 지원(4회)
- 농민단체 등에 협상동향 설명회 개최 및 협상 대응방향 논의
 - 농민단체 설명회(8회), 시도 설명회(1회), 기자설명회(9회), 기자워크숍(2회), 전문지기자 설명회(4회)
 - DDA 농업협상 참여 및 결과 보도자료 배포(15회) 등을 통해 협상 동향 홍보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WTO 농업협상에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 여부	DDA 농업협상회의 참여 및 대응	WTO/농업위원회 회의 등 농업협상 관련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 - 농업위 특별회의 11회 ('05.2~10), G10각료회의 ('05.5), G33 각료회의 ('05.6), 미국주관각료회의 ('05.10) 참석 등	목표달성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주요 쟁점별 대응 논리 등 철저한 협상 대책 마련 및 대응 여부	주요 쟁점별 협상 대책마련 및 대응	주요 쟁점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협상전략 및 우리 입장을 정립, 주요협상단계마다 협상대책수립 - 세부원칙 협상대응에 관한 연구('05.7), 개도국 지위 유지방안연구('05.8), 블루박스 전망 및 국내활용연구('05.7) - 관세감축, 관세상한,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5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상정(3회) 및 지침에 따라 대응	목표달성
협상에서 입장을 같이하는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노력 여부	유사입장국 공동 대응	G10, G33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를 지속 추진하면서 우리의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반영 - 관세감축폭 최소화, 관세상한 반대,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및 쿼타증량 최소화, 특별품목의 범위와 신축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대응	목표달성
세부원칙 및 양허 협상 등 모든 협상 과정에 개도국 입장에서 대응	개도국 지위 유지 노력 지속 추진	G33(개도특별품목그룹)과의 협력강화 추진 - 개도국특별품목그룹(G33)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가 개도국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으며, 주요 협상상대국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농업의 어려움을 설명 - G33과 수시로 만나 입장 조율 및 공동발언문 작성	목표달성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농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협상결과와의 원만한 수용 분위기 조성 여부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에 근거한 협상	관세감축방식 및 민감품목 등 협상의 중요쟁점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 농업인들의 공감대 형성노력을 강화 - 농민단체 설명회 8회, 시도 설명회 1회, 기자설명회 9회, 기자워크샵 2회, 전문지기자 설명회 4회 등 협상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 - 농민단체대표 및 실무자의 제네바 방문 관계국 대사 면담 등 지원 4회	목표달성
목표달성도 평균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와 실질적 발생 여부

◆ 협상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 협상이 종료되지 않아 협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없음
- 그러나 의견수렴, 협상진행 상황 설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DDA 협상에 대한 이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제고된 것으로 보임
 - 통상정책협의회, 협상단계별 기자설명회 및 홍보 책자발간, 협상동향 E-mailing 정보서비스, 농민단체 및 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언론과 이해관계인들이 현실적인 감각으로 협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
- 농민단체 등 NGO와의 협조 강화 및 의원 외교활동 지원등 정부의 협상력 강화 여건 조성

다. FTA 농업협상 대응

<총 평>

- 무역의존도가 높은(69%) 현실을 감안 FTA를 확대해야 할 국가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업부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 대응
- 협상 상대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의 내용 및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여 최선의 협상전략 작성에 노력
 - 우리측 양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
 - 생산자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치고, 주요 협상참가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 각 국가별로 FTA 협상 진행상황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
 - 언론, 농업인단체, 국회 등에 상세한 협상동향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적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외개방에 반대하는 농업인 및 NGO 등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
 - 개방확대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과감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대농업인 설득에 애로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 상위목표에 부합하고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

- FTA 협상이 확대되는 여건에서 개방 확대폭을 최소화하고, 농업부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결과를 도출한다는 하위목표를 선정한 것은 농림부 업무의 상위목표에 부합함

- 농림부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은 농업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서는 달성 불가능
- 특히 무역자유화라는 흐름속에서 불가피하게 농업강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통상환경에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정책목표는 명확

- 농업 협상의 성격상 목표를 계량화할 수 없는 한계는 있으나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는 명확하게 설정
 - 협상이익 극대화,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 또는 충분한 관세철폐 경과기간 설정
 - 또한 국제적으로 이해 관계자 등에 협상동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상 전략 수립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실적치
체계적인 FTA 농업협상 대응체제 구축	동시다발적인 협상에 대응, 농림부내 협상팀 조직 보강	농림부내 협상팀 조직 보강 여부	
민간품목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 면밀한 협상전략 수립	- 농업생산액, 품목별 농기인구, 재배면적 등을 기초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철저한 영향 분석 및 세부 대응전략을 마련 - FTA 기금을 활용한 전문가 용역추진	- 핵심품목 선정, 영향 분석 및 세부 대응 전략 마련 여부 - 전문가 용역 추진 및 활용 여부	
농민단체 등 대국민 홍보 추진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FTA 민간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용 정도	

참고 :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 주요국의 FTA 협상절차 분석 및 협상표준절차 설계
- NAFTA 등 주요 FTA 체결의 사후효과 분석 및 평가
- FTA 협정문 각 조문별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DDA가 FTA 협상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 FTA 농업부문 민감품목 선정 및 일반양허협상안 마련

□ 대상국별 연구

- 한-미 FTA 영향분석
- 한-Mercosur FTA 영향분석
- 한-인도 FTA 영향분석
- 한-중 FTA 영향분석
- 한-멕시코 FTA 영향분석
- 한-EU FTA 영향분석
-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방안
- 한-캐나다 FTA 협상대응방안

□ 품목별 영향분석 및 구조조정전략 수립

- 품목별 영향분석 및 구조조정전략
- 품목별 소득안정대책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 협상담당 조직 보강, 협상 지원체제 구축 등 수단 마련

- 각국 FTA 협상별로 세부 협상전략을 다르게 마련함으로써 정책목표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 구축
 - 예) 한-아세안 FTA 협상 : 농업강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아세안 회원국간의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민감품목 영향 최소화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마련에 주력
 - 한-EFTA FTA 협상 : 상호 농업교역량이 많지 않으므로 현행 관세 유지 품목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상
- 농업경제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협상전략을 마련
 - 특히 상대국의 농업여건 및 전략 분석이 중요한 FTA 협상의 특징을 감안, 협상 개시 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대국의 관심품목, 우리측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을 분석
-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 연구용역 실시
 -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용역비; 462백만원)
 - 재원 : FTA지원이행기금('05년 FTA 연구용역비 826백만원)
 - * 잔여 재원은 추가적인 연구에 배정 예정으로 과제 검토 중
- 협상력을 집중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자문기구 및 민간차원의 협의회를 조직
 - 농림부 및 농경연 중심으로 FTA 협상지원 네트워크 구축
 - 특히 농경연을 중심으로 연구방법과 범위, 주요 연구내용 조정 등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연구자와 관련 담당자간의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 서울대, 경상대, 인하대 등 학계와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농촌진흥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
- 농림부내 자유무역협정과를 신설, 협상관련 인적자원을 보강
 -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과를 신설(4. 15)하고 정원을 5명 증원(4급 1, 5급 3, 6급 1)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 PCRM, 간담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통해 FTA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여 FTA 농업부문 협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
 - ASEAN, EFTA 협상관련 농민단체간담회 개최(4회)
 - 매월 FTA/DDA협상동향 등을 포함한 「국제농업소식지」를 PCRM과 농림부 홈페이지(전자책시스템)를 통해 전파
 - 워싱턴 트레이드 데일리(Washington Trade Daily)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 등 해외 유력 일간지의 FTA 관련 기사를 번역 정리하여 홈페이지의 해외농업리뷰 코너에 게재함으로써 관련 국제동향을 소개
- 품목군별 생산자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위원회”를 구성(6.28)하고, 상품양허안을 협의(4회)
 - * 협의회 구성(23명) : 품목대표(경종 및 축산) 18명, 교수 5명
- FTA 협상관련 「농업통상정책연구협의회」 구성(9.30)
 - 민감품목 선정, 양허수준 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협상전략 마련에 활용(11월까지 3회 개최)
 - * 협의회 구성(26명) : 대학교수 22명, 농경연 2명, 통상법 전문가 2명 등
- 국회(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29명)와의 연대 강화
 -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FTA 협상 설명(7.21, 7.29)

- 지자체 공무원, 산림청, 농진청 및 산하기관·단체 직원에게 FTA 협상 등 설명회 개최(7월~8월, 8회)
 - 농협, 농관원, 수관원, 식검, 지자체, 농업기반공사, 유통공사 등
- 농업통상정책협의회(7.29), 농민단체장 설명회(5.23) 개최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 협상전략 수립 등에 있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

- 재정부, 외교부와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농업계 내에서도 농특위, 농경연, 농유공, 농협 등 유관단체와 정보교류 및 공유체계를 구축하였음
 - 매 FTA협상 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업무 조율
 - 외교부 자유무역협정국과 협정문 조문작성을 포함한 협상관련 사항을 수시로 협의
 - 재정부 관세협력과와 우리측 양허안 작성 관련 사항 협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FTA연구단 조직과는 공동연구 단계에서부터 협상 종료시까지 긴밀한 협의
 - 농협 조사연구소 통상연구팀 내에 FTA 담당자 2명 확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내의 한·일 FTA 대책반('04.1월)을 FTA 전략팀('05.3월)으로 조직을 강화, FTA 협상 지원 담당
 - 아세안, 캐나다 등 FTA 대상국에 대한 전략마련 기초조사
 - FTA 협상관련 대정부 협력지원으로 효율적 협상에 기여
 - FTA 관련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 전략 강구
 - 한-일 FTA 타결 대비 수출전략품목 지속 발굴 및 심층 조사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 당초 계획에 따라 협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민감품목에 영향 최소화 등 **면밀한 협상전략** 수립
 - 싱가포르와는 협상을 종료,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8.24)
 - EFTA와는 협상타결 선언(7.12, 정식 서명 미완료)
 - 일본과는 농산물 양허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로 교착상태
 - 아세안과는 금년 중 상품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6회)
 - 캐나다와는 1년 이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차례 협상 실시(7월, 8월)
 - 미국과는 정부간 예비협의를 종료(5월), 통상현안 상황 평가후 협상개시 여부 결정
 - 멕시코와는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ECA)을 추진기로 합의(9.9)
 - 인도, Mercosur, 중국과는 공동연구를 진행중
- 체계적인 **FTA 농업협상 대응체제** 구축
 -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자유무역협정과 신설(4.15)
 - 농경연 등 연구기관 중심으로 협상지원네트워크 구성(4월)
- 농민단체 등과 **협상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 아세안, EFTA 협상 농민단체 설명회(4회)
 -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품목단체 농업 통상자문위원회**”를 구성(6.28), 상품양허안 협의(6.28, 8.3, 8.25)

<세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 업	추진 상황
면밀한 협상전략 수립	정상추진
FTA협상 대응체제 구축	정상추진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정상추진

참고 : 한·EFTA FTA 협상결과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추진경과

- '04.8월부터 2차례 공동연구회를 실시하고 FTA 추진 권고
- '04.12 한-EFTA 통상장관 회의시 1년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05.1~7월간 4차례 협상을 진행, 실질적 협상 타결('05.7.12)
- '05.9.13일에 양측 협상 대표는 합의 협정문에 가서명

□ 주요 협상 결과

- 우리측은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중 스위스에 498개(34%), 노르웨이에 669개(46%), 아이슬란드에 841개(58%) 품목을 양허하였음.
 - 쌀, 육류, 낙농제품, 과실류, 양념류 등 주요 품목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
 - 과자류, 초코렛, 빵 등 일부 가공식품(256개 품목)은 대부분 관세를 일정부분 감축하는 방식으로 상호 양허
- 우리측은 김치와 쌀 발효주, 소주, 라면, 사과, 배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 관세 철폐 및 감축을 받아냄
- 다만, EFTA 국가와는 지리적으로 멀어 농산물 교역규모가 적고 양허수준 또한 낮아 금번 협상결과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됨.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적 자원의 역량 결집

- FTA 협상일정에 맞추어 사전 협상 대상국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협조 및 사전예비회담을 통한 의견조율, FTA과 신설을 통한 협상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으로 자원을 집행
 - 아세안과 같은 농업강국과의 FTA시 협상전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 양허안 작성시 협상대응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실시
 - 『한·아세안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04.8)
 - 『한·아세안FTA 협상대응방안』('05.9)
 - 유럽자유무역지역 4개국(EFTA)과의 협상 전 연구용역 실시
 - 『한·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04.12)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 협상 여건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

- FTA 협상은 협상상대국의 급속한 확대 등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대응 인력보강, 대응전략 마련, 적절한 홍보대책 수립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적시에 강구하고 있음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협상동향을 홍보

- 농림부 홈페이지의 협상코너 활용, 협상단계별 설명자료 게시, 협상결과를 PCRМ을 통해 E-mailing서비스

- ASEAN, EFTA 협상관련 농민단체간담회(4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및 농림기관 임직원 등의 대 농업인 홍보시 활용하고 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책자 『알기 쉬운 FTA농업 협상』을 약12천부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게재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 농경연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

- 모든 협상에서 협상지침 수립, 결과발표의 전 과정에서 외교,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 매 협상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대응전략 및 입장 등 의견 조율과 향후 대응방향을 공동으로 마련
-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 전문기관에 협상 대응방향 등 자문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

- 품목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핵심품목에 대한 우리측 협상목표 및 협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 대응전략 작성을 계획대로 추진
- 동시다발적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FTA 담당과 신설 완료
- 농업인 등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체계적인 FTA 농업협 상 대응체제 구축	동시다발적인 협상에 대응, 농림부내 협상팀 조직 보강	○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 의하여 FTA과를 신설(4. 15) - 1과 5명 증원 · 4급 1, 5급 3, 6급 1 순증	목표달성
민간품목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 면밀한 협상 전략 수립	- 농업생산액, 품목별 농가인구, 재배면적 등을 기초로 핵심품 목을 선정하고 철저 한 영향분석 및 세 부 대응전략을 마련 - FTA 기금을 활용한 전문가 용역추진	○ 핵심품목은 최대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비교우위 품목은 집 중적으로 양허를 요청하여 협 상이익을 극대화 - EFTA와의 FTA 협상 · 우리측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사과, 배에 대해서는 아이슬 랜드와는 무관세, 나머지 국 가와는 계절관세 및 쿼터 물 량내에서 관세감축을 받음	목표달성
민간품목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 면밀한 협상 전략 수립	- 농업생산액, 품목별 농가인구, 재배면적 등을 기초로 핵심품 목을 선정하고 철저 한 영향분석 및 세 부 대응전략을 마련 - FTA 기금을 활용한 전문가 용역추진	○ 협상개시전 연구용역을 통해 상대국 관심품목과 우리측 비 교우위 품목을 선정하고 상대 국의 협상방식 분석 - FTA 영향분석 : ASEAN ('04.8), EFTA·캐나다('04.12), 미국· 인도('05.10) - FTA 협상대응방안: 캐나다 ('05.9), ASEAN('05.10) - 협정문 조문별 분석 및 대응 방안 : SPS분야, 투자·서비스 분야('05.10)	목표달성
농민단체 등 대국민홍 보 추진	생산자단체, 가공·유 통·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통 하여 정보공유 및 의 견수렴	○ 품목군별 생산자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전문가 등 으로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 위원회"를 구성(6.28), 상품양허 안 협의(6.28, 8.3, 8.25)	목표달성
목표달성도 평균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협상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의견수렴, 협상상황 설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FTA 협상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폭 제고
- EFTA 협상에 농업부문 민감성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진행중인 아세안, 캐나다 협상에도 농업의 특수성 반영 노력

부록
3

2006년도 예산 개요

목 차

2006년도 예산 개요

- I 2006년도 농림부소관 예산개요 / 835
- II 2006년도 농림부소관 기금운용계획 개요 / 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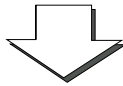
I . 2006년도 농림부소관 예산개요

1. 2006년도 예산 편성방향

————— < 기본 방향 > —————

◇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 및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 < 중점 편성방향 >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개방화에 대응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예산 확충**

○ 농작물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및 부담경감 지원 확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인프라 및 지역개발 중점 지원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안전성** 제고 지원 강화

○ 전문농업경영체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적극 육성

○ 기술·지식농업, 생명공학, 수출농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농업생산기반조성, 양곡매입·관리 부문 지원은 축소

농업·농촌대책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실천

2. 2006년도 예산 규모 및 주요특징

가. 농림부소관 예산 규모

□ '06년 농림부소관 예산 순계규모는 9조 653억원으로 '05년(8조 5,257억원) 대비 6.3% 증가 (5,396억원 증)

○ 순사업비 예산은 5조 6,386억원으로 '05년보다 5.2% 증가

< '06년 농림예산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A)	'06예산 (B)	증△감 (B-A)	
				%
◇ 농림예산 총계(I+II)	161,965	164,510	2,545	1.6
◇ 농림예산 순계(A+B)	85,257	90,653	5,396	6.3
I. 일반지출예산 (A)	72,030	73,203	1,173	1.6
가. 순사업비	53,624	56,386	2,762	5.2
○ 농가소득·경영안정	26,237	28,033	1,796	6.8
○ 복지증진·지역개발	4,613	5,601	988	21.4
○ 농업체질강화	7,701	8,282	581	7.5
○ 생산기반조성·기계화	15,073	14,470	△603	△4.0
나. 양곡수급·채무상환	16,509	14,831	△1,678	△10.2
다. 기본적 경비	1,897	1,986	89	4.7
II. 내부거래지출	89,935	91,307	1,372	1.5
가. 회계·계정간 거래	76,708	73,857	△2,851	△3.7
나. 기금전출금 (B)	13,227	17,450	4,223	31.9

* 일반지출 : 회계·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업비+기본적 경비(인건비 등)

나. 2006년 예산의 주요특징

(1) 농업·농촌대책과 쌀협상비준대책 소요를 예산에 반영

□ 비투융자 사업비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투융자 재원을 전년 대비 13.9% 증액 확보

○ 농림부 투융자 사업비 : ('05) 8.2조원 → ('06) 9.3조원(1.1조원 증)

□ '06년 직불관련 예산을 1조 9,235억원(변동직불금 포함)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림예산중 직불예산비중을 23.4%('05년 : 13.6%)로 제고

○ 직불예산 : ('05) 10,014억원 → ('06) 19,235억원 (92.1% 증)

□ 쌀협상비준대책 관련 사업비는 전년대비 46.6% 증액 반영

○ 관련 사업비 : ('05) 24,605억원 → ('06) 36,080(11,475억원증)

— < 쌀협상비준대책 관련사업비 '06반영 주요내용 > —

- ① 쌀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 ha당 60만원 → 70
- ② '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5.9조원) 상환연기 ('06이차보전 549억원)
- ③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규 실시(422억원)
- ④ 시설미이용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농업인의 가정육아비용 신규 지원(206억원)
- ⑤ RPC 건조·저장시설을 농특회계로 이관하고 사업량 확대(50개소→110)
- ⑥ 조건불리지역직불 전국확대 : 경사도 14%이상 법정리 받 187천ha
- ⑦ 선도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 1,500명, 1인당 80백만원
- ⑧ 농신보 출연 확대 : ('05) 4,000억원 → ('06) 5,780
- ⑨ 유기질비료 공급확대 : ('05) 70만톤(245억원) → ('06) 120만톤(420억원)
- ⑩ 농업기반시설 지원확대 : ('05) 4,937억원 → ('06) 5,726

(2) 사업 평가결과를 기초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지원체계 개편

- '06년 예산편성시 **재량적 지출의 10% 구조조정** 실시
 - 구조조정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중점분야 **중액재원**으로 활용
 - * '05 재량적 지출규모 : 4조 2,746억원, '06 구조조정액 : 4,286억원(△10.0%)

- **보조사업**은 사업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제고
 - 저수지준설, 안전진단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으로 통폐합
 - 녹색·농촌체험지원 등 도농교류 관련사업은 **도농교류활성화사업**으로 통합
 - 국고 보조사업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한 사업은 **일몰제** 시행
 - '06년까지 지원 :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과실검은마름병 방제
 - '07년까지 지원 : 마늘경쟁력 제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보조율의 단계적 감축이 필요한 보조사업은 **감축계획** 사전예고
 -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보조율 : ('06) 50%, ('08) 40, ('09이후) 30

- **용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재정용자사업**의 금융기관 자금 활용(이차보전)을 단계적으로 확대
 - 1천만원미만 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 수리부품, 농촌주택정비자금, 협동조합합병자금, 창업농육성자금, RPC운영자금 등
 - **농기계 보관창고** 용자 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

3. 2006년도 부문별 예산 중점지원 내역

가.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직불제 확충, 농가 경영안정 및 부담경감 적극 지원

- * 관련예산 : ('05) 26,237억원 → ('06) 28,033 (증 1,796억원, 6.8%)
- * 직불예산(농림예산비중) : ('05) 10,014억원(13.6%) → ('06) 19,235(23.4%)

□□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직불제 확충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만원 인상**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소요지원(7,364억원→16,082)
 - 고정직불금(농특회계) : ('05) 5,988억원 → ('06) 6,986 (증 998억원)
 - * 대상면적 : 998천ha, ha당 지원단가 : ('05) 60만원 → ('06) 70
 - 변동직불금(쌀소득기금) : ('05) 1,376억원 → ('06) 9,096 (증 7,720억원)
 - * '05년산 수확기 쌀값이 '04년산 대비 13.4% 수준 하락시의 지급소요 반영
- 경지경사도 14%이상 영농여건이 열악한 밭을 대상으로 '04년 시범 도입한 **조건불리지역직불**은 '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123억원 → 523)
 - 대상면적 : 31천ha → 187, 지원단가(ha) : 40만원(초지 20), 국고 70%
- 축산오염 경감을 위해 '04년부터 지원하는 **친환경축산직불**은 축산업등록 농가 900호를 대상으로 '0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58억원→58)
- **경영이양직불** 단가는 '05년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량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량을 축소 조정 (286억원 → 175)
 - 매매 : 2,137ha → 820(월 241천원), 임대 : 6,141ha → 3,998(연298만원)

□□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535억원 → 767)
 - 보험료의 58.4% 및 운영비 전액 국고지원(235억원→567)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출연금 지원(300억원 → 200)
- **농업인 재해공제** 보장수준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114억원 → 183)
 - 안전공제 : 768천건('05수준), 지원단가 : 28,100원 → 46,140, 국고 50%
 - * 사망시 보상수준 : ('05) 1,500만원 → ('06) 2,500
- '05년 12월 폭설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재해대책비** 지원 확대
 - 재해대책비 : ('05) 600억원(용자금) → ('06) 1,450(용자금 600, 보상금 850)

□□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영농비 부담 경감 적극 지원

- '01년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5.9조원) 상환연장 등 **부채대책** 추진 및 저리 정책자금 공급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 지원(8,217억원 → 6,540)
- 농신보 건전화를 위해 금융기관 출연 확대 (0.2% → 0.3) 등 자구노력과 함께 **농신보** 출연 확대 (4,000억원 → 5,780)
-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수 감소 등에 따라 운용규모를 축소하고 재정용자금은 연차별 상환소요 지원 (3,187억원 → 2,828)
 - 농축산경영자금 운용규모 : ('05) 34,000억원 → ('06) 33,000 (△2.9%)
- 농업용 급배수 서비스 수준 제고와 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실소요 지원 (1,483억원→1,528)

나.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 지원

◇ 농촌사회 안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복지기반확충**
및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지원 확대

* 관련예산 : '05) 4,613억원 → '06) 5,601 (증 988억원, 21.4%)

□□ 농촌사회 안정을 위해 복지 및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05년 40%)로 확대하고, 보험료의 28%
(22%는 보건복지부 지원)를 농특세에서 추가지원(666억원 → 1,359)

- 수혜인원 : 609천세대 → 599, 연평균 경감액 : 293천원 → 404

○ **농업인 영유아 (0~5세)양육비** 지원대상을 '05년 2ha미만에서 '06년
5ha미만 농가까지 확대 (224억원→157)

- 지원대상 : ('05) 31천명 → ('06) 27.3(여성부지원대상 증가로 감소),
국고 50%

* '06지원액(월) : (0세) 175천원, (1세) 154, (2세) 127, (3~4세) 79, (5세) 158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127억원→483)

- 지원인원(학기당) : 13천명 → 16, 지원단가 : 2,060천원 → 2,202

○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영농인력지원사업** 신규 추진(227억원)

- 농지 3ha이하, 65세미만 사농가의 영농인력지원(4천명, 14억원),
국고70%

- 65세이상 고령 취약농가의 가사인력지원(9개소, 7억원), 국고 70%

- 5ha미만,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의 가정육아비용지원(48.3천명, 206억원)

* 보육시설이용아동의 50% 수준 지원(월 4~8만원), 국고 50%

□□ 쾌적한 농촌 정주기반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

-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기 선정된 36개 권역의 연차별 투자소요 및 '06년 20개 권역 신규 착수 소요 지원 (489억원→467)
 - 개발사업비(균특) : ('05) 428억원 → ('06) 434
 - 개발계획수립(농특) : ('05) 61억원(40권역) → ('06) 33억원(20권역)
- 정주권개발대상 800개 면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정비사업**(균특) 적극 추진
 - 농촌정주기반확충 : ('05) 1,639억원(338면) → ('06) 1,900(300)
 - 전원마을조성 : ('05) 277억원(51지구) → ('06) 260(59)
-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관광으로 흡수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균특) 지원 확대 (47억원→67)
 - 사업량 : ('05) 47개소 → ('06) 67, 마을당 2억원 지원, 국고 50%
- 농촌경관의 유지·보전으로 어메니티 증진을 위해 '05년 신규 도입한 **경관보전직불제**는 '0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6억원→6)
 - * 사업량 470ha('05수준), ha당 지원단가 1.7백만원, 국고 70%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이끌어갈 **지역리더육성**, **그린투어촉진** 등을 위해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확대(19억원→39)
 - 체험마을중심으로 농촌지역개발 인턴제(마을사무장) 신규 도입(6억원)
 - * 사업량 100개 마을, 월 1백만원(3년간 지원), 국고 50%
 -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마을 확대 : ('05) 20개 마을 → ('06) 65
 - * 마을당 1회에 한하여 연간 보험료 최대 1백만원 지원

다.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점 지원

* 관련예산 : ('05) 2,603억원 → ('06) 3,340(증 737억원, 28.3%)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법 확산을 위한 지원확대

-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화학비료 보조를 폐지('05.7.1)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등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245억원→420)
 - 유기질비료 물량 : ('05) 70만톤 → ('06) 120, 톤당단가 : 35천원
- 논부문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논**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저농약도 지원대상에 포함(69억원→114)
 - 사업량 : 15,870ha(논 4,485, 밭 11,385) → 27,057(논 14,736, 밭 12,321)
 - * 논단가 : 저농약 217천원/ha('06신규), 무농약 150→307, 유기 270→392
 - * '06 밭단가('05수준) : 저농약 524천원, 무농약 674, 유기 794
- 원예작물의 농약사용 감축을 위해 **천적방제** 지원확대(12억원→38)
 - 사업량 : 300ha → 1,000, 지원단가 7.3백만원/ha, 국고 50%
- 수계단위로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000ha규모) 조성 시범사업 추진(4억원→75)
 - 사업량 3개소, 단지당 사업비 100억원, 사업기간 2년, 국고 50%
- 축산과 경종농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경종 농가의 이용활성화 적극 지원(333억원→341)
 - 액비이용 활성화를 위해 액비살포비용 신규 지원(27천ha, 40억원)

□□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04년 시범도입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본격시행(26억원→38)
 - 수확후 위생관리시설지원 확대 : ('05) 6억원(3개소) → ('06) 14(7)
 -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신규 구축(15억원)
- **농산물안전성조사**를 강화하여 농장단계에서 부적합 농산물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90억원→100)
 - 주요 시군 거점출장소에 정밀분석실 설치 : ('05까지) 6개소 → ('06) 4
- 유해·불량 농산물수입 근절을 위해 **원산지관리** 강화(22억원→31)
 -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확대 : ('05) 17천명 → ('06) 20
-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산물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유전자변형(GM)** 농산물 등의 내실있는 관리(35억원→36)

□□ 축산물 위생 및 가축질병 예방대책 적극 추진

- **축산물 HACCP** 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 및 사후관리 전담조직(축산물 HACCP기준원)설립 운영 신규 지원(11억원)
- 가축질병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 지원강화(205억원→209)
 - 신속한 방역을 위해 **공익수의사제도** 신규 도입(80명, 7억원)
- 소부루세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가축에 대한 보상금** 소요 지원(100억원→300)

라.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및 소비기반 확충

◇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우수농식품 **수출** 촉진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지원

* 관련예산 : ('05) 1,530 → ('06) 1,382(△148억원, △9.7%)

* '06년 해외시장개척, APC 경영평가 등 133억원이 농안기금으로 이관

□□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지원

○ 산지유통 거점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유통센터건립**(군특)을 확대하고 경영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160억원→180)

- 사업량 : ('05) 47개소 → ('06) 56, 국고 : 생산자단체 30%, 지자체 50

○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소비지에 배송하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군특)는 '07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소요 지원(81억원→45)

- 사업량 : ('05) 2개소(김해, 울산) → ('06) 1(울산), 국고 50%

□□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효율화** 지원 강화

○ 농산물 **물류표준화**(군특) 사업을 확대하여 포장 및 하역기계화 촉진 (67억원→88)

- 사업량 : 222개소 → 294, 개소당 지원단가 60백만원, 국고 50%

○ 파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76억원 → 89)

- 사업량 : 600천대 → 700, 매당 지원단가 21,100원, 국고 60%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촉진(120억원→120)

- 공동선별 : 400천톤('05수준), kg당 지원단가 : 100원, 국고 30%

□□ 농식품 수출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06년 농식품 수출목표 **24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유망품목 집중 개발·홍보 등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내실있는 지원(127억원→127)
 - '05년까지 농특회계사업 → '06년 농안기금 사업으로 이관
-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은 초기 시장개척이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집중 지원 (289억원→289)
 - 신규시장 개척시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상향 조정(5%→10)
- **농업·농촌가치 및 우수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강화(30억원→40)

마.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식·기술농업 확충

◇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자금·컨설팅 집중지원 및 **기술농업**기반 구축

- * 관련예산 : ('05) 3,279억원 → ('06) 3,211(△68억원, △2.1%)
- * '06년 창업농융자금중 490억원이 이차보전 전환으로 예산규모 감소

□□ 경쟁력있는 선도 농업경영체의 체계적 육성 지원

- **창업농**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800억원 → 700)
 - 창업농 1,000명을 선발하여 1인당 70백만원 융자지원
 - * 총 융자규모 700억원 : 재정자금(30%) 210억원, 금융기관자금(70%) 490(이차보전)
- **농업인턴, 대학생 창업연수 및 후견인제** 지원확대(10억원→13)
 - 지원인원 : ('05) 300명 → ('06) 400, 국고 70%(창업연수 100%)

-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존 우수**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추가지원**(’06이차보전 : 14억원)
 - 지원대상 1,500명, 지원규모 1,200억원(금융기관자금)
- 전문농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의 **기술·경영중심 교육** 집중 실시 및 **농업인 교육 인프라** 확충(36억원→122)
 -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중심의 지역별 특성화교육 신규 실시(36억원)
 - 창업 Track제(농과대 영농정착 교육과정) 시범실시(7억원)
- 품목단체 공동 컨설팅제도 신규도입, 컨설팅업체 중앙공모 등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강화(40억원 → 44)
 - 일반경영체 : 1,000농가(’05수준), 브랜드경영체(신규) : 16개소, 국고 50%
-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평가에 의한 지원체계 확립(1,502억원→1,752)
 - 자금규모 : 7,511억원 → 8,761(재정자금 20%, 금융기관자금 80)

□□ 지식·기술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강화

- **농림기술개발**은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지원 확대 (450억원→522)
 - 핵심전략기술 : 23과제 → 32, 현장적용기술등 : 654과제 → 689
-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사업**의 연차별 소요예산 지원 (45억원 → 65)
 - 사업기간 : ’05~’13, 총사업비 585억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지역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120억원→200)
 - ’05년 선정된 20개 지구의 2년차 사업비(개소당 10억원) 지원

바. 양곡수급안정 및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 활성화

◇ '05년 도입된 공공비축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RPC 등 민간유통업체의 시장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 관련예산 : ('05) 14,701 → ('06) 13,279 (△1,422억원, △9.7%)

□□ 정부양곡의 매입 및 방출을 위해 양특회계 설치운영

○ '06년 양곡매입비, 수입양곡대, 조작관리비 등 정부양곡의 매입·관리에 필요한 양특회계 세입·세출예산 소요지원

- 양특회계운용규모 : ('05) 14,412억원 → ('06) 12,930(△1,482억원)

○ 양곡매입비는 공공비축제도 운용에 필요한 소요 반영(11,161억원→8,565)

- 공공비축쌀 : ('05) 400만석(정부 350, 농협 50) → ('06) 350(정부 300, 농협 50)

□□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지원

○ 수확기 출하물량 흡수 및 쌀품질 고급화 기반 구축을 위해 부족한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확대 및 농특회계 이관(93억원→249)

- 사업량 : ('05) 50개소(저온창고 3 포함) → ('06) 110(저온창고 10 포함)

- 지원단가 : (중설) 4.5억원→5.5, (통합) 7→9, (저온창고) 2.5→3

- 국고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40%, 통합RPC 및 저온창고 50%

○ RPC운영자금은 '05수준(9,184억원)을 유지하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운영자금 금리 차등적용 (0~2%)

사. 생산기반조성 및 기계화사업은 효율성 제고에 중점

◇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계속지구 준공위주로 추진하되 재해대비 시설
 개보수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기계화사업은 공동이용촉진**
 * 관련예산 : ('05) 15,073 → ('06) 14,470(△603억원, △4.0%)

□□ **재해예방** 관련사업은 재해위험시설 중심으로 확대 지원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안전진단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시행지구는 완공위주로 지원 (3,454억원 → 3,454)
 - 저수지 준설, 수리시설 안전진단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통합
- **방조제 개보수**(균특)는 재해위험 방조제를 대상으로 지원 확대
 - 국가관리방조제 : ('05) 306억원(27지구) → ('06) 340억원(34지구)
 - 지방관리방조제 : ('05) 355억원(233지구) → ('06) 395억원(198지구)
- 상습침수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균특)은 준공지구를 확대하고 신규착수 축소(2,165억원 → 2,179)
 - 사업량 : 109지구(준공 11, 신규 33) → 130지구(준공 16, 신규 30)

□□ **농촌 용수개발** 및 농지 기반정비사업은 내실화 도모

- **중규모 용수개발**은 계속지구 조기완공 위주로 지원하고 신규착수는 '05수준 유지 (2,722억원 → 2,436)
 - 사업량 : ('05) 110지구(준공 14, 신규 5) → ('06) 101지구(준공 15, 신규 5)
- **일반용수개발**(균특)은 사업수요 증가를 감안 지원확대(715억원→795)
 - 지표수보강 : ('05) 593억원(77지구) → ('06) 622억원(74지구), 국고 100%
 - 소규모용수 : ('05) 122억원(34지구) → ('06) 174억원(38지구), 국고 50%

- 대구획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받기반정비 등 **농지기반조성 사업**(균특)은 사업수요 반영(3,073억원 → 2,726)
 - 대구획경지정리(착수) : 4.9천ha→4.5, 기계화경작로 : 1,283km→1,159
 - 받기반정비(착수) : 4.7천ha→4.4,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
- **대단위농업개발**은 5개 계속지구 사업추진 소요 및 **서산간척지** 농업 기반시설 재정비 설계비 (20억원) 신규 지원 (910억원 → 930)
 - 금강(Ⅱ) 400억원, 미호천(Ⅱ) 100, 홍보 210, 영산강(Ⅲ-2) 40, 영산강(Ⅴ) 160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조기준공을 위해 '05년 한국농촌공사가 발행한 채권 3,00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5년 균분)소요 지원

- '06년 원리금 지원계획 : **744억원** (원금 600억원, 이자 144)
 - * '05년 한국농촌공사 채권 3,000억원을 수리시설개보수 1,500억원, 중규모용수 개발 1,340억원, 대단위농업개발에 160억원 투자

□□ 농기계 지원은 효율성제고 및 공동이용 촉진

- 1천만원미만 **농기계 구입자금**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 지원규모 : ('05) 1,400억원 (재정 400, 금융 1,000) → ('06) 1,400 (금융)
-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10억원 → 18)
 - 사업량 : ('05) 8개소 → ('06) 12, 개소당 지원단가 3억원, 국고 50%
-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용자**('05:120억원)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용자**('05 : 7억원)는 종합자금으로 통합

II. 2006년도 농림부소관 기금운용계획 개요

1. 2006 기금운용계획 총괄

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방향

- <기본 방향> —
- ◇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융자 수요를 반영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
 - ◇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입·지출구조를 개편

□ '06년은 Top-Down제도 정착과 연계, 지출구조조정 추진

-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사업 통폐합, 실효성이 낮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사업의 축소·중단
 - * 축산업등록지원사업('06부터 중단, 촉발기금), 품질고급화장려금('07부터 중단, 촉발기금)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수요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
 - * 채소계약재배안정화사업 도입('06부터 3년간 시범, 농안기금) → 최저가격 보장제 폐지 추진

□ 중·장기적 수입·지출구조 개편 등 기금수지의 건전성 제고

- 수입·지출구조상 수지악화 우려가 있는 축산발전기금은 효율성 재검토를 통한 보조사업의 축소 등 수지개선 방안 모색
- 차입금 의존 비율이 높은 농지관리기금은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농지관리계정과 농지조성계정 통합 추진
 - * 근거법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공포('05.12), 시행('06.4.30)

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 '06년 농림부소관 7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8조 2,854억원으로 '05년보다 46.2% 증가(증 26,181억원)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운용규모 증가 및 공자기금차입원리금 상환소요증가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규모 증가로 전체 운용규모 증가

○ '06년 일반지출 규모는 4조 5,537억원으로 '05년보다 17.6% 증가

*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증액(1,376억원→9,096, 증 7,720) 등 소득보전·부담경감 분야 지원 규모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05계획		'06계획 (B)	증△감 (B - A)	
		당초	수정(A)		(B - A)	%
기 금 별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200	20,200	19,761	△439	△2.2
	○ 농지관리기금	15,049	15,049	16,172	1,123	7.5
	○ 축산발전기금	9,379	9,379	9,941	562	6.0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2,043	2,043	10,032	7,989	391.0
	○ FTA이행지원기금	1,662	2,292	2,183	△109	△4.8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336	336	315	△21	△6.4
	○ 양곡증권정리기금	7,374	7,374	24,450	17,076	231.6
합 계		56,043	56,673	82,854	26,181	46.2
기 능 별	1. 일반지출	38,600	38,717	45,537	6,820	17.6
	○ 사업비	37,584	37,701	44,444	6,743	18.0
	- 생산기반조성	4,290	4,289	3,907	△382	△8.9
	- 유통개선	19,430	19,485	19,104	△381	△2.0
	- 기술개발·인력육성	360	363	412	49	13.5
	- 소득보전·부담경감	2,278	2,356	10,227	7,871	334.1
	- 수급안정	11,226	11,208	10,794	△414	△3.7
	○ 기금운영비	1,016	1,016	1,093	77	7.6
2. 정부내부지출	13,205	13,205	32,816	19,611	148.5	
3. 여유자금운용	4,238	4,751	4,501	△250	△5.3	

2. 기금별 운용계획 개요

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 총괄

□ '06년 기금운용규모는 **1조 9,761억원**으로 '05년 보다 2.2%(△439억원) 감소

○ 일반지출 : 1조 8,732억원으로 '05년 보다 1.7%(△320억원) 감소

- 사업비 : **1조 8,207억원**으로 '05년 보다 2.0%(△363억원) 감소

- 기금운영비 : 525억원으로 '05년 보다 8.9%(43억원) 증가

(백만원)

구	분	'05계획		'06계획 (B)	증△감 (B-A)	%
		당초	수정(A)			
수입	○ 부담금(수입권공매)	50,041	50,041	59,485	9,444	18.9
	○ 비축농산물판매	402,375	402,375	438,760	36,385	9.0
	○ 종자판매	41,230	41,230	43,413	2,183	5.3
	○ 용자원금회수	1,214,175	1,214,175	1,221,990	7,815	0.6
	○ 이자수입 등	118,226	118,226	93,328	△24,898	△21.1
	○ 여유자금회수	193,904	193,904	119,107	△74,797	△38.6
합 계		2,019,951	2,019,951	1,976,083	△43,868	△2.2
지출	1. 일반지출	1,905,156	1,905,156	1,873,189	△31,967	△1.7
	○ 사업비	1,856,956	1,856,956	1,820,692	△36,264	△2.0
	- 정부가격안정	368,286	368,286	344,938	△23,348	△6.3
	- 민간가격안정	284,460	284,460	274,600	△9,860	△3.5
	- 우수농산물지원	332,400	332,400	335,310	2,910	0.9
	- 유통시설확충개선	7,100	7,100	22,000	14,900	209.9
	- 산지및소비자유통개선	812,800	812,800	742,220	△70,580	△8.7
	- 종자수급관리등	51,910	51,910	101,624	49,714	95.8
	○ 기금운영비	48,200	48,200	52,497	4,297	8.9
2. 여유자금운용	114,795	114,795	102,894	△11,901	△10.4	

(2) 주요 사업 내역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산지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할 산지유통조직
집중 육성 : ('05) 6,598억원 → ('06) 5,790 (△808)
 - * 마늘농가경영안정 : '05년(900억원) 사업종료
- 산지의 규모화·표준화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공동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집중 지원(5,350억원 → 5,442)

- 정부가격안정사업 : ('05) 3,683억원 → ('06) 3,449 (△234)
 - 비축사업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일부 품목(마늘, 사과, 배 등 8개 품목) 사업비는 감액(3,555억원 → 3,204)
 - 생산자 조직 주도의 자율적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출하조절사업비 증액(128억원→245)
 - 자조금(32억원 → 55), 유통협약·명령제지원(66억원 → 90), 채소계 약재배안정화사업('06신규 80억원)

- 민간가격안정사업 : ('05) 2,845억원 → ('06) 2,746 (△ 99)
 - 농산물 저장 및 가공업체 구매지원 : (2,065억원 → 2,066)
 - 채소·과실 수급안정사업은 '05 수준 지원

- 우수농산물지원사업 : ('05) 3,324억원 → ('06) 3,353 (증 29)
 -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원료구매 자금 및 수송비, 포장비 등 수출부대비 용자지원

- 소비지 유통개선사업비는 집행실적, 사업수요 등을 감안 증액 : ('05) 1,530억원 → ('06) 1,632 (증 102)
 - 소비지 유통시설인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소비자단체, 일반유통업체 등에 운영자금 및 직거래활성화 지원

-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 ('05) 71억원 → ('06) 220 (증 149)
 - 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 및 가공업체 등 유통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사사업 통폐합 추진**으로 지원대상 (조직)별 **사업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체계 마련
 - **산지유통지원자금의 통폐합**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일반조직, 친환경유통 활성화 사업을 '06년부터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으로 통합
 - * 공동마케팅조직 개소당 100억원이내, 산지유통전문조직 개소당 30억원 이내
 - **소비지유통개선자금의 통합**
 - 시장출하촉진과 직거래 매취사업을 '06년부터 **소비지유통활성화** 사업으로 통합

- **기금운영비** : ('05) 482억원 → ('06) 525 (증 43)
 - 사업운영비 : ('05) 474억원 → ('06) 517 (증 43)
 - 기금관리비 : ('05) 8억원 → ('06) 8 (-)

나. 농지관리기금

(1) 총괄

□ '06년 기금운용규모는 1조 6,173억원으로 '05년 보다 7.5%(1,124억원) 증가

* 정부출연금 : ('05) 800억원 → ('06) 800 (-)

○ 일반지출 : 8,742억원으로 '05년 보다 4.7%(432억원) 감소

- 사업비 : 8,300억원으로 '05년 보다 5.2%(452억원) 감소

- 기금운영비 : 442억원으로 '05년 보다 4.8%(20억원) 증가

○ 정부내부거래지출 : 7,386억원으로 '05년 보다 26.8%(1,561억원) 증가

(백만원)

구분	'05계획		'06계획	증감		
	당초	수정(A)	(B)	(B-A)	%	
수입	○ 정부출연금	80,000	80,000	80,000	-	-
	○ 공자기금차입	503,013	503,013	597,789	94,776	18.8
	○ 융자금회수 등	375,875	375,875	397,976	22,101	5.9
	○ 농지조성비	427,353	427,353	453,124	25,771	6.0
	○ 조성토지매각대	28,136	28,136	30,206	2,070	7.4
	○ 여유자금회수	90,512	90,512	58,166	△32,346	△35.7
합계	1,504,889	1,504,889	1,617,261	112,372	7.5	
지출	1. 일반지출	917,156	917,431	874,235	△43,196	△4.7
	○ 사업비	875,016	875,291	830,057	△45,234	△5.2
	- 영농규모화사업	476,941	476,941	434,146	△42,795	△9.0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	42,200	42,200	순증
	- 농지조성사업	390,858	390,858	345,966	△44,892	△11.5
	- 농지기본조사사업	7,217	7,492	7,745	253	3.4
	○ 기금운영비	42,140	42,140	44,178	2,038	4.8
	2. 정부내부지출	582,549	582,549	738,615	156,066	26.8
3. 여유자금운용	5,184	4,909	4,411	△498	△10.1	

(2) 주요 사업 내역

□ **영농규모화사업** : ('05) 4,769억원 → ('06) 4,341 (△428)

○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속 지원

- '10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50%수준(43만ha)을 쌀전업농 7만호가 담당
토록 호당 평균 6ha 규모 육성

<영농규모화사업 물량 및 사업비>

구 분	2005계획		2006계획		증△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 농지매매사업	ha 4,010	억원 2,903	4,160	2,856	150	△47
○ 농지임대차사업	7,445	1,839	6,458	1,458	△987	△381
○ 농지교환·분합	50	27	50	27	-	-
합 계	11,505	4,769	10,668	4,341	△837	△428

* 지원조건 : 매매(15~30년, 3%), 임대차(5~10년, 무이자), 교환·분합(10년, 3%)

□ **농지은행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비 신규 반영

○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경영정상화 유도

○ '06년은 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 시범사업 수준으로 반영

- 사업량 : 277ha, 사업비 422억원

□ **농지조성사업** : ('05) 3,909억원 → ('06) 3,460억원 (△449)

○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현재 시행중인 지구의 완공위주 지원으로 **사업성과 가시화**

- 서남해안간척사업 : ('05) 1,564억원 → ('06) 1,016 (△548)

· 사업지구 : ('05) 9지구(준공1) → ('06) 8지구(3)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 ('05) 2,290억원 → ('06) 2,440 (증 150)

· 사업지구 : ('05) 3지구 → ('06) 3지구

* 새만금지구는 '06년 끝물막이 공사 소요를 고려하여 증액 : ('05) 1,500억원 → ('06) 2,200 (증 700)

* 영산강Ⅲ-1, Ⅲ-2지구는 J-project 시행관련 지원축소 : ('05) 790억원 → ('06) 240(△550)

□ **농지기본조사사업** : ('05) 75억원 → ('06) 77억원 (증 2)

○ 농지정보화사업은 필요소요를 반영하고 농지포탈사이트관리사업은 농지은행제도 운영의 효율적인 뒷받침을 위해 지원

- 농지정보화사업 : ('05) 20억원 → ('06계획) 22 (증 2)

- 농지포탈사이트관리 : ('05) 11억원 → ('06계획) 11 (-)

□ **기금운영비** : ('05) 422억원 → ('06) 442 (증 20)

○ 사업운영비 : ('05) 412억원 → ('06) 432(증 20)

○ 기금관리비 : ('05) 10억원 → ('06) 10 (-)

나. 축산발전기금

(1) 총괄

□ '06년 기금운용규모는 **9,941억원**으로 '05년 보다 6.0%(562억원) 증가

○ 일반지출 : 6,731억원으로 '05년 보다 4.7%(△333억원) 감소

- 사업비 : **6,683억원**으로 '05년 보다 4.8%(△337억원) 감소

- 기금운영비 : 48억원으로 '05년 보다 7.3%(3억원) 증가

○ 정부내부거래지출 : 857억원으로 '05년 보다 788억원 증가

(백만원)

구	분	'05계획		'06계획 (B)	증△감 (B-A)	%
		당초	수정(A)			
수 입	○ 축산물수입이익금	1,633	1,633	1,888	255	15.6
	○ 대체초지조성비	1,751	1,751	1,468	△283	△16.2
	○ 마사회 납입금	90,176	90,176	94,145	3,968	4.4
	○ 소싸움출연금	109	109	146	37	33.9
	○ 융자원리금회수 등	482,571	482,571	584,857	102,286	21.2
	○ 여유자금회수	361,664	361,664	311,582	△50,082	△13.8
합 계		937,904	937,904	994,086	56,182	6.0
지 출	1. 일반지출	706,405	706,405	673,075	△33,330	△4.7
	○ 사업비	701,976	701,976	668,322	△33,654	△4.8
	- 축산물수급안정	126,801	126,801	84,803	△41,998	△33.1
	- 축산업진흥	575,175	575,175	583,519	8,344	1.5
	○ 기금운영비	4,429	4,429	4,753	324	7.3
	2. 정부내부지출	6,900	6,900	85,700	78,800	1,142.0
3. 여유자금운영	224,599	224,599	235,311	10,712	4.8	

(2) 주요 사업 내역

□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05)1,268억원 → ('06)848(△420)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지속지원 (107억원 →67), **학교우유급식**지원은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154억원→166)

* 학교우유급식사업 : 사업량(279 → 352천명), 대상(초.중학생 → 고등학생까지)

○ 소, 돼지 및 우유 등 **수급안정자금**을 지속 지원(992억원 → 598)

○ 긴급경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지원(15억원 → 17)

□ **축산물유통개선 지원** : ('05)3,845억원 → ('05)3,912(증 67)

○ 축산물가공시설지원 및 축산물 가공시설 운영자금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 형태로 지원

- 축산물가공시설자금, 축산물가공시설 운영자금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1,707억원→1,782)

○ 산지축산물생산유통, 가축계열화 및 판매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합하여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 중심의 종합지원** 방식으로 전환 지원

- 산지축산물생산유통, 가축계열화, 판매시설현대화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2,043억원→2,043)

□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 ('05)850억원 → ('06)921 (증 71)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조활동** 지원을 강화(312억원→382)

- 가축공제사업(209억원→246), 축산자조사업(103억원→136)

- **가축방역**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축질병근절사업 지속 지원 (259억원 → 259)
 - 가축위생방역본부(82억원), 가축질병근절(153), 도축검사원운영지원 (24)
 - * 방역요원 인건비 지방비 부담률 확대(20% → 30%)
- 가축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축개량**사업을 지속 지원(272억원→272)
 - 가축개량사업소지원(247억원), 종축등록(1), 돼지·닭 경제능력검정 (24)

□ **사육기반 확충** : ('05) 1,057억원 → ('06계획) 1,002(△55)

- BSE 예방 등을 위한 사료제조시설보완 및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사료 산업종합지원**” 으로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운영(523억원 → 526)
- 경종과 축산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 강화(230억원 → 275)
 - 사료작물 등 보조사업(206억원), 기반시설 등 융자사업(69)
-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속 지원(85억원 → 87)
- 친환경 축산유도 및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축사시범사업** 지원 확대(19억원→38)
 - 친환경축사시범사업(진입도로, 철거비 등 보조사업 4억원, 축사신축 등 융자사업 34억원)

□ **기금운영비** : ('05) 44억원 → ('06) 48 (증 4)

- 사업운영비 : ('05) 35억원 → ('06) 36 (증 1)
- 기금관리비 : ('05) 9억원 → ('06) 12 (증 3)

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1) 총괄

□ '06년 기금운용규모는 10,032억원으로 '05년 보다 391.0%(7,989억원) 증가

○ 일반지출 : 9,134억원으로 '05년 보다 552.8%(증, 7,734억원) 증가

- 사업비 : 9,096억원으로 '05년 보다 561.0%(증, 7,720억원) 증가

- 기금운영비 : 37억원으로 '05년 보다 61.9%(증, 14억원) 증가

(백만원)

구	분	'05계획		'06계획 (B)	증△감 (B-A)	%
		당초	수정(A)			
수입	○ 농업인 납부금	24,420	24,420	-	△24,420	순감
	○ 수입산판매수입	-	-	44,434	44,434	순증
	○ 정부출연금	72,385	72,385	298,176	225,791	311.9
	○ 공자기금예수금	-	-	500,000	500,000	순증
	○ 이자수입	1,793	1,793	3,446	1,653	92.2
	○ 여유자금회수	105,725	105,725	157,170	51,445	48.7
합 계		204,323	204,323	1,003,226	798,903	391.0
지출	1. 일반지출	139,925	139,925	913,361	773,436	552.8
	○ 사업비	137,612	137,612	909,637	772,025	561.0
	- 소득직불금	137,612	137,612	909,637	772,025	561.0
	○ 기금운영비	2,313	2,313	3,744	1,431	61.9
	2. 정부내부지출	-	-	18,904	18,904	-
	○ 공자기금이자상환	-	-	18,904	18,904	순증
	3. 여유자금운용	64,398	64,398	70,941	6,543	10.2

(2) 주요 사업 내역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 ('05) 1,376억원 → ('06) 9,096(증 7,720)

- 쌀협상비준, DDA협상 진전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응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제도를 개편
 -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되 고정직불금으로 ha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변동형으로 보전
- '05년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하여 '06 변동직불금 소요가 크게 증가
 - '06년 변동직불금 지급소요는 '05.10~'06.1기간중의 쌀값에 따라 결정되나 '05년 12월까지의 쌀값 동향을 감안 전년대비 13.4%수준 하락 기준으로 소요 산출
- '06년 변동직불금 소요 산출내역
 - 면적 945천ha, 당년쌀값 : '04년 쌀값(161,630원)에서 13.4%하락 기준
 - $(170,083\text{원}/80\text{kg} - 139,947) \times 85\%$ (보전율)=25,616원/80kg
 - 고정직불금 ha당 60만원 ÷ 생산량 61가마/ha=9,836원/80kg
 - $(25,616\text{원}/80\text{kg} - 9,836) \times 61\text{가마} \times 945\text{천ha} = 9,096\text{억원}$

□ 사업운영비 및 기금관리비 : ('05) 23억원 → ('06) 37(증14)

- 잔류농약 및 토양검사비 : 657백만원
 - 잔류농약검사(4,500점) 214, 토양검사(61,500표본) 443
- 농지형상 및 논기능 점검비 : 2,187백만원(현지조사비 등)
- 전산관리 및 행정서식 구입비 : 724백만원(읍·면·동)
- 교육 홍보비 : 50백만원(홍보리후렛 및 교육)
- 기금위탁 관리비 : 126백만원(위탁관리 기관 인건비)

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 총괄

□ '06년 기금운용규모는 2,183억원으로 '05년 보다 4.8%(△109억원) 감소

* 정부출연금 : ('05) 1,600억원 → ('06) 1,445 (△155)

○ 일반지출 : 1,993억원으로 '05년 보다 13.1%(230억원) 증가

- 사업비 : 1,952억원으로 '05년 보다 13.5%(232억원) 증가

- 기금운영비 : 41억원으로 '05년 보다 3.9%(△2억원) 감소

(백만원)

구 분		'05계획		'06계획 (B)	증△감 (B-A)	%
		당초	수정(A)			
수 입	○ 정부출연금	160,000	160,000	144,500	△15,500	△9.7
	○ 부담금	757	757	503	△254	△33.6
	○ 기타경상이전수입	-	-	200	200	순증
	○ 용자원리금회수 등	2,742	2,742	10,184	7,442	271.4
	○ 여유자금회수	2,725	65,668	62,881	△2,878	△4.2
합 계		166,224	229,167	218,268	△10,899	△4.8
지 출	1. 일반지출	164,968	176,239	199,281	23,042	13.1
	○ 사업비	160,716	171,987	195,195	23,208	13.5
	- 경쟁력제고지원	118,973	118,973	128,407	9,434	7.9
	- 경영안정지원	41,743	53,014	66,788	13,774	26.0
	○ 기금운영비	4,252	4,252	4,086	△166	△3.9
	2. 여유자금운영	1,256	52,928	18,987	△33,941	△64.1

(2) 주요 사업 내역

- 경쟁력제고 지원 : ('05) 1,190억원 → ('06) 1,284 (증 94)
 - 고품질생산시설지원 지속으로 품질고급화 추진(575억원→557)
 - 과수우량묘목생산을 위한 묘포장 조성·운영 지원(21억원→50)
 - 과수전용농기계임대지원을 통한 농기계 공동 이용 등으로 이용율 제고 및 생산비 절감(26억원→20)
 - 과수 주산지에 대한 용·배수로, 경작로 등 과실생산단지기반정비로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수출체계 구축(102억원→103)
 -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고품질과실의 생산·유통을 주도할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시설 확충(225억원→211)
 - 과실가공품 품질향상으로 국산과실 소비촉진(27억원→10)
 - 매매·임대차 등 과원규모화 지원으로 최적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 농업을 실천할 선도농 육성(214억원→333)

- 경영안정지원 : ('05) 530억원 → ('06) 668 (증 138)
 - 시설포도, 키위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억원→65)
 -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에 대한 폐업지원(530억원→603)

- 기금운영비 : ('05) 43억원 → ('06) 41 (△2)
 - 사업운영비 : ('05) 38억원 → ('06) 36 (△ 2)
 - 기금관리비 : ('05) 5억원 → ('06) 5 (-)

바.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1) 총괄

□ '06년 기금운용규모는 **315억원**으로 '05년 보다 6.4%(△21억원) 감소

* 정부출연금 : ('05) 300억원 → ('06) 200 (△100)

○ 일반지출 : 205억원으로 '05년 보다 22.4%(△59억원) 감소

- 사업비 : 200억원으로 '05년 보다 23.1%(△60억원) 감소

- 기금운영비 : 5억원으로 '05년 보다 15.7%(1억원) 증가

(백만원)

구분	'05계획		'06계획 (B)	증△감 (B-A)	%	
	당초	수정(A)				
수입	○ 재해보험료수입	3,084	3,084	3,392	308	10.0
	○ 정부출연금	30,000	30,000	20,000	△10,000	△33.3
	○ 이자수입	554	554	894	340	61.4
	○ 여유자금회수	-	-	7,212	7,212	순증
합계		33,638	33,638	31,498	△2,140	△6.4
지출	1. 일반지출	26,426	26,426	20,493	△5,933	△22.4
	○ 사업비	26,000	26,000	20,000	△6,000	△23.1
	- 재해보험금지급	26,000	26,000	20,000	△6,000	△23.1
	○ 기금관리비	426	426	493	67	15.7
2. 여유자금운영	7,212	7,212	11,005	3,793	52.6	

(2) 주요 사업 내역

□ 재보험사업비 : ('05) 260억원 → ('06) 200(△60)

○ 사업비(재보험금) : 200억원

- 중형급 정도의 태풍 2회 또는 태풍 “루사” “매미” 규모이상의 태풍 발생시를 감안하여 재보험 사업비 산정

* '06년 적용 재보험금사업비는 '03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 (손해율 150%)의 1.4배 수준인 손해율 211%의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보험기금 부담 규모로 산정함

· 재보험사업비(20,000백만원) = '06년 보험료×(211%-통상재해손해율180%) = 62,406×31% = 19,345백만원 ≒ 20,000백만원

□ 기금관리비 : ('05) 4억원 → ('06) 5 (증 1)

□ 여유자금운용 : ('05) 72억원 → ('06) 110 (증 38)

○ 미래의 예측불가능한 대재해 발생시 국가재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최대추정손실가능액 정도의 충분한 여유자금 적립이 요구됨

사. 양곡증권정리기금

□ '06년 기금운용규모는 2조 4,450원으로 '05년 보다 231.6% (1조 7,076 억원) 증가

○ 정부내부거래지출 : 2조 4,384억원으로 '05년 보다 233.5%(1조 7,073억원) 증가

- '06년에 상환 도래하는 공자기금차입금 규모 증가

* '05년말 현재 공자기금예수금, 차관양곡원금 등 부채규모는 4조 7,585억원(공 자기금 4조 7,197억원, 차관양곡 388)

(백만원)

구	분	'05계획		'06계획 (B)	증△감 (B-A)	%
		당초	수정(A)			
수 입	○ 이자수입	323	323	287	△36	△11.1
	○ 일반회계전입	278,576	278,576	261,310	△17,266	△6.2
	○ 공자기금차입	452,442	452,442	2,177,100	1,724,658	381.2
	○ 여유자금회수	6,041	6,041	6,316	275	4.6
합 계		737,382	737,382	2,445,013	1,707,631	231.6
지 출	1. 정부내부지출	731,066	731,066	2,438,410	1,707,344	233.5
	○ 공자기금원금상환	452,442	452,442	2,177,100	1,724,658	381.2
	○ 공자기금이자상환	268,040	268,040	252,275	△15,765	△5.9
	○ 차관양곡원금상환	9,012	9,012	7,893	△1,119	△12.4
	○ 차관양곡이자상환	1,572	1,572	1,142	△430	△27.4
	2. 여유자금운영	6,316	6,316	6,603	287	4.5

2006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년 12월 일 인쇄

2006년 12월 일 발행

발행 · 대한민국 농 립 부

편집 · 농림부 구조정책과

인쇄 · 유 성 인 쇄 공 사

☎ 2265-5540

<비매품>